

2010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 요구자료(Ⅲ)

2010. 10

금 융 위 원 회

# 총 목 차

(가, 나, 다, 순)

## (Ⅰ 권)

고 승 덕 의원	.....	1
권 택 기 의원	.....	287
김 영 선 의원	.....	425
김 용 태 의원	.....	597
김 정 의원	.....	683
박 병 석 의원	.....	755
박 선 숙 의원	.....	1059
배 영 식 의원	.....	1069
신 건 의원	.....	1179

## (Ⅱ 권)

우 제 창 의원	.....	1
유 원 일 의원	.....	301
이 범 래 의원	.....	449
이 사 철 의원	.....	577
이 성 남 의원	.....	913
이 성 현 의원	.....	1073

## (Ⅲ 권)

이 진 복 의원	.....	1
임 영 호 의원	.....	189
정 옥 임 의원	.....	243
조 문 환 의원	.....	463
조 영 택 의원	.....	495
현 경 병 의원	.....	845
홍 재 형 의원	.....	1033
홍 준 표 의원	.....	1115



# 요 구 자 료 목 차

(가, 나, 다, 순)

의 원 명	요 구 자 료	페이지
이진복 의원	1. 최근 3년간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시정사항	3
	2. 최근 3년간 외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시정사항	8
	3.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및 결과보고서	82
	4. 최근 3년간 금융기관 제재 관련	85
	4-1. 제재결정 내역	85
	4-2. 과징금 부과/수납건수 및 건별부과사유(심의일시, 결정일시, 부과일시, 부과금액, 사건내용, 납부결과 등)	93
	4-3. 과징금 부과기준 및 산정근거	95
	5. ‘대부업정책협의회’의 구성현황, 회의개최 내역, 회의 안건 및 결과	103
	6. ‘대부업정책실무자협의회’의 구성현황, 회의개최 내역, 회의안건 및 결과	163
	7. 최근 3년간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관련	166
	7-1. 개최내역	
	7-2. 회의안건 및 부속서류 사본	
	7-3. 회의결과 및 회의일지 사본	
	7-4. 의결내역 및 의결서 사본	
	7-5. 회의록 사본	
	8. 최근 3년간 소위원회 관련	167
	8-1. 구성내역	
	8-2. 회의개최내역	
	8-3. 회의안건 및 부속서류 사본	
	8-4. 회의결과 사본	
	9. 최근 3년간 금융기관에 대한 행정지도 관련	180
	9-1. 지도내역 및 지도문서/구두지도 사본	
	9-2. 행정지도 내역	
	9-3. 금감원과의 사전협의 내역 및 관련 문서 사본	
	10. 서민금융정책 관련	181

의 원 명	요 구 자 료	페이지
이진복 의원	10-1. 금융위 소관 서민금융정책 현황 및 최초 계획 대비 추진 실적	
	10-2. 금융위 비소관 타부처 서민금융정책 관련해서 금융위협의내역	
	11. 금융위 소관 중소기업 금융정책 현황 및 추진실적	186
	12. 최근 3년간 금융위 수발신 공문 목록	187
	13. 사전심사청구내역 및 사전심사청구서, 관련자료 사본	188
임영호 의원	1.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191
	2. 2006년~2010.8월말 금융공기업 관련(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192
	1) 연봉 및 성과급 관련	
	- CEO 연봉내역	
	- 직원 평균 연봉	
	- 임직원 성과급 지급내역	
	2) 법인카드 분할결제 및 실명 미서명 현황	
	- 연도별 건수, 금액	
	- 연도별 건수, 비중	
	3) 정원, 현원관련	
	3. 2006년~2010.8월말 과징금 부과실적	211
	1) 부과금액, 징수금액, 징수율 등	
	2) 유형별 수납액, 불납결손액 변동현황	
	4. 2006년~2010.8월말 금융기관 및 공적자금투입기업에 대한 보수체계 관련	212
	1) 공적자금 투입기업의 기관장 및 상임이사 이상 임원의 연봉	
	2) 공적자금 투입기업별 기관장 및 임원의 보수지급 규정	
	5.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지원제도 현황	213
	1) 신용회복지원실적, 소액금융지원제도 현황	
	2) 상담건수, 신청건수, 대출건수, 대출금액	
	6. 2006년~2010.8월말 혐의거래보고 접수, 처리현황	216

의 원 명	요 구 자 료	페이지
임영호 의원	7.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서민금융 지원현황	217
	8.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기업구조조정 현황	234
	9. 2008.3.~2010.8월말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239
	10. 2006년~2010. 8월말 보안사건 관련	241
	1) 연도별, 유형별, 건별 발생 사유, 피해액, 재발방지 대응 방법 등	
	2) 보안 담당 조직 및 인력, 예산 운용 현황	
	11. 신규직원 채용 현황	242
정옥임 의원	1. 2008년도 이후 현재까지 연구용역 리스트	245
	2. 2008년도 이후 현재까지 연구용역 보고서 일체	245
	3. 2007년 이후 현재까지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안건 목록	248
	4. 2005년도 이후 연도별 금융위 소관 기금의 운용배수, 자산, 부채, 당기순익 현황	390
	5.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설립이후 연도별 위원회 구성내역	392
	- 2007년 이후 동 위원회 위원 및 상근인원 구성 내역	
	6~7. 금융위 조직 관련	393
	- 과장급 이상 프로필 자료	
	- 임직원 징계 현황	
	- 임직원 포상 내역	
	8. 2007년 이후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편 내역	398
	9. 2007년 이후 연도별·국책기관별 중기대출(종류별) 잔액 및 순증 현황	405
	10. 금융기관별 채권시장안정펀드 출자내역	406
	11. 증시안정펀드 관련 기관별 상세 투자내역	408
	12. 2007년 이후 금융기관별 녹색예금, 펀드 가입현황	411
	13. 2008년 이후 녹색산업 정책금융 지원 목표 및 실적	432
	14. 은행예대율에 대한 직접 규제방안	433
	15. 외환건전성 감독강화 방안	434

의 원 명	요 구 자 료	페이지
조문환 의원	1. 퇴직자 명단 및 재취업 현황	465
	2. 2007년 이후 내부 감사 조치사항 및 개선사항	466
	3. 징계 건수, 사유 및 현재 근무처	472
	4. 2008년 이후(연도별) 정책 연구 용역 내역	473
	5. 금융위원회 직원(임원, 직원으로 나눠 작성요)의 2007년 이후(2010년은 예상액)연봉(총액 및 1인당 평균 액수 작성요)	475
	6. 해외연수비, 연수내용 및 연수일정	476
	7. 2007년 이후 금융위원회 정책별 홍보비 내역 및 홍보 매체별 홍보 건수	477
	8. 민간배드뱅크 실적	478
	9. 모기지론 이차보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서	479
	10. FSB 금융규제 내용 및 향후 전망	480
	11. 한미 FTA 금융부분 합의 내용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487
	12. 대부업 건전성 감독을 금융위에서 담당할 경우 예상 되는 문제점	488
	13. 녹색금융 지원현황 취합자료(지원기관명, 지원기업, 금액, 녹색산업종류, 지원시기등 명시)	489
	14. IB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 계획	491
	15. 2007년 이후 3년간 재무제표	493
조영택 의원	1. 2009년도 자체평가계획(안) 및 2009년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 1부	497
	2. '09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고서 및 결산서	568
	3.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시행된 서민정책 현황 및 사업실적, 추진계획	623
	4. 최근 3개년 동안 연도별 금융 공공기관, 국책은행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내용 및 평가순위 표	628
	5. 국책은행 및 금융공공기관별 2009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급 및 성과급 지급율	629

의 원 명	요 구 자 료	페이지
조영택 의원	6. 최근 5년간 소송사건 연도별 처리현황 및 일부패소 사건의 증감 현황	669
	7. 최근 3년간 소관 기금 간접투자상품 투자 평가손익 내역	671
	8. 연도별 공적자금 지원/회수현황(회수율 포함) 및 회수계획	673
	9. 최근 3년간 금융기관별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발생 현황 및 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내역	674
	10. 최근 3년간 금융위 소속 「금융 공공기관 경영예산 심의회」 구성현황(명단 등) 및 법적근거, 심의의결 주요안건 목록	678
	11. 국책은행 및 보증기관의 최근 10년간 중소기업 시설 자금 지원실적)	680
	12. 은행별, 금융지주회사별 자본확충펀드 지원내역 및 BIS 비율 개선 추이	681
	13. 은행권 자본확충펀드 지원내역	682
	14. 최근 3년간 과징금·과태료 부과내역 및 수납실적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 처리현황	683
	15. 2009년 금융위원회의 벌금 미수납과 관련, 징수유예 처리 사유별 건수 및 금액	684
	16.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관계장관(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회의”와 관련, 협의 관련 송수신 공문 일체 및 금융위원장에게 보고된 내부보고(검토) 문서	685
	17. 2008년 이후 금융위원회의 보도해명자료 목록	700
	18. 최근 5년간 캠프 고유계정을 통한 은행권 부실 PF 대출채권 매입현황	711
	19. 최근 5년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중복 보증금액 총액 및 중복보증 해소방안	712
	20. 최근 3년간 국책은행 및 금융공공기관별 상임이사, 기관장의 연봉 및 성과급 등	713

의 원 명	요 구 자 료	페이지
조영택 의원	21-1.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인데, 금리 인상 등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영향과 전망	716
	21-2. 저소득층 및 하위신용등급의 가계부채 조정대책	717
	22. 최근 10년간 국내 금융기관 공적자금 지원 현황 및 투입사유	718
	23. 금융위기 전후 금융기관 규제 관련 논의현황 시사점, 정책검토 현황	722
	24. 최근 5년간 공적자금상환기금 및 구조조정기금 운용 금융기관 현황, 상품별 연도별 운용실적	729
	25. 금융회사 지배구조 검토현황 및 자료	737
	26. 비과세예금한도 등 정책변동 현황, 서민금융기능 회복 관련 내외지적사항 및 대책	766
	27-1. 예대율 규제계획	782
	27-2. LTV, DTI 규제 변동현황	783
	28. 서민금융	784
	28-1. 각 상품별 개요 및 현황	784
	28-2. 금융기관별 서민금융 운용 개요, 실적, 수익, 상세현황	806
	28-3. 금융기관별 서민금융 부실 상세현황	807
	28-4.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 등과 협의내역, 관련 공문 사본	808
	28-5. 금리결정 원칙, 기준 및 금융기관, 정부와 협의 내역, 관련 공문 사본	809
	29. 소규모 펀드 운용 관련 문제점과 대책	832
	30. 공기업 채무 및 PF 관련	834
	30-1. 최근 10년간 연도별 국내외 채무 상세현황	
	30-2. 최근 10년간 국내외 PF 상세현황	
	30-3. 최근 10년간 연도별·공기업별 국내외 채무 상세현황	838
	30-4. 최근 10년간 연도별·공기업별 국내외 PF 상세현황	

의 원 명	요 구 자 료	페이지
현경병 의원	1. 2009.10월~2010.8월 현재까지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및 해명보도자료 목록	847
	2. 2007~2009년도 국정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865
	3. 내·외부감사 관련(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 2008.9월~2010.7월 현재까지 내·외부감사 수행내역 - 완료된 감사의 감사결과 및 처분결과 보고서	925
	4. 임직원 국외 출장 내역	927
	5. 임직원 징계 관련	945
	6. 대부업관련 - 최근 3년간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전체 대부업체 기본현황 - 각 업체별 자산, 부채, 대출이자율, 대출현황 - 최근 3년간 대부업관련하여 접수된 민원 및 처리결과 - 최근 3년간 대부업정책협의회 회의록 일체	946
	7. 퇴직임직원의 재취업현황 및 관련규정	1003
	8. 녹색금융 추진현황 ○ 전반적인 추진현황 및 계획서 ○ 세부항목별 추진현황 및 성과, 향후 추진계획	1004
	9. 금융위 출범 이후 대통령 업무보고 및 정기 국회 업무보고서 일체	1026
	10. 조직도 및 전화번호표	1027
	11. 은행의 서민금융시장 진출에 대한 견해와 미소금융 추진실적	1029
	12. 최근 5년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잔액 추이	1031
홍재형 의원	1. 미소금융 운영 현황 자료 - 은행별 출연금 현황 - 최근일 현재 대출실적	1035
	2. 미소금융 중앙재단이 운영하는 지점 현황 - 지점명 및 지점별 직원 현황	1035

의 원 명	요 구 자 료	페이지
홍재형 의원	- 지점별 2010년 예산	
	3. 2009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내역	1039
	4.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 현황	1071
	5. 2008년 이후 녹색산업 정책금융 지원 목표 및 실적	1072
	6.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계획	1073
	7. 녹색산업 전용펀드 현황 및 녹색펀드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1074
	8. 녹색금융상품 발행현황	1075
	- 금융기관별, 연도별 현황	
	9. 2009년 이후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현황	1096
	- 금융기관별	
	10.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제도 현황	1097
	11. 중소기업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현황 및 계획	1112
홍준표 의원	1. 대부업 관련	1117
	-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계획	
	2.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 관련 언론기사 일체 및 보도자료와 보도해명자료 일체	1118
	3. 금융기관별 휴면예금, 휴면보험료 현황	1177
	4.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지원제도 현황	1178
	- 신용회복지원 실적, 소액금융지원 현황	
	- 상담건수, 신청건수, 대출건수, 대출금액	
	5. 금융위가 파악하고 있는 사채업의 실태와 사채시장의 규모	1181
	6. 미소금융 설명자료와 현재 진행상황, 그리고 향후 운영계획	1193
	7. 햇살론에 대한 설명자료와 현재 진행상황, 향후 운영계획	1195
	8. 금융위에서 파악하고 있는 금융소외자	1218
	9. 금융위원장실 직원들 수와 직급, 그리고 금융위원장 활동비와 관련한 예산	1219



의 원 명	요 구 자 료	페이지
<b>홍준표 의원</b>	10. 우리나라 금융공기업 사장들의 연봉과 성과급	1220
	11. 우리나라 금융공기업 신입사원(대졸초임) 연봉	1223
	12. 최근 3년간 금융위에서 연구 의뢰한 연구용역들의 목록과 예산	1226
	13. 금융위원회 직원수 및 연봉 현황	1232
	14. 금융공기업들의 최근 3년간 직원 숫자 및 연봉현황	1233

# 이진복의원

## 1. 최근 3년간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시정사항

□ 금융위원회 설립('08.2.28) 이후 내부 자체감사는 '08년에 실시하였으며 '10년 하반기 실시예정임.

□ '08년 내부 자체감사 관련

○ 내부감사 결과보고서(별첨1)

○ 조치결과보고서(별첨2)

## '08년 자체감사 실시결과

### 1. 감사개요

- 기간 및 대상부서: '08.6.23(월)~6.27(금), 혁신행정과 등 3개부서
- 대상 업무: 조직개편, 외부감사 결과처리 등 외부기관 관심분야 업무
  - 청사이전 관련 등 예산집행, 물품관리, 비정규직 운용실태
  - 정책연구용역과제 관리실태
  - 신·기보의 중소기업 보증제도

### 2. 감사결과 및 주요 지적사항

#### ① 차량운영 및 예산집행 등의 부적정

- 업무용 차량을 중형 위주로 운영
  - ⇒ 에너지 절감 및 차량운영 효율성 방안 강구 (시정)
  - \* 공용차량 관리·운영개선방안을 마련('08.7.10)하여 시행 중
- 국외출장중 항공기 숙박시 숙박료 지급, 비대상자에게 대우수당 지급, 정부구매카드 사용자 실명 미서명 등
  - ⇒ 숙박료 및 대우수당은 환수하여 국고반납(7.21)하고,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실명 서명토록 공지 (현지조치)

#### ② 재물조사 부실 실시로 물품관리대장과 실제 보유물품과 불일치

⇒ 재물조사 재실시 (시정)

#### ③ 본부와 FIU의 비정규직 급여 체계 및 수준이 상이

⇒ 급여체계 및 수준의 차이 해소방안 강구 (권고)

#### ④ 정책연구용역과제 관리 미흡

⇒ 정책연구과제 관리 및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PRISM) 등록 철저 (현지조치)

## [’08년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지적사항명	조치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조치결과	조치상황 (08.12.31)
업무용 차량 운영의 불합리	<p>○ [지적사항] 금융위는 특수업무용(외빈의전 등)으로 중형차량 4대를 신규로 임차하였으나 실제 운영의 대부분을 일반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일반업무용차량은 1,600cc 이하로 운영토록 하고 있는 규정과 배치됨</p> <p>○ [조치요구사항] 혁신행정과장은 에너지 절감 및 차량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용차량을 관련규정에 부합되게 운영하시기 바람</p>	시 정	<p>○ 혁신행정과는 「초(超)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대책」 및 자체감사 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개선 방안” 마련·시행(08.7.10)</p> <p>- 중형(SM15) 2대를 승합차와 경차로 대체</p> <p>- 우리 위원회 소유 아반떼 승용차는 내구연한 만료(’09.5)시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교체 예정</p>	조치완료

지적사항명	조치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조치결과	조치상황 (08.12.31)
기타 예산 집행의 불합리	<p>○ [지적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캐나다 FTA 협상(3.25~29)을 위한 국외출장시 항공기에서 1박을 하는데 그 숙박비(\$95)를 지급하였고, 한·인도 CEPA협상(4.1~4)을 위한 국외출장시에도 항공기에서 1박을 하는데 숙박비(\$95)를 지급하였음</li> <li>-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주된 상대방 소속·성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출입기자 단파의 간담회라고만 기재하였음</li> <li>- 조찬비용 및 직원 교육 후 석식비용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였음</li> <li>- 대우수당 지급사유가 소멸한 공무원에 대하여 전산오류로 '07.12월부터 '08.5월까지 대우수당이 매월 지급(6회, 703,640원)된 사실이 있음</li> </ul> <p>○ [조치요구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행정과장은 숙박비 초과 지급분(\$190)에 대하여 즉시 환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li> <li>- 혁신행정과장은 정부구매카드 사용자 실명서명 및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집행시 상대방 인적사항 기재 등 예산집행지침에 따른 집행이 되도록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li> <li>- 혁신행정과장은 향후 일과 전·후 직원교육 등을 위한 식사비 지출을 할 경우 특근매식비(또는 업무추진비)로 지출하시기 바랍니다</li> <li>- 혁신행정과장은 초과 지급된 대우수당(703,640원)을 즉시 환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li> </ul>	<p>현지조치</p>	<p>조치결과</p> <p>○ 혁신행정과는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현지조치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박비 초과 지급분(\$190)에 대하여 '08.7.21 환수하여 국고에 반납함</li> <li>- 정부구매카드 사용자 실명서명 및 50만원 이상 집행시 상대방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토록 전직원 공지함</li> <li>- 향후 일과 전·후 직원교육 등을 위한 식사비 지출시 특근매식비 또는 업무추진비로 지출토록 함</li> <li>- 초과 지급된 대우수당에 대하여 '08.6월분 급여지급시 당해 직원 급여에서 703,640원을 환수하여 국고 반납</li> </ul>	<p>조치완료</p>

지적사항명	조치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조치상황 (08.12.31)
재물조사 실시 불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사항] 조직개편 이후 추가 구입한 노트북 19대와 구 재정부에서 이관된 노트북 5대 중 2대가 미기재 되어 있는 등 총 21대가 미기재 되어 있음</li> <li>○ [조치요구사항] 혁신행정과장은 물품이 관리대장에 누락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재물조사를 실시시 하시기 바람</li> </ul>	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행정과는 '08.12.29 기준으로 수시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관리대장 미등재 물품을 등재 조치함</li> </ul>	조치완료
본부와 FIU의 비정규직 급여체제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사항] FIU가 소속기관이므로 독립성을 어느 정도 보장한다 할지라도, FIU소속 비정규직의 근무환경·업무량·업무난이도·전문성 등이 본부 소속 비정규직과 특별한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이 보수체제를 다르게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함</li> <li>○ [조치요구사항] 혁신행정과장은 본부와 FIU간의 비정규직 보수체제 불균형 해소를 강구하시기 바람</li> </ul>	권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행정과는 FIU에 대하여 향후(2009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 체결시에는 금융위원회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거 본부와 동일하게 보수액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함('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사무보조원 보수표 등 관련자료 송부)</li> </ul>	조치완료

## 2. 최근 3년간 외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시정사항

-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금융위원회 설립('08.2.28) 이후 ①금융감독기구 운영 및 감독실태('09.11)② 2009회계연도 결산감사('10.3), ③서민금융 지원실태('10.2~10.4)\* 등 3차례 실시된 바 있으며,
  - 이 중 ③서민금융 지원실태('10.2~10.4)의 경우 2010년 8월 현재까지 감사원은 처분요구를 하지 아니함
- 감사원 감사에 따른 처분요구서, 조치결과보고서
  - 금융감독기구 운영 및 감독실태 처분요구서(별첨 1)
    - 조치결과보고서(별첨 2)
  - 2009회계연도 결산감사 처분요구서(별첨 3)
    - 조치결과보고서 : 해당사항 없음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금융감독기구 운영 및 감독실태 -

2009 . 11.

감 사 원

#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	1
------------------	---

II.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	2
---------------------------	---

1. 펀드 투자자에게 정보제공 부적정(통보) .....	2
--------------------------------	---

2. 실손의료보험 계약자료 관리 및 보험금 지급방식 검사감독 부적정(주의·통보) .....	6
--	---

3. 금융감독원의 정원관리 및 인력운용 부적정(주의2) .....	15
--------------------------------------	----

4. 인건비 과다편성·집행 및 특별상여금 제도 운영 부적정(주의2) .....	24
---	----

5. ◆◆◆◆주식회사의 금융투자업 인가 부적정(주의2) .....	33
--------------------------------------	----

6.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 지도·감독 부적정(주의) .....	36
-------------------------------------	----

7. 금융법규 관련 유권해석사례 공개 부적정(주의) .....	39
------------------------------------	----

8. 파견 인력 운용 부적정(주의) .....	42
---------------------------	----

# I. 감사실시 개요

---

## 1. 감사목적

이번 감사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여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시장 질서 유지, 금융산업 육성, 금융소비자 보호 등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한편,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조직 운영과 예산·인력 운용 실태를 점검하여 방만한 기관운영을 시정하도록 촉구하고 재발 방지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었다.

## 2. 감사대상기관·범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본부 및 대전·대구·광주·부산지원을 대상으로 2006년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기관운영감사」(9. 25.~11. 3.) 종료 후 2006년 2월부터 2009년 5월 말까지 집행한 업무를 중심으로 감사하였다.

## 3. 감사 중점

이번 감사는 은행·증권·보험·비은행 업무권역별 금융감독업무가 적정한지, 인건비·경비 등 예산집행이 적정한지, 조직 운영과 인력 운용이 적정한지 등을 확인하는 데 감사중점을 두었다.

## 4. 감사기간·인원 등

2009. 5. 28.부터 같은 해 6. 10.까지 10일간 예비조사를 한 후, 같은 해 6. 15.부터 7. 17.까지 감사인원 25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하였다.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09. 11. 12. 감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 감 사 원

## 통 보

제 목 펀드 투자자에게 정보제공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15조 등의 규정에 따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하 “펀드”라 한다)을 운용하는 것을 지도·감독하고 있다.

### 1. 펀드 투자자에게 자본시장법상 등록 되지 않은 펀드에 대한 정보 제공 부적정

자본시장법 부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2009. 5. 4.부터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9. 2. 4. 자본시장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간투법”이라 한다)에 따른 판매회사는 간투법에 따른 펀드를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간투법에 따라 설정된 펀드를 계속 판매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부칙 제2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sup>1)</sup>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 별도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와 같이 전환등록이 되지 않은 펀드의 경우에는 추가 자금모집이 불가능하고 지속적으로 환매만 발생하는 등 펀드 수탁고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종전 간투법에 따라 설정된 펀드의 전환등록 여부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 투자 의사 결정에 참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1) 「자본시장법」 제43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7조 제3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위탁됨

그런데 2009년 6월 말 현재 간투법상 펀드의 전환등록 현황<sup>2)</sup>을 보면 공모·추가형펀드 3,423개 중 2,216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전환 등록된 반면, [별표 1] “공모·추가형펀드의 미전환 현황”과 같이 증권펀드 등 1,207개(계좌 수: 605,944개) 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전환등록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중 수탁고 100억 원 미만인 펀드가 1,136개(94%)로 대부분 소규모 펀드에 해당되어 나중에 전환등록 되지 않는 한 신규자금 모집이 불가능한데도 간투법상 펀드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들이 개별통보를 하지 아니하여 자본시장법 펀드로 전환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금융위원회에서는 집합투자업자로 하여금 간투법상 펀드 투자자에게 자본시장법상 펀드로 전환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개별통보하도록 하는 등 간투법상 펀드투자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 2. 소규모 펀드 투자자에게 정보 제공 부적정

수탁고 규모가 적은 소규모 펀드는 분산투자의 어려움이 있는 등 펀드재산의 운용효율성이 떨어지고, 법정보고서 작성비용, 회계감사비 등 정액으로 지급되는 고정비용이 대형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다 계상될 뿐 아니라 펀드매니저가 관리하는 펀드 수가 증가하여 소규모 펀드 관리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 투자수익률이 낮아지기 쉽다.

실제로 2009년 6월 말 현재 펀드의 수익률은 [별표 2] “펀드규모에 따른 수익률 현황”과 같이 수탁고 100억 원 이상의 펀드의 수익률이 1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펀드의 수익률보다 1년 및 3년 펀드수익률이 최고 128.72%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간투법 시행으로 2004. 1. 5. 폐지된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설정된 펀드도 포함

또한, 소규모 펀드의 수는 2006년 4,368개, 2007년 5,136개, 2008년 6,180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09. 6. 30. 현재 소규모 펀드의 수는 [표 1]과 같이 6,054개로 전체 펀드의 65.1%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수탁고별 펀드 현황 (2009. 6. 30. 기준)

(단위: 개, 십억 원)

펀드 규모	10억 원 미만		10~100억 원		100억 원 이상		합 계	
	펀드 수	수탁고	펀드 수	수탁고	펀드 수	수탁고	펀드 수	수탁고
공모	1,479	603	1,679	8,231	1,400	248,364	4,558	257,198
사모	598	286	2,298	7,902	1,841	108,758	4,737	116,946
합계	2,077	889	3,977	16,133	3,241	357,122	9,295	374,144

자료: 금융투자협회

따라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규정) 제 2-11조에 따라 은행, 증권사 등 펀드의 판매회사가 투자자 개인의 펀드수익률 등을 정기적으로 알려주는 잔고통보제를 실시하고 있고, 각 판매회사의 홈페이지에 펀드조회 등을 개설하고 있으므로 잔고통보 및 펀드조회내용에 펀드 규모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펀드의 규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환매 등의 의사결정에 참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금융위원회에서는 잔고통보 및 펀드조회내용에 펀드 규모를 포함하여 통보하거나 공시하는 등 펀드 투자자가 자신이 설정한 펀드의 규모를 쉽게 알 수 있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 ① 집합투자업자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펀드로 전환되지 않은 펀드를 펀드 투자자들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 ② 펀드 판매회사에게 펀드조회 내용 등에 펀드 규모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 공모·추가형 펀드의 미전환 현황 (2009. 6. 30. 기준)

(단위: 개)

구 분		펀드 수	계좌 수
증권펀드	주식형	75	4,380
	채권형	479	389,387
	혼합주식형	161	34,915
	혼합채권형	370	24,589
파생상품펀드		12	3,935
부동산펀드		-	-
신흥펀드		-	-
단기금융펀드(MMF)		102	148,518
재간접펀드		8	220
특별자산펀드		-	-
합 계		1,207	605,944

주: 1) 펀드구분기준 :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펀드 분류기준

2) 모펀드, 종류형 클래스펀드 및 기금 개별펀드 제외, 계좌 수는 '09. 5. 31. 기준

자료: 금융투자협회

[별표 2]

## 펀드규모에 따른 수익률 현황(2009. 6. 30. 기준)

(단위: 억 원, 개, %)

구 분	운용 사명	수탁고 합계	펀드 유형	펀드 수		1년 수익률			3년 수익률		
				1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A)	100억 원 이상(B)	(B)-(A)	100억 원 미만 (C)	100억 원 이상(D)	(D)-(C)
1	○○○	566,482	채권형	44	48	6.89	8.59	1.7	15.45	17.05	1.6
			주식형	59	59	-15.8	-14.75	1.05	28.94	11.01	-17.93
			단기금융	9	11	3.48	4.35	0.87	13.2	14.35	1.15
2	○○○	462,979	채권형	7	25	9.64	9.4	-0.24	17.28	18.08	0.8
			주식형	45	88	-21.68	-14.95	6.73	18.78	21.67	2.89
			단기금융	-	8	-	4.08	-	-	13.33	-
3	○○○	255,206	채권형	74	33	0.04	7.36	7.32	-0.39	15	15.39
			주식형	24	46	-25.42	-19.06	6.36	7.5	30.79	23.29
			단기금융	11	9	-0.44	4.13	4.57	6.36	13.96	7.6
4	○○○	228,635	채권형	27	38	11.64	3.82	-7.82	13.24	14.65	1.41
			주식형	13	23	-22.49	-17.8	4.69	7.26	20.11	12.85
			단기금융	14	6	2.69	4.44	1.75	11.05	14.79	3.74
5	○○○	202,539	채권형	94	35	5.98	8.77	2.79	14.16	17.42	3.26
			주식형	54	45	-10.85	-4.39	6.46	17.02	26.17	9.15
			단기금융	15	8	3.42	4.56	1.14	12.28	15.03	2.75
6	○○○	186,070	채권형	59	26	5.79	8.84	3.05	13.89	17.78	3.89
			주식형	37	31	-16.73	-14.12	2.61	3.72	14.69	10.97
			단기금융	6	7	4.17	4.25	0.08	13.33	13.95	0.62
7	○○○	135,423	채권형	142	25	7.76	4.27	-3.49	35.19	-	-
			주식형	7	14	-26.85	-24.37	2.48	-12.67	116.05	128.72
			단기금융	18	3	-	7.32	-	-	18.06	-

자료: 금융투자협회

# 감 사 원

## 주의요구·통보

제 목 실손의료보험 계약자료 관리 및 보험금 지급방식 검사·감독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① 금융위원회 본부, ② 금융감독원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업법」 등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손해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계약자료 관리 및 보험금 지급방식을 검사·감독<sup>1)</sup>하고 있다.

실손(實損)의료보험은 보험계약자<sup>2)</sup>가 질병·상해로 입원(또는 통원)치료 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상품<sup>3)</sup>으로 2003. 9. 30.까지는 손해보험회사(이하 “손보사”라 한다)에서만 판매하였고, 생명보험회사(이하 “생보사”라 한다)는 같은 해 10. 1.부터 단체, 2008. 5. 1.부터는 개인에게도 위 보험상품을 판매해 오고 있다.

2003년 9월 이전에는 보험계약자가 상해보험 등 의료비를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다수 체결한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사고 시 각각의 보험에서 지급해야

---

1)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호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제재를 모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71조와 「보험업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 검사 그리고 「보험업법」 제19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일부 위탁받은 보험회사 감독업무를 금융감독원이 하고 있음.

2)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자로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보험수익자와 다를 수 있으나 이 처리안에는 모두 동일한 사람으로 간주하여 서술하였음.

3) 주로 상해·질병·운전자 보험의 주계약이 아닌 특별약관(특약)으로 부가되어 판매되고, 1999년 이전부터 판매된 상해의료비 및 1999년부터 판매된 입·통원의료비(상해, 질병) 상품이 있음.



하는 보험금액의 비율로 보험금을 비례보상하도록 약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보험회사 간 보험계약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각각의 보험회사에서 산출한 보험금액을 중복하여 지급<sup>4)</sup>하고 있어 보험계약자에게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보상하는 등 [표 1]과 같이 2003회계연도까지 손해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표 1] 실손의료보험 현황

(단위: 천 건, 백만 원, %)

회계연도	경과계약 건수 <sup>1)</sup>	사고건수	납부보험료 (A)	사고발생률	지급보험금 (B)	건당 지급보험금	손해율 <sup>2)</sup> (B/A)
2001	13,291	681	230,213	5.12	291,613	0.4282	126.7
2002	15,940	814	273,563	5.11	349,482	0.4291	127.8
2003	18,397	1,078	352,342	5.86	465,139	0.4316	132.0
2004	21,239	1,144	374,246	5.38	485,160	0.4242	129.6
2005	25,370	1,600	512,848	6.30	594,471	0.3717	115.9
2006	30,437	2,327	650,794	7.65	715,904	0.3076	110.0
2007	38,122	3,382	861,311	8.87	947,010	0.2799	109.9

주: 1) 회계연도 중 보험회사가 보유한 계약건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자가 회계기간 동안 계약을 유효하게 유지할 경우 1건으로 간주함. 만약 회계기간 중 6개월간 계약을 유지할 경우 0.5건으로 간주함.

2) 손해율이 높을수록 보험료율이 조정되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됨.

자료 : 보험개발원

이에 따라 2003. 7. 10. 위 감독원에서는 ‘의료비 보험금 보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과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고 보험회사의 보험금이 과다 지급되어 경영효율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같은 해 10. 1. 이후에 체결하는 실손의료보험 계약(이하 “신계약”이라 한다)은 보험약관대로 비례분담<sup>5)</sup>하여 보상하도록 하였다.

4) 「상법」 제672조에서 보험계약을 중복 가입할 경우 보험회사는 비례보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보험회사가 자신의 책임금액 이상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자유이고, 고객신뢰보호 상 관례적으로 보험금을 각각 지급하고 있었던 것임.

한편, 손보사들은 같은 해 9. 30. 이전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계약(이하 “구 계약”이라 한다)과 여러 개의 신계약을 가입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 시 구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후 본인 부담금 의료비가 기존 계약에서 받은 금액보다 큰 경우 남은 보험금 잔액을 신계약에서 비례분담하도록 협의하여 보험금을 보상(이하 “잔액보상방식”이라 한다)하는 등 여러 개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상법」 제672조의 실손보상 원칙<sup>5)</sup>에 따라 보험금을 중복지급하지 않고 발생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 간 비례분담하여 보상하고 있다.

### 1.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방지를 위한 계약자료 관리 부적정

위 감독원에서는 2009. 4. 14. 손보사<sup>7)</sup>들이 신계약의 중복가입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비례분담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여 보험계약자가 불필요한 보험료를 낭비하고, 가입금액을 모두 보상받는 것으로 오해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아 보험모집자로 하여금 보험모집 시 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비보험 계약정보 조회시스템’을 활용하여 반드시 신계약의 중복가입<sup>8)</sup>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실손의료보험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5) 2003. 10. 1.부터 각 손보사의 신계약 자료를 손해보험협회에 집적하여 각 손보사에서 공유하고 있으므로 보험사 고 시 각각의 보험에서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액의 비율로 보험금을 비례보상하고 있음.

6)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만을 보상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실제손해를 초과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손해보험의 기본원칙임. 한편, 실손의료보험은 손해보험과 미세한 차이는 있으나 과거부터 계약 간에 비례보상하도록 약정되어 있었고, 실손의료보험의 성격이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손해보험과 유사하므로 위 감독원에서는 실손의료보험에 실손보상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7) 생보사는 2008년 5월부터 개인에 대한 실손의료보험으로 판매(단체보험은 이전부터 판매)하였으므로 중복가입 문제는 심각하지 않아 위 감독원에서 손보사만을 언급.

8) 보험계약자가 보장내용(상해, 질병 등)이 같은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다수 가입(보장금액 100만 원, 1,000만 원 등)하여 보험료를 각각 납부하더라도 사고발생 시 보장금액이 중복되는 부분(100만 원까지)은 각각의 보험상품에서 보험금을 비례분담 받으므로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의 문제가 발생함.

이 후 금융위원회에서는 같은 해 7. 1. 보험모집자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보험업 감독규정」 제4-31조의3을 개정하였고, 위 감독원에서는 같은 해 6. 30. 위 제도 개선방안의 내용과 같이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34조를 개정하였다.

그러나 신계약의 중복가입 뿐만 아니라 구계약이 있는 보험계약자가 신계약을 가입하더라도 사고발생 시 보험금을 각각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별표 1]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 비교 명세”와 같이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비례보상 받으므로 보험계약자가 불필요한 보험료를 낭비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감독원에서는 구계약이 있는 보험계약자가 신계약에 불필요하게 중복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보험개발원으로 하여금 「보험업법」 제176조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1997년 1월부터 집적·관리하고 있는 구계약 자료를 정비하도록 하고, 보험모집자로 하여금 이를 활용하여 중복가입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위 시행세칙을 개정하여야 했으며, 위 위원회는 이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감독원에서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개발원 전산자료에 구계약 자료입력을 누락하거나 실효·해지 또는 변경된 계약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별표 2] “보험개발원에서 관리하는 실손의료보험 계약자료 현황”과 같이 2002년 8월까지의 집적률이 최대 30%에 불과하며, 같은 해 8월 이후 추가 계약 및 계약 변경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등 구계약 자료의 정확성이 낮은데도 손보사로 하여금 유효한 계약자료를 모두 입력하도록 감독하지 않고 있다.

또한, 위 감독원에서는 보험회사가 구계약 자료를 활용하여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위 시행세칙을 개정하지 않았으며 위 위원회도 위 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

그 결과 [표 2]와 같이 2009. 5. 31. 현재 225만여 건의 유효한 구계약이 있는 보험계약자가 실손의료보험 중복여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계약을 추가로 가입하게 되어 불필요한 보험료를 낭비하게 될 우려가 있다.

[표 2] 손해보험회사의 구계약 보유 현황

(단위: 천 건)

보험사명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 등 6개 <sup>주)</sup> 손해보험사	합계
보유건수	1,288	273	238	187	84	58	125	2,253

주) ●●손해보험(43천 건), ■■손해보험(34천 건), ◆◆해상보험(21천 건), □□손해보험(15천 건), △△해상보험(9천 건), ◎◎손해보험(3천 건)

자료 : 금융감독원

## 2.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방식 부적정

금융감독원에서는 2003년 7월 실손의료보험을 서로 다른 보험사에 중복하여 가입한 보험계약자에게는 보험계약자가 최초로 청구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고 보험회사별 분담액을 사후에 정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비 보험금 보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시달하였고, 2007. 11. 2. 보험금을 처음 청구 받은 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의 지급액을 포함한 해당 보험금 전액을 지급 후 다른 회사와 각사의 보상책임액 비율에 따라 사후에 정산하도록 ‘다수보험 중 의료실손 보험계약의 보상체계 정비’ 공문을 각 보험회사에 시달하였다.

그런데도 위 감독원에서는 2차례에 걸쳐 막연히 정산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지침만 시달하였을 뿐 아니라 지침을 최초로 시달한 지 6년이 지난 2009. 7. 17. 현재까지 보험업계에서 정산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 있고,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청구서류를 각각 받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sup>9)</sup> 있다.

이에 대하여 감사원에서 2009. 6. 16.부터 같은 해 7. 15.까지 10개 손보사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현황을 검토한 결과 [별표 3] “손해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비례분담 현황”과 같이 총 537,189명이 총 550,124건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들 중 12,230명은 중복 가입으로 2개 이상 보험회사에 25,165건(1인당 평균 2.06건)을 각각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부담하지 않아도 될 진단서 발급비용<sup>10)</sup>을 최대 12백만여 원<sup>11)</sup>만큼 부담<sup>12)</sup>하였고,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최대 12,935회 중복 방문<sup>13)</sup>하는 등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조치할 사항 [통보] 금융감독원장은

- 
- 9) 금융감독원에서는 2007. 12. 28. 「보험금 지급업무에 관한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서류의 경우 발급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제출서류(진단서 등) 대신 간이서류(입·퇴원확인서 등)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안내하도록 통보한 바 있으나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서류의 중복제출 및 중복청구를 방지하도록 구체적인 세부지침 등을 통보한 바 없음.
- 10) 보험금 청구 시 필수서류인 진단서는 발급비용이 병원마다 다르므로 1부를 초과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을 경우 1부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음.
- 11)  $(25,165\text{건} - 12,230\text{건}) \times 1,000\text{원} = 12,935,000\text{원}$
- 12) 10개 손보사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 등 증거서류의 요구기준을 검토한 결과 일반적으로 청구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진단서 생략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액의 기준이 보험사별로 다르고, 일부 보험사에서는 청구금액과 관계없이 진단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1개월간 보험금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한 25,165건은 진단서를 받았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 이 처리안에서는 모두 진단서를 받은 것으로 하여 결과를 산출하였음.
- 13) 10개 손보사의 보험금 청구방법을 검토한 결과 직접 방문, 우편, FAX, 모집인 대행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개월간 보험금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한 25,165건은 어떤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 이 처리안에서는 모두 직접 방문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하여 결과를 산출하였음.

① 보험개발원이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는 구계약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보험회사가 신계약과 구계약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② 각 보험회사로 하여금 정산시스템을 마련하여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보험계약자의 불편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보험계약자가 실손의료보험을 중복가입하여 보험료를 낭비하거나 보험금 수령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위 시행세칙 개정 등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 비교 명세

보험회사 종류	보험회사명	보험금 지급방식		
		구계약 <sup>1)</sup> +구계약	신계약 <sup>2)</sup> +신계약	구계약+신계약
손해보험	◇◇◇	사업방법서가 동일하면 비례 보상, 다르면 중복보상	비례보상	구계약의 존재여부를 인지할 경우 구계약에서 선차감 후 잔액이 있을 경우 신계약 간 비례보상  구계약의 존재여부를 인지하 지 못할 경우 신계약 간 비 례보상
생명보험 <sup>3)</sup>	◇◇◇	해당사항 없음		

주: 1) 2003. 9. 30.까지 체결한 보험계약

2) 2003. 10. 1. 이후 체결한 보험계약

3) 현재 11개 생보사에서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5개 생보사에서는 구계약의 존재여부와 상관 없이 신계약 간에서만 비례분담하고 있음.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재구성

[별표 2]

## 보험개발원에서 관리하는 실손의료보험 계약자료 현황

(단위: 건, %)

회사명	상해의료비	입원 80%	입원 100%	통원 100%	계
○○	334,879	0	0	0	334,879
○○	224,096	2,164	0	0	226,260
○○	102,487	0	0	0	102,487
○○	94,655	1,423	1,036	0	97,114
○○	83,491	0	1,885	0	85,376
○○	159,699	0	3,349	3,349	166,397
○○	50,732	0	0	0	50,732
○○	1,400,212	109,680	0	0	1,509,892
○○	711,634	43,839	0	0	755,473
○○	545,782	5,089	426	9,096	560,393
○○	635,038	46	195,788	0	830,872
계 <sup>1)</sup>	4,342,705	162,241	202,484	12,445	4,719,875
경과계약 건수 <sup>2)</sup>	12,715,429	1,418,907	788,362	582,761	15,505,459
집적률	34.2	11.4	25.7	2.1	30.4

주: 1) 손보사에서 자료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험개발원에 집적한 자료로 2002년 8월 기준 계약건수로 집계한 것임. 이에 따라 경과계약 건수로 환산할 경우 합계액보다 적어져 집적률이 더 낮아짐.

2) 2002회계연도(2002. 4. 1.~2003. 3. 31.) 기준으로 산출하였고, 경과계약 건수 자료는 보험개발원에서 보험료율을 산출하기 위해 손보사로부터 받는 자료로 위 정보공유 데이터베이스와는 별개로 운용되며, 손보사에서 계약을 체결한 모든 보험자료를 포함하고 있음.

자료: 보험개발원 자료 재구성

[별표 3]

손해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비례분담 현황

(단위: 건, 명, %)

회사명	총보상 건수	1개 회사 청구건수	다수 보험회사 간 비례분담 건수 및 인원 <sup>주)</sup>							
			2개사		3개사		4개사 이상		합계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	70,469	67,873	2,596	1,298	0	0	0	0	2,596	1,298
○○	26,757	25,606	961	481	150	50	40	10	1,151	541
○○	12,199	11,243	856	428	80	27	20	5	956	460
○○	15,360	13,809	1,361	681	154	51	36	9	1,551	741
○○	27,044	26,192	752	376	78	26	22	6	852	408
○○	13,643	12,399	1,050	525	146	49	48	12	1,244	586
○○	130,787	128,708	1,922	961	149	50	8	2	2,079	1,013
○○	97,963	93,273	4,304	2,152	350	117	36	9	4,690	2,278
○○	58,371	52,711	5,038	2,519	482	161	140	35	5,660	2,715
○○	97,531	93,145	4,386	2,193	0	0	0	0	4,386	2,193
합계	550,124	524,959	23,226	11,613	1,589	530	350	88	25,165	12,230
비율	100	95.42	4.58							
	-	-	92.30		6.31		1.39		100	

주) 보험계약자 1명이 3개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총 보상건수는 3건임.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재구성



# 감 사 원

## 주 의 요 구

제 목 금융감독원의 정원관리 및 인력운용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① 금융위원회 본부, ② 금융감독원 본부

내 용

금융감독원에서 「조직관리규정」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의 정원을 책정하여 인력을 운용하고 있고,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예산과 결산을 승인하면서 위 감독원의 정원관리 및 인력운용을 지도·감독하고 있다.

### 1. 인력감축계획의 형식적 추진

금융위원회에서 2008. 3. 31. 2008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민간 금융회사의 부담경감을 위해 금융규제기관의 예산을 10% 이상 절감하기로 방침을 정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같은 해 5. 2. 금융감독원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에 걸쳐 매년 53명씩 총 159명을 감축하여 정원을 1,589명에서 1,430명으로 10% 축소하는 내용의 인력감축계획을 수립하였다.

인력감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때에는 형식적으로 정원 숫자만 축소할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실제 운용하는 총 인원을 축소하여야 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에서는 1999년 설립 당시부터 1년 이상 국내·외 학술연수

및 외부파견 인력 등을 「정원의 인력」이라는 명칭으로 정원을 초과하여 운용하면서, 국내·외 학술연수 인력을 1999년 15명(당시 현원 1,266명의 1.2%)에서 2007년 61명(당시 현원 1,680명의 3.6%)으로, 국제기구 연수인력을 1999년 1명에서 2007년 8명으로 각각 증가시키는 등 [별표 1] “정원의 인력의 연도별 추이”와 같이 2007년 말 현재 총 137명의 「정원의 인력」을 운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위와 같이 정원 10% 감축계획을 수립·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원 감축에 따른 잉여인력 해소를 위해 2008. 5. 29. 연령 기준에 따른 팀장 보임해지 직원 18명을 위 기관 소속 연수원에서 1년간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이들을 「정원의 인력」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을 정한 후, 같은 해 9. 8. 「조직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교육훈련을 위한 6개월 이상 파견”의 경우를 「정원의 인력」으로 관리하는 항목에 신규로 추가하였다.

또한 같은 해 8. 29. 위 기관에서 종전에는 정원에 포함하여 관리하던 교육연수 휴직, 국외유학 휴직, 배우자 동반 휴직, 가족 간병휴직 등 청원휴직 인력을 「정원의 인력」으로 전환하여 관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후, 같은 해 9. 8. 「조직관리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2008년 말 현재 청원휴직자 18명이 「정원의 인력」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부업 관리·감독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2008. 6. 23. 및 같은 해 7. 1. 4개 광역자치단체와 6개 기초자치단체에 10명의 인력을 신규로 파견하는 등 「정원의 인력」으로 관리하는 인력을 증가시킨 결과, [별표 2] “금융감독원 직원 정원 및 총 현원 연도별 추이”와 같이 정원 및 정원으로 관리하는 인력은 감소하였으나, 「정원의 인력」은 2007년 137명

에서 2008년 175명으로 38명 증가하여 위 기관의 총 현원은 2007년 1,680명에서 2008년 1,684명으로 4명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금융회사의 부담이 가중되도록 인력감축계획을 추진하였다.

또한 금융위원회(구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 「정원의 인력」의 한도를 엄격히 정하여 관리하지 않은 채, 위 기관에서 인력감축계획을 형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고 있었다.

## 2. 상위직 인력 과다 운용

금융감독원에서 「조직관리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장, 실장, 팀장 등 직위별 정원을 책정하여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현원은 가급적 정원의 범위 안에서 운용하여야 하고 국장, 실장, 팀장 등 상위직 인력을 직위별 정원보다 많이 운용하는 것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2009. 4. 6. 정기인사를 하면서, 팀장 이상 정원은 총 265명(국장 25명, 실장 24명, 팀장S 118명, 팀장J 98명)에 불과한데 아무런 근거도 없는 국장급, 실장급, 팀장급 인사발령을 내고 이들에게 각각 국장, 실장, 팀장과 동일한 직무급<sup>1)</sup>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원보다 78명을 초과하여 총 343명(국장 27명, 실장 73명, 팀장S 119명, 팀장J 124명)을 팀장 이상 상위직으로 운용하였다.

또한,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의 예산안을 승인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 2007년 말 동 기관의 실장 정원은 26명인데도 실장 직무급 지급대상 인원을 45명으로 하여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등 [별표 3] “금융감독원의 팀장 이상

1) 직무급(1년 기준): 부서장 27,863,000원, 실장 24,530,000원, 팀장S 19,719,000원, 팀장J 15,141,000원, 미보임직원 12,895,000원(또한, 직무급의 차이는 평가급, 특별상여급, 연차휴가보전수당, 퇴직금 등의 차이를 가져옴)

정원 대비 예산상 직무급 지급대상 인원 비교”와 같이 매년 팀장 이상 상위직에 대해 정원보다 많은 인원을 직무급 지급대상 인원으로 편성하고 있는데도 이를 시정하도록 지도·감독하지 않고 있었다.

### 3. 보임해지 인력 선정 및 운용 부적정

금융감독원에서 국·실장 및 팀장이 일정 연령이 되면 보임 해지한 후 이들을 교수, 연구위원 및 자문위원으로 운용하거나 일정기간 연수·파견을 보내는 등으로 운용하고 있다.

위 기관의 「취업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면 직원의 정년은 만 58세로 되어 있고, 「팀장 보임해지 가이드라인」에서 팀장에 대한 보임해지는 업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하되 연령, 건강상태 등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보임해지 기준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업무실적 등이 아닌 단순한 연령기준에 따라 정년이 4년 이상 남은 국·실장 및 팀장을 강제로 보임 해지하여서는 안 된다.<sup>2)</sup>

또한, 정년까지 4년 이상 남은 인력을 현업부서가 아닌 교수, 연구위원 및 자문위원으로 운용하거나 연수·파견을 보내는 것은 조직 운용상 비효율적이고, 보임이 없는 무보임자에게 보임자와 같은 수준의 직위를 부여하거나 직무급을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2004년 이후 금융감독원의 국·실장 및 팀장 보임해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별표 4] “심사대상 선정사유별 국·실장 및 팀장 보임해지 현황”과 같이 국·실장의 경우 주로 고령자 위주로 보임 해지자가 선정되고 있고, 팀장의

2) 위 기관의 「인사관리규정」 제86조의 3의 규정 등에 따르면 정년이 1년 남은 1급에서 3급 직원은 총무국 소속 자문역으로 발령을 내어 정원 외 인력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경우에도 업무성과 부진을 이유로 한 보임 해지 사례는 감소하는 반면 주로 연령(만 54세 이상)을 기준으로 보임 해지가 결정되고 있었다.

또한 위 기관에서는 국·실장을 보임 해지한 후 인력개발실 교수, 원장 자문위원, 감독역량 강화 연구위원 등으로 운용하면서 2년간 실장급으로 발령하여 실장의 직무급을 지급하고 있었다.

또한, 팀장의 경우에도 2007년 이전에는 보임 해지 후 겸사업무 등을 담당하는 현업부서에 배치하였으나, 2008년부터 연령 기준에 따른 보임 해지자에 대해서는 1년간 교육훈련 파견(정원의 인력으로 관리) 후 현업부서에 배치하는 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않고 있었다.

#### 4. 수견직원 과다 운용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등의 규정에 따라 민간 금융회사로부터 인력을 수견 받아 민원상담, 보험사기 조사 등의 업무에 운용하고 있다.

위 기관의 「수견업무 처리요령」에 따르면 외부기관과의 공동업무 수행 또는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만 외부기관 인력을 수견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견인력의 수와 기간은 그 사유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하고 인력 운용의 편의 또는 단순 보조업무를 위해 인력을 수견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 2008년 현재 연수·파견·휴직 등 총 163명<sup>3)</sup>의 자체 잉여인력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감축하지 않은 채 2009년 6월 말 현재 총 86명

3) 2008년 말 현재 금융감독원의 「정원의 인력」 175명 중 육아휴직 11명과 가족 간병휴직 1명을 제외한 인원

(총원 대비 4.9%)의 인력을 민간 금융회사로부터 수건 받아 운용하고 있었다.

또한 위 86명 중 41명은 민원상담 업무를, 24명은 금융감독 업무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제공하는 지원업무를, 19명은 금융 인·허가 등 상담업무를, 나머지 2명은 금융감독원의 고유 업무인 보험대리점 등록을 대행하는 등 전문적인 업무보다는 단순 보조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실정이었다.

특히 민원상담 업무는 이해상충에 따른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07. 10. 18. 위 기관에서 전문상담원을 자체 채용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였으나 2009년 6월 말 현재까지 이를 추진하지 않은 채 수건인력을 활용하고 있었다.

#### 조치할 사항      금융감독원장은

- ① 정원 뿐 아니라 정원외 인력에 대하여도 인력감축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앞으로는 연수·파견 인력 등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정원 외 인력을 적정하게 관리하며
- ② 앞으로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상위직 인력을 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 ③ 정년까지 4년 이상 남은 보임직원을 단순히 연령만을 기준으로 보임해지한 후 교수, 연구위원 등으로 운용하거나 연수·파견을 보내는 등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 ④ 수건직원 운용은 금융감독원 직원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등 필요 최소한도로 하고 민원상담업무를 수건직원이 주로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 ① 앞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연수·파견 인력 등 정원외 인력은 그대로 유지 또는 확대하면서 정원만 형식적으로 감축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감독원의 정원외 인력 관련 예산 심사 등을 철저히 하고
- ② 금융감독원에서 미보임직원 등을 정원에 근거가 없는 상위직위에 임용하여 사실상 상위직위 인력을 정원보다 과도하게 운용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감독원의 정원관리 및 인력운용을 철저히 지도·감독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정원외 인력」의 연도별 추이

(단위: 명)

구 분	1999년 <sup>1)</sup>	2000년	2002년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국가기관 파견	미상	미상	36	49	51	49	32
지방자치단체 파견	미상	미상	0	0	1	1	14
공공단체 파견	미상	미상	(2)	3 (3)	5 (5)	5 (6)	5 (9)
민간단체 파견	0	0	0	0	0	0	(2)
국가기관 겸임	미상	미상	7	6	0	0	0
국내의 학술연수	(15)	(32)	(38)	54	72	61	65
국제기구 연수	(1)	(1)	(2)	3	6	8	9
교육연수 휴직	0	0	0	(1)	(9)	(6)	2
육아휴직	0	(3)	(4)	5	3	5	11
국외유학 휴직	0	(4)	(10)	(4)	(13)	(10)	10
자문역 <sup>2)</sup>	-	-	0	6	4	8	3
배우자 동반휴직 <sup>3)</sup>	-	-	-	-	(1)	(6)	5
가족 간병휴직 <sup>4)</sup>	-	-	-	-	(1)	(1)	1
교육훈련 파견 <sup>5)</sup>	-	-	-	-	-	-	18
합 계	미상	미상	43	126	142	137	175

주: 1) 해당연도 연도말 기준 인원임(괄호 안의 숫자는 정원내 인력으로 합계에서 제외됨)

2) 2002. 5. 11.부터 정년퇴직일까지 1년이 남은 1~3급 직원을 자문역으로 발령하여 정원외 인력으로 관리

3) 2005. 9. 20.부터 정원외 인력으로 관리

4) 2006. 2. 17.부터 정원외 인력으로 관리

5) 2008. 5. 29.부터 정원외 인력으로 관리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재구성

[별표 2]

금융감독원 직원 정원 및 총 현원 연도별 추이

(단위: 명)

구 분	1999년 1월	2002년 말	2004년 말	2006년 말	2007년 말	2008년 말
정 원	1,342	1,529	1,545	1,585	1,589	1,536
총 현원	계	1,266	1,533	1,643	1,673	1,680
	정원내 인력	미상	1,490	1,517	1,531	1,543
	정원외 인력	미상	43	126	142	137

주) 매년 말 총 현원에는 12월 31일 퇴직자(12월 31일까지 근무자) 포함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재구성



[별표 3]

## 금융감독원의 팀장 이상 정원 대비 예산상 직무급 지급대상 인원 비교

(단위: 명)

구 분		국장	실장	팀장S	팀장J
2005년	2004년 말 정원(A)	30	24	129	114
	예산편성인원(B)	30	32	126	116
	정원과 예산편성인원 차이(B-A)	0	8	-3	2
2006년	2005년 말 정원(A)	28	24	120	100
	예산편성인원(B)	30	35	123	110
	정원과 예산편성인원 차이(B-A)	2	11	3	10
2007년	2006년 말 정원(A)	28	26	124	101
	예산편성인원(B)	29	40	133	110
	정원과 예산편성인원 차이(B-A)	1	14	9	9
2008년	2007년 말 정원(A)	28	26	125	104
	예산편성인원(B)	29	45	133	111
	정원과 예산편성인원 차이(B-A)	1	19	8	7

주: 1) 팀장J로 승진한 자에게 승진한 해에는 팀장 직무급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팀장J 직무급을 실제 지급한 인원은 정원 및 예산편성인원보다 적음

2) 금융감독원의 2009년도 인건비 예산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심사·승인은 개별적인 인건비 산출근거를 토대로 하지 않고 자연증가율, 인력감축 및 임원보수체계 개편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의 2008년도 인건비 예산 총액을 조정하여 이루어짐

자료: 금융감독원 예산 산출근거 및 직위별 정원 현황 제출자료 분석

[별표 4]

## 심사대상 선정사유별 국·실장 및 팀장 보임해지 현황

(단위: 명)

구 분	심사대상 선정사유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심사대상	보임해지	심사대상	보임해지	심사대상	해지	심사대상	보임해지
국·실장	연 령	6	6	11	11	14	13	18	17
	보임기간	5	2	4	3	3	1	2	0
	기 타			1	1				
팀 장	연 령	2	2	18	18	9	8	13	13
	성과저조	14	5	21	4	19	2	5	4
	기 타	3	3	1	0	1	1		

자료: 금융감독원

# 감 사 원

## 주 의 요 구

제 목 인건비 과다편성·집행 및 특별상여금 제도 운영 부적정

소 관 청 ① 금융위원회, ② 금융감독원

관 계 기 관 ① 금융위원회 본부, ② 금융감독원 본부

내 용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말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있다.

### 1. 인건비 과다 편성 및 집행

금융감독원의 예산은 민간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감독분담금(2009년도 수입예산의 73.5%)이 주된 재원이므로, 민간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특히 인건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전년도 현원<sup>1)</sup> 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인원과 단가를 산정함으로써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예산에서 정한 이상으로 보수를 인상하거나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재원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① 국책금융기관의 경우 전년 말 현원을 기준으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전년 말 정원을 기준으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되 정원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예비비에 계상하여 채용에 따른 실소요액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하는 인건비 예산을 인건비 인상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③ 정부의 경우 정원에 (1-결원율)을 곱해 인건비 예산을 산정하여 정원과 현원의 차이인 결원율을 인건비 예산편성 시 반영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별표 1] “연도별 예산편성인원 과다산정 명세”와 같이 매년 예산편성인원을 전년도 현원보다 최소 26명에서 최대 68명까지 더 많이 산정하고, 인건비 지급단가도 [별표 2] “연도별 예산상 지급단가와 실제 지급단가의 차이 명세”와 같이 실제보다 부풀려 산정함으로써, 2002년 이후 매년 기본급(연공제 직원의 경우 기준봉급)을 [별표 3] “연봉제 및 연공제 직원의 기본급(기준봉급) 과다편성 현황”과 같이 최소 1,753백만 원에서 최대 4,751백만 원까지 과다하게 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기본급(기준봉급)에 연동되어 지급되는 평가급, 수당, 상여금 등 다른 보수지급항목도 함께 과다 편성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매년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자, 위 기관에서 2002년에 전년도 특별상여금 지급분(기본급의 150%) 중 일부(기본급의 100%)를 기본급에 통합하여 기본급화<sup>2)</sup>하고서도 다시 인건비 집행잔액 3,869백만 원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는 등 [별표 4] “인건비 집행잔액 사용현황”과 같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총 14,224백만 원을 예산에서 정한 이상으로 직원 보수를 인상하거나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

또한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위와 같이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편성인원과 단가를 과다 산정하여 인건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였는데도 이를 그대로 승인하였고, 금융감독원에서 그 집행잔액으로 예산에서 정한 이상으로 직원 보수를 인상하거나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었다.

## 2. 특별상여금 정액 지급

---

2) 기본급에 통합할 경우 해당 금액만큼 기본급이 증가할 뿐 아니라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등도 함께 증가

금융감독원에서 「급여규정」 제32조 제4항 및 제42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센티브 상여금 성격의 특별상여금은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임직원의 경영 실적 및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정기상여금처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비록 공공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다른 공공기관<sup>3)</sup>의 경우에 준하여 금융위원회에서 그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기관 전체의 특별상여금 지급률이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특별상여금 제도가 업무성과를 향상시키는 취지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별표 5] “연도별 특별상여금 지급명세”와 같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경영실적 및 업무성과에 관계없이 특별상여금을 정액으로 지급하였고, 2005년부터 지급시기를 3차례로 나누어 근로자의 날과 추석에 기준봉급(1개월)의 50%씩 기준봉급의 100%를 정액 지급하고, 연말에만 기준봉급의 50%를 차등 지급하고 있었다<sup>4)</sup>.

이에 대해, 2007년 감사원에서 특별상여금을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직원의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통보하였으나, 위 기관에서는 2007년 이후에도 연말에 지급하는 특별상여금 차등 지급 폭만을 일부 확대<sup>5)</sup>한 채 근로자의 날 및 추석에는 특별상여금을 여전히 정액 지급하고 있었다.

3)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률이 결정되며,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에서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률이 결정되며, 각 기관에서는 이와 같이 결정된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액을 다시 임직원의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차등 지급

4) 집행간부, 사무·서무직원, 해외근무직원에 대해서는 연말에도 정액으로 지급하였고, 연봉제 직원에 대해서는 위 연공제 직원의 경우와 유사하게 근로자의 날과 추석에 연봉의 1/36씩 총 2/36를 정액 지급하고 연말에만 연봉의 1/36을 차등지급

5) 연공제 직원의 경우 2006년 기준봉급의 50%±6% → 2007년 100%±6% → 2008년 150%±6%로 확대

또한,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성과 향상의 동기부여 목적으로 도입한 특별상여금을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상여금 지급률 결정 등의 성과평가 요소 없이 정기상여금처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도 이를 시정하도록 지도·감독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금융감독원장은**

- ① 앞으로 인건비 예산 편성인원 및 지급단가 등을 실제보다 과다 편성하여 발생한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인건비를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 ② 특별상여금을 경영실적 및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지급 하는 등 예산 편성 및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 ① 앞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인건비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발생한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인건비를 부당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 ② 특별상여금을 임직원의 경영실적 및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등 금융감독원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업무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연도별 예산편성인원 과다산정 명세

(단위: 명)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전년 말 총현원주)(A)	1,476	1,544	1,613	1,654	1,653	1,686	1,693
예산편성 인원(B)	1,523	1,612	1,675	1,680	1,690	1,738	1,740
실제 보수지급 인원(C)	1,524	1,598	1,660	1,661	1,667	1,684	1,692
총현원대비 차이(B-A)	47	68	62	26	37	52	47
실제인원대비 차이(B-C)	-1	14	15	19	23	54	48

주) 총 현원은 연수·파견 인력 등 정원 외 인력을 포함한 숫자임

자료: 금융감독원 예산 산출근거 및 인건비 지급 전산자료 분석결과

[별표 2]

연도별 예산상 지급단가와 실제 지급단가의 차이 명세

가. 연봉제 직원의 기본급 지급단가(1년 기준)

(금액단위: 천 원)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02년	예산상 지급단가(A)	44,016	40,025	30,515	24,851	18,202
	실제 지급단가(B)	43,751.40	39,241.44	28,863.12	25,548.72	17,566.20
	차이(A-B)	264.60	783.56	1,651.88	-697.72	635.80
'03년	예산상 지급단가(A)	45,391	41,108	29,914	27,339	19,436
	실제 지급단가(B)	44,994.84	40,556.64	28,639.92	28,483.92	19,414.44
	차이(A-B)	396.16	551.36	1,274.08	-1,144.92	21.56
'04년	예산상 지급단가(A)	48,638	43,825	38,022	30,489	0
	실제 지급단가(B)	47,590.92	43,325.76	37,367.64	29,675.64	0.00
	차이(A-B)	1,047.08	499.24	654.36	813.36	0.00
'05년	예산상 지급단가(A)	49,136.40	44,711.30	38,584.20	31,274.80	0.00
	실제 지급단가(B)	48,664.44	44,457.36	38,505.24	30,907.08	0.00
	차이(A-B)	471.96	253.94	78.96	367.72	0.00
'06년	예산상 지급단가(A)	50,072	45,899	39,818	32,119	0
	실제 지급단가(B)	49,484.04	45,575.04	39,652.08	31,972.92	0.00
	차이(A-B)	587.96	323.96	165.92	146.08	0.00
'07년	예산상 지급단가(A)	51,555	47,539	41,411	33,428	0
	실제 지급단가(B)	50,838.84	47,219.16	41,039.04	33,045.00	0.00
	차이(A-B)	716.16	319.84	371.96	383.00	0.00
'08년	예산상 지급단가(A)	51,603	47,826	41,683	31,947	0
	실제 지급단가(B)	52,075.92	48,326.52	41,893.56	33,359.40	0.00
	차이(A-B)	-472.92	-500.52	-210.56	-1,412.40	0.00

주: 1) 실제 지급단가는 각 직급 월 평균 지급단가에 12를 곱해 1년 기준으로 작성(이하 같음)

2) 실제 지급단가는 별도로 편성된 당해 연도 임금인상분, 예산에 근거 없이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임(이하 같음)

3) 2008년에 예산상 지급단가보다 실제 지급단가가 높은 것은 2007년에 예산상 인건비 동결방침과 달리 인건비를 2% 인상한 부분이 2008년도 예산편성 시점에 반영되지 않아 예산상 지급단가는 2% 인상이 되지 않은 단가로 편성이 되고, 2008년에 실제로는 지급은 2% 인상된 단가로 지급되었기 때문임

자료: 금융감독원 예산 산출근거 및 인건비 지급 전산자료 분석결과(이하 같음)

나. 연공제 국내직원의 기준봉급 지급단가(1개월 기준)

(금액단위: 천 원)

구 분		2급	3급	4급	5급	사무직원	서무직원
'02년	예산상 지급단가(A)	3,090	2,845	2,247	1,661	1,255	1,553
	실제 지급단가(B)	3,013.19	2,761.07	2,108.71	1,538.79	1,216.06	1,541.55
	차이(A-B)	76.81	83.93	138.29	122.21	38.94	11.45
'03년	예산상 지급단가(A)	3,293.3	3,136.6	2,393.7	1,754.4	1,378.9	1,683.4
	실제 지급단가(B)	3,268.12	2,965.82	2,288.32	1,629.60	1,340.46	1,669.99
	차이(A-B)	25.18	170.78	105.38	124.80	38.44	13.41
'04년	예산상 지급단가(A)	0	4,315	3,351	2,432	1,914	2,372
	실제 지급단가(B)	4,574.58	4,122.57	3,182.88	2,248.63	1,730.11	2,285.61
	차이(A-B)	-4,574.58	192.43	168.12	183.37	183.89	86.39
'05년	예산상 지급단가(A)	5,203	4,618	3,586	2,655	2,182	2,596
	실제 지급단가(B)	4,888.87	4,441.63	3,403.66	2,448.41	1,931.18	2,476.60
	차이(A-B)	314.13	176.37	182.34	206.59	250.82	119.40
'06년	예산상 지급단가(A)	5,236	4,711	3,658	2,749	2,160	2,684
	실제 지급단가(B)	5,054.25	4,498.97	3,458.56	2,529.27	2,036.72	2,561.40
	차이(A-B)	181.75	212.03	199.44	219.73	123.28	122.60
'07년	예산상 지급단가(A)	5,468	4,710	3,699	2,771	2,284	2,800
	실제 지급단가(B)	5,194.79	4,641.32	3,543.32	2,624.07	2,166.63	2,681.09
	차이(A-B)	273.21	68.68	155.68	146.93	117.37	118.91
'08년	예산상 지급단가(A)	5,394	4,853	3,699	2,826	2,226	2,844
	실제 지급단가(B)	5,085.93	4,793.48	3,627.51	2,665.59	2,228.47	2,761.31
	차이(A-B)	308.07	59.52	71.49	160.41	-2.47	82.69

주) 임원의 기본급과 해외직원의 기준봉급은 그 지급단가가 「급여규정」에 정해져 있어 예산상 지급단가와 실제 지급단가 간 차이 분석대상에서 제외



[별표 3]

연봉제 및 연공제 직원의 기본급(기준봉급) 과다편성 현황

(금액단위: 백만 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기본급(연봉제)	602	715	882	1,286	641	1,006	380
기준봉급(연공제)	1,151	2,236	2,743	2,462	3,879	3,745	3,183
합계	1,753	2,951	3,625	3,748	4,520	4,751	3,563

자료: 금융감독원 예산 산출근거 및 인건비 지급 전산자료 분석결과

[별표 4]

인건비 집행잔액 사용현황

(금액단위: 백만 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추가 보수인상	-	-	-	2,325	-	2,741	-	5,066
특별상여금 지급	3,869	4,572	-	-	-	-	717	9,158
합 계	3,869	4,572	-	2,325	-	2,741	717	14,224

주)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거나, 예산보다 과도하게 보수를 인상한 경우만을 집계한 것으로 보수 및 특별상여금 예산 자체를 전년보다 과도하게 인상하여 편성한 부분은 제외

자료: 금융감독원 예산 산출근거 및 인건비 지급 전산자료 분석결과

[별표 5]

연도별 특별상여금 지급 명세

(금액단위: 천 원)

지급일자	차등 여부	집행간부	연봉제 직원	연공제 직원	해외근무직원	계
1999. 12. 29.	정액 지급	19,901	231,314	2,509,225	0	2,760,440
2001. 9. 28.	정액 지급	0	297,836	1,079,545	0	1,377,381
2001. 12. 28.	정액 지급	0	0	2,351,162	0	2,351,162
2002. 9. 16.	정액 지급	0	385,387	1,472,376	0	1,857,763
2002. 12. 27.	정액 지급	29,998	403,596	1,577,395	0	2,010,989
2003. 12. 31.	정액 지급	63,894	913,702	3,537,104	57,373	4,572,073
2004. 9. 23.	정액 지급	44,999	805,296	1,982,392	29,165	2,861,852
2004. 12. 31.	정액 지급	46,111	838,913	2,100,475	33,247	3,018,746
2005. 4. 29.	정액 지급	52,717	900,970	2,123,563	30,454	3,107,704
2005. 9. 15.	정액 지급	52,717	871,302	2,145,314	34,120	3,103,453
2005. 12. 30.	차등 지급	52,717	870,906	2,206,461	30,726	3,160,810
2006. 4. 28.	정액 지급	72,826	939,273	2,189,135	28,758	3,229,992
2006. 10. 2.	정액 지급	79,076	904,020	2,247,892	31,814	3,262,802
2006. 12. 29.	차등 지급	84,057	914,972	2,334,207	32,770	3,366,006
2007. 4. 30.	정액 지급	86,666	1,024,624	2,282,670	31,946	3,425,906
2007. 9. 20.	정액 지급	86,666	973,933	2,301,517	31,946	3,394,062
2007. 12. 31.	차등 지급	94,999	959,600	2,331,720	33,500	3,419,819
2008. 4. 30.	정액 지급	88,958	1,080,305	2,314,518	29,168	3,512,949
2008. 9. 11.	정액 지급	95,624	1,031,957	2,323,530	32,405	3,483,516
2008. 12. 31.	차등 지급	95,624	1,025,788	2,364,728	30,571	3,516,711
2008. 12. 31.	3급이하 정액지급	0	80,087	631,026	5,562	716,675
2009. 4. 30.	정액 지급	0	1,088,678	2,285,798	36,340	3,410,816
합 계		1,147,550	16,542,459	46,691,753	539,865	64,921,627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재구성

# 감 사 원

## 주 의 요 구

제 목 ◆◆◆◆ 주식회사의 금융투자업 인가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① 금융위원회 본부 ② 금융감독원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 주식회사(대표이사 ○○○・○○○, 이하 “◆◆◆◆”이라 한다)가 2008. 10. 2. 금융투자업(증권중개업)의 인가를 신청하자 금융감독원에 심사를 위탁한 후, 심사안건을 검토하였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12조 및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2008-25호)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의 인가 심사를 할 때에는 신청인이 건전 금융거래질서를 위반하여 향후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지와 그 임원이 경영의 건전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이 이번 금융투자업 인가 신청 전인 2008. 2. 29.에 증권 위탁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 「증권거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가칭)□□□□ 주식회사(대표이사 ●●●)를 설립하고자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자 ◆◆◆◆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 등 9개 대부업자의 311개 대여계좌를 이용하여 매매주문을 수탁한 행위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사전심의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같은 해 5. 7. “◆◆◆◆이 대부업체의 선물·옵션 계좌 대여행위임을 알고도 불건전 매매주문을 수탁한 것은 증권업의 건전영위를 곤란하게 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sup>1)</sup>

따라서 ◆◆◆◆에서 불과 5개월이 지난 같은 해 10. 2. 「자본시장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이미 인가받은 ◆◆◆◆에 증권중개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인가 신청하였으므로 위 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 부의안건을 작성할 때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 증권업을 건전하게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었음을 명시하여야 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작성한 부의안건을 검토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 증권업을 건전하게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누락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감독원에서는 ◆◆◆◆이 대부업체의 대여계좌를 이용하여 매매 주문을 수탁한 데 대하여 같은 해 7. 24. 위 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으나 ‘기관주의’는 금융감독원의 내부기준상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 증권업을 건전하게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사실을 누락하였다. 그리고 나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2009. 1. 20. 부의안건을 작성하였고,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를 그대로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부의하였다.

그 결과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서는 같은 해 1. 21.과 같은 해 1. 28. ◆◆◆◆에 대하여 위 심사안건대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

1) ◆◆◆◆에서 금융위원회 최종의결 하루 전인 2008. 5. 8. 허가 신청을 자진 철회함

증권중개업을 인가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앞으로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심사안건에서 누락하는 등 심사를 소홀히 하여 증권업을 건전하게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된 업체에 증권중개업을 인가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투자업 인가 관련 심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감 사 원

## 주 의 요 구

제 목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 지도·감독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1997. 7. 3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를 수집·보관하여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신용정보업자 등 상호 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하도록 하는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 전국은행연합회<sup>1)</sup>를 등록 조치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과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위 연합회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위 위원회는 위 연합회에 집중되는 정보는 각 금융기관 및 감독기관과 회계법인 등에서 여신심사, 여신 건전성 감독, 회계감사 등에 폭넓게 이용되므로 신용정보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이를 적시에 반영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특히, 위 연합회가 2008. 10. 20.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실시한 일제 정비 내역을 확인한 결과, [표 1]과 같이 위 연합회에 등록된 연체 정보 1,000만여 건의 1.88%에 해당하는 188,903건이 오류가 있거나 누락되어 일제정비를 통하여

1) 모든 시중은행과 특수은행 및 지방은행을 정회원으로 하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준사원으로 하여 구성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위 법에 따라 7천여 개의 금융기관, 공공기관, 각종 신용정보회사 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하여 정책 당국의 정책 수립 및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에 활용토록 하고 있음.

수정되는 등 오류 및 누락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각 금융기관이 신용정보를 바로 등록 또는 해지하도록 더욱 철저히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전국은행연합회 일제정비 결과

구 분	연체 정보	개인대출 정보	개인채무보증 정보
전체 등록 건수	1,000만여 건	3,200만여 명	410만여 명
정비 대상 건수	188,903건	776,834명	22,522명
비 율(%)	1.88	2.42	0.54

자료: 전국은행연합회 자료 재구성

그러나 위 위원회에서는 위 연합회로부터 신용정보 업무와 관련하여 신용정보협의회 안건을 보고받거나 2007. 7. 12.부터 같은 해 7. 16.까지 4일간 금융감독원을 통해 위탁검사한 사실을 제외하고는 지도·감독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특히 위 위원회에서는 위 연합회로부터 위와 같이 일제정비<sup>2)</sup>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 결과의 적정 여부를 파악하거나 정비상태를 표본 점검하는 등 적절하게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2009. 7. 2.부터 같은 해 7. 8.까지 감사원 감사 시 위 일제 정비 후 6개월간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 연합회에 신용정보 변동 사항을 통보한 실적을 조사<sup>3)</sup>한 결과, [표 2]와 같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위 연합회에 연체 정보가 있는 자로 등록된 100명이 분할 상환 등으로 「신용정보 관리규약」(2009. 6. 12.)에 따른 신용정보 등록해제 대상자인데도 위 연합회에 신용정보 해제를 요청하지 않아 해제 사유 발생일로부터 2009. 6. 30. 현재까지

2)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2003. 2. 24.부터 같은 해 3. 14.까지 일제 정비 작업을 한 지 5년이 지난 2008년에 다시 실시.

3)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7,000여 개의 기관 중 특정 기관에 대하여 조사.

짧게는 62일 길게는 1,586일간 연체 등록되어 있는 등 두 기관에서 443명이 짧게는 11일에서 길게는 1,586일간 신용정보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연체 등록 또는 해제되지 않고 있다.

[표 2] 신용정보 변동 미반영 현황

(단위: 명)

구 분	연체 정보 등록		연체 정보 해제	
	대상자 <sup>4)</sup>	미 등록자	대상자	미 해제자
한국주택금융공사	107,502	-	33,783	100
한국자산관리공사	4,654	238	25,969	96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료 재구성

그 결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미처 신용정보 등록해제를 요청하지 않은 연체등록자 100명 중 카드 발급을 신청한 5명 모두 위 연합회의 연체등록자라는 사유로 신용카드 발급이 거절되었고 2명은 카드 사용이 중지된 후 해제되지 않는 등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되지 않아 신용정보 제공자의 경제 활동이 제약받고 있다.

그 외에도 연체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대상자는 각 금융기관에서 대출 및 보증을 취급하면서 잘못된 신용정보를 기초로 이들에게 대출 및 보증을 제공하여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채권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전국은행연합회와 각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신용정보 변동사항 관리를 게을리하여 신용양호자가 피해를 입거나 신용불량자에게 신용이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신용정보 관리업무를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4) 대상자는 2006년부터 연체 등록이나 해제 사실을 위 연합회에 통보해 준 건수를 집계한 것임.



# 감 사 원

## 주 의 요 구

제 목 금융법규 관련 유권해석사례 공개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구 금융감독위원회)에서 2007. 6. 4. 감독행정을 체계적·단계적으로 규범화하고자 관계 부처 및 단체의 실무책임자 회의를 거쳐 확정된 “금융감독규범 제도화 추진방안”(2007. 6. 8. 언론 보도)에 따라 금융법규와 관련된 유권해석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금융감독규범 제도화 추진방안” 중 “금융감독 법규의 적법성·투명성 확보” 내용에 따르면,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관련 법규의 유권해석 및 실무해석사례가 공유 또는 공개되지 않아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해칠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금융관련 기관의 법규 해석사례를 공유하고 외부에 공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는 2008. 3. 3. 출범 이후, 같은 해 7월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개통하면서 그간 민원에 회신하는 형태로 질의 당사자에게만 통보하여 오던 유권해석사례를 같은 해 7. 1.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공동홈페이지인 “e-금융민원센터”에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금융위원회에서 유권해석사례를 공개할 때에는 “금융감독규범 제도화 추진

방안”의 취지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의 영업비밀 보호 등 공개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급적 신속하게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그 전신인 구 금융감독위원회와 구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과 관련된 유권해석사례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등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했다.

그러나 같은 해 3. 3. 금융위원회 출범 당시부터 2009. 6. 30.까지의 유권해석사례의 공개 비율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공개가 가능한 유권해석사례 총 326건 중에서 82건만 공개하고 나머지 244건은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sup>1)</sup>

[표]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공개 현황(2009. 6. 30. 현재)

(단위: 건, %)

	접수건수	완료건수 (A)	비공개사유 <sup>2)</sup> 해당건수 (B)	공개건수 (C)	미공개 건수 (A-B-C)	공개 비율 [C/(A-B)]
2008년	259	257	74	80	103	25.2%
2009년 상반기	298	226	83	2	141	1.4%
합 계	557	483	157	82	244	25.2%

자료: 금융위원회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위 홈페이지에 구 재정경제부와 구 금융감독위원회 시절의 유권해석사례 총 134건(2006년도 회신 60건, 2007년도 회신 74건)만 등록하였을 뿐 현재까지도 전체 유권해석사례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금융위원회 출범 이전에 구 재정경제부와 구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회신한 유권해석사례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그 결과 위 유권해석사례 공개제도가 금융정책의 일관성·투명성 확보라는 애초의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1) 따라서 유권해석사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위 홈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 없어 시중에서 책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2) 동일·유사 내용, 신청인 철회, 유선 답변, 회신 후 법령 개정, 단순 법령안내 등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금융감독규범 제도화 추진방안”  
에 따라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유권해석사례를 가능한 한 빨리 공개하는  
등 유권해석사례 공개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감 사 원

## 주 의 요 구

제 목 파견 인력 운용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 외 기관 또는 단체(이하 “민간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인력을 파견받거나 소속 공무원을 국가기관으로 파견하고 있다.

위 위원회에서는 2008. 2. 29.부터 2009. 6. 30. 현재까지 민간기관으로부터 총 73명의 민간전문가를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였거나 현재 근무하게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제1항에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 등에 파견하거나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 임용령」 제41조, 제41조의2 및 「공무원 임용규칙」(2008. 9. 22. 행정안전부 예규 제196호) 제42조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는 때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가 필요하며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고자 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민간전문가가 소속된 민간기

관의 장과 사전협의 후 직무파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파견 발령하고 파견 목적 및 심의결과 등을 첨부하여 민간전문가의 파견사실을 파견 후 1주 이내에 행정안전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위원회에서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 등에 파견 근무하거나 민간전문가를 파견받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고 파견 전에 민간전문가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면밀하게 심의·검토함으로써 제도에 맞지 않거나 절차를 위반하여 제도가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1. 민간전문가로 파견 받은 직원을 비서로 활용

그러나 감사원 감사 기간 중인 2009. 7. 17. 민간전문가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2008. 3. 21.부터 위 위원회 △△△△ 비서로 근무하고 있는 ●●●●공사 산하 ○○○○공사 계약직 ○○○은 위 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구조개선과에서 ●●●●공사에 위 사람을 공적자금 업무 관련 민간전문가로 파견 요청을 하여 같은 해 4. 21.부터 2010년 3월<sup>1)</sup>까지 같은 과에 인사 발령을 내고도 실제로는 2008. 3. 21.부터 2009. 5. 31.까지 위 위원회 △△△△에 비서로 근무하도록 하는 등 위 사람과 금융불공정거래 관련 전문가로 파견받은 ○○○○공사 ◎◎◎◎<sup>2)</sup>을 파견 사유와 다르게 비서로 근무하게 하고 있었다.<sup>3)</sup>

또한, 위 위원회 혁신행정과(현 행정인사과)에서는 행정안전부에 민간전문가 파견사실을 통보하면서 ○○○은 공적자금과 관련된 업무 등에서 민간전문가의

---

1) 위 두 사람을 대상으로 2008. 4. 21.부터 2009. 4. 20.까지 파견 요청을 하여 파견 근무토록 하고 이후 2009. 3. 20. ●●●●공사에 파견기간 연장 협조요청을 하여 1년간 파견 기간을 연장.  
2) ◎◎◎은 2008. 3. 21.부터 2009. 6. 3.까지 △△△△△, 같은 위원회 □□□□□, 증권선물위원회 □□□□□ 비서로 근무하였고 ◎◎◎과 ○○○은 감사원 예비조사(2009. 5. 28.) 이후에 각각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  
3) ◎◎◎은 은행과에서 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업무 지원에 위 사람이 필요하고 부보금융기관의 경영분석 및 금융권별 리스크 관리 등 관련 업무에 대한 경험이 많아 지원업무에 적임자로 선정하였다고 사실과 다른 문서를 기안 작성하여 2008. 4. 11. 혁신행정과에 관련 문서 송부.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파견받은 것이며 ●●●●공사에서 부보금융권별 보험료 납부를 통한 목표기금규모 설정 등 예금보험제도 연구, 정리금융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는 등 해당 분야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없는 위 두 사람<sup>4)</sup>이 해당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인 것처럼 파견목적과 원 소속기관 담당업무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

## 2.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고 민간전문가 파견

한편 감사원 감사 기간 중인 2009. 7. 6. 위 위원회에서 제출한 민간전문가 파견 현황과 실제 근무 인력을 비교해 본 결과, [표] “관련 규정을 위반한 민간전문가 수건 명세”와 같이 위 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업무량 증가 등의 사유로 직무파견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도 파견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채 ◇◇◇ 직원 ◆◆◆ 등 2명을 2009. 2. 17. 및 같은 해 3. 23.부터 같은 해 7. 2. 현재까지 각각 근무하도록 하는 등 위 위원회 3개 과에서 민간전문가 4명<sup>5)</sup>을 위와 같이 심의절차나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같은 해 2. 17.부터 같은 해 7. 2. 현재까지 짧게는 54일에서 길게는 136일 동안 파견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 [표] 관련 규정을 위반한 민간전문가 수건 명세

4) ○○○은 금융 불공정거래 감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파견받아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업무와 금융기관 상시 감시 업무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행정안전부에 통보하였으나 위 두 사람은 ●●●●공사에서 비서나 서무 업무 등의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외부 용역회사와 계약하여 근무토록 하다가 금융위원회에 파견하기 위하여 정리금융공사에서 계약직으로 고용한 인력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해당 분야에 전혀 경험 및 전문지식이 없음.

5) 이 중 자본시장과에 근무한 ◆◆◆ 등 3명은 감사원 예비조사 실시(2009. 5. 28.) 이후인 2009. 7. 2.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

구 분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소속 및 직위	◇◇◇◇ 대리	◇◇◇◇ 대리	■■■■■ 과장	◇◇◇◇ 대리
실제파견 근무일	2009. 2. 17.	2009. 2. 17.	2009. 3. 22.	2009. 5. 10.
근무 부서명	자본시장과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
파견종료일(실제)	2009. 7. 2.	2009. 7. 2.	2009. 5. 22.	2009. 7. 2.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 3. 전문성 없는 업무에 민간전문가 파견 운용

한편 위 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는 국회 대응 등의 목적으로 업무가 과중하다는 사유를 들어 직무파견심의위원회를 거쳐 ●●●●공사 소속 ◆◆◆ 등 2명을 파견 받아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국회대응자료 작성 및 지원에 활용하는 등 민간전문가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

“1항”과 “3항”의 내용과 같이 민간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부서에서도 민간전문가를 파견받아 위 위원회 직원처럼 운용하는 등 위 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실 등 일부 부서에서는 관행적으로 금융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민간전문가라는 명목으로 파견받아 근무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위 위원회에서는 관련 규정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2008. 9. 23.부터 2009. 6. 10.까지 약 9개월간 소속 공무원 1명을 업무상 필요하다는 사유로 국회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민간전문가 파견 목적에 맞지 않는 업무에 민간전문가를 근무시키거나 관련 규정과 절차를 위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민간전문가를 파견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금 융 위 원 회

수신자 감사원장(금융기금감사국 제1과장)  
(경유)

제목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

1.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 제3과-1807(2009.11.13) 관련입니다.
2. 처분요구 통지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조치요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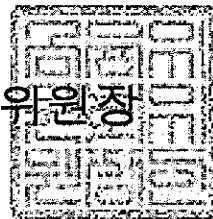
- ① 집합투자업자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펀드로 전환되지 않은 펀드를 펀드 투자자들에게 통보하도록 조치
- ② 펀드판매회사에게 펀드조회 내용 등에 펀드 규모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

### 【조치결과】

- ①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는 집합투자업자로 하여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분기별로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 해당펀드가 동법률에 따라 전환된 펀드인지 여부를 기재하도록 금융투자협회의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제공 요령」을 개정 조치('09.7.17)
- ② 판매회사가 정기적으로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증권 보유내역 및 평가금액 등 집합투자증권의 잔고를 통보하는 경우 해당 펀드의 순자산총액, 설정원본 및 전환여부를 통보내용에 포함하도록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09. 12.14, 단, 판매회사 전산개발 및 서식변경에 따른 기간을 고려하여 2010.4.1시행). 끝.



금융위원회 위원장



행정사무관

이문규

감사담당관

전결 01/08

이보현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28

(2010. 01. 11.)

접수

우 150-74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실

/ <http://www.fsc.go.kr>

전화 02-2156-9553

전송 02-2156-9549

/ [lee011@fsc.go.kr](mailto:lee011@fsc.go.kr)

/ 부분공개(5)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09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검사 등 결산감사 -  
( 금융위원회 )

2010. 4.

감 사 원

#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	1
II. 감사대상기관 일반 현황 .....	3
1. 2. 모기지론 이차보전 사업 관리·감독 및 시행 부적정(주의·시정) ...	7
3. 2009회계연도 성과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 부적정(주의) .....	11
4.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주의) .....	18
5. 국가채권 권리보전조치 및 불납결손처분 부적정(주의) .....	20

# I. 감사실시 개요

## 1. 감사목적

금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실태를 점검·분석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질서 확립에 기여하며, 국회 예산·결산 심의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출한 금융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등을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개선·보완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유도하는 데 이번 감사의 목적을 두었다.

## 2.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 범위

2009.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처리한 회계업무 전반과 “2009회계연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09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하였다.

## 3. 감사 중점

이번 감사는 국가 세입·세출의 결산을 확인하기 위해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편 성과보고서 검사에서는 적극적인 업무수행 관점에서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고 성과를 쉽게 달성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목표수준을 설정하였는지 여부 등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과 함께 성과지표를 통한 실적치가 객관적인

자료 및 출처 등에 의하여 검증가능하고, 측정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성과지표 실적치의 신뢰성’을 검토하였다.

#### 4. 감사기간 및 인원

2010. 3. 15.부터 같은 해 3. 19.까지(5일간) 감사인원 3명을 투입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감사원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0. 4. 29. 감사위원회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

## 1. 일반 현황(2009. 12. 31. 현재)

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금융감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그림 1]과 같이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1인, 당연직 4인\* 등 총 9인으로 구성

\* 당연직 :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소속하에 설치되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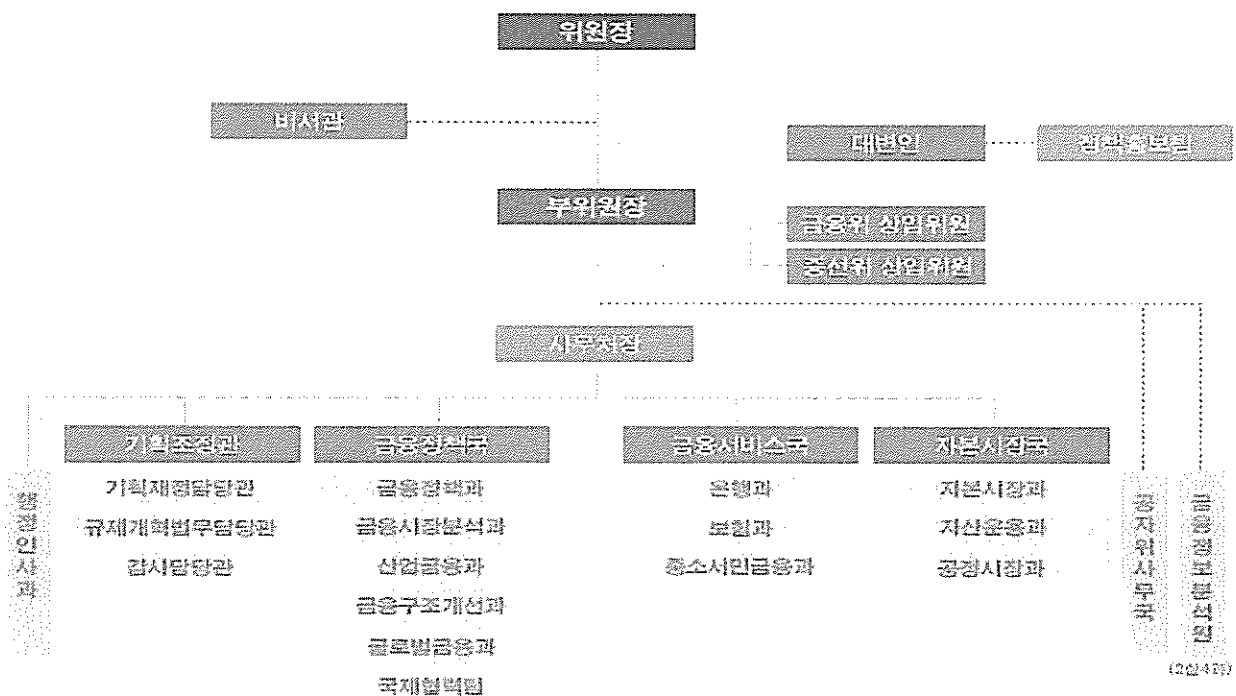
조사, 기업회계기준·감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3인 등 총 5인으로 구성

다. (사무처) 본부에 1관 3국 1대변인 15과 2팀, 소속기관으로 금융정보분석원

및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을 설치

[그림 1] 조직 현황



자료: 금융위원회

## 라. 인원

[표 1]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정무직		별정직		일반직		연구직		계약직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계	230	220	2	2	4	4	200	190	1	1	11	11	12	12
본 부	164	161	2	2	4	4	137	134	1	1	9	9	11	11
소속기관	66	59	0	0	0	0	63	56	0	0	2	2	1	1

주: 별도 정원(파견, 휴직 등) 제외함.

## 2.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금융위원회의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표 2]와 같이 58조 6,811억 원(일반회계 2조 8,868억 원, 기금 55조 8,766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50.5%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중소기업·서민 등에 대한 지원강화로 2조 7,000억 원(한국산업은행 9,000억 원, 중소기업은행 8,000억 원, 한국자산관리공사 6,000억 원, 한국주택금융공사 4,000억 원)을 출자하였기 때문이다.

[표 2]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단위: 억 원, %)

회 계 구 분		'09세출예산	'08세출예산	증감률
총 계		586,811	424,263	38.3
일 반 회 계		28,868	3,037	850.5
기금	소 계 (관리주체)	558,766	421,457	32.5
	공적자금상환기금 (금융위)	110,362	89,972	22.6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금융위)	1,560	1,721	△9.3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57,909	30,743	88.3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24,595	16,030	53.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협중앙회)	20,912	13,250	57.8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11,168	9,757	14.4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예금보험공사)	117,819	170,412	△30.8
	부실채권정리기금 (자산관리공사)	12,085	89,567	△86.5
	구조조정기금 (자산관리공사)	202,352	-	-

자료: 금융위원회

결국 일반회계 2조 8,868억 원 중 [표 3]과 같이 위 위원회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출자금 등 2조 7,719억 원, 회계기금 간 거래 822억 원을 제외하면 직접적인 집행금액은 327억 원이며 이 중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경직성 경비가 225억 원으로 전체의 68.8%에 해당(금융위원회가 직접 집행한 주요사업비는 102억 원)한다.

[표 3]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부 집행 현황

(금액단위: 억 원)

일반회계	28,868
인건비	139
기본경비*	86
주요사업비 - 산업은행, 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출자 27,000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650 - 모기지론 이차보전 민간이전 39 - 역모기지론 출연 30	27,820 (좌측 금액 합은 27,719)
회계기금 간 거래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786 - IBRD차관 원금상환 31 - IBRD차관 이자상환 5	822

주: 기본경비는 특근매식비, 복리후생비, 월정직책금,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그 외 9개 기금이 있으나,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상환기금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등 2개 기금만 관리(한국은행에 위탁관리)하고, 나머지 기금은 개별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등 해당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 3. 2009회계연도 성과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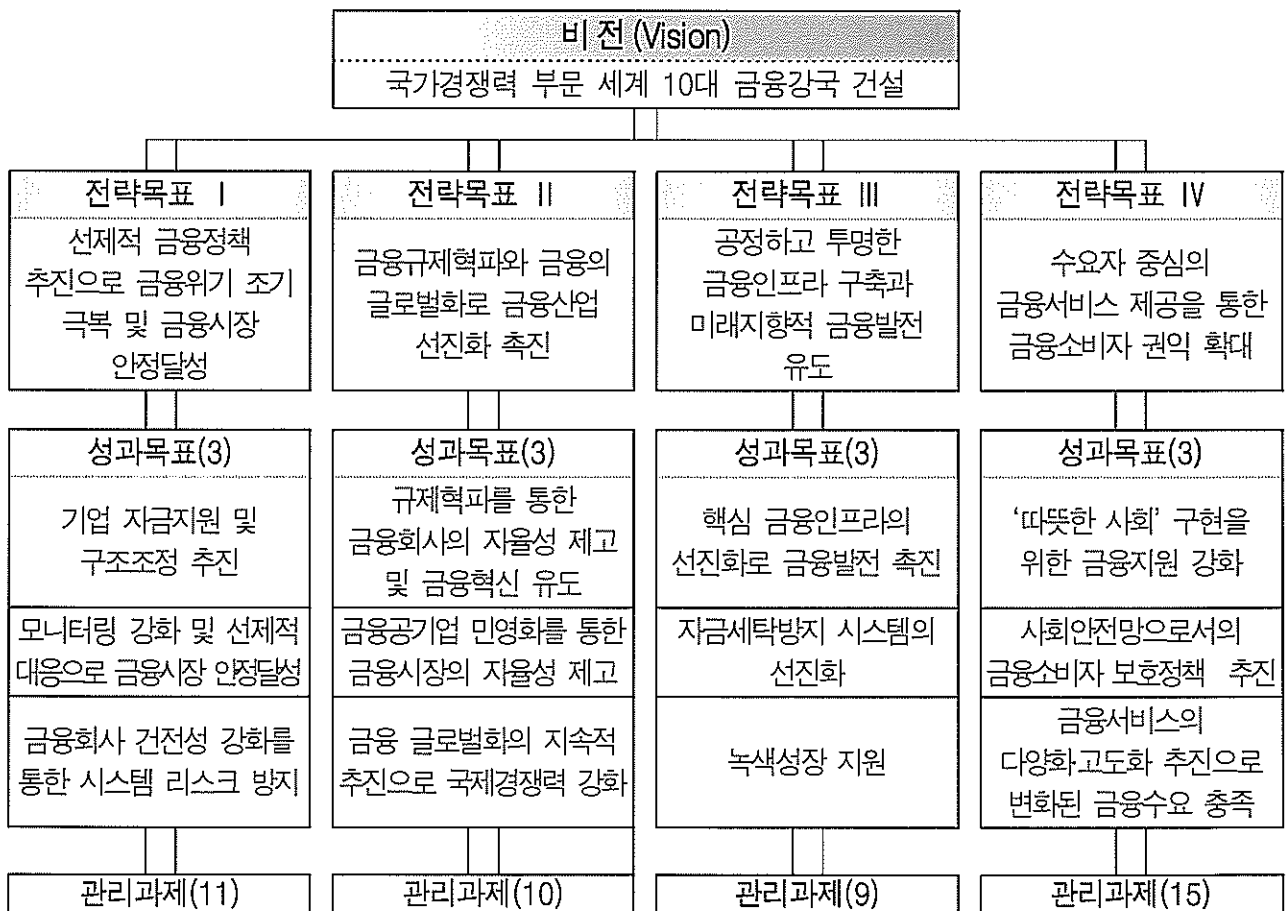
#### 가. 임무(Mission) 및 비전(Vision)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금융시장 육성, 금융이용자 보호”라는 임무(Mission)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경쟁력 부문 세계 10대 금융강국 건설”을 비전(Vision)으로 설정하였다.

#### 나. 성과관리체계

위 비전 달성을 위해 [그림 2]와 같이 4개의 전략목표, 12개의 성과목표, 45개의 관리과제를 설정하는 한편, 각 성과목표와 관리과제의 목표치 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각 13개와 64개, 계 77개의 성과지표를 선정하였다.

[그림 2] 금융위원회의 성과관리체계도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 감 사 원

## 주의·시정요구

제 목 모기지론 이차보전 사업 관리·감독 및 시행 부적정

소 관 청 ① 금융위원회 ② 한국주택금융공사

관 계 기 관 ① 금융위원회 본부 ② 한국주택금융공사 본사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 방안」(2005. 8. 31.)과 「주택시장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 방안」(2007. 1. 31.)에 근거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2005년 11월 저소득·무주택 서민을 위한 금리우대 모기지론으로 10년 이상 장기고정금리 상품인 ‘금리우대 보증자리론’을 개발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면서 매년 이차보전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내용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서 사업시행을 위탁받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부합산 연소득 20백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300백만 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85m<sup>2</sup>)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금리우대 보증자리론으로 대출(실제 대출은 개별 은행에서 취급)해 주면서 소득구간별로 금리를 차별인하(0.5~1.0%p)<sup>1)</sup>하여 2005년 11월부터 2009년 12월 말 현재까지 6,871명에게 4,766백만 원을 이차보전 하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저소득·무주택자 금리우대 모기지론 업무처리기준」

1) 16백만 원 이하: 1.0%p 인하, 18백만 원 이하: 0.75%p 인하, 20백만 원 이하: 0.5%p 인하.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침)에 따르면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주택전산망 전산자료를 조회<sup>2)</sup>하여 대출자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를 대출실행 전 사전에 확인하고, 사후적으로 다주택 소유 여부를 재확인하며 대출실행 시 1주택 초과 보유 사실이 확인되거나 대출실행 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출자와 약정한 「추가약정서」에도 “대출 실행일 이후에도 본인 또는 세대원의 전부 내지 일부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1주택 이하인 상태로 유지할 것을 약속하며, 약속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곧 변제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자와 세대원의 다주택 소유 여부를 2005년 11월 상품 출시 이후 사후적으로 한번도 검증하지 않았으며, 금융위원회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게다가 위 「저소득·무주택자 금리우대 모기지론 업무처리기준」 및 「추가약정서」에는 사후적으로 다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대출금을 회수한다고 되어 있을 뿐 부당 지원된 이차보전금을 환수한다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2010년 3월 감사원에서 대출자와 그 배우자의 다주택 소유여부를 확인한 결과, [표]와 같이 취급 금융기관의 부주의로 주택 소유자에게 대출한 ‘취급기준 위반’ 사례가 3건(대출잔액 200백만 원, 부당 이차보전금 3백만 원), 대출 취급 시에는 무주택이었으나 대출 후 주택 추가구입 등으로 사후적으로 다주택이 된 ‘사후적 자격 상실’ 사례가 31건(대출잔액 1,552백만 원, 부당 이차보전금 26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4조에 따르면 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

백만 원)으로 다주택 소유자 총 34명에게 대출잔액 1,752,151,844원, 부당 이차보전금 29,131,935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sup>3)</sup>

[표] 대출 부적격자 다주택 소유 현황

(단위: 명, 건, 원)

구 분	부적격 대출자 수	발견 주택수	부적격 대출잔액	부당 이차보전금
취급기준 위반 <sup>1)</sup>	3	6	200,072,054	2,939,440
사후적 자격 상실 <sup>2)</sup> (3주택자)	31 (3)	65 (9)	1,552,079,790	26,192,495 <sup>3)</sup>
계	34	71	1,752,151,844	29,131,935

주: 1. 주택소유자에게 대출실행

2. 세대별 1주택 사후유지 요건 위반(결혼으로 인한 주택취득 10명, 주택 추가 구입 21명)

3. 결혼으로 인한 주택취득 10명은 결혼일자를 알 수 없어 부당 이차보전금이 정확히 계산되지 않음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특히 34명 중 3명은 금리우대 모기지론 대출로 주택을 취득한 후 추가로 2채 더 취득하는 등 주택 총 3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부산광역시 \*\*\* \*\* OO아파트 △△△동 △△△호를 보유하던 OOO의 경우 2008. 5. 7. 위 주택을 지인에게 증여하여 2008. 5. 8.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은 후 2008. 6. 20. 증여를 해제<sup>4)</sup>하는 등 사기성 대출 사례까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3) 한편 대출자의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57건, 대출잔액 3,638백만 원으로 나타나 위 직계 존비속이 대출자의 동일 세대원인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따라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주의] 앞으로 다주택 소유자에게 금리우대 모기지론 이차보전 예산을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이차보전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시정] ① 저소득·무주택자 금리우대 모기지론의 '취급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3건의 대출금 200,072,050원을 회수하고 이차보전금 2,939,440원을 환수하여 국고에 반납하는 한편, '사후적 자격 상실'에 해당하는 31건의 대출금 1,552,079,790원을 회수하고

② 앞으로 '사후적 자격 상실' 건에 부당 지원된 이차보전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저소득·무주택자 금리우대 모기지론 업무처리기준」, 대출자와의 「추가약정서」 작성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③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 감 사 원

## 주 의 요 구

제 목 2009회계연도 성과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 부적정

소 관 청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국가재정법」 제58조 및 「국가회계법」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09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위 관서에서는 [별표] “금융위원회 성과관리체계”와 같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금융시장 육성, 금융이용자 보호’라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임무-비전-전략목표(4개)-성과목표(12개)-관리과제(45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위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의 성과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77개의 성과지표(성과목표 성과지표 13개, 관리과제 성과지표 64개)를 설정하고 각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한편, 위 관서에서 작성한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총 13개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중 10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고, 64개 관리과제 성과지표 중 55개의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표 1]과 같이 4개 전략목표의 달성률은 전체적으로 84% 수준이다.

[표 1] 전략목표 달성현황

전 략 목 표	사업규모(억 원)	성과지표 실적 (달성지표/전체지표, 달성률)
I. 선제적 금융정책 추진으로 금융위기 조기 극복 및 금융시장 안정달성	33,667	17/17 (100%)
II. 금융규제 혁파와 금융의 글로벌화로 금융산업 선진화 촉진	23.1	15/19 (79%)
III.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인프라 구축과 미래지향적 금융발전 유도	52.8	13/16 (81%)
IV. 수요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	4,709.5	20/25 (80%)
총 계	38,452.4	65/77 (84%)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이에 대해 감사원 감사기간(2010. 3. 15.~3. 19.) 중 위 13개 성과목표 성과지표와 64개 관리과제 성과지표 등 계 77개 성과지표 전체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 1. 성과계획 수립 부적정

### ① “법 개정 여부” 등 외부요인에 많이 의존하는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위 관서에서는 [표 2]와 같이 관리과제에 대한 성과지표 및 목표치 64개 중 14%인 9개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이들 지표는 목표 달성 여부가 국회 심의·통과 등 외부요인에 많이 의존하는 등 당해 연도의 업무추진과 무관하게 결정되고 있어 성과지표 및 목표치로는 부적정하다.

[표 2] 외부요인에 많이 의존하는 성과지표 및 목표치 현황

관리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능력 강화 (Ⅰ-3-정책②)	RBC제도 시행	관련 법규 개정
권역별 법령 정비작업 추진 (Ⅱ-1-정책①)	은행법 및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시행령 개정
금융상품 판매체계 개편 (Ⅱ-1-정책②)	(가칭)금융상품판매법 제정	법 제정
보험회사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 (Ⅱ-1-정책③)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시행령 개정
회계·공시제도 개선 (Ⅲ-1-정책①)	국제회계기준 관련 시행령 및 규정개정	시행령 및 규정개정
불완전판매 재발방지 추진 (Ⅳ-2-정책①)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시행령 개정
파생금융상품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등 (Ⅳ-2-정책②)	관련 법령 개정	법령 개정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KPI 제도개선 (Ⅳ-2-정책③)	내부통제개선	법
헤지펀드 도입 (Ⅳ-3-정책②)	헤지펀드제도 도입 여부	시행령 개정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 ② 예산액에 따라 당연히 달성되는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전략목표) Ⅳ. 수요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  
 (성과목표) Ⅳ-2.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  
 (관리과제) Ⅳ-2-제정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및 저축장려금 지급  
 (성과지표) 기금출연실적(측정방법: 기금출연액, 목표치: 650억 원)

위 관서에서는 관리과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및 저축장려금 지급”의 성과지표를 ‘기금출연실적’, 목표치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금 예산액 ‘650억 원’으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위 기금은 한국은행이 위탁관리하고 있고, 위 관서에서는 매년 전년도에 기확정된 예산액 전액을 한국은행으로 전출하고 있어, 목표치인 기금출연액



이 당해 연도의 업무추진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달성되기 때문에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로는 부적절하다.

### ③ 법령에 의한 의무사항을 성과지표 및 목표치로 설정

(전략목표) IV. 수요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  
(성과목표) IV-2.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  
(관리과제) IV-2-재정② 저축의 날 행사 개최  
(성과지표) 저축의 날 행사 개최(측정방법: 개최 여부, 목표치: 저축의 날 행사 개최)

관리과제 “저축의 날 행사”의 경우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저축의 날 행사 개최’로 하고 있으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074호)에 따르면 매년 10월 마지막 화요일에 저축의 날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도 1973년 법령 제정 이후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어 성과지표 및 목표치가 법 규정에 따라 당연히 달성되는 등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로는 부적절하다.

### ④ 객관적인 실적측정이 불가능한 목표치 설정

(전략목표) II. 금융규제 혁파와 금융의 글로벌화로 금융산업 선진화 촉진  
(성과목표) II-3. 금융글로벌화의 지속적 추진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관리과제) II-3-재정③ 금융관련 국제협력  
(성과지표) 우리 금융회사의 상대국 진출 지원 실적(측정방법: FTA 금융협상 및 MOU체결실적, 목표치: 개선)

위 관서에서는 “금융관련 국제협력”을 위해 성과지표를 ‘우리 금융회사의 상대국 진출지원 실적’으로 설정하여 측정방법을 ‘FTA 금융협상 및 MOU 체결 실적’, 목표치를 ‘개선’으로 계획하였다.

그러고는 2008년 대비 FTA 금융협상 및 MOU 체결 실적이 증가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목표치를 100% 달성하였다고 기재하는 등 목표치 ‘개선’이 무엇을 의

미하는지, 개선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불명확하여 달성률이 위 관서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관리과제의 목표치로는 부적절하다.

## 2. 성과실적의 신뢰성 미흡

### ① 목표치를 임의로 유리하게 변경하여 실적 보고

(전략목표) IV. 수요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  
(성과목표) IV-2.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  
(관리과제) IV-2-정책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성과지표) 특별펀드 조성(측정방법: 펀드규모, 목표치: 300억 원)

위 관서에서는 성과계획서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특별펀드 ‘300억 원’을 조성하기로 계획하였다.

한편 국무총리실에서 시달한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2009년 성과관리시행계획 수정 추진계획」(2009. 9. 28.)에 따르면 성과지표 또는 목표치의 수정은 환경변화로 정책추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등 환경변화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처의 자율적인 방법에 따르되, 각 부처가 참여하는 수정검토 TF를 반드시 거친 후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위 성과지표 ‘특별펀드 조성’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국무총리실 규정과 달리 목표치를 ‘100억 원(3년간 300억 원)’으로 임의로 수정한 후 성과보고서상의 목표치를 근거로 100% 달성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그 결과 실제 달성률은 33.3%에 불과하나, 목표치를 임의로 수정함으로써 목표치를 100% 달성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 ② 당해 연도의 실적치가 아닌데도 실적치로 제시

(전략목표) 1. 선제적 금융정책 추진으로 금융위기 조기 극복 및 금융시장 안정달성  
(성과목표) 1-1. 기업 자금지원 및 구조조정 추진  
(관리과제) 1-1-정책②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계 마련  
(성과지표) ① 기업재무개선지원단 구성 여부(측정방법: 구성 여부, 목표치: 구성 여부)  
② 위원 신규선임 및 사무국 인원 보강 여부(측정방법 및 목표치: 위원 신규 선임 및 인원 보강 여부)

위 관서에서는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기업재무개선지원단 구성 여부’와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위원 신규선임 및 사무국 인원 보강 여부’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은 2008년 11월 이미 설치되었고, 위원의 경우에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보험협회 회장 등 관련 기관장이 선정하는 1~2명으로 되어 있으며, 2008년 12월 말 이미 각 기관에서 선정하는 등 위 성과지표 및 목표치는 전년도에 이미 달성되었거나, 과거 업무추진의 결과로 목표치가 자동적으로 달성되어 당해 연도 업무추진 성과와 무관한데도 당해 연도의 실적인 것처럼 표시하고는 목표달성으로 처리하였다.

###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 ① 앞으로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목표치는 당해 연도의 업무추진과 관련되어 있고,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설정하고
- ②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성과계획서의 목표치를 임의로 유리하게 변경하거나, 과거연도의 실적을 당해 연도 사업의 성과로 측정하는 일이 없도록 성과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금융위원회 성과관리체계

임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금융시장 육성, 금융이용자 보호
비전	국가경쟁력 부문 세계 10대 금융강국 건설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목표 Ⅰ. 선제적 금융정책 추진으로 금융위기 조기 극복 및 금융시장 안정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목표 Ⅰ-1. 기업 자금지원 및 구조조정 추진</li> <li>- 성과목표 Ⅰ-2. 모니터링 강화 및 선제적 대응으로 금융시장 안정 달성</li> <li>- 성과목표 Ⅰ-3.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를 통한 시스템 리스크 방지</li> </ul> </li> <li>▪ 전략목표 Ⅱ. 금융규제 혁파와 금융의 글로벌화로 금융산업 선진화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목표 Ⅱ-1. 규제혁파를 통한 금융회사의 자율성 제고 및 금융혁신 유도</li> <li>- 성과목표 Ⅱ-2. 금융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금융시장의 자율성 제고</li> <li>- 성과목표 Ⅱ-3. 금융 글로벌화의 지속적 추진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li> </ul> </li> <li>▪ 전략목표 Ⅲ.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인프라 구축과 미래지향적 금융발전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목표 Ⅲ-1. 핵심 금융인프라의 선진화로 금융발전 촉진</li> <li>- 성과목표 Ⅲ-2.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선진화</li> <li>- 성과목표 Ⅲ-3. 녹색성장 지원</li> </ul> </li> <li>▪ 전략목표 Ⅳ. 수요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목표 Ⅳ-1. '따뜻한 사회' 구현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li> <li>- 성과목표 Ⅳ-2.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li> <li>- 성과목표 Ⅳ-3. 금융서비스의 다양화·고도화 추진으로 변화된 금융수요 충족</li> </ul> </li> </ul>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 감 사 원

## 주 의 요 구

제 목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는 2009. 3. 16. ○○○○연구원과 'FATF(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방안 연구' 용역계약(계약기간: 2009. 3. 16. ~ 9. 16. 계약금액: 45,000,000원)을, 같은 해 8. 28.에는 ○○○○○ 산학협력단과 '테러자금조달 방지체제의 선진화에 관한 사항' 연구 용역계약(계약기간: 2009. 8. 28. ~ 11. 9. 계약금액: 35,000,000원)을 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및 「연구용역 계약서」상 최종보고서는 각각 2009. 9. 16. 및 같은 해 11. 9.까지 50부씩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보고서 작성이 지연되자 위 관서에서는 각각 같은 해 12. 15. 및 12. 28.까지로 작성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연구용역 계약서」 제6조와 제7조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는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아 검사완료한 후 용역수행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받지 못하면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등 이외에는 지체상금을 부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12월 31일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도 보고서 작성이 완료되지 않으면 지체상금을 부과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국가재정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는 이들 최종보고서 초안<sup>1)</sup>을 2009년 12월 말경 컴퓨터 파일로 받았다는 이유로 아직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 최종보고서 50부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같은 해 12. 23.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검수조서를 작성한 후 같은 해 12. 28. 두 과제의 용역비 전액 총 80,000,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최종보고서 50부는 2010년 3월 말 현재 까지도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같이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용역비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연구용역 마무리 작업에 대한 인센티브 저하로 연구용역의 질적 수준, 완성도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최종보고서가 납품되지 않은 연구용역에 대해 연구개발비를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연구개발비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1) 최종보고서 초안과 최종보고서의 내용차이: 최종보고서는 2010년 2월 FATF 총회에서 FATF 측과 협의한 결과 등을 토대로 향후 이행계획(「공중 등 협박목적에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개정사항 포함)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게 됨

# 감 사 원

## 주 의 요 구

제 목 국가채권 권리보전조치 및 불납결손처분 부적정

소 관 청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은행법」 등 금융관련법 위반자에게 개별 법령에 의거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체납 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며, 미수납액 중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한 과징금 등을 불납결손처분<sup>1)</sup>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관서는 [표 1]과 같이 2008년에 과징금 및 과태료 26,194백만 원을 부과하여 이 중 7,825백만 원을 수납받고 2,017백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2009년에는 2008년 미수납된 16,352백만 원 및 신규 13,921백만 원 등 총 30,273백만 원을 부과하여 7,251백만 원을 수납받고 834백만 원을 불납결손처분하였다.

---

1) 2005. 6. 29. 금융위원회 수입징수관(행정인사과장)이 단독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징수업무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과징금징수업무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함. 과징금 등 징수업무 및 결손처분관련 중요사항은 위원장 포함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함.

[표 1]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금액단위: 백만 원)

해당연도	징수결정액 <sup>주)</sup>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D=A-B-C)			
				소계	납기 미도래	거소불명· 재력부족	징수유예
2008년	26,194	7,825	2,017	16,352	2,062	13,810	480
2009년	30,273	7,251	834	22,188	4,210	15,394	2,584

주: 전년도 미수납액은 다음 연도 징수결정액에 포함됨.

자료: 금융위원회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채무면제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sup>2)</sup>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게 된 때 불납결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채납자의 재산 소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징수결정 금액을 수납할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위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 결정통지 등의 사유가 있어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을 때에만 불납결손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0년 3월 감사원 감사기간 중 위 관서의 결손처분 내역 중 결손액이 큰 대상을 표본조사한 결과 결손액이 690백만여 원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 2004. 7. 15. 폐업)의 경우 투자유가증권으로 ○○○○공제조합 출자금 43백만여 원<sup>3)</sup>과 차량 △△△△△(자동차 등록번호 #####, 2001년 8월 14일 제작)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르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 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

3) 2002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는 장부가액 12백만여 원, 시가 20백만여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그런데도 위 관서는 위 업체의 재산 소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지 아니한 채, 2007. 4. 27. 재산조사 결과 재산이 없었으며 2008. 11. 28. 현장조사 결과 최후 주소지에 법인이 존재하지 않고 폐업하였다는 사유로 [표 2]와 같이 위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의 실제 소멸시효 완성일이 2010. 11. 23.<sup>4)</sup>인데도 과징금 51백만여 원은 2008. 10. 29.에, 639백만 원은 2009. 5. 22.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불납결손하였다.

[표 2] (주)○○○○○의 불납결손 내역

(금액단위: 원)

부과일	과징금 체납액	위원회 판단 소멸시효 완성일	불납결손 결정일	실제 소멸시효 완성일
2003. 7. 23.	51,400,000	2008. 10. 29.	2008. 12. 11.	2010. 11. 23.
2002. 6. 14.	639,000,000	2009. 5. 22.	2009. 12. 29.	2010. 11. 23.

자료: 금융위원회

그 결과 위 관서에서 위 업체의 재산 소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채권보전조치를 하였으면 회수할 수 있었던 과징금(○○○○공제조합 출자금만도 2002년 기준 20백만여 원, 2010년 기준 43백만여 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sup>5)</sup>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국가채권 권리보전조치 및 결손 처분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4) 2004. 5. 31. 위 관서는 (주)○○○○○에 부과한 과징금 51백만여 원과 639백만 원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및 소멸시효 중단 목적으로 (주)○○○○○ 소유 아파트(울산광역시 남구 \*\*\* \*\*\*\*\* \*\*\*\*\*)를 압류하였고, 위 부동산이 2005. 11. 24. 법원 강제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2005. 11. 24.부터 다시 시작되므로 실제 소멸시효 완성일은 2010. 11. 23.임.

5) (주)○○○○○의 ○○○○공제조합 출자금에 대해서는 압류 등이 없다가, 2007. 11. 27. 북부산세무서에서 889백만여 원을, 2008. 1. 17. 서대구세무서에서 51백만여 원을 압류함. 따라서 위 관서는 2007년 11월 이전에 채권압류한 후 법원에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을 신청하여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었음.

### 3.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및 결과보고서

#### □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과제명	위탁부서	용역기관 (수탁기관)	용역비	비고
08년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연구용역	중소금융과	한국금융연구원	30	
08년	외환시장 발전방향	금융시장 분석과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19	
08년	미국 FinCEN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 실태 연구	심사분석실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40	
08년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자본시장과	한국금융연구원	30	
08년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자본시장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2	
08년	FTA, DDA 등 금융서비스분야 국제협상 법률적 검토 연구용역	글로벌금융과	법무법인(유) 태평양	40	
08년	서브프라임사태이후 금융시장 조기경보 시스템 개선 연구용역	금융시장 분석과	(사)국제금융센터	46	
08년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수준 제고를 위한 감독검사 효율화 방안	제도운영과	언스트앤영 어드바이저리(주)	37	
08년	단기금융시장 제도 개편에 따른 시장 영향 분석	금융시장 분석과	한국금융연구원	20	
08년	홈페이지 개편	정책홍보팀	(주)사이버 이미지네이션	30	
08년	비명시적규제 개혁 외부평가	감사담당관실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5	
08년	금융중심지 선정에 관한 금융전문가 의견조사	국제협력팀	한국개발연구원	19	
09년	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방안	기획행정실	한국금융연구원	45	
09년	금융상품판매업법 제정을 위한 연구	금융소비자과	자본시장연구원	30	

연도	과제명	위탁부서	용역기관 (수탁기관)	용역비	비고
09년	자본시장 등 금융부문별 노동력 특성 분석 및 수급 전망	자본시장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30	
09년	수도권 광역금융벨트 조성 방안	국제협력팀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30	
09년	위탁보증 제도 개선방안 연구	산업금융과	한국금융연구원	28.8	
09년	국내 자본시장-외환시장 연계성 증가의 파급효과 분석	금융시장 분석과	자본시장연구원	20.5	
09년	금융위기 이후(Post-Crisis) 대비 금융 감독체제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금융정책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40	
09년	금융위기의 원인분석 및 시사점분석	금융정책과	한국금융연구원	35	
09년	금융투자산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자본시장과	자본시장연구원	32	
09년	테러자금조달 방지 체제의 선진화·국제화 방안 연구	기획행정실	아주대 산학협력단	35	
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과	자본시장연구원	20	
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과	보험연구원	20	
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금수취 비은행 금융 회사 발전방안 등에 관한 연구	중소금융과	한국금융연구원	20	
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국내 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	30	
09년	금융정보생산의 시스템 리스크 완화 방안 연구	은행과	한국금융학회	20	
09년	주요국에서의 금융변혁기에 대응한 금융정책사례 연구	금융정책과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40	
09년	마이크로크레딧의 현황 및 정책적 과제	서민금융팀	한국채권연구원	23	
10년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도입 방안	자본시장과	서울대 산학협력단	30	
10년	지역금융활성화 방안 연구	금융소비자과	한국개발연구원	30	

연도	과제명	위탁부서	용역기관 (수탁기관)	용역비	비고
10년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자본시장 활용방안	자산운용과	자본시장연구원	30	
10년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연구	금융소비자과	한국개발연구원	45.5	
10년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서민금융팀	한국개발연구원	40	
10년	우리나라 비금융전문직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이행방안	기획행정실	한국금융연구원	30	
10년	국내외 조기경보 활동 동향 점검 및 금융 시장 조기 경보모형 개선	금융시장 분석과	한국금융연구원	20	
10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방안 검토	공정시장과	법무법인 율촌	30	
10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 연구	금융정책과	한국금융연구원	30	
10년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검토	금융정책과	한국금융연구원	30	
10년	금융전문인력 현황조사 및 수급전망	국제협력팀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50	

## □ 결과보고서 : 별도제출

#### 4. 최근 3년간 금융기관 제재 관련

##### 4-1. 제재결정 내역

###### A. 은행과

☐ 최근 3년간 은행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제재(처벌)를 받은 사례는 다음과 같음

번호	일시	금융기관	사 례
1	'08.4.15	스테이트 스트리트	영업일부정지, 임원 업무집행정지(외국환포지션 한도 위반 등)
2	'09.9.9	우리은행	임원 업무집행정지(고위험 구조화 상품 투자 손실 등)

## B. 보험과

□ 최근 3년간 보험사가 금융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음

번호	금 융 회 사	제재 사유	조치결과	일시
1	금호생명보험	보험안내자료 부당 제작·사용 등	과태료	08.6.16
2	한화손해보험	특별이익 제공	과징금	08.9.12
3	한화손해보험	부동산 소유한도 초과	과태료	08.11.7
4	교보생명보험	특별이익 제공	과징금	09.6.17
5	PCA생명	정관변경 사전신고의무 미이행	과태료	10.1.13
6	KDB생명보험	대주주 및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초과	과징금	10.5.12
7	삼성생명보험	기초서류 변경 사전신고의무 미이행 등	과태료	10.5.12
8	현대해상화재보험	대주주 및 자회사 발행 채권, 주식 소유한도 초과	과징금	10.6.9
9	KDB생명보험	무자격자에 대한 보험모집 위탁 등	과태료	10.7.7
10	교보생명보험	기초서류 변경 사전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10.7.21

## C. 중소기업과

### ☐ 상호금융회사

일시	기관명	사례
'08.07.18	경남자동차정비 신협	임원문책(매출채권 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당기순손실 과소계상)
'08.07.18	면곡신협	임원문책(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
'08.07.18	부산택시신협	임원문책(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
'08.08.21	설악신협	임원문책(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취급)
'09.08.03	성산포신협	임원문책(부동산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관련)
'09.12.30	일산신협	임원문책(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의한 당기순손실 과소 계상)
'10.01.06	서천군산림조합	임원문책(동일인대출한도 초과취급)
'10.01.06	춘천철원축협	임원문책(금융실명거래의무 위반)
'10.02.12	대전시산림조합	임원문책(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
'10.02.12	한우리신협	임원문책(대출 부당취급)
'10.04.08	완도신협	임원문책(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의한 당기순손실 과소 계상 등)
'10.07.08	계양신협	임원문책(전문이사 선임 등을 통한 여신심의위원회 운영방안 관련)

□ 저축은행

일시	기관명	사례
'08.01.18	대전	임원문책(거액신용공여한도 초과)
'08.01.18	대성	임원문책(개별차주신용공여한도 초과 등)
'08.02.21	으뜸	임원문책(개별차주신용공여한도 초과 등)
'08.03.28	참앤씨	임원문책(대주주에 대한 불법신용공여)
'08.03.28	우리	임원문책(대주주에 대한 불법신용공여)
'08.03.28	제일	직원문책(금품수수)
'08.03.28	홍익	임원문책(대주주에 대한 불법신용공여 등)
'08.04.25	양풍	임원문책(대주주에 대한 불법신용공여 등)
'08.04.25	한일	임원문책(개별차주신용공여한도 초과 등)
'08.06.13	서울	임원문책(개별차주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 등)
'08.07.11	현대	임원문책(개별차주신용공여한도 초과 등)
'08.07.25	중앙부산	임원문책(거액신용공여한도 초과)
'08.10.27	도민	과태료·시정명령, 임원문책(당기순이익 과대계상 등)
'08.10.27	분당	임원문책(대주주에 대한 불법신용공여 등)
'08.11.07	대전	임원문책(개별차주신용공여한도 초과 등)
'09.06.03	한주	임원문책, 과징금 부과(개별차주신용공여한도 초과 등)
'09.06.03	청주	과징금(개별차주신용공여한도 초과)
'09.06.17	으뜸	임원문책(개별차주신용공여한도 초과 등)



일시	기관명	사례
'09.07.01	중부	임원문책(대주주에 대한 불법신용공여 등)
'09.07.29	보해	과징금(개별차주신용공여한도 초과)
'09.09.09	전북	임원문책(대주주에 대한 불법신용공여 등)
'09.11.04	안양	직원문책(대출 부당취급 및 횡령)
'09.11.04	고려	임원문책(대주주에 대한 불법신용공여 등)
'10.03.03	한일	임원문책(개별차주신용공여한도 초과 등)
'10.06.09	한국	과징금(동일차주신용공여한도 초과)
'10.06.09	경기	과징금(동일차주신용공여한도 초과)
'10.06.09	영남	과징금(동일차주신용공여한도 초과)
'10.07.07	서일	과징금(개별차주신용공여한도 초과)
'10.08.18	무등	과징금(개별차주신용공여한도 초과)
'10.09.01	파랑새	과징금(거액신용공여한도 초과)
'10.09.01	으뜸	임원문책(대주주에 대한 불법신용공여 등)

## □ 여신전문금융회사

일시	기관명	사례
'09.5.15	우리 캐피탈	과태료, 임원문책(제3자 명의를 이용한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출취급 등)
'10.5.15	두산캐피탈	과징금(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

## D. 자본시장과

☐ 내용 별첨

## 2007년 이후 금융기관별 제재 현황

( '07.1월~'10.8월, 조치요구일 기준, 문책이상)

소관부서	금융회사명	검시종류	주요지적사항	조치결과	조치요구일
자산운용서비스국	티에스아이투자자문	부문검사	투자목적 등 서면파악의무 미이행 등	기관경고 임원문책 2명	2007.01.05
자산운용서비스국	신아투자자문	부문검사	주요주주 변경 미신고	임원문책 1명	2007.01.05
자산운용서비스국	미래에셋자산운용	부문검사	비상장주식 평가 부적정	임원문책 1명	2007.04.05
자산운용서비스국	에스투자자문	부문검사	투자자문전문인력 수 부족	기관경고 임원문책 1명	2007.05.02
자산운용서비스국	액츠투자자문	부문검사	투자자문전문인력 수 부족	기관경고 임원문책 2명	2007.07.10
자산운용서비스국	KB자산운용	부문검사	투자설명서에 미분양에 따른 투자위험 축소 기재	직원문책 1명	2007.08.08
자산운용서비스국	산은자산운용	부문검사	특별자산간접투자기구의 자금관리계좌 관리 소홀	직원문책 1명	2007.08.30
자산운용서비스국	맥쿼리아이엠엠 자산운용	부문검사	기준가산정 오류 및 수시공시 위반	기관경고 직원문책 3명	2007.09.13
자산운용서비스국	보아스투자자문	부문검사	최저순자산액 유지 의무 위반	기관경고 임원문책 1명	2007.10.12
자산운용서비스국	마이애셋자산운용	종합검사	투자자문계약 부적정	임원문책 1명 직원문책 2명	2007.10.22
자산운용서비스국	웰페어투자자문	부문검사	투자자문전문인력 수 부족	임원문책 1명	2007.11.09
자산운용서비스국	패러곤투자자문	부문검사	투자자문전문인력 수 부족	임원문책 1명	2007.12.21
자산운용서비스국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부문검사	투자설명서에 투자위험에 관한 중요사항 축소기재	직원문책 1명	2008.01.08
자산운용서비스국	골든브릿지자산운용	부문검사	간접투자증권 투자한도 위반	직원문책 1명	2008.02.25
자산운용서비스국	현대와이즈자산운용	종합검사	투자자문계약 부적정	직원문책 3명	2008.04.16
자산운용서비스국	신한BNP Paribas 투자신탁운용	부문검사	계열회사에 자산운용관련 정보 제공	직원문책 1명	2008.12.22
자산운용서비스국	보람투자자문	부문검사	감독기관조치 불이행	등록취소 임원문책 1명	2008.12.23
자산운용서비스국	블리스자산운용	부문검사	임직원 유가증권 매매제한 및 미공개 운용정보 이용금지 위반	임원문책 1명	2009.01.30

자산운용서비스국	플러스자산운용	부문검사	간접투자재산업무 운용 부적정		직원문책 1명	2009.03.17
자산운용서비스국	동양투자신탁운용	부문검사	간접투자재산업무 운용 부적정		직원문책 1명	2009.03.17
자산운용서비스국	템피스트투자증권	부문검사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목적 등 서면파악 의무 위반		임원문책 1명	2009.06.08
자산운용서비스국	아이투자신탁운용	종합검사	간접투자자기구간 자전거래 위반		직원문책 1명	2009.06.09
자산운용서비스국	우리자산운용	부문검사	비교가 허용되지 않는 상품과의 비교광고		기관경고 직원문책 4명	2009.06.10
자산운용서비스국	우리자산운용	부문검사	오해유발 우려가 있는 투자설명서 작성		직원문책 1명	2009.06.10
자산운용서비스국	현대스위스 자산운용	부문검사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위반		임원문책 1명	2009.07.24
자산운용서비스국	흥국투신운용	부문	간접투자자기구 위탁사업자에 대한 자금 및 재고자산 관리 소홀		직원문책 1명	2009.12.02
자산운용서비스국	드림자산운용	부문	간접투자자기구 위탁사업자에 대한 자금 및 재고자산 관리 소홀		직원문책 2명	2009.12.02
자산운용서비스국	골든브릿지자산운용	부문	운용전문인력 아닌 자의 간접투자재산 운용		임원문책 2명 직원문책 1명	2009.12.02
자산운용서비스국	마이애셋자산운용	부문	간접투자재산 운용 부적정 등		영업일부정지 임원문책 5명	2009.12.02
자산운용서비스국	피닉스자산운용	부문	특별자산간접투자자기구의 운용 및 관리 소홀		임원문책 1명 직원문책 2명	2009.12.03
자산운용서비스국	대신투신운용	부문	간접투자재산 운용 부적정 등		영업일부정지 임원문책 4명	2009.12.03
자산운용서비스국	알파에셋자산운용	부문	투자신탁해지 업무 부적정 등		임원문책 1명 직원문책 2명	2010.02.23
자산운용서비스국	플러스자산운용	부문	투자신탁해지 업무 부적정		임원문책 1명	2010.02.23
자산운용서비스국	하이자산운용	부문	간접투자자기구간 자전거래 위반		임원문책 1명	2010.02.23
자산운용서비스국	미래에셋랩스자산운용	부문	간접투자자기구의 동일종목 투자한도 초과		직원문책 1명	2010.03.26
자산운용서비스국	한국자산신탁	부문	신탁회계처리 미실시		과태료부과	2010.08.17
자산운용서비스국	한국토지신탁	종합	경영공시사항 미공시		과태료부과 임원문책 3명 직원문책 2명	2010.08.26

**4-2. 과징금 부과/수납건수 및 건별부과사유(심의  
일시, 결정일시,부과일시,부과금액,사건내용,  
납부결과 등)**

☐ 최근 3년간 금융기관 제재와 관련하여 부과된 과징금 현황  
붙임 참조

붙 임 : 최근 3년간 금융기관 과징금 부과현황                      1부.

[ 금융기관 과징금 부과현황(2007~2010.8월말 현재) ]

번호	부과지명	심의일시	결정일시	부과일시	최초 부과금	사건내용	납부기한	환납일	비고
1	알리안츠생명보험(주)	2007-03-30	2007-03-30	2007-04-02	182,000,000	보험업법 위반	2007-06-06	2007-06-07	보험과
2	서울보증보험(주)	2007-05-11	2007-05-11	2007-05-15	645,000,000	보험업법 위반	2007-07-19	2007-07-19	보험과
3	교보생명보험(주)	2007-08-24	2007-08-24	2007-08-27	249,000,000	보험업법 위반	2007-10-31	2007-10-30	보험과
4	우리은행	2008-02-21	2008-02-21	2008-02-22	2,992,000,000	은행법 위반	2008-04-27	2008-04-24	은행과
5	한화손해보험(주)	2008-09-12	2008-09-12	2008-09-17	6,000,000	보험업법 위반	2008-11-21	2008-11-20	보험과
6	청주상호저축은행	2009-06-03	2009-06-03	2009-06-05	4,000,000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2009-08-10	2009-08-10	중소과
7	한주상호저축은행	2009-06-03	2009-06-03	2009-06-05	71,000,000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2009-08-10	2009-08-11	중소과
8	교보생명(주)	2009-06-17	2009-06-17	2009-06-18	22,000,000	보험업법 위반	2009-08-24	2009-08-18	보험과
9	(진남)보해상호저축은행	2009-07-29	2009-07-29	2009-07-30	144,000,000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2009-10-05	2009-10-05	중소과
10	우리은행	2009-09-09	2009-09-09	2009-09-25	594,000,000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2009-12-03	2009-12-03	은행과
11	(광주)무등산호저축은행	2009-10-07	2009-10-07	2009-10-08	70,000,000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2009-12-14	2009-12-14	중소과
12	(서울)스카이스카이상호저축은행	2009-10-21	2009-10-21	2009-10-26	95,000,000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2009-12-30	2009-12-30	중소과
13	(주)두산캐피탈	2010-02-10	2010-02-10	2010-02-17	123,000,000	여신전론금융업법 위반	2010-04-23	2010-04-20	중소과
14	금호생명보험(주)	2010-05-12	2010-05-12	2010-05-13	450,000,000	보험업법 위반	2010-07-17	2010-07-19	보험과
15	영남상호저축은행	2010-06-09	2010-06-09	2010-06-15	319,000,000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2010-08-19	2010-08-19	중소과
16	한국상호저축은행	2010-06-09	2010-06-09	2010-06-15	870,000,000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2010-08-19	2010-08-19	중소과
17	경기상호저축은행	2010-06-09	2010-06-09	2010-06-15	1,270,000,000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2010-08-19	2010-08-19	중소과
18	현대해상화재보험(주)	2010-06-09	2010-06-09	2010-06-18	1,633,000,000	보험업법 위반	2010-08-23	2010-08-19	보험과
19	서일상호저축은행	2010-07-07	2010-07-07	2010-07-12	100,000,000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2010-09-15		중소과

### 4-3. 과징금 부과기준 및 산정근거

☐ 과징금 부과기준 및 산정근거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첨부

☐ 첨부 참조

<별표2><신설 2003.9.13, 개정 2004.3.5, 2005.7.14, 2008.12.31>

## 과징금 부과기준

### 1. 목 적

이 기준은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과징금)·제65조(과징금의 부과) 및 동법시행령 제3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은행법」 제65조의3(과징금)·제65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과징금의 부과통지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과징금처분)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업무정지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과징금) 제6항·제206조의12(과징금의 부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81조의2(과징금의 부과)·제181조의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및 동법시행령 제16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선물거래법」 제95조의8(과징금의 부과)·제95조의9(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5(과징금의 부과),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과징금의 부과)·제38조의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7조의2(과징금의 부과)·제27조의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및 동법시행령 제1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46조(과징금)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업무정지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2.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가. 과징금 부과에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나.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한다.

다. 법정부과한도액에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마. 그 밖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부과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 3.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

가. 기준금액은 법정부과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제1호 내지 제14호, 「은행법」 제65조의3 제1호 내지 제15호,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6항,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81조의2, 「선물거래법」 제95조의8,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 제1호 및 제2호,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서 정한 위반금액(위반행위가 신용공여 관련사항으로서 하나의 신용공여가 여러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당해 신용공여는 위반금액에 중복하여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말하며, 위반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그 기간중 위반금액의 최고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나.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제1호 내지 제14호, 「은행법」 제65조의3 제1호 내지 제15호,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6항,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81조의2, 「선물거래법」 제95조의8,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 제1호 및 제2호,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서 정한 부과비율(이하 “법정최고부과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 4.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금융지주회사(자회사등 포함), 은행(은행법상의 금융기관), 보험회사(특별이익제공관련 위반행위 제외),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선물회사,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의 경우에는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단계별 기본부과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개정 2008.12.31>

법정부과한도액		기본부과율
기준금액	법정최고부과비율	
10억원 이하 (1단계)	× 법정최고부과비율	× 7/10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2단계)		× 7/20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3단계)		× 7/40
1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4단계)		× 7/80
1조원 초과 (5단계)		× 7/160

<산정례>

기준금액	기본과징금
10억원 이하	기준금액×법정최고부과비율×1단계 기본부과율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1단계 기본부과율 +(기준금액-1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2단계 기본부과율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1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1단계 기본부과율 +9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2단계 기본부과율 +(기준금액-10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3단계 기본부과율
1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1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1단계 기본부과율 +9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2단계 기본부과율 +90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3단계 기본부과율 +(기준금액-1,00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4단계 기본부과율
1조원 초과	1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1단계 기본부과율 +9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2단계 기본부과율 +90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3단계 기본부과율 +9,00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4단계 기본부과율 +(기준금액-1조원)×법정최고부과비율×5단계 기본부과율

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별표2, 전자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다.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 표의 단계별 기본부과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법정부과한도액		기본부과율
기준금액	법정최고부과비율	
1천만원 이하 (1단계)	× 법정최고부과비율	× 7/10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2단계)		× 7/20
5천만원 초과 2.5억원 이하 (3단계)		× 7/40
2.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단계)		× 7/80
10억원 초과 (5단계)		× 7/160

## 5. 기본과징금의 조정

### 가. 일반원칙

(1) 기본과징금의 조정은 기본과징금에 각 가중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을 차감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3) 조정후 과징금은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은행법」 제65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보험업법」 제196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6항,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81조의2, 「선물거래법」 제95조의8,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7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4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부과한도액 기타 법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12.31〉

(4) 삭 제 〈2008.12.31〉

#### 나. 가중 사유 및 비율

(1) 위반행위의 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가중하되, 그 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가중금액 = 일평균 위반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산정한 기본과징금 × (위반일수-1) × 0.1%\* 또는 0.2%\*\*

\* 180일이내의 위반일수에 적용

\*\*180일을 초과하는 위반의 경우로서 180일 초과일수에 적용

(2) 최근 3년이내에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 1회당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을 가중하되, 그 가중액의 합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3)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또는 다른 이득을 취하는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히거나 금융시장의 신용질서가 크게 훼손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다.

(5) 보험회사가 특별이익을 제공한 경우, 특별이익 제공금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특별이익 제공을 약속한 경우, 특별이익 제공 약속금액의 50%가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각각 가중할 수 있다.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 (1) 형식적으로는 법규위반에 해당되나 금융산업 및 금융기관의 신용 훼손 또는 손실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동기 및 발생원인 등을 고려할 때 법규의 본질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2)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3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4)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5)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를 1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 부과가 법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 (1)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경우
- (2) 위반자의 자산, 자기자본 등 재무상황에 비추어 위반자가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기타 위 (1) 내지 (2)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과징금의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위반자의 지급불능, 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위반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변화로 위반자의 과징금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기 타

- (1) 위반행위로 인한 금융거래자 등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다.
-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징금·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기준금액이 경미하고 위반기간이 5영업일이내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조정후 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및 선물회사의 부과과징금 결정에 대한 특례 <개정 2008.12.31>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의 경우 위반행위가 아래의 1에 해당하는 경우(위의 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에는 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증권회사의 경우 법정부과한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본다). <개정 2008.12.31>

- (1) 위반행위가 3회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선물회사의 경우는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포함) <개정 2008.12.31>
-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
- (3) 위반행위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와 관련이 있는 경우(자산운용회사는 제외) <개정 2008.12.31>

마.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부과과징금 결정에 대한 특례 <개정 2008.12.31>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는 위의 6. 가., 나. 및 다.의 감면사유를 고려하여 산정한 부과과징금이 기본과징금의 50%이하인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기본과징금의 50%로 한다. <개정 2008.12.31>

바. 상호저축은행 및 종합금융회사의 부과과징금 결정에 대한 특례 <신설 2008.12.31>

상호저축은행 및 종합금융회사의 경우 위반행위가 아래의 1에 해당하는 경우(위의 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에는 법정부과 한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1)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상인 경우

(2)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된 경우

## 7. 기 타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 5. '대부업정책협의회'의 구성현황, 회의개최 내역, 회의안건 및 결과

### □ 구성현황

소속	직급 및 직위	성명	주요 학·경력
금융위	위원장	진동수 (위원장)	보스턴대 석사 서울대 법대 재정경제부 차관
재정부	제2차관	류성걸	시라큐스대 박사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법무부	차 관	황희철	서울대 법대 서울남부지검장
행안부	제2차관	안양호	런던정치경제대 석사 경기도 행정 1부지사
공정위	부위원장	손인옥	독일 콘스탄츠대 공정위 상임위원


□ 협의회 회의개최 및 출석내역

회 차	일 시	회의안건	출석위원
제1차	'06.12.27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 운영방안 ○부처별 추진과제	경제부총리, 금감위원장, 법무부장관, 행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제2차	'07.6.5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인하 ○대부업 관리·감독지침 제정추진 ○대형대부업체 모니터링 강화 ○실태조사 정례화 ○허위·과장광고 규제	경제부총리, 금감위원장, 법무부장관, 행자부 제2차관, 공정위 부위원장, 국조실 기획차장
제3차	'07.11.5	○대부업 관리·감독지침 제정 ○불법사금융에 대한 상시단속체제 구축 ○대부업법·이자제한법 홍보 강화 ○서민금융 공급 확대	재경부장관, 금감위 부위원장, 법무부 장관, 행자부 제2차관, 공정위 부위원장
제4차	'08.1.29	○대부업 관리감독상 지자체와 협력 강화 ○사금융이용자 실태조사 ○대부업법령 개정	재경부장관, 금감위 부위원장, 법무부 차관, 행자부 균형발전지원본부장, 공정위 사무처장
제5차	'08.6.3	○사금융 실태조사 결과 ○불법 사금융 단속 실적 ○지자체 대부업 관리 강화 추진 ○금융소외자 지원방안	금융위 부위원장, 재정부 담당과장, 행안부 담당과장, 공정위 담당과장
제6차	'08.9.9	○대부업법 개정 추진 ○제4차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계획 ○불법 사금융 단속 실적 ○지자체 대부업 관리 강화 추진	금융위 부위원장, 재정부 경제정책국장,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
제7차	'08.12.15	○대부업 관리감독 우수 지자체 포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불법 사금융 단속 실적 ○제4차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금융위 부위원장, 재정부 차관보, 행안부 지역경제발전과장



회 차	일 시	회의안건	출석위원
제8차	'09.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li> <li>○대부거래 표준약관 등의 제개정 계획</li> <li>○불법 사금융 단속 실적</li> <li>○지자체 대부업 관리 강화 추진</li> <li>○제5차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계획</li> <li>○사이버금융감시반 운영 현황</li> </ul>	금융위 부위원장, 재정부 자금시장과장, 공정위 약관제도과장
제9차	'09.4.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법 사금융 피해방지대책</li> </ul>	금융위원장, 재정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행안부 지역경제과장, 공정위 사무처장
제10차	'09.1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법 사금융 피해방지대책 추진실적</li> <li>○대부업 관련제도 개선 추진동향</li> <li>○지자체 대부업 관리 강화 추진 실적</li> <li>○대부업 관리감독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li> <li>○대부업 감독업무 효율성 제고 방안</li> </ul>	서면 회의
제11차	'09.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민금융감독대상 포상계획(안)</li> <li>○대부업법 개정안 주요내용</li> <li>○제6차 대부업 실태조사 추진계획</li> <li>○사금융 종합애로지원센터 개소</li> </ul>	서면 회의
제12차	'10.4.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6차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li> <li>○대부업법 최고이자율 인하 방안</li> </ul>	서면 회의
제13차	'10.7.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법 사금융 단속 실적 및 계획</li> <li>○지자체 대부업 관리 강화 추진 현황</li> <li>○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행위 근절방안</li> <li>○제7차 대부업 실태조사 추진계획</li> </ul>	서면 회의

□ 회의결과 : 붙임 제출

 <b>재정경제부</b>	<h1 style="text-align: center;">보도참고자료</h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풍요로운 나라 함께하는 선진경제</li> <li>• 고품질 정책으로 신뢰받는 재정부</li> </ul>
<b>생 산 일</b>	2006. 12. 27	<b>생 산 부 서</b>	금융정책국 보험제도과
<b>담당과장</b>	박영춘 (02-2150-2370)	<b>담 당 자</b>	이상규 (02-2150-2372)

## 제 목 : 제 1차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 개최

□ 정부는 2006.12.27(수) 09:30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제1차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참석 : 경제부총리, 행자부장관, 법무부장관, 금융감독위원장, 국무조정실장

※ 동 협의회는 「서민금융활성화 방안 및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대부업 관리·감독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장관회의(12.19)에서 구성·운영기로 결정

□ 금번 협의회에서 대부업 유관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침을 확정하였음

- 장관급 협의회는 대부업 정책 관련 정부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고 이행실적을 평가·보고하기 위하여 매분기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동 협의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한 실무협의회(재정부 차관보 주재)를 두고, 부처별 실행과제의 선정과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 실무협의회 산하에 과제별 T/F를 설치하여 부처소관별 이행사항을 조속히 추진하고 이행사항을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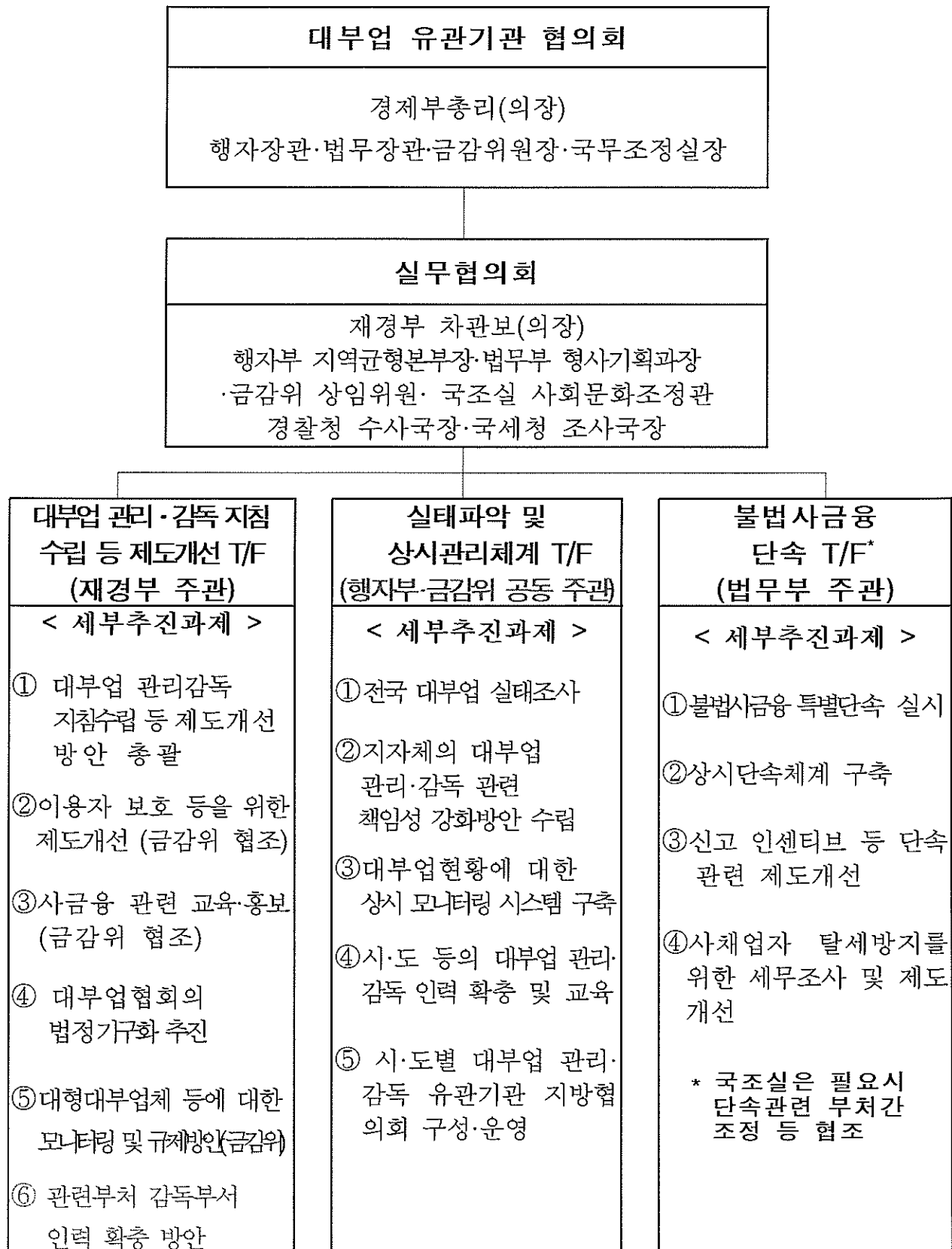
\*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 수립 등 제도개선 T/F (재정부), 실태파악 및 상시관리체계 T/F (행자부·금감위 공동), 불법사금융 단속(법무부)


- 시·도의 원활한 행정협의 및 협력강화를 위해 시·도별로도 대부업 관리·감독 유관기관 지방협의회를 구성·운영기로 함

- 아울러 07년 중 추진할 부처별 제도개선 사항 및 실행 사항을 확정하였음
  - 우선 관계부처 합동으로 07년 1~3월 간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
    - 1월은 사전홍보와 더불어 탐문, 광고분석 신고센터 접수사례 등을 통해 피해사례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2~3월 기간 동안 집중 단속 실시
  - 제경부는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 수립, 이용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교육·홍보 방안, 대부업협회의 법정기구화 등을 추진키로 하였음
  - 행자부·금감위 공동주관으로 07년 1월부터 대부업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대부업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음
  - 금감위는 서민금융 119 등을 중심으로 사금융 피해 상담 및 신고 접수 활동 강화해 나가는 한편,
    - 특히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 시 규제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 법무부 주관 하에 검찰·경찰·금감원·국세청·정통부·행자부 등 단속기관간 체계적인 협조체제 구축
- 대부업 관리·감독은 서민보호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준법 영업하는 대부업자는 최대한 보호하되 고리채·불법추심·허위 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단속해 나가기로 하였음

##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 &lt;참 고&gt;

대부업 유관기관 협의회 구성(안)

 재정경제부	<h1 style="text-align: center;">보도자료</h1>		•• 중요한 나라 함께하는 선진경제  •• 고품질 정책으로 신뢰받는 재경부
	<b>보도일시</b>	<b>2007.6.5(화) 15:00 부터</b>	
<b>생 산 일</b>	2007.6.5(화)	<b>생산부서</b>	금융정책국 보험제도와 경제정책국 복지경제과
<b>담당과장</b>	박영춘 과장(2150-2370) 이재영 과장(2150-2180)	<b>담 당 자</b>	김연준 사무관(2150-2372) 박은숙 사무관(2150-2184)

## 제 목 : 제2차 「대부업 정책협의회」 개최

□ 정부는 2007.6.5(화) 15:00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제2차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경제부총리(주재), 법무부장관, 금감위원장, 행자부 제2차관, 공정위 부위원장,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참고1)

※ 동 협의회는 '06.12.19 대부업 관리·감독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에서 구성·운영키로 결정하였으며, 12.27 제1차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금번 협의회에서는 ①대부업 제도개선, ②실태조사 및 상시관리체계 구축, ③불법사금융 단속 등 3대 핵심과제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였으며,

- 이자제한법 시행 및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인하로 인한 ④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였음

### 《주요 논의결과》

① (최고이자율 인하)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저신용 서민층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을 70%→60%로 인하하되,

○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실행이자율을 결정

② (대부업 관리·감독지침) 지자체가 관리·감독시 업무매뉴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침 제정을 추진 (☞참고2)

-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법·절차와 함께, 판례·단속사례·유권해석 등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켜 지침의 유용성과 이해도를 제고

③ (상시모니터링) '07년말까지 대부업체 영업현황을 상시 파악할 수 있는 상시관리체계\*를 구축 (☞참고3)

\* DB 구축은 행자부가, 자료의 검토·분석은 금감위가 담당

- 감독당국에 대한 대부업체의 정기적인 업무보고 의무 부과
- DB로 구축된 정보와 자료는 재경부·금감위(원)·행자부 등 정책부서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불법사금융 단속)·국세청(세원관리)까지 정보 공유를 확대
  - 국세청은 대부업 DB를 활용, 대부업자에 대한 상시세적정비 및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나갈 계획
- 열린정부 홈페이지([www.open.go.kr](http://www.open.go.kr))를 통해 대부업체 리스트를 공개하고 등록여부 검색 서비스 제공을 추진

④ (대형대부업체 모니터링 강화) 중소형 업체의 경우 반기보고, 대형대부업체(자산 70억원 이상)의 경우 분기보고와 함께 보고서 내용을 세분화\* (☞참고4)

※ 대형대부업체 비중(대부잔액의 83%), 대부규모(업체당 811억원)

- \*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금액, 담보인정비율, 금융기관 차입금,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 내역, 대출채권 양도내역 등
- 회사분할, 법인화 기피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①특수관계인의 자산을 포함하여 70억원이 넘는 경우, ②개인·유한회사의 경우에도 자산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대형업체에 준하여 모니터링

⑤ (실태조사) 결산시기에 맞추어 실태조사를 정례화

- 반기별 결산시기(3월, 9월)를 기준으로, 매년 4월, 10월중 2차례 실태조사

\* 은행법 등 제도권 금융기관의 경우 12.31일을 결산일로 하고,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재무제표를 공고

⑥ (상시단속체계) 이자제한법 시행 및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인하 등으로 인하여 대부업체의 불법화·음성화 우려가 큰 상황임을 고려하여,

- 불법사금융에 대한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근절시까지 지속적으로 단속

\* 경찰이 현장단속을 전담하고, 검찰은 불법 사금융 전담검사가 경찰 수사지휘 및 송치 후 처리 전담, 중형유도에 주력

\* 필요시 금년 하반기 중 「불법사금융 특별단속기간」 재설정

- 제1차 단속시 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2명)·국무총리 표창(5명)을 수여하는 한편, 향후 단속의 공로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⑦ (허위·과장광고 규제)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이자율·대출 조건 등을 이용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광고의 방식·문구 등을 규제하는 한편,

-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도 직접 단속하여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제고

- 대부업법 개정 전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허위·과장광고 혐의가 있는 대부업자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는 한편, 조사 이후에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 (☞참고5)

- ⑧ (인력·조직 보강) 대부업 관리·감독과 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직·인력의 확충을 조속히 매듭짓기로 결정

- 무엇보다 지자체의 대부업 담당인력을 총 71명 증원하여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제고

<지자체별 인력 총원 기준(행자부 안)>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증원인력 (명)	4	2	2	5	6	2	2	19	2	4	3	5	4	2	7	2	71

※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수가 70개에 미달되어 금번에 증원되지 않은 지자체도 향후 70개 초과시 추가적으로 인력을 보강

- 법률 소관부처인 재경부에 1개 과를 신설하는 한편, 행자부·금감위에 담당인력을 각 1명씩 증원키로 함
  - 이자제한법 시행 전까지 경찰청의 단속전담 인력 총원도 추진
- ⑨ (법률구제지원) 이자제한법 시행(6.30)시 이자제한법 관련 법정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하여,
- 법무부 중심으로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저소득 서민층의 법률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참고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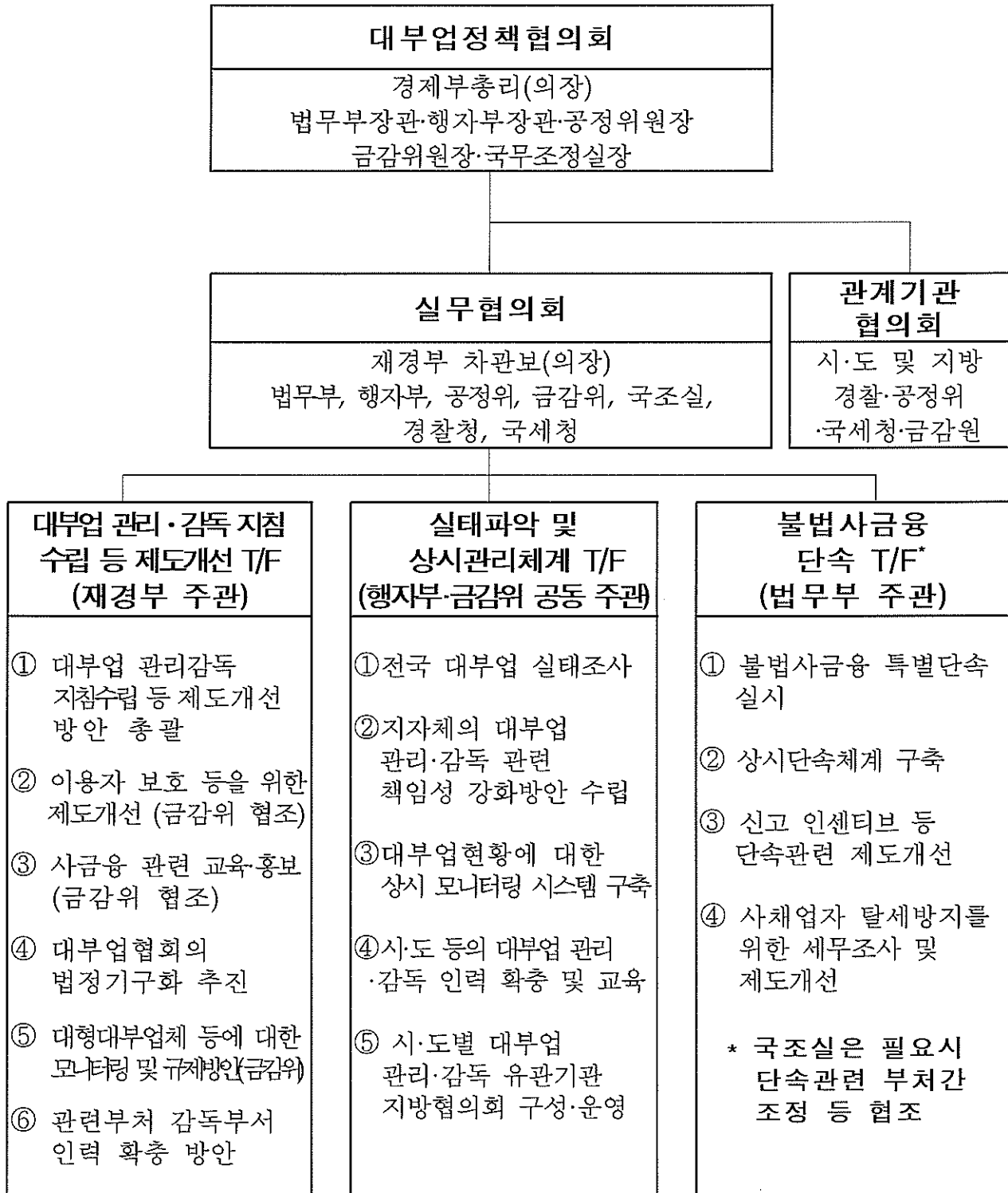


10 (금융소외계층 지원) 이자제한법 시행 및 대부업법상 이자율 인하로 인하여 사금융 시장에서 대출이 어려워지는 금융소외 계층(25만명 추가지원)에 대하여 사용목적별로 적절한 금융 기회를 제공 (☞참고 7)

- 재정자금을 통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하고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를 통한 의료지원 강화
- 하반기 발족예정인 각종 공익기금을 활용하여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제도 확충
  - 의료 및 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장기교육비 대출제도, 의료비 대출제도 및 소액보험(Micro - insurance) 제도 도입
  - 무보증 소액대출(Micro-Credit)제도를 통한 창업 등 자활지원
- \* 공익기금 : 사회투자재단(7월중설립예정), 휴면예금관리재단(6월이후 설립예정), 사회공헌기금(9월이후 설립예정)

## 《참고1》

## 대부업정책협의회 구성현황



## 《참고2》

## 대부업 관리·감독지침(안) 주요내용

**1. | 대부업의 개념 |**

①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

## ② 판례에 따른 “업”의 의미

-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의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  
(대판 94. 4. 28. 93다54842 판결 등)
- 다만 ‘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각 개별사안에 대하여 판단을 한 것인바,
  -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가 ‘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월 평균 대부금액 및 거래 상대방의 규모, 광고 유무, 채권 추심방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임
  - 즉, ① 영리의 목적(영리성)이 있어야 하고, ② 동종행위를 반복하는 계속성이 있어야 하며, ③ 영업의 의사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어야 함 (영업의사 객관적 인식가능성)

## 2. | 대부업 등록 |

### 가. 등록대상 여부 판단(법 제2조, 제3조)

#### ☐ 등록대상이 되는 '대부업'의 정의

- 금전의 대부는 물론 어음할인, 전당포, 할부금융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
- 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

#### ☐ 해석상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여신금융기관과 업무위탁계약을 통해 대출모집업무를 위탁 받은 대출모집인(재경부 보험41207-323)
- 다만 여신금융기관이 아닌 자의 대출모집인은 등록대상에 포함

### 나. 대부업체 상호선택시 주의사항(법 제3조)

☞ 위반시 제재내용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 ~ 1천만원이하의 벌금

#### ☐ 은행법 등 금융관련 법령은 은행, 상호신용금고, 종합금융회사, 여신 등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

- 위반시 형사처벌되므로 대부업체는 물론 등록을 수리하는 지자체 담당자도 유의할 필요

★ (법개정 추진중) 대부업자 명칭에 “대부업” 명시 (대부중개만 하는 경우는 “대부중개” 명시)

### 3. | 대부계약 체결 前 단계 |

#### 가. 대부광고·게시(법 제9조)

☞ 위반시 제재내용 : 과태료 5백~2천만원, 영업정지

- ☐ 이자율, 등록번호 등 대부 표시·광고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중요사항은 이용자가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표기**

★ (법개정 추진중) 광고의 문안·방식 등을 이용자가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문안·방식 관련사항은 제경부 장관이 정함

- ☐ 광고내용에 **대부업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불법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 (권고사항)

\* 예시 : 서울시 대부업 등록 제000호

\*\* 사례 : 부동산 담보대출 가족소유 부동산[비밀보장]  
(인감증명 위조 등을 통해 가족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 (법개정 추진중) 이자율·대부조건 등과 관련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리는 광고 및 불법을 유도·조장하는 광고 금지

#### 나. 명의대여 등의 금지(법 제9조)

☞ 위반시 제재내용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 ☐ 대부업법상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경우 **명의대여자 및 명의차용자 모두 법 위반에 해당**

- 명의를 대여한 등록 대부업자는 명의대여 금지 위반, 명의를 차용한 무등록 업자는 대부업 등록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

\* 예시 : 무등록업자 甲이 등록업자 乙의 명의를 빌려 대부계약을 체결

- ☐ 명의대여 여부의 판단은 '계산의 주체' 및 '계약의 당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4. | **대부계약 체결** |

☞ 위반시 제재내용 : 과태료 5백~2천만원, 영업정지

##### 가. 계약서 교부·보관의무(법 제6조)

- ☐ 대부계약 체결시 **2부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1부는 대부업자가 보관(2년간)
- ☐ 대부금액, 대부업자의 명칭, 부대비용 등 **대부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금지

##### 나. 대부조건 설명의무(법 제9조①)

-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 체결시** 거래상대방에게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등 **중요사항을 설명**
  -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는 증빙자료를 보관 **권고사항**

##### 다. 과잉대부 금지(법 제7조)

☞ 위반시 제재내용 : 영업정지

- ☐ 과잉대부란 차주의 소득 및 재산수준 등을 고려할 때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로서 대부업법은 이를 금지
  - 변제능력은 이자지급은 물론 원금상환 능력도 포함, 과잉대부의 판단시점은 개별 계약 체결시를 기준
  - 과잉의 판단대상은 대부금액은 물론 대부기간, 중도상환수수료 등이며, 이자율은 법 제8조(이자율의 제한)에서 별도 규율

## 5. | 이자율 제한(법 제8조) |

☞ 위반시 제재내용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 가. 이자율의 최고 상한

#### □ 대부업자는 연66%를 초과하는 이자수취 금지

- 사례금·수수료 등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간주
- 다만 담보권설정비용(법원에 지급하는 실비) 및 신용정보업자\*에게 지불하는 신용조회비용은 이자간주 대상에서 제외

\*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자

### 나. 선이자·선수수수료 공제

#### □ 대출금을 지급할 때 선이자, 선수수수료 등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은 이자율 한도 초과여부 계산시 원금에서 제외

- 대부계약 체결후 수취한 것은 이자로 간주

[사례] 대부업자 갑은 금전이 필요한 을에게 1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선이자 명목 5만원, 수수료 명목 5만원을 공제한 90만원만 지급, 1달후 원금 및 이자로 총 105만원을 수취

<이자율 계산> 이자율(%) = 이자/원금×100

- 원금 : 최초 지급받은 90만원
- 이자 : 15만원(1달후 지급한 105만원 - 최초 지급받은 90만원)
- 1개월 이자율 = 15만원/90만원×100 = 16.7%
- 연 이자율 = 1개월 이자율×12 = 200%

## 다. 이자제한법과의 관계

- 대부업법상 이자율의 제한은 금융기관 및 등록대부업자에게 적용되고, 이자제한법\*은 그 밖의 모든 대부계약에 적용

\* 법 연 40%, 시행령 연 30% (07.6.30 시행)

- 무등록 불법 사채업자는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모두 적용

- 연30% 초과 이자계약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무효가 되고, 연66% 초과이자 수취시 대부업법에 따라 형사처벌

★ (법개정 추진중) 무등록업자에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30%)을 적용

## 라.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의 성립시기

- 1회라도 이자율의 최고상한(연66%)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때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 성립

- 계약기간 전체를 통산, 수취이자가 이자율의 최고상한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이미 발생한 위반행위를 적법화하지 못함

### [법제처 유권해석]

- ☞ 대부업자가 대부를 함에 있어 연이자율이 100분의 66이내인 경우, 단리로 환산한 월이자율 및 일이자율도 연이자율 100분의 6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



## 6. |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법 제10조) |

### 가. 적용대상

☐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재)양도 또는 추심을 (재)위탁 받은 자

☞ 신용정보업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령', 여전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중복 적용

### 나. 추심관련 금지행위

☐ 폭행 · 협박 · 위계 ·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위반시 제재내용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 ◀ 관련 사례 ▶

- ▶ 구타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 ▶ '채무를 갚지 않으면 아이들 학교 못 다니게 하겠다', '아이들 등 · 하교길 조심하라'고 언급하는 행위
- ▶ 법원, 검찰 등 사법당국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 가장하거나 소송절차 관련문서인 것으로 오인시키는 인쇄물 · 우편물을 사용하는 행위
  - \* 강제집행착수통보서 등과 같이 법적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채무자에게 안내문 등을 발송하는 행위
- ▶ 채무자의 의사를 제압함에 충분한 다수인이 채무자의 거주지, 직장 등을 방문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

☐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조달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권고사항)

## □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 위반시 제재내용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 — < 관련 사례 > —

- ▶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변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에게 채무자가 변제를 하고 있지 않으니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 ▶ 채무자에게는 채무금액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것처럼 속여 채권 추심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 □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

☞ 위반시 제재내용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6월이하 영업정지

### — < 관련 사례 > —

- ▶ 엽서, 팩스 및 개봉서신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
- ▶ 벽보부착, 낙서, 스티커, 인터넷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무내역을 불특정인에게 알리는 행위

## □ 말·글·영상·물건 등을 전달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방문을 통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 위반시 제재내용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 — < 관련 사례 > —

- ▶ 새벽이나 밤늦은 시간 등 부적절한 시간에 전화 등으로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행위 (부적절한 시간 : 21:00 ~ 08:00)
  - \* 다만, 야간근무 등으로 일반인과 수면시간대가 다른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조정 필요
- ▶ 필요이상으로 계속적으로 전화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는 행위

## 7. | 중개의 제한(법 제11조의2) |

☞ 위반시 제재내용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 중개를 의뢰한 금융이용자를 무등록 사채업자에게 연결하는 행위 금지

- 일반인이라도 (중개)대부업자에게 금융이용자 소개를 의뢰하는 경우 등록대상이 되는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중개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전·물품 등)를 받는 행위 금지

- 대부업자로부터 중개에 대한 대가를 수취

## 8. | 감독·검사 및 제재 |

☐ 대부업 등록을 수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검사 및 제재권한을 보유

- 대부업체의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통해 감독
-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부업체를 직접 방문,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검사

- 다른 지자체\*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요청 가능

\* 감독대상 대부업체가 다른 지자체의 관할에 속하는 영업소를 둔 경우

\*\* 2개이상 시·도지사에게 등록, 월평균 대부잔액 10억원 초과, 금융기관과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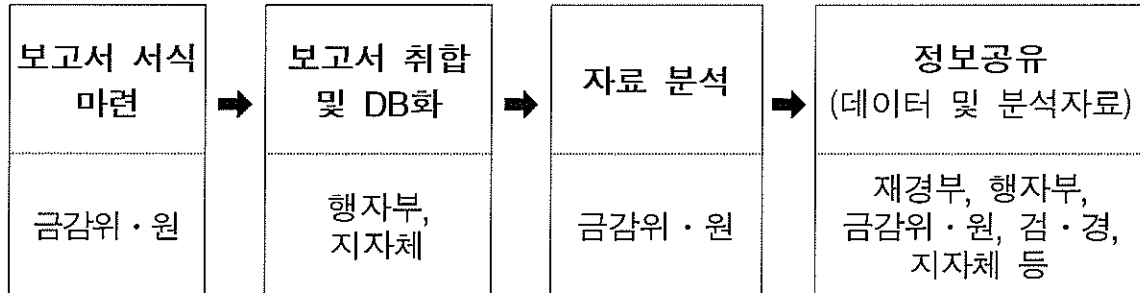
- 감독상 필요한 명령(시정명령 포함), 영업정지·취소, 과태료 부과권

☐ 제재절차는 대부업법 및 행정절차법 준수

## 《참고3》

##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방안(행자부·금감위)

## &lt; 추진 단계별 업무 분장 &gt;



## 1. 업무보고서 서식 마련 [금감위원 주관]

## □ 업무보고서 내용 및 보고주기

☞ 대부업체의 자산규모에 따라 보고내용과 주기를 차등화

- 개인, 소규모법인은, 반기별로 상호, 등록번호 등 일반 현황과 대출금, 차입금 규모 등 기본 영업현황을 보고
- 대형업체(자산70억원 이상의 외감법인 등)는, 분기별로 기본 영업현황 외에 대출내역 등 상세 재무자료를 보고
- 보고시한은 분·반기 종료후 1월 이내

## □ 업무보고서 서식 마련

- 지자체 및 대부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보고서 서식을 마련('07.6월)

※ 대형업체의 기준, 업무보고서 서식, 보고주기 등을 추후 대부업 법령에 반영

## 2. 대부업 현황관리 및 DB화 [지자체 주관]

- ☐ 지자체는 등록, 변경등록 및 등록취소 등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DB화
  - 지자체별로 대부업체 일반 현황 외에 감독·검사 및 행정 조치 결과 등 대부업체 관련 정보를 최대한 DB로 구축
- ☐ 지자체의 대부업체 관리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확충
  - ※ 현재, 70개 이상의 대부업체가 등록된 지자체에 대한 전담인력 보강 추진중(행자부)

## 3. 업무보고서 취합 및 DB화 [행자부 주관]

- ☐ 지자체가 취합한 영업현황 자료를 종합하여 DB화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07년말)
  - 행자부, 금감위·원, 지자체, 대부업협회 등으로 전산 시스템 구축 T/F 구성·운영
- ☐ 열린정부 홈페이지([www.open.go.kr](http://www.open.go.kr))를 통해 대부업체 리스트를 공개하고 등록여부 검색 서비스 제공

## 4. 자료 분석 [금감위원 주관]

- ☐ 행자부가 취합한 DB를 토대로 대부업체 일반현황\* 분석
  - \* 대부업체수, 대부잔액, 대부수익 등
- ☐ 주택담보대출 취급 등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 실시

## 5. 관계 부처간 정보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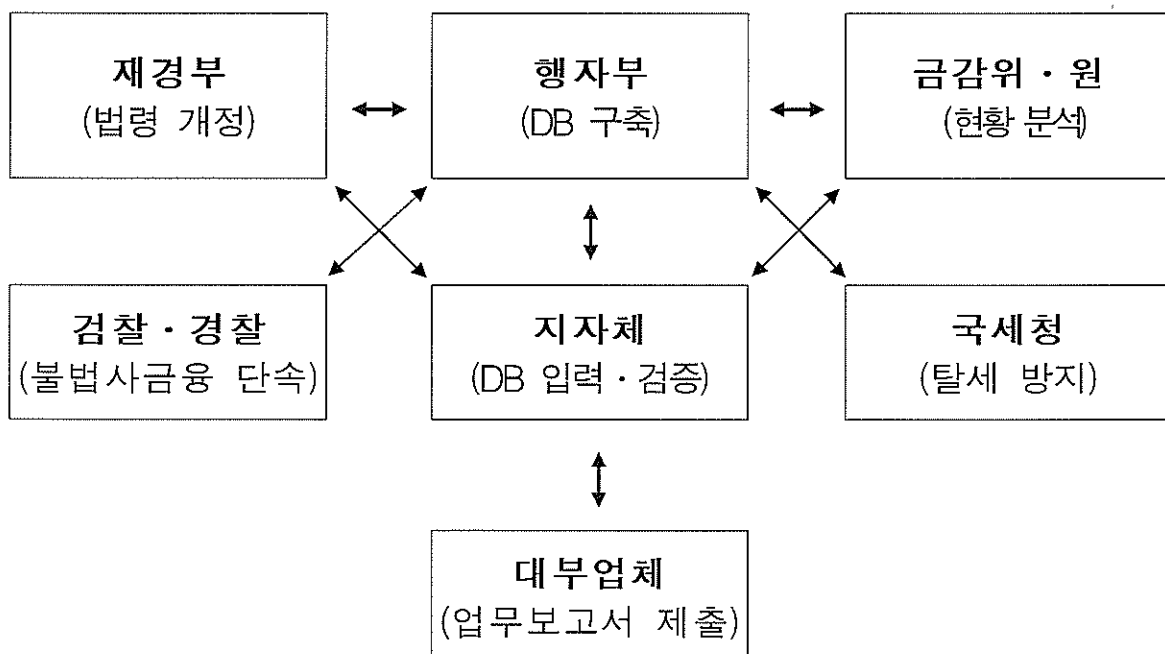
### □ 정보공유 필요성

- 전국 대부업체에 대한 정보를 재경부, 행자부, 법무부, 금감위·원, 검찰·경찰청,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부처가 공유하여 정책수립 및 집행에 반영

### □ 정보공유 방안

- 행자부에 수집된 대부업체 자료(DB) 공유
  - 관계 부처는 ID를 부여받아 전산시스템에 수시 접근
- 금감위·원은 행자부 자료를 분석, 그 결과를 「대부업정책 협의회」에 분기별로 보고

〈정보 공유 체계〉



## 《참고4》

## 대형대부업체 모니터링 강화방안(금감위)

- 자산 70억원 이상 외감대상 대형업체\*에 대해서는 중·소형 업체(반기보고)보다 업무보고서 제출 주기를 단축(분기보고) 하고, 보고서의 내용을 세분화\*\*

\* '06말 현재 140개(총 대부업체수 17,210개)

\*\*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금액, 담보인정비율, 금융회사 차입금,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 내역, 대출채권 양도내역 등

- 회사분할이나 개인 또는 유한회사로 등록하여 집중 모니터링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방지책 강구

- 자산 70억원 미만의 회사라도 특수관계인\*의 자산 포함시 70억원 이상인 경우 외감대상 업체에 준하여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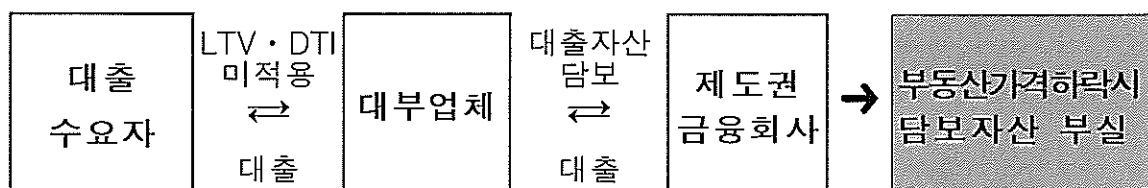
\* 계열회사, 주요주주, 임원 등(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

- 개인 또는 유한회사 등의 경우에도 자산(개인의 경우 평균 대출 금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집중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

- 은행·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 대해 대부업체 지원과 관련한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유도

- 대부업체가 국내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 담보대출 취급 등을 확대할 경우 대부업체의 대출관련 리스크가 제도권 금융회사로 전이될 위험을 차단

<대부업체 대출에 따른 은행 등의 부실위험(예시)>



## 《참고5》

### 허위·과장광고 조사 및 향후 계획 (공정위)

#### 1. 조사현황

☐ 5월 15일 현장조사에 착수하여 현재 2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중

- 조사대상 업체는 그동안의 모니터링(4월부터 실시) 결과를 토대로, 허위·과장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를 선정

\* 모니터링은 인터넷, TV를 통하여 행해지고 있는 광고를 대상으로 실시

☐ 조사사항은 이자율 등의 대부조건, 대부받을 수 있는 자격, 대부서비스의 내용 등에 관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는지 여부임

#### 2. 향후계획

☐ 6월초까지 현장조사를 완료

☐ 필요한 경우 보완조사를 거쳐 부당 광고를 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조치 (시정명령, 공표명령 등)



## 《참고6》

## 저소득층에 대한 법률구제 지원(법무부)

## 1. 현 황

- 이자제한법 시행(6.30)시 이자제한법 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고리사채 이용자의 대부분은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서민들로 자력으로는 법률구제를 받기 어려운 실정

⇒ 저소득층 법률구제를 위하여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구조제도를 적극 활용

## 2.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

- (대 상)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채권자와의 법적 분쟁 관련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음

\*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에서 월 평균 수입 240만원 이하의 국민 등 저소득층 국민을 구조대상자로 정하고 있는바,

- 고리사채 이용자를 별도의 구조대상자로 지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필요시 별도 지정 방안 검토

- (적용범위) 고리사채 이용 후 채권자측의 지급 요구에 대한 거절, 최고이자율 초과부분을 이미 지급한 경우의 반환청구 등 이자제한법 관련 채권자와의 모든 법적분쟁에 대한 구조 가능

- 고리사채를 이용한 저소득층 국민이 법률구조공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 홍보

《참고7》

## 금융소외계층 지원방안

2007. 6. 5(火)

재 정 경 제 부

## I. 금융소외계층 지원방안

◇ 정부재정 및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자금수요별(교육·의료·자활 등)로 적절한 금융기회 마련

- ① (재정사업)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하고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를 통한 의료지원 강화
- ② (공익기금) 하반기 발족예정인 각종 공익기금을 활용하여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제도 확충
  - 의료 및 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장기교육비 대출제도, 의료비 대출제도 및 소액보험(Micro - insurance) 제도 도입
  - 무보증 소액대출(Micro-Credit)제도를 통한 창업 등 자활지원

\* 공익기금 : 사회투자재단(7월중설립예정), 휴면예금관리재단(6월이후 설립예정), 사회공헌기금(9월이후 설립예정)

### 1. 【재정사업】 학자금 대출확대 및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 ① (교육) 중·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자 경감폭 확대(07.2학기부터)

\* 대학생 이상, 연 50만명, 2조원 규모

#### 교육수요에 대한 보호확대

소득기준	이자경감폭	혜택범위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2% 할인(이공계 무이자) → 무이자	연 17만명
· 대출자 70% (수급자·차상위 제외)	국고채 이자율 → 2% 할인	연 18만명
· 대출자 30%	국고채 이자율 유지	연 15만명

② (의료)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저소득층 범위 확대  
(최저생계비(4인기준 121만원) 130% → 150%, 1만명 추가)

\* 위기상황의 저소득층에 한시적으로 생계·주거·의료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06.3월 도입)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 3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1~2회 지원

2. [공익기금 등을 활용한 민간사업] 의료비·교육비 대출제도 도입 및 소액대출·소액보험제도 도입

① (장기 교육비 대출제도) 저소득층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상환시점을 소득발생시점과 연계한 교육비 대출제도를 새로이 도입

- 본인 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때까지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상환시점의 소득에 따라 이자율을 차등 적용
- 대출금 상환시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대출제도와 과세·4대보험 징수 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

장기교육비·대출제도(안)

	장기교육비 대출제도(안)
지원대상	· 저소득 고등학생으로 연간 약 9만명
대출한도	· 연 200만원, 총 600만원
상환기간	· 본인 소득이 일정 소득을 초과한 시점부터 일정기간
이자납부	· 상환시점에 함께 납부(후불 이자)
대출금리	· 상환당시의 소득기준 - 저소득자 : 무이자·저리, 고소득자 : 적정 금리 부여
투자규모	· 연 1,800억원 수준으로 공익기금 등 활용

## ② (의료비 대출제도 도입) 중·저소득층에 대해서도 긴급한 의료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비 대출제도를 도입

\* 중저소득층은 건강이 회복되면 상환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출 제도를 통한 지원제도를 마련

- 건강보험대상자 하위 30%중 의료비 부담이 과도한 계층 (약10만명)에 대해 단기간·적정금리로 의료비를 대출

### 의료수요에 대한 보호확대

· 현 행	긴급복지지원 (최저생계비 130%)	
· 개선안	긴급복지지원 (최저생계비 130% → 150%)	의료비 대출 (건강보험대상자 하위 30%)

## ③ 무보증 소액대출(Micro-Credit) 제도 활성화

- 제도금융권에 접근하기 어려운 저신용 계층의 창업·자활을 지원

\* 그동안 국내 마이크로크레딧 기관들은 규모가 작아 (4개기관, 총 247억원, 94억원 지원)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한계

- 다양한 기관들의 창업·취업지원서비스와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창업·자활성공률을 제고

### 자활·창업 수요에 대한 보호확대

기존 무보증 소액대출 (민간 4개기관) 총 94억원 지원	⇒	무보증 소액대출 활성화 (사회투자재단 등) 1,500억원 규모 지원
---------------------------------------	---	---

#### 4 소액보험(Micro-insurance) 제도 신규 도입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 및 교육보험 등 민영소액 보험상품 개발하여 미래의 급전수요에 대비
  - 보험 접근성이 낮은 저소득·빈곤층에게는 보험료 부담액의 일부를 지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수요발생시 보험금 지급
- \* 연간 가구소득 3,600만원 이상 가구 가입률은 90~93%인 반면 1,200만원 미만 가구 가입률은 35%에 불과(보험개발원)
- 저소득층의 보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존의 보험 설계사 이외 판매망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 Ⅱ. 예상지원규모 및 재원조달방안

### ① 지원규모(안) : 약 25만명 추가보호 (약 0.6조원 추가투자)

	현 행		추진계획(안)	
	지원규모	소요재원	지원규모	소요재원
① 긴급복지지원	3.5만명	재정 340억원	1만명	정부예산 100억원
② 장기교육비 대출	-	-	9만명	공익기금 등 1,800억원
③ 의료비대출제도	-	-	10만명	공익기금 등 2,000억원
④ 무보증소액대출	493건	민간 94억원	7,500건	공익기금 등 1,500억원
⑤ 소액보험	-	-	5만명	공익기금 등 1,000억원
계			25만명	추가정부예산 : 100억원 공익기금 등 : 6,400억원

\* 학자금 대출제도의 이자경감(35만명)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

### ② 재원조달방안

① 학자금대출(08년 468억원) 및 긴급복지지원 확대(약100억원)  
: 정부 재정에서 추가지원

② 교육비 대출, 의료비 대출, 무보증소액대출 및 소액보험 :  
공익기금\* 등 활용(약 0.6조원)


\* 사회투자재단, 휴면예금관리재단, 생보사 사회공헌기금 등

### Ⅲ. 향후 일정

---

- ① 재정사업은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내용 확대
  - 학자금 대출제도 확대는 예산에 既반영되어 있고 07년 2학기부터 실시할 예정
  -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는 복지부 예산에 반영 추진중 (08년예산에 반영 목표)
- ② 공익기금 등을 활용한 사업은 사회투자재단 등이 설립 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화하여 빠른 시일내 지원 실시
  - (사회투자재단) 7월중 설립예정
  - (휴면예금등관리재단) 6월 임시국회에서 휴면예금특별법이 마무리 되는 대로 특별법 또는 민법에 의해 설립
  - (사회공헌기금) 하반기중 발족 예정(9월 이후)
- ③ 공익기금에 대한 기부가 촉진될 수 있도록 기부문화 활성화방안 마련
  - 6월중 공청회를 거쳐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9월 정기 국회에 세법개정안 제출
  - 개인기부금에 대한 세제인센티브 확대 및 공익기금 등 기부대상 단체의 투명성 제고



 재정경제부	<h1 style="text-align: center;">보도자료</h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풍요로운 나라 함께하는 선진경제</li> <li>• 고품질 정책으로 신뢰받는 재정부</li> </ul>
	<b>보도일시</b>	<b>2007.11.5(월) 15:00 부터</b>	
생 산 일	2007.11.5(월)	생산부서	금융정책국 중소기업금융과
담당과장	우상현 과장(2150-9650)	담 당 자	이석란 사무관(2150-9653)

## 제 목 : 제3차 「대부업 정책협의회」 개최

□ 정부는 2007.11.5(월) 15:00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제3차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경제부총리(주재), 법무부장관, 행자부 제2차관, 금감위부위원장, 공정위 부위원장 (☞참고1)

※ 동 협의회는 '06.12.19 대부업 관리·감독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에서 구성·운영키로 결정하였으며, 12.27일 제1차 대부업 정책협의회, '07.6.5일 제2차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금번 협의회에서는 ①대부업 제도개선, ②실태조사 및 상시관리체계 구축, ③불법사금융 단속 등 3대 핵심과제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였으며,

- 이자제한법 시행 및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른 시장동향을 조사해 보고 이에 따른 대응방향을 마련

### 《주요 논의결과》

① (대부업 관리·감독지침) 지자체의 관리·감독에 필요한 업무 매뉴얼 및 대부업체의 모범기준(Best Practice) 역할을 할 지침을 제정

○ 제3차 대부업 정책협의회에서 지침안을 확정하여, 11월중 지자체 등에 배포 계획

○ 향후, 지침안은 운영과정에서 법령 개정 사항, 추가적인 법령 해석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수정·보완

② (상시모니터링) '07년말까지 대부업체 영업현황을 상시 파악할 수 있는 상시관리체계\*를 구축

\* 행자부·지자체가 정기적(대형대부업체는 분기, 중소형업체나 개인은 반기)으로 대부업 DB를 구축하고 금감위가 자료의 검토·분석

- 제2차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중('07.10~11)
  - 2차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12월중 결과 발표
- DB로 구축된 정보와 자료는 재정부·금감위(원)·행자부 등 정책부서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불법사금융 단속)·국세청(세원관리)까지 정보 공유를 확대
  - 국세청은 대부업 DB를 활용, 대부업자에 대한 세무등록정비 및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나갈 계획
- 열린정부 홈페이지([www.open.go.kr](http://www.open.go.kr))를 통해 대부업체 리스트를 공개하고 등록여부 검색 서비스 제공을 추진

③ (상시단속체제) 이자제한법 시행 및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인하 등으로 인하여 대부업체의 불법화·음성화 우려가 큰 상황

- 불법사금융에 대한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하고 근절시까지 지속적으로 단속
- 내년에도 필요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④ (홍보강화) 이자제한 내용 및 권리구제 방안 등이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관련 홍보를 강화

\* 사금융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금감원, 10.8~23, 865명) 결과 이자제한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이용자는 44.5%, 이자제한법 시행이후 이자율을 낮춰줄 것을 요구한 이용자는 13.1%

- 서민금융안내 책자, 이자제한법 해설책자 등을 제작하여 11월중 지자체, 법률구조공단 등에 배포할 예정

- 특히, 사금융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저소득 서민들을 대상으로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구제를 강화할 예정(☞참고2)

☞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소송지원을 법률구조공단의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법률내용과 구조지원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

#### 5 (서민금융공급 확대) 제도권 금융기관의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고, 저신용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및 대안금융 제공

- 서민맞춤대출서비스(이지론), 대출 환승론\* 등 기존 서민금융 대출제도에 제도권 금융기관의 참여 확대를 유도

\* 대부업체 이용자중 상환실적이 양호한 자에게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제2금융권 대출(연이율 35%~48%)로 전환해주는 대출상품  
(실적 : 5.21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632건, 28.7억원을 대출)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경감\*하고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확대\*\*하여 서민들의 급전수요에 따른 적절한 금융기회를 제공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무이자로 학자금 대출('07.2학기부터)

\*\* 07.10월 현재 긴급복지 지원대상을 확대(최저생계비 130% → 150%, 1만가구 추가)하는 긴급복지법시행령 개정중(08.1월 시행)

- 자활의지가 있는 저신용계층에게는 다양한 대안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자생력을 제고

- 내년 1/4분기까지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설립하여 마이크로 크레딧 등 저소득층 복지사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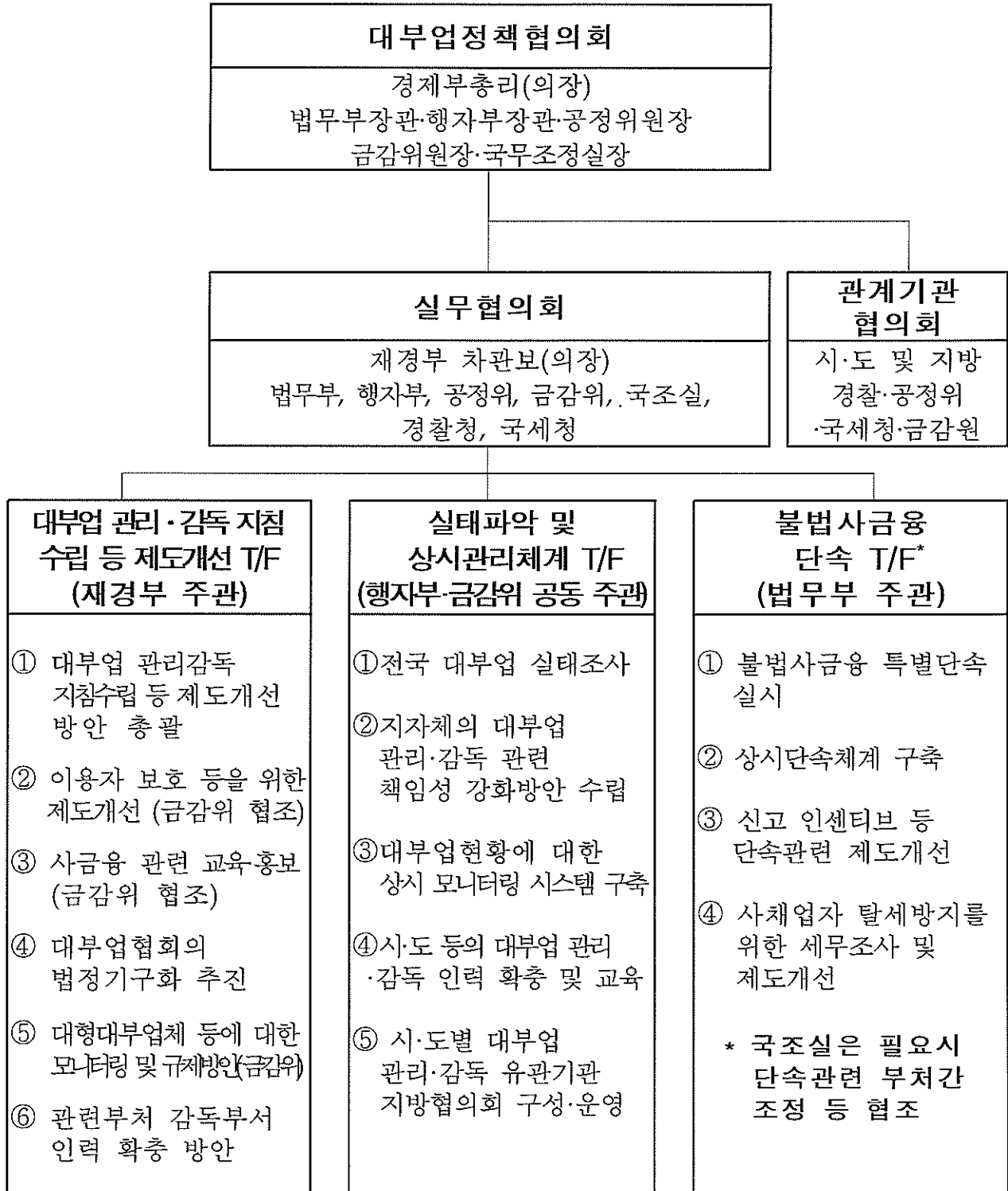
\* 창업·취업지원 대출, 교육·의료비 지원 대출, 신용회복 지원 대출,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 지원 등

- 사회투자재단은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교육 등 사회투자 인프라 구축사업에 특화하는 재단으로 설립 추진중(11월 설립 예정)

- 11월말 이후 생보사 사회공헌기금 운영재단이 설립되면 영세서민을 위한 소액보험지원 가능

## 《참고1》

## 대부업정책협의회 구성현황



## 《참고2》

## 불법 사금융 피해자 법률구제 지원(법무부)

## 1. 현 황

- 이자제한법 시행(6.30)으로 이자제한법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나, 고리사채 이용자의 대부분은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서민들로 자력으로 법률구제를 받기 어려운 실정

⇒ 저소득층 법률구제를 위하여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구조제도를 적극 활용

## 2. 법률구조공단의 이자제한법 관련 법률구조

## 【 법률구조대상자(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

- ▶ 월평균 수입 240만원 이하의 국민/농·어·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영세담배소매인/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등

## 【 주요 법률상담 사례 】

- ▶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설명  
▶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을 초과 지급한 돈의 반환청구나 원본에 총당이 가능함을 설명  
▶ 이자제한법 시행 전에 약정한 이율이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제한법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중 초과부분은 무효임을 설명  
▶ 이자제한법은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설명

### 3. 향후 추진계획

#### □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활동 지속적 추진

-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소송구조 등 실질적인 법률구조를 공단의 중점사업으로 선정, 지속적으로 추진

#### □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홍보 강화('07. 10.~11.)

- 공단 홈페이지에 팝업창 게시, 국정홍보처 전광판 활용 홍보, 안내 리플렛(10만부) 제작·배포,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에 관련 서식 게시
- 유관기관과 협조, 불법 사금융 피해자의 법률구조 홍보 강화

## 제4차 대부업정책협의회 결과

◇ 대부업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협의하기 위해 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회 대부업정책협의회」의 회의결과임

- 일 시 : 08.1.29(화) 16:00~17:00, 장소 : 재경부 7층 대회의실

### 1. 주요 논의결과

#### ① 대부업체 관리·감독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 강화 필요

- 지방의 행정력, 경찰력, 세무서 등을 통해 대부업체를 관리·감독·단속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
- 현재 시·도별로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활성화

#### ②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 지자체의 대부업 관리·감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정보교류를 위한 행사를 마련

#### ③ 사금융 이용자에 대한 실태조사

- 다음 실태조사시에는 대부업체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대부시장 이용자들에 대한 분석도 포함
  - 대부업체 이용자와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소득, 신용도, 연체정도, 사금융 이용 용도 등을 조사하여 실태를 파악
  -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조사를 하여 대안금융을 제공할 대상을 정하고, 저소득층의 금융에도 발굴

#### ④ 관계법령 개정 노력

- 대부업법, 유사수신규제법 등 대부업 및 유사금융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법령의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

---

#### 2. 향후 추진계획

---

- ☐ 대부업자와 사금융이용자 대상 실태조사 실시 ('08.2~3월)
- ☐ 상반기중 지자체 인력충원을 마무리
- ☐ 상반기중 대부업법·령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



## 제5차 대부업 정책 협의회 개최 결과

◇ 대부업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협의하기 위해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제6차 대부업정책협의회」의 회의결과임

- 일 시 : 08.6.3(화)

### 1. 주요 논의결과

#### ① 등록 대부업체와 사금융 이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 그 동안 사금융 시장 규모는 각 연구소 등에서 18~45조원으로 추산
  - 그러나 동 추정치는 90년대 통계치, 등록 대부업체 조사 등 일부 제한적인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정책자료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
- ➡ 이에 전국민과 사금융 이용자,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고 다각적인 실태조사를 시행
- 사금융 시장에 대한 신뢰성 있는 현황 자료를 통해 현실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조사결과 전체 사금융 시장의 규모는 전 국민(20세 이상 3,500만명)의 5.4%인 약 189만명인 것으로 추정
  - 이중 49.9%는 등록 대부업체, 17.6%는 무등록 대부업체, 32.4%는 지인으로부터 차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금융 이용자의 평균 사금융 이용액은 873만원으로 전체 사금융 시장 규모는 약 16.5조원으로 추정됨

- 사금융 대출의 이자율 평균은 연 72.2%\*이고, 사금융 이용자들은 평균적으로 2곳에서 사금융을 이용

\* 사금융 이자율이 법상 이자율보다 크게 높은 것은 사금융 이용자들이 법 개정후 이자가 낮아진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용자는 자신이 부담하는 금리를 높게 인식하기 때문(등록 대부업체 조사결과 신용대출 금리는 약 37~44%로 조사됨)

- 동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월중 금융소외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및 재원조성 방안 등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회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

## ② 경찰과 검찰은 작년에 이어 금년 3~4월중 불법 사금융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

\* '08.1~4월중 1,185명을 단속

- 하반기에도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추가하여 실시하되
  - 금감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불법 사금융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보다 효과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할 예정
- 또한, 국세청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를 적발해 등록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엄중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공정위에서는 그 동안 대부업체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조사('07.6~12)하여 시정권고·명령하고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표준 대부보증 계약서의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

## ③ (지자체 대부업 관리강화) 대부업체 DB구축, 지자체 대부업 전담인력 보강\*, 시·도관계기관협의회 운영\*\* 등을 지속 추진중

\* 지자체의 대부업 전담인력을 '07~'08.5월중 26명까지 확보

\*\* 16개 시도중 12개 시도 개최

- 각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대부업체 정보의 DB화**를 완료('08.2)
- 향후 관계부처가 단속·조사를 실시하거나, 일반국민이 대부업체 여부 확인시 동 DB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④ 대부업법 개정('08.3 시행)으로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금감원이 직접 검사를 하게 되었음**

\* 2개 이상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경우, 자산규모가 70억원 이상인 경우

- 이에따라, 금감원의 관련조직을 확대개편하고, 현재 지자체를 통해 검사대상 대부업자 현황을 파악중이며, 직권검사 대상 업체에게 설명회를 통해 검사내용 등을 안내
- 금년 하반기부터는 직권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에 따라 지자체에 통보하고 조치를 요구할 계획임

**⑤ (금융소외자 지원방안) 금융소외자의 자활을 위해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추진**

- ① 국민연금 기납부액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② 소액서민 금융재단을 통한 창업·취업지원, 신용대출, ③ 신용회복기금 설치를 통한 연체채무 재조정 및 고금리 채무 환승·지원, ④ '신용회복지원중' 기록말소, ⑤ 불공정 채권추심방지법 제정
- 이를 위해 대부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과 필요한 재원마련 방안도 논의

---

## 2. 향후 추진계획

---

- ① 금융소외자 지원방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후 6~7월중 최종방안 발표)
- ② 대부업체DB를 활용한 상시관리시스템 및 사이트 운영에 대한 실무자 회의 개최 ('08.6~7월중)
- ③ 단속기관은 서로간 협조하여 상시적으로 단속을 추진

## 제6차 대부업 정책 협의회 결과

- ◇ 대부업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협의하기 위해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제6차 대부업정책협의회」의 회의결과임  
- 일 시 : 08.9.9(화) 15:00~16:00, 장소 : 금융위 5층 회의실(513호)

### 1. 주요 논의결과

- ① 대부업 관리·감독 및 대부 이용자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대부업법 개정 추진
  - 대부업법 입법예고 기간 중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마련할 필요
- ② 제4차 전국 대부업체 실태조사 추진 계획 및 지자체 파견 전문검사역 활동성과
  - 금감원의 지자체 파견 전문검사역 활동성과 보고
- ③ 불법 사금융 단속 실적
  - 검·경의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실시 및 단속실적, 국세청의 대부업자에 대한 세적정비·세무조사 실시 및 실적
- ④ 지자체 대부업 관리 강화 추진
  - 지자체 인력 확대가 어렵고 아직까지 대부업에 대한 시도의 관심이 미흡한 상황
  - 대부업 상시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실무협의

## ⑤ 대부업 정책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 확보 방안

- 대부업 정책 협의회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책협의회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
- 대부업정책협의회를 법정기구화하는 만큼 연1회 정도 회의를 개최할 필요
- 우선, 실무단계에서 지자체나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건을 선정한 후 정책 협의회에 상정할 필요

---

## 2. 향후 추진계획

- 사회적으로 사금융에 의한 문제가 다시 부각될 수 있으므로 각 부처가 서로 협조하여 상시적으로 단속을 추진
- 대부업체 DB를 활용한 상시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한 실무자 회의 개최('08.9월중)

## 제7차 대부업 정책 협의회 결과

◇ 대부업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협의하기 위해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제7차 대부업정책협의회」의 회의결과임

- 일 시 : 08.12.15(월) 15:00~16:00, 장소 : 금융위 5층 회의실(513호)

### 1. 주요 논의결과

#### ① 대부업 관리·감독 관련 지자체 연말 포상 실시

- 대부업 관리·감독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언론사·금융위 공동으로 지자체장 및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말 포상 실시
- 「서민금융대상」을 「서민금융 우수 감독 대상」으로 조정하고, 포상대상에 금감원 등을 추가할 필요

#### ②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③ 불법 사금융 단속 실적

- 검·경의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실시 및 단속실적, 국세청의 대부업자에 대한 세적정비·세무조사 실시 및 실적

④ 대부업상시관리시스템의 구축

- 대부업체의 효율적 관리·감독을 위해 등록대부업체 DB화 등 대부업상시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⑤ 제4차 전국 대부업체 실태조사 결과

- '08년 하반기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

---

2. 향후 추진계획

---

- ☐ 「서민금융대상」을 「서민금융 우수 감독 대상」으로 조정하고, 포상대상에 금감원 등을 추가하는 방안 검토
- ☐ 사회적으로 사금융에 의한 문제가 다시 부각될 수 있으므로 각 부처가 서로 협조하여 상시적으로 단속을 추진



## 제8차 대부업 정책 협의회 결과

◇ 대부업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협의하기 위해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제8차 대부업정책협의회」의 회의결과임

- 일 시 : '09.3.30(월) 17:00~17:40, 장소 : 금융위 부위원장실

### 1. 주요 논의결과

#### ①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정 대부업법에서 위임한 사항(대부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대부계약시 제출받는 소득증명서류의 범위 등)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② 대부거래 표준약관 등의 제·개정 계획

- 대부업체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추진실적 및 대부거래 표준약관 등의 제·개정 계획

#### ③ 불법 사금융 단속 실적

- 검·경의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실시 및 단속실적, 국세청의 대부업자에 대한 세적정비·세무조사 실시 및 실적

#### ④ 지자체 대부업 관리 강화 추진

- 자산 규모 70억원 이상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⑤ 제5차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계획

- 대부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상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

⑥ 사이버금융감시반 운영 현황

- 사이버금융감시반의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 유형 및 적발 현황

---

**2. 향후 추진계획**

---

- ☐ 대부업정책협의회의 주기적 개최를 통해 유관기관간 공조 강화
- ☐ 제5차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 제9차 대부업 정책 협의회 회의결과

◇ 대부업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협의하기 위해 금융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제9차 대부업정책협의회」의 회의결과임

○ 일 시 : '09.4.24(금) 08:00~09:40, 장소 : 금융위 20층 식당 별실

### 1. 주요 내용

#### ① 금융권을 활용한 서민금융 지원강화 대책

- ① 저신용자에게 생활자금 대출 지원
- ② 보유재산 담보부 생계비 저리융자
- ③ 은행 「저신용자 전용대출 상품」 활성화

#### ② 불법 사금융 단속강화 및 사후구제 확대

##### 가. 유관기관 합동의 불법 사금융행위 총력 단속 실시

- ① 불법 대부업 상시 집중단속 강화
- ②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지급제도 신설
- ③ 금융감독기관과 수사기관간 공조강화(금감원·경찰청 협약식 체결)
- ④ 불법 혐의정보 수사기관 즉각 제보
- ⑤ 세금탈루 대부업자 세무조사 및 연중 사업자 등록정비
- ⑥ 대부업자 탈세신고세터 개설

## 나.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강화

- ① 등록 대부업 DB 인터넷 공개
- ② 무등록업체 광고활동 모니터링 및 수사기관 정기 통보
- ③ 금감원 직권검사 강화 및 지자체에 현장점검 및 상담 지원
- ④ 대부거래 및 보증 표준약관 제정·보급
- ⑤ 업계 자율규제 강화

## 다.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소송지원

- ① 개인회생·파산절차 무료지원
- ② 고리사채 피해자에 대한 무료소송지원

## ③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강화

### 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8.7)전 홍보

#### 나. 서민금융정책 및 피해예방 홍보

- ① 서민금융안내 책자 및 리플렛 발간
- ② 서민금융포털사이트 활용도 제고
- ③ 방송광고 실시

---

## 2. 주요 논의결과

---

### □ 법무부

- 채권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
- 불법 대부행위를 수사기관에 즉각 통보하는 체계의 강화가 필요

## □ 공정거래위원회

- (On-line 홍보) 사채 등에 관련된 단어를 검색하면 즉각 검색 되도록 하는 등 인터넷 홍보를 강화해야 하고, 피해구제 방법도 인터넷 포털에서 정보를 구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약관) 대부거래 및 대부거래 표준약관 인터넷 계약의 경우 대부이용자에게 계약서 송부를 의무화하여 채무자의 권리보장을 강화함

## □ 경찰청

- 민생침해범죄 소탕 60일 작전을 통해 사회안정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불법대부행위가 내밀하게 이루어져 단속이 어려움
-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제도를 도입해 신고활성화를 기할 것임
- 별도의 신고피해전화를 개설하기 보다는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기존의 신고전화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

## □ 국세청

- 세금탈루 혐의 대부업자에 대해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홈페이지의 탈세 신고방에 「대부업자 탈세신고 센터」를 별도로 구분 신설할 것임

## □ 금융감독원

-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고리사채를 치면 바로 「서민금융 119」로 연결되도록 조치하고, Cyber 홍보 등을 지속추진할 것임

## □ 금융위

- 신설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를 통해 업계의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향후 지자체와 연결하여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도모할 것임
-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서민피해를 막기 위해 각 부처는
  - 올 8월 시행예정인 채권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내용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 대부업 관리·감독, 엄정한 단속과 처벌, 피해자 사후구제 등 일련의 관리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처간 상호공조를 공고히 하여 주시기 바람

---

### 3. 향후 추진계획

---

- 금일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국무회의('09.4.28)에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을 보고

## 제10차 대부업 정책 협의회 결과

◇ 대부업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협의하기 위해 개최된 「제10차 대부업정책협의회」의 회의결과임

- 일 시 : '09.10.15(목)

□ 각 부처의 국정감사 일정으로 위원들의 회의참석이 어려워 서면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기재부·법무부·행안부·공정위 모두 전체 안건에 대해 “이견 없음”으로 합의

### 주요내용

①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대책 추진실적

② 대부업 관련제도 개선 추진동향

- 대부업 실태조사 시기를 업무보고서 작성 시기에 맞춰 현재 3월, 9월에서 6월, 12월로 변경

③ 지자체 대부업 관리강화 추진 실적

④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 개정안 주요내용

-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율 상한제한 적용 사례 및 대부업법의 실무 적용 관련 해석사항

⑤ 대부업 감독업무 효율성 제고 방안

- 소재불명 대부업자 일제 정비 추진 및 대부광고시 대부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생활정보지와 협조체제 구축

## 제11차 대부업 정책 협의회 결과

◇ 대부업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협의하기 위해 개최된 「제10차 대부업정책협의회」의 회의결과임

- 일 시 : '09.12.30(수)

□ 각 부처 위원들의 회의참석이 어려워 서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기재부·법무부·행안부·공정위 모두 전체 안건에 대해 “이견 없음”으로 합의

### 주요내용

#### ① 서민금융감독대상 포상계획(안)

○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포상 실시

#### ② 대부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상 최고이자율 인하  
(연 60% → 연 50%)

○ 대부업 등록요건에 고정사업장 요건 추가

○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채권추심 관련폭행·상해죄를 저지른 자의 대부업 고용제한 등

#### ③ 제6차 대부업 실태조사 추진계획

#### ④ 사금융 종합에로지원센터 개소

○ 경찰청(수사), 자산관리공사(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신용회복) 합동으로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실시



## 제12차 대부업 정책 협의회 결과

◇ 대부업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협의하기 위해 개최된 「제10차 대부업정책협의회」의 회의결과임

- 일 시 : '10.4.28(수)

- 각 부처 위원들의 회의참석이 어려워 서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행안부가 '서민금융사 보증부 대출'의 원활한 추진, 등록대부업체 검색시스템 정착 및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른 대부업체 음성화 방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주요내용

#### ① 제6차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 ② 대부업법 최고이자율 인하 방안

-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대부업자와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을 5%p 인하  
(연 60% → 연 50%)

## 제13차 대부업 정책 협의회 결과

◇ 대부업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협의하기 위해 개최된 「제13차 대부업정책협의회」의 회의결과임

- 일 시 : '10.7.23(금)

□ 각 부처 위원들의 회의참석이 어려워 서면회의를 개최

### 주요내용

- ① 불법 사금융 단속 실적 및 계획
- ② 지자체 대부업 관리 강화 추진 현황
- ③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행위 근절방안
  - 대출중개수수료 편취행위 단속 강화
  - 대부업계의 자율 시정노력
  - 관련 기관별 피해예방 홍보 강화
- ④ 제7차 대부업 실태조사 추진계획

## 6. '대부업정책실무자협의회'의 구성현황, 회의 개최 내역, 회의안건 및 결과

### □ 구성현황

소속	직급 및 직위	성명
금융위	사무처장	김주현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김형욱
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윤종원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	오동호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한철수
경찰청	수사국장	김중확
국세청	조사국장	김연근
금감원	중소서민본부장	김장호

□ 협의회 회의개최 및 출석내역

회 차	일 시	회의안건	출석위원
제1차	'06.12.26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 운영방안 ○부처별 추진과제	재정경제부 차관보, 금감위, 법무부, 행자부 국무조정실 담당자
제2차 제3차 제4차	'07.2.27 '07.4.17 '07.6. 1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인하 ○대부업 관리·감독지침 제정추진 ○대형대부업체 모니터링 강화 ○실태조사 정례화 ○허위·과장광고 규제	재정경제부 차관보, 금감위, 법무부, 행자부 국무조정실,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담당자
제5차 제6차 제7차	'07.9.19 '07.10.8 '07.10.29	○대부업 관리·감독지침 제정 ○불법사금융에 대한 상시단속체제 구축 ○대부업법·이자제한법 홍보 강화 ○서민금융 공급 확대	재정경제부 차관보, 금감위, 법무부, 행자부 예산처, 경찰청, 국세청 담당자
제8차	'07.12.27	○대부업 관리감독상 지자체와 협력 강화 ○사금융이용자 실태조사 ○대부업법령 개정	재정경제부 차관보, 금감위, 국무조정실, 법무부, 행자부, 경찰청, 금감원 담당자
제9차	'08.5.30	○사금융 실태조사 결과 ○불법 사금융 단속 실적 ○지자체 대부업 관리 강화 추진 ○금융소외자 지원방안	금융위 사무처장,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안부,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담당자
제10차	'08.9.4	○대부업법 개정 추진 ○제4차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계획 ○불법 사금융 단속 실적 ○지자체 대부업 관리 강화 추진	금융위 사무처장,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안부,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담당자
제11차	'08.12.9	○대부업 관리·감독 우수 지자체 포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불법 사금융 단속 실적 ○제4차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금융위 사무처장,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안부, 공정위, 국세청, 금감원 담당자

회 차	일 시	회의안건	출석위원
제12차	'09.3.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li> <li>○대부거래 표준약관 등의 제개정 계획</li> <li>○불법 사금융 단속 실적</li> <li>○지자체 대부업 관리 강화 추진</li> <li>○제5차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계획</li> <li>○사이버금융감시반 운영 현황</li> </ul>	금융위 사무처장,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안부,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담당자
제13차	'09.9.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법 사금융 피해방지대책 추진실적</li> <li>○대부업 관련제도 개선 추진동향</li> <li>○지자체 대부업 관리 강화 추진 실적</li> <li>○대부업 관리감독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li> <li>○대부업 감독업무 효율성 제고 방안</li> </ul>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안부,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담당자

□ 회의결과는 대부업정책협의회와 유사 (별도 회의록 없음)

## 7. 최근 3년간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관련

- 1. 개최내역(개최일/참석자 등)
- 2. 회의안건 및 부속서류 사본
- 3. 회의결과 및 회의일지 사본
- 4. 의결내역 및 의결서 사본
- 5. 회의록 사본

☐ 개최내역(개최일/참석자 등), 회의결과 및 회의일지 사본,  
의결내역 및 의결서 사본, 회의록 사본

→ 붙임1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참조

☐ 회의안건 및 부속서류 사본

→ 붙임2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안건목록」 참조

☐ 별도제출

## 8. 최근 3년간 소위원회 관련

8-1. 구성내역(구성인원의 소속, 직위, 업무, 목적)

8-2. 회의개최내역(개최일/참석자 등)

8-3. 회의안건 및 부속서류 사본

8-4. 회의결과 사본

### A. 공적자금관리위원회

#### 1) 위원회 구성내역

☐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설치목적
공적자금 관리위원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제3조	공적자금의 조성·운용·회수 등의 주요사항을 심의
공적자금상환 기금운용심의회	공적자금상환 기금법제10조	기금의 주요 정책 및 예·결산 등을 심의

☐ 위원 명단

#### 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회	성명	성별	구분	직위
공적자금 관리위원회	진동수	남	당연직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	남	당연직	기획재정부차관
	민상기	남	위촉직	서울대 경영학과교수
	안종범	남	위촉직	성균관대 경제학과교수
	윤용만	남	위촉직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임치용	남	위촉직	법무법인태평양 변호사
	서지희	여	위촉직	삼정회계법인 상무이사
	박경서	남	위촉직	고려대 경영학과교수

## ② 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심의회

위원회	성명	성별	구분	직위
공적자금상환 기금운용심의회	권혁세	남	당연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남	당연직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사무국장
	김용환	남	당연직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이광준	남	당연직	한국은행 부총재보
	조인제	남	당연직	예금보험공사 이사
	권경성	남	당연직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사
	안수현	여	위촉직	외국어대 법대 교수
	이용모	남	위촉직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 2) 회의 개최내역

### 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일시	의결사항
08.1.11	OOOOOOO 지분 세부매각(안)
	OOOOOOO 지분 세부매각(안) 심사결과 보고
	2008년 정기재계산 추진일정 보고
	2007년도 2분기 경영정상화 이행실적 점검결과 및 조치내용 보고
	2007년 3/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09.8.31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09.9.11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운영세칙안
	소위원회 구성 보고
09.9.25	금융회사 부실채권 매입기준
	“금융회사 부실채권 매입기준” 심사결과 보고
	일반담보부채권 인수의 건
	“일반담보부채권 인수의 건” 심사결과 보고
	(주)OOOOOOOO 주식매각 및 매각주간사 선정 방안
	“(주)OOOOOOOO 주식매각 및 매각주간사 선정 방안” 심사결과 보고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지원 실적보고
	2009년 2/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보고
09.10.16	OOOOOOO 지분 매각방안
	“OOOOOOO 지분매각방안” 심사결과보고
	OOOOOOO 주식 매각방안 및 매각주관사 선정기준(안)
	“OOOOOOO 주식 매각방안 및 매각주관사 선정기준(안)” 심사결과보고



회의일시	의결사항
09.11.11	선박 매입기준
	"선박 매입기준" 심사결과 보고
	1차 매입대상 중 추가매입(2척) 및 2차 선박매입 추진계획
	"1차 매입대상 중 추가매입(2척) 및 2차 선박매입 추진계획" 심사결과 보고
	금융회사 일반담보부 부실채권 인수현황 보고
	"금융회사 일반담보부 부실채권 인수현황 보고" 심사결과 보고
	선박펀드 활성화를 위한 선박매입 운영 개선 방안
09.11.20	OOOOOO 지분 매각방안
	"OOOOOO 지분 매각방안" 심사결과 보고
09.11.25	선박인수를 위한 캄코 글로벌 18호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출자
	"선박인수를위한캄코글로벌18호선박투자회사에대한출자" 심사결과보고
	제2금융권(여신전문금융회사) PF대출채권인수의 건(안)
	"제2금융권(여신전문금융회사)PF대출채권인수의건(안)" 심사결과보고
	제2금융권(보험, 금융투자, 수협) PF대출채권인수의 건(안)
	"제2금융권(보험, 금융투자, 수협)PF대출채권인수의건(안)" 심사결과보고
	합작투자를 통한 혼합형 부실채권 인수계획(안)
	"합작투자를통한혼합형부실채권인수계획(안)" 심사결과보고
	예금보험공사 보유자산 현황 및 매각 계획
09.12.18	부실채권정리기금 보유자산 현황 및 정리 계획
	일반담보부채권 인수의 건(안)
	"일반담보부채권 인수의 건(안)" 심사결과 보고
	합작투자를 통한 혼합형 부실채권 인수의 건(안)
	"합작투자를 통한 혼합형 부실채권 인수의 건(안)" 심사결과 보고
	2010년도 부실채권정리기금 보유자산 매각 계획(안)
	"2010년도 부실채권정리기금 보유자산 매각 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2010년도 예보채상환기금 보유자산 매각 계획(안)
	"2010년도 예보채상환기금 보유자산 매각 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10.1.27	2009년 3/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보고
	OOOOOO 지분 매각방안 및 매각주관사 선정기준(안)
	"OOOOOO 지분 매각방안 및 매각주관사 선정기준(안)" 심사결과 보고
	(주)OOOOOOOO 주식 매각방안
	"(주)OOOOOOOO 주식 매각방안" 심사결과 보고
	제2금융권 등의 PF대출채권 유동화계획의 건(안)
	"제2금융권 등의 PF대출채권 유동화계획의 건(안)" 심사결과 보고
	'09.12월중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해운사 보유 선박 인수현황 보고
	"'09.12월중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해운사 보유 선박 인수현황 보고" 심사결과 보고
10.2.8	OOOO 지분 매각방안
	"OOOO 지분 매각방안" 심사결과 보고
10.2.24	OOOO 주식 매각주관사 선정방안 및 장중매각(안)
	"OOOO 주식 매각주관사 선정방안 및 장중매각(안)" 심사결과 보고

회의일시	의결사항
10.3.19	선박인수를 위한 캠프 글로벌 19호부터 23호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출자 "선박인수를 위한 캠프 글로벌 19호부터 23호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출자" 심사결과 보고 2009년 4/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보고 공적자금 운용으로 취득한 자산의 관리현황 보고
10.4.2	OOOOOOO 지분 세부매각(안) OOOOOOO 지분 세부매각(안) 심사결과 보고
10.4.23	제2금융권(OO증권·OO금융투자) PF대출채권 유동화계획의 건(안) "제2금융권(OO증권·OO금융투자) PF대출채권 유동화계획의 건(안)" 심사결과 보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안건 및 의사록의 공개 시기 연기(안)
10.4.30	OOOO 주식 매각방안 OOOO 주식 매각방안 심사결과 보고 2010년 1/4분기 케이알앤씨 보유자산 매각추진 현황
10.5.7	(주)OOOOOOOO 주식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안) (주)OOOOOOOO 주식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안) 심사결과 보고
10.5.14	(주)OOOOOOOO 주식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안) (주)OOOOOOOO 주식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안) 심사결과 보고
10.5.28	주택 미분양 해소 지원을 위한 리츠·펀드 출·투자 기준 및 계획 '주택 미분양 해소 지원을 위한 리츠·펀드 출·투자 기준 및 계획' 심사결과 보고 '09년4/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점검결과
10.6.14	합작투자를 통한 혼합형 부실채권 인수의 건(안) '합작투자를 통한 혼합형 부실채권 인수의 건(안)' 심사결과 보고
10.6.18	선박인수를 위한 캠프글로벌 제24호부터 25호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출자 "선박인수를 위한 캠프글로벌 제24호부터 25호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출자" 심사결과 보고 일반담보부채권 인수의 건 "일반담보부채권 인수의 건" 심사결과 보고
10.6.25	주택 미분양 해소 지원을 위한 'OO미분양아파트사모펀드1호' 및 'OOOOOO제4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출·투자 "주택 미분양 해소 지원을 위한 'OO미분양아파트사모펀드1호' 및 'OOOOOO제4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출·투자" 심사결과 보고 저축은행 PF 대출채권 인수계획 및 인수의 건(안) "저축은행 PF 대출채권 인수계획 및 인수의 건(안)" 심사결과 보고 2010년 1/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보고
10.7.30	OOOOOOO 매각방안 및 매각주관사 선정기준(안) "OOOOOOO 매각방안 및 매각주관사 선정기준(안)" 심사결과 보고
10.8.13	선박인수를 위한 캠프 글로벌 26호부터 27호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출자 "선박인수를 위한 캠프 글로벌 26호부터 27호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출자" 심사결과 보고 2010년 중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해운사 보유 선박인수, 미분양펀드 투자 현황보고
10.8.23	OOOOOOOO 주식 매매계약 체결 OOOOOOOO 주식 매매계약 체결' 심사결과보고 2010년 공적자금관리 백서(안) 2010년 1/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안)

## ② 공적자금상환기금심의위원회

회의일시	의결사항
08.2.15	· 2007회계연도 공적자금상환기금결산
08.6.30	· 2009회계연도 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계획
08.7.5	· 2009회계연도 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계획
08.9.29	· 2008회계연도 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계획 변경
09.2.13	· 2008회계연도 공적자금상환기금결산 심의
09.3.17	· 2009회계연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
09.6.23	· 2010회계연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운용 계획
10.2.23	· 2009회계연도 공적자금상환기금결산 · 공적자금상환기금 자산운용지침개정
10.6.21	· 2011회계연도 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계획
10.9.01	· 2010회계연도 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계획 변경

### 3~4) 회의안건 · 부속서류 사본 및 회의결과 사본

- 공자위 회의록 및 안건은 공자위홈페이지([www.publicfunds.go.kr](http://www.publicfunds.go.kr))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다만, 최근 회의록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나 기업의 정보보호와 금융시장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
- 원칙적으로 의결 1년 후에 공개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B. 공정시장과

### □ 구성내역

위원회명	구성목적	위원명	당연직 /위촉직	소속/직위	임기
감리위원회	중선위 업무 보조를 위한 전문심의기구	최규연	당연직	중선위 상임위원	재임기간
		조인강	당연직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재임기간
		김호중	당연직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재임기간
		김광윤	당연직	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	재임기간
		김범기	위촉직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	재임기간
		이만우(前)	위촉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2007.05.04~ 2009.05.03
		박재환(現)	위촉직	중앙대 상경대 교수	2009.05.04~ 2011.05.03
		안숙찬(前)	위촉직	덕성여대 회계학과 교수	2006.11.22~ 2008.11.21
		전영순(現)	위촉직	중앙대 회계학과 교수	2008.11.22~ 2010.11.21
		이명곤(前)	위촉직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2006.02.28~ 2008.02.27
		김호중(前)	위촉직	전국대 경영대학장	2008.02.28~ 2009.10.05
		정영기(現)	위촉직	홍익대경영대교수	2009.10.06~ 2011.10.05
		양호승(前)	위촉직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06.07.18~ 2008.05.29
		오승돈(前)	위촉직	한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08.05.30~ 2010.05.29
		박창은(現)	위촉직	박창은 법률사무소 대표	2010.05.30~ 2012.05.29
회계제도 심의위원회	중선위 업무 보조를 위한 전문심의기구	최규연	당연직	중선위 상임위원	재임기간
		조인강	당연직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재임기간
		김낙희	당연직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재임기간
		김호중	당연직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재임기간
		박상임(前)	위촉직	수원대 교수	2007.04.27~ 2009.04.26

위원회명	구성목적	위원명	당연직 /위촉직	소속/직위	임기
		한봉희(前)	위촉직	아주대 교수	2007.04.27~ 2009.04.26
		전 팔(前)	위촉직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2007.04.27~ 2009.04.26
		안영균(現)	위촉직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2009.07.21~ 2011.07.20
		백복현(現)	위촉직	서울대 교수	2009.07.21~ 2011.07.20
		정도진(現)	위촉직	중앙대 교수	2009.07.21~ 2011.07.20
		윤경식 <sup>1)</sup>	위촉직	한영회계법인 감사본부장	2008.07.10~ 2010.07.9
		최외홍 <sup>1)</sup>	위촉직	삼성벤처투자 사장	2008.07.10~ 2010.07.9
		조현연 <sup>1)</sup>	위촉직	카톨릭대 교수	2008.07.10~ 2010.07.9
		우병륜(前)	위촉직	STX 상무	2008.07.10~ 2009.03.2
		이병우(現)	위촉직	대한생명보험 상무	2009.03.3~ 2011.03.2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위원회	공인회계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	권혁세	당연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재임기간
		정은보	당연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임기간
		조인강	당연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재임기간
		문택권(前)	위촉직	전 공인회계사회 부회장	2006.12.20~ 2009.12.19
		이기화(前)	위촉직	회계기준원 수석연구원	2006.12.20~ 2009.12.19
		이정치(前)	위촉직	일동제약(주) 대표이사	2006.12.20~ 2009.12.19
		정덕주(前)	위촉직	서해대학 교수	2006.12.20~ 2009.12.19
		이재일(現)	위촉직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2009.12.20~ 2012.12.19
		최현덕(現)	위촉직	회계기준원 책임연구원	2009.12.20~ 2012.12.19
		이정치(現)	위촉직	일동제약(주) 대표이사 사장	2009.12.20~ 2012.12.19
		최관(現)	위촉직	성균관대학교 교수	2009.12.20~ 2012.12.19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인	권혁세	당연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재임기간
		송기국	당연직	감사원 금융기금감사국장	재임기간

위원회명	구성목적	위원명	당연직 /위촉직	소속/직위	임기
	회계사에 대한 장계의결	장호익	당연직	법제처 경제법제국장	재임기간
		주영섭	당연직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재임기간
		조인강	당연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재임기간
		정기영	당연직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부회장	재임기간
		손성규	당연직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재임기간
자본시장 조사심의 위원회	불공정거래· 공시 조사 결과 보고 및 처리 안을 사전심의 하기위한 증선 위 자문기구	최규연	당연직	증선위 상임위원	재직기간
		조인강	당연직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재직기간
		정연수· 박원호	당연직	금감원 부원장보	재직기간
		김범기	당연직	금융위 법률자문관	재직기간
		정대훈(前)	위촉직	법무법인 이우 대표변호사	2006.4.1 ~ 2008.3.31
		강희철(前)	위촉직	법무법인 을촌 변호사	2008.4.7 ~ 2010.4.6
		유승남(現)	위촉직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10.4.7 ~ 2012.4.6
		정순섭(前)	위촉직	서울대 법학과 교수	2007.4.1 ~ 2009.3.31
		길재욱(前)	위촉직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2007.4.1 ~ 2009.3.31
		김성용(現)	위촉직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2009.4.1 ~ 2011.3.31
		안수현(現)	위촉직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	2009.4.1 ~ 2011.3.31

1) 임기만료로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차기 회의에서 위촉예정

## □ 위원회별 회의개회 내역

위원회명	연도	회의 개최횟수	회의방식	
			참석	서면
감리 위원회	'08	6회	6회	0회
	'09	9회	9회	0회
	'10. 9월	10회	10회	0회
회계 제도 심의 위원회	'08	4회	4회	0회
	'09	4회	4회	0회
	'10. 9월	2회	1회	1회
공인 회계사 자격제도 심의 위원회	'08	1회	0회	1회
	'09	1회	0회	1회
	'10. 9월	1회	0회	1회
공인 회계사 징계 위원회	'08	0회	0회	0회
	'09	2회	2회	0회
	'10. 9월	1회	1회	0회
자본시장 조사심의 위원회	'08	13회	12회	1회
	'09	13회	13회	0회
	'10. 9월	10회	10회	0회

## □ 회의안전 및 부속서류 사본, 회의결과 사본

-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및 감리위원회 회의 내용은 「외부 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될 수 없는 관계로 요청하신 회의안전 및 부속서류 등을 부득이 제공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및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는 서면회의로 진행되어 회의결과 사본 및 회의록 작성 등이 필요한 회의로 요청하신 내용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 별도의 회의록 및 회의결과 사본 등은 작성·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보고자료 내용은 공개될 경우 수사 또는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관련 기업의 주가 등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 또한, 개인의 명예·사생활 및 기업의 영업비밀 등의 침해 등으로 관련자 및 해당기업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며,
  - 기타 개인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개인 정보 보호차원에서 회의 안전 등을 부득이 제공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 자본시장과

### ☐ 시장효율화위원회 구성 내역 및 구성 목적

성 명	소 속	구성 목적
김명직 (위원장)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자본시장법 §414조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파생 상품시장의 거래비용 절감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심의 -증권유관기관의 수수료 변경 또는 신규 설정 및 100억원 이상의 전산 투자 등에 대한 심의
서동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서지희	삼정회계법인 파트너(상무)	
정태명	성균관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오재인	단국대 경영정보학 교수	
이준행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	

### ☐ 시장효율화위원회 회의개최 내역

<별첨> 시장효율화위원회 회의개최 내역 참고

### ☐ 시장효율화위원회 회의안건 사본 - 첨부

### ☐ 시장효율화위원회 회의결과(의사록) 사본 - 첨부

<별첨> 시장효율화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08년 이후)

연도차수	일자	주요 안건	비고	참석자현황
08년 1차	'08.2.20	심의 - 10년 국제선물 수수료 심의	서면	
08년 2차	'08.5.2	심의 - 시장효율화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 선출 - 증권선물유관기관 수수료 인하 - 주식선물 수수료 심의 - 시장효율화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위원장 : 서동우(대행) 위 원 : 주상룡, 최홍식, 오왕식, 김동연, 정재동, 홍재관
		보고 - 증권에탁결제원 증권회사수수료 인하 보고		
08년 3차	'08.7.9	심의 - 시장효율화위원회 위원장 선출 - 돈육선물 수수료 심의		위원장 : 조재호 위 원 : 서지희, 정태명, 최홍식, 오왕식, 이규성, 홍재관
08년 4차	'08.9.17	심의 - 증권선물유관기관 수수료 면제		위원장 : 조재호 위 원 : 서동우, 서지희, 정태명, 최홍식, 오왕식, 김동연, 이규성, 홍재관
08년 5차	'08.11.12	심의 - 증권에탁결제원 차세대시스템 구축 추진계획 심의 - 증권에탁결제원 차세대시스템 구축 관련 기술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장 : 조재호 위 원 : 서동우, 서지희, 정태명, 최홍식, 최석원, 김동연, 이규성, 홍재관
		보고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차세대 시장시스템 구축 추진현황 보고		
08년 6차	'08.11.28	심의 - 증권에탁결제원 차세대시스템 구축 추진계획에 대한 기술소위원회 검토결과 보고 및 심의		위원장 : 조재호 위 원 : 서지희, 정태명, 최홍식, 최석원, 김동연, 이규성, 홍재관

연도차수	일자	주요 안건	비고	참석자현황
09년 1차	'09.03.31	심의 - 시장효율화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 통화선물 거래수수료 등 변경 심의		위원장 : 조재호 위 원 : 서동우, 서지희, 장태명, 신성환 오재인, 김명직
09년 2차	'09.12.22	심의 - 한국거래소 거래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 심의 - 한국예탁결제원 수수료체계 개편방안 심의		위원장 : 조재호 위 원 : 서동우, 서지희, 장태명, 오재인 김명직
		보고 - 한국거래소 거래수수료 징수면제 보고 - 한국거래소 채권ETF 거래수수료 징수면제 보고 - 한국예탁결제원 수수료 징수면제 보고 - 한국예탁결제원 채권ETF 증권회사수수료 징수면제 보고		

연도차수	일자	주요 안건	비고	참석자현황
10년 1차	'10.04.01	심의 - 대용증권관리수수료 징수체계 개선 심의	서면	
10년 2차	'10.08.16	심의 - 시장효율화위원회 위원장 선출 - 한국거래소 미니금선물 수수료를 심의 - 한국거래소 Eurex 연계거래 수수료 징수 방안 심의 - 시장효율화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위원장 : 오재인(대행) 위 원 : 서동우, 서지희, 신성환, 이준행
		보고 - 한국예탁결제원 10년국채인수도수수료 폐지 보고		
10년 3차	'10.08.30	심의 - 금융투자협회 미니금선물 회비납부를 심의	서면	

## 9. 최근 3년간 금융기관에 대한 행정지도 관련

### 9-1. 지도내역 및 지도문서/구두지도 사본

### 9-2. 행정지도 내역(공개/비공개)

### 9-3. 금감원과의 사전협의 내역 및 관련 문서 사본

## 1, 2. 행정지도 내역 (공개/비공개) : 별첨

## 3. 금감원과의 사전협의 내역 및 관련문서 사본

☐ 금융위(사무처)나 금감원이 금융회사 등에 행정지도를 하고자 할 경우, 금융위와 금감원 상호간에 협의하여 행정지도를 행하고 있음

○ 통상 사전 협의는 금융위·금감원 해당 부서간에 유선상으로 협의하거나 방문 협의를 행하고 있어 현재 사전 협의와 관련한 문서는 없음

## 10. 서민금융정책 관련

### 10-1. 금융위 소관 서민금융정책 현황 및 최초 계획 대비 추진 실적

### 10-2. 금융위 비소관 타부처 서민금융정책 관련해서 금융위 협의내역

## 1. 금융위 소관 서민금융정책 현황 및 추진 실적

① (서민금융 공급 확대) 미소금융, 햇살론, 희망홀씨대출을 통해 서민금융 공급 확대

□ 미소금융(미소금융지점) : 제도권 금융 접근이 곤란한 서민에게 대출과 더불어 자활컨설팅을 지원

○ '09.12월 미소금융 출범이후 지점설립과 동시에 대출 및 컨설팅 지원, 제도개선 등 미소금융의 조기 착근에 주력

○ (지점설립) 전국적으로 총 68개 지점 설립 (기업재단 30, 은행재단 19개, 지역지점재단 19개)을 설립

○ (대출) '10년중 9.20 현재까지 총 7,493명에 460.9억원 대출

\* 미소금융지점 289.4억원/3,273명(9.20기준), 기존 복지사업자 172억원 / 4,220명(8.31기준)

○ (활성화) 미소금융 방문자에 대한 서민금융 원스톱 서비스, 소액대출 활성화\*, 자원봉사단을 통한 자활지원 강화, 공공기관 무상임대 추진 등을 통해 미소금융 활성화 노력

- 특히, 소득이 낮은데도 신용등급이 양호(5~6등급)하여 금융회사 대출이 어려운 서민도 미소금융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평가체계를 개선

(5, 6등급 해당자 약 1천만명 중에서 약 200만명이 대출대상에 포함)

- \* 운영자금의 영업기간요건 단축(2년→1년이상) 등 대출요건 완화 및 기업·은행계 재단의 특성화상품 도입(전통시장 상인, 용달사업자 등 대상)
- \*\* 미소금융희망봉사단 : 8.31일 기준, 1,395명 모집(전문지식 577명, 재능나눔 51명, 일손지원 596명 등)

□ **햇살론(서민금융회사)** : 정부 및 민간출연금으로 보증재원을 조성하여 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역할을 복원

- 성실한 경제활동으로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대부업 등에서 30~40%대 고금리를 부담해야하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10%대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
-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근로자, 농림어업인에게
- 생계자금·운영자금·창업자금을 신용등급, 사업자 등록 유무, 점포보유 유무에 따라 차등하여 대출
- 정부와 서민금융회사\* 공동으로 보증재원을 조성(2조원)하여 향후 5년간 10조원을 대출할 계획
- \*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저축은행
- '10.7.26 출시 이후 9.20까지 97,734명에 총 8,940억원대출

□ **희망홀씨대출(은행)** : 은행이 서민전용대출을 개발하여 지원함으로써 **은행의 공익적 역할을 이행**

○ '09.3월부터 **16개 시중은행**이 저신용·저소득 서민을 위한 대출상품을 개발하여 지원중(2천만원 이내, 평균금리 13%대)

○ '09.3월~'10.7월까지 **36만7천명에게 총 2.4조원을 대출**

○ 대출방식별 비중은 **신용대출 8,234억원(33.9%)**,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부대출 1조6,078억원(66.1%)**로 보증부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

## ② 금리·수수료 부담 경감

□ **(카드수수료 인하)** 대형마트와의 경쟁 등으로 어려운 사업 여건하에 놓여 있는 영세한 전통시장 상인 및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인하

○ **(전통시장 가맹점)** 연매출 9,600만원 미만인 전통시장 가맹점의 신용카드수수료율 상한을 2.0~2.2%에서 1.6~1.8%로 인하

○ **(중소 가맹점)** 전통시장 가맹점 이외에 연간 매출 9,600만원 미만인 가맹점의 신용카드수수료율 상한을 3.3~3.6%에서 2.0~2.15%로 인하

□ **(최고금리 인하)** 7.21, 대부업 등 전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대출금리 법정상한을 5%p인하(연49%→연44%)

□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출 금리인하 등)** 현재 실태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일부 대형 여전회사를 중심으로 대출금리 인하 및 취급수수료 폐지 시행

### ③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 '금융채무불이행자' 대상의 채무조정(원리금 감면·만기연장)을 통해 신용회복지원

- '08년 이후 신용회복위원회(비영리단체) 21만명, 신용회복기금(자산관리공사) 11만명 등 총 32만명이상에게 채무조정을 지원

□ (취업지원) 정부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는 별도로 신용회복기금으로 취업지원펀드를 조성하여 1인 채용시 1년간 최대 810만원(정부 540만원, 금융권 270만원) 지원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 채용 유도(금년 7.1부터 시행 중)

- 7월이후 8.31까지 총 162명의 취업을 지원(신복위 126명, 신복기금 36명)

□ (전환대출)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서민들의 20%이상 고금리대출(대부업체·캐피탈 등)을 은행의 12%내외 대출로 전환토록 지원

- '08.12월 전환대출 시행 이후 금년 9.16까지 24,851명에 2,426억원 전환대출 지원

□ (신용회복프로그램 성실이행자 소액대출) 신용회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년이상 성실상환자에 생활안정자금을 500만원 이내에서 4%로 대출(향후 5년간 1,500억원)하여 성공적 재기를 지원

- \* 신용회복기금 : 1,589명 49억원('10.6~8월)  
신용회복위원회 : 11,792명 366억원('10.1~8월)



2. 금융위 비서관 타부처 서민금융정책 관련해서 금융위 협의내역 자료는 없습니다.

## 11. 금융위 소관 중소기업 금융정책 현황 및 추진 실적

-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악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책은행 및 정책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공급 추진
  - (실적) '10.1~8월 기간 중 총 81.8조원\* 지원하여, '10년 계획(91.9조원)대비 89% 집행
    - \* 산은 6.8조, 기은 23.1조, 신보 40.4조, 기보 11.5조
- 국책은행(산은, 기은) 및 보증기관(신·기보)를 통해 기업의 설비투자 자금을 원활히 공급
  - (실적) '10.1~8월 기간중 11.26조원\*을 공급하여 '10년 계획(124조원) 대비 91% 집행
    - \* 산은 1.9조, 기은 5.4조, 신보 3.0조, 기보 0.69조
- 중소기업 보증만기연장 조치를 '10년 상반기까지 유지하되, 자생력 취약기업에 대해서는 선별적 만기연장을 통해 구조조정을 유도
- Fast Track 프로그램 운영기간을 '10년말까지 연장
  - (실적) '10.1~7월 기간중 총 368개사에 3.6조원 지원
- 보증서 보증부분에 대한 신용가산금리 부과를 금지('10.4) 하고, 보증부대출의 금리를 보증기관에 통보하도록 조치
  - (실적) 보증부 대출 금리가 상당 부분 인하
    - \* '10. 7월 중 신·기보에 통보된 보증부 평균대출금리는 6.21%로 '09. 11월 평균금리 6.73% 대비 52bp 낮은 수준
    - \* 전액보증의 경우 8%초과 대출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12. 최근 3년간 금융위 수발신 공문 목록

☐ 해당 문서 첨부

\* 제출 자료에는 민원인 정보 등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외 유출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기록물등록대장 - 별도제출

13. 사전심사청구내역 및 사전심사청구서, 관련  
자료 사본

☐ 해당없음

## 임 영 호 의 원

## 1.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 현재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금융공기업)은 16개임

구 분		금융공기업
준정부기관 (7)	기금관리형	자산관리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5)
	위탁집행형	예탁결제원, 거래소(2)
기타공공기관 (9)		정책금융공사, 산은지주, 산업은행, 기업은행, 기은캐피탈, 기은신용정보, IBK시스템, 코스콤, 한국기업데이터

## 2. 2006년 ~ 2010.8월말 금융공기업 관련

### 1) 연봉 및 성과급 관련

- CEO 연봉내역
- 직원 평균 연봉
- 임직원 성과급 지급내역

### 2) 법인카드 분할결제 및 실명 미서명 현황

- 연도별 건수, 금액(분할결제)
- 연도별 건수, 비중(미서명)

### 3) 정원, 현원관련

## ☐ 예금보험공사

### 1) 연봉 및 성과급 관련

#### ☐ CEO 연봉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8월말
금액	254	260	278	161	107

\* '10년도 연봉은 161백만원으로 '10년 월말까지 집행된 금액

## □ 1인당 평균임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평균임금				
	'06년	'07년	'08년	'09년	'10. 6월
1급	110	125	117	112	56
2급	98	110	105	100	50
3급	86	96	97	95	44
4급	70	75	78	77	36
5급	50	53	55	54	25
사무서무	40	42	45	46	23
일반직평균	71	74	76	75	36
전문직	79	93	87	88	43
특정직	54	56	57	56	27
사무서무	31	34	36	40	22
별정직평균	57	57	59	57	29
직원평균	66	68	70	71	34

\* 경평성과급 및 급여성복리후생비 포함

\*\* 시간제 및 파견근로자 제외

## □ 임직원 성과급 지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기관장	33	31	14	19	83
감사	28	26	11	21	103
상임 이사	131	127	70	113	284
직원	1,122	1,044	1,408	485	988
합계	1,311	1,228	1,504	639	1,458



## 2) 법인카드 분할결제 및 실명 미서명 현황

### ☐ 법인카드 분할결제 현황

- '06~'10.8월 기간 중 법인카드 사용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카드 사용 대금을 분할하여 결제한 사례는 발견된 바 없음

### ☐ 법인카드 실명 미서명 현황

- '06~'08.4월 기간
  - 공사 「법인카드관리기준」에서 법인카드 사용자에게 대하여 실명 기재를 요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실명기재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법인명(KDIC)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서명하였음
- '08.5월 이후 기간
  - 공사가 「법인카드관리기준」을 개정하여 법인카드 사용시 실명 기재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모든 카드 거래에 사용자가 실명을 기재하고 있음

## 3) 정원, 현원관련

### ☐ 정원 및 현원(2010년 8월 현재)

구분	예금보험공사	연수·파견·휴직 등	합계
정원(A)	545명		545명
현원(B)	452명	112명	564명
차(B-A)			19명

☐ 한국예탁결제원

☐ CEO 연봉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 8
기관장	394	469	210	205	204

\* '10. 8월까지 지급받은 금액 기준 작성

☐ 직원평균연봉

(단위 : 백만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 8
직원평균연봉	90	98	92	93	59

\* 정규직 기준 알리오 평균연봉 ('10년은 8월까지 지급받은 금액 기준 작성)

☐ 임직원 성과급 지급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 8
지급액	2,392	3,526	1,715	2,091	2,769

\* 지급연도를 기준으로 작성 (비정규직 포함 금액)

- ☐ 2006년 ~ 2010. 8월말 금융공기업 관련 법인카드 분할 결제 및 실명 미서명 현황
- 해당사항없음

□ 2006년 ~ 2010. 8월말 금융공기업 관련 정원 및 현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8월
정원(A)	510	510	480	420	420
현원(B)	404	435	430	437	425
차(B-A)	△106	△75	△50	17	5

\* 각년도 말기준

## □ 한국거래소

### □ CEO 연봉내역(작성기준일: '10. 8. 31)

(단위: 백만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기본연봉	360	360	371.6	298	161
성과급	288	360	419	345.4	-
계	648	720	790.6	643	161

※ 2009년 공공기관 지정 후 신규 임명된 현 이사장의 경우 정부지침에 따라 연봉 책정

### □ 직원 평균 연봉

(단위: 백만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 6.
기본급	45.98	50.44	50.90	51.49	24.57
제수당	33.14	36.13	38.65	37.31	20.62
급여성복리비	8.10	13.83	12.45	9.60	3.70
경영평가성과급	-	-	-	-	-
기타성과상여금	5.86	7.57	0.99	7.68	0.58
계	93.09	107.98	102.97	106.08	49.46

\*'10년 보수는 5% 삭감분을 반영한 수치임, '09년 부장직급 5% 반납

□ 임직원 성과급 지급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대상자	지급액	지급사유
2006년	부서장	767.9	부서장 성과급
	임원	2,116.2	임원 성과급
2007년	부서장	705.7	부서장 성과급
	임원	2,420.1	임원 성과급
2008년	부서장	682.6	부서장 성과급
	임원	3,607	임원 성과급
2009년	부서장	800.8	부서장 성과급
	임원	2,834.6	임원 성과급
2010년 6월	부서장	470	부서장 성과급

\* 임원 및 부서장 전체 총액 개념

□ 2006년 ~ 2010. 8월말 금융공기업 관련 법인카드 분할 결제 및 실명 미서명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모든 경비를 '06년부터 ERP 시스템으로 처리

○ 법인카드 경비내역에 대하여 카드이용자(실사용자)를 명기

□ 2006년 ~ 2010. 8월말 금융공기업 관련 정원 및 현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8월
정원(A)	700	700	750	675	675
현원(B)	689	696	707	698	687
차(B-A)	Δ11	Δ4	Δ43	23	16

## □ 한국자산관리공사

### 1) 연봉 및 성과급 관련

□ 연도별 CEO 연봉 (단위 : 백만원)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61	261	285	161	161

□ 연도별 직원 평균연봉 (단위 : 백만원)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8월
52	55	57	57	38

□ 경영평가성과급 평균 지급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8월
사 장	35	32	7	19	129
감 사	30	27	-	32	77
부 사 장	30	27	-	24	105
상 임 이 사	28	26	-	23	87
직 원	1.7	1.7	1.3	0.7	2.3

### 2) 법인카드 분할 결제 및 실명 미서명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 3) 정원, 현원 관련

구 분	본 부	영업본부	연수, 파견, 휴직 등	영업지점
정원(A)	168	780	33	168
현원(B)	167	648	38	168
차(B-A)	1	132	△5	-

## ☐ 한국주택금융공사

### ☐ ① 연봉 및 성과급 관련

#### ☐ CEO 연봉내역

(단위 : 백만원)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411	325	247	239	258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기준 적용

\* 2010년은 8월말까지의 지급내역(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내역 포함, 2008년과 2009년의 성과등급은 동일하나 지급율이 상승(48%→60%))

#### ☐ 직원 평균 연봉

(단위 : 백만원)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71	73	74	77	78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기준 적용

\* 2010년은 8월말까지의 지급내역(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내역 포함, 2008년보다 평가등급 상승)

#### ☐ 임직원 성과급 지급내역(평균)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8
사장	109	23	86	78	97
감사	76	14	83	16	52
이사	64	10	52	39	90
직원	6	6	6	7	9

주1) 사장 성과급의 경우 2008년과 2009년의 성과등급은 동일하나 지급율이 상승(48%→60%)

주2) 직원의 성과급은 공운법에 따른 경영평가 성과급과 당해연도 기본연봉의 10%를 삭감하여 조성한 재원으로 전년도 성과평가결과를 기준으로 개인별 차등 지급하는 기타 성과상여금으로 나누어짐, 기타 성과상여금은 감소하였고(7백만원→6백만원), 경영성과 평가급은 평가등급 상승으로 지급액 증가



## ② 법인카드 분할 결제 및 실명 미서명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③ 정원, 현원 관련

(명)

구분	본부			영업점			연수, 파견, 휴직자
	정원(A)	현원(B)	차이 (B-A)	정원(A)	현원(B)	차이 (B-A)	
'06년말	256	245	△11	126	126	0	13
'07년말	274	265	△9	147	153	6	17
'08년말	283	264	△19	165	150	△15	31
'09년말	236	223	△13	151	143	△8	40
'10년 8월말	236	230	△6	151	148	△3	14

☐ 기타 공공기관 현황

☐ 현재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금융공기업)은 16개임

구 분		금융공기업
준정부기관 (7)	기금관리형	자산관리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5)
	위탁집행형	예탁결제원, 거래소(2)
기타공공기관 (9)		정책금융공사, 산은지주, 산업은행, 기업은행, 기은캐피탈, 기은신용정보, IBK시스템, 코스콤, 한국기업데이터

☐ 2006년~2010.8월 말 금융공기업 관련

- ① 연봉 및 성과급
- ② 법인카드 분할 결제 및 실명 미서명 현황
- ③ 정원, 현원 관련

\* 별도첨부

# ① 연봉 및 성과급

(단위 : 백만원)

금융공공기관		2006	2007	2008	2009	2010
정책금융공사 (09.10.28일 설립)	CEO연봉	-	-	-	161	161
	직원평균연봉	-	-	-	-	95
	임직원 성과급 지급내역	-	-	-	-	171
산은금융지주 (09.10.28일 설립)	CEO연봉	-	-	-	161	161
	직원평균연봉	-	-	-	-	116
	임직원 성과급 지급내역	-	-	-	-	181
산업은행	CEO연봉	742	612	424	462	161
	직원평균연봉	91	93	93	89	87
	임직원 성과급 지급내역	18,194	15,481	21,117	9,141	19,701
중소기업은행	CEO연봉	723	558	572	484	161
	직원평균연봉	79	85	83	82	65
	임직원 성과급 지급내역	54,400	55,800	64,495	68,265	60,911
신용보증기금	CEO연봉	378	434	457	246	161
	직원평균연봉	69	73	75	75	73
	임직원 성과급 지급내역	1,842	4,798	5,995	2,986	1,016

금융공공기관		2006	2007	2008	2009	2010
기술신용보증기금	CEO연봉	373	431	456	264	161
	직원평균연봉	69	73	73	71	72
	임직원 성과급 지급내역	1,046	2,540	3,725	1,850	-
기은캐피탈	CEO연봉	276	285	285	172	152
	직원평균연봉	72	72	70	71	71
	임직원 성과급 지급내역	815	907	905	357	1,250
IBK신용정보	CEO연봉	188	194	174	175	105
	직원평균연봉	50	53	53	52	51
	임직원 성과급 지급내역	311	327	275	363	425
IBK시스템	CEO연봉	179	191	194	189	105
	직원평균연봉	43	42	43	47	45
	임직원 성과급 지급내역	586	647	620	956	1,319
한국기업데이터	CEO연봉	340	399	348	279	290
	직원평균연봉	66	65	65	66	65
	임직원 성과급 지급내역	886	1,176	1,163	1,384	911

\* 06~09년 CEO 연봉은 기본급, 수당, 성과급 등이 포함된 합계액, 직원 연봉은 1인당 평균보수액 (알리오 공시기준)

\*\* 2010년 임직원 연봉은 예산기준임

## ② 법인카드 분할 결제 및 실명 미서명 현황

금융공공기관		2006	2007	2008	2009	2010.8
정책 금융공사	분할결제 건수 (금액)					
	미서명 건수 (비중)					
산은 금융지주	분할결제 건수 (금액)	-	-	-	-	-
	미서명 건수 (비중)	-	-	-	-	-
산업은행	분할결제 건수 (금액)	-	-	-	-	-
	미서명 건수 (비중)	-	-	-	-	-
중소기업 은행	분할결제 건수 (금액)	-	-	-	-	-
	미서명 건수 (비중)	-	-	-	-	-
신용 보증기금 <sup>주1)</sup>	분할결제 건수 (금액)	-	-	-	126 (65,157천원)	54 (23,249천원) <sup>주2)</sup>
	미서명 건수 (비중)	-	-	-	-	-
기술신용 보증기금	분할결제 건수 (금액)	-	-	-	-	-
	미서명 건수 (비중)	-	-	-	-	-
기은캐피탈	분할결제 건수 (금액)	-	-	-	-	-
	미서명 건수 (비중)	-	-	-	-	-
IBK신용정보	분할결제 건수 (금액)	-	-	-	-	-
	미서명 건수 (비중)	-	-	-	-	-
IBK시스템	분할결제 건수 (금액)	-	-	-	-	-
	미서명 건수 (비중)	-	-	-	-	-
한국 기업데이터	분할결제 건수 (금액)	-	-	-	-	-
	미서명 건수 (비중)	-	-	-	-	-

\* 주1) 신보는 법인카드 모니터링이 '09년부터 시행되어 '09년도 분부터 작성, 분할결제란 동일자 동일장소에서 1시간내에 두건 이상 결제한 것을 말하며, 상기 분할 결제내역은 합계액 50만원이상으로 물품추가 구입, 가맹점 내 계산대 분리 등에 따른 항목임,

\* 주2) 분할결제 내역은 '2010.1~6월 사용분

### ③ 정원, 현원 관련

구분			본부	영업본부	연수, 파견, 휴직 등	영업지점
정책금융공사 (09.10.28일 설립)	09년	정원(A)	95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현원(B)	92		1 (현원에 포함)	
		차(B-A)	△3			
	10.8	정원(A)	180			
		현원(B)	163			
		차(B-A)	△17			
산은금융지주 (09.10.28일 설립)	09년	정원(A)	55			
		현원(B)	55			
		차(B-A)	-			
	10.8	정원(A)	64			
		현원(B)	60			
		차(B-A)	△4			
산업은행	06년	정원(A)	2,250			
		현원(B)	559	872	100	604
		차(B-A)	△115			
	07년	정원(A)	2,320			
		현원(B)	648	836	132	568
		차(B-A)	△136			
	08년	정원(A)	2,370			
		현원(B)	672	823	123	581
		차(B-A)	△171			
	09년	정원(A)	2,133			
		현원(B)	628	805	135	588
		차(B-A)	23			
	10.8	정원(A)	2,133			
		현원(B)	589	847	112	599
		차(B-A)	14			

구분			본부	영업본부	연수, 파견, 휴직 등	영업지점
중소기업 은행	06년	정원(A)	6,692			
		현원(B)	1,194	180	543	4,562
		차(B-A)	213			
	07년	정원(A)	6,892			
		현원(B)	1,220	161	537	4,655
		차(B-A)	319			
	08년	정원(A)	7,342			
		현원(B)	1,240	126	511	5,181
		차(B-A)	284			
	09년	정원(A)	6,652			
		현원(B)	1,371	149	471	5,072
		차(B-A)	△411			
	10.8	정원(A)	7,392			
		현원(B)	1,403	149	547	5,136
		차(B-A)	153			
신용보증기금	06년	정원(A)	353	411	42	1,465
		현원(B)	358	408	68	1,305
		차(B-A)	5	△3	26	△160
	07년	정원(A)	348	269	41	1,624
		현원(B)	352	267	66	1,459
		차(B-A)	4	△2	25	△165
	08년	정원(A)	327	333	71	1,551
		현원(B)	332	337	57	1,411
		차(B-A)	5	4	△14	△140
	09년	정원(A)	312	289	91	1,590
		현원(B)	310	271	65	1,406
		차(B-A)	△2	△18	△26	△184
	10.8	정원(A)	311	308	76	1,587
		현원(B)	310	303	76	1,421
		차(B-A)	△1	△5	0	△166

구분			본부	영업본부	연수, 파견, 휴직 등	영업지점
기술보증기금	06년	정원(A)	1,260	해당사항 없음		
		현원(B)	213		0	741
		차(B-A)	306			
	07년	정원(A)	1,260			
		현원(B)	214		27	858
		차(B-A)	188			
	08년	정원(A)	1,145			
		현원(B)	235		17	831
		차(B-A)	79			
	09년	정원(A)	1,145			
		현원(B)	208		26	847
		차(B-A)	90			
	10.8	정원(A)	1,145			
		현원(B)	210		50	834
		차(B-A)	101			
기은캐피탈	06년	정원(A)	62			
		현원(B)	62			
		차(B-A)	0			
	07년	정원(A)	75			
		현원(B)	73			
		차(B-A)	2			
	08년	정원(A)	101			
		현원(B)	82			
		차(B-A)	19			
	09년	정원(A)	101			
		현원(B)	89			
		차(B-A)	12			
	10.8	정원(A)	113			
		현원(B)	104	-	3	-
		차(B-A)	6			



구분			본부	영업본부	연수, 파견, 휴직 등	영업지점
IBK 신용정보	06년	정원(A)	34	-	-	-
		현원(B)	33	-	-	-
		차(B-A)	1	-	-	-
	07년	정원(A)	43	-	-	-
		현원(B)	38	-	-	-
		차(B-A)	5	-	-	-
	08년	정원(A)	48	-	-	-
		현원(B)	43	-	-	-
		차(B-A)	5	-	-	-
	09년	정원(A)	46	-	-	-
		현원(B)	42	-	-	-
		차(B-A)	4	-	-	-
한국 기업 데이터	06년	정원(A)	133	-	-	-
		현원(B)	87	-	-	46
		차(B-A)	0	-	-	-
	07년	정원(A)	147	-	-	-
		현원(B)	93	-	-	54
		차(B-A)	0	-	-	-
	08년	정원(A)	167	-	-	-
		현원(B)	94	-	-	73
		차(B-A)	0	-	-	-
	09년	정원(A)	144	-	-	-
		현원(B)	91	-	1	63
		차(B-A)	11	-	-	-
	10.8	정원(A)	144	-	-	-
		현원(B)	93	-	-	56
		차(B-A)	5	-	-	-

\* '08.12.19일 제 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준정부기관 및 산은·기은의 정원이 일괄적으로 감축되었으며, 이후 초과 현원은 '12년까지 해소할 계획임

### 3. 2006년~2010.8월말 과징금 부과실적

- 1) 부과금액, 징수금액, 징수율 등
- 2) 유형별 수납액, 불납결손액 변동현황

□ '06 ~ '10년 8월말 과징금 등 부과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	징수결정액 (A)	징수금액(B)		징수율 (B/A)	불납결손액
		기한내 납부	체납처분에 의한 납부		
'06	21,154	4,955	1,724	31.6	-
'07	24,395	6,330	4,123	42.8	177
'08	26,194	5,571	2,254	29.8	2,017
'09	30,273	4,825	2,427	23.9	834
'10.8	32,833	5,814	1,894	23.4	

\* 체납처분 : 독촉, 압류 등

**4. 2006년 ~ 2010.8월말 금융기관 및 공적자금투입  
기업에 대한 보수체계 관련**

- 1) 공적자금 투입기업의 기관장 및 상임이사 이상  
임원의 연봉(기본급 및 성과급 구분)**
- 2) 공적자금 투입기업별 기관장 및 임원의 보수지급 규정**

☐ 2006년 이후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되어 신규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이 없어 질의하신 사항은 해당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5.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지원제도 현황

- 1) 신용회복지원실적, 소액금융지원제도 현황
- 2) 상담건수, 신청건수, 대출건수, 대출금액

###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 지원실적

(단위 : 건, 억원)

	상담 및 접수		채무조정	
	상 담	접 수	건 수	금 액
'02-'03년	248,028	63,055	35,542	15,540
04년	765,756	287,352	268,451	82,457
'05년	646,448	193,698	208,231	43,313
'06년	305,037	85,826	86,890	14,216
'07년	251,948	63,706	61,597	8,495
'08년	446,573	79,144	73,264	9,087
'09년	588,335	101,714	93,402	14,702
'10년(8월말)	255,193	55,659	52,226	7,927
누 계	3,507,318	930,154	879,603	195,737

※프리워크아웃 실적 포함

## □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지원제도 실적

(‘10.8월말 기준, 단위:천명, 억원)

구 분			08.12.19~ 09.12.31	2010년 (1.1~8.31)	합 계
채 무 조 정	공사자체 (‘08.4)	인원	252	9	261
		금액	23,503	2,360	25,863
	희망모아 (‘05.5)	인원	380	17	397
		금액	32,918	2,595	35,513
	신용회복 기 금 (‘08.12.19)	인원	76	38	114
		금액	3,277	2,120	5,397
합 계		인원	708	64	772
		금액	59,698	7,075	66,773

## ※ 신용회복기금 채무조정 상담 및 신청 실적

(단위 :명)

구 분	2009년 말까지			2010년(1.1~8.31)		
	상 담	신 청	완 료	상 담	신 청	완 료
채무조정	348,077	93,505	76,040	137,569	45,722	38,102

## □ 소액금융지원 현황

(‘10.8월말 기준, 단위:명, 억원)

기관	종류	상담건수	대출건수	대출금액
신용회복 위원회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고금리차환금	53,503	29,722	902
한국자산 관리공사	한마음소액대출, 기금소액대출(‘10.6)	33,053	8,736	217
계		86,556	38,458	1,119

## 6. 2006년 ~2010.8월말 혐의거래보고 접수, 처리현황

### □ 2006. ~2010. 8. 말 혐의거래보고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 건,%)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08.	합계
접수건수	24,149	52,474	92,093	136,282	151,903	456,901
제공건수	2,267	2,331	5,234	7,711	7,360	24,903

## 7.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서민금융 지원현황

□ (‘10.4.7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 자료 별첨)



#별첨

---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

---

2010. 4



## 목 차



I. 추진배경 .....	1
1. 서민금융 현황 및 평가 .....	1
2. 서민금융 활성화 정책방향 .....	2
II. 서민금융 공급 확대 방안 .....	3
1. 서민계층에 대한 보증부 대출 공급 확대 .....	3
2. 신용회복 대상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8
3. 대부업의 최고이자율 인하 .....	9
4. 미소금융 운영개선 .....	10
5. 신용정보관리시스템 개선 .....	12

## I. 추진배경

### 1 서민금융 현황 및 평가

□ 금융위기 후 경기침체 및 고용감소로 생활이 어려워진 서민의 자금수요는 증가하였으나,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은 축소되어 서민의 금융이용기회 감소

○ 저축은행, 신탁 등 서민금융회사는 '03년 가계신용위기 이후 서민대출을 줄이고 부동산, 기업 관련 여신을 주로 취급

※ 신용 6등급이하 대출 비중(%) : 은행 21, 상호금융 36, 저축은행 87, 대부업 91

□ '09년말 출범한 「미소금융」은, 자활의지는 있으나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창업·운영자금 지원 개시

○ 지난 3개월간 약 2만명이 방문·상담하는 등 서민층의 관심이 매우 컸으나, 그 금융수요를 모두 해소하기에 한계

□ 저신용 서민들의 대부업체 등 사금융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고금리 부담 등 서민생활 어려움 가중

※ 등록 대부업 시장규모(조원) : 4.1('07.9) → 5.6('08.9) → 5.9('09.9)

⇒ 서민의 금융수요 충족과 고금리 부담의 경감을 위해서는 미소금융과 함께 농·수협, 산림조합, 신탁,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을 통한 양질의 서민금융 공급 확대 필요

## 2 서민금융 활성화 정책방향

- ①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없어 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층에 대한 금융이용 기회 확대
  - 저신용(신용등급 6등급 이하)·저소득층에 대한 신용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의 출연재원을 바탕으로 보증공급을 확대
- ② 신용회복 대상자의 안정적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생활자금 지원을 확대
  - 신용회복기금의 여유자금을 바탕으로 한 신규 지원을 개시하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기존 지원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성실 채무상환자에 대해 자금지원 추진
- ③ 고금리 부담 완화를 통해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상의 최고이자율을 단계적으로 인하 추진
- ④ 미소금융으로 지원할 수 없는 서민에 대하여는 보증부대출 등 다른 서민금융지원 서비스를 연계 제공
  - 아울러 미소금융 지방지점 확충 등을 통해 서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미소금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육 및 컨설팅 능력 강화
- ⑤ 서민금융회사가 보다 충실한 여신심사를 바탕으로 서민금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신용평가역량을 확충

## Ⅱ. 서민금융 공급 확대 방안

### 1 서민계층에 대한 보증부 대출 공급 확대

#### < 현황 및 문제점 >

□ 은행에 비해 신용평가 역량이 부족한 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들은 담보 및 신용이 부족한 서민들에 대한 대출을 꺼리는 실정

○ 이에 서민대출에 대한 보증공급을 확대하여 서민금융회사의 자금공급을 늘릴 필요

※ 미국은 지역개발금융펀드(CDFI)를 조성, 저소득층의 건강·교육·긴급자금 등을 지원하고, 일본은 정책금융공사를 통해 금융소외자에게 사업자금, 생활위생개선자금, 창업자금 등을 지원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영세자영업자, 근로자 등 서민에 대한 보증지원은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

※ 보증공급 규모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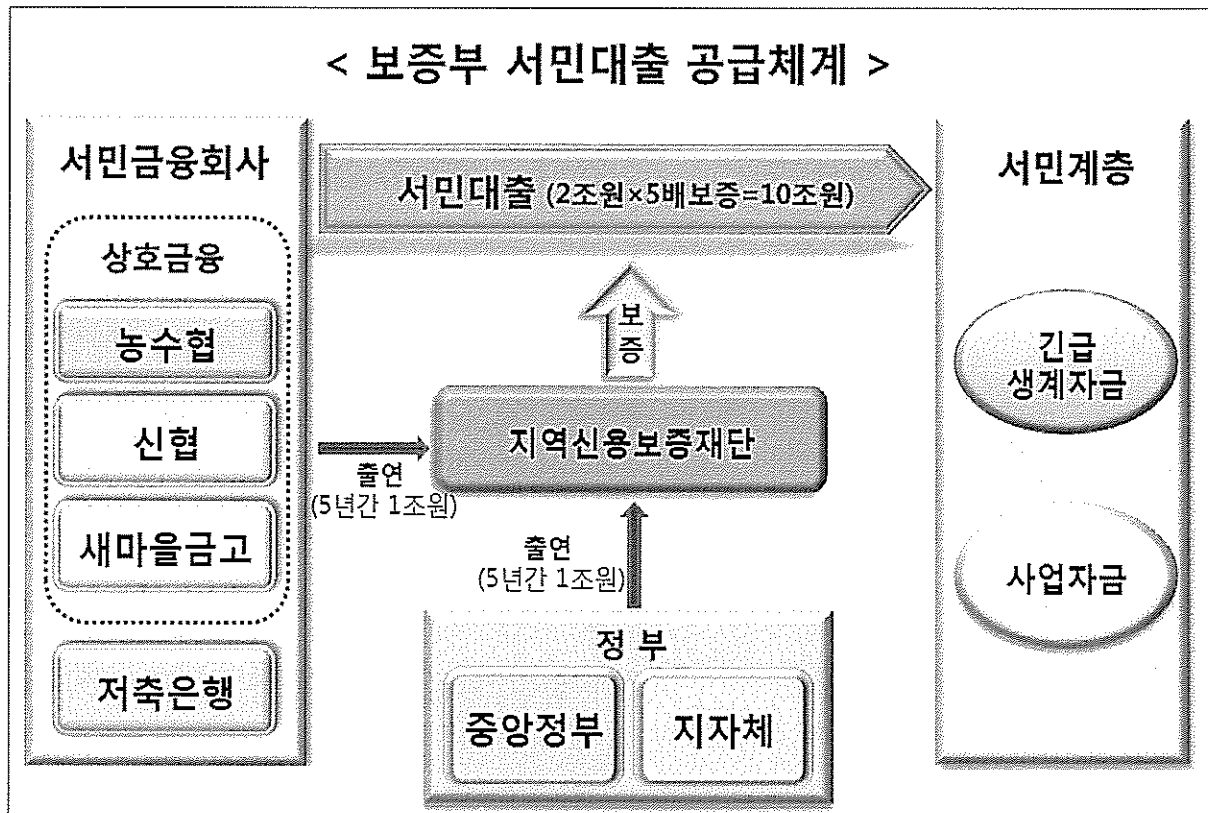
	중소기업	자영업자	근로자
'08년	41.6	3.9	-
'09년	56.5	8.4	0.2
'10년(목표)	52.6	5.3	0.5

□ 현재 서민에 대한 특례보증은 글로벌 금융위기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한시적(금년중 종료 예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 보증기관이 대출위험 전부를 부담하거나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낮아 금융회사가 대출을 소극적으로 취급하는 문제

## < 개선방안 >

◇ 정부와 민간의 공동재원 출연을 바탕으로 서민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 추진



### 1] 보증부 서민대출 공급 목표 : 5년간 최대 10조원 공급

- 대부업체 대출규모 총 10조원임을 감안하여 대출 공급 목표 설정
- 서민대출의 부실율(10% 가정)을 감안할 때 약 5배 이내의 보증배수 적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보증재원으로 향후 5년간 총 2조원 수준(매년 4,000억원) 소요 전망  
⇒ 해당 소요재원을 민간과 정부가 「50 : 50」으로 출연하여 조성하는 방안 추진

## < 보증재원 조성방안 >

**민간 출연 : 5년간 총 1조원(연간 약 2,000억원)**

○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이 「40 : 10」 으로 분담 출연

- 상호금융과 저축은행간 여신규모 차이(4배), 상호금융 회사에 대한 비과세 예금 혜택 등 감안

**(상호금융) : 5년간 총 8,000억원(연간 약 1,600억원)**

※ 상호금융내 업권별 연간 출연 규모 예상액('09.12월말 잔액기준)

	농협	수협	산림	신협	새마을금고	계
비과세예금(조원)	55.5	4.8	1.2	19.6	34	115
출 연 금(억원)	833	72	18	294	510	1,727

**(저축은행) : 5년간 총 2,000억원(연간 약 400억원)**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서민금융회사의 출연 의무화 추진('10년 상반기중)

**정부 출연 : 5년간 총 1조원(연간 약 2,000억원)**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민신용보증의 공공성, 지역주민 수혜,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분담비율 결정

**기타 : 보증수수료 수입 등**

## ② 보증대상

- 저신용(예: 신용 6등급이하) 또는 저소득(예 : 차상위 계층) 영세자영업자, 근로자, 농·어업인(상호금융) 등

※ 제외대상 : 부도, 금융채무불이행자,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 진행 중, 보증사고 관련자 등

## ③ 보증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담당

- ‘서민신용보증 전담’ 보증기관 신설방안도 검토 가능하나, 유사기관간 기능 중복, 보증 경쟁에 의한 부작용 등을 감안, 현재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활용 바람직

※ 2009.4월 법개정을 통해 지역신보는 소기업, 소상공인에 더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보증이 가능해 짐

- 보증재원은 ‘저축은행,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6개 업권별로 별도 분리 운영\*

\* 업권별 보증규모는 출연재원에 비례하여 결정하고 특정업권의 출연금을 타 업권에서 사용치 않음

- 일정기간(예: 1년)동안 분리 운영한 후 그 실적을 평가하여 필요시 업권간 경쟁유도를 위해 보증재원의 통합 운영 검토

- 금융위와 중기청이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신보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 앞으로 늘어날 보증업무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지역신보 중앙화의 역량을 확충

#### 4] 대출 운용방안

- (취급기관) 서민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상호금융회사 (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및 저축은행

※ '09년말 서민금융회사는 총 3,989개 : 저축은행 104, 상호금융 3,885(농협 1,178, 수협 91, 산림조합 133, 신협 982, 새마을금고 1,501)

- (보증비율) 원칙적으로 대출금액의 80~85%수준을 보증하고, 나머지는 서민금융회사가 자기책임하에 대출

- (대출금리) 서민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취급할 유인을 부여하기 위해 “적정금리”로 운용

- 금리 상한\*을 설정하되, 대출금리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경쟁방식 도입

\* 은행의 희망할씨대출 평균금리(14%), 쏘은행 6~10등급 평균 신용대출금리(19%)

- (자금용도) 긴급생계자금(5백만원 이내), 사업자금(1~5천만원이내), 기존 고금리 대출의 상환자금 등

- (마케팅) 미소금융, 보금자리론과 같이 “통합 브랜드”를 사용, 인지도 제고 및 마케팅 비용 절감

## ⑤ 시행시기 : '10년 하반기부터 대출상품 출시

- 관련 법령 개정과 기존 한시적 특례보증의 마무리 일정을 감안

## 2 신용회복 대상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① 성실한 채무상환자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 확대

-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우 채무조정기간 중에 금융거래가 곤란하여 생활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빈번

\* '02년~'09년, 신용회복위 채무조정자 83만명 중 24만명(29%)이 생활비 수요 등 때문에 중도 탈락

⇒ 성실채무상환자\*의 안정적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 신용회복기금(자산관리공사)은 여유자금을 활용,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신규 개시
- 신용회복위원회는 재원을 확충하여 기존 대출\*\*을 지속 확대

\* 신용회복지원중인 자(76만명) 중 1년이상 성실채무상환자 : 67만명

\*\* '06.11월 이후 소액대출 실적 : 20,746명, 623억원

※ 신규 지원 목표 : 5년간 1,500억원, 5만명(평균 3백만원, 연 4%)

## ②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Pre-workout) 연장

○ '09.4월부터 3개월 미만 단기연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자감면, 만기연장 등 사전채무조정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중

- '10.3월말까지 총 31,785명이 상담, 이 중 9,402명(29.6%)이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등 금융안전망 역할 수행

⇒ 1년간 연장하여 운영

## 3 대부업의 최고이자율 인하

□ 현행 대부업법령상 최고이자율은 연 49%로 이는 대부업자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에 동일하게 적용

※ 미등록 대부업체는 최고이자율을 30%로 적용하여 양성화 유도

○ 대부분의 대부업체, 일부 저축은행 및 여전사는 동 금리를 기준으로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수취하여 주된 이용자인 서민층에 과도한 부담

□ '07.10월 최고이자율 인하(66%→49%) 이후 한은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 인하 추세를 감안시, 동 최고이자율 인하 필요

※ 한국은행 기준금리 : ('07.9) 5% → ('10.2) 2%  
은행 평균여신금리 : ('07.9) 6.7% → ('10.2) 5.9%

- 일본도 금년 6월부터 최고이자율을 29.2%에서 20%로 인하할 예정('06.12월 출자법개정)
- 최고이자율 인하시 **대부업체 음성화 및 서민대출 위축**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나
  - 금번 대책에 포함된 '보증부 서민대출'의 확대 실시에 따른 서민층에 대한 신용공급 증가로 보완 기대
- ⇒ 대부업법령상 최고이자율을 **10%p (49%→39%)** 인하 추진
  - 우선 조속히 5%p 인하 (즉시 대부업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추진)
  - 보증대출의 정착, 시장금리 변동추이 등 경제여건 변화를 보아가면서 **1년 이내에 5%p 추가 인하 추진**
    - ※ 5%p 인하시 금리부담 완화 기대효과 : 연간 2,000억원\*
 

\*4조원(등록 대부업체 신용대출규모) × (49% - 44%)

## 4 미소금융 운영 개선

- ① 미소금융 창구에서 서민금융 One-Stop 서비스 제공
  - 지점 방문자중 미소금융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보증대출(지역신보), 신용회복(신복위, 신복기금) 등 다른 서민금융지원수단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 '10.3월까지 미소금융지점 방문·상담자 총 19,995명중 11,63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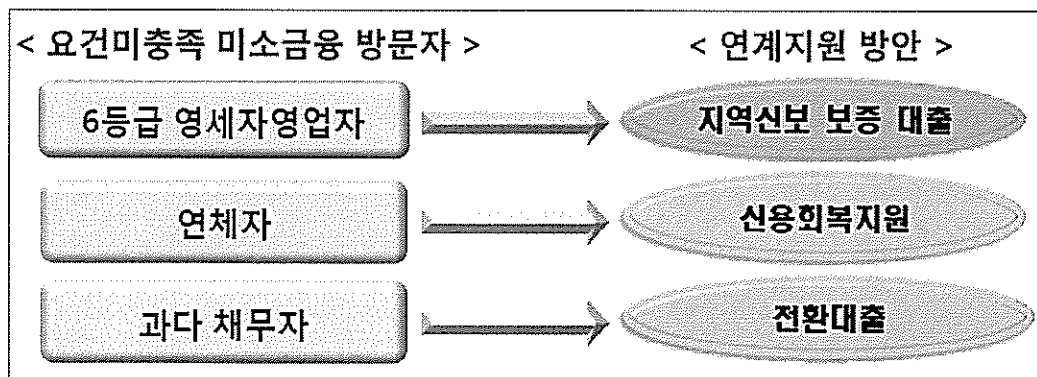
(58.2%)이 미소금융의 대출요건을 미충족 (신용등급 우수 32%, 부채 과다 16% 등)

⇒ 지역신용보증재단, 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 직원(지점당 1인 파견)이 미소금융창구에서 대면상담 및 현장 신청 접수

- 향후 미소금융 지점 증가시에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순환근무하는 방안도 검토

## ② 지방지점 확대, 홍보활동 등을 통한 미소금융 접근성 제고

- 지방소재 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상반기중 지방에 20개 이상 지점을 추가 신설(총 50개 이상)



\* '10.3월까지 총 34개 지점 설립(수도권 16개, 지방 18개)

- 다양한 서민금융지원제도를 리플렛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서민들이 개별상황에 적합한 지원제도를 활용토록 유도

\* 서민층이 왕래하는 지자체·고용지원센터 등에 리플렛 중점 배포

### ③ 미소금융 지점 사무실 지원

- 서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공공기관 내에 미소금융 지점 설치를 지원하여 사무실 운영비용 절감 추진(지자체 협조)

\* 현재 전국 34개 지점 중 11개 지점에 대해 지자체가 지원

### ④ 미소금융 관련 컨설팅 능력 제고

- 미소금융중앙재단에 「부설 교육센터」 설치하여 전문인력 양성 추진
- (가칭) '미소희망봉사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재능의 기부'를 유도하고 미소금융의 컨설팅 능력 제고

\* 전국적으로 법률·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 퇴직인력 약 1천명을 모집하여 미소금융 수혜자에게 경영 노하우 등 지원

## 5 신용정보관리시스템 개선

### ① 저축은행의 개인신용평가 역량 제고

- 상환위험이 큰 저신용층의 대출을 위해서는 정확한 신용평가가 필수적이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저축은행은 총 104개 중 23개 (22.1%)에 불과

⇒ 저축은행 중앙회를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신용정보를 집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회가 운영하는 「표준신용평가시스템」을 확충

- 개별 저축은행은 「표준신용평가시스템」을 공동 활용하거나 개별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 '10.6월까지 29개사가 추가로 자체적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계획

### ② 대부업체간 신용정보 공유 확대

- 대부업체는 2개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의 그룹내에서만 여신정보(대출잔액, 연체액)를 폐쇄적으로 공유하고 있어

- 대출 신청자의 정확한 신용상태 파악이 어려워 리스크관리 비용이 증가

⇒ 대부업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개인신용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 대부업체의 서민대출 금리를 낮추는 계기로 활용

- 중장기적으로 대형 대부업체의 대출관련 정보를 제도권 금융회사와 공유하는 방안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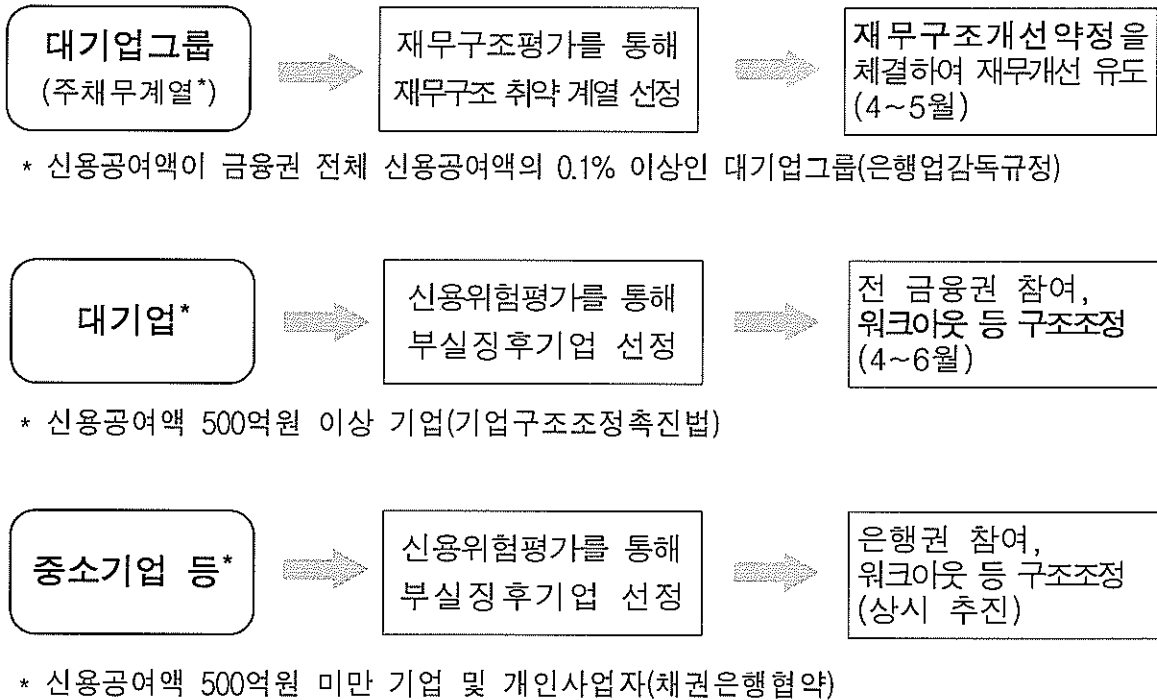


## 8.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기업구조조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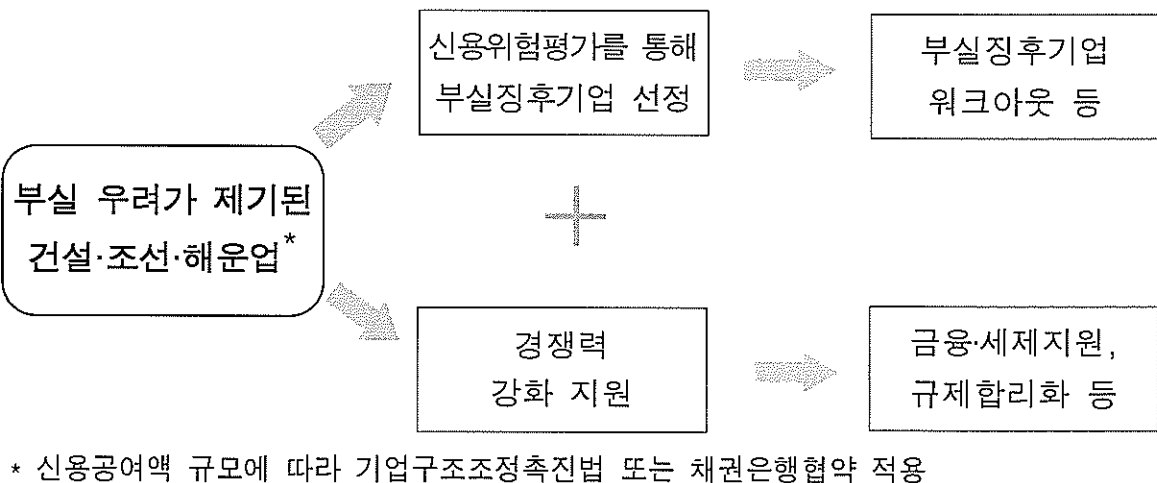
### 1. 추진 배경

- '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기업 실적도 악화되는 등 우리 경제도 어려움에 직면
  - 일부 경기민감 업종(건설·조선·해운업)에 대한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신용경색이 심화
- 이에 따라,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금융시장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에 선제적으로 착수
  - '08.11월말 금융위·금감원 합동으로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을 설치하는 등 구조조정 추진체계를 정비
  - 채권금융회사 중심의 구조조정 원칙을 견지하되, 정부는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
- '09년초부터 건설·조선·해운업 등 부실화 우려가 제기된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우선 추진하였으며,
  - 대기업그룹·개별대기업·중소기업 등 기업규모별 구조조정도 순차적으로 진행

기업 규모별 구조조정



업종별 구조조정



※ 건설·중소조선·해운업 신용위험평가 대상

- ① 건설업 : 시공능력 300위 이내, 주채권은행 신용공여 50억원 이상 업체
- ② 중소조선업 : 주채권은행 신용공여 50억원 이상인 조선업체중 워크아웃, Fast Track, 자율협약 등 구조조정 추진 업체 제외
- ③ 해운업 : 국토부 해운업 등록업체중 주채권은행 신용공여 50억원 이상 업체

## 2. 추진 현황

### 가. 대기업그룹(주채무계열)

- '09년중 45개 대기업그룹에 대한 재무구조평가를 실시한 결과, 재무상황이 악화된 9개 그룹과 약정체결('09.5월)
  - 주채권은행은 약정체결 그룹에 대한 자구계획 이행상황 등을 지속 점검하여 약정체결그룹의 재무건전성 강화
- 금년에도 41개 대기업그룹에 대한 재무구조평가 실시결과, 재무상황이 악화된 9개 그룹을 약정 체결(또는 유지) 대상으로 선정(5월)
  - 약정 체결 그룹에 대해서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계열사 정리, 자산매각 등 자구노력을 적극 독려

구 분	'09년	'10년
대상 그룹	45	41
약정체결	9	9
비중(%)	20	21.9

### 나. 업종별 구조조정

- '09년에는 건설·조선·해운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46개사\*(C 32, D 14)를 대상으로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추진
  - \* 건설 29(C 24, D 5), 조선 7(C 5, D 2), 해운 10(C 3, D 7)
- 금년에도 181개 건설·조선·해운사를 대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4~6월)하여, 20개사(C 11, D 9)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
  - 워크아웃 추진업체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 계획을 확정하는 등 차질없이 구조조정 추진중

연도	건 설		조 선		해 운		워크아웃 추진실적			합계	
	평가결과		평가결과		평가결과						
	C	D	C	D	C	D	졸업	진행	중단	C	D
'09년	24	5	5	2	3	7	7	15	10	32	14
'10년	9	7	1	2	1	-	1	9	1	11	9
합계	33	12	6	4	4	7	8	24	11	43	23

#### 다. 개별대기업(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 '09년 433개 개별대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33개사(C 22, D 11)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09.6월)

○ 워크아웃을 추진중인 업체(12개사)는 모두 경영정상화 계획을 확정하는 등 구조조정을 정상 추진중

□ 금년 신용위험평가결과, 최근 경기회복 추세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 대상기업 45개사(C27, D18)로 지난해(33개사)에 비해 증가

○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 원가상승 요인 등으로 건설 시행사 및 기계·금속업체 등이 다소 늘어난 것에 기인

\* 건설 시행사(개사) : ('09) 8 → ('10) 17

기계·금속업체(개사) : ('09) 8 → ('10) 15

○ 금년도 신규 C등급 업체(27개사)도 채권단 협의, 외부기관 실사 등 경영정상화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착실히 진행중

연도	C등급				D등급	합계
	워크아웃 졸업	진행중	중단 등	소계		
'09년	5	10	7	22	11	33
'10년	-	22	5	27	18	45
합계	5	32	12	49	29	78

**라. 중소기업(신용공여 500억원 미만)**

□ '09.7월~12월 동안 여신규모 등에 따라 3차례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512개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

\* 1차: 113(C 77, D 36) / 2차: 174(C 108, D 66) / 3차: 225(C 106, D 119)

○ C등급 업체(291개)중 140개사가 워크아웃을 추진중이며, 29개사는 채권단과 워크아웃 개시 협의중

\* 나머지 122개사는 경영정상화, 회생절차 신청 등으로 워크아웃 조기 종료

□ 금년에도 채권은행은 부실화 우려가 제기된 1,286개 중소기업을 신용위험평가 대상으로 선정(7월말)

○ 8월부터 경영자의 경영능력 및 신용도, 추가 담보 여력 등 다양한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한 세부평가 실시중

○ 이러한 옥석가리기 과정에서 정상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기 대출·자금사정도 지속 점검

-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 협력업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Fast Track 연장(6개월)

C등급					D등급	합계
워크아웃 졸업	워크아웃 중단	워크아웃 진행중	기타*	소계		
56	95	134	6	291	221	512

## 9. 2008.3. ~ 2010.8월말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 □ 민원접수 현황

○ '08.3.~'10.8월까지 접수된 민원 건수는 총 10,515건임

(단위 : 건)

기 간	진정·건의	법령질의	일반질의 및 기타	소 계
2008년 ( '08.3. ~ '08.12.)	1,630	132	911	2,673
2009년 ( '09.1. ~ '09.12.)	3,156	186	730	4,072
2010년 ( '10.1 ~ '10.8.)	2,925	234	611	3,770
합 계	7,711	552	2,252	10,515

## □ 민원처리 결과

○ 상기 민원 중 처리 완료된 민원은 10,497건, 처리중인 민원은 18건임

(단위 : 건)

민원 유형	기 간	처리 완료				처리중	소 계
			회신 완료	민원취하/ 착수전해결	민원인· 민원요지 불명		
진정· 건의	2008년 (‘08.3.~12.)	1,630	1,507	99	24	-	1,630
	2009년 (‘09.1.~12.)	3,156	2,845	275	36	-	3,156
	2010년 (‘10.1.~8.)	2,924	2,759	133	32	1	2,925
	소 계	7,710	7,111	507	92	1	7,711
법령 질의	2008년 (‘08.3.~12.)	132	119	12	1	-	132
	2009년 (‘09.1.~12.)	186	178	5	3	-	186
	2010년 (‘10.1.~8.)	217	196	20	1	17	234
	소 계	535	493	37	5	17	552
일반 질의 및 기타	2008년 (‘08.3.~12.)	911	833	52	26	-	911
	2009년 (‘09.1.~12.)	730	684	43	3	-	730
	2010년 (‘10.1.~8.)	611	579	28	4	-	611
	소 계	2,252	2,096	123	33	-	2,252
합 계		10,497	9,700	667	130	18	10,515

#### 10. 2006년~2010. 8월말 보안사건 관련

- 1) 연도별, 유형별, 건별 발생 사유, 피해액, 재발방지 대응 방법 등
- 2) 보안 담당 조직 및 인력, 예산 운용 현황

- ☐ 동 기간 보안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2009년도에 발생한 디도스(DDos)공격시 금융위는 DDOS공격을 받지 않아 피해가 없었음
- ☐ 또한, 보안담당조직 및 인력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2명(5급1명, 6급1명)이 자체 정보화업무와 병행하여 담당하고 있으며
  - 2010년도 정보통신 보안 관련 예산은 정보화예산 5.7억원중 39%인 2.2억원을 편성하여 개인정보유출 차단 시스템, 인증S/W 도입 등을 추진중에 있음



## 11. 신규직원 채용 현황

### □. 신규직원 채용 현황

연도	공채	별정직	계약직	특채
2008년	5급 4명 7급 1명	고위공무원(상임위원) 2명 전산처리요원(9급상당) 1명	5호 2명	해당사항 없음*
2009년	5급 4명 7급 3명	고위공무원(상임위원) 3명	5호 6명 6호 1명	
2010년 현재	7급 4명	고위공무원(상임위원) 1명	5호 1명	

\* 지방직 공무원과의 인사교류를 위한 특채(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 특채) 및 1급 공무원 임용을 위한 특채(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5호 특채)를 제외한 신규 특채는 없음

# 정 옥 임 의 원

# 1. 2008년도 이후 현재까지 연구용역 리스트

## 2. 2008년도 이후 현재까지 연구용역 보고서 일체

### □ 2008년도 이후 현재까지 연구용역 리스트

(단위 : 백만원)

연도	발주과제명	용역기간	용역비	수주기관	비고
08년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연구용역	08.7.4~ 08.10.3	30	한국금융연구원	
08년	외환시장 발전방향	08.7.11~ 08.8.29	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08년	미국 FinCEN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 실태 연구	08.7.22~ 08.12.21	40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08년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08.7.28~ 08.10.26	30	한국금융연구원	
08년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08.7.28~ 08.11.20	22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08년	FTA, DDA 등 금융서비스분야 국제협상 법률적 검토 연구용역	08.8.1~ 08.12.24	40	법무법인(유) 태평양	
08년	서브프라임사태이후 금융시장 조기경보 시스템 개선 연구용역	08.8.6~ 08.11.04	46	(사)국제금융센터	
08년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수준 제고를 위한 감독검사 효율화 방안	08.8.13~ 08.12.12	37	언스트앤영 어드바이저리(주)	
08년	단기금융시장 제도 개편에 따른 시장 영향 분석	08.8.18~ 08.10.17	20	한국금융연구원	
08년	홈페이지 개편	08.10.31~ 08.12.20	30	(주)사이버이미제네이션	
08년	비명시적규제 개혁 외부평가	08.11.27~ 08.12.26	25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08년	금융중심지 선정에 관한 금융전문가 의견조사	08.12.12~ 08.12.29	19	한국개발연구원	
09년	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방안	09.3.16~ 09.12.16	45	한국금융연구원	
09년	금융상품판매업법 제정을 위한 연구	09.4.13~ 09.8.14	30	자본시장연구원	

연도	발주과제명	용역기간	용역비	수주기관	비고
09년	자본시장 등 금융부문별 노동력 특성 분석 및 수급 전망	09.4.21~ 09.8.28	30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09년	수도권 광역금융벨트 조성 방안	09.5.13~ 09.11.30	30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09년	위탁보증 제도 개선방안 연구	09.5.28~ 09.11.11	28.8	한국금융연구원	
09년	국내 자본시장-외환시장 연계성 증가의 파급효과 분석	09.6.1~ 09.8.31	20.5	자본시장연구원	
09년	금융위기 이후(Post-Crisis) 대비 금융 감독체제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09.6.10~ 09.8.15	40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09년	금융위기의 원인분석 및 시사점분석	09.7.9~ 09.11.30	35	한국금융연구원	
09년	금융투자산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09.8.5~ 09.12.2	32	자본시장연구원	
09년	테러자금조달 방지 체제의 선진화·국제화 방안 연구	09.8.28~ 09.12.28	35	아주대 산학협력단	
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09.9.16~ 09.11.16	20	자본시장연구원	
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09.9.18~ 09.12.17	20	보험연구원	
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금수취 비은행 금융 회사 발전방안 등에 관한 연구	09.9.30~ 09.12.5	20	한국금융연구원	
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국내 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09.10.7~ 09.12.6	30	한국금융연구원	
09년	금융정보생산의 시스템 리스크 완화 방안 연구	09.10.8~ 09.12.23	20	한국금융학회	
09년	주요국에서의 금융변혁기에 대응한 금융정책사례 연구	09.10.15~ 09.12.17	40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09년	마이크로크레딧의 현황 및 정책적 과제	09.11.11~ 09.12.10	23	한국채권연구원	
10년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도입 방안	10.3.15~	30	서울대 산학협력단	
10년	지역금융활성화 방안 연구	10.3.26~	30	한국개발연구원	

연도	발주과제명	용역기간	용역비	수주기관	비 고
10년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자본시장 활용방안	10.4.9~	30	자본시장연구원	
10년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연구	10.4.13~	45.5	한국개발연구원	
10년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10.4.19~	40	한국개발연구원	
10년	우리나라 비금융전문직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이행방안	10.4.20~	30	한국금융연구원	
10년	국내외 조기경보 활동 동향 점검 및 금융 시장 조기 경보모형 개선	10.5.1~	20	한국금융연구원	
10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방안 검토	10.5.28~ 7.31	30	법무법인 율촌	
10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 연구	10.6.9~	30	한국금융연구원	
10년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검토	10.8.30~	30	한국금융연구원	
10년	금융전문인력 현황조사 및 수급전망	10.9.1~	50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 2008년도 이후 현재까지 연구용역 보고서 일체 : 별도제출

### 3. 2007년 이후 현재까지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안건 목록

☐ 붙임1 2007년 이후 현재까지 금융위원회 회의안건 목록

☐ 붙임2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안건 목록

## 2007년 금감위 상정 안건목록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7년	1월19일	제1차	의결 안건	1	(전남)대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
				2	(전북)현대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 종료안
				3	(충북)청주용암신용협동조합과 (충북)청남신용협동조합 합병 인가안
				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중 개정규정 승인안
				5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중 개정규정 승인안
				6	증권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및 규정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7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선물시장업무규정 중 개정규정 승인안
				8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선물시장수탁계약준칙 중 개정규정 승인안
				9	흥국생명화재해상보험(주)의 자산운용업 겸영허가안
			보고 안건	1	금융기관 검사결과 보고
				2	2006년 하반기 간접투자자산운용부문 금융감독위원회 위탁업무 처리 결과 보고
				3	2006년 하반기 신용협동조합 경영관리 관련 금융감독위원회 권한위탁 업무 처리결과 보고
				4	위탁업무처리결과 보고
2007년	2월2일	제2차	의결 안건	10	대우증권(주)의 (가칭)르네상스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승인안
				11	(주)온니테크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2	보험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13	에이스아메리카화재해상보험(주)한국지점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
				14	교보증권(주)의 신탁업 영위 예비인가안
				15	대한투자증권(주)의 신탁업 영위 예비인가안
				16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경영개선계획 승인안
				17	(충북)하나로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18	비씨카드(주)의 대출업무비중 감축계획 변경 승인안
			보고 안건	5	금융기관 검사결과 보고
				6	06.12월말 현재 시행중인 행정지도에 대한 사후관리 현황 보고
				7	2006년 하반기중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이전신고 처리현황 보고
				8	2006년도 4/4분기중 금융거래약관 등의 처리결과 보고

				9	2006년도 하반기 보험부문 금융감독위원회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10	2007년도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사항 보고
				11	2007년도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 권한위임사항 처리결과 보고
2007년	2월23일	제3차	의결 안건	19	(경기)좋은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등 조치안
				20	퇴직연금감독규정 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21	(주)신한금융지주회사의 엘지카드(주) 자회사편입 승인안
				22	극동유화(주)에 대한 그린화재해상보험(주) 지배주주 승인안
				23	동양종합금융증권(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보고 및 조치안
				24	박스인터랙티브(주) 감리 관련 회사의 이익신청에 대한 결정안
				25	박스인터랙티브(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안
				26	(주)코스모씨앤티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보고 안건	12	금융기관 검사결과 보고
				13	(주)한국의환은행 등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결과 보고
				14	2006년중 일반은행의 금융채 발행현황 보고
				15	'06.4/4분기 종합금융회사 등 관련 금감위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16	2007년도 제3차 증권선물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 권한 위임 사항 처리결과 보고
				17	금융감독원 보고서 관리실태에 대한 일반감사 결과보고
				18	2006년도 금융감독원 감사결과 종합보고
			의결 안건	27	(전남)홍익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
				28	(경기)에아름상호저축은행 영업인가안
				29	(경기)좋은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결정 및 영업인가 취소등 조치안
				30	키이웍먼트파이낸스코리아(주)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
				31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32	교보증권(주)의 신탁업 영위 인가안
				33	대한투자증권(주)의 신탁업 영위 인가안
				34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35	굿앤리치자산운용(주)의 지배주주 변경승인안
				36	케이비생명보험(주)의 자산운용업 경영허가안



2007년	3월16일	제4차		37	대한화재해상보험(주)의 자산운용업 경영허가안
				38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안
				39	국민해상화재손해사정(주) 및 손해사정사 윤제철에 대한 등록취소 조치안
				40	완산보험대리점(주)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
				41	케이에스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
				42	(주)엔토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
			보고 안건	19	금융기관 검사결과 보고
				20	2006년도 하반기 중 금융회사의 업무위·수탁 현황보고
				21	2007년도 제4차 증권선물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 권한위임사항 처리결과 보고
				22	2007년도 제4차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사항 보고
				23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대책 시행 보고
2007년	3월23일	제1차 임시 금감위	의결 안건	43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임명(안)
2007년	3월30일	제5차	의결 안건	44	교보증권(주)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경영인가안
				45	맥쿼리증권(주)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경영인가안
				46	메리츠증권(주)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경영인가안
				47	한국투자증권(주) 상계동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보고 및 조치안
				48	서울증권(주) 본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보고 및 조치안
				49	굿모닝신한증권(주) 본점에 대한 부문 및 종합검사 결과보고 및 조치안
				50	(가칭)사단법인 PEF애니저협회 설립 불허가안
				51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보고 및 조치안
				52	한국사무수탁(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보고 및 조치안
				53	엘아이저생명보험(주)에 대한 자본감소 인가안
				54	동부화재해상보험(주)의 중국 상해안국보험경기유한공사에 대한 자회사 소유승인안
				55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인가안
				56	알리안츠생명보험(주)에 대한 파징금,파태료 부과 및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파태료 부과 조치안
				57	보험대리점 '삼성'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안
				58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59	금융결제원의 전자채권관리기관 등록안

			보고 안건	24	금융기관 검사결과 보고
				25	증권회사 리스크관리 최소기준 보고
				26	2007년도 제5차 증권선물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 권한 위임사항 처리
2007년	4월13일	제6차	의결 안건	60	금융감독원 결산심의 소위원회 구성·운영안
				61	월성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
				62	㈜굿모닝인스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
				63	우리, 하나, 신한은행 현지법인 영위업무의 자회사업종 인정안
				64	국내은행 해외점포 신설 사전 협의안
				65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66	(대전)대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67	미래에셋증권(주) 정자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68	유비에스증권리미티드 서울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69	노무라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70	홍콩상하이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71	교보증권(주) 둔산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보고 안건	27	금융기관 검사결과 보고
				72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중 개정규정 승인안
				73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중 개정규정 승인안
				7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중 개정규정 승인안
				75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중 개정규정 승인안
				76	한국증권업협회의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안 및 집중관리·활용대상 정보 승인안
				77	은행업인가지침 중 개정지침안 및 은행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78	신탁업인가지침 중 개정지침안 및 신탁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79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무인가지침 중 개정지침안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80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81	종합금융회사및자금융개회사인가지침 중 개정지침안 및 종합금융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8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83	여신전문금융업인가지침 중 개정지침안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2007년	4월27일	제7차	의결 안건	84	보험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85	선물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86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87	증권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및 규정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88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89	아이투자신탁운용(주)의 허가조건 변경 승인안
				90	(가칭)마이어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91	에스투자자문(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보고 및 조치안
				92	임플로이어스 리인슈어런스 코포레이션 한국지점의 보험계약 이전 인가안
				93	(부산)흥국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94	(부산)플러스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95	(충북)하나로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96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종합 및 부문검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97	(주)우리기술 등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치안
			보고 안건	28	금융기관 검사결과 보고
				29	2007년도 1/4분기중 금융거래약관 등의 처리결과 보고
				30	외환건전성 기준 위반에 대한 제제현황 보고
				31	2007년도 제7차 증권선물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 권한위임사항 처리결과 보고
				32	2007년도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 권한 위임사항 처리결과 보고
				98	2006회계연도 금융감독원 결산승인안
				99	(주)유성금속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00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중 개정규정안 및 동 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101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중 개정규정 승인안
				102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중 개정규정 승인안
				103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중 개정규정 승인안
				104	(가칭)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105	로알 앤드 선 얼라이언스 인슈어런스 피엘씨 한국지점의 보험계약 이전 인가안
				106	악사 에스에이에 대한 교보자동차보험(주) 지배주주 승인안

2007년	5월11일	제8차	의결 안건	107	서울보증보험(주)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
				108	고려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09	글로벌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10	나라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11	대한손해보험협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12	미래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13	새한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14	서울신용평가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15	세일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16	솔로몬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117	신한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18	아시아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19	에스지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20	중앙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21	케이에프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122	한국기업평가(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23	한국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24	한국신용평가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25	한국티디비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26	한성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보고 안건	33	금융기관 검사결과 보고
				34	'07. 1/4분기 종합금융회사 등 관련 금감위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2007년	5월25일	제9차	의결 안건	127	(경북)경북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 금융기관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
				128	(전남)대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결정 및 영업인가 취소 등 조치안
				129	(주)큐엔텍코리아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30	(주)바텍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31	(주)웹투폰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5	금융기관 검사결과 보고

			보고 안건	36	(경기)좋은상호저축은행 계약이전 결과 보고
				37	2007년도 제9차 증권선물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 권한위임사항 처리결과 보고
2007년	6월8일	제10차	의결 안건	132	전자금융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133	(충남)대성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안
				134	서울외국환증개(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135	대한투자증권(주) 본점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보고 및 조치안
				136	교보증권(주) 부평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보고 및 조치안
				137	대신증권(주) 사하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보고 및 조치안
				138	한양증권(주) 부산금융센터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보고 및 조치안
				139	대우증권(주) 김해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보고 및 조치안
			보고 안건	38	금융기관 검사결과 보고
2007년	6월22일	제11차	의결 안건	140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중 개정규정안
				141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안
				142	에스와이(주)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43	(주)골든프레임네트웍스 등 7사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44	증권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및 동 규정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145	선물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및 동 규정 시행 세칙중 개정세칙 승인안
				146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중 개정규정안
				147	보험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148	은행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149	(주)기보캐피탈의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 승인안
				150	(충북)중부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보고 및 조치안
				151	(전남)대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보고 안건	39	금융기관 검사결과 보고
				40	2007년도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 권한위임사항 처리결과 보고
2007년	6월29일	제2차 임시 금감위	의결 안건	152	금융감독원 감사 임명제청(안)
				153	(가칭)원방부동산신탁(주)의 신탁업 영위 예비인가안
				154	(가칭)코리아에셋부동산신탁(주)의 신탁업 영위 예비인가안

2007년	7월6일	제12차	의결 안건	155	(가칭)롯데마트신용협동조합 설립 인가안
				156	(부산)광안신용협동조합과 (부산)수영신용협동조합 합병 인가안
				157	(전남)대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등 조치안
				158	(강원)도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159	(서울)삼화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160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중 개정규정 승인안
				161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중 개정규정 승인안
				162	(가칭)현대해상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163	녹십자생명보험(주)의 자산운용업 경영허가안
				164	대한투자신탁운용(주)의 지배주주 변경 승인안
				165	케이비자산운용(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보고 및 조치안
				166	엑츠투자자문(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보고 및 조치안
			보고 안건	41	금융기관 검사결과 보고
				42	(전남)대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과 보고
				43	위탁업무처리결과(기업회계기준서 등 개정) 보고
				167	(주)하나금융지주의 하나생명보험(주) 지배주주 승인안
				168	(주)하나금융지주의 하나생명보험(주) 자회사편입 승인안
				169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170	행정지도 운영규칙 제정안
				171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 제정안
				172	하나, 신한은행 현지법인 영위업무의 자회사업종 인정안
				173	국내은행 해외점포 신설 사전 협의안
				174	미래에셋생명보험(주)의 신탁업 영위 예비인가안
				175	미래에셋생명보험(주)에 대한 신탁업 경영 예비인가안
				176	은행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177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178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및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179	보험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2007년	7월20일	제13차	의결 안건	180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181	엘지카드㈜와 신한카드㈜의 영업양수도 예비인가안
				182	(전남)홍익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결정 및 영업인가 취소 등 조 치안
				183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중 개정규정 승인안
				18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중 개정규정 승인안
				185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중 개정규정 승인안
				186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중 개정규정 승인안
				187	키움증권㈜의 한국아이티벤처투자㈜에 대한 출자 승인안
				188	씨제이투자증권(주) 남천지점 및 중앙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189	신흥증권(주) 영업부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보고 및 조치안
				190	대신증권(주) 선릉역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보고 및 조치안
				191	대신증권(주) 시흥동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보고 및 조치안
				192	하나대투증권(주) 강남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보고 및 조치안
				193	교보증권(주) 일산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보고 및 조치안
				194	하나대투증권(주) [舊 하나증권] 동래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195	랜드마크자산운용(주)의 지배주주 변경 승인안
				196	(가칭)마이어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197	피씨에이투자신탁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보고 및 조치안
				198	한화투자신탁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보고 및 조치안
			보고 안건	44	(경기)분당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 결과보고
				45	금융기관 검사결과 보고
				46	2007년 상반기중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이전신고 처리 현황 보고
				47	2007년도 2/4분기중 금융거래약관 등의 처리결과보고
				48	2007년도 상반기 보험부문 금융감독위원회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49	2007년 상반기 간접투자자산운용부문 금융감독위원회 위탁업무 처리 결과 보고
				50	외국환 포지션 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현황 보고
				51	2007년도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 권한위임사항 처 리결과 보고
				52	금융감독원 증권감독국에 대한 일반감사 결과보고

				53	2007년도 2/4분기중 전자금융업 등록 처리 결과 보고
2007년	8월24일	제14차	의결 안건	199	금융감독원 부원장 및 부원장보 임명(안)
				200	금융감독원조직기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1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02	한성신용정보(주)의 신용정보업 허가취소안
				203	우리은행의 (주)코람코자산신탁 출자 등에 대한 사후승인안
				204	(가칭)아시아자산신탁(주)의 신탁업 영위 인가안
				205	NH투자증권(주)의 신탁업 영위 예비인가안
				206	한화증권(주)의 신탁업 영위 예비인가안
				207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08	신탁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09	(주)다올부동산자산운용의 허가조건 변경 승인안
				210	마이여자산운용(주)의 허가조건 변경 승인안
				211	산은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보고 및 조치안
				212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보고 및 조치안
				213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보고 및 조치안
				214	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보고 및 조치안
				215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보고 및 조치안
				216	신한은행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보고 및 조치안
				217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보고 및 조치안
				218	국민은행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보고 및 조치안
				219	광주은행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보고 및 조치안
				220	전북은행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보고 및 조치안
				22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222	교보생명보험(주)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안
				223	국민은행 보험대리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
				224	뉴욕생명보험(주) 부문검사 결과 과태료 부과 조치안
				225	보험대리점 '고객', '동그라미' 및 '대한만촌'에 대한 등록취소 조치안



				226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 승인안
				227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자금차입한도 연장 및 증액 승인안
				228	(대구)삼화두리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229	㈜대유베스퍼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0	고목민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1	㈜나노엔텍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2	마틴미디어(주)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3	㈜넥사이언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4	㈜제이엠피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5	㈜모델라인이엔티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6	㈜레드캡투어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7	㈜모라리소스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8	㈜모티스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보고 안건	54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보에 따른 금감원 예결산 투명성 강화방안
				55	금융기관 검사결과 보고
				56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및 (주)한국씨티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결과 보고
				57	'07. 2/4분기 종합금융회사 등 관련 금감위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58	'07. 상반기 신용협동조합 경영관리 관련 금융감독위원회 권한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59	2007년도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 권한위임사항 처리결과 보고
			2007년	9월7일	제15차
239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40	보험조사협의회 위원 임명 및 위촉안				
241	동양생명보험(주)의 동양투자신탁운용(주)에 대한 자회사 소유승인안				
242	동부증권(주)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겸영인가안				
243	서울증권(주)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겸영인가안				
244	맥쿼리아이엠엠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보고 및 조치안				
245	주)한국씨티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보고 및 조치안				
246	맥쿼리아이엠엠자산운용(주)의 지배주주 변경 승인안				

2007년	9월21일	제16차		247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248	(전북)호남솔로몬상호저축은행 자본금 감소 인가안
				249	(대전)대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안
				250	(전남)홍익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등 조치안
				251	(주)솔트웍스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보고 안건	60	금융기관 검사결과 보고
				61	2007년 상반기중 일반은행의 금융채 발행현황 보고
				62	2007년도 제14차 증권선물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 권한위임사항 처리결과 보고
			의결 안건	252	(부산)파랑새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
				253	(서울)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254	(경기)분당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255	(전북)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256	(서울)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경기)한진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257	(서울)한국상호저축은행, (서울)진흥상호저축은행 및 (경기)경기상호저축은행의 SLS캐피탈(주) 출자 승인안
				258	엘지카드(주)와 신한카드(주)의 영업양수도 인가안
				259	케이티비네트워크(주)의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 승인안
				260	금융감독원의 조직진단 실시를 위한 소요예산 승인안
				261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안
				262	미래에셋생명보험(주)의 신탁업 영위 인가안
				263	미래에셋생명보험(주)에 대한 신탁업 겸영 인가안
				264	젠위스 모기지 인슈어런스 코퍼레이션 한국지점 보험업 예비허가안
				265	한국신용정보(주)의 신용평가업 분할 인가안
				266	(가칭)한신정평가(주)의 신용평가업 허가안
				267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보고 및 조치안
				268	굿모닝신한증권(주) 시가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보고 및 조치안
				269	교보증권(주) 청주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보고 및 조치안
				270	하나대투증권(주) 둔산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보고 및 조치안
				271	엔에이치투자증권(주) 대전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보고 및 조치안

2007년	10월12일	제17차		272	대우증권(주) 목포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보고 및 조치안
				273	랜드마크자산운용(주)과 아이엔지자산운용(주)의 합병인가안
				27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275	(주)헬리아텍 등 2개사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76	유씨아이콜스(주)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보고 안건	63	2007회계연도 상반기 결산결과 보고
				64	금융기관 검사결과 보고
				65	2007년도 상반기 중 금융회사의 업무위수탁 현황보고
				66	금융감독원 총무국 등 3개부서에 대한 일반감사 결과보고
				67	2007년도 제15차 증권선물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 권한위임사항 처리결과 보고
			의결 안건	277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안
				278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 승인안
				279	(서울)한국상호저축은행의 (부산)부민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280	(광주)방림신용협동조합과 (광주)무등신협협동조합의 합병 인가안
				281	(대구)옥산침산천주교회신용협동조합과 (대구)노원천주교회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안
				282	(경북)경북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283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 승인안
				284	(주)보고티와이엘투자목적회사의 동양생명보험(주) 지배주주 승인안
				285	중앙특수법인 보험대리점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 조치안
				286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287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288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289	한국증권선물거래소 회원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290	마이애셋자산운용(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보고 및 조치안
				291	삼성투자신탁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보고 및 조치안
				292	보아스투자자문(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보고 및 조치안
				293	엠비케이파트너스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보고 및 조치안
				68	금융기관 검사 및 직권재심 처리결과 보고

			보고 안전	69	(전남)흥익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과보고
				70	2007년도 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 권한 위임사항 처리결과 보고
2007년	11월9일	제18차	의결 안전	294	금융감독원 예산심의소위원회 구성·운영안
				295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 승인안
				296	NH투자증권(주)의 신탁업 영위 인가안
				297	한화증권(주)의 신탁업 영위 인가안
				298	(가칭)국제자산신탁(주)의 신탁업 영위 인가안
				299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300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01	신협중앙회의 수산발전기금 차입 승인안
				302	(충남)대성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조치 종료안
				303	미래에셋생명보험(주)의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에 대한 자회사 소유승 인안
				304	월페어투자자문(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보고 및 조치안
				305	튜브투자자문(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보고 및 조치안
				306	(주)마스타테크론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07	(주)디엠에스플렉스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08	(주)월덱스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보고 안전	71	금융기관 검사결과 보고
				72	2007년도 3/4분기중 금융거래약관 등의 처리결과보고
				73	(부산)파랑새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추진결과 보고
				74	2007년도 3/4분기중 전자금융업 등록 처리 결과 보고
				75	2007년도 제17차 증권선물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 권한위임사항 처 리결과 보고
			의결	309	에이아이지 유니티티드 개런티 인슈어런스 아시아 리미티드 한국지점 보험업 예비허가안
				310	삼성생명보험(주)의 신탁업 영위 및 경영 예비인가안
				311	교보생명보험(주)의 신탁업 영위 및 경영 예비인가안
				312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립은행 서울지점 신설 예비인가안
				313	한국씨티은행의 (가칭)씨티크레딧서비스(주) 주식소유 승인안
				314	SC제일은행의 (주)에이브레인 주식소유 승인안

2007년	11월23일	제19차	안건	315	(가칭)씨티크레딧서비스㈜의 신용정보업 영위 예비허가안
				316	(전북)고려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안
				317	(경북)경북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등 조치안
				318	(경기)좋은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보고 및 조치안
				319	블리스자산운용㈜의 지배주주 변경 승인안
				320	증권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및 증권업감독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 승인안
			보고 안건	76	금융기관 검사결과 보고
				77	'07. 3/4분기중 종합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감위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78	2007년도 제18차 증권선물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 권한위임사항(조사관련) 처리결과 보고
				79	2007년도 제18차 증권선물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 권한위임사항(회계관련) 처리결과 보고
				80	위탁업무처리결과(기업회계기준서 개정) 보고
2007년	12월9일	제20차	의결 안건	321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 승인안
				322	토스카펀드애셋매니지먼트엘엘피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323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2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25	서울증권㈜과 서울자산운용㈜의 (가칭)서울자산제2호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승인안
				326	(가칭)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 및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의 자회사 소유 승인안
				327	젠위스 모기지 인슈어런스 코포레이션 한국지점 보험업 허가안
				328	하노버재보험㈜ 한국지점의 보험업 예비허가안
				329	양산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330	T.F.P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331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안
				332	국내은행 해외지점 등 신설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자회사업증 인정안
				333	리먼브러더스뱅크하우스 서울지점 신설 예비인가안
				334	메릴린치 인터내셔널은행 서울지점 신설 예비인가안
				335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36	(전주)상진신용협동조합과 (전주)숲정이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안
				337	(광주)광주신우신용협동조합과 (광주)서광주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안

2007년	12월21일	제21차		338	(광주)남광주신용협동조합과 (광주)진월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안
				339	(광주)무등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340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및 등 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 승인안
				341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 일부개정안
				342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 일부개정안
			보고 안건	81	금융기관 검사결과 보고
				82	(충북)하나로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 결과보고
				83	(전북)현대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 결과보고
			의결 안건	343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 임명(안)
				344	(주)하나금융지주의 코먼웰스비즈니스은행 자회사편입 승인안
				345	(주)샤인시스템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46	(주)신지소프트의 증권거래법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47	회계감사기준 일부개정 승인안
				348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49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50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51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선물시장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52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선물시장수탁계약준칙 일부개정규정안
				353	한화증권(주)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경영인가안
				354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주)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경영인가안
				355	증권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및 증권업감독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 승인안
				356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57	SH자산운용(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보고 및 조치안
				358	패러곤투자자문(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보고 및 조치안
				359	케이에프신용정보(주)의 상호변경 허가안
				360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 승인안
				361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 승인안
				362	삼성생명보험(주)의 신탁업 영위 및 경영 인가안

				363	교보생명보험(주)의 신탁업 영위 및 경영 인가안
				364	(가칭)DKV 제3보험(주)의 보험업 예비허가안
				365	코리안리재보험(주)의 (가칭)코리안리투자자문(주)에 대한 자회사 소유승인안
				366	보험업감독규정 중 일부개정규정안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일부개정세칙 승인안
				367	동부생명보험(주) 부문검사 결과 파태료 부과 조치안
				368	(경북)에한울상호저축은행 영업인가안
				369	(경북)경북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결정 및 영업인가 취소 등 조치안
			보고 안건	84	금융기관 검사결과 보고
				85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및 (주)한국씨티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결과 보고
				86	위탁업무처리결과 보고('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정)
				87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 보고
				88	2007년도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 권한위임사항(조사관련) 처리결과 보고
				89	2007년도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 권한위임사항(회계관련) 처리결과 보고
				90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등에 대한 일반감사 결과보고
2007년	12월27일	제3차 임시 금감위	의결 안건	370	금융감독원 2008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승인안
				371	금융감독원보수기준 중 개정기준안

## 2008년 금감위 상정 안건목록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8년	1월18일	제1차	의결 안건	1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 승인안
				2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	HSBC 인슈어런스 (아시아-퍼시픽) 홀딩스 리미티드의 하나생명보험 (주) 지배주주 승인안
				4	유화증권(주) 본점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보고 및 조치안
				5	우리투자증권(주) 서산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보고 및 조치안
				6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 승인안
				7	(충남)대성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및 부문검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8	(대전)대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보고 안건	1	금융기관 검사결과 보고
				2	(전북)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 결과보고
				3	2007년 하반기중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이전신고 처리상황 보고
				4	2007년도 4/4분기중 금융거래약관 등의 처리결과 보고
				5	2007년 하반기 간접투자자산운용부문 금융감독위원회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9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일부 개정세칙 승인안
				10	교보생명보험(주)의 교보투신운용(주)에 대한 자회사 소유 승인안
				11	은행의 국외지점 등 신설에 대한 사전협의안
				12	고려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3	기은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4	미래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5	새한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16	서울신용평가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7	세일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8	솔로몬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연도	월일	회차	안전 유형	번호	제 목
2008년	2월1일	제2차	의결 안전	19	에스지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0	우리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1	중앙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2	진흥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3	한국기업데이터(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4	한국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5	한국신용평가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6	국민은행의 한누리투자증권(주) 주식소유 및 지배주주변경 승인안
				27	홍콩상하이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주식선물업 경영허가안
				28	(주)솔로몬상호저축은행, (주)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 (주)호남솔로몬상호저축은행 및 (주)경기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솔로몬사모투자전문회사 출
				29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 승인안
			보고 안전	6	금융기관 검사결과 보고
				7	2008년도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 권한위임사항(조사관련) 처리결과 보고
				8	2007년도 하반기 보험부문 금융감독위원회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9	07. 하반기 신용협동조합 경영관리 관련 금융감독위원회 권한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30	(경기)분당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
				31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32	스탠다드차타드 엔이에이 리미티드의 (경기)에아름상호저축은행 주식 취득 승인안
				3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 승인안
				34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 승인안 및 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 일부개정지
				35	종합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종합금융회사및자금중개회사인가지침 일부개정지침안 및 종합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
				36	증권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7	선물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8	(주)포넛의 한맥선물(주) 지배주주 변경승인 심사유예안
				39	유진투자증권(주)(舊 서울증권(주)) 동래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8년	2월21일	제3차	의결 안건	40	한화증권(주) 본점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41	대신증권(주) 대치동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42	에스케이증권(주) 테헤란로지점(구 삼성지점) 등 5개 지점에 대한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
				43	교보증권(주) 방배동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44	한국투자증권(주) 신림동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45	굿모닝 신한증권(주) 도곡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46	우리은행 본점 및 삼성센터지점 등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보고 및 조치 안
				47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 승인안
				48	아시아자산신탁(주)에 대한 인가조건 변경(안)
				49	국제자산신탁(주)에 대한 인가조건 변경(안)
				50	대한생명보험(주)의 신탁업 영위 및 경영 예비인가안
				51	흥국생명보험(주)의 신탁업 영위 및 경영 예비인가안
				52	(주)호텔롯데, 롯데역사(주), (주)대흥기획 및 (주)부산롯데호텔의 대한화재해 상보험(주) 대주주 승인안
				53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 세칙 승인안
				54	(가칭)메리츠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 및 메리츠화재해상보 험(주)의 자회사 소유 승인안
				55	(가칭)DH부동산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 및 대한토지신탁 (주)의 주식 소유 승인안
				56	(가칭)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57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일 부개정세칙 승인안
				58	보다투자자문(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보고 및 조치안
				59	케이원투자자문(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보고 및 조치안
				60	오크우드투자자문(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보고 및 조치안
			보고 안건	10	신협중앙회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실적 보고
				11	금융기관 검사결과 보고
				12	2007년도 행정지도 사후관리 현황 보고
				13	2007년중 일반은행의 금융채 발행현황 보고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14	2007년도 4/4분기중 전자금융업 등록 및 전자금융거래 약관 처리 결과 보고
				15	'07. 4/4분기중 종합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감위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 고
				16	2007년도 금융감독원 감사결과 종합보고
2008년	2월28일	제1차 서면 의결	의결 안건	61	금융감독원정관 일부개정정관 승인안

## 2008년 금융위 상정 안건목록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8년	3월21일	제1차 임시 회의	의결 안건	1	금융감독원 원장 임명 제청안
2008년	3월24일	제2차 임시 회의	의결 안건	2	(전북)현대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
2008년	3월28일	제1차	의결 안건	3	금융감독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증권선물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에르고 인터내셔널 아게의 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주) 대주주 승인안
				6	에이아이지 유나이티드 개런티 인슈어런스 아시아 리미티드 한국지점 보험업 허가안
				7	그린화재해상보험(주)의 (가칭)그린부산창업투자(주)에 대한 자회사 소유 승인안
				8	우리금융지주(주) 및 아비바 인터내셔널 홀딩스 리미티드의 LIG생명보험 (주) 대주주 승인안
				9	우리금융지주(주)의 LIG생명보험(주) 자회사편입 승인안
				10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금융감독위원 회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안 *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법 조문 정비
				11	2007회계연도 예금보험공사 결산승인안
				12	(가칭) 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13	(가칭) 엘라이언스벤처스타인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14	(가칭) 블랙록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15	오영수의 KIDB채권중개(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
				16	현대자동차(주) 등의 신흥증권(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
				17	밸류에프투유한회사의 리딩투자증권(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
				18	동양종합금융증권(주)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경영인가안
				19	SK증권(주)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경영인가안
				20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경영인가 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1	유비에스증권리미티드 서울지점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겸영인가안
				22	노무라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겸영인가안
				23	(서울)제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24	(부산)우리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25	(전남)홍익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26	(경북)참앤씨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27	국민신용정보㈜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8	(사)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보고 안건	1	위탁업무처리결과 보고(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 개정)
				2	금융기관 검사결과 보고
				3	2007년도 하반기 중 금융회사의 업무위·수탁 현황보고
				4	경북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과보고
2008년	4월11일	제2차	의결 안건	29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0	한국산업은행 임원선임안
				31	법인대리점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32	(주)러브벨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33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34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처리안
				35	(충남)대성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요구조치안
				36	휴먼에듀관리재단 정관 인가안
				37	(가칭)아이엠엠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38	(가칭)LS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39	(가칭)더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40	예금보험공사정관 일부개정정관 승인안
			보고 안건	5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6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결과 보고
				7	금융기관 검사결과 보고
				8	(주)삼성카드 및 (주)삼성증권의 (주)가치네트 주식 초과보유 사후승인 신청건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
				9	선물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8년	4월25일	제3차	의결 안건	41	대우캐피탈(주)의 (주)기보캐피탈 주식 취득 승인안
				42	(주)두산캐피탈의 비엔지증권중개(주) 주식 취득 승인안
				43	(전북)한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44	(부산)양풍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45	국내은행 해외지점 등 신설에 대한 사전협의 및 자회사업종 인정안
				46	금감원,주택금융공사 '07회계연도 결산심의소위원회구성(안)
				47	증권예탁결제원 정관 일부변경 승인안
				48	하나대투증권(주) 고정역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49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안
				50	예금보험공사 임원 연임임명(안)
				51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52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53	동부생명보험(주) 부문검사 결과 과태료 부과 조치안
				54	동양생명보험(주) 부문검사 결과 과태료 부과 조치안
				55	한국투자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8년	5월9일	제4차	의결 안건	56	동양종합금융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57	(가칭)SC제일투자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 및 SC제일은행의 (가칭)SC제일투자증권(주)에 대한 주식소유승인안
				58	(가칭)LIG투자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 및 LIG손해보험(주)의 (가칭)LIG투자증권(주)에 대한 자회사 소유승인안
				59	(가칭)스카이증권중개(주)의 증권업 예비허가 및 스카이투자자문(주)의 (가칭)스카이증권중개(주)에 대한 출자승인안
				60	(가칭)IBK투자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61	(가칭)KTB투자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62	(가칭)STX투자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63	(가칭)토러스투자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64	(가칭)한국씨티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65	(가칭)KTIC투자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66	(가칭)바로증권중개(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67	(가칭)와우증권중개(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68	(가칭)ING증권중개(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69	(가칭)리먼브러더스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 및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과의 영업양수도 예비인가안
				70	(가칭)흥국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71	(가칭)BNP파리바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72	금융감독원 정관 일부변경 승인안
				73	한국산업은행 정관 일부변경 승인안
				74	한국개인신용(주) 및 (주)디앤비코리아의 상호변경 허가안
			보고 안건	10	2008년도 1/4분기중 금융거래약관 등의 처리결과 보고
				75	(경기)분당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인가 취소 등 조치안
				76	밸류에프원유한회사의 (서울)영풍상호저축은행 주식 취득 승인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8년	5월23일	제5차	의결 안건	77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신용정보업 영위 허가안
				51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52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78	키움증권㈜의 키움인베스트먼트㈜ 주식 취득 승인안
				79	(가칭)에이아이지자산운용㈜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80	(가칭)현대스위스자산운용㈜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81	마이어자산운용㈜의 허가조건 변경 승인안
				82	대한생명보험㈜의 신탁업 영위 및 겸영 인가안
				83	흥국생명보험㈜의 신탁업 영위 및 겸영 인가안
				84	2007회계연도 금융감독원 결산승인안
				85	2007회계연도 주택금융공사 결산승인안
				86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정안
				87	하노버재보험㈜ 한국지점의 보험업 허가안
				88	우리은행의 이의신청사항 심의안
				89	리먼브러더스뱅크하우스 서울지점의 결산일 변경 승인안
			보고 안건	11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2	2007년중 「금산법상」 초과소유주주에 대한 초과소유요건 심사결과
				13	2008년 1/4분기중 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초과 발생현황 보고
				14	'08. 1/4분기중 종합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위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2008년	5월26일	제3차 임시회의	의결 안건	90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명안
				86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정안
				90	영진약품공업㈜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8년	6월16일	제6차	의결 안건	91	(가칭)엠플러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92	(가칭)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93	(가칭)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94	(가칭)아이엠엠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95	신한은행 및 신한생명의 (가칭)신한국민연금제2호사모투자전문회사 주식소유 승인안
				96	교원나라자동차보험(주)의 화재보험 등 6개 보험종목에 대한 보험업 허가안
				97	흥국생명보험(주)의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주) 대주주 승인안
				98	법인대리점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99	금호생명보험(주) 종합검사 결과 과태료 부과 조치안
				100	(가칭)강원랜드신용협동조합 설립 인가안
				101	(서울)HK상호저축은행의 (부산)동광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102	(서울)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03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안
			보고 안건	1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6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1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자산 매각절차 보고
				19	2008년도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권한위임사항(회계관련) 처리결과 보고
				104	중소기업은행 임원 임명안
				105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 관한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106	한국공인회계사회회칙 일부개정회칙 승인안
				107	(주)케이씨오에너지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8년	6월27일	제7차	의결 안건	108	선물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09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선물시장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10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선물시장수탁계약준칙 일부개정규정안
				111	증권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12	(주)두산캐피탈의 비엔지증권중개(주)대주주변경 승인안
				113	엔에이치투자증권 수원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14	(가칭)KB금융지주회사 설립 예비인가안
				115	하나금융지주의 코먼웰스비즈니스은행 자회사편입 이행기간 연장 승인 안
				116	(대전)한발신용협동조합과 (대전)동대전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안
				117	(제주)늘푸른신용협동조합과 (제주)제광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안
				118	삼성생명보험(주)의 美삼성라이프인베스트먼트(주)에 대한 자회사 소유 승 인안
				119	(주)한화건설 등 5개사의 제일화재해상보험(주) 대주주 승인안
			보고 안건	20	행정지도 존속기한 연장보고
				21	2008년도 1/4분기중 전자금융업 등록(등록말소) 및 전자금융거래 약관 처리 결과 보고
				120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명안
				121	(전북)현대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결정 및 영업인가 취소 등 조 치안
				122	(전북)현대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
				123	(경남)경남자동차정비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
				124	(서울)면곡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
				125	(부산)부산택시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
				126	(주)뉴월드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27	(주)한국금융채널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8년	7월11일	제8차	의결 안건	128	동부화재해상보험(주)의 동부증권(주)에 대한 자회사 소유 승인안
				129	(가칭)메리츠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 (가칭)메리츠자산운용과 메리츠종합금융(주)과의 자산운용업 영업양수도 및 메리츠종합금융(주)의 자산운용업 영업폐지 인가안
				130	(가칭)블랙록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131	(가칭)더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132	(가칭)RG에너지자원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133	(가칭)GS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134	신영증권(주)의 신탁업 예비인가안
				135	유진투자증권(주)의 신탁업 예비인가안
				136	메리츠증권(주)의 신탁업 예비인가안
				137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38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39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140	한국FP학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안
				141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 안건	22	한국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25	금융투자업규정 제정안
				112	(주)두산캐피탈의 비엔지증권중개(주) 대주주변경 승인안
				142	(가칭)한국투자운용지주(주) 설립 예비인가안
				143	국내은행 국외점포 신설에 대한 사전협의 및 자회사업종 인정안
				144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과 아메리칸엑스프레스은행의 영업양수도 등에 대한 예비인가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8년	7월25일	제9차	의결 안건	145	은행업무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 일부지침 개정안
				146	한국주택금융공사 정관 일부변경 승인안
				147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48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49	(강원)설악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
				150	(서울)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
				151	「간접투자증권 판매업무담당 임직원 교육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기준안
				152	(가칭)얼라이언스번스타인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153	(가칭)에이아이지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154	(가칭)엘에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155	(가칭)현대스위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156	(가칭)지에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157	(가칭)알지에너지자원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158	신영증권(주)의 신탁업 인가안
				159	유진투자증권(주)의 신탁업 인가안
				160	메리츠증권(주)의 신탁업 인가안
				161	피닉스자산운용(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162	교보투자신탁운용(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163	금융투자업규정안
				164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의 증권업 및 선물업 허가안
				165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의 증권업 및 선물업 허가안
				166	케이티비투자증권(주)의 증권업 및 선물업 허가와 케이티비캐피탈(주)에 대한 출자승인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167	비엔파파리바증권(주)의 증권업 및 선물업 허가안
				168	토러스투자증권(주)의 증권업 및 선물업 허가안
				169	엘아이지투자증권(주)의 증권업 및 선물업 허가안
				170	애플투자증권중개(주)의 증권업 및 선물업 허가안
				171	바로증권중개(주)의 증권업 허가안
				172	아이엔지증권중개(주)의 증권업 허가안
				173	하나대투증권(주)의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경영인가안
				174	엔에이치투자증권(주)의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경영인가안
				175	도이치증권(주)의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경영인가안
				176	제이피모간증권 서울지점의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경영인가안
				177	한화손해보험(주) 및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주)의 부동산권리보험에 대한 보험업 허가안
				178	(가칭) 사단법인 한국손해사정학회 설립 허가안
			보고 안건	2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7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 이행상황 보고
				28	08년 2/4분기중 종합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위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29	2008년 상반기중 외국은행 사무소 폐쇄신고 처리상황 보고
				30	2008년도 2/4분기중 금융거래약관의 처리결과 보고
				31	2008년 상반기 신용협동조합 경영관리 관련 금융위원회 권한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32	2008년 상반기 간접투자자산운용부문 금융위원회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179	신용보증기금 임원 임명(안)
				180	제주금융포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안
				181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8년	8월22일	제10차	의결 안건	182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안
				183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184	국내법인기업금융센터(주)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85	재단법인 하나희망재단 설립 허가안
				186	(가칭)인천국제공항공사신용협동조합 설립 인가안
				187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주)의 신용조사업무 영위 허가안
			보고 안건	33	2008년 2/4분기중 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초과 관리현황 보고
				34	2008년도 2/4분기 중 전자금융업 등록(등록말소) 및 전자금융거래 약관 처리 결과 보고
				35	2008년도 상반기 보험부문 금융위원회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36	(경기)분당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과 보고
				37	08.2/4분기중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위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3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41	중소기업은행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2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43	한국개발펀드법안
				188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189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190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191	(주)아이씨코퍼레이션의 분기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92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8년	9월12일	제11차	의결 안건	193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19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195	(주)현대미포조선의 씨제이투자증권(주) 및 씨제이자산운용(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
				196	재단법인 기은복지재단 정관 변경 인가안
				197	한화손해보험(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198	(전북)현대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등 조치안
			보고 안건	44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5	한국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6	증권선물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권한위임사항(회계관련) 처리결과 보고
2008년	9월16일	제4차 임시 회의	의결 안건	199	리먼브러더스뱅크하우스 서울지점에 대한 영업의 일부정지 등 조치안
				200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영업의 일부정지 및 긴급 조치안
			의결 안건	201	(가칭)(주)KB금융지주회사 설립 인가안
				202	KB투자증권(주) 등 3개사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203	(가칭)한국투자운용지주(주) 설립 인가안
				204	한국투자신탁운용(주) 등 2개사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205	지앤에이케이비아이씨사모투자전문회사의 이트레이드증권(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
				206	새금융사회연구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안
				207	(주)아셀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08	(가칭)D.A.S. 법률비용보험(주)의 보험업 예비허가안
				209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10	(전북)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안
				211	(대전)대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8년	9월12일	제12차		212	(충북)증부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안
				213	(가칭)에이앤에이신용정보(주)의 신용정보업 영위 예비허가 및 한국아이비금융(주)의 (가칭)에이앤에이신용정보(주) 주식취득 승인안
				214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과 아메리칸엑스프레스은행의 영업양수도 등에 대한 인가안
				215	신한은행 일부영업 양도 인가안
		보고 안건		4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1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2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3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4	행정형벌 합리화관련 금융위 소관 11개 법률 일괄 개정 추진
				55	2008년 상반기중 일반은행의 금융채 발행현황
				56	(전북)현대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과보고
2008년	9월30일	제5차 임시 회의	의결 안건	216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217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보고 안건	57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매수주문 특례승인 보고
2008년	10월10일	제13차	의결 안건	218	중소기업은행 임원 임명안
				219	한미재무학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안
				220	NDF 매입초과포지션 한도위반 은행에 대한 조치안
				221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안
				222	아시아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23	글로벌신용정보(주)의 상호변경 허가안
				224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보고 안건	58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9	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
2008년	10월20일	제6차 임시 회의	의결 안건	225	15개 국내은행의 대외채무 국가보증 신청에 대한 의견안
2008년	10월27일	제14차	의결 안건	226	유진투자증권(주) 대구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27	네스텍크(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안
				228	박순하의 증권거래법규 위반에 대한 조치안
				229	민응성의 증권거래법규 위반에 대한 조치안
				230	김태형의 증권거래법규 위반에 대한 조치안
				231	(경기)분당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
				232	(강원)도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종합 및 부문검사결과 조치안
				233	(전북)고려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안
			보고 안건	6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61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및 한국씨티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결과 보고
				62	2008년도 3/4분기중 금융거래약관의 처리결과 보고
				63	2008년도 3/4분기중 전자금융거래약관 처리결과 보고
				64	2008년도 3/4분기중 종합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위 위탁업무 처리결 과 보고
				65	증권선물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권한위임사항(회계관련) 처리결과 보고
				66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정 보고
				67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4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 확정급여 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 제정 보고
				234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8년	11월7일	제15차	의결 안건	235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36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37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38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39	한화손해보험(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40	(부산)양풍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
				241	(대전)대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
				242	(서울)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의 (충북)중부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243	(부산)부산상호저축은행, (부산)부산2상호저축은행 및 케이티비이천철사모투자전문회사의 (대전)대전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244	(부산)부산상호저축은행 및 (부산)부산2상호저축은행의 (전북)고려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245	(주)한화건설, 한화엘앤씨(주), (주)한화갤러리아, 한화리조트(주), 한화테크엠(주)의 (경기)새누리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246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 등 112사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247	한국인프라자산운용(주)의 허가조건 변경 승인안
				248	(주)포이보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
			보고 안건	68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69	증권선물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권한위임사항(회계관련) 처리결과 보고
			의결 안건	249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50	금융감독원 예산심의 소위원회 구성운영안
				251	사단법인 한국금융리스크관리전문가협회 정관 일부변경 승인안
				252	하나대투증권(주)와 하나IB증권(주)의 합병 인가안
				253	Deutsche Holdings (Malta) Ltd.의 도이치증권(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
				254	유진투자증권(주)의 우리담배판매(주) 출자 승인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8년	11월21일	제16차		255	교보증권(주)등 51개사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256	(부산)양풍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안
			보고 안건	70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7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72	(전북)한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 결과보고
				73	2008년도 3/4분기중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위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74	2008년도 3/4분기 중 전자금융업 등록 및 등록말소 처리결과 보고
2008년	12월8일	제7차 임시 회의	의결 안건	257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명안
				258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의 동일인 및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초과 예외인정안
2008년	12월12일	제17차	의결 안건	259	모간스탠리은행 서울지점 결산일 변경 승인안
				260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동일인 및 동일차주 등 신용공여한도초과 예외인정안
				261	리먼브러더스뱅크하우스 서울지점에 대한 영업의 일부정지 등의 조치 연장안
				262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증권서울지점에 대한 영업의 일부정지 및 긴급 조치 연장안
				263	글로벌파이낸스포럼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안
				264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안
				265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제정안
				266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67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68	(부산)성의신용협동조합과 (부산)부산불교통불원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안
				269	(전남)영광신용협동조합과 (전남)함평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안
				270	(전북)전주파티마신용협동조합과 (전북)한울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안
				271	에스에이치자산운용(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연도	월일	회사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72	신한비엔피파리바투자신탁운용(주)와 에스에이치자산운용(주)의 합병 인가안
				273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274	(가칭)새한자산신탁(주)의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안
				275	(가칭)지이자산신탁(주)의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안
				276	보람투자자문(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보고 및 조치안
			보고 안건	75	증권선물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권한위임사항(회계관련) 처리결과 보고
			의결 안건	277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78	증권선물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79	(주)골든브릿지의 금융지주회사 인가취득등의 기간 연장 승인안
				280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81	(전북)전북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
				282	(경기)새누리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283	(전북)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84	(전남)해남신용협동조합과 (전남)옥주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안
				285	예금보험공사 2009회계연도 예산 승인안
				286	한국주택금융공사 2009년도 업무계획 승인안
				287	한국주택금융공사 2009회계연도 예산 승인안
				288	신용보증기금 2009년도 업무계획 승인안
				289	기술신용보증기금 2009년도 업무계획 승인안
				290	한국산업은행 2009년도 업무계획 승인안
				291	중소기업은행 2009년도 업무계획 승인안
				292	한국산업은행 2009회계연도 예산 승인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8년	12월26일	제18차		293	중소기업은행 2009회계연도 인건비 예산안에 대한 승인안
				294	키움증권(주)의 키움인베스트먼트(주) 출자 승인안
				295	노무라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 등 27개사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296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97	(주)리더스라이프 보험대리점 부문검사 결과조치안
				298	(주)푸른신호등전주 보험대리점 부문검사 결과조치안
				299	(주)광장보험프라자 보험대리점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300	지승룡 등 2인의 증권거래법규 위반에 대한 조치안
				301	외화환산 회계처리 관련 기업회계기준 등 수정요구안
				302	장의파생상품 관련 기업회계기준 수정요구안
				303	금융감독원 2009회계연도 예산 승인안
			보고 안건	76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제도 운영 방안
				77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개정 보고
				78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개정 보고
				79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연결재무제표' 개정 보고
				80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개정 보고
				8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 '사업결합' 등 개정 보고
				8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등 개정 보고
				83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원가'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 등 개정 보고
				84	'금융자산의 분류변경'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 등 개정 보고
				85	'풋가능 금융상품과 청산시 발생하는 의무'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2호 등 개정 보고
				86	'가득조건과 취소'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2호 개정 보고

연도	월일	회사	안전 유형	번호	제 목
				87	'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5호 등 개정 보고
				88	(충북)현대스위스III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결과보고
				89	(대전)대전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결과 보고

## 2008년 금감위 상정 안건목록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8년	1월18일	제1차	의결 안건	1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 승인안
				2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	HSBC 인슈어런스 (아시아-퍼시픽) 홀딩스 리미티드의 하나생명보험 (주) 지배주주 승인안
				4	유화증권(주) 본점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보고 및 조치안
				5	우리투자증권(주) 서산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보고 및 조치안
				6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 승인안
				7	(충남)대성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및 부문검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8	(대전)대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보고 안건	1	금융기관 검사결과 보고
				2	(전북)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 결과보고
				3	2007년 하반기중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이전신고 처리상황 보고
				4	2007년도 4/4분기중 금융거래약관 등의 처리결과 보고
				5	2007년 하반기 간접투자자산운용부문 금융감독위원회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9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일부 개정세칙 승인안
				10	교보생명보험(주)의 교보투신운용(주)에 대한 자회사 소유 승인안
				11	은행의 국외지점 등 신설에 대한 사전협의안
				12	고려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3	기은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4	미래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5	새한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16	서울신용평가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7	세일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8	솔로몬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8년	2월1일	제2차	의결 안건	19	에스지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0	우리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1	중앙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2	진흥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3	한국기업데이터(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4	한국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5	한국신용평가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6	국민은행의 한누리투자증권(주) 주식소유 및 지배주주변경 승인안
				27	홍콩상하이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주식선물업 경영허가안
				28	(주)솔로몬상호저축은행, (주)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 (주)호남솔로몬상호저축은행 및 (주)경기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솔로몬사모투자전문회사 출
				29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 승인안
			보고 안건	6	금융기관 검사결과 보고
				7	2008년도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 권한위임사항(조사관련) 처리결과 보고
				8	2007년도 하반기 보험부문 금융감독위원회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9	07. 하반기 신용협동조합 경영관리 관련 금융감독위원회 권한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30	(경기)분당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
				31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32	스탠다드차타드 엔이에이 리미티드의 (경기)에아름상호저축은행 주식 취득 승인안
				3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 승인안
				34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 승인안 및 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 일부개정지
				35	종합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종합금융회사및자금증개회사인 가지침 일부개정지침안 및 종합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
				36	증권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7	선물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8	(주)포넛의 한맥선물(주) 지배주주 변경승인 심사유예안
				39	유진투자증권(주)(舊 서울증권(주)) 동래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8년	2월21일	제3차	의결 안건	40	한화증권(주) 본점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41	대신증권(주) 대치동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42	에스케이증권(주) 테헤란로지점(구 삼성지점) 등 5개 지점에 대한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
				43	교보증권(주) 방배동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44	한국투자증권(주) 신림동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45	굿모닝 신한증권(주) 도곡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46	우리은행 본점 및 삼성센터지점 등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보고 및 조치 안
				47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 승인안
				48	아시아자산신탁(주)에 대한 인가조건 변경(안)
				49	국제자산신탁(주)에 대한 인가조건 변경(안)
				50	대한생명보험(주)의 신탁업 영위 및 경영 예비인가안
				51	흥국생명보험(주)의 신탁업 영위 및 경영 예비인가안
				52	(주)호텔롯데, 롯데역사(주), (주)대흥기획 및 (주)부산롯데호텔의 대한화재해 상보험(주) 대주주 승인안
				53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 세칙 승인안
				54	(가칭)메리츠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 및 메리츠화재해상보 험(주)의 자회사 소유 승인안
				55	(가칭)DH부동산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 및 대한토지신탁 (주)의 주식 소유 승인안
				56	(가칭)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57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일 부개정세칙 승인안
				58	보다투자자문(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보고 및 조치안
				59	케이원투자자문(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보고 및 조치안
				60	오크우드투자자문(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보고 및 조치안
			보고 안건	10	신협중앙회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실적 보고
				11	금융기관 검사결과 보고
				12	2007년도 행정지도 사후관리 현황 보고
				13	2007년중 일반은행의 금융채 발행현황 보고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14	2007년도 4/4분기중 전자금융업 등록 및 전자금융거래 약관 처리 결과 보고
				15	'07. 4/4분기중 종합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감위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 고
				16	2007년도 금융감독원 감사결과 종합보고
2008년	2월28일	제1차 서면 의결	의결 안건	61	금융감독원정관 일부개정정관 승인안

## 2009년 금융위 상정 안건목록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9년	1월14일	제1차	의결 안건	1	은행업무중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2	씨티그룹에 대한 (주)한국씨티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3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4	비아이에스보험중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5	(가칭)아이엔지부동산자산운용㈜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6	(가칭)아센다스자산운용㈜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7	(가칭)제이피트러스트자산운용㈜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8	(가칭)에이플러스자산운용㈜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9	(가칭)삼천리맥쿼리자산운용㈜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10	(가칭)현대자산운용㈜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11	노무라 인터내셔널증권 및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의 영 업양수도 인가안
				12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선물시장업무규정 전부개정규정안
				13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정관 일부변경 승인안
				14	증권예탁결제원 정관 일부변경 인가안
			보고 안건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KB투자증권㈜의 내부통제 운영계획 이행여부 점검결과 보고
				3	2008년도 4/4분기 중 전자금융거래약관 처리결과보고
				4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및 (주)한국씨티은행의 한도초과보유 주주에 대한 '08.6월말 기준 적격성 심사결과 보고
				5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15	금융중심지 대상지역 지정안
				16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7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9년	1월28일	제2차	의결 안건	18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9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금융기관자금 차입한도 증액신청 승인안
				20	한국증권업협회·선물협회·자산운용협회의 합병 및 금융투자협회 정관 승인안
				21	한국증권선물거래소 회원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22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23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2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25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26	자산유동화업무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7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8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무 인가지침 일부개정지침안
				29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0	케이알선물(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31	(주)경남은행 등 4개사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32	한맥선물(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33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34	흥국쌍용화재보험(주)의 자산운용업 폐지 인가안
				35	블리스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보고 및 조치안
				36	비엔피파리바 은행 서울지점의 신탁업 폐지 인가안
				37	제이피모간 체이스 은행 서울지점의 신탁업 폐지 인가안
				38	칼리온 은행 서울지점의 신탁업 폐지 인가안
				39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40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중 개정규정 승인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41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공시규정중 개정규정 승인안
				42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정안
				43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4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분쟁조정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45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46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보고 안건	6	(전북)고려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결과보고
				7	2008년도 하반기 보험부문 금융위원회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8	2008년 하반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 신탁업 부문 금융위원회 위탁 업무 처리결과 보고
				9	2008년 하반기중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이전 및 사무소 폐쇄신고 처리 상황 보고
				10	2008년도 4/4분기 중 금융거래약관의 처리결과 보고
				11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 등 45개 증권사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보고
2009년	2월18일	제3차	의결 안건	47	(가칭)㈜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회사 설립 예비인가안
				48	흥국생명보험(주)의 흥국쌍용화재보험(주)에 대한 자회사 소유 승인안
				49	에스신용정보㈜의 신용정보업 영위 허가안
				50	한국여신전문금융협회의 집중관리·활용대상정보 범위 변경 승인안
				51	현대커머셜(주)의 현대카드(주) 주식취득 승인안
				52	하나대투증권㈜ 고정역 지점장 최호웅의 이의신청사항 심의안
				53	교통은행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인가 정정안
			보고 안건	12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보고
				13	공인회계사 21인에 대한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 의결 결과 보고
				14	2008년도 금융감독원 감사결과 종합보고
				15	08. 4/4분기 중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위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 고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16	2008년 하반기 신용협동조합 경영관리 관련 금융위원회 권한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2009년	3월4일	제4차	의결 안건	54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55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56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57	금융감독원 정관 일부변경 승인안
				58	(경기)토마토상호저축은행의 (부산)양풍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보고 안건	17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8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9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1	2008년중 일반은행의 금융채 발행현황
				22	신협중앙회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실적 보고
				23	2008년도 행정지도 사후관리 현황 보고
			의결 안건	59	BNP파리바등의 (주)신한금융지주회사 주식취득 승인안
				60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61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승인안
				62	동양종합금융증권(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63	현대증권(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64	피델리티자산운용(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65	금융위원회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6	금융감독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67	고려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68	미래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9년	3월18일	제5차		69	새한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70	세일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71	솔로몬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72	에스지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73	중앙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74	한국기업데이터(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75	한국기업평가(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76	정리금융기관(가칭:에쓰상호저축은행) 설립과 동 정리금융기관의 업무 범위 및 사장선임 승인안
			보고 안건	2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2008년도 4/4분기중 전자금융업 등록(등록말소) 및 전자금융거래 약관 처리 결과 보고
				27	증권선물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권한위임사항(회계관련) 처리결과 보고
				28	위탁업무처리결과 보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및 기업회계기준 제70조의2 개정)
				29	위탁업무처리결과 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30	위탁업무처리결과 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 개정)
				31	위탁업무처리결과 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관련)
				32	위탁업무처리결과 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정)
				33	위탁업무처리결과 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 계')
			의결 안건	62	동양종합금융증권(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77	(전북)에쓰상호저축은행 영업인가안
				78	(전북)전북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결정 및 영업인가 취소 등 조 치안
				79	국민은행의 국외점포 신설에 대한 사전협의 및 자회사업종 인정안
				80	한국주택금융공사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9년	4월1일	제6차		81	15개 국내은행의 외화채무 국가채무보증 신청에 대한 의견안
				82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가채무보증 신청에 대한 의견안
				83	예금보험공사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84	한국산업은행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보고 안건		34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35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36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7	상호저축은행 과징금제도 운영방안 보고
				38	(강원)도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결과 보고
2009년	4월13일	제1차 임시 회의	의결 안건	85	예금보험공사 임명안
2009년	4월15일	제7차	의결 안건	86	기술신용보증기금 임원 임명안
				87	(가칭)아시아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88	대한생명보험(주)의 한화투자신탁운용(주) 자회사 소유 및 대주주 변경 승 인안
				89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90	중소기업은행 정관 일부변경 승인안
				91	한국거래소 정관 일부변경 승인안
				92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안 및 영업의 일부정지와 긴급조치 연장 보고
				93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 정규정 승인안
				94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95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96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97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98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99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0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제정안
				101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02	(전남)꿀벌신용협동조합과 목포약사 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안
			보고 안건	37	상호저축은행 과징금제도 운영방안 보고
				39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안
				4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1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2	(주)한국씨티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08.12월말 적격성 심사 결 과 보고
				43	리먼브러더스 بنك하우스 서울지점에 대한 영업의 일부 정지 등의 조치 연장 보고안
				44	(부산)양풍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추진결과 보고
2009년	4월29일	제1차 서면	의결 안건	10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 제2호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009년	5월6일	제8차	의결 안건	104	한국산업은행 임원 임명안
				105	신용보증기금 임원 임명안
				106	금융감독원에 대한 결산심의 소위원회 구성·운영안
				107	다스법률비용보험(주)의 보험업 허가안
				108	우리캐피탈(주)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
				109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10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 정관 승인안
				111	(주)인네트의 (구)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치안
				112	(주)서부트럭터미날의 애플증권중개(주) 대주주 변경승인 위반 관련 조치 안
				113	현대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14	비엔피파리바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보고 안건	45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6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안 주요 변경사항
				47	'09 회계연도 금감원 예산심사시 논의사항에 대한 보고
				4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7호 "금융상품 : 공시"에 대한 개정결과 보고
				49	KB자산운용(주)의 KTB투자증권(주) 대주주 변경승인 위반 관련 보고
				50	2009년도 1/4분기 중 금융거래약관의 처리결과 보고
2009년	5월20일	제9차	의결 안건	115	2008회계연도 금융감독원 결산승인안
				116	리먼브러더스 बैं크하우스 서울지점에 대한 청산인 청구 승인안 및 영업 의 일부정지 관련 보고
				117	(전북)김제신용협동조합과 (전북)수류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안
				118	산은캐피탈(주)의 리더스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 승인안
				119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0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보고 안건	51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고
				5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보고
				53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고
				54	'09. 1/4분기중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위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121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원 임명안
				122	실무금융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및 예산배정(안)
				123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24	(충남)한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25	(충북)청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26	삼성증권(주) 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27	굿모닝 신한증권(주) 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9년	6월3일	제10차	의결 안건	128	한국투자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29	대우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30	한양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31	한화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32	하이투자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33	우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34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35	템피스투자자문(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36	(가칭)맥쿼리삼천리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137	한일시멘트(주)의 칸서스자산운용(주) 대주주변경승인 위반 관련 조치안
			보고 안건	55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6	2009년도 1/4분기중 전자금융업 등록(등록말소) 및 전자금융거래 약관 처리 결과 보고
			의결 안건	138	한국산업은행의 외화표시 중장기채무 차입계획 협의 승인안 및 외화표 시 채무 상세 현황 보고
				139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40	은행업무중부수업무의범위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141	은행업인가지침 일부개정안
				142	(주)신한은행의 에스에이치앤씨생명보험(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
				143	(주)케이비금융지주의 케이비생명보험(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
				144	교보생명보험(주)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안
				145	(주)위브앤위너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46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주) 설립인가안 등
2009년	6월17일	제11차	의결 안건	147	(전북)부안신용협동조합과 (전북)새만금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안
				148	(경남)창원제일신용협동조합과 경남자동차정비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 가안

연도	월일	회차	안전 유형	번호	제 목
				149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50	(주)골든브릿지의 (전남)상업상호저축은행의 주식취득 승인안
				151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52	(전북)전북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등 조치안
				153	(충남)대성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종료안
				154	현대증권(주)의 출자승인 및 (가칭)현대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155	(가칭)아이엔지부동산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137	한일시멘트(주)의 칸서스자산운용(주) 대주주변경승인 위반 관련 조치안
			보고 안전	57	칸서스자산운용(주) 임원의 대주주변경승인 의무 위반 여부 검토 보고
				58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결과 보고
				59	(전북)전북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과보고
2009년	7월1일	제12차	의결 안전	156	아시아신용정보(주)에 대한 일부 업무정지 조치안
				157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58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과태료 부과등 조치안
				159	얼라이언스번스타인엘피에 대한 과태료 부과등 조치안
				160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161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62	기업구조조정조합등록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6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64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165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166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일부개정 승인안
				167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기준 제정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168	(총북)현대스위스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보고 안건	60	금융회사 이자율 제한제도 운영방안
				61	(총북)하나로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 결과 보고
				62	2009년 1/4분기중 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초과 관리현황 보고
2009년	7월16일	제13차	의결 안건	169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70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71	(가칭)노무라이화자산운용(주)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72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및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 규정 승인안
				173	흥국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174	하나대투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75	대신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76	대우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77	현대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78	굿모닝 신한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79	한국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80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81	리딩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82	엘아이지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83	케이아이디비채권증개(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84	미래에셋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85	뉴엣지파이낸셜증권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86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87	(주)부은선물의 대주주 심사 배제 인정 및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188	(전남)녹동신용협동조합과 (전남)도화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안			
				189	(대구)광장신용협동조합과 평리천주교회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안			
				190	(주)케이티캐피탈의 뱅가드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 승인안			
			보고 안건	6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고			
				6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6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66	한국산업은행의 2/4분기 '외화표시 채무 상세 현황' 보고			
			2009년	7월29일	제14차	의결 안건	191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
							192	(전북)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안
							193	(전북)한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안
194	(전남)보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95	(제주)성산포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96	비씨카드(주)의 스마트페이(주)에 대한 출자승인안							
197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98	(주)하나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 및 하나카드(주)신용카드업 예비인가안							
199	신한은행의 해외 사무소 신설에 대한 사전협의							
200	아시아신용정보(주)에 대한 일부 업무정지 조치안							
201	일몰제 적용을 위한 금융위원회 규정 등 고시 일괄정비안							
202	국제신탁(주)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안							
203	(가칭)아센다스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204	키움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05	도이치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06	에스케이증권(주)의 글로벌 소프트웨어기업 육성 사모투자전문회사(가칭)에 대한 출자승인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7	부국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08	교보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09	대신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10	한국투자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11	한국정책금융공사 감독규정 제정안
				212	한국산업은행 정관 일부변경 승인안
			보고 안건	67	기업회계기준서 제104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제정결과 보고
				6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2117호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에 대한 제정결과 보고
				69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에 대한 제정결과 보고
				70	"내재파생상품"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2109호 등 개정결과 보고
				7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등에 대한 개정 결과 보고
				72	2009년 상반기중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이전 및 사무소 폐쇄 신고 처리 상황 보고
				73	2009년도 2/4분기 금융거래약관의 처리 결과 보고
2009년	8월11일	제2차 임시	의결 안건	191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
2009년	8월26일	제15차	의결 안건	213	(가칭)㈜무궁화신탁의 부동산신탁업 인가안
				214	삼성생명보험(주) 자회사의 영위업무 추가 승인안
				215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16	미래에셋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217	하나대투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218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219	엘아이지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220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221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보고 안건	222	아시아신용정보(주)의 신용정보업 허가취소안
				74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75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76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49-55 "분할·분할합병에 관한 회계처리" 개정 결과 보고
				77	2009년도 2/4분기중 전자금융업 등록(등록말소) 및 전자금융거래 약관 처리 결과 보고
2009년	9월9일	제16차	의결 안건	223	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조치안
				22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225	현대스위스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226	외환선물(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27	에스케이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28	신용보증기금 정관 일부변경 승인안
				229	기술신용보증기금 정관 일부변경 승인안
				230	(전북)전북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31	에르고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주)의 상해보험 등 6개 보험종목에 대한 보험업 허가안
				232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33	하나은행의 국외 자회사 신설에 대한 사전협의 및 자회사 업종 인정안
				234	(주)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235	우리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236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원 임명안
				237	금융결제원 임원 선임 승인안
				238	(주)우리금융지주의 비엔비에트증권 손자회사 편입승인안
				239	우리아비바생명보험(주)의 금융투자업 겸영 인가안
				240	국제신탁(주)의 경영개선계획 승인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9년	9월23일	제17차	의결 안건	241	(서울)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및 에이치에스에이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기)에한올상호저축은행 주식 취득 승인안
				242	산은캐피탈(株)의 KDBC-JKL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승인안
				243	하나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 및 하나카드(株) 신용카드업 인,허가안
				244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전부개정규정안
				245	신용정보업인허가지침 전부개정안
				246	신한은행 등의 (가칭)코백코 주식소유 승인안 및 자회사 업종 인정안
				247	신한은행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안
				226	외환선물(株)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재상정 안건)
				248	한양증권(株)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49	부국증권(株)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50	케이티비투자증권(株)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51	솔로몬투자증권(株)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52	이트레이드증권(株)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53	교보증권(株)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54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업무규정 일부 개정규정승인안
			보고 안건	7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79	지도공문 등 비명시적 규제 정비방안
				80	2009회계연도 금융감독원 상반기 결산결과 보고
2009년	9월29일	제2차 서면 의결	의결 안건	244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전부개정규정안
				245	신용정보업 인허가지침 전부개정안
				255	(광주)무등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56	한화손해보험(株) 및 제일화재해상보험(株)의 합병 예비인가안
				257	에이치엠씨투자증권(株)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9년	10월7일	제18차	의결 안건	258	블리스자산운용(주)의 대주주변경 승인안
				259	한국산업은행 정관 일부변경 인가안
				260	한국정책금융공사 정관 제정 인가안
				261	(가칭)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설립 인가안
				262	중소기업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실태 관련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63	중소기업은행의 구축성예금 실태 관련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64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65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47	신한은행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안(재상정 안건)
				266	리딩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보고 안건	81	단기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안 보고
				82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3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85	09년 2/4분기중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위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2009년	10월21일	제19차	의결 안건	267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관 일부변경 인가안
				268	스카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69	한국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270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상장규정 및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271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보고 안건	86	외환건전성 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현황 보고
				272	공인회계사 방효혁, 백승철, 김성복, 배원현, 김수인 및 박종대에 대한 징계의결안
				273	공인회계사 남형주에 대한 징계의결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9년	11월4일	제20차	의결 안건	274	(전북)한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 연장안
				275	(전북)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 연장안
				276	(경기)안양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77	(전북)고려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78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금융기관자금 용도별 차입한도 조정신청 승인안
				279	한국정책금융공사 2009년도 업무계획 승인안
				280	한국정책금융공사 2009회계연도 예산 승인안
				281	(주)신한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
				282	맥쿼리은행 서울지점 신설 예비인가안
			보고 안건	87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88	2009년 상반기중 일반은행의 금융채 발행현황 보고
				89	2009년도 상반기 보험부문 금융위원회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283	금융감독원 예산심의 소위원회 구성운영안
				284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결정 및 영업인가 취소 등 조치안
				285	엠에이치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 및 (제주)미래상호저축은행의 (전북)한일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286	(주)보고비씨씨투자목적회사의 비씨카드 대주주 승인안
				287	큐캐피탈파트너스의 큐씨피2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 승인안
				288	(전남)전남서부신용협동조합과 (전남)문장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안
				289	(광주)북동신용협동조합과 (광주)광주제일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안
				290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 이관기준안
				291	(가칭)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292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과 메릴린치인터내셔널은행 서울지점간 영업양수도 등에 대한 예비인가안
				272	공인회계사 방효혁, 백승철, 김성복, 배원현, 김수인 및 박종대에 대한 정계의결안

연도	월일	회차	안전 유형	번호	제 목
2009년	11월18일	제21차	의결 안전	293	(주)비엔디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
				294	제이피모간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95	우리투자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96	한국투자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97	한화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98	하이투자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99	한양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300	부국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301	신한금융투자(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302	(주)부은선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303	(가칭)한국노무라금융투자(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304	메리츠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예비인가안
			보고 안전	90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경영개선계획 수정보고
				91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 개정결과 보고
				92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연결재무제표” 개정결과 보고
				93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개정결과 보고
				94	기업회계기준서 제105호 “신탁업자의 신탁계정” 제정결과 보고
				305	청호전자통신(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06	(가칭) 한국씨티금융지주 설립 예비인가안
				307	씨티그룹에 대한 한국씨티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308	대우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309	현대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310	솔로몬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9년	12월2일	제22차	의결 안건	311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의 금융투자업 변경 예비인가안
				312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 예비인가안
				313	동부증권(주) 본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314	대우증권(주) 테헤란밸리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315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316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317	대신투자신탁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318	마이에셋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319	피닉스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320	골든브릿지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321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22	큐캐피탈파트너스의 큐씨피1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 승인안
				323	큐캐피탈파트너스의 큐씨피3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 승인안
				324	한국종합캐피탈의 케이케이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 승인안
			보고 안건	95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96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7	2008년중 금산법상 다른회사의 주식초과 소유주주에 대한 초과소유요건 심사결과 보고
				98	한국씨티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09.6월말 적격성 심사결과 보고
				99	2009년도 3/4분기 금융거래약관의 처리결과 보고
				100	2009년도 3/4분기중 전자금융업 등록(등록말소) 및 전자금융거래 약관 처리 결과 보고
				101	'09. 3/4분기중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위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102	(전북)전일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추진상황 보고
				325	(주)골든브릿지캐피탈의 (주)굿이에프 주식취득승인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9년	12월18일	제23차	의결 안건	326	국제신탁(주)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종료안
				327	대신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328	케이티비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329	이트레이드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330	키움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331	뉴엣지파이낸셜증권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332	제이피모간증권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및 (주)제이피모간퓨처스와의 영업양수도 승인안
				333	하나대투증권(주) 등의 (가칭)하나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승인안
				334	우리은행등의 (가칭)우리블랙스톤 오퍼튜니티 1호 사모투자전문회사 주식소유 승인안
				335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과 메릴린치인터내셔널은행 서울지점간 영업양수도 등에 대한 인가 및 승인안
				336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37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338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339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40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34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342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009년	12월22일	제3차 서면	의결 안건	343	한화손해보험(주) 및 제일화재해상보험(주)의 합병인가안
				344	한국생명의 한국화재 주식 추가취득 승인안
				345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산은금융지주 주식 현물출자 신청 승인안
				346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임명안
				347	금융감독원 2010회계연도 예산 승인안
				348	한국정책금융공사 2010회계연도 예산 승인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9년	12월 29일	제24차	의결 안건	349	중소기업은행 2010회계연도 인건비 예산 승인안
				350	예금보험공사 2010회계연도 예산 승인안
				351	한국주택금융공사 2010회계연도 예산 승인안
				352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353	한국주택금융공사 2010년도 업무계획 승인안
				354	신용보증기금 2010년도 업무계획 승인안
				355	기술신용보증기금 2010년도 업무계획 승인안
				356	한국정책금융공사 2010년도 업무계획 승인안
				357	중소기업은행 2010년도 업무계획 승인안
				358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등예탁업무규정 및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일부개정 규정 승인안
				359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360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361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362	(가칭)피에스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363	(가칭)파인트리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364	(가칭)캡스톤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365	(가칭)새한자산신탁(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366	(주)리더스라이프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367	(주)프라임인스넷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368	(주)우리인슈어클라비스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369	(주)인카인슈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370	(주)다이렉트일일구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371	(주)에임에셋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372	(주)대우솔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73	(경기) 일산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374	(강원) 춘천철원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375	(충남) 서천군산림조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보고 안건	103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확정 및 지정고시안
				104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제정 결과 보고
				105	IFRS하에서의 질의회신제도를 위한 K-IFRS 질의회신연석회의 설치운 영방안
				10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에 대한 개정결과 보고
				10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개정결과 보 고
				108	(전북)한일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추진결과 보고
				109	09년 상반기 금융기관 해외진출 관련 금융위 위탁업무 처리결과보고
				110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승인후 초과소요요건 충족 여부 검사결과 보고
2009년	12월31일	제3차 임시 회의	의결 안건	376	(전북)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
				377	신기보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 및 "소기업 담보부대출 특례보증" 관 련 경과조치안



## 2010년 금융위 상정 안건목록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10년	1월13일	제1차	의결 안건	1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맥쿼리은행 서울지점의 결산일 변경 승인안
				3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4	(주)코람코자산신탁의 출자승인·대주주 요건심사대상 제외 인정 및 (가칭)주코람코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5	PCA생명보험(주) 종합검사 결과 과태료 부과 조치안
				6	대우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7	한맥투자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8	신한금융투자(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9	푸르덴셜투자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010년	1월27일	제2차	의결 안건	10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의 집중관리, 활용대상정보 추가 승인안
				11	더케이손해보험(주)의 질병보험 등 3개 보험종목에 대한 보험업 허가안
				12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13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14	케이비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 예비인가안
				15	에이치엠씨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 예비인가안
				16	공인회계사 장동룡, 박규환 및 최성규에 대한 징계의결안
			보고 안건	1	제제내용 공개수준 확대방안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	녹색금융 특화MBA 선정·지원 기본계획안
				4	기업회계기준서 제5001호 “결합재무제표” 제정결과 보고
				5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의 계약이전 결과 보고
				6	2009년 하반기중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이전 및 사무소 폐쇄신고 처리 상황 보고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7	의환건전성 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현황 보고
2010년	2월10일	제3차	의결 안건	17	농협중앙회의 해외 사무소 신설에 대한 사전협의
				18	경남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9	광주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0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등 조치안
				21	(충북)하나로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안
				22	(대전)대전시산림조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3	(대전)한우리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4	에스케이텔레콤(주)의 하나카드(주) 대주주 승인안
				25	(주)두산캐피탈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보고 안건	8	'09. 4/4분기중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위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9	2009년도 4/4분기 중 금융거래약관의 처리결과 보고
				26	한국신용정보(주)의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분할인가안
				27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8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9	케이디비칸서스밸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금호생명보험(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
				30	금호생명보험(주)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안
				31	한국자산신탁(주)의 대주주 변경승인안
				32	(주)다울신탁의 대주주 변경승인안
				33	(가칭)(주)코람코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34	(가칭)파인트리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35	흥국증권(주) 및 흥국투자신탁운용(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36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10년	3월3일	제4차	의결 안건	37	도이치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38	씨엘에스에이코리아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 예비인가안
				39	동양종합금융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및 동양선물(주)과의 합병 승인안
				40	메리츠증권(주)과 메리츠증권(주)의 합병 및 단기금융업무 인가안
				41	교보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42	대신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43	토러스투자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44	동양종합금융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45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46	공인회계사 5인에 대한 징계의결안
				47	(전북)한일(현 미래2)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1	(충북)하나로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안(재상정 안건)
			보고 안건	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11	2009년도 하반기 보험부문 금융위원회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12	2009년도 금융감독원 감사결과 종합보고				
			48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49	에이치엠씨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50	아시아신탁(주)의 인가조건 변경승인안	
			51	정리금융기관[(가칭) (주)에나래상호저축은행] 설립과 동 정리금융기 관 업무범위 승인안	
			52	예금보험공사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3	한국주택금융공사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4	코리아크레딧뷰로(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55	미래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10년	3월17일	제5차	의결 안건	56	우리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57	아이비케이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58	신한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59	진흥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60	서울신용평가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61	한국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62	한국신용평가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63	나이스디앤비(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64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보고 안건	13	신탁중앙회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실적 보고
				14	2009년도 4/4분기중 전자금융업 등록(등록말소) 및 전자금융거래 약관 처리 결과 보고
2010년	4월7일	제6차	의결 안건	65	(가칭)노무라이화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66	트러스트자산운용(주)의 인가조건 변경승인안
				67	(주)에셋화인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68	(주)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69	(주)골드라이프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70	(주)키움라이프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71	(주)아이러브에셋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72	(전남)완도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73	(전북)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결정 및 영업인가 취소 등 조 치안
				74	(전북)에나래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인가안
				75	소액신용대출사업의 비과세 요건 고시 제정안
				76	메리츠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77	교보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78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보고 안건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7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8	녹색금융 특화MBA 선정 결과보고
				19	2009년도 행정지도 사후관리 현황 보고
2010년	4월21일	제7차	의결 안건	79	우리은행의 국외점포 신설에 대한 사전협의 및 자회사 업종 인정안
				66	트러스트자산운용(주)의 인가조건 변경승인안(재상정 안건)
				80	중소기업은행의 엔화대출 취급의 적정성 점검 관련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81	한국산업은행 정관 일부 변경 승인안
				82	에스케이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
				83	노무라금융투자(주)의 금융투자업 인가 및 노무라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과의 영업양수도 승인안
				84	한국거래소 정관 일부변경 승인안
				85	한국예탁결제원 정관 일부변경 승인안
				86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87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88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89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90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91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92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93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94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및 (서울)한신상호저축은행의 (총복)하나로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9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개정안
				96	금융감독원에 대한 결산심의 소위원회 구성·운영안
			보고 안건	2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1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결과 등 보고
				22	금융감독원장 등 임원의 09년도 성과 평가 관련 보고
2010년	5월12일	제8차	의결 안건	97	(주)제이피모간퓨처스의 금융투자업 폐지 및 해산 승인안
				98	(가칭)캡스톤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99	(가칭)지지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00	솔로몬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 예비인가안
				101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 예비인가안
				102	하이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 예비인가안
				103	(가칭)아이비케이 연금보험(주)의 보험업 예비허가안
				104	삼성생명보험(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105	금호생명보험(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보고 안건	23	보험대리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 개선 방안
				106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관 일부변경 인가안
				107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한국산업은행간 업무위탁계약 종료 승인안
				108	(가칭)한국씨티금융지주(주) 설립 인가안 등
				109	(주)이크레더블의 신용정보업 영위 예비허가안
				110	(광주)창업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안
				111	(가칭)제이피에셋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112	(가칭)피에스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10년	5월26일	제9차	의결 안건	113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114	(주)에임하이글로벌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
				115	키움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예비인가안
				116	한맥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예비인가안
				117	신영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예비인가안
				118	한화증권(주)의 푸르덴셜투자증권(주)에 대한 대주주 변경 및 출자승인안
				119	엔에이치투자증권(주)의 케이앤씨이지골프코리아(주) 주식취득에 대한 사후 출자승인안
				120	금호종합금융(주)의 두울산업(주) 주식취득에 대한 사후 출자승인안
				121	2009회계연도 금융감독원 결산승인안
			보고 안건	24	2009년 하반기중 일반은행의 금융채 발행현황
				25	2010년 1/4분기중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위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26	2009년 하반기 금융기관 해외진출 관련 금융위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27	2010회계연도 금감원 예산심사시 논의사항에 대한 보고
2010년	6월9일	제10차	의결 안건	122	한국정책금융공사 감사 임명(안)
				119	엔에이치투자증권(주)의 케이앤씨이지골프코리아(주) 주식취득에 대한 사후 출자승인안(재상정 안건)
				120	금호종합금융(주)의 두울산업(주) 주식취득에 대한 사후 출자승인안(재상정 안건)
				123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124	부산은행의 (가칭) BS캐피탈 주식소유 승인안
				125	국민신용정보(주)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 및 시정명령 부과안
				126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
				127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28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29	(서울)한국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130	(경기)경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
				131	(부산)영남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
				132	(인천)신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안
				133	행정지도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보고 안건	28	행정지도 존속기한 연장보고
				29	상호저축은행 대주주변경 승인제도 검토 보고
				3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
				31	(주)한국씨티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09.12월말 적격성 심사결과 보고
				32	신용정보업관련 금융위원회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2010년	6월23일	제11차	의결 안건	134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135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136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137	(주)비에스투자증권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138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변경예비인가안
				139	아이엔지증권(주)의 증권업 허가조건 취소 및 대주주 변경 승인안
				140	(가칭)한맥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41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처자산운용(주)의 인가조건 취소안
				142	마이어자산운용(주)의 대주주 변경승인안
				143	(경북)경산제일신용협동조합과 (경북)청도군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안
				144	(경북)구룡포신용협동조합과 (경북)장기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안
				145	(인천)송림신용협동조합과 (인천)송림4동천주교회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안
				146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47	삼공개발(주)의 (인천)신라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148	(주)대유신소재 및 (주)대유디엠씨의 (광주)창업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149	(서울)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안
				150	(전북)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추가영업정지 등 조치안
			보고 안건	33	(전북)전일상호저축은행의 계약이전 결과보고
				34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5	2010년도 1/4분기중 전자금융업 등록(등록말소) 및 전자금융거래 약관 처리결과 보고
2010년	7월7일	제12차	의결 안건	151	금융감독원 감사 임명제청안
				152	(가칭)케이에스신용정보(주)의 신용정보업 영위 예비허가안
				153	KDB생명보험(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54	한국자산신탁(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55	증권선물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6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7	(인천)계양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158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59	(충남)서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보고 안건	36	(충북)하나로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추진결과 보고
				37	(광주)창업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추진결과 보고
				38	(인천)신라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추진결과 보고
				39	2010년 상반기 신용협동조합 경영관리 관련 금융위원회 권한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40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주)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결과 보고
				160	에이오엔홀딩스유한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등 조치안
				161	메트라이프글로벌매니지먼트(주)의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
				162	교보생명보험(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10년	7월21일	제13차	의결 안건	163	(주)탑라인 보험대리점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64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65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66	국민연금의 한국전력 발행주식 소유한도 확대 승인안
				167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168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169	씨엘에스에이코리아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170	키움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171	동양종합금융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
				172	대우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
				173	아시아신탁(주)의 대주주 변경승인안
				174	(가칭)지지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175	(가칭)베스타스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76	(가칭)주알에이케이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77	아주아이비투자(주)의 (가칭)아주자산운용(주)에 대한 출자승인안 및 (가칭)아주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78	롯데카드(주)의 (주)이비카드에 대한 출자 승인안
				179	(주)다함넷의 (경기)삼신상호저축은행 주식 취득 승인안
				180	금융감독원 2010회계연도 특별예비비 사용 승인안
			보고 안건	41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2	2010년도 1/4분기 중 금융거래약관 처리결과 보고
2010년	8월9일	제1차 임시 회의	의결 안건	181	케이디비생명보험(주)에 대한 자본감소 인가안
				182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10년	8월18일	제14차	의결 안건	183	한국수출입은행의 동일인 및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초과 예외인정안
				184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85	한국신용정보(주) 등의 분할합병관련 예비인가안
				186	하나은행 국외지점 신설에 대한 사전협의안
				187	한국투자증권(주)에 대한 종합검사 및 서광주지점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17	신영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예비인가안(재상정 안건)
				188	(주)한국토지신탁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안
				189	(광주)무등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
				190	웅진금융제일유한회사의 (경기)늘푸른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191	웅진금융제이유한회사의 (서울)서울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보고 안건	4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보고
				44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약관(안) 검토
				46	행정지도 존속기한 연장보고
				47	은행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8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49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0	2010년 상반기중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이전 및 사무소 폐쇄신고 처리 상황 보고
				192	금산법 제24조 운용규제 개선방안
				193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94	(주)이크레더블의 신용정보업 영위 허가안
				195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96	하이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197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10년	9월1일	제15차	의결 안건	198	키움증권(주)의 (가칭)키움자산운용(주)에 대한 출자승인안 및 (가칭)키움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99	흥국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200	하나대투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조건 취소안
				201	미래에셋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조건 취소안
				202	노무라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폐지승인안
				203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204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205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06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07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08	아이비케이연금보험(주)의 보험업 허가안
				209	(가칭)아이비케이연금보험(주)의 금융투자업 겸영 인가안
				210	(부산)파랑새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11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보고 안건	51	(서울)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 결과보고
				5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고
				5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고
				54	2010년도 상반기 보험부문 금융위원회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212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13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14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15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10년	9월17일	제16차	의결 안건	216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17	바클레이즈은행피엘씨에 대한 과태료 부과등 조치안
				218	테마섹 홀딩스 등의 (주)하나금융지주 주식보유 승인안
				219	케이에스신용정보의 신용정보업 영위 허가안
				220	국민신용정보(주) 일부업무정지 조치안
				221	케이디비칸서스밸류 유한회사의 케이디비생명보험(주) 대주주 변경 승인 안
				222	케이디비생명보험(주)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안
				22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상호저축은행법 개정 관련)
				224	(대구)삼익신용협동조합과 (경북)다산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안
				225	(경기)화량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26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227	에스케이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 예비인가안
				228	(가칭)베스타스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229	(가칭)주알에이케이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230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보고 안건	55	2010년도 상반기 금융지주회사 부문 금융위원회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 고
				56	2010년도 2/4분기 금융거래약관의 처리결과보고
				57	2010년도 2/4분기중 전자금융업 등록(등록말소) 및 전자금융거래 약관 처리결과보고
				58	(서울)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정상화 추진 결과 보고
				59	2010년 2/4분기중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위 위탁업무 처리결 과 보고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60	주택 실수요자의 거래 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시행 보고

## 2007년 증권선물위원회 목록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7년1월17일	제1차	의결 안건	1	증권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및 규정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2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중 개정규정 승인안
			3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중 개정규정 승인안
			4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선물시장업무규정중 개정규정 승인안
			5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선물시장수탁계약준칙중 개정규정 승인안
			6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주)의 자산운용업 겸영허가안
		보고 안건	1	위탁업무처리결과 보고
2007년1월31일	제2차	의결 안건	7	대우증권(주)의 (가칭)르네상스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승인 안
			8	두산인프라코어(주) 등 201사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등 위반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9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1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2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3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4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5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6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7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8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9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0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1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2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3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4	동부한농화학(주) 주식의 직권재심 처리안
		보고	2	2006년도 4/4분기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안건	3	2006년도 불공정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결과 보고
2007년2월14일	제3차	의결 안건	25	000의 감사인에 대한 감리결과 처리안
			26	000 감리 관련 회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안
			27	000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안
			28	(주)큐론[구 (주)하이캠텍]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29	(주)코스모씨앤티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30	(주)세고엔터테인먼트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31	(주)티에스엠홀딩스[구 (주)시스맘네트웍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보고 안건	4	2007년도 감리실시계획 보고
2007년3월14일	제4차	의결 안건	3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33	굿앤리치자산운용(주)의 지배주주 변경승인안
			34	케이비생명보험(주)의 자산운용업 경영허가안
			35	대한화재해상보험(주)의 자산운용업 경영허가안
			36	000 前 직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37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8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9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40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41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42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43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44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45	000 대표이사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46	000 前 대표이사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47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48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49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50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51	000 임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52	000 대표이사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53	000 전 대표이사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54	000 등 7사 임원·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취득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55	(주)키이스트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56	(주)케드콤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57	(주)서울상호저축은행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58	(주)호텔신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59	(주)벽산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60	남한제지(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61	(주)소마시스코리아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62	(주)넷웨이브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007년3월28일	제5차	의결 안건	63	(주)씨오텍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64	교보증권(주)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경영인가안
			65	맥쿼리증권(주)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경영인가안
			66	메리츠증권(주)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경영인가안
2007년4월11일	제6차	보고 안건	5	증권회사 리스크관리 최소기준 보고
		의결 안건	67	큐렉소(주)[舊 코암나노바이오(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68	(주)으뜸상호저축은행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69	000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70	000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71	000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72	000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73	000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74	000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75	000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76	000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77	(주)이네트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78	사이버에듀이십일(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조치안
			79	대지개발진흥(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80	OOO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81	OOO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조치안
			82	OOO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OOO에 대한 조치안
		보고 안건	6	2007년도 제1차 품질관리감리 실시대상 선정결과 보고
			7	OOO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및 처리안 보고
			8	OOO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및 처리안 보고
2007년4월25일	제7차	의결 안건	83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중 개정규정 승인안
			8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중 개정규정 승인안
			85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중 개정규정 승인안
			86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중 개정규정 승인안
			87	선물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88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89	증권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및 규정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90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91	아이투자신탁운용(주)의 허가조건 변경 승인안
			92	(가칭)마이어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93	OOO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94	OOO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95	OOO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96	OOO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97	OOO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98	OOO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99	OOO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0	OOO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1	OOO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2	OOO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103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4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5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6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7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8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9	000 선물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10	000 대표이사 겸 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요구에 대한 이의 신청 처리안
			111	000 사실상 지배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요구 등에 대한 이의신 청 처리안
		보고 안건	9	000 및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보고
			10	2007년도 1/4분기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2007년5월9일	제8차	의결 안건	112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중 개정규정안 및 동 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113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중 개정규정 승인안
			11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중 개정규정 승인안
			115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중 개정규정 승인안
			116	(가칭)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117	000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18	000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19	000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보고 안건	11	000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처리안 보 고
			12	경남기업(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처리안 보고
			120	2006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면제 기업집단 인정안
			121	2007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업집단 등 선정안
			122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23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24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25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26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7년5월23일	제9차	의결 안건	127	OOO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28	OOO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29	OOO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30	OOO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31	OOO의 주식 불공정거래 및 공시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132	(주)큐엔텍코리아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33	(주)우리기술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34	(주)유비트론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35	대우전자부품(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36	(주)바텍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37	(주)웹투폰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보고 안건	13	2006사업연도 결합대상 계열회사 변동보고
			138	롯데관광개발(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39	케이알선물(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40	증권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및 동 규정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141	선물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및 동 규정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14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143	OOO 등 7사 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취득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144	에스와이(주)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45	오스템임플란트(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46	SK케미칼(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47	(주)골든프레임네트웍스 등 7사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48	OOO 등 7개사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49	OOO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50	OOO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51	OOO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52	OOO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53	OOO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7년6월20일	제10차	의결 안건	154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55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56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57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58	000 및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59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60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61	000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62	000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63	000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64	000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65	000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66	000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67	000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68	000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69	000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70	000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보고 안건	12	000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처리안 보고
			14	000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처리안 보고
			15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보고
2007년7월4일	제11차	의결 안건	171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중 개정규정 승인안
			172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중 개정규정 승인안
			173	(가칭)현대해상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174	녹십자생명보험(주)의 자산운용업 겸영허가안
			175	대한투자신탁운용(주)의 지배주주 변경 승인안
		보고 안건	16	위탁업무처리결과(기업회계기준서 등 개정) 보고
			176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77	랜드마크자산운용(주)의 지배주주 변경 승인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7년7월18일	제12차	의결 안건	178	(가칭)마이어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179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중 개정규정 승인안
			180	키움증권(주)의 한국아이티벤처투자(주)에 대한 출자 승인안
			181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중 개정규정 승인안
			182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중 개정규정 승인안
			183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중 개정규정 승인안
			184	2006년 하반기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등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185	OOO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186	OOO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187	OOO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188	OOO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189	OOO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190	OOO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91	OOO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92	OOO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93	OOO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94	OOO 직원의 면직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195	OOO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96	OOO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97	OOO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98	OOO 전 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보고 안건	17	2007년도 2/4분기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199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00	(가칭)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201	(주)다올부동산자산운용의 허가조건 변경 승인안
			202	마이어자산운용(주)의 허가조건 변경 승인안
			203	OOO(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04	(주)OOO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7년8월22일	제13차	의결 안건	205	(주)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06	000(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07	(주)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08	(주)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09	(주)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10	(주)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11	(주)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12	(주)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13	(주)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14	000(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15	(주)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16	000(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17	(주)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18	000(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19	(주)000 과징금 부과 및 前직원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요구에 대한 이의 신청 처리안
			220	(주)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21	(주)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22	(주)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23	(주)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24	(주)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25	(주)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26	(주)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27	(주)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28	(주)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29	(주)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30	(주)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31	(주)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32	(주)나노엔텍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33	마틴미디어(주)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4	(주)넥사이언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5	(주)제이엠피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6	AP우주통신(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7	(주)모델라인이엔티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8	(주)모라리소스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9	(주)티에스엠홀딩스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40	한국창업투자(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41	월드조인트(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42	(주)모티스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43	(주)카프코씨앤아이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44	(주)솔빛텔레콤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45	(주)레드캡투어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007년9월5일	제14차	의결 안건	246	(주)000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247	(주)000의 연결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248	(주)000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249	(주)000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250	(주)한국공인회계사회 내규 중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251	(주)솔트웍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252	한국기술산업(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253	000(주)의 분기보고서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안
			254	동부증권(주)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겸영인가안
			255	서울증권(주)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겸영인가안
			256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257	맥쿼리아이엠엠자산운용(주)의 지배주주 변경 승인안
		보고 안건	18	2007년도 제2차 품질관리감리 실시대상 선정결과 보고
			19	집단소송법 적용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회계감리업무 운영방안 보고
			258	(주)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7년9월19일	제15차	의결 안건	176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59	(가칭)한신정평가㈜의 신용평가업 허가안
			260	랜드마크자산운용(주)과 아이엔지자산운용(주)의 합병인가안
			261	'07 2/4분기 임원·주요주주 소유주식보고서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심사 결과 조치안
			262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63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64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65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66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67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68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69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70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71	㈜000 직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272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73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74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75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76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77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78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79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80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81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82	㈜000 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안
			283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28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285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7년10월10일	제16차	의결 안건	286	한국증권선물거래소 회원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287	(주)000의 연결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288	(주)000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289	000(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290	000(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291	(주)000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292	(주)000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293	000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294	000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295	000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296	000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297	현대정보기술(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298	(주)텔레윈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299	(주)유비스타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2007년10월24일	제17차	의결 안건	300	(주)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01	000(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02	000(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03	000(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04	(주)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05	000(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06	(주)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07	(주)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08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09	(주)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10	(주)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11	(주)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12	(주)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13	(주)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314	(주)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15	(주)000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316	(주)젠컴이앤아이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17	(주)나노엔텍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18	(주)엔터원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19	(주)디엠에스플렉스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20	(주)월덱스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0	2007년도 3/4분기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2007년 11월21일	제18차	의결 안건	321	(주)한진중공업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22	증권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및 증권업감독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 세칙 승인안
			323	블리스자산운용(주)의 지배주주 변경 승인안
			324	'07 3/4분기 임원.주요주주 소유주식보고서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심사 결과 조치안
			304	(주)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25	(주)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26	(주)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27	(주)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28	(주)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29	(주)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30	(주)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31	(주)000 前 직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332	(주)000 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안
			333	(주)000 과징금 부과 및 前 이사 이규택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334	(주)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35	(주)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36	(주)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37	(주)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38	(주)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39	(주)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340	(주)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41	(주)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42	(주)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43	(주)000(舊 000(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344	(주)000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345	(주)000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346	(주)000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347	(주)키이스트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안
			348	샘표식품(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보고 안건	21	위탁업무처리결과(기업회계기준서 개정) 보고
2007년12월5일	제19차	의결 안건	349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50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51	서울증권(주)과 서울자산운용(주)의 (가칭)서울자산제2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승인안
			352	(가칭)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353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 승인안
			354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 일부개정안
			355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 일부개정안
			356	태화일렉트론(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57	오양수산(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58	넥서스투자(주) 등 2개사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59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60	한화증권(주)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경영인가안
			361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주)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경영인가안
			362	증권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및 증권업감독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 승인안
			363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6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65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선물시장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66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선물시장수탁계약준칙 일부개정규정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7년12월18일	제20차	의결 안건	367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68	(주)000 주식의 대량보유상황보고 위반 등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369	(주)000 주식의 대량보유상황보고 위반 등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370	2007년 1/4분기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등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371	(주)신지소프트의 증권거래법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72	(주)시큐리티코리아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73	케이앤웨이브(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21	(주)000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74	(주)000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75	(주)000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76	(주)000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77	(주)000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78	(주)000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79	(주)000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80	(주)000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81	(주)000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82	000(주) 직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383	(주)000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84	(주)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85	(주)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86	000(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87	(주)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88	(주)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89	(주)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90	(주)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91	(주)000[구 (주)000]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392	(주)000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393	000(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394	000(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395	000(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396	(주)000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397	(주)000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348	샘표식품(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398	(주)한텔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399	(주)삼화네트웍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400	산양전기(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401	(주)000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402	회계감사기준 일부개정 승인안
		보고 안건	22	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 일부개정 보고
			23	위탁업무처리결과 보고('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정)
			24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 보고

## 2008년 증권선물위원회 목록

일자	회사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1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	000(주) 등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4	증권선물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가칭) 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6	(가칭) 얼라이언스벤처스타인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7	(가칭) 블랙록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8	오영수의 KIDB채권중개(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
			9	현대자동차(주) 등의 신흥증권(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
			10	밸류에프투유한회사의 리딩투자증권(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
			11	동양종합금융증권(주)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겸영인가안
			12	SK증권(주)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겸영인가안
			13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겸영인가안
			14	유비에스증권리미티드 서울지점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겸영인가안
			15	노무라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겸영인가안
			16	(주)000 주식의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17	(주)000 주식의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18	(주)000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19	2007년 2/4분기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등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20	2007년 4/4분기 임원·주요주주 소유주식보고서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심사결과 조치안
			21	페이퍼코리아(주)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2	동신건설(주)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	(주)세라텍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4	시큐리티코리아(주)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5	(주)에당온라인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6	세기상사(주)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08년 3월 26일	제1차	의결 안건	27	(주)씨티엘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8	(주)모나미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9	(주)에너지원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0	한성기업(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1	엠텍반도체(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2	(주)한솔교육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3	(주)메타바이오메드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4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5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6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7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8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9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40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41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42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43	000(주) 이사 000의 소유주식 보고의무위반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44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45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46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47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48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49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50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51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52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53	선물거래법 제51조(해외선물거래)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54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55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56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57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58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59	000(주) 전 대표이사 000의 주식처분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보고 안건	1	위탁업무처리결과 보고(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 개정)
08년 4월 8일	제2차	의결 안건	60	(주)000 및 (주)000의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실시안
			61	(가칭)아이엠엠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62	(가칭)LS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63	(가칭)더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08년4월23일	제3차	의결 안건	64	(주)000 감리조치 관련 000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 000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안
			65	000 주식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66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67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68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69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70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71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72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보고 안건	2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보고
			3	2008년도 1/4분기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73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74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75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규정(3개) 일부개정규정안
			76	(가칭)IBK투자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77	(가칭)KTB투자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78	(가칭)SC제일투자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79	(가칭)STX투자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08년5월7일	제4차	의결 안건	80	(가칭)토러스투자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81	(가칭)한국씨티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82	(가칭)KTIC투자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83	(가칭)LIG투자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84	(가칭)바로증권중개(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85	(가칭)와우증권중개(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86	(가칭)한맥증권중개(주)의 증권업 예비허가 및 한맥선물(주)의 (가칭)한맥증권중개(주)에 대한 출자승인안
			87	(가칭)ING증권중개(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88	(가칭)스카이증권중개(주)의 증권업 예비허가 및 스카이투자자문(주)의 (가칭)스카이증권중개(주)에 대한 출자승인안
			89	(가칭)리먼브러더스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 및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과의 영업양수도 예비인가안
			90	(가칭)흥국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91	(가칭)BNP파리바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08년5월21일	제5차	의결 안건	92	000 등 6사의 임원·주요주주소유주식보고서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심사결과 조치안
			93	(가칭)에이아이지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94	(가칭)현대스위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95	마이어자산운용(주)의 허가조건 변경 승인안
			96	000 주식의 대량보유상황보고 의무위반 등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
			97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
			98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
			99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
			100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
			101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
			102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
			103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
			104	000 등 34개 종목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
			105	엔디코프(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6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
			107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108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
			109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
			110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
			111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
			112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
			113	2008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업집단 등 선정안
			114	2007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면제 기업집단 인정안
		보고 안건	4	2007사업연도 중 결합대상계열회사 변동보고
08년6월11일	제6차	의결 안건	115	(가칭)엠플러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116	(가칭)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117	(가칭)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118	(가칭)아이엠엠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119	영진약품공업(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20	(주)홍익상호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121	(주)양풍(舊 파라다이스)상호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122	(주)현대상호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123	(주)전일상호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124	(주)도민상호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125	(주)하나로상호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126	(주)조이토토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27	오피스(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28	(주)셀런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29	(주)에이트픽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30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31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32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33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34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135	㈜○○○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36	㈜○○○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37	㈜○○○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38	㈜○○○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39	㈜○○○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40	㈜○○○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41	㈜○○○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42	㈜○○○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43	㈜○○○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보고 안건	5	2008년도 감리실시 및 선정계획 보고
			6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품질관리감리 처리결과 보고
			7	㈜○○○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처리안 보고
			8	㈜○○○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처리안 보고
			144	㈜씨앤중공업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45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46	선물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47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선물시장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48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선물시장수탁계약준칙 일부개정규정안
			149	증권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50	(주)두산캐피탈의 비엔지증권중개(주) 대주주변경 승인안
			151	㈜○○○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52	㈜○○○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53	㈜○○○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54	㈜○○○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55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56	○○○(주) 주식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157	㈜○○○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58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08년6월25일	제7차	의결 안건	159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60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61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62	(주)○○○ 주식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163	(주)○○○ 주식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164	(주)엠피오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65	(주)케이씨오에너지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66	(주)큐리어스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67	위디츠(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68	제이에스(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69	(주)나래원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70	(주)파로스이앤아이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71	(주)에코솔루션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72	(주)코스모스피엘씨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73	(주)케이디이컴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74	엔디코프(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08년7월9일	제8차	의결 안건	175	(가칭)메리츠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 (가칭)메리츠자산운용과 메리츠종합금융(주)과의 자산운용업 영업양수도 및 메리츠종합금융(주) 의 자산운용업 영업폐지 인가안
			176	(가칭)블랙록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177	(가칭)더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178	(가칭)RG에너지자원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179	(가칭)GS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보고 안건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보고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보고
			11	금융투자업규정 제정안 보고
			180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81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82	(주)○○○ 및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08년7월23일	제9차	의결 안건	183	○○○(주)의 분기보고서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45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84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85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86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87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88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89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90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91	2007년 하반기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등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192	「간접투자증권 판매업무담당 임직원 교육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193	(가칭)얼라이언스번스타인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194	(가칭)에이아이지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195	(가칭)엘에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196	(가칭)현대스위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197	(가칭)지에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198	(가칭)알지에너지자원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199	피닉스자산운용(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200	교보투자신탁운용(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201	금융투자업규정안
			202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의 증권업 및 선물업 허가안
			203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의 증권업 및 선물업 허가안
			204	케이티비투자증권(주)의 증권업·선물업 허가 및 (가칭)케이티비캐피탈(주)에 대한 출자승인안
			205	비엔피파리바증권(주)의 증권업 및 선물업 허가안
			206	토러스투자증권(주)의 증권업 및 선물업 허가안
			207	엘아이지투자증권(주)의 증권업 및 선물업 허가안
			208	애플투자증권중개(주)의 증권업 및 선물업 허가안
			209	바로증권중개(주)의 증권업 허가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08년8월20일	제10차		210	아이엔지증권중개(주)의 증권업 허가안
			211	하나대투증권(주)의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경영인가안
			212	엔에이치투자증권(주)의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경영인가안
			213	도이치증권(주)의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경영인가안
			214	제이피모간증권 서울지점의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경영인가안
		보고 안건	12	2008년도 2/4분기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의결 안건	215	회계감사위탁감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216	회계감사 품질관리감리 업무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217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18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19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20	(주)○○○ 주식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221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22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23	(주)청람디지털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24	(주)도움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25	(주)코디너스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26	(주)모빌탑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27	(주)해인아이앤씨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28	(주)에스피코프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29	(주)유성티에스아이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0	아이메카(주)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1	(주)소예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2	(주)넥사이언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3	(주)코리아토바코컴퍼니 주식 매출행위에 대한 증권거래법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234	STX엔파코(주) 주식 매출행위에 대한 증권거래법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235	월드파워텍(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6	(주)비엔디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37	(주)케이에스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8	(주)모코코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9	(주)필룩스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40	(주)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보고 안건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고
			14	2007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접수내용
08년9월10일	제11차	의결 안건	241	(주)○○○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242	(주)분당상호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243	메디에스앤피(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244	(주)에이엠에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245	(주)아이씨코퍼레이션의 분기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46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247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248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249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250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251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08년9월24일	제12차	의결 안건	252	(주)현대미포조선의 씨제이투자증권(주) 및 씨제이자산운용(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
			253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54	○○○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55	○○○ 종목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56	2008년 상반기 임원·주요주주 소유주식보고서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심사결과 조치안
			257	○○○(주) 주식의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258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59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60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61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62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일자	회사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63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64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65	(주)○○○ 주식에 대한 과징금 분납요청 처리안
			266	한국투자신탁운용(주) 등 2개사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267	KB투자증권(주) 등 3개사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268	지앤에이케이비아이씨사모투자전문회사의 이트레이드증권(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
08년9월30일	임시 제1차	의결 안건	269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270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보고 안건	15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매수주문 특례승인 보고
			271	○○○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72	(주)로엔케이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73	네스텍(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274	아시아신용정보(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275	(주)엘제이엘에너지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276	넷시큐어테크놀로지(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277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78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79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80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81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82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83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84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85	○○○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86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87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88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89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08년10월22일	제13차		290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91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92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93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94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95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96	(주)엔블루와이드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97	(주)삼협글로벌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98	(주)사인시스템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99	한국오발(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00	(주)아이씨코리아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01	새한정보시스템(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02	시큐리티코리아(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03	(주)씨라텍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04	(주)브이에스에스티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05	(주)한국하이네트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06	(주)엘제이엘에너지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보고 안건	16	2008년도 3/4분기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17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정 보고
			18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4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 확정급여 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 제정 보고
08년11월5일	제14차	의결 안건	307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 등 112사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308	한국인프라자산운용(주)의 허가조건 변경 승인안
			309	(주)스카이뉴팜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310	(주)포이보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311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312	○○○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313	○○○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314	○○○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315	○○○에 대한 품질관리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
08년11월19일	제15차	의결 안건	316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17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18	하나대투증권(주)와 하나IB증권(주)의 합병 인가안
			319	Deutsche Holdings (Malta) Ltd.의 도이치증권(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
			320	유진투자증권(주)의 우리담배판매(주) 출자 승인안
			321	교보증권(주)등 51개사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322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23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보고 및 단기매매차익반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24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25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26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27	○○○(주) 우선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28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29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30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31	(주)○○○ 임원·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처 리안
		보고 안건	19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보고
08년12월10일	제16차	의결 안건	332	(주)다회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333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334	(주)새누리상호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335	(주)파로스이앤아이의 분기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36	외부감사인의 'IFRS 도입용역' 관련 직무제한범위 운용방안
			337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증권서울지점에 대한 영업의 일부정지 및 긴급 조치 연장안
			338	에스에이치자산운용(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339	신한비엔피파리바투자신탁운용(주)와 에스에이치자산운용(주)의 합병 인가 안
			340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08년12월24일	제17차	의결 안건	341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42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43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44	증권선물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45	키움증권(주)의 키움인베스트먼트(주) 출자 승인안
			346	노무라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 등 27개사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347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48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49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50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51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52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53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54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55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56	(주)○○○ 주식관련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357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58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59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60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61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62	(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63	(주)트루맥스의 공시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64	(주)샤인시스템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처리안
			365	(주)비츠로테크 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366	(주)삼성수산 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367	2008년 상반기 대량보유상황보고 위반 등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368	㈜○○○ 등 4개사 주식의 대량보유상황보고 위반 등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369	㈜○○○ 주식의 단기매매차익 심사결과 조치안
			370	외화환산 회계처리 관련 기업회계기준 등 수정요구안
		보고 안건	20	「외부평가기관의 부실평가 등에 대한 제재기준」 보고
			21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개정 보고
			22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개정 보고
			23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연결재무제표' 개정 보고
			24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개정 보고
			2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 '사업결합' 등 개정 보고
			2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등 개정 보고
			27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원가'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 등 개정 보고
			28	'금융자산의 분류변경'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 등 개정 보고
			29	'פות가능 금융상품과 청산시 발생하는 의무'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2호 등 개정 보고
			30	'가득조건과 취소'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2호 개정 보고
			31	'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5호 등 개정 보고

## 2008년 증권선물위원회 목록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8년1월30일	제1차	의결 안건	1	국민은행의 한누리투자증권(주) 지배주주변경 승인안
			2	에스엠애포트너스제일차유한회사의 케이지아이증권(주) 지배주주 변경 승인안
			3	홍콩상하이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주식선물업 경영허가안
			4	(주)○○○ 전 직원의 ○○○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5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6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7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8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9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1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2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3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4	○○○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5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6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보고 안건	1	2007년도 4/4분기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2	2007년도 불공정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결과 보고
			17	(가칭)메리츠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18	(가칭)DH부동산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19	(가칭)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20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일 부개정세칙 승인안
			21	증권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2	선물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3	(주)포넛의 한맥선물(주) 지배주주 변경승인 심사유예안
			24	○○○(주)[구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8년2월20일	제2차	의결 안건	25	000(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26	000(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27	(주)000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28	000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29	000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30	000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31	000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32	(주)케드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 안
			33	(주)000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34	공인회계사 000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안

## 2009년 증권선물위원회 목록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9년1월7일	제1차	의결 안건	1	(가칭)아이엔지부동산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2	(가칭)아센다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3	(가칭)제이피트러스트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4	(가칭)에이플러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5	(가칭)삼천리맥쿼리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6	(가칭)현대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7	노무라인터내셔널증권 및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의 영 업양수도 인가안
			8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선물시장업무규정 전부개정규정안
			9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정관 일부변경 승인안
			10	증권예탁결제원 정관 일부변경 인가안
		보고 안건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11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2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3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4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5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6	(주)○○○ 주식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17	(주)○○○ 주식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18	○○○(주) 주식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19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0	○○○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1	○○○ 등 3개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2	○○○(주) 주식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23	(주)○○○주식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24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정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9년1월21일	제2차	의결 안건	25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26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27	증권범죄조사 사무처리 규정 제정안
			28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29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분쟁조정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30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31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중 개정규정 승인안
			32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공시규정중 개정규정 승인안
			33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4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5	한국증권업협회·선물협회·자산운용협회의 합병 및 금융투자협회 정관 승인안
			36	한국증권선물거래소 회원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37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38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39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40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41	자산유동화업무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42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43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무 인가지침 일부개정지침안
			44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45	(주)경남은행 등 47개사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46	한맥선물(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47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48	흥국쌍용화재보험(주)의 자산운용업 폐지 인가안
		보고 안건	3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보고
			49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50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51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9년2월25일	제3차	의결 안건	52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53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54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55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56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57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58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59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60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61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62	○○○(주) 감리조치 관련 공인회계사 ○○○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안
			63	(주)○○○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신청 결정안
			64	(주)뉴젠비아이티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65	(주)에스티앤아이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66	(주)온누리 에어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67	(주)헤썬나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68	오펜스(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69	테스텍(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70	한국슈넬제약(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71	(주)펜타마이크로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72	한국개발금융(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73	(주)이노지디엔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74	(주)스포츠서울21 임원 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75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76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77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78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79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일자	회사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80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81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82	○○○(주) 주식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83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보고 안건	4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보고
			5	2008년도 불공정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결과 보고
			6	○○○, ○○○, ○○○,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개선권고사항의 이행점검 결과 보고
			7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처리안 보고
09년3월11일	제4차	의결 안건	84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승인안
			85	한화투자신탁운용(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86	피델리티자산운용(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87	(주)○○○의 분기보고서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88	(주)○○○의 반기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89	(주)○○○ 및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90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보고 안건	8	2009년도 감리실시 및 선정계획 보고
			9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 개선방안 보고
			10	위탁업무처리결과 보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및 기업회계기준 제70조의2 개정)
			11	위탁업무처리결과 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12	위탁업무처리결과 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 개정)
			13	위탁업무처리결과 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14	위탁업무처리결과 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정)
			15	위탁업무처리결과 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제정)
			91	(가칭)아시아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92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93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09년 4월8일	제5차	의결 안건	94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95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96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97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98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99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0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1	(주)○○○ 등 4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2	(주)○○○ 및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3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4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5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6	○○○(주) 주식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107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108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109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110	000 정관 일부변경 승인안
			111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안 및 영업의 일부정지와 긴급조치 연장 보고
		보고 안건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7	○○○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보고
09년4월13일	제1차	서면 의결	110	000 정관 일부변경 승인안
09년5월4일	제6차	의결 안건	112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13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14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15	○○○(주), (주)○○○,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16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17	(주)○○○의 ○○○(주) 대주주 변경승인 위반 관련 조치안
		보고	1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7호 "금융상품 : 공시"에 대한 개정결과 보고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안건	19	○○○(주)의 ○○○(주) 대주주 변경승인 위반 관련 보고
09년5월13일	제7차	의결 안건	118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19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20	(주)○○○의 분기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21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122	(주)○○○의 분기보고서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23	○○○(주)의 연결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24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09년5월27일	제8차	의결 안건	125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126	(주)휴리프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27	(주)비엔알엔터프라이즈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28	(주)봉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29	(주)리노셀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30	(주)확인영어사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31	(주)사이버패스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32	(주)에듀언스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33	(주)삼에스코리아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34	유씨아이콜스(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35	(주)한텔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36	케이엔에스홀딩스(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37	(주)두림티앤씨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38	(주)한도하이테크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39	플래닛팔이(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40	(주)청람디지털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41	(주)아이비네트워크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42	(주)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43	(주)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44	(주)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전 유형	번호	제 목
			145	(주)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46	(주)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47	(주)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48	(주)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49	(주)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50	(주)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51	2009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업집단 등 선정안
			152	(가칭)맥쿼리삼천리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153	○○○(주)의 ○○○위반 관련 조치안
		보고 안전	20	○○○(주) 임원의 대주주변경승인 위반여부 검토보고
			21	2008 사업연도 중 결합대상계열회사 변동보고
			22	(주)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보고
			23	(주)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보고
09년6월10일	제9차	의결 안전	154	(주) ○○○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결과 조치안
			155	(주)아이잭앤컴퍼니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 결과 조치안
			156	오리엔스금속(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157	현대증권(주)의 출자승인 및 (가칭)현대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158	(가칭)아이엔지부동산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보고 안전	20	○○○(주)의 ○○○위반여부 검토보고
			24	2007년 하반기 품질관리감리 실시결과 개선권고사항 이행여부 검토 보고
			25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품질관리감리 처리결과 보고
			159	기업구조조정조합등록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60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6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162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163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16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65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일부개정 승인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09년6월24일	제10차	의결 안건	166	(주)씨모텍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67	(주)상보의 분기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68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69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70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71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72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73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74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75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76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09년7월8일	제11차	의결 안건	177	동양이엔피(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78	(주)원드스카이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79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80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81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82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83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84	농업회사법인오담생명환경(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85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86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87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88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처리안
			189	(가칭)노무라이화자산운용(주)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90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및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191	○○○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192	○○○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93	○○○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194	○○○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95	○○○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96	○○○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97	○○○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98	○○○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99	○○○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00	○○○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01	○○○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02	○○○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03	○○○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04	○○○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05	○○○의 대주주 심사 배제 인정 및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보고 안건	26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현황에 대한 보고
			206	일몰제 적용을 위한 금융위원회 규정 등 고시 일괄정비안
			207	○○○(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208	(가칭)아쎄다스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209	○○○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10	○○○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11	○○○증권○○○회사 출자승인안
			154	舊 (주)중부상호저축은행[(주)현대스위스삼상호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212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13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14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15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16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17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18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19	○○○등 ○○○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09년7월22일	제12차	의결 안건	220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21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22	○○○(주) 주식에 대한 이의신청 조치안
			223	(주)대한은박지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24	(주)사라콤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25	영풍제지(주)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26	(주)시노팩스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27	(주)테라리소스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28	(주)비엔알엔터프라이즈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29	(주)야호커뮤니케이션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0	(주)에이치원바이오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1	(주)씨앤중공업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2	(주)트라이콤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3	(주)희훈디앤지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4	(주)엑스씨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5	(주)대유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6	(주)블루스톤디앤아이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7	(주)포넛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8	(주)아원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9	(주)정원엔시스템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40	(주)미디어코프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보고 안건	27	기업회계기준서 제104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제정 결과 보고
			2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2117호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에 대한 제정 결과 보고
			29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에 대한 제정 결과 보고
			30	"내재 파생상품"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2109호 등 개정결과 보고
			3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등에 대한 개정 결과 보고
			32	2009년도 상반기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241	(주)○○○(舊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09년 8월26일	제13차	의결 안건	242	(가칭)㈜무궁화신탁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243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44	미래에셋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245	하나대투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246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247	엘아이지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248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보고 안건	33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49-55 "분할·분할합병에 관한 회계처리" " 개정 결과 보고
09년 9월2일	제14차	의결 안건	207	현대스위스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249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250	㈜○○○ 등 3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51	○○○(주) 등 4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52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53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54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55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56	㈜○○○ 및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57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58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59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60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61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41	(주)케이디세코(舊 (주)신명비앤에프)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의결 안건	262	우리아비바생명보험(주)의 금융투자업 겸영 인가안
			263	○○○(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64	○○○(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65	○○○(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66	○○○(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09년9월16일	제15차		267	○○○㈜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68	○○○㈜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69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업무규정 일부 개정규정승인안
			270	(주)○○○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결정안
		보고 안건	34	2008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접수내용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09년9월30일	제16차	의결 안건	271	에이치엠씨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272	블리스자산운용(주)의 대주주변경 승인안
			273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74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75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76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77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78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79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80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81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82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83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84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85	(주)블루스톤디앤아이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286	(주)네오리소스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87	(주)블루럼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88	(주)중앙바이오텍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89	(주)엔엔티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90	(주)제네시스엔알디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91	네스텍(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92	모빌링크텔레콤(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93	(주)에신펜제이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94	(주)지한정보통신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95	케이엔에스홀딩스(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96	(주)대우솔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97	(주)메카포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98	○○○(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보고 안건	3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7	단기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안 보고
			38	2008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접수내용 보고
09년10월14일	제17차	의결 안건	299	국제신탁(주)의 대주주 변경승인안
			300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30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상장규정 및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
			302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303	회계감사 품질관리감리 업무규정 중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304	(주)리노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305	(주)네오리소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306	(주)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의 분기보고서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07	(주)코스모스피엘씨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308	(주)한주상호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309	(주)무등상호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310	(주)한일상호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311	○○○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312	(주)대한은박지의 분기보고서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보고 안건	39	소액공모 공시서류 허위기재 관련 조치에 대한 검토내용
			313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14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15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16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09년10월28일	제18차	의결 안건	317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18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19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20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21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09년11월11일	제19차	의결 안건	322	(가칭)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323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324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325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326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327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328	○○○의 금융투자업 변경예비인가안
			329	○○○(주) 감리조치 관련○○○회계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안
			330	(주)비엔디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안
		보고 안건	40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 개정결과 보고
			41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연결재무제표” 개정결과 보고
			42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개정결과 보고
			43	기업회계기준서 제105호 “신탁업자의 신탁계정” 제정결과 보고
			331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332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333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334	○○○의 금융투자업 변경 예비인가안
			335	○○○의 금융투자업 변경 예비인가안
			336	○○○ 등의 ○○○에 대한 출자승인안
			337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338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339	(주)케이엠에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340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09년11월25일	제20차	의결 안건	341	(주)해세나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342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343	(주)카라반케이드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344	(주)플러스프로핏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345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346	티이씨(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347	(주)파캔오피씨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348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349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350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351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352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53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54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55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56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57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58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59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60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61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62	(주)○○○주식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363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64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65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66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67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368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09년12월9일	제21차	의결 안건	369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370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371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372	○○○의 금융투자업 변경 변경인가 및 ○○○와의 영업양수도 승인안
			373	○○○및 ○○○간 금융투자업 양수도 등에 대한 승인안
			374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75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376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377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78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379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380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81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82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83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의결 안건	384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등예탁업무규정 및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일부개정 규정 승인안
			385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386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387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388	(가칭)피에스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389	(가칭)파인트리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390	(가칭)캡스톤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391	(가칭)새한자산신탁(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392	(주)신명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393	(주)○○○의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실시안
			394	(주)○○○주식 및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95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96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9년12월23일	제22차		313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97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98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99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400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401	(주)○○○주식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402	(주)대우솔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403	비전하이테크(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404	(주)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405	(주)유성티에스아이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406	(주)제네시스엔알디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보고 안건	44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제정 결과 보고
			45	IFRS하에서의 질의회신제도를 위한 K-IFRS 질의회신연석회의 설치운 영방안
			4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에 대한 개정결과 보고
			4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개정결과 보 고



## 2010년 증권선물위원회 목록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10년1월6일	제1차	의결 안건	1	(주)코람코자산신탁의 출자승인·대주주 요건심사대상 제외 인정 및 (가칭)(주)코람코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	(주)유틸렉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3	(주)스타맥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4	(주)위너스인프라인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5	(주)하이스마텍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6	(주)케이에스리소스의 분기보고서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7	(주)신지소프트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8	태광관광개발(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조치안
			9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0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2010년1월20일	제2차	의결 안건	11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12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13	○○○의 금융투자업 변경 예비인가안
			14	○○○의 금융투자업 변경 예비인가안
			15	(주)트라이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2	(주)유틸렉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6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7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8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9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0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1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2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보고 안건	1	2009년도 하반기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2	기업회계기준서 제5001호 “결합재무제표” 제정결과 보고
			3	2009년도 감사인 선임 및 지정결과 보고

일자	회차	안전 유형	번호	제 목
2010년2월3일	제3차	의결 안전	23	(주)○○○ 감리조치 관련 ○○○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안
			24	○○○(주)의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실시안
			25	○○○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26	○○○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27	○○○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28	○○○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2010년2월24일	제4차	의결 안전	29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0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1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2	○○○(주), (주)○○○,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3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4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5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6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7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8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9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40	(주)○○○ 등 15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41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42	○○○ ELW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43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위반 등에 대한 조치안
			44	(주)일공공일안전컨택트(舊 (주)엔블루와이드)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45	한국자산신탁(주)의 대주주 변경승인안
			46	(주)다올신탁의 대주주 변경승인안
			47	(가칭)(주)코람코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48	(가칭)파인트리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49	○○○및 ○○○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50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51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52	○○○의 금융투자업 변경 예비인가안
			53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및 ○○과의 합병 승인안
			54	○○○(주)과 ○○○(주)의 합병 및 단기금융업무 인가안
		보고 안건	4	2009년도 불공정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결과 보고
2010년3월10일	제5차	의결 안건	55	아시아신탁(주)의 인가조건 변경승인안
			56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2010년3월24일	제6차	의결 안건	57	(가칭)노무라이화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58	트러스트자산운용(주)의 인가조건 변경승인안
			59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60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61	금융투자업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62	(주)중앙디자인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63	(주)지오엠씨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64	(주)쓰리소프트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65	(주)솔라엔텍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66	(주)모라리소스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67	(주)카이시스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68	(주)위너스인프라인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69	(주)바이오하이테크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70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71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72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73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74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75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76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77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78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79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80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81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82	(주)○○○의 분기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83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보고 안건	5	2010년도 감리실시 및 선정계획 보고
2010년4월13일	제7차	의결 안건	84	○○○의 금융투자업 인가 및 ○○○과의 영업양수도 승인안
			85	한국예탁결제원 정관 일부변경 승인안
			86	한국거래소 정관 일부변경 승인안
			87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88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89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90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9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92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93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94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95	○○○(주)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96	(주)재현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97	코디콤(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98	스멕스(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99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0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1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10년4월28일	제8차	의결 안건	102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3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4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5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6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7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8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9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10	○○○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11	(가칭)캡스톤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112	(가칭)지지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13	솔로몬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 예비인가안
			114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 예비인가안
			115	하이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 예비인가안
			116	○○○의 금융투자업 폐지 및 해산 승인안
2010년5월20일	제9차	의결 안건	117	(가칭)제이피에셋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118	(가칭)피에스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119	○○○의 금융투자업 변경예비인가안
			120	○○○의 금융투자업 변경예비인가안
			121	○○○의 금융투자업 변경예비인가안
			122	○○○의 ○○○ 대주주 변경 및 출자승인안
			123	○○○의 ○○○ 주식취득에 대한 사후 출자승인안
			124	○○○의 ○○○ 주식취득에 대한 사후 출자승인안
			125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126	2010사업연도 결산재무제표 작성기업집단 등 선정안
			127	2009사업연도 결산재무제표 작성면제기업집단 인정안
			128	㈜○○○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전 유형	번호	제 목
		안전	129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30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31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32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33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보고 안전	6	2009사업연도 중 결합대상계열회사 변동보고
			7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품질관리감리 처리결과 보고
2010년5월26일	임시1차	의결 안전	134	네오세미테크(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010년6월1일	제10차	의결 안전	135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36	(주)정원엔시스템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37	해원에스티(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38	(주)고제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39	(주)코어비트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40	(주)퓨처인포넷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41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42	엘엔지특수전선(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43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44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45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46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47	삼원테크(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48	(주)오라바이오텍스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49	(주)엘림에듀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50	(주)이룸텍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51	페이퍼코리아(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52	(주)케이에스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53	엠씨티티코어(주)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154	(주)태창파로스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010년6월16일	제11차	의결 안건	155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156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157	○○○의 금융투자업 변경예비인가안
			158	○○○의 증권업 허가조건 취소 및 대주주 변경 승인안
			159	(가칭)한맥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60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처자산운용(주)의 인가조건 취소 승인안
			161	마이어자산운용(주)의 대주주 변경승인안
			162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163	(주)코다코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64	동산진흥(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65	(주)아이디엔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66	(주)이앤텍 분기보고서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67	(주)모비덱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68	(주)이비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69	(주)희훈디앤지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70	(주)에버리소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2010년6월30일	제12차	의결 안건	171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72	(주)○○○ 우선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73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74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75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76	(주)중앙디자인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177	증권선물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78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179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180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10년7월14일	제13차	의결 안건	181	○○○의 ○○○ 관련 제한완화 승인안
			182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183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184	(가칭)지지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185	(가칭)베스타스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86	(가칭)(주)알에이케이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87	(가칭)아주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88	아시아신탁(주)의 대주주변경 승인안
			189	(주)단성일렉트론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190	(주)투미비티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191	(주)제료원인터랙티브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192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93	(주)지케이파워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94	(주)포네이처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95	(주)제네시스엔알디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96	(주)이루넷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97	(주)현대금속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98	(주)쌈지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99	(주)에이스일렉트로닉스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00	우리담배판매(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01	(주)에스피코프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02	(주)아구스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03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04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05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06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07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8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09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보고 안건	8	2010년도 상반기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2010년8월25일	제14차	의결 안건	210	금산법 제24조 운용규제 개선방안
			211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12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213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214	○○○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215	○○○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조건 취소안
			216	○○○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조건 취소안
			217	○○○의 금융투자업 폐지승인안
			218	키움증권(주)의 (가칭)키움자산운용(주)에 대한 출자승인안 및 (가칭)키움자 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19	(가칭)아이비케이연금보험(주)의 금융투자업 겸영 인가안
			220	하이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221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222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23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24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25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26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27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28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29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30	삼원테크(주)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231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232	(가칭)베스타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233	(가칭)(주)알에이케이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10년9월8일 2010년9월17일	제15차	의결 안건	234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235	○○○의 금융투자업 변경 예비 인가안
			236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237	㈜포네이처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238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39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40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41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42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43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44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45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46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47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48	㈜씨라텍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49	오피스㈜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50	㈜폴켄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51	에이스하이텍㈜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52	㈜서광건설산업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53	태창기업㈜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54	㈜단성일렉트론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55	㈜유비프리티전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256	㈜진성티이씨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257	㈜삼성수산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258	㈜○○○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259	정우개발㈜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260	㈜유퍼트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135	(주)하이렉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261	(주)000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262	스맥스(주)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신우회계법인 등에 대한 조치의 일 부취소안
			263	(주)중앙오션(舊 (주)메가바이온)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 결과 조치안
			264	(주)000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265	(주)전산텍스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266	(주)000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267	한국썸베(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268	(주)위지트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269	(주)000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보고 안건	9

#### 4. 2005년도 이후 연도별 금융위 소관 기금의 운용배수, 자산, 부채, 당기순익 현황

##### A. 금융정책과

##### □ 주택신용보증기금

(단위 : 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자 산	10,501	10,110	11,269	15,840	20,644
부 채	7,441	6,296	5,099	4,755	3,925
자 본	3,060	3,814	6,170	11,085	16,719
당기순이익	△2,596	△1,668	△819	594	1,377

\* '09년 자산, 부채, 자본은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수치임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운용배수	17.6배	14.4배	12.1배	9.3배	9.0배

\* IBRD차입금을 포함한 수치임

## B. 공적자금관리위원회

☐ 운용배수는 “보증 등의 한도”를 의미하며, 공적자금 관련 기금은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또는 재보증이 없음

☐ 기금 운용 현황(05~08년, 기업회계기준)

(단위: 억 원)

구 분		'05	'06	'07	'08
공적자금 상환기금	자 산	3,421	282	742	765
	부 채	428,497	537,700	532,138	496,611
	당기순익	△133,977	△112,343	6,022	35,550
예금보험 기금채권 상환기금	자 산	290,267	261,479	216,344	113,341
	부 채	519,499	349,700	315,476	287,056
	당기순익	9,480	3,158	19,454	△265
부실채권 정리기금	자 산	79,911	111,895	91,696	32,713
	부 채	44,176	32,611	30,955	3,916
	당기순익	14,680	42,357	11,571	9,194

☐ 기금운용 현황(09년, 국가회계기준)

(단위: 억 원)

구 분		'09
공적자금상환기금	자 산	74
	부 채	499,398
	재정운영결과 <sup>주2)</sup>	3,478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	자 산	154,973
	부 채	279,162
	재정운영결과	△8,224
부실채권정리기금	자 산	38,471
	부 채	4,860
	재정운영결과	△2,064
구조조정기금 <sup>주1)</sup>	자 산	9,768
	부 채	9,218
	재정운영결과	66

주1) '09.05.13 신설

주2) 재정운영표(원가중심)상의 재정운영결과는 최종결과에 초점을 맞춘 지표임

## 5.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설립이후 연도별 위원회 구성내역

- 2007년 이후 동 위원회 위원 및 상근인원 구성 내역  
(이력 포함)

☐ 별도제출

## 6~7. 금융위 조직 관련

- 과장급 이상 프로필 자료
- 임직원 징계 현황
- 임직원 포상 내역

### □ 과장급 이상 프로필 자료

#### <본부>

직위	성명	학력	주요경력
위원장	진동수	경북고 서울대 법학과 미,보스턴대	조달청장(05.7) 재경부 제2차관(06.5) 수출입은행장(08.7)
부위원장	권혁세	경북고 서울대 경영학과 미,밴더빌트대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07.3) 중선위상임위원(08.1) 금융위 사무처장(09.2)
금융위 상임위원	이종구	대전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스탠포드대	Shearman & Sterling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재경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금융위 상임위원	최종구	강릉고 고려대 무역학과 미,위스콘신대	재경부 국제금융심의관(07.7) 기재부 국제금융국장(08.3)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09.2)
중선위 상임위원	최규연	원주농고 동국대 행정학과 영,버밍엄대	재경부 홍보관리관(07.4) 기재부 회계결산심의관(08.3) 기재부 국고국장(09.1)
사무처장	김주현	중앙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워싱턴대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07.3) 금융위 금융정책국장(08.3) 금융위 중선위상임위원(09.2)
행정인사과장	원중희	중앙대부고 동국대 농업경제학과 미,조지아주립대	재경부 혁신인사기획관 법무팀장(06.2) 재경부 공자위 회수관리과장(06.9) 금융위 감사담당관(08.3)
대변인	진웅섭	고등검정고시 건국대 법학과 미,뉴욕주립대	대통령실 경제정책수석실(05.1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09.2) 금융위 공자위사무국장(09.8)
정책홍보팀장	김 인	충렬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조지아워싱턴대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04.3) 재경부 증권제도과(05.10) 유럽부흥개발은행(07.3)
기획조정관	정지원	부산 대동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로올라대	금감위 은행감독과장(05.1) 금감위 감독정책과장(06.7) 기업재무개선지원단 국장(08.12)
기획재정담당관	윤창호	대구 경신고 서울대 외교학과	금감위 복합금융감독과장(07.2) 금융위 의사운영정보팀(08.3)

직위	성명	학력	주요경력
		미,일리노이대	금융위 혁신행정과(08.3)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남병호	청구고 서울대 공법학과 미,워싱턴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08.2) 금융위 혁신행정과(08.3) 기업재무개선지원단총괄반장(08.12)
감사담당관	이보현	경북고 성균관대 경영학과	금융위 혁신행정과(08.3) 금융위 공정시장과(08.3) 금융위 제도운영과장(08.5)
금융정책국장	정은보	대일고 서울대 경영학과 미,오하이오주립대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관(08.3) 기재부 FTA 전략기획단장(10.2) 외교안보연구원(10.2)
금융정책과장	도규상	배정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미시간대	금감위 기획과장(07.7) 금융위 자산운용과장(08.5)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장(09.1)
산업금융과장	김학수	경북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학	재경부 공자위의사총괄과장(06.8) 기획예산처 재원기획과장(07.2) 기재부 자금시장과장(08.3)
금융구조개선과장	김홍식	서울 현대고 서울대 경영학과 미,미시간대	금감위 혁신행정과(06.1) 미래기획위원회(09.1) 금융위 위원장실(09.2)
금융시장분석과장	박 광	조선대부고 서울대 경제학과 영,버밍햄대	재경부 장관실(04.3) 재경부 국제금융과(05.1) 금융위 국제협력팀장(09.9)
글로벌금융과장	최유삼	대광고 서울대 경영학과 웨스트버지니아대	금융위 보험과(08.3) 금융위 은행과(08.7)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09.1)
국제협력팀장	윤영은	순천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미, 일리노이대	재정부 보험제도과(05.9) 금융위원회(08.3)
금융서비스국장	고승범	경북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아메리칸대	금감위 감독정책과장(04.11) 금감위 혁신행정과장(07.7) 금감위 기획행정실장(07.8)
은행과장	김근익	광주 금호고 서울대 경제학과 영,런던정경대	금융위 금융구조개선과장(08.3) FIU 기획행정실장(09.1) 금융위 기획재정담당관(09.5)
보험과장	성대규	대구 능인고 한양대 경제학과 미,유타대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03.4) 외교부 프랑스대사관(05.2)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09.3)
중소서민금융과장	배준수	서울 한영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미,미시간주립대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08.4) 금융위 의사운영정보팀장(09.1) 금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09.5)
자본시장국장	조인강	영동고	뉴욕총영사관 영사(05.6)



직위	성명	학력	주요경력
		서울대 산업공학과 일,사이타마대	재경부 금융정책심의관(07.5) 금융위 기획조정관(09.1)
자본시장과장	정완규	전남대사대부고 고려대 행정학과 미,미시건주립대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장(09.1) FIU 기획행정실장(09.5) 금융위 자산운용과장(09.9)
자산운용과장	신현준	서울 용문고 서울대 경영학과 미,미주리대	금융위 혁신행정과(08.3) 미래기획위원회(08.4) 금융위 글로벌금융과장(09.1)
공정시장과장	최준우	경기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미,조지타운대	금융위 혁신행정과(08.3) 금융위 의사운영정보팀장(08.3) 금융위 금융구조개선과장(09.1)

#### <소속기관 : 금융정보분석원>

직위	성명	학력	주요경력
원 장	최수현	서울고 서울대 생물교육학과 서울대 행정학	금감위 혁신행정과장(05.11) 금감위 기획행정실장(06.2) 금융위 기획조정관(08.4)
기획행정실장	이호형	전주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조지아대	금융위 정책홍보팀장(08.1) 금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08.3) 금융위 공정시장과장(09.1)
제도운영과장	송재근	서천고 단국대 독어독문학과	재경부 공보관실(05.3) 금감위 의사국제과(05.4) 금감위 혁신행정과(05.9)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직위	성명	학력	주요경력
사무국장	최상목	오산고 서울대 법학 미.코넬대 경제학	재정부 금융정책과장(07.6) 재정부 장관정책보좌관(08.3)
운용기획팀장	안형익	달성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아메리칸대 경제학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07.4)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08.3) 금융위 기획재정담당관실(08.9)
회수관리팀장	이재선	전남고 연세대 경영학	재정부 인력개발과(06.3) 재정부 회계제도과(09.6)

□ 임직원 징계 현황

징계 현황		처분사유	처분일시
견책	서기관 1명	음주운전	'09.2.27
	행정사무관 1명	음주운전	'09.3.23
경고	행정주사 1명	품위유지의무 위반	'09.10.9
감봉2월	서기관 2명	청렴의무위반	'09.3.19
			'09.3.23

※ 처분당시 직급

□ 임직원 표창 현황

표창자	직급	표창일	표창종류	표창사유
송○○	행정주사	20080620	모범공무원	2008년 모범공무원 표창
최○○	기록연구사	20080620	모범공무원	2008년 모범공무원 표창
박○○	행정사무관	20081128	장관급표창	자금세탁방지의날 유공자포상
김○○	일반계약직5호	20081128	장관급표창	자금세탁방지의날 유공자포상
이○○	고위공무원	20081224	근정포장	퇴직공무원정부포상
전○○	서기관	20081224	근정포장	퇴직공무원우수포상
홍○○	고위공무원	20081231	홍조근정훈장	우수공무원 유공
송○○	전산주사	20081231	장관급표창	자금세탁방지 업무유공
김○○	행정사무관	20081231	장관급표창	자금세탁방지 업무유공
변○○	행정사무관	20081231	국무총리표창	우수공무원
강○○	행정사무관	20081231	장관급표창	자금세탁방지 업무유공
이○○	서기관	20081231	대통령표창	물가안정유공자 표창
김 ○	행정주사	20081231	모범공무원	2008년 모범공무원 표창
박○○	부이사관	20081231	대통령표창	우수공무원
조○○	고위공무원	20090617	홍조근정훈장	규제개혁유공자
채○○	행정주사	20090630	모범공무원	2009년 모범공무원 표창

표창자	직급	표창일	표창종류	표창사유
임○○	전산주사	20090630	모범공무원	2009년 모범공무원 표창
김○○	전산사무관	20091130	대통령표창	중앙우수제안 동상
나○○	서기관	20091218	근정포장	퇴직공무원정부포상
양○○	부이사관	20091218	근정포장	퇴직공무원정부포상
공○○	행정사무관	20091231	장관급표창	자금세탁방지 업무유공
남○○	행정사무관	20091231	장관급표창	자금세탁방지 업무유공
우○○	부이사관	20091231	홍조근정훈장	우수공무원
안○○	행정주사	20091231	모범공무원	2009년 모범공무원 표창
이○○	행정사무관	20091231	국무총리표창	우수공무원
배○○	서기관	20091231	대통령표창	우수공무원
신○○	행정사무관	20100210	대통령표창	업무유공
신○○	행정주사	20100603	장관급표창	10년도 동원자원조사 유공
김○○	행정주사	20100630	모범공무원	2010년 모범공무원 표창
이○○	행정주사	20100630	모범공무원	2010년 모범공무원 표창

## 8. 2007년 이후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편 내역

### 1.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가. 도입 배경

□ 채권단 주도의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07.4월 재정경제 위원회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을 제안하였고,

\* 舊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01.9월말부터 '0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07.7월 국회를 통과하여 '07.11월부터 '10.12월말까지 효력을 가지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

#### 나. 적용 대상

- ① 대상 : 신용공여액 합계액 500억원 이상인 부실징후기업
- ② 적용대상 금융기관은 쏘 금융기관으로 은행·보험·자산운용·증권·종금·여전 등 쏘금융회사와 예보·자산관리공사·유동화 전문회사 등

#### 다. 법률 주요내용

##### <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및 부실징후기업 선정 >

- 채권은행은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을 평가(정기 및 수시)하여
  - 외부 자금지원이나 별도 차입이 없이는 금융기관 차입금의 상황이 어려운 기업(이하 '부실징후기업')을 선정

□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사업계획서 등을 받아, 이를 평가하여 경영정상화 가능성 여부를 판단

\* 주채권은행이 아닌, 채권은행이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한 경우, 채권은행은 선정된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주채권은행에 요구

○ 부실징후기업과 협의하여 선임한 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자산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등을 평가

### <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

□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이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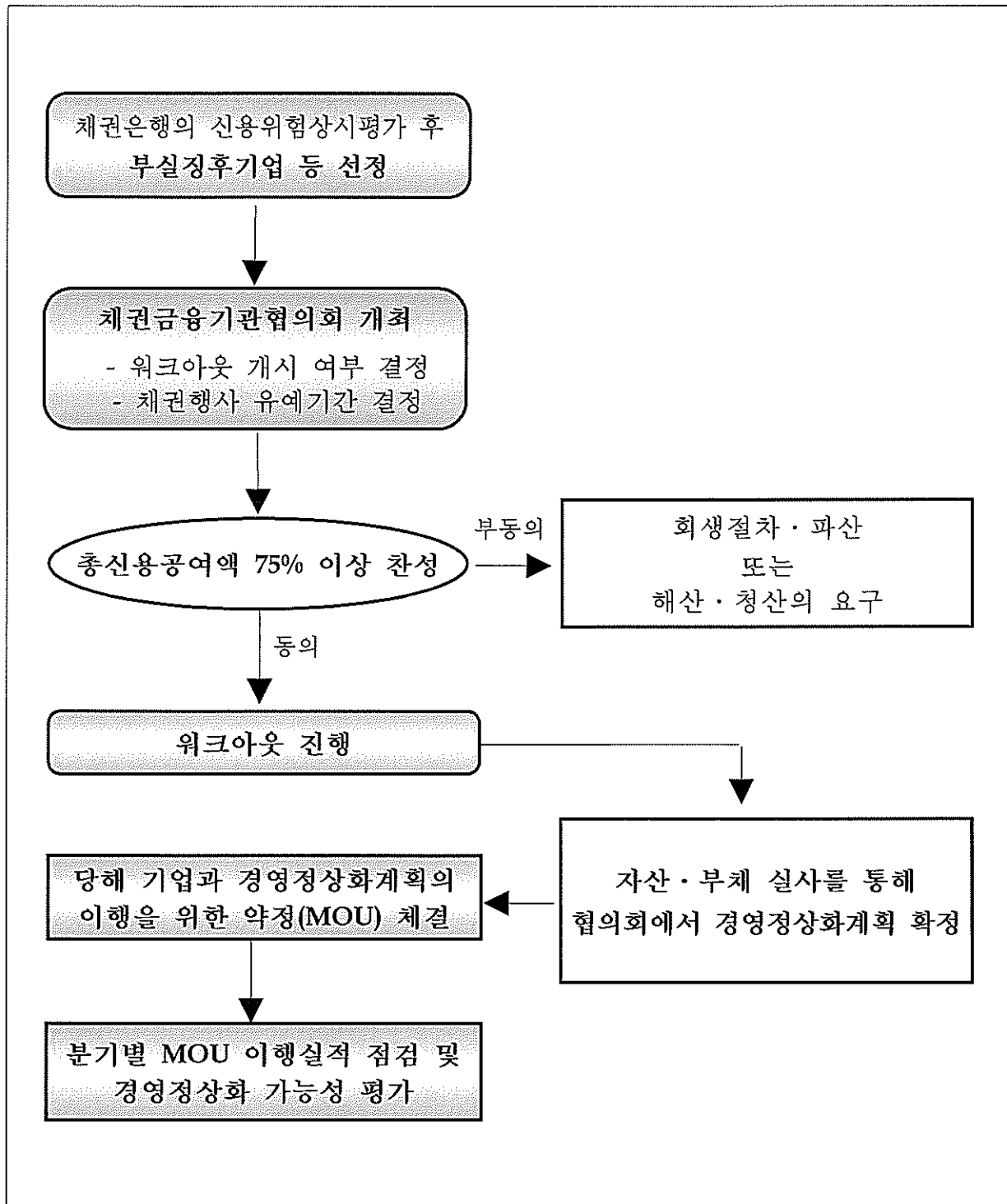
○ ①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② 채권은행 공동관리, ③ 주채권은행 단독관리 ④ 「통합도산법」에 따른 회생절차 등 개시

□ 반면, 주채권은행은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위 관리절차 중 어떠한 절차도 개시되지 못한 경우

○ 당해기업에 대한 해산·청산의 요구, 「통합도산법」에 따른 파산 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요구

□ 한편, 당해 기업 및 채권금융기관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통합도산법」에 따른 회생절차 신청 가능

○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시, 채권금융기관·채권은행 공동관리 및 주채권은행 단독관리는 중단된 것으로 간주



## 2. Fast Track 프로그램 도입 (산업금융과 소관)

□ Fast Track 프로그램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중소기업과 KIKO 손실기업을 신속지원하기 위해 도입('08.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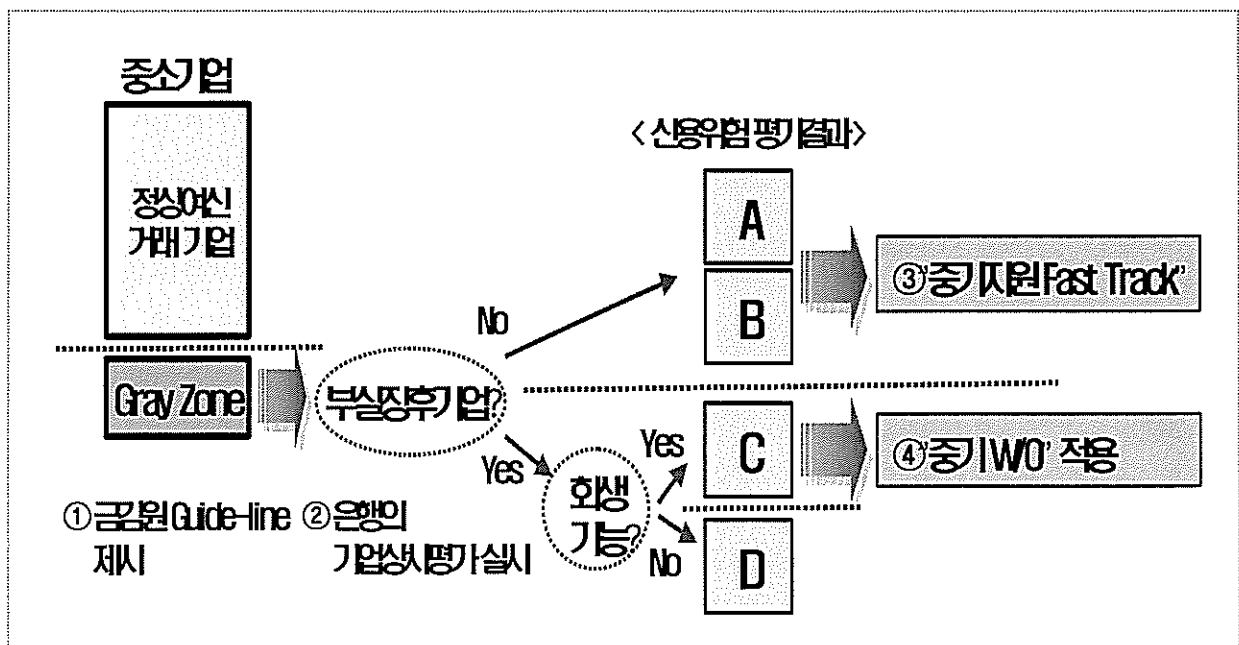
○ 일시적 유동성 부족 중소기업에 대해 신규여신 및 대출전환, 만기연장 등을 실시하여 유동성 지원

□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기업을 은행 상시평가 결과에 따라 4개\* 그룹으로 구분

○ A·B등급 기업에는 채권은행단 공동으로 신규대출, 기존 여신 만기연장 등 유동성 공급

\* A(정상), B(지원이 없을 경우 C·D등급 될 가능성 큼), C(회생가능 부실징후기업), D(회생불가)

### < FAST TRACK의 적용대상 >



○ 신·기보는 은행의 여신 지원시 특별보증\* 지원

\* 유동성 부족기업 : 10억원 한도, 보증비율 65~75%

KIKO 손실기업 : 20억원 한도, 보증비율 40%

□ Fast Track 프로그램이 시행된 '08.10.13일 이후 '10.8월말까지  
총 11,636개사에 28.3조원을 지원

< Fast Track 프로그램 지원 추이 >

(단위 : 개, 조원)

	'08년	'09년	'10년					합 계
				1분기	2분기	7월	8월	
지원업체수	1,672	9,578	386	199	139	30	18	11,636
(KIKO)	(413)	(212)	(3)	(2)	(1)	(0)	(0)	(628)
지원액	2.8	21.5	4.0	1.7	1.6	0.3	0.3	28.3
(KIKO)	(1.4)	(4.4)	(0.4)	(0.2)	(0.2)	(0.02)	(0.03)	(6.2)
신규여신	0.6	4.6	1.0	0.4	0.4	(0.08)	(0.06)	6.2
대출전환	0.7	1.1	0.1	0.1	0.02	0.0	0.02	1.9
만기연장 등	1.5	15.8	2.9	1.2	1.2	0.2	0.2	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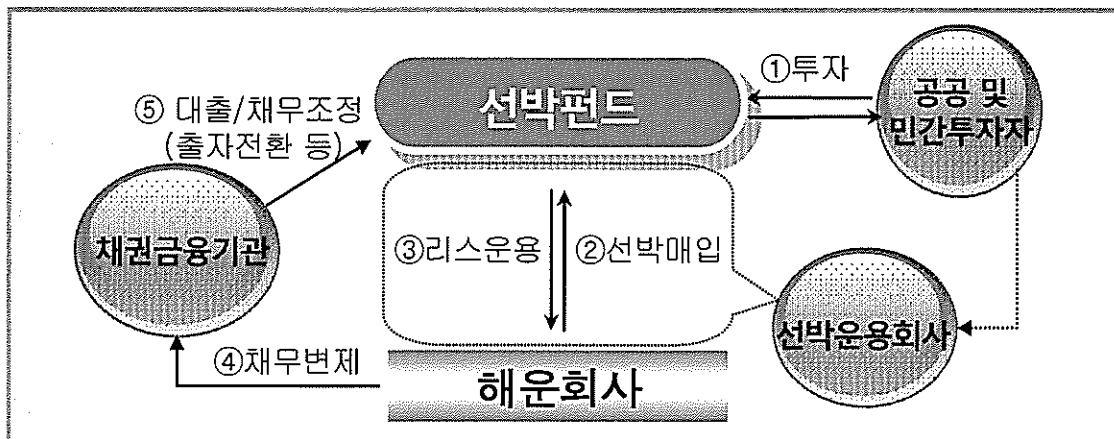
\* 업체수는 신규선정 기준, 금액은 전체 지원대상 업체에 대한 지원실적

\*\* 업체수 산정시 은행별 지원실적을 단순합산



### 3. 구조조정 선박펀드 도입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소관)

- 공공부문, 민간투자자 및 채권금융기관 공동의 선박 매입 및 채무조정을 통해 해운사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등에 따라 구조조정 및 재무 개선을 추진하는 해운사에 적용함으로써 실효성 제고
- 손실분담 및 자기책임 원칙을 견지하는 차원에서 시가로 선박을 매입하고 채무조정도 동시에 추진



- 구조조정기금 등 공공부문, 해운업계 등 민간투자 및 금융기관 채무조정을 통해 운항중인 선박을 매입
  - \* 매입선박 운용의 전문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운용회사 설립 검토
- '09.11월에는 구조조정기금의 투입비율을 상향(40%⇒60%)하고, 건조중인 선박도 매입대상에 포함하는 등 운영의 탄력성 제고
  - '09년에는 18척의 선박을 매입하고, '10.4월 중소선사를 포함한 선박 5척을 추가매입
  - '10.6월부터 건조 중 선박 5척을 순차적으로 추가 매입 중 (10.8월 현재 2척 매입 완료)

## 4. 기타 제도

### 가. 은행자본확충펀드 운용

- 은행의 자본확충 지원을 통해 본연의 기능인 실물지원 여력을 제고시켜 경기 침체 가속화 및 금융부실 방지

\* 한은(10조원) 및 산은(2조원) 대출금, 민간 투자자금(8조원)으로 20조원 조성

- 경영권 간섭은 배제하되, 실물경제와 기업 구조조정 지원 등은 강력히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용

- 실물지원 등 실적과 지원을 연계하는 '매칭'방식으로 운용하며, 한도를 배정받은 은행에 대해서는 매월 실물지원 실적 점검
- 실물 지원 실적이 부진한 은행에 대해서는 차회분 인출 제한, 한도 조정, 금리 인상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

- '09년중 8개 금융기관에 대해 4조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완료하였고, 차기 지원 시기는 은행권 신청 등을 감안하여 결정

### 나. 구조조정기금 설치

- 금융기관의 자산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 설치

- 정부보증 기금채권 발행 등을 통해 기금을 조성(40조원 한도)하고,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 매입에 활용

- '10.8월말까지 구조조정기금은 구조조정선박펀드 출자 및 PF 대출채권 매입 등에 3.78조원을 지원하였음

## 9. 2007년 이후 연도별·국책기관별 중기대출(종류별) 잔액 및 순증 현황

### □ 2007년 이후 연도별 중기대출(종류별) 잔액 및 순증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8월	
		잔액	순증	잔액	순증	잔액	순증	잔액	순증
산업은행	시설	86,983	6,189	121,770	34,787	119,433	△2,337	117,057	△2,376
	운영	43,051	10,084	58,720	15,669	66,344	7,624	64,582	△1,762
	합계	130,034	16,273	180,490	50,456	185,777	5,287	181,639	△4,138
기업은행	시설	208,841	47,774	250,701	41,860	277,928	27,227	298,823	20,895
	운전	476,793	41,378	534,305	57,512	602,164	67,859	629,685	27,521
	합계	685,634	89,152	785,006	99,372	880,092	95,086	928,508	48,416
정금공	시설	-	-	-	-	1,332	1,332	9,800	8,468
	운전	-	-	-	-	973	973	8,163	7,190
	합계	-	-	-	-	2,305	2,305	71,963	15,658
신보	시설	33,224	3,269	28,153	-5,071	25,127	△3,026	29,696	4,569
	운전	252,198	-3,090	275,715	23,517	367,367	91,652	374,660	7,293
	합계	285,422	179	303,868	18,446	392,494	88,626	404,356	11,862
기보	시설	13,139	1,220	13,640	501	17,243	3,603	18,087	844
	운전	98,735	376	112,106	13,371	154,074	41,968	153,904	△170
	합계	111,874	1,596	125,746	13,872	171,317	45,571	171,991	674

\* 산은, 기은, 정금공은 대출 / 신보, 기보는 보증

## 10. 금융기관별 채권시장안정펀드 출자내역

### ☐ 첨부 참조

- 금융기관별 채권시장안정펀드 출자내역

금융기관별 채권시장안정펀드 출자내역

채안펀드는 총 10조 조성을 목표로 출범되었으며 2008.12.17일자로 1차 투자금 4조9,995억원이 납입 되었음

이후 2차 투자금 조성은 없었으며 현재 출자금 총액은 4조9,995억원임

금융기관별 채안펀드 1차납입금 내역

(단위:억원)			
구분	회사명		1차 납입금
1	금 행	산업은행	10,000
2		국민은행	5,189
3		우리은행	4,353
4		신한은행	3,962
5		농협중앙회	3,794
6		하나은행	2,964
7		기업은행	2,673
8		외환은행	1,977
9		SC제일은행	1,500
10		한국씨티은행	1,217
11		부산은행	554
12		대구은행	531
13		경남은행	404
14		수협중앙회	374
15		광주은행	320
16		전북은행	130
17		제주은행	57
소계			40,000
18	생 명	삼성생명	2,437
19		대한생명	977
20		교보생명	913
21		ING생명	224
22		알리안츠	220
23		동양생명	160
24		흥국생명	155
25		신한생명	154
26		금호생명	136
27		AIG생명	132
28		미래에셋	116
29		푸르덴셜	106
30		메트라이프	64
31		동부생명	61
32		녹십자생명	42
33		KB생명	35
34		우리아비바	24
35		라이나생명	17
36		하나HSBC	11
37		뉴욕생명	8
38		PCA생명	5
39	SH&C생명	2	
소계			6,000
40	손 보	삼 성	504
41		현 대	197
42		동 부	191
43		L I G	170
44		서울보증	104
45		메리츠	101
46		코리안리	60
47		제 일	38
48		한 화	35
49		롯데	30
50		흥국쌍용	27
51		그 린	23
52		교보AXA	9
53		더케이	6
54		A. H. A	5
55		ERGO다움	5
소계			1,500

(단위:억원)			
구분	회사명	1차 납입금	
56	증권	우리투자증권	250
57		대우증권	200
58		동양종합금융증권	190
59		한국투자증권	170
60		삼성증권	145
61		현대증권	135
62		굿모닝신한증권	100
63		미래에셋증권	100
64		대신증권	85
65		신영증권	55
66		하나대투증권	100
67		한화증권	50
68		교보증권	35
69		키움증권	35
70		동부증권	30
71		유진투자증권	30
72		KB투자증권	30
73		SK증권	30
74		메리츠증권	20
75		부국증권	20
76		솔로몬투자증권	20
77		HMC투자증권	20
78		NH투자증권	20
79		하이투자증권	15
80		도이치증권	10
81		아이비케이투자증권	10
82		유화증권	10
83	이트레이드증권	10	
84	케이티비투자증권	10	
85	한양증권	10	
86	골든브릿지투자증권	5	
87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5	
소 계		1,955	
88	기타	증권선물거래소	200
89		증권예탁결제원	150
90		증권금융	100
91		증권협회	50
소 계		500	
투자약정금액 총계		49,955	

## 11. 증시안정펀드 관련 기관별 상세 투자내역 (주식/채권 구분)

☐ 한국금융투자협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별첨과 같이 첨부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공동펀드」 관련 요구자료

(금융위원회 경유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실 요구자료)

◇ 제출 요구자료 :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공동펀드  
상세 투자 내역(주식/채권 구분)

작성자	금융투자협회 증권지원부
	부장 정규윤

□ (개요) '08년 하반기 미국발 글로벌 위기로 인한 투자자  
심리 진정을 위해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  
결제원 3개 증권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펀드를 결성

○ (투자규모) 총 5,150억원 규모 펀드 조성

- 협회 550억원, 거래소 2,500억원, 예탁원 2,100억원 투자

- '08.11~'09.2간 월 1,030원씩 각 만기 3년으로 투자

○ (수익률) '10.9.10 현재 수익률은 48.7%\*

\* 수익률=(실현이익금+평가이익금)/원금

실현이익금 1,720억원, 평가이익금 787억원

○ (현재 잔액) '10.9.10 현재 펀드 평가액은 4,824.7억원

□ (투자대상 및 금액) 유가증권시장 주식, 코스닥시장 주식, 국공채 등에 투자중임

(2010.9.10기준)

구분		금액(억원)	비중(%)
주식*	유가증권시장	3,001.4	62.2
	코스닥시장	965.2	20.0
	소계	3,966.5	82.2
채권	국채	486.9	10.1
	통안채	86.4	1.8
	소계	573.3	11.9
유동자산 등	현금성 자산	251.0	5.2
	기타	33.9	0.7
	소계	284.9	5.9
합계		4,824.7	100

\* 상장지수펀드(ETF)에 50% 이상 투자하여 Index운용 방식으로 운용중



## 12. 2007년 이후 금융기관별 녹색예금, 펀드 가입현황

□ 현행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을 받는 녹색금융상품으로는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이 있으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① 조달자금의 100분의 60이상을 '녹색인증제'상 인증 또는 확인된 녹색사업·녹색전문기업에 투자(대출포함)할 것
- ② 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이고, 중도 인출(채권의 경우 상환) 및 제3자에게 양도되지 않을 것
- ③ 1명당 3천만원(예금은 2천만원)의 한도 이내일 것

### < 세제혜택 내용 >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
세제지원 내용	배당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한도	1인당 3천만원	1인당 2천만원	1인당 3천만원
만기	3년 이상 5년 이하	3년 이상 5년 이하	3년 이상 5년 이하

□ 이에, 지식경제부는 '10.4월부터 '녹색인증제'를 시행하여, 민간금융회사의 녹색금융상품개발을 유도하고 있으나,

○ 녹색인증시행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현재 녹색인증사업 및 녹색전문기업이 미미\*하여 아직까지 녹색인증제 관련 금융상품 출시는 없는 상황

\* '10.9.27일 현재 녹색금융상품 투자대상인 녹색인증사업은 1, 녹색전문기업은 13

□ 이에따라 정부(지경부등)는 '10.8.11일 제2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발표하여 금융권의 녹색금융상품 개발을 앞당기고자 노력중에 있음

○ 녹색산업융자 지원 확대, 판로·마케팅 지원 강화, 기술사업화 기반 조성, 사업화 촉진시스템 구축 등 4대 분야 26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 녹색인증에 따른 기업혜택을 구체화함으로써 녹색인증 수요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녹색인증 투자대상을 조기 확충코자 함

< 별첨 > '10.8.11일 지식경제부 보도자료(녹색인증활성화방안)

□ 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10.1.) 및 녹색인증제시행('10.4.) 이전에는 녹색금융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녹색금융 상품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2010년 8월 11일(수) 10: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산업기술시장과 강혁기 과장, 권기성 사무관 ☎ 02-2110-5397)

## 녹색인증 활성화를 위한 R&D·자금·판로·인력 등 녹색인증기업 기술사업화 소주기 지원방안 수립

-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8.11(수) 제2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발표함
  - 녹색인증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의거, 지난 4월 14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써 녹색산업 지원대상·범위의 명확한 규정 및 이에 대한 투자활성화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 금번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에서는 녹색인증에 따른 기업혜택을 구체화함으로써 녹색인증 수요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녹색인증 투자대상의 조기 확충을 통해 궁극적으로 금융권의 녹색금융상품 개발을 앞당기고자 함
  - \* '10.8.11 현재 녹색금융상품 투자대상 : 녹색인증사업(1건), 녹색전문기업(4건)
  - \* 반면, 녹색인증 혜택의 구체화 등을 고려하여 신청을 유보하고 있는 기업수는 최소 428개(기관회원등록기업 기준)로 녹색인증 신청기업(191개)의 2배 이상
  - 이를 위해 ①녹색산업융자 지원 확대, ②판로·마케팅 지원 강화, ③기술사업화 기반 조성, ④사업화 촉진시스템 구축 등 4대 분야 26개 지원방안을 마련함

4대 분야	녹색산업융자 지원 확대	판로·마케팅 지원 강화	녹색기술사업화 기반 조성	사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
세부 과제	①신재생에너지 등 보급융자 지원 ②중기정책자금 연계 ③기술보증중점지원 ④수출금융·보험지원	①정부발주공사우대 ②공공구매·국방조달 우대 ③TV·라디오광고료 일부면제 ④해외수출·마케팅 지원	①병역특례지정 업체 추천 ②해외/고급인력 도입 및 파견 ③녹색기술 성능검사 비용 지원 ④국가녹색기술 대상 우대	①R&D 참여시 우대 ②특허우선심사/국제출원 지원 ③녹색기술이전·투자유치 설명회 ④글로벌사업화컨설팅 ⑤국제컨퍼런스 개최

- '활성화 방안'에서는 대규모 자금소요 및 긴 투자회임기간 등 녹색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융자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 녹색인증기업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등 산업별 보급융자사업 참여시 우대, 정책자금 융자한도 예외적용 및 기술보증 중점지원을 실시하고,
  - 해외수출시 특례신용대출 우대 및 수출보험료 할인, 보증한도 확대 등 녹색인증기업 특별지원제도를 시행함
- 녹색인증기반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녹색기술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 정부발주공사 등 정부계약 상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공공구매·국방조달시 신인도 가점 부여 등을 통해 국내 판로를 지원하고,
  - KOTRA, 중진공 등의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녹색인증을 연계하여 수출 및 기업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임
- 또한, 녹색기술의 사업화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지원 및 영세중소기업의 녹색인증 취득기회 확대를 위해,
  - 녹색전문기업 부설연구소의 병역특례지원을 강화하고, 해외기술인력 및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지원하는 한편,
  - '11년부터 녹색기술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이 신규로 부담한 성능검사비용의 50%를 환급해 주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함
- 녹색인증기업의 기술개발 및 R&D 성과활용, 기술이전·투자유치·글로벌사업화 지원 등 사업화 촉진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임
  - 국가 R&D사업 참여시 우대하고, R&D성과물의 녹색인증 신청 및 국내·외 특허출원을 중점 지원하며,
  - 기술이전·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글로벌사업화컨설팅 지원 강화,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사업화에 필요한 투자유치·정보제공 및 녹색인증기업의 신용평가도를 제고할 계획임

- 이창한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관은 기자브리핑에서 “금번 활성화 방안은 신생기업의 경영안정화를 통한 중소기업 창업·보육 지원이 목적인 벤처기업 등 인센티브와 달리 녹색기술기반 인증기업의 기술사업화 소주기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며,”
  - “금번 대책으로 녹색인증기업 혜택이 구체화된 만큼 향후 녹색인증 활성화를 통해 금융권의 녹색금융상품 개발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한편,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비과세 녹색금융상품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해 녹색인증기업의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등
  -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면밀한 검토를 통해 녹색인증을 통한 기업의 실질적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함

첨부 1 : 분야별 녹색인증기업 지원방안

2 :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제2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안건)

# 분야별 녹색인증기업 지원방안

추진 과제		세부 내용
1. 녹색산업융자 지원 확대	1-1. 산업별 보급용자 참여 우대	신재생에너지설비, 농업종합자금, 관광기금 등
	1-2.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잔액 예외	잔액기준 또는 매출액 한도 예외
	1-3. 기술보증 중점 지원 대상	보증료율 0.5%p 감면, 한도 70억원(추가 3억원)
	1-4. 수출금융(특례신용대출) 우대	평가시 가점(10점), 업체별 한도 30억원
	1-5. 수출 및 금융계약 손실 보상	보험료 할인 20%, 보증한도 2배
2. 판로·마케팅 지원 강화	2-1. 정부발주공사 우대	신인도평가 가점. 선금지급 확대, 계약보증금 감면
	2-2. 공공구매/ 국방조달심사 우대	조달청(1.5점), 국방부(0.5점)
	2-3. TV·라디오 광고료 70% 면제	지상파 3사 & DMB
	2-4. 해외전시회 참가시 우대	신청시 가점(10점)
	2-5.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우대	신청시 가점(5점)
	2-6. 해외수출인큐베이터 우대	신청시 가점(5점)
	2-7.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 지원	신청시 가점(5점)
	2-8.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신청시 가점(10점)
	2-9. Green 보증브랜드 선정시 우대	우선 선정(재무건정성 충족시)
	2-10. 수출중소기업 글로벌브랜드 육성	수출액, 매출액기준 등 참가자격 완화
3.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	3-1. 병역특례지정업체 추천 우대	교과부 추천시 가점 부여
	3-2. 해외기술인력 도입 우대	신청시 가점(5점)
	3-3. 출연연 석·박사급 인력파견 우대	신청시 가점 부여
	3-4. 중소기업 인증 비용부담 경감	인증취득시 시험평가비용 50% 환급
	3-5. 국가녹색기술대상 서류평가 가점	참여시 가점(2점)
4. 사업화촉진 시스템 구축	4-1. 국가R&D 참여우대 및 인증수수료	부처별 R&D사업 가점, R&D수행시 간접비 활용
	4-2. 특허우선심사(초고속심사대상)	특허우선심사(최대 1개월까지 단축)
	4-3. 국제출원비용지원시 가점	5점 가점(1인당 5건, 건당 700만원 이내)
	4-4. 기술이전·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기술공급자·수요자, 거래기관 등 참여
	4-5. 글로벌사업화컨설팅 지원	현지마케팅, 수요기업알선, 전문컨설팅 등
	4-6. 국제컨퍼런스 개최(GGGI 연계)	국내외 평가기관, 투자기관 참여

---

#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

---

2010. 8. 11

관계부처 공동

## 목 차

1. 녹색인증 추진경과 .....	1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	2
3.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 .....	3
가. 기본전략 및 추진과제 .....	3
나. 활성화 방안 .....	4
다. 과제 추진일정 .....	8
4. 후속조치 계획 .....	9

〈참고 1〉 他 인증제도 인센티브 현황 및 녹색인증기업 비교

〈참고 2〉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방안

〈참고 3〉 녹색인증 금융권 연계/녹색금융종합포탈



# 1 녹색인증 추진경과

□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성장 비전” 달성을 위해 녹색기술 기업·사업의 육성 및 이에 대한 투자 활성화 긴요

\* (녹색인증 도입배경) 금융지원 대상이 되는 녹색프로젝트나 기업을 명확히 하여 녹색산업관련 자금유입시스템 실효성 확보(금융권의 녹색산업투자를 용이케 할 목적)

□ (녹색인증제) 녹색산업 지원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 이에 대한 투자저변을 확충

○ 녹색기술(10대 분야 256개 기술)·사업(95개) 대상 「녹색인증제」 시행(‘10.4.14)

\* 녹색인증사업 또는 녹색전문기업(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 중 매출액비중 30% 이상 기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세제지원(‘10.2.14)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
세제지원 내용	배당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 한도	1인당 3천만원	1인당 2천만원	1인당 3천만원
만기	3년 이상	3년 이상	3년 이상

○ 녹색인증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의 자금조달 용이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녹색기술 보유기업의 녹색사업화 능력 제고

\* 네덜란드 Green Funds Scheme : '95~'05년간 신재생에너지 등 4,500개 사업에 80억 유로(110억 달러) 지원

□ (신청·인증현황) '10.8.9 현재 294건(기술248, 사업27 등) 신청, 이중 기술 56건, 사업 1건 인증 및 전문기업 4개 확인

구분	신청	최종결과		평가진행
		인증	불인증	
녹색기술*	248	56	34	158
녹색사업**	27	1	9	17
녹색전문기업***	19	4	1	14

\* (녹색기술) 대기업 14개(57건), 중소기업 152개(174건), 개인사업자 9개(17건) 등 총 175개 기업(248건) 신청

\*\* (녹색사업) 최종심의된 10개 중 1개사업(고출력LED조명기기보급, (주)지에이)만 인증. 불인증된 9개사업은 사업타당성, 녹색기술 활용성 부족

\*\*\* (녹색전문기업(4)) OCI(폴리실리콘), 퓨얼셀파워(연료전지열병합발전시스템), 비전테크(LED), 본우드(외장용 합성목재)

##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문제점) 인증수요기업들은 기존 벤처·이노비즈기업 등에 제공되는 세제·자금·판로·인력 등 인센티브보다 강화된(+α) 혜택 기대 (☞참고1)

\* '10.8.9 현재 녹색기술인증 신청 중소기업(152개) 중 벤처·이노비즈기업이 74%(113개)

○ 금융회사들은 녹색인증 투자대상\* 부족, 의무대출비중\* 등으로 녹색 금융상품 출시 곤란

\* '10.8.9 현재 녹색금융상품 투자대상은 녹색인증사업(1건), 녹색전문기업(4건)  
: 현행 조특법상 비과세 녹색금융상품의 투자대상은 녹색인증사업 및 녹색전문 기업에 국한(녹색기술 인증기업은 제외)

\* 금융회사들은 녹색금융으로 조달한 자금의 60% 이상을 녹색금융상품 투자대상 (사업·기업)에 투자 의무

\* 또한, 현행 세제혜택은 녹색금융상품을 일반투자와 차별화할 수 있는 수준에 미달

★ [제8차 녹색위, '10.7.13] 관계부처 합동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 수립 계획 보고

□ (개선방향) 녹색인증 수요기업 측면에서 차별화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인증 활성화 유인

◆ 녹색인증기업 지원 강화 및 녹색금융상품 활성화를 통해 '인증 → 금융투자 → 기술개발·사업화 → 인증'의 선순환구조 확립

○ 금번 대책을 통해 융자, 판로·마케팅, 기술사업화기반, 사업화 촉진시스템구축 등 "4대 분야 총 26개 과제" 추진

\* 특히, 녹색인증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술력 보유 중소기업의 참여 활성화 (☞참고2)

○ 중장기적으로 비과세 녹색금융상품 관련 제도개선 사항(녹색 기술의 투자대상 포함, 추가 세제지원 등)을 검토해 녹색인증기업의 금융 지원 강화

○ 기타, 녹색인증정보의 금융권 연계 강화로 녹색대출시 전문성 보강 (☞참고3)

\* 녹색인증정보 금융권연계시스템(7.30) 및 녹색금융상품정보 종합포털(12월, 은행 연합회) 구축 등 인프라 확충

## 가. 기본전략 및 추진과제

## 목표

녹색인증 활성화를 통한 녹색산업 분야 투자 촉진

## 전략

R&D · 자금 · 인력 · 판로 등  
녹색기술기업의 사업화 활동 주기 지원4大  
과제녹색산업융자  
지원 확대판로·마케팅  
지원기술사업화  
기반 조성사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세부  
과제①신재생에너지등  
보급융자 지원②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계③기술보증  
중점 지원④수출금융·보험  
지원①정부발주공사  
우대②공공구매·국방  
조달 우대③TV·라디오광고  
료 일부면제④해외수출·마케팅  
지원①병역특례지정  
업체 추천②해외/고급인력  
도입 및 파견③녹색기술 성능  
검사비용 지원④국가녹색기술  
대상 우대①R&D 참여시 우대  
[가점, 인증수수료]②특허우선심사/  
국제출원 지원③녹색기술이전·  
투자유치 설명회④글로벌사업화  
컨설팅 지원⑤녹색인증 국제  
컨퍼런스 개최

## 나. 활성화 방안

### ① 녹색산업 융자 지원 확대

- (산업별 보급융자)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절약시설, 농업종합자금, 관광기금, 환경산업융자 등 부처별 융자사업에 녹색인증기업 참여 우대 (10.12월)

<산업별 보급융자 사업(예)>

구 분	주 관	주요내용
신재생에너지보급('10년 913억원)	지경부	신재생에너지 분야 녹색인증 가점
에너지절약시설('10년 5,118억원)	지경부	첨단그린주택 등 분야 녹색인증 가점
농업종합자금융자('10년 1.5조원)	농식품부	친환경농식품 등 분야 녹색인증 가점
관광기금(시설자금, '10년 1,900억원)	문광부	친환경관광 분야 녹색인증 가점
환경산업융자/보조금('10년 780억원)	환경부	환경보호 등 분야 녹색인증 가점

- (정책자금 융자) 녹색인증기업에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융자 잔액 예외규정 적용 (10.6월 既시행)
  - \* 중소기업 대상 융자시 잔액기준(수도권 45억원, 지방 50억원) 또는 매출액 한도(150% 이내) 예외 적용
- (기술보증) 녹색인증기업을 중점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기술평가 심사 일부면제(사업내용 생략), 보증료율(0.5%p 감면)·보증한도(일반 30억원 → 녹색기술 70억원, R&D 등 3억원 범위내 추가한도) 등 우대(10.6월 既시행)
- (수출금융·보험) 녹색인증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 우대 및 녹색인증기업의 수출계약 및 금융계약 손실보상을 위한 보험·보증 특별지원제도 시행 (10.8월)
  - \* 특례신용대출 거래이행능력 평가시 가점(10점) 및 업체별 한도 확대(일반 20억원 → 녹색인증기업 30억원)
  - \* 수출보험료 할인 확대(녹색산업 10%→ 녹색인증 중소기업 20%), 보증한도를 책정가능한도의 2배까지 우대(녹색전문기업)

## ② 녹색인증기술 및 제품의 판로·마케팅 지원

- (정부발주공사 우대) 녹색인증기업의 신인도 평가시 가점 부여, 선금지급 확대, 계약보증금 감면 (10.12월)
  - \* 의무선금지급률 상향(30~50% → 40~60%), 입찰·계약보증금 감면(지급각서 대체)
  -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50조) 및 회계예규 등 개정 (기획재정부)
- (공공구매·국방조달) 녹색인증기업의 조달청(10.8월), 국방부(10.11월)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신인도 부분 가점 부여
  -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및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시 1.5점 가점, 국방부 물품적격심사시 0.5점 가점
- (방송광고료 일부면제) 녹색인증 중소기업 대상으로 KBS등 지상파 3사 및 DMB의 TV·라디오 광고료 70% 할인 (10.9월)
- (해외수출·마케팅) KOTRA(해외전시회, Green보증브랜드 등) 및 중진공(해외수출인큐베이터, 수출기업화지원 등) 등의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연계

### <주요 해외수출·마케팅 지원사업>

구 분	주 관	주요내용
해외전시회 참가 우대	KOTRA 등	녹색인증기업 가점 10점
해외 수출인큐베이터 우대	중기청	녹색인증기업 가점 5점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우대	중기청 등	녹색인증기업 가점 5점
해외 민간네트워크 활용 지원	중기청	녹색인증기업 가점 5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중기청	녹색인증기업 가점 10점
Green 보증브랜드 선정 우대	KOTRA	녹색인증기업 최고가점 부여
수출중소기업 글로벌브랜드 육성	중기청	녹색인증기업 참가자격 완화

### ③ 녹색기술 사업화 기반 구축

- (병역특례) 교과부장관의 병역특례지정업체 선정 추천시 녹색전문 기업의 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가점 부여 (10.12월)
- (해외·고급인력) 녹색인증기업의 전문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해외 기술인력 도입 및 석·박사급 고급인력 지원 (10.12월)
  - \* 해외기술인력 도입 지원사업(중기청, 1인당 2천만원 이내) 신청시 가점(5점)
  - \* 출연연 석·박사급 인력의 파견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 (성능검사비용) 녹색기술 인증취득 중소기업의 경우 인증신청시 신규로 부담한 성능평가기관(산업기술시험원 등)의 성능시험검사비용 50%를 환급 (10.12월)
  - \* 소요재원 : 연간 3억원(= 600건(12월 × 100건 × 50%(인증율)) × 100만원(평균 수수료) × 50%)
- (녹색기술대상) 녹색인증기업의 「국가녹색기술대상」 참여시 서류 평가 가점(2점) 부여 (11.4월)
  - \* 국가녹색기술대상 : 교과부 등 5개부처 공동 주최, 산업기술진흥협회 주관으로 기술성 및 경제성이 뛰어난 녹색기술을 개발한 기업 등 대상으로 대통령상 등 포상

#### ④ 녹색기술 사업화 촉진시스템 구축

- (R&D 우대) 녹색인증기업의 지경부 등 녹색인증 관계부처(8개) R&D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및 녹색인증 수수료 지원 (10.12월)
  - \* 교과부·농식품부·지경부·환경부·국토부·방통위·중기청 R&D 등
  - \* R&D 수행기업의 간접비 사용용도에 녹색인증 신청사항 포함
- (특허우선심사·국제출원지원) 녹색인증기업의 특허 조기확보를 위해 우선심사대상 포함(10.4월 既시행) 및 국제출원비용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10.12월)
  - \* 우선심사 대상 : 녹색인증기술의 특허출원 또는 녹색전문기업의 특허출원
    - 전문조사기관 선행기술조사 의뢰 및 전자출원시스템 이용시 초고속심사대상 (1개월내)에도 포함
  - \* 국제출원비용 지원 : 1인당 5건, 특허·실용신안 건당 700만원(디자인 200만원) 이내
- (기술이전·투자유치 설명회) 녹색인증기업 관련 기술공급자·수요자, 기술거래기관 등이 직접 참여하는 설명회 개최 지원(기업 모집, 일정관리, 자문 및 비용 지원 등)
  - \* (국내) 수시개최(8월~), (해외) 한중 기술이전설명회(8월, 중국 상해), Enterprise Europe Network(EEN) 기술협력설명회(9월, 독일) 등
- (글로벌사업화컨설팅) 중국, 일본 등 글로벌사업화협력센터를 통한 현지 창업·마케팅, 수요기업 알선, 전문컨설팅 등 지원 (10.9월)
  - \* 글로벌사업화협력센터 : 주요국 해외현지 전문기관을 센터로 지정하여 국내 기업의 기술수출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 '10년 현재 중국·동남아·일본 3개 권역에 5개 기관 지정·운영
- (국제컨퍼런스)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창립 1주년 기념 「녹색성장 국제컨퍼런스」 (11.6월)와 연계, 국내·외 우수 투자·평가기관 등이 참여하는 “녹색인증기업 Session” 개최
  -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녹색성장 이니셔티브 강화를 위해 '10.6.16 출범. 녹색성장 이론적 체계화 및 녹색성장모델 전파 등 수행
  - \*\* 1:1매칭 투자상담회 및 대규모 IR, 인증평가기법 공유, 인증브랜드 신뢰성 확보 등을 통해 녹색인증기업의 투자유치 및 국제신용평가도 제고

## 다. 과제 추진일정

추진 과제		주관부처	추진일정
녹색산업융자 지원 확대 (5개)	▪ 산업별 보급융자 녹색인증기업 참여 우대	각부처	'10.12월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잔액 예외 적용	중기청	상시
	▪ 기술보증 중점지원 대상에 녹색인증 포함	기보	
	▪ 무담보 특례신용대출 등 수출금융지원 우대	수은	'10.8월
	▪ 녹색전문기업 수출 및 금융계약 손실 보상	무보	
판로·마케팅 지원 (10개)	▪ 정부발주공사 녹색인증기업 우대	기재부	'10.12월
	▪ 공공구매/국방조달심사 녹색인증기업 우대	조달청 국방부	'10.8월 '10.11월
	▪ TV·라디오 광고료 부분 면제(70%)	KOBACO	'10.9월
	▪ 해외전시회 참가시 녹색인증기업 우선권	KOTRA外	'10.10월
	▪ 해외 수출인큐베이터 녹색인증기업 우대	중기청	'10.12월
	▪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녹색인증기업 우대	중기청外	
	▪ 녹색인증기업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 지원	중기청	
	▪ 녹색인증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중기청	
	▪ Green 보증브랜드 선정시 우대	KOTRA	
	▪ 수출중소기업 글로벌브랜드 육성 참가우대	중기청	
기술 사업화 기반 구축 (5개)	▪ 녹색전문기업 병역특례지정업체 추천 우대	교과부 병무청	'10.12월
	▪ 녹색인증기업 해외기술인력 도입 우대	중기청	
	▪ 출연연 석·박사급 인력 파견 우대	지경부	
	▪ 중소기업 녹색인증 비용부담 경감	기재부 지경부	
	▪ 국가녹색기술대상 참여시 서류평가 가점	교과부外	'11.4월
사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 (6개)	▪ 국가R&D 참여 우대 및 인증수수료 지원	각부처	'10.12월
	▪ 특허우선심사(신청후 1개월까지 단축가능)	특허청	상시
	▪ 녹색인증기업 국제출원비용지원시 가점(5점)	특허청	'10.12월
	▪ 기술이전·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지경부	'10.8월
	▪ 녹색인증기업 글로벌사업화컨설팅 지원	지경부	'10.9월
	▪ 녹색인증 국제컨퍼런스 개최(GGGI 연계)	지경부	'11.6월



## 4 후속조치 계획

-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1차) 시행 ('10.8월) 및 녹색금융상품 제도 개선 등 추가 검토 ('10.하반기)

### ①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 시행 및 2차 활성화 방안 검토 · 추진

- '10. 8월 :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 확정 및 시행
- '10. 8~9월 : 녹색금융상품 제도개선 T/F 운영 (기재부, 금융위, 지경부 등 녹색인증 관계부처)
- '10. 9월 : 녹색금융상품 제도개선사항 검토 및 확정
  - \* 녹색인증 수요기업 대상 설문조사 실시(9월, 녹색위) 및 인증제 feed-back
- '10. 하반기 : 제2차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 수립(잠정)

### ② 녹색인증 수요기업 대상 홍보 강화

- (기업단체 · 지자체 연계)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해당 업종별 협 · 단체 및 지자체를 활용하여 중점홍보 실시(기업대상 설명회 및 홍보부스 운영)
  - 녹색전문기업 등 녹색인증기업 대상 간담회 개최(분기별)를 통해 기업활동 애로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병행
- (대국민 녹색인증 인식제고) 주요 일간지 · 방송을 활용해 녹색인증제 및 인증혜택 홍보를 강화하고, 설문조사 · 성공사례집 발간 등 대국민 접점활동 강화
  - 또한, 녹색문화 및 지식 등 창출 · 확산을 위한 전문가 및 녹색관련 생산 · 유통 ·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가칭)녹색커넥트포럼” 운영 (지경부, 환경부, 조달청 등 관계기관 합동, '10년 하반기)

## 참고 1

## 他 인증제도 인센티브 현황 및 비교

□ (인증제도 현황) 신기술 등의 사업화·기업화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벤처기업 확인, 이노비즈기업 인증, 신기술인증(NET) 등 존재

- (벤처기업) 신생기업의 중소기업화를 위한 창업·보육 지원
- (이노비즈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3년 이상) 발굴·육성
- (신기술인증) 신기술의 조기 발견 및 기술 상용화 촉진 목적

□ 각 제도별 중점지원 분야

- (벤처기업) 시장진입이 어려운 초기, 창업기업의 위험(Death valley)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원조달 등 경영안정화 중점 지원
- (이노비즈기업)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R&D, 금융 등 중심
- (신기술인증) 개발신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공공구매 등 판로 중심

### <벤처·이노비즈·NET 비교>

구 분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신기술인증(NET)
기업 등 요건	벤처투자기업: 금융투자 등으로 지분금 10% 이상 연구개발기업: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 年개발비 5천만원 이상 신기술기업: 기술개발 사업에 의한 총매출액 50% 이상 기술평가기업: 기술성 및 사업화능력 우수기업	창업 후 3년 경과 기업으로 OECD 기업혁신성 평가매뉴얼 (Oslo manual)에 근거한 평가 지표에 따라 기술혁신역량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술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기업(목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	인증일기준 향후 2년 이내 상용화 가능하거나 향후 기존 제품 성능을 현저히 개선 시킬 수 있는 기술 (목적: 기업 및 공공연이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 상용화와 기술거래 촉진)
주요 인센티브	세제	- 법인세, 소득세 등 감면(2년)	- 사업용 투자자산 세액공제
	자금	- 정책자금 등 지원시 우대 - 기술보증 우대 지원	- 기술보증 우대 지원
	판로	- 조달청 물품구매심사 등 우대	- 조달청 물품구매심사 등 우대
	인력	- 병무청 병역지정업체심사 우대 - 해외 기술인력도입 지원	-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 우대
	IR	- TV/라디오 광고 감면 혜택 - 코스닥 등록 우대	- TV/라디오 광고 감면 혜택

\* 주요 인센티브 중 국가R&D 참여우대, 수출기업화사업 등 해외판로개척 부분은 공통으로 생략

## □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과 비교

구 분	녹색인증기업 인센티브	벤처·이노비즈 인센티브
산업별 보급용자 참여 우대	신재생에너지설비, 농업종합자금 등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잔액 예외	잔액기준 또는 매출액 한도 예외	잔액기준 또는 매출액 한도 예외
기술보증 중점 지원 대상	보증료율 0.5% 감면, 한도 70억원	보증료율 0.2% 감면, 한도 50억원
수출금융(특례신용대출) 우대	평가시 가점(10점), 한도 30억원	-
수출 및 금융계약 손실 보상	보험료 할인 20%, 보증한도 2배	-
정부발주공사 우대	선금지급 확대, 계약보증금 감면 등	-
공공구매/국방조달심사 우대	조달청(1.5점), 국방부(0.5점)	조달청(1.5점), 국방부(0.5점)
TV·라디오 광고료 70% 면제	지상파 3사 & DMB	지상파 3사 & DMB
해외전시회 참가시 우대	신청시 가점(10점)	신청시 가점(10점)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우대	신청시 가점(5점)	신청시 가점(5점)
해외수출인큐베이터 우대	신청시 가점(5점)	신청시 가점(5점)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 지원	신청시 가점(5점)	신청시 가점(5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신청시 가점(10점)	신청시 가점(5~10점)
Green 보증브랜드 선정시 우대	우선 선정(재무건정성 충족시)	-
수출중소기업 글로벌브랜드 육성	수출액, 매출액기준 등 참가자격 완화	수출액, 매출액기준 등 참가자격 완화
병역특례지정업체 추천 우대	교과부 추천시 가점	교과부 추천시 가점
해외기술인력 도입 우대	신청시 가점(5점)	신청시 가점(5점)
출연연 석·박사급 인력파견 우대	신청시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인증 비용부담 경감	인증취득시 시험평가비용 50% 환급	-
국가녹색기술대상 서류평가 가점	참여시 가점(2점)	-
국가R&D 참여우대 및 인증수수료	기초원천·지식경제 등 부처R&D 가점	중소기업 R&D 가점
특허우선심사(초고속심사대상)	특허우선심사(최대 1개월까지 단축)	특허우선심사
국제출원비용지원시 가점	1인당 5건, 건당 700만원 이내	-
기술이전·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기술공급자·수요자, 거래기관등 참여	-
글로벌사업화컨설팅 지원	현지마케팅, 수요기업알선, 전문컨설팅	-
국제컨퍼런스 개최	국내외 평가기관, 투자기관 참여	-

## 참고 2

##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방안

□ 전체 4대 분야 26개 추진과제 중에서 중소기업의 지원필요성이 큰 정책자금 융자·판로/마케팅 분야 등 17개 과제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시행

○ 특히, 성능시험검사비용 환급 및 수출금융·정부발주공사 우대, 고급인력 지원 등을 통해,

○ 중소기업의 녹색인증 취득 및 인증 후 사업화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녹색인증 제도의 활용성 제고

\* 신규 성능시험검사비용 환급(50%), 수출보험료 할인 확대(20%), 정부계약시 의무선금지급률 상향(최대 60%), 해외·고급인력 채용 지원 등

### <녹색인증기업 中 중소기업 전용 지원과제 >

NO.	과제명	소관	세부 내용
1-2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잔액 예외	중소기업청	잔액기준 또는 매출액 한도 예외
1-3	기술보증 중점 지원 대상	기술보증기금	보증료율 0.5% 감면, 한도 70억원
1-4	수출금융(특례신용대출) 우대	수출입은행	평가시 가점(10점), 한도 30억원
1-5	녹색수출종합보험 우대 * 보증한도 확대대상 전문기업은 대기업 포함	무역보험공사	보험료 할인 확대(20%)
2-1	정부발주공사 우대	기획재정부	선금지급 확대, 계약보증금 감면
2-3	TV·라디오 광고료 70% 면제	방송광고공사	지상파 3사 & DMB
2-5	해외수출인큐베이터 우대	중소기업청	신청시 가점(5점)
2-6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우대	중소기업청外	신청시 가점(5점)
2-7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 지원	중소기업청	신청시 가점(5점)
2-8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중소기업청	신청시 가점(10점)
2-10	수출중소기업 글로벌브랜드 육성	중소기업청	수출액, 매출액기준 등 참가자격 완화
3-2	해외기술인력 도입 우대	중소기업청	신청시 가점(5점)
3-3	출연연 석·박사급 인력파견 우대	지식경제부	신청시 가점 부여
3-4	중소기업 인증 비용부담 경감	지식경제부	인증취득시 시험평가비용 50% 환급
4-3	국제출원비용지원시 가점	특허청	신청시 가점(5점)
4-4	기술이전·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지식경제부	기술공급자·수요자, 거래기관 등 참여
4-5	글로벌사업화컨설팅 지원	지식경제부	현지마케팅, 수요기업알선, 전문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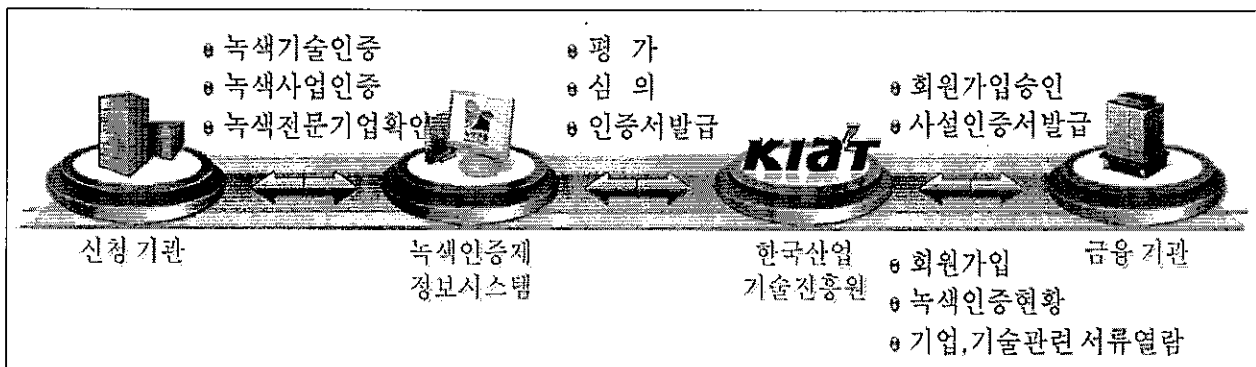
### 참고 3

## 녹색인증 금융권 연계/녹색금융종합포탈

□ (녹색인증정보 금융권 연계) 녹색인증 기업정보를 금융권과 공유하는 시스템 개발로 녹색금융상품 활성화 유도(10.7.30 시스템 개발 완료)

○ 녹색인증 신청서류 제출시 기술·경영상태 등 금융권대상 정보 공개 동의과정 추가, 최종 인증취득 후 신청인이 동의한 정보를 금융권에서 조회

\* 전담기관(KIAT) 녹색인증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http://www.greencertif.or.kr)) 내 금융권 전용 페이지를 구성하여 정보 제공(개별 금융기관 대상 기관등록인증서 발급)



○ 녹색인증과 금융권 연계를 통해 녹색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호업무협약 체결(7.14, 제4차 녹색금융협의회)

\* 녹색성장위원회, 녹색금융협의회, 전담기관(KIAT) MOU 체결

□ (녹색금융종합포탈) 녹색인증기업이나 금융투자자가 접근 용이한 녹색금융 포털을 통해 녹색금융 창구 일원화

○ 녹색금융상품 정보와 녹색인증제, 세제혜택 등 관련 사항\*을 종합 제공함으로써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12월, 은행연합회)

\* 녹색 정책자금 및 보증 지원 등 각종 추진상황, 녹색자금 조달에 대한 컨설팅, 녹색인증 정보, 녹색 금융상품 내용 및 수익률 비교 등

○ 특히, 중소기업 정보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포털(Biz Info)과 연계 검토

\* '10.6월 대한상공회의소 녹색금융 인식 조사(국내 녹색기업 300개사 대상)  
: 녹색금융 이용해 본 기업비율은 14.4%,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이용방법을 몰라서(53.9%)', '까다로운 이용조건·절차(22%)', '내부자금 충분(15.5%)' 順

### 13. 2008년 이후 녹색산업 정책금융 지원 목표 및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2008		2009		2010. 8월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산업은행	-	-	10,000	7,387	10,000	5,280
정책금융공사	-	-	-	-	5,000	3,191
중소기업은행			10,000	11,654	10,000	14,770
신용보증기금	-	-	15,000	26,240	20,000	26,584
기술보증기금	-	-	13,000	16,621	15,000	11,415

#### 14. 은행예대율에 대한 직접 규제방안

□ '09.12.16일 금융위원회는 「2010년 업무계획」에서, 은행간 외형 경쟁유인을 최소화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 예대율 제도를 도입하기로 발표하고, '10년중 예대율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고,

○ 금융위원회는 지난 8.18일 예대율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규정안을 의결하였음

□ 예대율 제도의 주요내용

○ (수준 및 시기) 예대율 규제비율은 100%로 하되, 2013년말까지 유예기간 부여

○ (정의) 예대율을 원화대출금과 원화예수금을 기준으로 하되, 원화예수금 중 CD는 제외하고 평잔기준으로 산정

$$\text{예대율} = \frac{\text{원화대출금}}{\text{원화예수금(CD 제외)}} \leq 100\%$$

○ (적용대상) 원칙적으로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인 은행\*(외은지점 포함)



\* ① 모든 일반은행(시중은행+지방은행), ②외은지점 중 HSBC, ③ 특수은행 중 농협

## 15. 외환건전성 감독강화 방안

### □ 관련 보도자료 참고

-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및 감독 강화 방안(2009. 11. 19)
-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2010. 6. 14)



 <b>금융위원회</b>	<h1>보도자료</h1> <h2>2009.11.19일(목)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h2>	 <b>금융감독원</b>
---	---	---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금융감독원 외환업무실		
책임자	박광관 과장(2156-9730) 양현근 실장(3786-7920)	담당자	박진애 사무관(2156-9734) 김영진 팀장(3145-7932) 홍영진 팀장(3145-7922)
배포일	2009.11.19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 7매 공보실(3145-5788 ~ 91)

## 제 목 :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및 감독 강화 방안

### 1. 추진 배경

- ☐ 최근 국내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은 정부의 적극적 위기 대응 및 금융회사의 자구 노력 등으로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
  - 다만, 금번 위기 전개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외환부문 취약요인이 드러남에 따라
  -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는 동시에 향후 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나갈 필요
- ☐ FSB도 신흥국에 대해 외화유동성 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시스템 불안정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 마련을 권고함
- ☐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9.25일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및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음

#### <주요내용>

- 개별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감독 강화
  - \* ①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정비                      ②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 기준 신설
  - ③ 외환파생상품리스크 관리 기준 신설            ④ 중장기재원조달 비율 강화
  - ⑤ 외화자산한도 규제 도입                          ⑥ 합리적 환헷지 관행 유도
-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감독강화
  - \* ①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이상징후 포착 ② 유사시에 대비한 비상대책 마련
- ☐ 이후 금융위/금감원/은행권 실무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 T/F가 중심이 되어 구체적인 세부추진방안을 마련

## II.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고 및 감독 강화」 세부추진 방안

### 1.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정비

#### (추진배경)

- 현재 은행의 외화 자산·부채간 만기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외화유동성 비율(7일, 1개월, 3개월 단위) 최저 기준을 설정하여 운용
  - 다만, 동비율 산정시 자산의 유동화 가능성 정도와 관계 없이 모든 자산이 언제든지 전액 회수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있어 실제 유동성 경색 상황에서 실효성 문제가 대두
- 뿐만 아니라 7일갭 비율의 경우 엄격한 초단기 비율 관리에 따른 규제 준수 부담이 과다하다는 지적

#### (주요내용)

- 외화 자산의 회수가능성을 반영하여 자산유형별 유동화 가중치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유동성 비율을 산출

\* 자산유형별 유동화 가중치는 영국 금융감독청(FSA) 등 국제통용기준, 규제 준수 비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

#### <유동화 가중치(안)>

자 산 유 형			가 중 치 (%)	
			종 전	개 선
외국통화 및 예치금, 외화콜론, 매입외환			100	100
외화대출금 (리스 포함)	은행간대여금, 내국수입유산지, 분할상환시설자금대출			100
	해외실수요자금, 시설자금대출			90
	운전자금 등			80
외화증권	국 공 채	A ~ AAA		100
		BBB ~ A		90
		BBB 미만		60
	회 사 채	A ~ AAA		90
		BBB ~ A		85
		BBB 미만		50
	주 식 (수익증권 포함)	상 장		55
		비 상 장		35
선물자산				85
기 타				100

- 7일갭 비율은 현행 0%이상에서 △3%이상으로 조정

## 2.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 기준 신설

### (추진배경)

- 외화유동성 리스크의 경우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큰 만큼, 체계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필요

### (주요내용)

- 기시행중인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09.9월)」에 외화유동성 부문의 고유 특성을 반영하여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 기준」을 별도 신설
  - 통화별 유동성 리스크 관리, 조기경보지표 설정 운영, 위기상황시의 자금유출 금액 추정 및 비상자금조달 계획 등을 의무화

## 3. 외화안전자산 보유 최저한도 의무화

### (추진배경)

- 금변 위기 과정에서 상당수 금융회사가 외화유동성 부족을 정부 지원 자금에 의존하여 대응
- 앞으로 외화 자금의 급격한 유출로 인한 외화유동성 부족 사태에도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외화안전자산 보유 최저한도를 의무화

### (주요내용)

- 안전자산 : A등급 이상 국공채, A등급이상 국가의 중앙은행 예치금 및 A등급 이상 회사채(제도 정착 추이를 보아 단계적 제외 검토) 등
- 보유 한도 설정 : 금융회사의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 방식중 택일 허용

① 1년내 만기도래 차입금  $\times 2/12 \times (1 - \text{최저차환율}^*)$

\* 최저차환율은 금변 위기 이후 차환율이 가장 낮았던 3개월 가중 평균치

② 총 외화자산 대비 일정 비율\* 이상

\* 우선 2%로 시행하되 시행경과를 보아가며 상향조정 검토

#### 4.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 신설

##### (추진배경)

- 그간 일부 기업의 과도한 외환파생상품 거래가 문제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리스크 관리가 미흡

##### (주요내용)

- 기시행중인 「파생상품업무처리 모범기준」을 외환파생상품거래에 구체화한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 신설
- 과도한 환헷지를 방지하기 위해 실물거래 대비 일정비율(최대 125%)이상의 선물환 거래 억제
  - \* 다만, 헷지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별 건별로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승인을 얻어 거래 실행 가능
- 타금융회사와의 기체결 거래 실적 확인을 의무화하고, 개별 기업의 거래 한도에서 차감
  - \* (기업) 실물거래의 실재성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허위자료 제출시 계약 해지요건 (금융회사) 입증자료의 타당성 판단, 타금융회사와의 거래 실적 확인
  - \*\*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집중되는 외환파생거래 정보를 은행들이 개별 계약 체결시 확인
-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신용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파생상품업무처리 모범기준」 적용대상인 모든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에 적용(단, 비은행 금융회사는 제외)
- 동기준상 거래 상대방은 자본시장법상 일반투자자 뿐 아니라 전문투자자(단, 금융회사 제외)에도 해당

##### < 동기준의 적용 범위 및 내용 >

		동기준 적용여부	거래한도(실물거래대비)
자본시장법상 일반투자자		○	100% 이내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기업투자자	○	100~125%이내*
	금융회사	X	제한없음

\* 기업별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100~125% 범위 내에서 거래 한도를 부여하되, 개별건별로 은행 리스크 관리위원회 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 비율 한도(100~125%)를 초과하여 거래 가능

## 5. 중장기 외화대출재원조달 비율 강화

### (추진배경)

- ☐ 현재 중장기 외화대출재원조달 비율(중장기채권/중장기 대출) 규제를 통해 은행권의 차입구조 장기화를 유도중
  - 다만, 동비율을 8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고, '1년 이상'으로 중장기 개념을 규정하는 것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 존재

### (주요내용)

- ☐ 중장기 대출 재원조달 산정 기준을 '1년 이상'에서 '1년 초과'로 강화하여 단기외채 산정시의 구분기준과 일치
- ☐ 규제 비율은 현행 최소 80%이상에서 90%이상으로 강화하고 내년 시행 성과를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할 방침
  - 또한 동규제 비율 '90% 이상'은 최저준수 비율인만큼, 내년 상반기중 100%이상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지도

## 6. 자산운용사의 합리적 환헛지 관행 유도

### (추진배경)

- ☐ 그간 국내 자산운용사의 높은 환헛지 비율은 은행권 단기외채 차입의 주요요인으로 작용
  - 또한 펀드 투자자의 상품 선택의 기회를 제약한다는 문제점도 지적

### (주요내용)

- ☐ 투자설명서\*, 금융투자협회 공시\*\*를 통해 환헛지 비용 및 효과 등에 대한 대고객 정보 제공을 강화

\* 12월중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반영하여 내년부터 공시 예정

\*\* 현재 시스템 구축중에 있으며 11월중 시험가동을 거쳐 12월중 추진 완료 예정

- ☐ 환헛지 비율을 달리하는 투자 상품을 도입

\* 모자형 펀드구조에서 헛지비율이 다른 자펀드를 적절하게 배합하여 판매토록 12월중 금융투자협회 '표준 투자권유 준칙' 개정 예정

## 7. 외환건전성 관련 보고 의무 명확화

- ☐ 현재 불명확한 외환건전성 관련 보고 대상, 주기 등을 구체화 하여 명시

< 은행업 감독규정상 금융회사의 보고 의무 명확화(예시) >

보고내용		보고내용	보고주기
외환자산 및 부채현황, 만기별 외화자금 조달, 운용 현황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	⇒	외화자산, 부채의 잔존만기 구분 및 외화유동성 비율	매월
		외화차입금의 만기도래 현황	매월
		외화자금의 조달 및 운용 현황	매분기

## 8. 외화자산한도(레버리지 비율) 설정 문제는 추후 검토

(추진배경)

- ☐ 금융회사의 과도한 자산 확대 및 차입 역시 금변 위기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
- ☐ 바젤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는 현재 레버리지 비율 규제 도입 방안을 검토중

(주요내용)

- ☐ 앞으로 바젤위원회 등 국제적 논의 동향을 보아가며 적용방식,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등을 구체화

\* 예시 : 자본금 대비 외화자산 비율을 일정 수준에서 관리

### III. 추진 방식

- 이번 조치는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및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 정비에 초점을 두었으며,
    -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우선 은행권이 현재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도입하되 향후 제도정착 추이, 경제 상황 변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
  - (적용범위) 우선 은행권부터 시행하고, 기타 금융권에 대해서는 은행권 시행 성과를 보아가며 추후 검토
    - 은행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은행에 동일하게 적용
      - \* 수출입은행 및 산업은행은 특수성을 감안하여 안전자산 보유 의무를 면제
    - ※ 외은지점은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 보고의무만이 적용되며 유동성 비율 규제 등 직접적 규제는 적용되지 않음
  - 기타 금융회사의 경우 금번 발표한 조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하되 은행권 시행 성과를 보아가면서 추가 적용범위를 검토
- (적용수준) 영국 등을 참고하되 국내 금융회사 수익성 및 규제 준수비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
- (적용시기) 내년초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개선에 따른 유동화 가중치 부여 및 외화안전자산 보유는 도입 초기 은행의 적응기간을 감안하여 2010년 7월부터 시행

### IV. 향후계획

- 내년초 시행을 목표로 금년중 관련규정\* 개정을 마무리
  - \* 은행업 감독규정 및 시행 세칙 등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또는 <http://www.fss.or.kr>

이 자료는 2010년 6월 13일(일)  
15: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2010. 6. 14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의 배경

우리 경제가 그동안 경험한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높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는 대외개방도가 높기 때문에 경기가 좋을 때는 해외 자본이 과도하게 유입되었다가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 되면 급격하게 유출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이러한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 위축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교훈삼아 위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그동안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높여온 주요 원인인 은행의 과도한 단기 차입을 줄이고, 불요불급한 외화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은행의 외환부문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자본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우리의 대응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대책도 포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다음의 기본방향 하에 마련되었습니다.

첫째, 기존의 자본자유화와 시장개방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과도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시켜 우리 경제의 '거시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시장관리나 영업규제의 목적이 아니라 시장의 취약부문을 보완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앞으로 위기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사전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기 전에 미리 지붕을 고치자”라는 자세로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셋째, 거시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적 흐름과 논의’에 맞추어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IMF, ADB 등 국제기구에서는 거시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본 유출입 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고, 지난 6월 G-20 재무 장관회의에서도 자본변동성과 위기전염 방지를 위해 국내·지역·다자간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이 양방향으로 완화될 경우 우리 경제 전반의 거시 건전성이 제고되어 안정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로운 조치들은 국내외 금융기관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며 금융기관·기업체들이 과도한 부담이 없이 금융·실물 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완조치도 충분히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경제의 시스템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거시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G-20 회의 등을 통해 금융제도 개선을 위한 국제적인 논의와 공조체제 구축에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것입니다.

# 순 서

I. 추진 배경 .....	1
1. 높은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위기의 주요원인으로 작용	
2. 거시건전성 제고 필요	
II.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	4
1. 기본 방향	
2. 자본유출입 관리강화	
가. 선물환포지션 제도 도입	
나. 외화대출 관리 강화	
다. 외환건전성 관리 강화	
※ [참고] 은행부과금 도입 검토	
3. 자본유출입 대응능력 확충	
가. 자본유출입 모니터링 강화	
나. 금융안전망 구축	
다. 외환보유액 관리	
III. 기대 효과 .....	14
IV. 향후 추진체계 .....	15

## I. 추진 배경

### 1 높은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 우리나라가 겪었던 지난 두차례의 금융위기는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높았던 점에 기인
  - 호황기에는 자본이 과도하게 유입되고 불황기에는 급격히 유출되어 실물경제보다 더욱 큰 폭으로 금융·외환시장이 변동하고 이로 인해 실물경제가 다시 영향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
- 이와 같이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큰 이유는 무역의존도가 높고 금융·실물부문의 개방도가 높기 때문임
  - 선진국에 비해 무역의존도가 높아, 이로 인한 무역관련 외화자금의 유입·유출이 빈번
    - \* 무역의존도(09년, %) : (韓) 82.4, (日) 22.3, (美) 18.7, (中) 45.0
  -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되고 해외차입이 자유화되어 자본유출입의 제한이 거의 없음
    - 특히, 은행부문을 통한 차입의 변동성이 높았고 그중에서도 외은지점을 통한 단기 차입의 변동성이 높았음
- 향후 자본자유화와 시장개방의 기본틀을 유지하여 나가되,
  - 자본유입측면에서는 실물경제의 과도한 단기 외화수요를 축소·관리하고, 자본유출측면에서는 대내외 대응능력을 확충하여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

⇒ 향후 경제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서 자본유출입 변동을 완화하여 나갈 필요

## 2 거시건전성 제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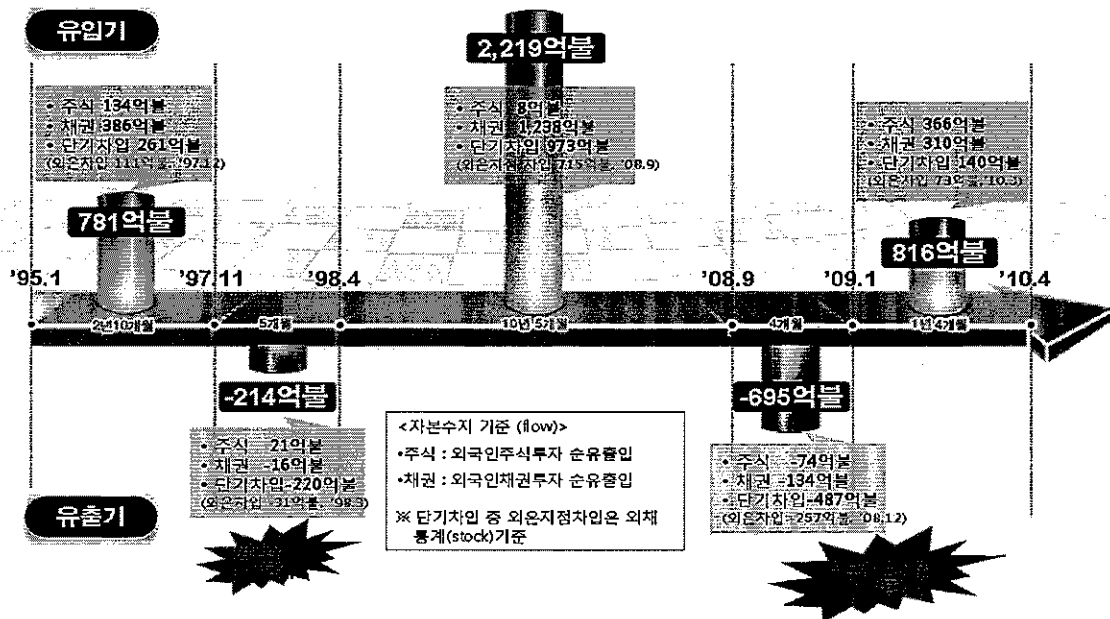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정되어 감에 따라, 우리나라로의 자본 유입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우리 외환시장이 안정되고 대외신인도가 제고되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권시장 투자 및 해외차입이 활성화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09.1~10.4월 동안 주식(366억불)·채권(310억불)·단기차입(140억불) 등 총 816억불이 유입
  - 앞으로 경기 회복속도가 더욱 빨라지게 되면 자본유입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
- 국내로 유입된 자본이 급격히 유출되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거시건전성을 제고할 필요
  - 우리나라 자금유출입의 특수성을 반영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
- 글로벌 차원에서도 IMF, ADB 등을 중심으로 거시 건전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중
  - IMF는 거시정책과 건전성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자본유입 규제를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주장
  - G-20에서도 자본변동성과 위기전염 방지를 위하여 국내/지역/다자간 노력이 필요함을 인정 (10.6월 G-20재무장관회의)
  - 국가별로 경제상황에 맞는 규제를 추진하거나 검토중\*
    - \* ① 미국 :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의 검토를 거쳐 '대형 금융기관의 자기매매·헤지펀드 투자 금지 방안'(Volcker Rule) 마련
    - ② EU : 헤지펀드 규제강화방안이 EU 재무장관회의 통과(10.5월)
    - ③ 영국 : 외은지점에도 유동성규제 강화방안을 적용(09.10월)

## 참 고

## 외국인 자금흐름 및 단기외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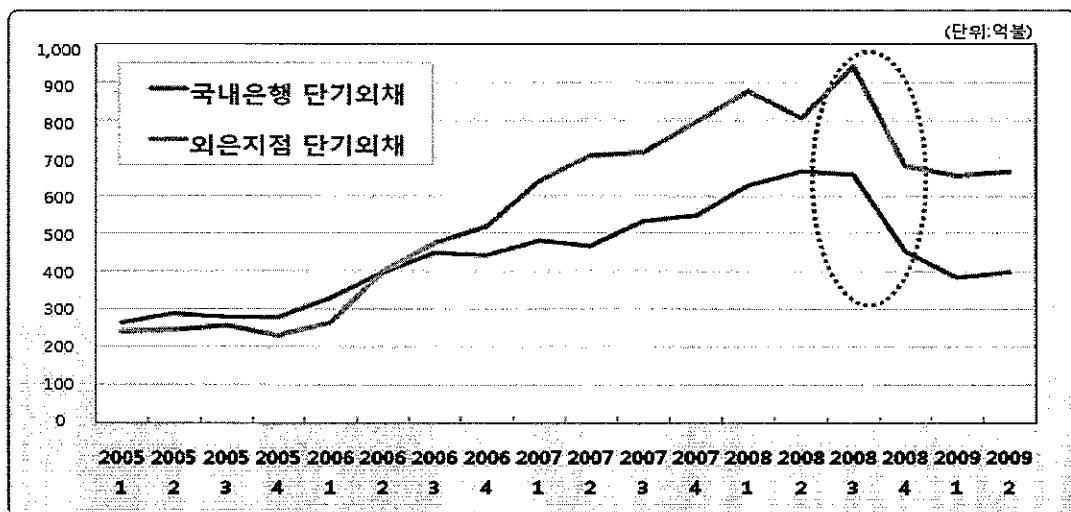
### (1) 외국인 자금흐름 현황

- 외국인 자금은 98.4~08.8월에는 2,219억불 유입되었으나, 08.9~08.12월에는 695억불(이중 단기차입이 70%를 차지) 유출



### (2) 단기외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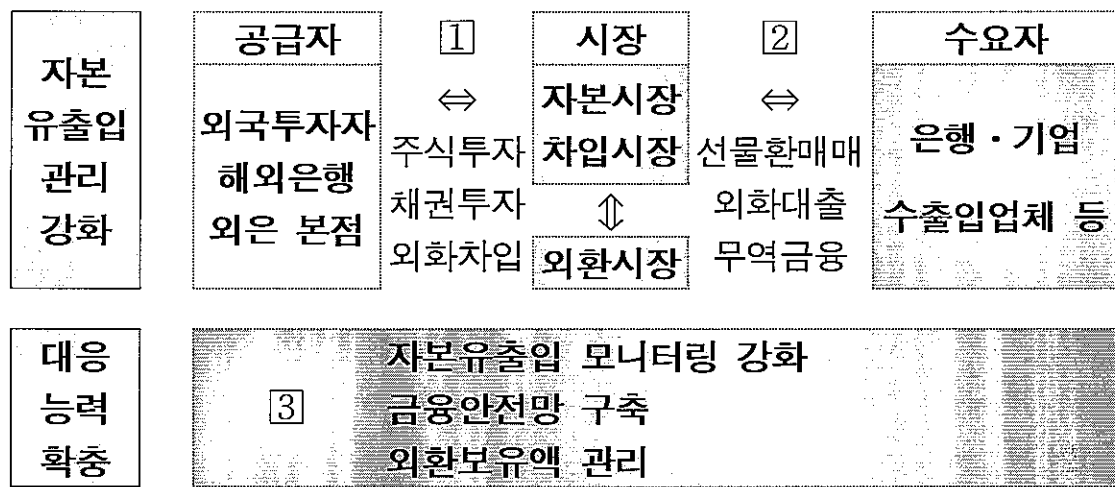
- 단기외채는 위기시 외화유출요인으로 작용하여 08.10~09.3월 동안 국내은행 271억불, 외은지점 285억불 유출



## II.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 1 기본 방향

◇ 자본자유화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시스템 리스크를 축소시키기 위한 자본유출입 관리 및 대응능력확충 방안을 마련



- ① 해외공급자로부터 단기적인 외화유입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함으로써 유사시 유출될 수 있는 외화자금규모를 축소
  -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제적 정합성에 맞춰서 추진하되, 유출입 변동성이 큰 외화차입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시행
- ② 시장과 외화수요자와의 관계에서 외화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외화를 시장에서 적절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
  - 그러나, 외화수요자의 과도한 외화수요는 억제하여 시스템 리스크를 축소
- ③ 중장기적으로는 급격한 자본유출입 변동을 감내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강화, 금융안전망 등 근본적인 대응체제를 구축

## 2 자본유출입 관리강화

### 가. 선물환포지션 제도 도입

#### (1) 현황 및 문제점

- 조선사·자산운용사 등은 환율하락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장래에 받을 수출대금을 미리 은행에 매도(선물환매도)

※ 은행의 선물환매입이 단기외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로

- 선물환을 매입한 은행은 장래에 달러를 받는 시점에서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 손해를 보게 되므로, 선물환을 매입한 시점에서 달러를 차입하여 이를 매도하고 추후에 달러를 받아 차입금을 상환

⇒ 06~07년 총외채 증가(1,953억불)의 약 절반 정도가 국내은행·외은지점의 선물환 매입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 이는 06~07년 단기외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08년 금융위기시 우리 경제의 시스템리스크를 증가시켰고 이로 인한 비용은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전가

- 그러나, 현행 제도상 은행의 선물환매입을 관리할 수 있는 장치는 미비한 상황

- 은행은 현·선물환이 모두 포함된 종합포지션\*만 규제받아 선물환을 매입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현물환을 매도하면 종합포지션과 무관하게 선물환을 제한없이 매수가 가능

\* 현물환·선물환포지션의 합계를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유지



## (2) 대응 방안

### ☐ 은행 등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신설·운영

\* 선물, 외환·통화스왑, NDF 등 통화관련 모든 파생상품을 포함

- 국내은행의 경우 현행 종합포지션 한도와 동일하게 전월말 자기자본의 50%(잠정)를 적용
- 외은지점은 외은지점의 선물환포지션 평균(10.4말, 301%)을 감안하여 우선 250%(잠정)로 한도를 설정
  - 추후 경제여건, 시장상황,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분기별로 한도 조정여부를 결정
- 증권·종금사는 국내은행과 동일하게 50%(잠정)를 적용

## (3) 보완 조치

### ☐ 한도를 급격하게 축소해야 하는 은행의 부담을 감안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기존거래분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

- 시행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유예기간 중에는 포지션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

\* (예) 제도 도입 직전일의 선물환포지션이 한도를 상회하는 은행은 유예기간 중 도입 직전일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 기존 거래분으로 인하여 포지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초과분은 한국은행이 예외를 인정

\* 최장 2년까지 허용(필요시 연장)하되, 한국은행이 시장여건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마련

### ☐ 시장불안 심리에 따라 외화유동성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외환당국의 외화 유동성공급 등 보완조치 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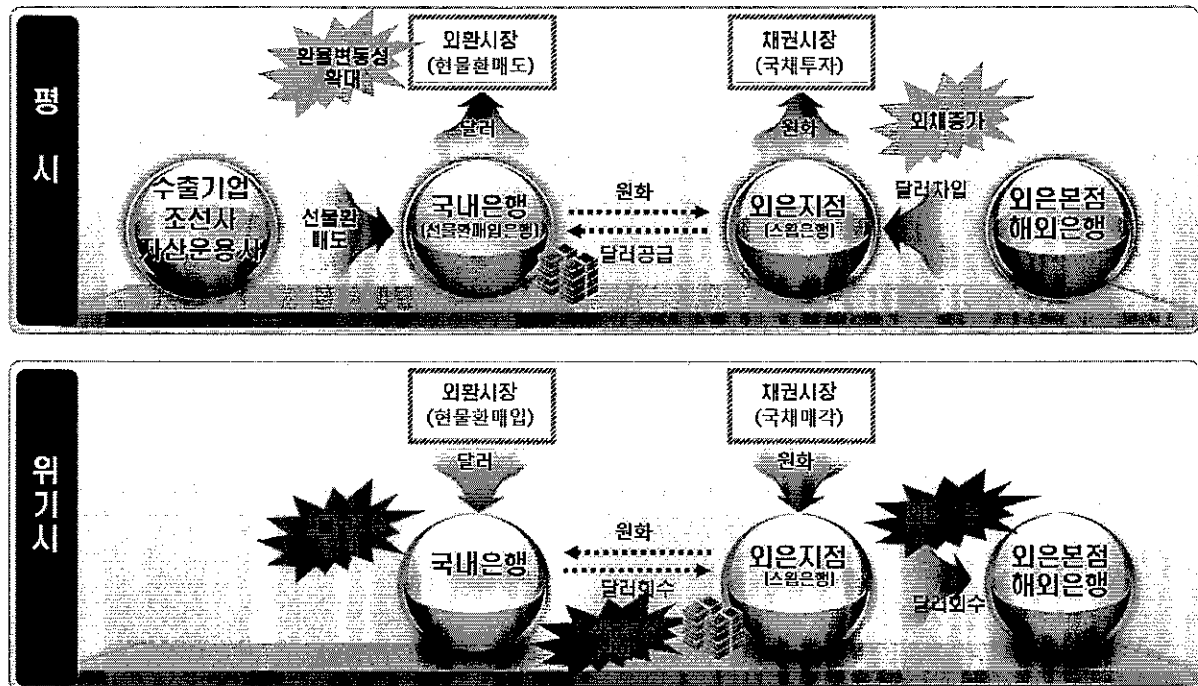
-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기관·기업 애로해소를 위해 '관계기관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 등이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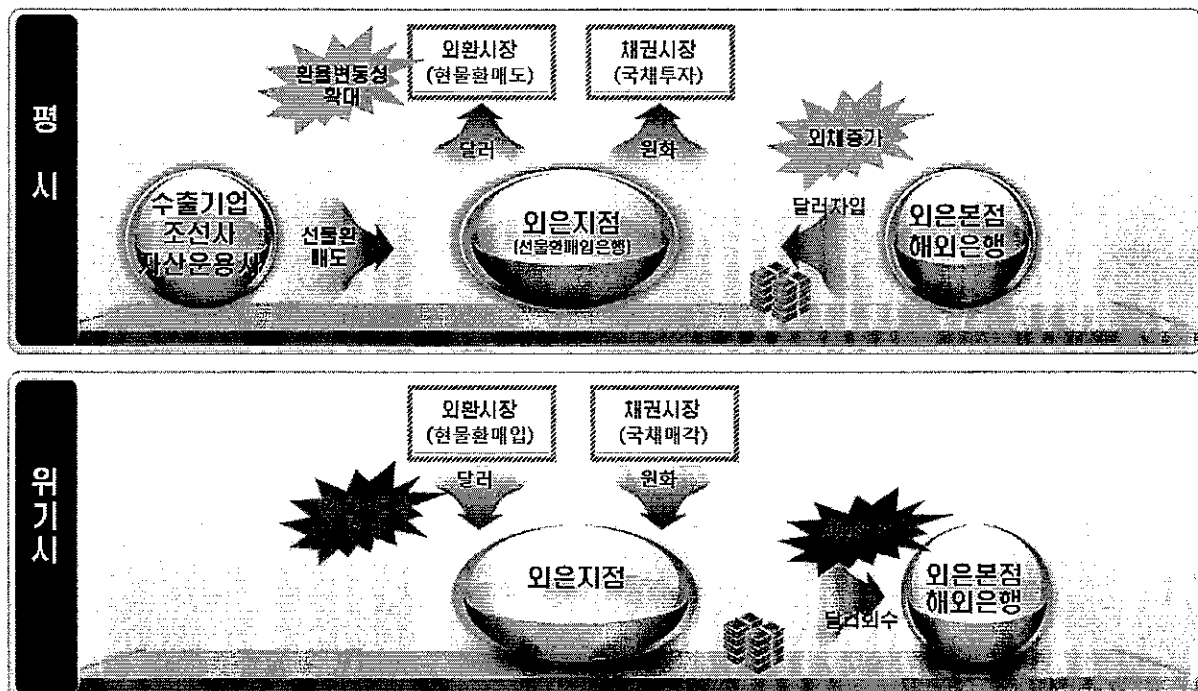
## 참 고

## 선물환매도에 따른 단기외채 증가

### (1) 국내은행이 선물환을 매입하는 경우



### (2) 외은지점이 선물환을 매입하는 경우



## 나. 외화대출 관리 강화

### (1) 현황 및 문제점

□ 외화대출이 급증하는 경우 외채 등 시스템 리스크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외화대출에 대한 용도규제를 시행중

- 원칙적으로 외화대출은 해외사용 용도\*만 허용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시설자금에 한하여 국산 시설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이 외화재원을 조달하여 지원

\* 원자재 수입 등 대외결제, 해외직접투자, 외화차입금 상환 등

□ 글로벌 금융위기로 크게 감소했던 외화대출은 향후 국내 경기 회복, 국내외 금리차 등으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

\* 05~06년중에도 저금리·환차익을 노린 외화대출이 급증한 경험

- 외화대출 증감 : (05년) 49.6억불 → (06년) 159.5억불

- 이 경우 원화대출로도 가능한 국내사용용도 외화대출이 불필요한 외화수요를 유발시켜 자본유입을 확대시킬 우려

- 또한, 환율변동에 따라 사용자가 극심한 환위험에 노출

### (2) 대응 방안

□ 외화대출을 해외사용 용도로만 제한

- 금번 용도제한은 신규 외화대출에만 적용하고, 기존 외화대출의 만기연장은 은행의 판단하에 허용
- 다만,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의 경우 기존 대출잔액 범위내에서 외화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

□ 아울러, 외화대출 증가율이 클수록 외화대출에 대한 감독 수준을 높여가는 단계별 대응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시행

\* (1단계) 외화대출 감축을 위한 창구지도 실시 → (2단계) 용도외 외화대출 증가에 대한 집중 점검 → (3단계) 은행의 외화비상계획 집중 점검

## 다. 외환건전성 관리 강화

### (1) 현황 및 문제점

-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외환부문의 취약요인이 드러남에 따라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감독강화 방안 마련·시행(10.1월)

< 외환건전성 감독강화 방안(09.11월)의 주요 내용 >

	2010년 이전		2010년 이후	대상
외화유동성 비율	7일·1개월·3개월 이내 만기도래 외화부채 대비 외화자산을 일정수준 유지	⇒	외화자산의 회수가능성에 따라 가중치를 차등 부여 (10.7.1일 시행)	국내 은행
중장기 재원 조달 비율	$\frac{1\text{년이상외화차입금}}{1\text{년이상외화대출}} \geq 80\%$	⇒	$\frac{1\text{년초과외화차입금}}{1\text{년이상외화대출}} \geq 90\%$	국내 은행
외화안전자산 보유	관련 규제 없음	⇒	위기시 2개월간 자금유출 가능액 또는 총 외화자산의 2% 이상 (10.7.1일 시행)	국내 은행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	관련 규제 없음	⇒	현금성 자산을 충분히 보유, 비상자금조달 계획 사전 수립	국내 은행
외환파생거래 리스크 관리기준	관련 규제 없음	⇒	실물거래의 125%이상 선물환거래 억제	국내은행 외은지점

- 同 방안의 시행 후, 외화유동성비율 상승 및 외환파생상품 거래 관리 강화 등 은행의 외환건전성이 전반적으로 개선

- 지난번 발표된 방안이 정착되고 있는 만큼 외환건전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

- 그러나, 외은지점은 본점에서 외화유동성을 종합 관리하고 있어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등을 적용받지 않고 있음

- 외은지점은 단기·외화로 조달한 자금을 장기·원화 자산으로 운용\*함으로써 자산·부채의 불일치로 인한 리스크에 노출

\* 10.3월말 외은지점의 총조달(1,054억불) 중 외화조달(829억불)이 79%를 차지한 반면, 총운용(1,023억불) 중 원화운용(585억불)이 51%를 차지

## (2) 대응 방안

□ 국내은행에 적용하고 있는 '외화유동성비율 규제'와 '중장기 재원조달비율 규제'를 강화

- (외화유동성 비율) 은행은 자율적\*으로 일별 관리하고, 그 현황을 금융당국에 월별 보고하도록 하여 모니터링을 강화

\* 외화유동성 비율 일별관리 실적은 감독상 모니터링 지표로만 활용하고, 위반여부는 현행과 동일하게 매월 말일기준 적용(월별관리)을 유지

- (중장기 재원조달비율) '중장기 외화자금관리비율'로 강화하여 자금조달의 장기화 유도

- 비율 산출시 외화대출뿐만 아니라 외화만기보유증권을 포함하고, 비율을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

□ 외은지점에 대해 자율적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 유도

-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에 따라 외화자금조달 장기화 및 자체적인 안정적 유동성 리스크 관리 유도

- 다만, 외은지점의 본점이 유동성 지원 약속서를 제출하는 경우 통화별 유동성 리스크 관리 이외에는 적용 면제

\* 외은지점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시행 후 3개월의 유예기간 부여

※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 내용은 국내은행에 적용되는 내용\*과 유사하게 구성하되, 외은지점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예정

\* 통화별 유동성 리스크 관리, 자금조달원 다변화, 위기상황분석 및 비상조달계획 등

□ 실수요 이상의 선물환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선물환거래 한도를 실물거래의 125%에서 100%로 하향 조정

□ 글로벌 위기사 발생한 손실 충당 및 향후 위기 대응 차원에서  
은행부과금 부과 방안이 국제적으로 논의 중

- G-20 재무장관회의(6.4~5일)에서는 금융시스템 복구 및 정리 비용은 금융권이 부담해야 한다는 데 합의하고, 이에 대한 원칙(principle)\*에 합의

\* ① 납세자의 비용 부담 방지 ② 금융시스템 리스크 축소 ③ 경기 호황기 및 불황기에도 안정적인 신용공급 유지 ④ 개별국가 상황 고려 ⑤ 공정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 촉진

□ G-20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은행부과금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가 수렴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

- 앞으로 G-20 정상회의에서 은행부과금 등 금융권 분담방안에 대한 구체화된 원칙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IMF는 캐나다 정상회의시 은행부과금 관련 최종 보고서 제출 예정

□ 향후 국제적인 원칙 도출에 대비하여 내부적으로 사전 준비를 착실하게 수행

- 국제적 논의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권 분담방안 T/F를 운영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G-20 준비위, 한국은행, 금감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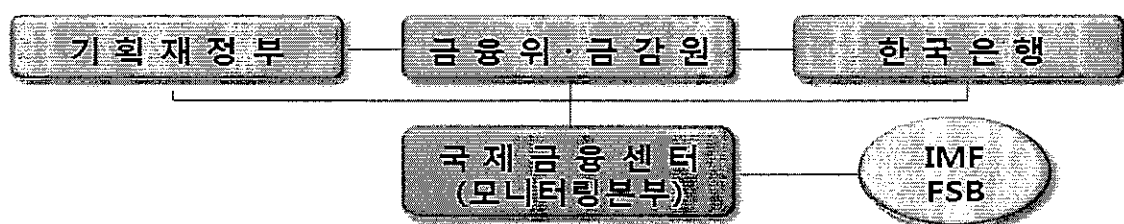
- 은행부과금 국내 도입과 관련된 주요 쟁점\*, 금융산업 및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부과 대상 기관, 부과 기준, 적정 요율, 적립·활용 방안 등

### 3 자본유출입 대응능력 확충

#### 가. 자본유출입 모니터링 강화

- 자본유출입에 따른 위기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종합 예측 모형(Early Warning System)**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
  - 한국은행, 금융연구원, KDI,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합동으로 위기 예측모형을 보완하여 국제금융센터에서 운용
  -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더 많은 관련 경제변수\*의 활용을 통해 **정교한 지표를 개발**
    - \* (현재) 실질환율, 외환보유액, 교역조건, 내외금리차, 단기외채비중 등 (개선) 자본유출입에 대한 시장전망·시장정서 등의 정성적 정보 추가
  - 모형에 사용할 데이터의 가용성 및 정확성,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통계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 국제금융센터 내 “자본유출입 모니터링본부(가칭)” 신설
  - 정보의 통합·분석, 위기에측모형 운영을 통하여 **상시적·종합적 자본유출입 모니터링 실시**
  - 위기에측결과를 적시에 관련기관에 전파하여 해당기관이 위기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 강화**
  - IMF(거시감독), FSB(미시감독, Financial Stability Board) 등과 **국제적 모니터링 협력채널을 구축**



## 나. 금융안전망 구축

- (글로벌 안전망)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시 글로벌 금융 안전망 구축을 Korea Initiative로 추진
  - 6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로 합의
  - 이의 일환으로 IMF는 예방적 대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검토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함
- (지역 안전망) 아시아 역내 차원의 위기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CMIM 자금지원체계 및 감시역량 등을 적극 확충
  - \*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 1,200억불 규모로 10.3.24일 발효
  - CMIM의 확대발전, 역내 채권시장 인프라 확충과 함께 새로운 역내 금융협력 비전 도출을 위한 '미래과제T/F'를 발족

## 다. 외환보유액 관리

-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외환보유액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
  - 국제수지, 외채동향 등 외환지표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 안전망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하여 위기 대응에 필요한 외환보유액 수준을 점검
- 급격한 외화유출시 외환보유액에 대한 보충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KIC, 국민연금 등의 외화자산을 확충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

- ① KIC 위탁을 확대(10.4월말 303억불 → 2015년 500억불 목표)하여 외환보유액의 운용수익률을 제고하고 유사시 외화유동성으로 활용
- ② 현재 9% 수준인 국민연금의 해외투자(208억불) 비중을 늘려 2012년 12%(383억불), 2014년 15%(576억불)까지 확대 (기확정)



### Ⅲ. 기대 효과

□ 금변 대책 시행시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완화되어 대외부문 충격을 보다 유연하게 흡수할 수 있게 될 것임

○ 실물경제 상황과 괴리된 금융시장요인으로 인한 경제 위기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구체적으로 외채 급증 억제, 은행의 건전성 개선, 급격한 자본유출 억제, 통화정책 안정성 제고 등의 효과가 예상

① 자본유입 측면에서 과도한 선물환거래와 외화대출 등을 관리함으로써 단기외채가 급증하는 것을 제한

\* 금변 대책을 시행하는 경우 10.4월말 기준으로 한도를 초과하여 은행들이 매입한 선물환포지션은 187억불임. 한편, 10.3월말 기준으로 국내 시설 자금에 대한 외화대출잔액(중소 제조업체분 제외)은 108억불임.(추정)

② 자본유출 측면에서 평상시의 과도한 자본유입을 억제하여 불황기의 유출을 최소화

\* 08.9~12월 금융위기 당시 외국인 주식은 74억불, 외국인 채권은 134억불, 은행권의 단기차입은 487억불(전체 유출의 70%) 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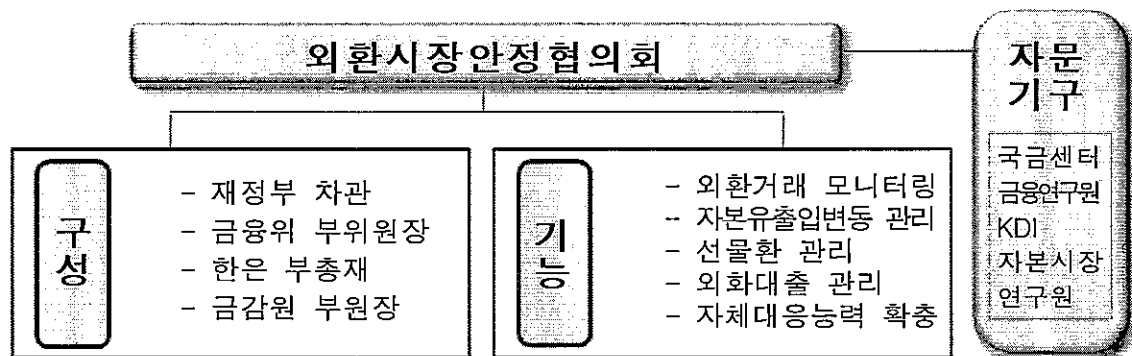
③ 은행 등의 선물환거래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은행권의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외환건전성을 제고

④ 급격한 자본유출입이 완화되는 경우 국내 통화·외환정책의 부담이 완화\*되어 거시경제의 안정성이 제고

\* 대규모 해외 자본이 급격하게 유입되는 경우에 국내 유동성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물가 및 자산시장 불안 등을 초래할 가능성

## IV. 향후 추진체계

- 최근 차관급 협의체로 격상된 **외환시장안정협의회**를 중심으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
  - \* 재정부 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한은 부총재,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으로 구성하고 금융연구원, KDI, 자본시장연구원 등도 참여
  - 별첨된 주요과제 추진일정에 따라서 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점검·보완 등 후속조치도 관장
  - 아울러 외환거래정보 모니터링, 자본유출입 변동 관리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주요 기능을 상시적으로 수행
- 중장기적으로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외환시장의 펀더멘탈을 강화해나가는 노력을 지속
  - 외환분야의 전문성 보완을 위해 국금센터, 금융연구원, KDI, 자본시장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과의 정책적 연계를 강화
  - IMF·FSB 등 국제기구와의 공조체제를 공고히 함으로써 국제적 논의와의 정합성도 제고



## 참 고

## 주요과제 추진일정

	주요 과제	조치사항	추진기관	추진 일정
자본 유출입 관리	선물환포지션 제도 도입	외국환거래규정, 금융투자업규정,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등	재정부 한은 금융위 금감원	입법예고, 규개위 통과 후 즉시 시행 (7월중)
	외환건전성 관리 강화	은행업감독규정,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등	금융위 금감원	입법예고, 규개위 통과 후 즉시 시행 (7월중)
	외화대출 관리방안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개정	한은 재정부	7월중 시행
대응 능력 강화	자본유출입 모니터링 강화	-	재정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7월중 시행
	금융안전망 구축	-	재정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상시 추진
	외환보유액 관리	-	재정부 한은	상시 추진

## 조 문 환 의 원

## 1. 퇴직자 명단 및 재취업 현황

□ 퇴직자 명단, 주요약력 및 재취업 현황(계약직 제외)

성명	퇴직 당시 직위(직급)	퇴직일자	퇴직 당시 재취업기관
김○○	위원장	08.03.05	-
이○○	부위원장	08.03.13	LS네트웍스
이○○	금융정보분석원장	08.03.28	한국거래소
전○○	FIU제도운영과장	08.04.30	은행연합회
김○○	혁신행정과장	08.05.15	법무법인
김○○	상임위원	08.12.09	금융감독원
정○○	부이사관	09.01.05	금융투자협회
이○○	행정사무관	09.01.09	법무법인
전○○	위원장	09.01.20	-
홍○○	서기관	09.03.17	법무법인
양○○	부이사관	09.03.26	한국자금중개
김○○	행정주사	09.04.30	금융투자협회
나○○	서기관	09.05.13	산업은행 계약직
한○○	서기관	09.05.15	신영증권
이○○	서기관	09.07.10	외교통상부 특채
박○○	부이사관	09.09.11	SK C&C
김○○	행정사무관	09.10.12	-
김○○	금융정보분석원장	09.11.17	증권금융
김○○	금융서비스국장	09.12.07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
김○○	전산서기보	10.02.17	한국거래소
나○○	행정사무관	10.03.02	한국정책금융공사

## 2. 2007년 이후 내부 감사 조치사항 및 개선사항

□ 금융위원회는 '2008. 2. 28일 설립된 이후, 2008. 6. 23(월) ~ 6. 27(금), 5일간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음

○ 자체감사 결과서(별첨 1)

○ 자체감사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조치결과(별첨 2)

## **‘08년 자체감사 실시결과**

### **1. 감사개요**

- **기간 및 대상부서:** ‘08.6.23(월)~6.27(금), 혁신행정과 등 3개부서
- **대상 업무:** 조직개편, 외부감사 결과처리 등 외부기관 관심분야 업무
  - 청사이전 관련 등 예산집행, 물품관리, 비정규직 운용실태
  - 정책연구용역과제 관리실태
  - 신·기보의 중소기업 보증제도

### **2. 감사결과 및 주요 지적사항**

#### **① 차량운영 및 예산집행 등의 부적정**

- 업무용 차량을 중형 위주로 운영
  - ⇒ 에너지 절감 및 차량운영 효율성 방안 강구 (시정)
  - \* 공용차량 관리·운영개선방안을 마련(‘08.7.10)하여 시행 중
- 국외출장중 항공기 숙박시 숙박료 지급, 비대상자에게 대우수당 지급, 정부구매카드 사용자 실명 미서명 등
  - ⇒ 숙박료 및 대우수당은 환수하여 국고반납(7.21)하고,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실명 서명토록 공지 (현지조치)

#### **② 재물조사 부실 실시로 물품관리대장과 실제 보유물품과 불일치** ⇒ 재물조사 재실시 (시정)

#### **③ 본부와 FIU의 비정규직 급여 체계 및 수준이 상이** ⇒ 급여체계 및 수준의 차이 해소방안 강구 (권고)

#### **④ 정책연구용역과제 관리 미흡** ⇒ 정책연구과제 관리 및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PRISM) 등록 철저 (현지조치)

<참 고>

## 지적사항별 조치내역

일련 번호	지 적 내 용	조치구분	담당 부서
1	업무용 차량 운영의 불합리	시정	혁신행정과
2	국외출장시 숙박비 초과 지급	현지조치	“
3	정부구매카드 사용자 실명서명 미이행	현지조치	“
4	업무추진비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시 상대방 인적사항 기재 불철저	현지조치	“
5	직원교육 전·후 식비 지출과목의 부적정	현지조치	“
6	대우수당 지급의 부적정	현지조치	“
7	재물조사 실시 불철저	시정	“
8	본부와 FIU의 비정규직 급여체계 상이	권고	“
9	정책연구용역과제 관리 미흡	현지조치	은행과 등



## [’08년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지적사항명	조치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조치결과	조치상황 (08.12.31)
업무용 차량 운영의 불합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사항] 금융위는 특수업무용(외빈의진 등)으로 중형차량 4대를 신규로 임차하였으나 실제 운영의 대부분을 일반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일반업무용차량은 1,600cc 이하로 운영토록 하고 있는 규정과 배치됨</li> <li>○ [조치요구사항] 혁신행정과장은 에너지 절감 및 차량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용차량을 관련규정에 부합되게 운영하시기 바람</li> </ul>	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행정과는 「초(超)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대책」 및 자체감사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개선 방안” 마련·시행(08.7.10)</li> <li>- 중형(SM5) 2대를 승합차와 경차로 대체</li> <li>- 우리 위원회 소유 아반떼 승용차는 내구연한 만료(’09.5)시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교체 예정</li> </ul>	조치완료

지적사항명	조치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조치결과	조치상황 (08.12.31)
기타 예산 집행의 불합리	<p>○ [지적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캐나다 FTA 협상(3.25~29)을 위한 국외출장시 항공기에서 1박을 하는데 그 숙박비(\$95)를 지급하였고, 한·인도 CEPA협상(4.1~4)을 위한 국외출장시에도 항공기에서 1박을 하는데 숙박비(\$95)를 지급하였음</li> <li>- 정부구매회계 사용시 주된 상대방 소속·성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라고만 기재하였음</li> <li>- 조찬비용 및 직원 교육 후 석식비용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였음</li> <li>- 대우수당 지급사유가 소멸한 공무원에 대하여 전산오류로 '07.12월부터 '08.5월까지 대우수당이 매월 지급(6회, 703,640원)된 사실이 있음</li> </ul> <p>○ [조치요구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행정과장은 숙박비 초과 지급분(\$190)에 대하여 즉시 환수 조치하시기 바람</li> <li>- 혁신행정과장은 정부구매회계 사용자 실명서명 및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집행시 상대방 인적사항 기재 등 예산집행지침에 따른 집행이 되도록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람</li> <li>- 혁신행정과장은 향후 일과 전·후 직원교육 등을 위한 식사비 지출을 할 경우 특근매식비(또는 업무추진비)로 지출하시기 바람</li> <li>- 혁신행정과장은 초과 지급된 대우수당(703,640원)을 즉시 환수조치 하시기 바람</li> </ul>	<p>현지조치</p>	<p>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행정과는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현지조치함</li> <li>- 숙박비 초과 지급분(\$190)에 대하여 '08.7.21환수하여 국고에 반납함</li> <li>- 정부구매회계 사용자 실명서명 및 50만원 이상 집행시 상대방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토록 전직원 공지함</li> <li>- 향후 일과 전·후 직원교육 등을 위한 식사비 지출시 특근매식비 또는 업무추진비로 지출토록 함</li> <li>- 초과 지급된 대우수당에 대하여 '08.6월분 급여지급시 당해 직원 급여에서 703,640원을 환수하여 국고 반납</li> </ul>	<p>조치완료</p>

지적사항명	조치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조치상황 (08.12.31)
재물조사 실시 불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사항] 조직개편 이후 추가 구입한 노트북 19대와 구 재정부에서 이관된 노트북 5대 중 2대가 미기재 되어 있는 등 총 21대가 미기재 되어 있음</li> <li>○ [조치요구사항] 혁신행정파장은 물품이 관리대장에 누락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재물조사를 재 실시 하시기 바람</li> </ul>	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행정과는 '08.12.29 기준으로 수시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관리대장 미등재 물품을 등재 조치함</li> </ul>	조치완료
본부와 FIU의 비정규직 급여체제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사항] FIU가 소속기관이므로 독립성을 어느 정도 보장한다 할지라도, FIU소속 비정규직의 근무환경·업무량·업무난이도·전문성 등이 본부 소속 비정규직과 특별한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이 보수체제를 다르게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함</li> <li>○ [조치요구사항] 혁신행정과장은 본부와 FIU간의 비정규직 보수체제 불균형 해소를 강구하시기 바람</li> </ul>	권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행정과는 FIU에 대하여 향후(2009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 체결시에는 금융위원회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거 본부와 동일하게 보수액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함('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사무보조원 보수표 등 관련자료 송부)</li> </ul>	조치완료

### 3. 징계 건수, 사유 및 현재 근무처

□ 징계 건수, 사유 및 현 근무처

징계 현황		처분사유	현 근무처
견책	서기관 1명	음주운전	기획조정관실
	행정사무관 1명	음주운전	파견
경고	행정주사 1명	품위유지의무 위반	기획조정관실
감봉2월	서기관 2명	청렴의무위반	휴직, 본부

#### 4. 2008년 이후(연도별) 정책 연구 용역 내역

##### □ 2008년 이후(연도별) 정책연구용역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내 용	금액	수의계약 여부		비고
			건수	비율	
08년	1.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연구용역 2. 외환시장 발전방향 3. 미국 FinCEN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 실태 연구 4.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5. FTA, DDA 등 금융서비스분야 국제협상 법률적 검토 연구용역 6. 단기금융시장 제도 개편에 따른 시장 영향 분석 7. 서브프라임사태이후 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개선 연구용역 8.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수준 제고를 위한 감독 검사 효율화 방안 9.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10. 홈페이지 개편 11. 비명시적규제 개혁 외부평가 12. 금융중심지 선정에 관한 금융전문가 의견조사	358	12건 (6건)	91.7% (50.0%)	
09년	1. 금융상품 판매제도 도입에 따른 불완전 판매 방지방안 2. 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방안 3. 국내 자본시장-외환시장 연계성 증가의 파급효과 분석 4. 금융위기 이후(Post-Crisis) 대비 금융감독체제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5. 수도권 광역금융벨트 조성 방안 6. 위탁보증 제도 개선방안 연구 7. 자본시장 등 금융부문별 노동력 특성분석 및 수급전망 8. 금융위기의 원인분석 및 시사점분석	499	17건 (12건)	100.0% (70.6%)	

연도	내 용	금액	수의계약 여부		비고
			건수	비율	
	9. 금융투자산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10. 테러자금조달 방지 체제의 선진화·국제화 방안 연구 1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국내 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12. 주요국에서의 금융변혁기에 대응한 금융정책사례 연구 1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등에 관한 연구 1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15. 금융정보생산의 시스템 리스크 완화방안 연구 16. 마이크로크레딧의 현황 및 정책적 과제 17.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10년	1.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도입 방안 2. 지역금융활성화 방안 연구 3.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자본시장 활용방안 4. 우리나라 비금융전문직의 자금세탁방지 국제 기준 이행방안 5.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연구 6. 국내외 조기경보 활동 동향 점검 및 금융시장 조기 경보모형 개선 7.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8.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방안 검토 9.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 연구 10.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검토 11. 금융전문인력 현황조사 및 수급전망	366	11건 (8건)	100.0% (72.7%)	

\* ( )에 표시한 수의계약 건수 및 비율은 경쟁입찰하였음에도 유찰됨에 따라 부득이 수의계약한 용역을 제외한 수치임

5. 금융위원회 직원(임원, 직원으로 나뉘 작성요)의  
2007년 이후(2010년은 예상액)연봉(총액 및  
1인당 평균 액수 작성요)

□ 금융위원회 직원(임원, 직원으로 나뉘 작성요)의 2008년\*  
이후(2010년은 예상액)연봉, 성과급, 인상액, 인상률

\* 금융위 출범 이후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총 지급액	1인당 평균액
고위공무원단	2008.3월~	1,008,198	77,554
	2009	1,307,639	87,176
	2010.8월 기준	983,141	61,446
직원	2008.3월~	6,494,495	37,540
	2009	8,477,534	42,388
	2010.8월 기준	5,739,873	31,195

## 6. 해외연수비, 연수내용 및 연수일정

☐ 금융위 직원들을 위한 자체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없음



## 7. 2007년 이후 금융위원회 정책별 홍보비 내역 및 홍보 매체별 홍보 건수

### □ 정책별 홍보비 내역

정책별	일자	홍보수단	홍보비용	홍보효과
금융지주회사법	2009.3.27 광고기간 (3.20~12.30)	금융지주회사법 관련 홍보동영상(UCC) 제작 2회	15,400,000원	금융정책 및 제도를 재미있는 UCC형태로 제작하여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홍보
하반기 서민정책	2009.7.27 광고기간 (7.3~7.6)	종합지, 경제지, 무가지 등 26개 매체 광고	21,395,000원	하반기 달라지는 서민정책에 대한 정부메세지 합동광고 실시 * 9개 부처 합동홍보비 192,555,000원 (균등 분담)
기타	2009.9.30 광고기간 (4.25, 5.9)	KBS 1TV <5천만의 아이디어 프로그램 방송협찬>	11,000,000원	정책프로슈머로서 대국민 정책제안을 유도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관심 제고

### □ 홍보 매체별 홍보 건수(총 6건)

매체별	건수	일자	홍보방식
지하철	1	2008.11.19 광고기간 (11.1~11.30)	지하철 영상광고 <생생정보 플러스편>
온라인 홍보	2	2009.3.27 광고기간 (3.20~12.30)	금융지주회사법 홍보동영상(UCC) 제작(2회)
신문·무가지	1	2009.7.27 광고기간 (7.3~7.6)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지, 경제지, 무가지 등 26개 매체 광고
방송협찬	2	2009.9.30 광고기간 (4.25, 5.9)	KBS 1TV <5천만의 아이디어 프로그램 방송협찬> ①드라이브인 현금 인출기(4.25) ②범죄알림비밀번호(5.9)

※ '07년, '08년도는 별도 홍보사업 예산할당 없이 대변인실 기본경비로 지출

## 8. 민간배드뱅크 실적(자료 출처 : 유암코)

### □ 유암코 2010년중 부실채권 인수 실적

(단위: 억원)

연도	분기	매각은행	자산구성	OPB	투자액
2010	1Q	기업은행	담보부 채권	2,143	
2010	1Q	하나은행	담보부 채권+기업회생, 청산파산 채권	2,080	
2010	1Q	부산은행	담보부 채권	556	
소계				4,779	2,427
2010	2Q	신한은행	담보부 채권+기업회생, 청산파산 채권	3,967	
2010	2Q	국민은행		1,151	
2010	2Q	농협		695	
2010	2Q	부산은행	담보부 채권+기업회생, 청산파산 채권	825	
2010	2Q	제주은행		57	
2010	2Q	6개 주주**	기업회생채권	3,285	
소계				9,980	5,260
2010	3Q	농협	담보부 채권+기업회생, 청산파산 채권	1,717	
2010	3Q	국민은행***	담보부 채권+기업회생, 청산파산 채권	605	
2010	3Q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회생채권	4,019	
2010	3Q	부산은행***	담보부 채권	341	
소계				6,682	3,816
합계				21,441	11,503

\* OPB : Outstanding Principal Balance(미상환원금잔액)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 인수업무 진행중

## 9. 모기지론 이차보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계획서

- 금년 6월말까지 공급된 금리우대 보증자리론에 따른 모기지론 이차보전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38.5%\*로서 다소 저조한 편이나

- 전년 동기(31.5%)에 비해서는 집행률이 높은 수준임

### < 모기지론 이차보전 사업 집행률 추이 >

(단위 : 억원)

연도	연간 예산	상반기 집행금액	상반기 집행률
'09년	39.0	12.3	31.5%
'10년	45.6	17.6	38.6%

- '금리우대 보증자리론'(주택금융공사)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국민주택기금)을 보완하는 역할

- 다만 두 사업의 취지, 지원대상 등이 유사함에 따라 중복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통합될 때까지는 다자녀 가구 우대 등 금리우대 보증자리론 사업의 대출조건 완화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음

## 10. FSB 금융규제 내용 및 향후 전망

□ 금융위기 이후 G20 및 FSB를 중심으로 금융규제개혁 관련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

□ 우리나라의 경우 G20차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 이행방안을 마련·추진 중이며,

### \* 주요 합의 사항

- ① 보상원칙 관련 : FSB 보상원칙의 국내 이행을 위해 은행·증권·보험·금융지주회사 등 4개 업권에 대해 **보상원칙 모범규준 마련**(10.1월)
- ② 장외파생상품시장 규제 관련 : '10년 중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도입 방안 및 관련 법령 개정안 등을 마련할 계획
- ③ 신용평가사 규제 관련 : 개정 신용정보법('09.10월 시행)에 따라 IOSCO 행동강령('08.5월)을 반영한 내부통제기준 및 모범규준을 마련

○ 아직 논의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국내 도입의 효과와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제적 공조를 통해 대응해 나가고 있음

□ 구체적인 내용 및 향후전망은 첨부한 「금융규제개혁 관련 국제적 논의 동향」을 참조하시기 바람

## 최근 금융규제개혁 관련 국제적 논의 동향

### 1. 그간의 경과

① (워싱턴 정상회의, '08.11.15)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47개 개혁과제 선정 (41개 과제가 금융분야)

② (런던 정상회의, '09.4.2) 41개 과제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8개 분야에서 구체적인 행동계획 도출

※ ① FSB 설립, ② 국제협력 강화(위기대응계획, 정리절차), ③ 건전성 규제 (자본의 질·양, 유동성 규제) 강화, ④ 규제범위 확대(장외파생상품시장 등), ⑤ 보상체계 개혁, ⑥ 비협조적 지역 감시 강화, ⑦ 회계제도 개선, ⑧ 신용평가회사 규제개혁 등

③ (피츠버그 정상회의, '09.9.24) 런던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8개 분야 개혁과제를 중요성에 따라 6개 우선과제로 재분류

※ ① 은행 자본규제 강화, ②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축소, ③ 보상원칙 이행 강화, ④ 장외파생상품시장 규제 강화, ⑤ 회계기준 개선, ⑥ 비협조적 지역 감시 강화

④ (토론토 정상회의, '10.6.26) 11월 서울 정상회의시 은행 자본규제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규제 등 핵심 과제를 마무리 하기로 선언

※ ① 건전성 규제강화, ② 효과적 감독, ③ 정리체계 구축 및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규제, ④ 투명한 국제적 평가와 상호점검

◆ (FSB 설립, 09.6.26) G20 런던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기존 FSF\*를 FSB(Financial Stability Board)로 확대 개편

\* G-7주도로 '99.2월 FSF(Financial Stability Forum)로 설립

⇒ FSB는 G20 정상회의에서 mandate를 받아 금융규제 관련 국제기준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임무를 수행

## 2. 금융규제 분야 개혁 프로세스

- ① 런던 정상회의 이전에는 각국의 금융규제 담당 고위급이 참여하는 별도 Working Group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
- ② 런던 정상회의 이후에는 별도의 전문가그룹 구성없이 '09.6월 설립된 FSB 주도로 논의를 전개하고 그 결과를 G20에 보고
  - FSB는 BCBS · IOSCO · IASB 등 국제기준 정립기구(SSBs, Standards Setting Bodies)들의 기준마련 상황을 점검

### <G20, FSB 및 SSBs간 논의 및 보고 체계도>

(G20) 주요 이슈에 대한 규제개혁의 기본방향에 합의



(FSB, SSBs)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제기준에 반영



(FSB)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G20에 보고



(G20) FSB의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행일정 등 추가사항 합의

### <FSB, SSBs 등 주요 국제기구들의 역할>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 금융안정위원회
  - 총괄, 보상체계 원칙, 국경간 위기관리 원칙, 공동감시단 운영방안 마련등
- **BCBS**(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 바젤은행감독위원회
  - 완충자본, 최저자본요구량, 단순지표, 유동성 규제 등 건전성규제 개선
- **IOSCO**(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 국제증권감독기구
  - 헤지펀드, 장외파생상품시장, 신용평가사 등 자본시장 관련 기준 개선
- **IAIS**(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 국제보험감독기구
  - 다국적 보험사 감독을 위한 당국간 협력 강화
-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 국제회계기준위원회
  - 회계 투명성, 공정가치, 동태적 대손충당금 등 회계기준 개선
  - 국제회계기준(IFRS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 Standards) 제정
- **FASB**(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
  - GAAP(General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제정

### 3. 주요 과제별 논의 현황

#### 가. 은행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강화

- (의의) '10.9.12일 BCBS회의에서, 각국은 규제수준(calibration)과 이행시기(phase-in arrangements) 등을 합의\*
  -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은행의 복원력(resilience) 강화 및 유동성 위험 축소를 위한 BCBS 차원의 논의 마무리
- (규제수준) 자본규제비율은 보통주 4.5%, Tier1 6%, 총자본 8%, 자본보전완충자본은 2.5%(보통주 기준) 수준
- (이행시기) 보통주 및 Tier1 비율은 '15년초, 자본보전완충자본은 '19년초, 단기유동성 비율은 '15년초부터 본격 시행
  - ① (레버리지 비율) : (11~12년) 당국 모니터링 → (13~16년) 병행운영, 15년 공시 → (17년) 최종수정(상반기) → (18년) Pillar I 규제 도입
  - ② (중장기 유동성 비율) : (12~17년) 관찰기간 → (18년) 규제 도입
- (경과기간) 현행 기타 Tier1 및 Tier2의 경우 '13년초부터 10년간 제거, 既투입된 공적자본은 '18년초까지 유예인정, 공제 항목은 '14~'18년중 전액 조정완료(매년 20% 공제)
- ⇒ (향후 일정) BCBS 합의안은 11월 G20 서울정상회의에 제출되어 최종 확정될 예정

## 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SIFI ;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 (논의배경) 다수 국가에서 실물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대형 금융회사를 정리하지 못하고 공적자금 투입
- (주요 논의사항) 피츠버그 정상회의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SIFI 논의는 3가지 검토방향을 중심으로 진행

- ① SIFI 부실화 가능성 최소화(surcharge, 감독 강화 등)
- ② SIFI가 부실화된 이후 이를 질서 있게 정리하는 방안
- ③ 부실전염을 차단하기 위한 시장인프라 강화 방안

⇒ (향후 일정 ) FSB는 10.10월까지 SIFI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G20 서울 정상회의에 보고할 예정

## 다. 보상규제 강화

- (논의배경) 단기성과 위주, 비대칭적\* 보상체계가 과도한 위험 부담을 촉진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

\* 성과급 등 보수체계가 양(+)의 성과만 있고, 음(-)의 성과가 없음

- (논의사항) 09.4월 런던 정상회의에서는 FSB의 보상원칙을 채택하고, 각국은 중요한 진전을 이루기로 합의

○ '09.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시 FSB의 보상원칙 집행기준 채택

\* 한국은 FSB 보상원칙 국내 이행을 위한 업권별 모범기준 마련('10.1.7)



## 라. 장외파생상품시장(OTC derivative market) 규제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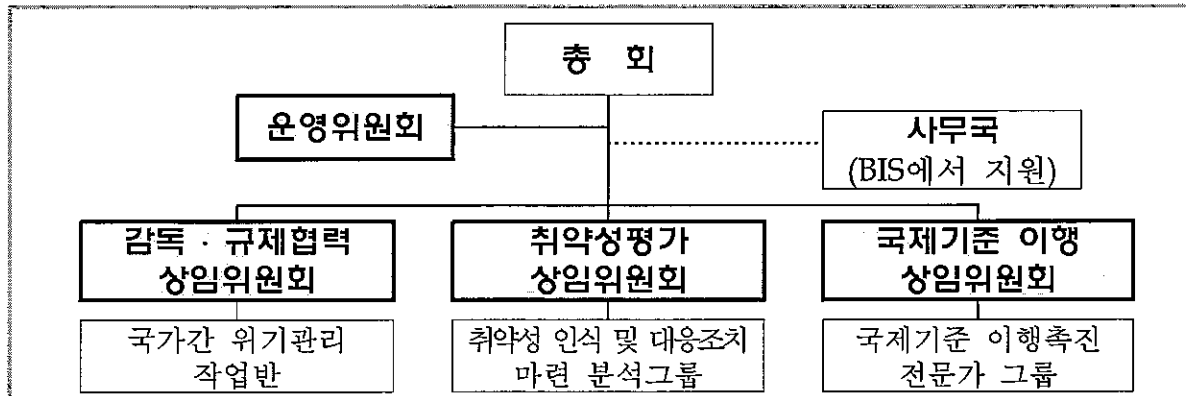
- ☐ (논의배경) CDS 등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규제·감독이 미흡하여 금번 금융위기가 증폭
- ☐ (논의사항)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거래상대방 리스크(counterparty risk) 축소를 위한 방안 합의
  - ① 모든 장외파생상품거래는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
  - ②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은 '12년까지 CCP를 통해 청산

## 마. 회계기준 개선

- ☐ (논의배경) 금번 금융위기증폭 요인이 국가별로 다른 회계기준에 있어 고품질의 단일 회계기준 마련의 중요성이 강조
- ☐ (논의사항) 국제회계기준위원회와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는 2011년말까지 회계기준을 합치하고, 국제회계기준 제정시 신흥국 등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 참고

## FSB 조직체계



<b>운영위원회 (SC)</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장 : FSB 의장(이태리 중앙은행 총재 M. Draghi)</li> <li>· 구성 : 16개국 및 10개 국제기구가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개국 : G7, 네덜란드, 호주, 스위스, 한국, BRICs, 멕시코</li> <li>- 10개 국제기구 : IMF, BIS, BCB, IAS, ICSCQ, IASB, CGFS, CPSS, ECB, EC</li> </ul> </li> <li>* G20 국가중 신규회원은 우리나라와 BRICs 및 멕시코임</li> <li>· 역할 : FSB 운영방향 설정(총회운영 보좌)</li> </ul>
-----------------------	--

<b>상임위원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장 : FSB의장 추천으로 선출</li> <li>· 구성 : 상임위 의장이 20-25명 수준에서 지역별·기관별 안분</li> </ul>
--------------	---

<b>감독·규제협력 상임위원회 (SRC)</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장: FSA J.A. Turner 의장</li> <li>· 역할: 규제당국의 조정과제 공론화 및 정책개발, 공동 감시단의 설립과 수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제시, 시스템 차원의 추세와 취약성 묘사, Best Practice 조사</li> <li>* 국경간 위기관리(cross border crisis management)에 대한 정책조언</li> </ul>
<b>취약성평가 상임위원회 (SCVA)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장 : BIS Jaime Caruana 총재</li> <li>· 역할 :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응을 FSB에 보고</li> <li>* IMF와의 협업중인 조기경보체계(EWE)의 기초자료로 이용</li> </ul>
<b>국제기준이행 상임위원회 (SCSI)</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장: 캐나다 재무부 Tiff Macklem 차관</li> <li>· 역할: 참가국 관할의 거시건전성 규제·감독기준 이행에 대한 상호평가실시, 동결과를 이용하여 전체 평가 자료를 만들고 총회승인 후 공표</li> <li>* 국가별 뿐 아니라 주제별 평가도 병행</li> </ul>

## 11. 한미 FTA 금융부분 합의 내용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 한·미 FTA 금융서비스 분야는 이미 양국의 개방정도가 높아 추가 개방범위\*가 크지 않으나,

\* 추가 개방 분야는 보험중개업과 보험부수서비스 등의 국경간 거래이고, 신크금융서비스는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

○ 일부 추가 개방사항의 경우에도 유예기간 설정\*, 소비자 보호장치 등을 마련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합의

\* 금융정보의 해외위탁 처리를 2년 유예 후 허용

□ 한·미 FTA는 국내 금융제도 및 감독의 선진화·투명화 계기\*를 마련하고,

\* 인·허가 120일 이내 처리 등

○ 미국 진출 우리 금융회사의 영업환경 개선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정부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및 금융전문인력양성 등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임

\* 양국 금융감독당국의 MOU 체결 등을 통한 협력 강화

## 12. 대부업 건전성 감독을 금융위에서 담당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 모든 대부업체의 건전성 감독을 금융위에서 담당하게 되면,

○ 대부업체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해지고 보다 전문적·체계적 관리 감독이 가능해지나,

○ 대부업체가 전국적으로 산재\*해있어, 금감원 인력\*\*만으로 대부업체 전부를 관리·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음

\* '09.12월 기준 등록 대부업체 : 14,783개

\*\* 대부업 관련 금감원 전담인력 : 총 20명(본부 10명, 지방 10명)

○ 특히, 중·소형 대부업체는 수신기능 없이 대출만 하는 간단한 구조로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고임금의 금융당국 인력을 투입할 경우 비효율\*이 발생할 수도 있음

\* 전국적 관리를 위해서는 대부업 전담인력의 대규모 증원이 필요하며, 이는 대부업체 감독분담금 징수문제와 연계되어 고려되어야함

→ 분담금의 징수는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비용증가로 연결되어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소지가 있음

□ 현재 대부업체의 효율적 관리·감독을 위한 방안을 검토 중

### 13. 녹색금융 지원현황 취합자료(지원기관명, 지원기업, 금액, 녹색산업종류, 지원시기등 명시)

#### < 산업은행 >

○ 2009년

(단위 : 억원)

산업구분	금액	일시	사업내용
에너지절약	155	09-09-29	열병합발전소설비
에너지절약	62	09-06-11	여수열병합발전소건설
신재생에너지	75	09-08-26	태양전지모듈제조공장신설
신재생에너지	230	09-06-30	풍력발전용단조공장증설
신재생에너지	30	09-10-15	바이오가스차량연료화사업
에너지효율	3,000	09-06-25	LED생산설비증설
에너지절약	160	미기표	자전거공장증설관련
에너지절약	23	09-10-24	살바니니(편칭,절단,절곡일체형의자동화라인판금설비)도입에따른판금자동화라인구축사업
신재생에너지	30	09-08-31	일반폐기물소각처리
신재생에너지	65	09-12-18	울산신재생에너지BiogasPlant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	75	09-06-18	풍력발전용단조부품가공공장신축
환경산업	28	09-05-29	산업폐기물처리(매립)시설추가조성
에너지효율	240	09-06-02	LED설비증설사업
신재생에너지	50	09-12-10	Crudeglycerine을정제하여Pureglycerine을제조하는데필요한정제설비신설
에너지절약	1,039	09-02-23	여수열병합발전소신설사업
신재생에너지	24	09-06-29	RPF(RefusePlasticFuel)보일러Plant신설
신재생에너지	3	09-07-11	태양광발전소신축
신재생에너지	1,000	09-09-28	폴리실리콘제조공장신설시설

산업구분	금액	일시	사업내용
환경산업	400	09-12-03	폐수및부산물처리시설개체공사
신재생에너지	56	09-09-03	풍력단조부품제조공장신축
환경산업	15	09-03-27	원료재생공장증설
환경산업	200	09-03-20	슬래그시멘트공장인수
환경산업	2	09-12-07	생분해입출설비구입
환경산업	250	09-09-17	2차전지소재인전해질LiPF6(육불화인산리튬)증설
환경산업	25	09-08-21	슬래그처리시설건설
신재생에너지	150	09-10-21	차량용리튬-이온배터리셀개발라인구축
계	7,387		

\* 매출액, 순이익 기준연도 2008년

○ 2010. 6월

산업구분	금액	일시	사업내용
LED	100	10-06-07	LED제조(Packaging및Module)설비증설및클린룸설치
LED	2,200	10-02-08	LED생산설비증설
폐기물 및 폐자원	4	미기표	폐연료에너지저장탱크증설
LED	17	10-08-05	절전형보안등교체용역사업
신재생에너지	760	10-04-12	광학용필름라인,태양광용필름라인증설
신재생에너지	1	미기표	풍력발전용단조부품가공공장
LED	55	10-06-24	LED패키지생산시설증설
신재생에너지	40	10-04-19	대형철구조물플랜트공장부지구입관련
Non-CO2온실가 스처리	150	12-06-25	2차전지소재인전해질LiPF6차증설
에너지저장	60	16-07-09	리튬이차전지용Powder(양극활물질)생산설비증설
신재생에너지	11	13-07-14	실리콘제조설비증설
신재생에너지	50	12-06-25	태양전지관련에칭설비도입
계	3,448		

\* 매출액, 순이익 기준연도 2009년

## 14. IB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 계획

- '08년 하반기부터 가시화된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투자은행 산업 관련 국내외 여건이 크게 변화한 것이 사실
  - G20 · FSB, 미국의 Dodd-Frank법 등 국제적으로 자본시장의 위험성을 제어하기 위한 각종 규제논의가 활발
    - \* i)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에 대한 금융감독 강화, ii) 장외파생상품 CCP 도입, 헤지펀드 규제 iii) 상업은행 등의 IB 업무 수행 제한 등
- 잘 아시다시피, 투자은행 모델은 고수익-고위험(high risk-high return) 모형으로
  - 전반적인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 하에서 정부로서도 금융시장 안정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었고
  - 국내에서 투자은행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던 금융 회사들도 움츠러 들었다고 판단
- 다만, 우리 금융투자업의 상황은 美國 등 선진 금융시장과는 발전단계, 위험감수 수준 등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어
  - 글로벌 차원의 금융규제 논의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부분이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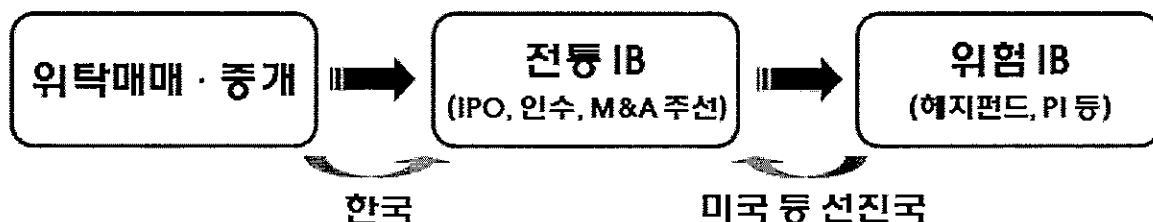
- 즉, 美國 등의 경우 헤지펀드, PI 등 위험 IB업무가 과도하게 수행\*됨에 따라 금융위기까지 초래한 측면이 있으나,

\* 과도한 레버리지(약 3,000% 초과)에 기반한 고유평레이딩(prop trading) 확대 등

- 우리 금융투자업의 경우, 위탁매매·단순중개 위주에서 IPO·인수, M&A 주선 등 전통적 IB 업무의 강화가 보다 더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

\* 증권회사 수익구조 비교(07년 기준) : [한국] 위탁매매(59.3%), PI&IB(23.2%)  
[미국] 위탁매매(15.1%), PI&IB(57.3%), [일본] 위탁매매(27.0%), PI&IB(43.6%)

#### < 금융투자업의 발전단계 비교 >



- 향후, G20·FSB, 미국 Dodd-Frank법의 구체화\* 등 국제적 금융규제 논의가 마무리되어 가는 추이를 지켜보아 가며

\* 美國에서도 법률 통과후 시행령 마련 등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기까지 약 2년 정도 소요

- 업계, 전문가, 연구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투자은행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



15. 2007년 이후 3년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  
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 해당없음

## 조영택의원

<p>1. 2009년도 자체평가계획(안) 및 2009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1부</p>
--

□ 다음과 같이 자료 제출합니다.

1. 2009년도 자체평가계획
2. 2009년 주요정책 부문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3. 2009년 행정관리역량 부문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

# 2009년도 자체평가계획(안)

---

2009



금융위원회

## 목 차

I. 개 요	1
II.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의 구성·운영	2
III. 자체평가 대상	9
IV.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10
V. 자체평가 방법 및 일정	21
VI.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23
VII.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24

## 1. '09년 자체평가 기본방향

◆ 자체평가의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 평가결과의 환류 강화, 평가과정에서의 컨설팅 기능 강화를 통한 정책품질 향상

### ① 실용적 자체평가시스템을 통한 정책품질 향상

- 과제별 추진실적을 연중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고, 성과지표의 계량화·객관화 노력 지속
- 자체평가 과정에서 정책품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 기능 강화
  - 단순한 사후평가가 아닌 정책추진과정에서의 바람직한 대안모색 노력 강화
  - 평가위원과 과제담당자간 정보교류 채널을 구축하여 정책추진방향 등에 대한 조언 제공

### ② 자체평가결과의 환류로 평가의 유용성 제고

- (정책) 평가결과를 익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하고, 미흡과제의 경우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를 통해 정책환류를 강화
- (성과평가) 각 부문별 자체평가결과를 개인성과평가 등에 평정자료로 활용

## 2. 성과관리 평가계획 수립 경과

- 금융위원회 '09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09.3)
- 금융위원회 '09 자체평가 계획안 수립('09.5)

## II

##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의 구성·운영(안)

### 1.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 □ 자체평가위원 현황

구분	성명	소속	직위	경력	분야
내부	조인강	금융위	기획조정관	-재경부 금융정책심의관	
	추경호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재경부 금융정책과장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재경부 공자위국장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금감위 대변인	
외부	김정식	연세대	교수	-금융발전심의 위원	1소위 (금융정책, 금융정보 분석)
	지동현	KB금융지주	전략담당부사장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복	서강대	교수	-관세청 자체평가위원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금융발전심의 위원	
	성태윤	연세대	교수	-KDI 부연구위원	
	오규택	중앙대	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 전문위원	2소위 (금융서비스 자본시장)
	홍은주	iMBC	사장	-재경부 정책자문평가위원	
	이미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대한변협 여성 부회장	
	정순섭	서울대	교수	-한국금융투자협회 공익이사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	-백지신탁위원회 위원	
	김성은	경희대	교수	-재경부 정책자문평가위원	3소위 (인사, 조직, 정보화)
	이미영	건국대	교수	-정보화평가위원회 위원	
	최명희	외환은행	부행장	-금감원 국제협력실실장	
	김현수	동양제철화학	HR담당상무	-동양제철화학 HR상무	

#### □ 분야별 전문가 비율

총계	분야별 전문가					내부위원
	정책관련전문가	재정분야 전문가	행정관리역량 분야 전문가	기타	소계	
	10(71.4 %)	-	4(28.6%)	-	14 (100%)	4
100%	( 55.6 %)	-	(22.2%)	-	-	(22.2%)

## 2.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 (구성) 18명으로 위원을 구성(외부 14명, 내부 4명)

### < 소위원회 구성 >

구 분	분 야	위원장	위 원
1소위	금융정책, 금융정보분석	김정식	정찬우, 이상복, 지동현, 성태윤, 기획조정관, 금융정책국장
2소위	금융서비스, 자본시장	오규택	이미현, 정순섭, 김필규, 홍은주, 금융서비스국장, 자본시장국장
3소위	행정관리역량	김성은	김현수, 이미영, 최명희

\* 행정관리역량 : 조직, 인사, 정보화, 재정운영

- (전체회의) 전체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되, 긴급한 심의 사항 발생시 위원장의 직권 또는 과반수 자체평가위원의 요구로 수시회의 개최 가능
  - 자체평가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소위원회) 3개 소위\*로 구분하여 위원회 심의사항(자체평가계획, 추진실적 평가 등)을 사전 검토하여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
  - \* (1, 2소위) 주요정책·재정사업을 소관 실·국별로 구분하여 평가,  
(3소위) 행정관리역량(조직, 인사, 정보화, 재정운영)을 평가
- (자체평가의 실시)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되, 자체평가를 반기별로 1회이상 실시



### 3. 평가지원팀의 구성 및 운영

#### □ 평가지원팀의 구성

- 평가 총괄팀과 소위원회별 평가지원 T/F를 구성
  - 소위의 평가정책에 대상에 속하는 소관부서를 중심으로 평가지원 T/F를 구성

평가지원팀	역 할	팀원(직책)	연락처
평가지원 총괄팀	위원회 운영지원 및 전체 자체 평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 지원	홍재문(과 장)	2156-9560
		김정주(사무관)	2156-9563
1소위 지원팀	금융정책국, 금융정보분석원 소관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등 1소위 평가활동 지원	이병래(과 장)	2156-9710
		정완규(실 장)	2156-9401
		안창국(서기관)	2156-9711
		김건영(서기관)	2156-9781
		이귀웅(사무관)	2156-9411
2소위 지원팀	금융서비스국, 자본시장국에 대한 정보 제공 등 2소위 평가활동 지원	최 훈(과 장)	2156-9810
		유재수(과 장)	2156-9870
		유영준(서기관)	2156-9811
		전요섭(서기관)	2156-9871
3소위 지원팀	금융위 인사, 조직, 재정, 정보 화 등 기관의 역량평가에 관한 정보제공 등 3소위 평가활동 지원	송재근(팀 장)	2156-9561
		김제동(사무관)	2156-9562
		나형호(사무관)	2156-9289
		임왕섭(주무관)	2156-8622

#### □ 평가지원팀의 운영

- 평가총괄 담당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원 및 추진실적 점검 등 부문별 자체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지원
- 소위원회별 평가지원 T/F
  - 평가지원 T/F는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평가활동 추진을 위해  
필요한 관련자료 준비 및 정보제공 등 위원회의 평가활동을  
지원

### III

## 자체평가 대상 : 35개 과제

### 1. 주요정책과제

□ 평가 대상 : 31개 관리과제

< 평가대상 세부현황 >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09년 목표치
기업자금지원 및 구조조정 추진	1. 기업 자금조달 확대 방안마련	①은행권 실물지원	MOU 이행상황 점검	80%
		②보증기관보증확대	만기연장률 점검	80%
	2.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 체계 마련	①기업재무개선지원단 구성여부	구성여부	구성여부
		②위원 신규선임 및 사무국 인원 보강여부	위원신규선임 및 인원보강 여부	위원신규선임 및 인원보강 여부
	3. 취약산업 구조조정 추진	워크아웃 추진 기업	워크아웃추진 기업 수	20
모니터링 강화 및 선제적 대응으로 금융시장 안정 달성	1. 현장 밀착형 신속 대응체제 마련	미시·거시·금융산업별 모니터링 체제 운영· 가동 횟수	리스크 점검 보고서 개수	12
	2. 한국금융 바로알리기 지원단 운영	정례간담회 및 해외 설명회 추진	회의 개최 횟수	18
	3. 파생상품시장 모니터링 체계 개편	파생 모니터링 체계 구축	보고서서식 개정, 변동성 지표 개발	시스템구축, 지표개발 및 회의개최
	4. 외화유동성 지원	은행별 외화자금 확보 노력 강화	MOU 이행상황	MOU 이행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를 통한 시스템 리스크 방지	1. 은행자본확충 추진	은행자본확충 추진	조성(안) 마련	조성안 마련
	2.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능력 강화	RBC제도 시행	RBC제도 관련 사항 보험업 감독규정상에 반영 여부	RBC제도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규제혁파를 통한 금융 회사의 자율성 제고 및 금융혁신 유도	1. 권역별 법령 정비작업 추진	은행법 및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시행령 개정 여부	시행령 개정
	2. 금융상품 판매 체계 개편	(가칭)금융상품판매법 제정	법안 제출 여부	법 제정
	3. 보험회사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	보험업법시행령 개정	시행령 개정 여부	시행령 개정
금융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1. 산업은행 민영화의	①산은지주지분 49% KDF 앞 현물출자	49% 현물출자 여부	49% 현물출자 완료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09년 목표치
금융시장의 자율성 제고	단계적 추진	②동 49% 지분 매각 착수	상장 등 매각절차 착수 여부	매각절차 착수
	2.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보유지분 매각	보유자산 매각계획안 마련 및 보유자산 매각 진행	계획안 마련 및 자산매각 진행 여부	일부 보유자산 매각 진행
금융글로벌화의 지속적 추진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1. FTA 금융협상 지속 추진	①상대국 양허 및 제도개선 요구	상대국 제도 개선	개선
		②국내 금융제도의 특수성 및 업계 의견 반영	업계의견 검토 여부	개선
		③금융협상 TF 운영	FTA 금융협상 TF 개최 횟수	4회
핵심 금융 인프라 선진화로 금융발전 촉진	1. 회계·공시제도 개선	국제회계기준 관련 시행령 및 규정 개정	법규정 개정 여부	시행령 및 규정 개정
	2. 전자증권제도 도입	전자증권법 제정	국회제출 여부	법제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선진화	1.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선진화 및 국제공조 강화	FATF 상호평가 수검 및 제도개선 달성도	· 시행령 개정 여부 · 검사시스템 선진화 방안 마련 · FATF안건 상정 여부 · 이행계획 마련 여부 이상 4개 과제중 3개 과제 달성 목표	75%
	2. 심사분석 효율성 향상 등 제도운영의 내실화	①심사분석 평균소요 기간 단축	심사분석 소요기간, '08년 목표치(45일)보다 5%이상 단축	42.5일
		②자금세탁행위 조사/연구 활성화위한 보고서 발간	정기보고서 발간 횟수	2회
	3.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이행수준 제고	① 금융회사의 혐의거래 점검시스템 구축비율	전산시스템 구축비율	67%
		② 검사수탁기관의 검사매뉴얼 및 검사 체크리스트 개정	개정 비율	77%
		③ 수요자(교육대상자 등)의 고객만족도	수요자 고객만족도	70%
녹색성장 지원	1. 금융업권별 녹색금융 실천 계획 마련 유도	녹색금융 실천 계획 마련	계획 마련 여부	계획 마련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09년 목표치
	2.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방안 마련 여부	방안 마련
따뜻한 사회 구현을 위한 금융지원	1. 마이크로크레딧 활성화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건수	'08년 중 지원 건수에서 20%상향조정	5,400건
	2. 신용회복기금 확대를 통한 금융소외자 지원	신용회복기금 지원 인원 증가율	'08년도 지원인원에서 20% 추가 지원	20%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	1. 불완전판매 재발방지 추진	①판매인력 등급제	도입 여부	신규진입
		②미스터리 쇼핑 실시	실시 여부	신규진입
		③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시행령개정여부	시행령개정
	2. 파생금융상품 투자자보호장치 강화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	개정 여부	법/령 개정
	3.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KPI 제도개선	①내부통제 개선	국회제출 여부	법
		②KPI 개선	은행별 시행여부	은행별 자율시행
	4. 금융교육 활성화	금융교육 실시 횟수	금융교육 횟수	800회
	5. 일자리창출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①산업자금지원	지원액	10조원
		②특별펀드조성	펀드규모	300억원
		③보증기관 보증지원	보증지원액	12.3조원
금융서비스의 다양화고도화 추진으로 변화된 금융수요 충족	1. 다양한 파생상품 도입 추진	다양한 파생상품 도입	신규 상품상장 수	2
	2. 헤지펀드 도입	헤지펀드 도입 여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여부	시행령 개정

□ 평가 제외 : 해당 없음

## 2. 재정사업(일반재정, R&D, 정보화 사업 포함)

### (1) 일반재정사업

□ 평가 대상 : 2개 관리과제

○ '09년 평가대상 재정사업\* : 금융전문인력양성, 금융정책알리기

\* 재정사업의 경우 연도별로 전체 과제의 1/3씩 평가

#### < 재정사업 세부현황 >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09년 목표치
모니터링 강화 및 선제적 대응으로 금융시장 안정 달성	정책금융기관 역할 강화	①원스톱 현장지원반 설치 및 운영	현장 지원반 설치 및 운영여부	지원반 설치, 운영
		②중기정책금융지원 집행규모	계량	국책은행:68조 보증기관:6조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를 통한 시스템리스크 방지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자산 매입추진	부실채권 매입규모	부실채권 매입규모	3조원
금융글로벌화의 지속적 추진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1. 금융중심지 육성	①금융중심지 추진위 개최 ②금융클러스터 조기정착	회의개최 횟수 건의사항 수용	2 제도개선
	2.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지원	외국 금융회사 애로사항 해소	각종 인허가 및 영업관련 애로사항 처리 횟수	개선
	3. 금융관련 국제협력	우리 금융회사의 상대국 진출 지원 실적	금융협상 및 MOU체결 실적	개선
	4. [평가과제] 금융전문인력 양성	①입학생 지원율	정원 대비 지원자 수	3 : 1
		②졸업생 취업 성취도	취업 현황 조사	개선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	1.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출연	기금출연 실적	기금출연액	650억원
	2. 저축의 날 행사	저축의 날 행사 개최	개최 여부	저축의 날 행사 개최
	3. 모기지론 이차보전	금리우대 보증자리론 공급 실적	연간 보증자리론 실적	2,000억원 3,300세대
	4. 한국주택금융 공사 출자	①MBS 발행실적	연간 발행실적	42,000억원
		②SLBS 발행실적	연간 발행실적	25,000억원
	5. 역모기지론 활성화 출연 및 노후연금 보증	주택연금 공급실적	연간 주택연금 지원실적	303억원
금융서비스의 다양화·고도화 추진으로 변화된 금융수요 충족	[평가과제] 금융정책 알리기	세부사업 달성도	(완료 사업 개수 ÷ 세부 사업 개수(5개))* 100	100%
		금융정책 인지도 향상	홈페이지 방문자수 증가	개선

## [2] R&D사업

☐ 평가 대상 : 해당 없음

## [3] 정보화 사업

☐ 평가 대상 : 2개 관리과제

### < 평가대상 세부현황 >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09년 목표치
핵심 금융인프라 선진화로 금융 발전 촉진	1. 효율적 금융 및 감독정책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내부사용자 만족도	$\sum(\text{항목별가중치} \times \text{항목별응답자}) / \text{전체응답자}$	85%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선진화	2. FIU 전산망 구축 및 운용	① 행정자료 입수 온라인화 ② 자동 배당된 기초 분석의 적중률 향상	자료제공 일시 - 자료요청 일시 (자동배당 건수/전체제공 건수)*100	12일 45%

## 3. 행정관리 역량

☐ 평가대상

- 인사관리, 조직관리, 재정운용, 정보화관리 등 4개 영역별 기관  
내부 관리능력 및 생산성 향상 노력

# IV

##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 1. 평가부문별 평가체계

#### (1) 평가 개요

평가부문	평가대상	평가방법	평가지기
주요정책	'09년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모든 정책과제	계획수립의 적절성(15점), 시행과정의 적절성(10점), 정책효과성(15점), 성과달성도(60점)를 평가 * 총 평정점수에 따라 평가과제를 5등급(우수~미흡)으로 구분	'09년 11월말 실적을 기준으로 '10년 부처업무보고 전까지 평가완료
재정사업 (일반재정, 정보화)	'09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과제중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 관리과제 * 전체과제의 1/3씩 평가	전 부처 공통 평가지표체계 적용	'09년 12월말 실적을 기준으로 '10.1월~2월 평가
행정관리	기관의 조직, 인사, 정보화, 재정운영 등의 관리능력	전 부처 공통 평가지표체계 적용	주요정책과제와 함께 평가

#### (2) '09년 평가과제 현황 및 소위별 소관과제

- 주요정책 31개, 재정사업 4개(일반재정사업 2, 정보화사업 2)

평가부문	평가과제	소위별 소관과제		평가지행부서 (평가총괄부처)
		자체평가위 소위원회	소관 실국	
주요정책	○ 31개	1소위 : 16개	기획조정관실(2), 금융정책국(8), 국제협력관실(3), FIU(3)	행정인사과 (국무총리실)
		2소위 : 15개	금융서비스국(6), 자본시장국(7), 기업재무개선지원단(2)	
재정사업 (일반재정, 정보화)	○ 4개 - 일반재정(2) - 정보화(1)	일반재정, 정보화 사업으로 평가위원을 나누어 평가	(일반재정) 글로벌금융과(1), 대변인실(1) (정보화) FIU(1), 의사운영정보팀(1)	기획재정담당관실, (기획재정부)
행정관리	○ 조직, 인사 등 기관역량	3소위	행정인사과, 의사운영정보팀	행정인사과 (행정안전부)

## 2. 주요정책과제

### [1] 평가체계

- 평가결과의 관대화 경향을 방지하고 과제간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효과성'과 '성과지표의 적절성' 평가항목의 점수를 구간별로 강제배분(상대평가)
- 해당과제의 파급효과, 문제점 진단, 성과부진 원인분석 및 대안 제시가 가능하도록 정성적 측정방법을 병용

평가 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배점	비 고
계획 수립의 적절성 (15점)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 수렴의 충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통계현황사례 조사 및 이해 관계자(정책수요자)·전문가 의견 수렴 여부</li> </ul>	15	대부분의 과제가 법령개정·제도개선 과제로 의견수렴이 중요 (절대평가)
시행 과정의 적절성 (10점)	추진일정의 충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li> </ul>	10	평가수행 객관성과 평가결과 수용가능성이 높은 지표 (절대평가)
정책 효과성 (15점)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li> <li>○ 해당과제가 상위목표(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li> </ul>	15	정책수행의 궁극적 목표인 정책효과성 측정 필요성 과제별 강제배분적용 (상대평가)
성과 달성도 (60점)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 지표의 목표달성도</li> </ul>	50	공통평가지표 (절대평가)
	성과지표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li> </ul>	10	공통평가지표 과제별 강제배분적용 (상대평가)



## [2] 세부평가지표

###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15점)

평가지표	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측정방법	<p>○ 관련통계현황·사례 조사 및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여부</p> <table border="1"> <tr> <td>①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사전조사</td> </tr> <tr> <td>②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td> </tr> </table> <p>- ①,②를 모두 충족 : 15점(S)          - ①,②중 1개만 충족 : 10점(A)          - ①,② 모두 미충족 : 5점(B)          * 단, 과제의 특성 상 사례분석이 불가능하거나 의견수렴이 불필요하다면 일정 점수 부여</p>	①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사전조사	②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①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사전조사			
②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측정기준	<p>○ '충족' 판단 기준</p> <p>①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사례조사</p> <p>-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 실적이 있는 경우 충족</p> <p>- 통계현황이나 사례조사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하며, 근거자료의 출처도 함께 명시</p> <p>②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p> <p>-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협의회, 설문조사나 관련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 실적이 있는 경우 충족</p> <p>- 개최 계획(공문, 업무연락, 온나라시스템의 게시물 포함) 및 의견수렴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검토 실적 필요</p> <p>* 분석은 계획수립단계에서 실시된 경우 인정(기본적으로 성과관리시행 계획 작성 전후부터 자체평가 계획 작성 시까지의 기간에 실시하여야 함)</p> <p>* 다만, 예외적으로 계속사업의 경우, 상황변화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분석 및 의견수렴이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면 기존에 실시한 것이라도 제한적으로 인정</p>		
평가근거/자료	<p>○ 통계자료나 사례조사 분석결과 인용시 분석자료</p> <p>○ 공청회, 간담회, 협의회,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 개최 공문 및 결과</p>		

## ② 시행과정의 적절성(10점)

평가지표	2. 추진일정의 충실성
측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평가계획상의 과제별 추진계획</li> </ul> </li> <li>- 자체평가계획상에 수립한 관리과제의 추진계획에 따라 모든 일정을 완료한 경우 : 10점(S)</li> <li>-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사항이 90% 이상인 경우 : 7점(A)</li> <li>-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사항이 80%~90%미만인 경우 : 4점(B)</li> <li>-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사항이 80%미만인 경우 : 1점(C)</li> </ul>
측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족' 판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대상과제별로 자체평가계획상의 추진계획 일정을 기한 내에 모두 완료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지연이 전적으로 외생적 요인에 의한 경우에는 자체평가시 그 사유를 고려하여 평정</li> <li>*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사항이 80%미만인 경우라도 12월말 기준으로 지연되었던 사항이 모두 완료된 경우에는 일정점수를 부여</li> </ul> </li> </ul> </li> </ul>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지연 관련 외생변수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적 환경(대북관계 포함) 변화에 의해 지연된 경우</li> <li>-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의 이해관계자 및 관련기관의 반대로 지연된 경우</li> <li>- 국회 파행으로 인한 개회 일정 지연 등으로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등</li> </ul> </li> </ul> </div>
평가근거/ 자료	◦ 각 사업별 추진계획 대비 최종실적

### ③ 정책 효과성(15점)

평가지표	3.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측정방법	<p>○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 및 해당 과제가 상위 목표(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p> <table border="1"> <tr> <td>①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구체적으로 발생</td></tr> <tr> <td>② 해당 과제가 상위목표(성과목표) 달성에 기여 정도</td></tr> </table> <p>○ 자체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로 4단계 강제배분</p> <table border="1"> <tr> <th>평가등급</th><th>S(매우 우수)</th><th>A(우수)</th><th>B(보통)</th><th>C(미흡)</th></tr> <tr> <td>과제별 배정 비율</td><td>20%</td><td>30%</td><td>40%</td><td>10%</td></tr> <tr> <td>점수</td><td>15점</td><td>11점</td><td>7점</td><td>3점</td></tr> </table>	①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구체적으로 발생	② 해당 과제가 상위목표(성과목표) 달성에 기여 정도	평가등급	S(매우 우수)	A(우수)	B(보통)	C(미흡)	과제별 배정 비율	20%	30%	40%	10%	점수	15점	11점	7점	3점
①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구체적으로 발생																		
② 해당 과제가 상위목표(성과목표) 달성에 기여 정도																		
평가등급	S(매우 우수)	A(우수)	B(보통)	C(미흡)														
과제별 배정 비율	20%	30%	40%	10%														
점수	15점	11점	7점	3점														
측정기준	<p>○ ‘충족’ 판단 기준</p> <p>① 정책영향(효과)이 구체적으로 발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를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으로 평가</li> <li>- 신규사업 등 정책영향이 발생할 단계가 아닌 경우 “획기적인 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하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간 갈등 조정” 등을 통해 기본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 우수점수 부여</li> <li>· 다만, 그 외의 경우에는 보통점수 부여</li> </ul> <p>② 상위목표(성과목표) 달성에 기여 정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과제의 상위목표 달성에 기여 정도를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으로 평가</li> </ul>																	
평가근거/ 자료	○ 정책영향 및 상위목표 기여도 판단 근거 등																	

## <정책영향 측정방법>

### ① 정책영향이 발생한 경우

#### ① 정책영향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

##### ○ 정책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있는 경우

등 급	내 용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실적이 전년 대비 상승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적 상승률은 달성한 실적의 추세치를 고려하여 【별첨】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여부”의 측정방법에 준해서 판단</li> </ul> </li> <li>○ 사업실적이 추세치를 반영할 정도는 아니나 소폭 상승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획기적인 제도개선, ② 다수의 이해관계자간 갈등 문제 해결</li> <li>③ “①②”에 준하는 사업성과를 거둔 경우</li> </ul> </li> </ul> <p>예시) 과제명 : 노사관계 제도·관행 선진화 ⇒ 노·시간 조정 성립율 : 전년대비 35% 증가('04년 53.3%→'05년 56.8%)</p>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적이 전년과 유사한 경우</li> <li>○ 실적이 전년대비 하락하였으나, 상기 “①②③”에 해당하는 경우</li> </ul>
미흡	○ 전년대비 실적이 하락한 경우

##### ○ 성과지표가 결과지표인 경우

등 급	내 용
우수	○ 성과지표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하여 100%달성한 경우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지표 목표치를 90%이상 달성하였고 목표치도 적극적으로 설정한 경우</li> <li>○ 성과지표 목표치를 100%달성하였으나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li> </ul>
미흡	○ 성과지표 목표치를 90%미만 달성한 경우

#### ② 정책영향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

○ 정책수혜자 만족도 조사 및 전문가 설문 조사 실시

- 만족도 및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경우 설문조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인정되면 만족도 점수에 따라 정책영향 판단

\* 성과지표가 만족도 조사 결과가 아니고, 정책영향을 계량화 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 부처가 만족도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책영향 측정 방법으로 인정

- 다만 이 경우도 만족도 조사 계획을 자체평가(12월 이전)전에 수립할 필요

등 급	내 용
우수	○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보통	○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경우
미흡	○ 만족도 점수가 50점 미만인 경우

○ 정성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 급	내 용
우수	○ 당초 수립한 사업계획의 목적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기대효과가 모두 나타난 경우
보통	○ 당초 수립한 사업계획의 목적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의 기대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난 경우
미흡	○ 당초 수립한 사업계획상의 목적 및 성과관리시행 계획의 기대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정책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난 경우

② 정책영향이 발생할 단계가 아닌 경우

- ① 획기적인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 ② 다수의 이해관계자간 갈등 조정 등을 통해 기본계획 등을 수립, ③ 외부(국민, 언론, 국회 등)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경우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되면 우수점수를 부여

- 그 외는 보통점수를 부여

예시) 과제명 :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 일과 가정 양립지원 확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

#### ④ 성과달성도(60점)

평가지표	4-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50점)										
측정방법	<p>○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여부를 확인하여 4단계로 배점부여  <b>&lt; 4단계 배점 방법 &gt;</b></p> <table border="1"> <tr> <th>평가등급</th><th>S(매우 우수)</th><th>A(우수)</th><th>B(보통)</th><th>C(미흡)</th></tr> <tr> <td>점수</td><td>50점</td><td>45점</td><td>40점</td><td>35점</td></tr> </table>	평가등급	S(매우 우수)	A(우수)	B(보통)	C(미흡)	점수	50점	45점	40점	35점
평가등급	S(매우 우수)	A(우수)	B(보통)	C(미흡)							
점수	50점	45점	40점	35점							
측정기준	<p>① 'S' 판단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치가 적극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면서 과제의 목표달성은 물론 상위목표의 달성에도 기여한 경우</li> <li>○ 언론 또는 기타 객관적인 자료등을 통해 긍정적인 정책영향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li> </ul> <p>② 'A' 판단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치가 어느정도 적극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목표는 달성되었으나 사업초기 등을 이유로 긍정적인 효과달성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li> <li>○ 언론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였고 긍정적인 정책영향이 나타났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li> </ul> <p>③ 'B' 판단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치의 적절성이 미흡하거나 검증이 곤란적인 자료를 통해 성과지표 목표치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li> <li>○ 목표치가 어느정도 적극적으로 설정되었고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통계수치의 신뢰성이 낮거나 검증이 곤란한 경우</li> <li>○ 목표치가 적극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언론 또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평가결과 사업목적을 상당한 정도로 달성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li> </ul> <p>④ 'C' 판단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이 미흡하고 목표달성도도 부족한 경우</li> </ul> <p>※ 각 단계 배점의 성과 수준은 부처의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소관별로 판단</p>										
평가근거 /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관리시행계획 등</li> </ul>										

평가지표	4-2. 성과지표의 적절성(10점)															
측정방법	○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table><tr><td>①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td></tr><tr><td>②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td></tr></table>	①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②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①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②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 자체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로 평가점수 강제배분															
	<table><tr><th>평가등급</th><th>S(매우 우수)</th><th>A(우수)</th><th>B(보통)</th><th>C(미흡)</th></tr><tr><td>과제별 배정 비율</td><td>20%</td><td>30%</td><td>40%</td><td>10%</td></tr><tr><td>점 수</td><td>10점</td><td>7점</td><td>4점</td><td>1점</td></tr></table>	평가등급	S(매우 우수)	A(우수)	B(보통)	C(미흡)	과제별 배정 비율	20%	30%	40%	10%	점 수	10점	7점	4점	1점
평가등급	S(매우 우수)	A(우수)	B(보통)	C(미흡)												
과제별 배정 비율	20%	30%	40%	10%												
점 수	10점	7점	4점	1점												
측정기준	①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최근 실적치가 있는 경우, 신규사업인 경우, 법령 제개정의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정량·정성적으로 판단</li><li>* 구체적 측정방법은 【별첨】 참조</li></ul>															
	②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성과지표가 정책내용을 부분적이 아닌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정책내용과 성과지표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li><li>- 또한 성과지표를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성과정보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li><li>* 성과정보의 신뢰성 : 예를 들어 만족도 조사시 설문항목의 적정성, 표본구성 등 측정방법이 객관적이어야 함을 의미</li></ul>															
평가근거/ 자료	○ 최근 3년간 목표치 현황 자료, 신규지표인 경우 유사지표의 목표치 현황 자료 등															

## 2. 재정사업 / 행정관리 역량

- '09년 정부업무평가지행계획 및 세부매뉴얼에서 제시한 평가지표, 배점, 세부측정기준 및 방법을 반영하여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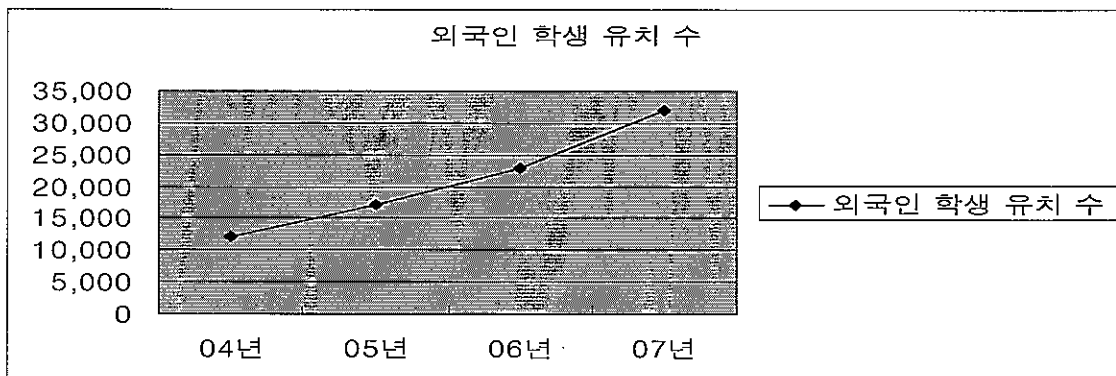
## 【별첨】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정도 판단기준

### Ⅰ 최근 실적치를 활용하여 평가가 가능한 경우

#### ①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세인 경우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세인 경우
  - 추세치 수준을 그대로 반영한 경우 : 중

예시) 교육산업의 경쟁력 강화(외국인 학생 유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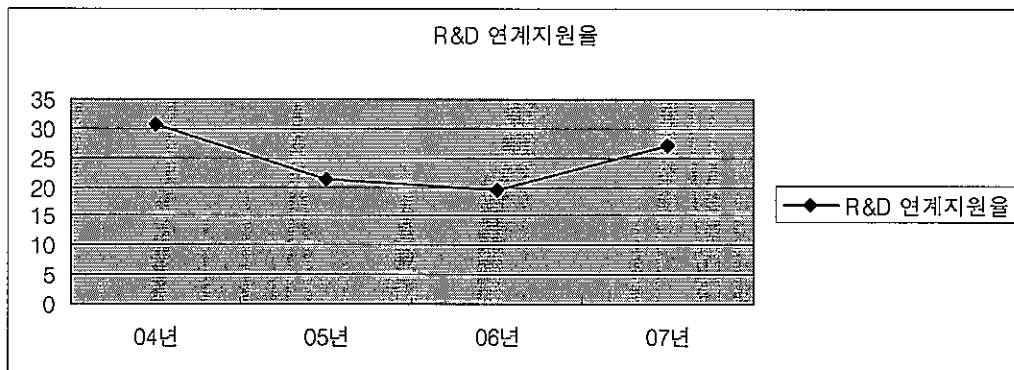


\* 추세치 : 2년간 평균 증가율(예: '05~'06년 5%상승, '06~'07년 7%상승한 경우 평균 증가율인 6%가 전체 추세치임)

####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하향 추세인 경우

- 최근 3년간 실적치의 평균값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 : 중

예시) 개발기술 사업화 촉진(R&D 연계지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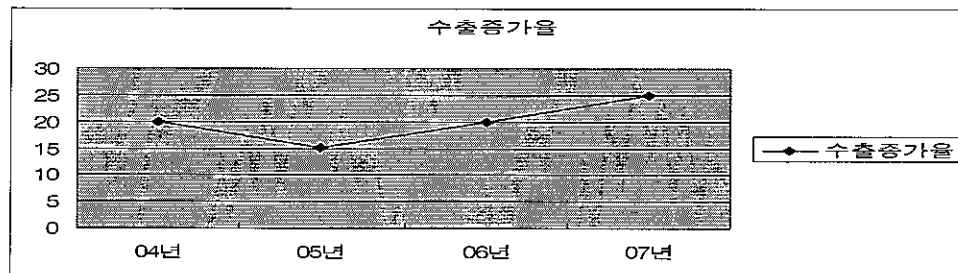


####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등락하는 경우

- 상승국면의 추세치 수준에 따라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 중

예시) 글로벌 경쟁력 강화(수출 증가율)





- 상승 후 하강국면일 경우엔 3년간 평균치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 : 중
- ② 목표치가 2년간만 있는 경우 상승국면일 땐 상승세 반영 시 : 중  
하향 추세 일 땐 가장 높은 목표치(실적치)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 : 중
- ③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만 있는 경우 상승률이 전년대비 10%이상  
높게 설정한 경우 : 중 (예: 5%→5.5%(상승률 10%), 50%→55%(상승률 10%))

## ② 신규사업 등 최근 실적치('07년, '08년)가 없는 경우

- 업무수행 및 목표치 달성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자체평가위원회  
에서 정성·정량적으로 판단
- \* 국·내외 관련분야나 인접분야의 통계자료 추세치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판단자료로 활용

## ③ 성과지표가 법률 제·개정인 경우

- 이해관계자가 다수이거나 비용부담자가 명백하여 반대가 심한  
사안 등 법률 제·개정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 목표치를 적극적  
설정한 것으로 인정
- \* 법률 국회 제출을 성과지표로 제시한 경우 불인정, 다만 다수의 이해관계  
자 의견 조율 등 난이도가 높고 '09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한 법률 제정 사  
업일 경우 인정

## ④ 국제평가지수를 활용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한 경우

- 국제평가지수를 활용하여 국제적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하였다면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인정

# V

## 자체평가 방법 및 일정

### 1. 자체평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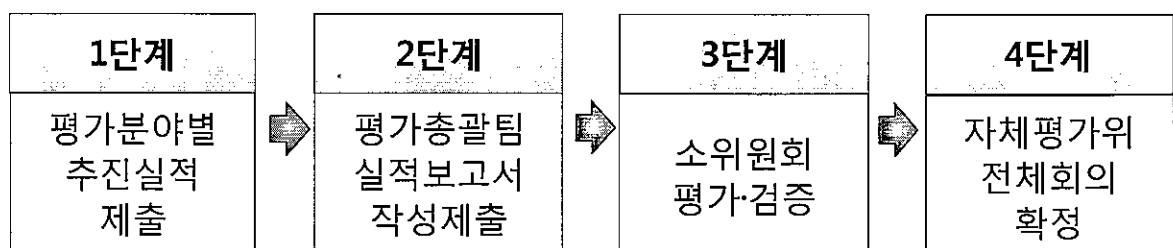
- 자체평가위원회가 주요정책, 재정성과, 기관역량부문에 대해 평가하여 평정점수 부여
- 자체평가 대상과제 전체에 대해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 실시
- 주요정책과제 평가결과는 과제별 평정점수 순위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한 평정등급을 사용하여 과제별 평가의 변별력을 제고

순위 누적 %*	등급	예시(총 10개 정책)	
		동순위 미발생시	동순위 발생시
~상위 15%이내	우수	1위	-
15%초과~40%이내	다소 우수	2, 3, 4위	1, 1, 3, 4위 (동점1위를 2위로 계산)
40%초과~80%이내	보통	5, 6, 7, 8위	5, 6, 7, 8위
80%초과~95%이내	다소 미흡	9위	-
95%초과~	미흡	10위	9, 9위 (동점9위를 10위로 계산)

\* 순위 누적 %= (순위/총 과제수)×100%. 단, 동 순위일 경우 하위 순위를 적용

### □ 평가 절차

- (단계적 평가) 내부 평가지원과 함께 소위원회, 전체회의로의 단계적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



\* 증빙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소위원회에서 적절한 평가 및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전체회의에서는 과제 전체에 대한 균형적인 평가를 도모하는데 중점

- (1단계) 평가분야별 추진실적 제출
  - 해당 과별로 각 분기의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평가총괄팀으로 제출
- (2단계) 평가총괄팀이 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 평가총괄팀이 국·과별로 작성한 실적보고서 및 성과목표 달성 현황을 수집하여 분야별 실적보고서 작성
- (3단계) 소위원회 평가·검증
  - 평가총괄팀에서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소위원회에서 평가·검증
- (4단계) 자체평가 전체위원회 최종 심의·확정
  -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최종등급 확정

## 2. 자체평가 일정

구 분	추진일정 (주관부서)		주요논의 사항
○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09.6 (행정인사과)		자체평가위원 개편방향 논의
○ 상반기 점검	'09.7 (행정인사과)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점검
○ 하반기 평가	주요정책, 행정관리 역량	'09.12 (행정인사과)	하반기 업무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
	재정사업	'10.1 (기획재정 담당관실)	

## VI

##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

### 1. 기본원칙

- 평가결과를 성과급 지급시 적극 반영하여 성과지향적 조직문화 정착
- 금융정책, 금융감독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조직·인사·예산 등에 평가결과를 적극 활용

자체평가결과		환류 분야	환류 내용	성과지향조직문화	
		인 사	직무성과계약, 근무성적평정 승진, 성과급 등 반영		
		조 직	정원조정·조직개편		
		예 산	세출예산 편성 반영		

### 2. 평가결과의 정책, 예산, 조직 등에의 활용계획

#### < 정책분야 >

- 점검결과 추진실적이 부진·미흡한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차기 성과관리전략·시행계획 수립시 과제 및 성과지표 보완

#### < 예산분야 >

- 평가결과를 차년도 위원회 내 예산편성시 우선순위 결정 및 세출 구조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 < 조직분야 >

-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조직개편(신설·폐지 등), 인원 보충 또는 축소가 필요한 경우 조치

### 3. 평가결과의 개인성과(인사, 포상, 성과급 등) 활용 계획

- ☐ 개인 성과급 지급의 평가요소로 자체평가결과를 적극 반영
- ☐ 인사기준으로 연계 강화하는 방안 지속 강구

### 4. 평가결과 공유·확산 방안

- ☐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직원이 이를 공유하도록 하여 향후 정책개선에 활용토록 조치

## VII

###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 ☐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의 보고 및 공개
  - '10.1월 까지 자체평가 위원회는 자체평가결과와 조치계획을 금융위원장에게 보고
  - 평가결과를 실·국에 문서로 통보

# **'09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 **-주요정책부문-**

2010. 1

금융위원회

# 1. 자체평가 개요

## (1) 중점 평가방향

### ① 실용적 자체평가시스템을 통한 정책품질 향상

- 과제별 추진실적을 연중 체계적으로 추적·관리하고, 성과 지표의 계량화·객관화 노력 지속
- 자체평가 과정에서 정책품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 기능 강화
  - 단순한 사후평가가 아닌 정책추진과정에서의 바람직한 대안모색 노력 강화
  - 평가위원과 과제담당자간 정보교류 채널을 구축하여 정책 추진방향 등에 대한 조언 제공

### ② 자체평가결과의 환류로 평가의 유용성 제고

- (정책) 평가결과를 익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하고, 미흡과제의 경우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를 통해 정책 환류를 강화
- (성과평가) 각 부문별 자체평가결과를 개인성과평가 등에 평정 자료로 활용

환류 분야		환류 내용
자체평가결과	인사	직무성과계약, 근무성적평정 승진, 성과급 등 반영
	조직	정원조정·조직개편
	예산	세출예산 편성 반영
		성과지향조직문화

## (2) 평가추진 개요

### □ 평가추진 체계

#### < 자체평가위원회 >

- 자체평가위원회는 민간위원 14인(위촉직)과 당연직 위원 4인(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금융정책국장, 금융서비스국장, 자본시장국장)을 포함한 총 18인으로 구성
  - 주요정책 이외의 기관역량, 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도록 구성
- 3개 소위\*로 구분하여 위원회 심의사항(자체평가계획, 추진실적 평가 등)을 사전 검토하여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

\* (1, 2소위) 주요정책·재정사업을 소관 실·국별로 구분하여 평가,  
(3소위) 행정관리역량(조직, 인사, 정보화, 재정운영)을 평가

#### < 평가지원조직 >

- 평가 총괄팀과 소위원회별 평가지원 T/F를 구성
  - 소위의 평가정책에 대상에 속하는 소관부서를 중심으로 평가지원 T/F를 구성
- 평가지원팀의 운영
  - (평가총괄 담당)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원 및 추진실적 점검 등 부문별 자체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지원
  - (소위원회별 평가지원 T/F) 평가지원 T/F는 소위원회 및 전체 회의 평가활동 추진을 위해 필요한 관련자료 준비 및 정보제공 등 위원회의 평가활동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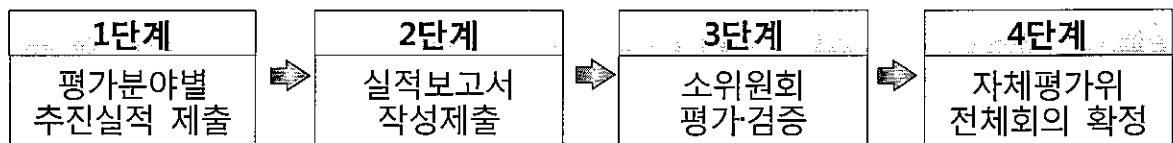


## □ 평가방법

- 주요정책과제 평가결과는 과제별 평정점수 순위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한 평정등급을 사용하여 과제별 평가의 변별력을 제고
  - 평가결과의 관대화 경향을 방지하고 과제간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효과성'과 '성과지표의 적절성' 평가항목의 점수를 구간별로 강제배분(상대평가)

## □ 평가절차

- (단계적 평가) 내부 평가지원과 함께 소위원회, 전체회의로의 단계적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



\* 증빙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소위원회에서 적절한 평가 및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전체회의에서는 과제 전체에 대한 균형적인 평가를 도모하는데 중점

- (1단계) 평가분야별 추진실적 제출
  - 해당 과별로 각 분기의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평가총괄팀으로 제출
- (2단계) 평가총괄팀이 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 평가총괄팀이 국·과별로 작성한 실적보고서 및 성과목표 달성 현황을 수집하여 분야별 실적보고서 작성
- (3단계) 소위원회 평가·검증
  - 평가총괄팀에서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소위원회에서 평가·검증
- (4단계) 자체평가 전체위원회 최종 심의·확정
  -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최종등급 확정

##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 '09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의 전략목표는 4개, 성과목표는 12개이며, 전체 관리과제 31개를 평가대상으로 선정

### ○ 평가지표

평가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 지표의 목표달성도
성과지표의 적절성	○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 수렴의 충실성	○ 관련통계현황·사례 조사 및 이해 관계자(정책수요자)·전문가 의견수렴 여부
추진일정의 충실성	○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 ○ 해당과제가 상위목표(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

## 2. 평가결과 총평

### (1) 평가결과 개요

□ '09년도 12개 성과목표, 31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우수 5개(15%), 다소 우수 8개(25%), 보통 12개(40%), 다소 미흡 5개(15%), 미흡과제 1개(5%)로 나타남
- 우수한 과제는 기업자금조달 확대 방안 마련, 은행 자본확충 추진, 파생상품시장 모니터체계 개편, 다양한 파생상품 도입 추진, 산업은행 민영화의 단계적 추진이며, 미흡한 과제는 권역별 법령 정비작업 추진인 것으로 평가됨

□ 전체 44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율은 84%로

- 37개 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7개 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
- 성과목표 미달성은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 지연 및 금융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방향 변경

## (2) 주요성과

- 기업자금조달 확대 방안 마련, 은행 자본확충 추진, 파생상품시장 모니터체계 개편, 다양한 파생상품 도입 추진, 산업은행 민영화의 단계적 추진은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
  - (기업자금조달 확대 방안 마련)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 자금 공급으로 세계적 금융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는 등 효과적으로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지원
  - (은행 자본확충 추진) 은행의 자본확충 지원을 통해 본연의 기능인 실물지원 여력을 제고시켜 경기 침체 가속화 및 금융부실을 방지 하였으며, BIS비율을 '09.9월말 14.07%로 개선하여, 은행의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실물지원 및 구조조정 여력 확보
  - (파생상품시장 모니터체계 개편) 시장리스크 인지도표(VKOSPI) 개발, 파생정보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파생상품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다양한 파생상품 도입 추진) 글로벌 ETF시장과 견줄 수 있는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ETF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다양한 신종ETF 도입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장이 요구하는 상품이 적기에 출시되도록 지원
  - (산업은행 민영화의 단계적 추진) 국정목표와 금융정책의 비전 달성과 연계하여 산은 민영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완료하여 산은 지주회사 및 정책금융공사를 성공적으로 설립함으로써 향후 산은 민영화를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3) 개선·보완 사항

#### □ 권역별 법령 정비작업 추진은 미흡한 과제로 평가

- 은행·보험권 법령 정비를 위해 '08.12월 국회에 은행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국회 심의 지연으로 은행법시행령 및 보험업법시행령의 개정작업이 추진되지 못함
- 향후 은행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대비하여 은행법 및 보험업법 하위규정 조문화 작업 진행하는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

## 금융위 주요정책과제 평가결과 종합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
기업자금조달 확대 방안 마련	우수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계 마련	다소우수
취약산업 구조조정 추진	보통
현장 밀착형 신속 대응체제 강화	다소우수
한국금융 바로 알리기 지원단 운영	보통
파생상품시장 모니터체계 개편	우수
외화유동성 지원	다소우수
은행 자본확충 추진	우수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능력 강화	보통
권역별 법령 정비작업 추진	미흡
금융상품 판매체계 개편	다소우수
보험회사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	다소미흡
산업은행 민영화의 단계적 추진	우수
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 보유지분 매각	보통
FTA 금융부문 효과 극대화 추진	보통
회계·공시 제도 개선	다소미흡
전자증권제도 도입	보통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선진화 및 국제공조 강화	다소우수
심사분석 효율성 향상 등 제도 운용의 내실화	보통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수준 제고	다소미흡
금융업권별 녹색금융 실천계획 마련 유도	보통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다소미흡
마이크로 크레딧 활성화	보통
신용회복기금 확대를 통한 금융소외자 지원	보통
불완전판매 재발방지 추진	보통
파생금융상품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다소우수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KPI 제도 개선	다소우수
금융교육 활성화	다소미흡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보통
다양한 파생상품 도입 추진	우수
헤지펀드(Hedge Fund) 도입	다소우수

###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1	기업자금조달 확대 방안 마련	우수
---	-----------------	----

#### (1) 평가결과 종합

□ 효과적으로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지원함으로써 세계적 금융 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

○ 대폭 확대한 보증기관의 보증지원 목표를 초과달성함으로써 전반적인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호전되고 있음

\* 신보 : ('09목표) 38.4조원 → ('09.12월 실적) 39.2조원  
기보 : ('09목표) 17.1조원 → ('09.12월 실적) 17.1조원

○ 은행권 MOU 실적점검 결과 실물경제지원과 관련하여 '09.1~10월중 중기대출비율은 평균 66.1%로서 목표(49.0%)를 초과달성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매우우수	• 보증기관의 보증공급 목표 및 은행권의 중기대출 비율은 연내 계획했던 목표를 초과달성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매우우수	• 보증기관(신보·기보)의 보증공급 및 은행권의 유동성 지원이라는 목표치는 적절함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 수렴의 충실성	매우우수	• 경기동향, 은행권 중기대출 총 규모, 대출·보증 공급 현황 등 관련통계를 조사하고 시중은행장 워크숍('09.2), 중소기업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
4.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5.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매우우수	• 보증기관의 보증규모 확대조치 및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확대 등에 힘입어 '09년 이후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지속적으로 개선

## (1) 평가결과 종합

□ 구조조정 추진체계를 조속히 마련하여 채권단의 선제적인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지원하는 등 경제 위기에 적극 대응

-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을 설치('08.11)하고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역할을 강화('09.1)하는 등 제도적 측면의 지원을 통해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유도
-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하고 워크아웃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체계 마련'의 성과지표 목표치는 모두 차질없이 달성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 정책내용과 직접 연계됨으로써 핵심내용자체가 지표의 목표치에 해당하나, 기업조정추진체계 마련은 목표치의 적극성 평가가 곤란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 수렴의 충실성	우수	• 주요국의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민간전문가, 은행장, 여당최고의원)의 의견 수렴
4.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5.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 기업구조조정체계를 신속히 마련하여 부실우려가 있는 591개 기업의 구조조정을 정상추진하고 한계·부실업체에 대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건전한 기업으로의 내실있는 자금지원을 적극 유도



## (1) 평가결과 종합

□ 부실우려가 제기된 건설·조선·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아울러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위기 이후 탄력 있는 산업 성장을 도모

- 건설·조선업에 대한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하고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추진
- 해운업에 대한 관계부처(국토부, 지경부등)협의를 거쳐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신용위험평가 실시
-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실물금융지원협의회 등)를 통해 여타 업종별 구조조정 추진 필요성·방향 등을 지속 점검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 구조조정 추진과 관련된 정량적인 목표치는 달성했으나 계량화가 어려운 정성적인 요소들도 감안 필요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성과지표를 구조조정 추진기업 수로 선정하여 적절한 정책효과 파악 가능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우수	• 산업별 세부현황과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이해관계자(민간전문가, 은행장 등)의 의견수렴
4.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5.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 건설,조선,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시장 정상화와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

## (1) 평가결과 종합

□ 3대 점검대상 분야(미시, 금융시장, 금융산업)를 중심으로 시장 리스크를 정기 및 수시 점검

- 주요 이슈 및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해 신속한 점검과 대응으로 불안심리가 완화되고 시장여건도 크게 호전될 뿐만 아니라 정책 방향 및 대응전략 수립에도 도움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 성과지표인 '월별 정례적 점검'을 100% 수행하여 성과 목표치를 모두 달성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 평가목표치인 '월별·정례적 점검횟수'는 객관적으로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지표임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 수렴의 충실성	우수	• 각종 모니터링 시스템과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해 벤치마크를 실시하고 사전에 정부, 국회, 국민 등의 공감대 형성
4.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5.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 기업 및 소비자 심리지수가 지속적으로 개선 • 주요 국내외 기관 및 글로벌 투자기관 등의 한국 성장률 전망도 금년 들어 지속적 상향조정

## (1) 평가결과 종합

□ 한국금융 바로 알리기 지원단을 통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

- 국내·외 외신 동향 및 금융시장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을 통해 주요 이슈를 점검·분석하고, 대응·설명자료 작성
- 자문단 간담회 개최, 외신 텔레브리핑 및 오찬회의 개최, 해외 IR 및 맞춤형 1:1 IR 실시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 정례 간담회 및 해외설명회(IR) 횟수에 목표치인 18회 달성과 아울러 해외 언론, 현지 전문가들은 정부의 홍보노력 및 효과에 대해 호평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외신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현지에서의 대면 설명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정례간담회 및 IR은 적절한 성과지표임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 수렴의 충실성	우수	• BH, 기재부·외교부 등 주요 부처, 한국은행·금감원 등 관계 기관 간 협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
4.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5.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극적으로 한국금융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해외의 막연한 의구심 해소</li> <li>• 한국금융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대외 신인도 향상을 통해 금융위기 극복에 큰 기여</li> </ul>

## (1) 평가결과 종합

□ 파생상품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시장리스크 인지도표(VKOSPI) 개발
- 파생상품 보고서식 개정(09.6월) 및 파생상품 종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09.12월)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매우 우수	• 파생상품 보고서 서식 개정, 시장리스크 지표 개발을 통해 파생상품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하였으므로, 성과지표의 목표를 달성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매우우수	• 보고서 서식 개정, 시장리스크 지표 개발은 파생 시장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기 위한 기본 전 제임을 감안하면, 성과지표의 적절성이 인정됨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 수렴의 충실성	매우우수	• VKOSPI 도입시 해외 증시 변동성지수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수 개발 • 학계 전문가와 TF를 구성하여 파생상품 보고서 서식 개정
4. 추진일정의 충실성	매우우수	•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5.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 파생상품시장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달성

## (1) 평가결과 종합

□ 국제금융시장 불안 심리 진정과 더불어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리만사태 이후 급격히 악화되었던 국내 은행 외화유동성 상황은 최근 크게 개선

- 위기 발생에 대한 사전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모니터링 강화(포렉스 포럼\* 설치('09.2))

\* 시장전문가팀(4차례 회의개최) 및 수출입기업팀(3차례 회의개최)으로 구성

- 외화유동성 공급 및 외채 차입구조 개선과 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감독 강화 방안 마련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 당초 계획한 성과목표(중장기 재원조달 비율 110%)를 초과하여 달성(133%)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 은행권의 단기화 된 차입구조가 문제점으로 지적 되어 중장기 대출 대비 재원조달 비율이 110% 이상으로 지도한 것은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 수렴의 충실성	우수	• 중장기재원조달 비율 관련 제도 연혁 및 과거 수치 추이를 감안하고 포렉스 포럼, 연구원 등 시장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침
4.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5.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 은행권 차입구조 및 외화유동성 상황이 크게 개선되어 해외투자자 시각이 크게 개선

## (1) 평가결과 종합

## □ 은행자본확충펀드를 통한 선제적 자본확충과 자체자본 확충유도

- 정책적 지원을 통한 은행의 실물지원이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20조원 규모의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09.3)
- '08년말부터 은행권의 자본확충을 유도하여 '08.10~'09.9월 중 총 29.0조원의 자본을 확충함으로써 '09.9월말 BIS비율은 최고 수준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매우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IS비율이 09.9월에는 사상 최고수준으로 국내 은행권에 대한 신뢰도 제고</li> <li>• 은행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은행권의 자본확충을 지원</li> </ul>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매우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의 적정자본유지는 은행업을 영위하고 경제 건전성을 이루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사항으로 BIS비율은 적절한 성과지표임</li> </ul>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 수렴의 충실성	매우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의 자본확충펀드 설립, 운영현황 등을 벤치마킹 하고 펀드 운영위원회를 학계, 시중은행, 공기업, 정책당국자 등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li> </ul>
4. 추진일정의 충실성	매우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li> </ul>
5.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매우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IS비율이 지속 상승함으로써 재무건전성 지표가 개선</li> <li>• 별도의 공적자금 투입없이 은행의 자본을 확충함으로써 투입비용 대비 효과 극대화</li> </ul>

## (1) 평가결과 종합

□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선진화 및 자본충실화 유도방안을 마련·추진함으로써 보험산업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제고

-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능력 강화를 위해 현행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기준인 지급여력비율제도를 개선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RBC제도를 도입하고, 리스크 관리 공시기준도 마련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 RBC제도를 도입하여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감독기준을 선진화시키고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지급여력비율제도 개선하여 적절한 성과지표 확보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 수렴의 충실성	우수	• RBC비율 시험산출 및 결과분석하여 RBC제도 도입안 확정 • RBC제도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개최
4.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5.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킴과 아울러 리스크 중심의 자기자본제도의 도입으로 리스크 관리 기능 제고

## (1) 평가결과 종합

□ 은행법·보험업법 개정안이 '08.12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국회 심의 지연으로 은행법시행령 및 보험업법시행령의 개정작업이 추진되지 못하여 전반적으로 미흡

- 소관 상임위 입법조사관실 및 의원보좌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법률안 국회 조기 통과를 위한 노력 경주
- 법률안 국회통과에 대비하여 은행법 하위규정 및 보험업법 하위규정 조문화 작업 진행 중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보통	• 법률안 국회통과 후 조속히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성과지표를 법령개정 완료로 설정하여 정책내용과 성과지표의 적절성 확보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 수렴의 충실성	우수	• 금융규제에 대한 전수조사('08년)를 통해 규제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은행법·보험업법 입법예고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4.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 은행법 개정안('08.12.29. 국회제출) 및 보험업법 개정안('08.12.28. 국회제출)의 국회 통과 지연
5.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미흡	• 보증기관의 보증규모 확대조치 및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확대 등에 힘입어 '09년 이후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지속적으로 개선



## (1) 평가결과 종합

□ 금융상품판매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단일법을 제정토록 하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전세계적 금융규제 전면 재검토 상황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금융상품 판매 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현행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규제에 대해 검토
- 은행법, 보험업법에 자본시장법상의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 소비자보호 제도를 도입하는 법 개정안 국회 제출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 단일화된 법 제정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다기화된 금융상품판매 규제의 수준을 동일 수준으로 균형있게 정비하는 데 중점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 법 제정은 제도를 개편하는데 있어 확실한 방법임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 수렴의 충실성	우수	• 법안 제정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업권별 협회 및 연구원 등에 포괄적 의견수렴을 실시
4.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5.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 국회에서 법 통과시 업권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는 금융상품판매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어, 규제의 투명성·일관성 등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

## (1) 평가결과 종합

□ 보험업법 개정안이 '08.12월 국회제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전반적인 목표달성이 다소 미흡

- 보험회사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를 위해 업권 및 전문가,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TF 운영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  
제출(08.12)
- 보험업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필요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보통	• 보험업법 개정안이 '08.12월 국회 제출되었으나 국회 일정 지연으로 법 개정 지연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법 개정 후 6개월 이후에 시행하는 점을 감안하면 금년 중 제도 도입을 완료하겠다는 성과지표는 적절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 수렴의 충실성	우수	• 보험상품 출시 시 제출상품의 비중을 전수조사 하고 보험관계자로 구성된 상설 TF를 6개월간 운영하여 개선방안 마련
4.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지연
5.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 개정안이 국회심의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시행령 개정 이후 실제 시행시점에서 구체적인 정책효과 발생 가능

## (1) 평가결과 종합

□ 국정목표와 금융정책의 비전 달성과 연계하여 관계부처 협의, 당정협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 및 철저한 준비 과정을 통하여 산업은행 민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 법령의 제·개정 완료, 산은 지주회사 및 정책금융공사의 설립으로 향후 산은 민영화를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은지주사 주식을 정책금융공사에 출자하고 산은지주사 지분 매각이 가능하도록 산업은행 재무구조 개선계획 마련하여 민영화 추진</li> </ul>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은지주 지분 현물출자 및 지분 매각은 산은 민영화의 추진을 위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성과지표의 적절성이 확보</li> </ul>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매우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선진금융기관(일본, 싱가포르)의 발전사례를 조사하고 외국전문가의 의견청취</li> <li>• 공청회, 국회논의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li> </ul>
4.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li> </ul>
5.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은행, 공사 간 자산분할 방안을 마련하여 재산을 합리적으로 안분</li> <li>• 산은 지주회사 및 정책금융공사를 성공적으로 설립함으로써 민영화의 추진의 기반 마련</li> </ul>

## (1) 평가결과 종합

□ 예금보험공사 및 자산관리공사는 공적자금 조기회수 및 회수 극대화를 실현하는 등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나 정리금융공사는 수요자 관심 부족 등으로 매각이 다소 부진

- 예금보험공사는 시장상황 및 국내 금융산업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각을 추진한 결과, 총 1.3조원을 회수
- 자산관리공사는 보유자산 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정리기법을 활용하여 총 3,486억원을 회수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보통	• 예보 및 캠프 보유자산 매각 계획안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및 상환을 차질없이 추진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 공적자금의 차질없는 상환과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서는 보유지분을 조속하고 효율적인 매각이 필수적으로 성과지표의 적절성 확보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 수렴의 충실성	우수	• 시장상황과 산업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계 부처, 민간전문가, 국내외등 전문가의 의견수렴
4.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5.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 공적자금의 차질없는 상환을 통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내 금융시장의 자율성 확대에 기여

## (1) 평가결과 종합

□ 금융산업의 성장동력 창출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FTA 금융협상을 지속 추진

- 미국 등 주요국가들과 동시다발적으로 FTA 금융협상 추진
- 금융협상 전 과정을 통하여 금융사들로부터 상대국에 대한 애로사항을 파악한 후 상대국의 불합리한 규제 등을 개선 요구하는 등 국익확보를 최우선으로 FTA 금융협상에 임함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 FTA협상에 있어 금융업계 의견을 적극수렴하여 쟁점사항에 대해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성과지표상 목표를 달성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상대국 양허 및 제도개선요구, 국내 금융제도의 특수성 등 반영, 금융협상 T/F운영 등 현행 성과지표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우수	• FTA 추진과 관련하여 공청회 개최와 이해관계자인 금융업계의 의견을 수렴 •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위하여 국제협상 전문가(변호사)의 의견을 수렴
4.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5.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 해외진출 활성화 등 금융협상의 구체적인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기대되는 정책효과임 • 주변 경쟁국보다도 먼저 거대 경제권과 협상이 체결되어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예상

## (1) 평가결과 종합

□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도록 회계제도를 정비하고 기업의 과도한 회계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회계제도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09년 내 정부입법 절차를 완료

- 기업들이 국제회계기준을 무리없이 도입하도록 'IFRS 조기도입 자문 TF' 운영 등을 통해 지원하고 '발행공시법제 선진화 T/F'를 통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공시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고 관련 감독규정을 금융위에 상정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국제회계기준 및 연결중심 공시제도가 원활히 정착 되도록 관련법령 정비를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있으며 회계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이해상충 상황을 감안 시 적극적인 목표설정으로 판단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 수렴의 충실성	우수	• 관련 사례 및 통계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회계제도 선진화 추진단, IFRS 조기도입 자문 TF, 공시법제선진화 T/F 등을 통해 기업·전문가 의견 수렴하여 제도 개선안 마련
5.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 국제적 수준의 회계기준으로 정비하여 우리 금융시장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금융인프라 서비스 선진화 구축 국가로 만드는데 기여

## (1) 평가결과 종합

☐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해 법무부와 공동으로 「증권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

- 전자화의 기대효과가 큰 단기사채에 대한 전자등록제도 도입을 우선 추진하여 현행 CP시장의 문제점(불투명성·유통 곤란)을 해결하고, 전자증권제도 도입기반을 조성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 당초 전자증권법안을 마련하였으나, 관계기관의 반대로 단기사채제도 도입 대체추진 결정으로 개정안 마련, 입법예고, 규제위 심사 등을 마치고, 현재 법제처 심사중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은 법률 제정을 통해서만 최종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인정되며, 법률안 국회제출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관계부처 협의 등이 수반되는 복잡한 과제임을 감안시 목표치는 적극적으로 설정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매우우수	• 주요국의 전자증권제도(단기사채제도) 도입 및 운영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T/F 운영, 관계부처 협의, 정책세미나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정책수요자)·전문가 의견수렴
5.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화의 기대효과가 큰 단기사채제도 도입을 먼저 추진함으로써, 향후 전자증권제도의 전면 확대에 가기 위한 초석을 마련</li> <li>• 다만 구체적 정책효과는 법안 제정 이후, 단기사채제도가 본격 시행된 시점에 평가 가능</li> </ul>

## (1) 평가결과 종합

□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정회원 가입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선진화를 착실하게 추진

- '09.10월 FATF 정회원에 가입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를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고 FATF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수립·제출·집행하였으며 감독·검사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개 과제* 중 3개 이상 달성을 '09년 지표로 설정하여 3개 과제는 이행완료, 1개는 지연</li> <li>* ①시행령 개정(지연), ②검사시스템 선진화(완료), ③FATF 정회원 안건 상정(완료), ④이행계획 마련(완료)</li> </ul>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ATF 정회원 가입, 검사감독시스템 선진화, 이행계획 마련, 시행령 개정 등은 제도선진화를 위한 필수과제임이라는 점에서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인정됨</li> <li>• 4개 과제의 달성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음에도 적극 목표로 설정</li> </ul>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사례를 면밀히 조사하여 추진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회의, 관계자 워크숍 및 자금세탁방지 정책자문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추진</li> </ul>
5.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li> </ul>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기반 마련</li> </ul>



## (1) 평가결과 종합

□ 심사분석관 역량강화 교육 및 심사분석 소요기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심사분석의 효율성을 향상

- 자금세탁행위 조사/연구 보고서를 예정대로 발간 완료하여 파견 인력 교체로 인한 심사분석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등 제도의 운영을 내실화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 심사분석 소요기간은 38.5일로 목표치 42.5일에 비하여 4일 단축하는 등 목표를 초과달성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급증하는 혐의거래보고를 처리하기 위해 심사분석 소요기간 단축이 요구되는 등 지표의 대표성이 인정 • 심사분석 인력 감축에도 불구하고 '08년 심사분석 소요기간 목표에서 5% 단축된 42.5일을 '09년 목표치로 선정하는 등 적극성이 인정됨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우수	• '06년 이후 매년 심사분석 소요기간의 추세 및 심사분석 인력감축을 반영하여 '09년 목표치 설정하고, 적정 심사분석 소요기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전문가 의견 수렴
5.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 '07년 이후 심사분석 소요기간이 지속적으로 단축하여 심사분석 업무를 효율화하고 연간 심사분석 건수를 증가시켜 증가하는 STR 보고에 대처하고 심사분석 내실화에 기여

## (1) 평가결과 종합

- 혐의거래 표준 점검시스템을 작성·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가 혐의거래를 효율적으로 적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양질의 혐의거래보고를 유도
- 검사매뉴얼 마련·운용 및 감독검사지원시스템 구축·운용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수준 제고에 기여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모두 초과달성</li> <li>* 금융회사의 혐의거래점검시스템 구축비율, 검사수탁기관의 검사매뉴얼 및 검사체크리스트 개정비율, 금융회사 AML 담당자 등에 대한 고객만족도</li> </ul>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개 성과지표는 AML이행수준 측정에 매우 적절한 지표로 대표성이 인정되며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있음</li> </ul>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 수렴의 충실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스템 구축사례, 관련 통계자료 및 연구용역을 통한 해외 선진사례를 면밀히 조사·분석하고 감사원의 개선요구사항 및 검사수탁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하여 정책 수행</li> </ul>
5.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li> </ul>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혐의거래 표준 점검시스템을 바탕으로 금융회사별 자체 점검시스템을 구축·운용한 결과 불필요한 혐의거래가 감소하는 등 혐의거래 충실도 제고에 기여</li> <li>검사매뉴얼 및 개정 검사 체크리스트에 의해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체계적인 검사업무 기반을 구축</li> </ul>

## (1) 평가결과 종합

□ 녹색부문의 자금유입 원활화를 위해 전금융권이 참여하는 녹색 금융협의회를 구성하여 금융권의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반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

- 녹색금융협의회를 중심으로 녹색금융 모범규준, 해외사례 조사 등 금융권의 녹색금융 실천을 위한 제반 노력을 차질없이 진행중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녹색금융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제반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녹색금융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구축 뿐만 아니라 금융권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필요 • 목표설정 시 금융권의 녹색금융 추진체계 및 계획이 미흡했던 점을 감안시 녹색금융 실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목표 설정은 적극성이 인정됨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우수	•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해외사례를 조사분석하고 금융권 및 학계·연구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된 '녹색금융협의회'를 구성하여 전문가·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5.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녹색금융협의회를 구성하여 금융권의 녹색금융 세부실천을 위한 추진체계가 마련 • 녹색금융 실천계획의 수행에 따라 민간금융회사에 의한 녹색부문 자금 공급이 원활히 될 것으로 기대

## (1) 평가결과 종합

□ 녹색산업 부문으로의 원활한 자금유입의 촉진을 위해 종합대책을 조기에 마련·발표하고 시행하는 등 전반적으로 계획수립 및 실천 측면에서 매우 양호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녹색금융 원활화를 위한 범정부적·종합추진 대책을 발표하고 동 대책에 따라 녹색예금·펀드 등에 대한 세제혜택, 녹색기술·기업 인증제도 등 녹색금융 원활화를 위한 주요 인프라 구축이 차질없이 진행 중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보통	• 관계부처 합동으로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을 연내 발표하여 당초 목표를 완료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녹색금융 영역에는 정책금융지원, 탄소배출권거래 등 다양한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괄하는 종합 대책 수립을 목표로 제시함으로써 균형있는 정책 추진을 담보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 수렴의 충실성	우수	•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해외사례를 조사분석하고 녹색금융 관계자 세미나, 녹색금융 전문가회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적극적으로 수행
5.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 수립된 대책을 통해 다양한 정책수단 및 제도적 인센티브들이 본격 추진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계획수립시에 목표로 했던 정책효과가 상당부분 가시화되고 있어 녹색성장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

## (1) 평가결과 종합

□ 美少금융의 단계적 사업 확대를 통해 제도권 금융의 사각지대를 보완함으로써 불법 사금융 시장을 대체하여 서민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고, 재계와 금융권이 자활지원 자금을 기부하고 직접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문화가 확산될 것임

- '무담보·소액대출(Micro credit)사업'을 '美少 금융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12월부터 기업·은행권·지역재단을 설립하여 시범적으로 창업자금 대출을 시작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 기업·은행권미소금융재단과 지역미소금융재단의 설립은 연내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하였거나 대부분 달성하고 있어 연말까지는 무리없는 목표달성이 예상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경기침체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서민금융수요 충족에는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던 점을 감안할 때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인정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 수렴의 충실성	우수	• 관련 현황(마이크로 크레딧 수행기관 및 기관별 재원 현황 등), 해외사례 및 통계를 조사·분석하고 관련 부처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추진
5.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 저신용자들에 대한 창업자금 대출로 서민의 경제적인 자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따뜻한 사회 구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

## (1) 평가결과 종합

- 신용회복기금을 통한 채무재조정 및 환승론을 실시함에 있어 제도 시행 경과를 살피면서 점진적으로 확대·실시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수혜범위의 확대를 동시에 달성

구 분		주 요 내 용
환승론	1단계	• 채무액 1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까지 적용(2월)
	2단계	• 30% → 20% 이상 고금리 채무로 대상채무를 확대 • 신용보증비율을 상향조정하여 평균금리 20%→12% 수준의 은행대출로 전환(6월)
채무재조정		• 적용채무를 환승론과 함께 1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까지 적용하여 금융소외자 지원을 확대(4월)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 서민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채무재조정과 환승론을 당초 계획(상반기)보다 조기에 확대 시행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저신용계층에 대한 정책 추진에 초점을 두고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적절히 설정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우수	• 사금융실태조사 및 신용정보회사의 보유 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금융소외자의 사금융이용현황 및 상환능력 등을 파악하고, T/F작업반 구성, 관련부처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수행함
5.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 금융소외자를 지원하여 따뜻한 사회 구현을 위한 기반을 제공 • 금융소외자 지원 대책에 대한 저신용층의 호응도가 높고 언론의 평가도 우호적임

## (1) 평가결과 종합

□ 금융투자상품 판매인력에 대한 교육 강화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여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최소화

-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판매회사의 자체관행 개선 및 투자자 보호제도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인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투자상품 판매인력 등급별 시험 실시하고 미스터리 쇼핑 실시방안 마련 및 본격 시행하는 등 목표달성</li> <li>• 신속한 방안 마련을 통해 보험업법 개정안이 '08년말 국회 제출되었으나 국회 일정 지연으로 법 개정 지연</li> </ul>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투자상품 판매인력 등급제 도입은 등급별 시험 실시 여부가 핵심이며 미스터리쇼핑 실시 횟수에 따라 판매사 등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과지표로 적절</li> <li>• 보험상품 관련 성과지표는 보험업법령 개정이며 동 성과지표는 제도 도입의 최종 단계이므로 대표성이 확보</li> </ul>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 수렴의 충실성	매우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현황, 사례 및 통계를 조사·분석하고 T/F 운영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추진</li> </ul>
5.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투자상품 관련 정책은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으나 보험상품의 경우 국회일정 지연으로 지연</li> </ul>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매인력 교육에 대한 판매사의 관심 유도를 통해 자체교육강화 등에 동참하도록 유도</li> <li>• 미스터리쇼핑 시행으로 판매사의 경각심을 고취함으로써 판매사 자체 미스터리쇼핑 실시 등을 유도</li> </ul>

## (1) 평가결과 종합

- 투자자의 투자목적·위험 감수 능력 등에 맞는 상품이 거래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유통·분쟁단계에서 상품의 성격·투자자 특성에 따라 차등화된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지속적으로 개선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본시장법 및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여 파생금융상품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하는 등 성과지표의 목표를 달성</li> </ul>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파생상품의 성격·투자자 특성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자 보호체계 구축, 분쟁발생시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등을 위한 가장 대표적 조치가 법령 개정 등임을 감안할 때,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인정됨</li> <li>법령 개정 등은 규제개혁위원회·국회 설득 등이 수반됨을 감안할 때 목표치는 적극적으로 설정</li> </ul>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매우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 현황, 사례 및 통계를 조사·분석하고 연구용역 및 T/F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관련 법령 개정시 입법예고를 통해 정책수요자 의견 수렴</li> </ul>
5. 추진일정의 충실성	매우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li> </ul>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파생상품 관련 투자자 보호장치가 강화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투자 행위가 감소되고,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권유도 보다 신중해질 것으로 예상</li> </ul>



## (1) 평가결과 종합

- 은행별로 KPI 개선을 통해 펀드, 방카슈랑스 등 과목별 성과지표를 축소하여 외형 확대경쟁을 자제토록 하는 한편 중기대출 확대 등 정책지표를 추가함으로써 실물경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금융시장 불안정성 증대와 최근 금융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여 감독당국의 감독을 유기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내부통제 제도의 마련을 추진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 내부통제제도 개선의 성과 목표치는 내부통제제도의 개선 방안 마련이나, 현재 국제적으로 금융규제 및 리스크관리 강화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 현재 논의중인 원칙과 방안들을 토대로 새롭게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안의 수립을 추진할 계획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 은행의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영업점 성과지표(KPI)를 여수신 규모 등 외형보다는 (장기) 수익성(률) 중심으로 개편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전 은행의 KPI 개정을 통해 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매우우수	• KPI제도 개선을 위한 은행별 실태 및 외국 사례를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은행권 자율로 KPI 개선T/F 및 내부통제개선 T/F를 구성하여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수렴
5.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 은행간 과도한 외형경쟁을 자제하는 한편, 중기대출 등 실물경제를 원활히 지원하고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을 자제함으로써 방카슈랑스 등 불완전 판매가 자제될 수 있도록 유도

## (1) 평가결과 종합

□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수요자별 맞춤형 금융교육 실시하는 등 금융교육을 활성화함

- 청소년 금융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생 금융교육 강화하고, 금융교육 정보센터(Clearing- House)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교육 자료에 대한 접근성 제고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 연간 935회 금융교육을 실시하여, 성과지표 목표치 (연간 800회) 초과 달성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금융교육 실시횟수는 금융교육 활성화 정도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인정되며, 금융 유관기관의 금융교육 관련 인력현황 등을 감안할 때 연간 800회 교육실시는 매우 적극적인 수준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우수	• 과거 금융교육 실적현황 및 금감원·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전국청소년교육협의회 등 관련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금융교육 실무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연중 추진일정을 점검
5.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교육의 확대를 통해 일반인, 학생, 청소년 등의 금융교육 중요성에 대한 관심 제고</li> <li>•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확대를 통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에 기여</li> </ul>

## (1) 평가결과 종합

□ 산은을 통한 일자리 창출 부문에 대한 자금지원, 기은을 통한 구인·구직 수요 연결 등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경기침체기에도 상당규모의 고용창출효과를 달성

-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창업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증을 공급하여 창업기업의 자금사정을 개선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목표치*를 초과 달성</li> <li>*(산은) 녹색성장기업에 대한 특별시설자금 및 중소기업 대상 우대지원 자금으로 총 9.8조원 공급</li> <li>*(기은) 청년취업 1만명 프로젝트 조기 완료</li> <li>*(신기보) 창업기업에 대해 총 15.4조원 지원</li> </ul>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은행의 시설자금 지원 등은 일자리 창출 부문에 대해 유동성 확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확대 가능</li> <li>• 창업기업에 대한 신·기보 보증실적을 직접 성과목표로 설정하여 성과지표의 대표성·효율성 제고</li> </ul>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용박람회 등을 주최하여 구직·취업 수요 등을 파악하고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중소기업 현장점검 등을 통해 창업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자료를 수집</li> </ul>
5.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li> </ul>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가시적인 취업촉진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창업부문에 대한 보증지원이 확대되어 창업기업의 자금사정이 개선되었을 것으로 기대</li> <li>• 국책금융기관을 통한 적극적인 일자리창출 지원을 통해 금융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li> </ul>

## (1) 평가결과 종합

☐ 글로벌 ETF시장과 견줄 수 있는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ETF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

- 해외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TF 구성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계획된 기한내에 다양한 신종ETF 도입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장이 요구하는 상품이 적기에 출시되도록 지원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매우우수	• 법률 및 하위규정까지 차질없이 100% 달성하고 관련 신상품이 적기에 출시되도록 적극 지원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 새로운 유형의 상품개발을 위해서는 법규 정비가 필수적인 사항인바, 법규정비 여부는 성과지표로서 적절 • 운용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ETF상품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목표 설정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우수	• 해외사례 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방안 마련하고 거래소·운용사·증권사 등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
5.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 규제완화 사항을 반영한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고 관련 시장에서 다양한 지수개발의 動因으로 작용 •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효율적 자산관리가 가능 • 파생상품을 이용한 신상품 개발등 질 높은 상품개발 환경을 마련하여 국내외 자산운용사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ETF 시장 활성화 촉진으로 글로벌 거래소로서의 경쟁력 확보

## (1) 평가결과 종합

□ 펀드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내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수단을 보장하기 위한 헤지펀드제도 도입은 긍정적임

- 글로벌 금융위기하에서 국제적으로 헤지펀드의 등록 등 규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헤지펀드에 대한 일정수준의 감독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헤지펀드의 도입을 추진하여 법령 개정작업이 마무리되어 12월 시행됨에 따라 목표달성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 헤지펀드설립에 대한 사후보고 등 금융감독을 위한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여 이를 자본시장법(1월)과 시행령(12월)에 반영함으로써 제도도입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모두 마련 • 한국형 헤지펀드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는 측면에서 법률적 근거 마련이라는 성과지표에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우수	• 외국 헤지펀드 운용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제도와의 접목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전문가를 중심으로 T/F구성하여 제도를 검토하고 관련부처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5.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 추진일정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였음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 금년중에는 헤지펀드제도의 도입만을 추진하고 내년 중 펀드 설정 등 정책적 효과가 기대됨 • 헤지펀드의 도입으로 금융산업의 선진화 및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예상

####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개선조치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 은행법·보험업법 개정안 국회통과 조속 추진	○ 은행법·보험업법 개정 (‘10년 상반기)
○ 은행법시행령·보험업법시행령 개정 추진	○ 은행법·보험업법 하위규정 정비 (‘10.12월)

## 금융위원회

### 1. 총 평

- ☐ 금융위는 소규모 인원(226명)으로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위기 대응 등의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 조직관리체계의 효율화 정도, 인력의 효율적 활용도 등 성과지표상의 기준을 대부분 충족
- ☐ 인사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를 통한 금융위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 경주
  - 개방형·공모직위의 효율적 운영, 내실있는 행정인턴 운영, 균형 인사 등의 측면에서 높은 성과 달성
- ☐ '10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바탕으로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를 성실히 운영하고 민원인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

### 2. 세부 평가결과

- ☐ 조직관리 분야
  - 법령에서 부여된 업무의 일부를 금감원, 유관협회 등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임시TF 운영을 활성화 하는 등 업무효율성 제고 노력 우수
  - 정보공개 처리절차 준수 실적은 우수하나 정보공개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는 65.24점으로 상대적으로 미흡
  - 금융위 블로그 운영, 사금융 피해 상담센터 운영, 마이크로 크레딧 활성화 등 대국민 서비스 분야 노력 우수

☐ 인사관리 분야

- 행정인턴의 내실있는 운영, 4급이상 관리직 여성 임용목표 달성 및 이공계 임용목표 달성 등 효율적인 기관인사시스템 구현 노력 우수
- e-사람 인사관리 시스템 활용 및 기관간 인사교류 실적은 상대적으로 다소 미흡

☐ 정보화관리 분야

- 정보시스템 도입시 공개 S/W 도입여부를 사전 검토함으로써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률 30.2%를 달성하는 등 S/W산업 지원 노력 우수

### 3. 주요 사례 분석

☐ 조직관리 분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대부업법」 등에 규정된 금융위 업무중 11건을 금감원 및 협회로 업무위탁
- 공적자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공자위 사무국 설립시 총 정원 12명중 6명을 금융위 기존인력으로 대체하여 신규 인원증가는 6명에 그침
- 「사금융피해상담센터」를 개설·운영하여 사금융 피해예방 및 서민 금융이용자 보호 달성
- 블로그 운영, UCC제작 등 다양한 대국민 정책 홍보수단 마련

☐ 인사관리 분야

- 행정인턴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를 통해 총 인턴 계약인원 8명중 6명이 취업하는 등 제도 운영의 내실화 도모
-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평가등급을 적정하게 부여하고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성과 관리 운영의 내실화 도모



☐ 정보화관리 분야

- e-금융민원센터를 통해 금융업 관련 인·허가부터 단순 민원까지 한곳에서 접수·처리하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
- 민원 서비스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인터넷민원 신청 진행결과를 SMS 및 메일로 실시간 통지

## 4. 개선방안

☐ 조직관리 분야

- 민간에 위탁된 업무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위탁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노력 필요
- 정보공개시스템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정보공개 시 공개 가능한 관련정보를 폭넓게 제공하고, 비공개 결정통지 시 근거 및 사유를 보다 상세히 기술하도록 업무담당자 교육 강화

☐ 인사관리 분야

- e-사람 인사관리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고, 기관간 인사교류를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인사관리 효율화 도모

☐ 정보화관리 분야

- 금융위 홈페이지에 대한 장애인·고령자의 웹접근성을 확보하고 이기종간 웹호환성을 강화하는 노력 경주

## 2. 09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고서 및 결산서

☐ 붙임 참조

☐ 결산서 별도제출

2009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고서  
- 일반재정(예산) -

2010. 8

금 융 위 원 회

## ▶ 목 차 ◀

1. 금융전문인력양성(일반회계, 민간보조/출연, 미흡) 1
2. 한국주택금융공사출자(일반회계, 출자, 보통) .....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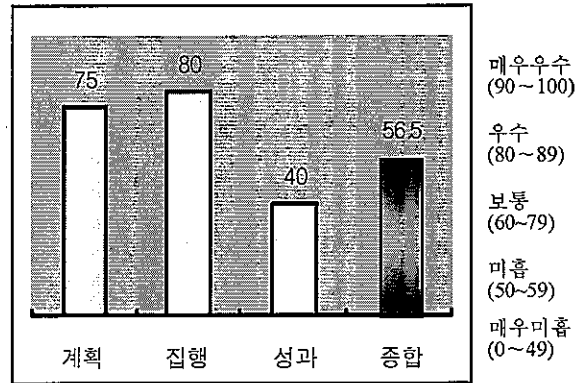
# 1. 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일반회계, 민간보조/출연, 미흡)

\* 담당자 : 국제협력팀장(윤영은), 국제협력팀 사무관(이종립), 전화번호 : 2156-9662

## 1 평가결과

계      예      상당정도      어느정도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종합	15	10	-	1	4
○ 계획	7	6	-	-	1
○ 집행	4	3	-	-	1
○ 성과	4	1	-	1	2



## 2 예산현황 (단위 : 억원)

2008(결산)  
15

2009(결산)  
14.1

2010(예산)  
19

## 3 성과계획

☐ 성과목표 : 우리 산업 전망에 비해 부족한 금융전문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공급

☐ 성과지표

	'07	'08	'09	'10
○ MBA입학생 지원율				
▪ 계획			3:1	3:1
▪ 달성			3.1:1	
○ MBA졸업생 취업성취도				
▪ 계획		신규	개선(84)	90
▪ 달성		79	89	
○ 실무금융전문인력양성				
▪ 계획			150	300
▪ 달성			129	

#### 4 사업개요

##### ○ 사업내용

##### 1)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출연사업

- 2006년 3월 금융전문대학원을 출범시켜 교육기자재 비용, 학교 운영비용(교수충원비, 장학비) 등 4년 동안 총 83억을 지원

\* 38억('06) → 20억('07) → 15억('08) → 10억('09)

##### 2)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

- 현장의 중견실무자를 대상으로 기존 교육과 차별화된 실무중심의 교육을 실시함으로 금융분야에서 필요한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
- 자산운용과생상품 전문가과정(금융투자교육원), 퇴직연금 전문가과정(보험연수원), 글로벌 IB리더 양성과정(금융연수원) 등 업권별로 특화강좌 개설

○ 사업기간 : '06년 ~ 계속(실무인력양성사업의 경우 '09년~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지원형태 : 출연(MBA지원) · 민간보조(실무인력양성)

○ 지원조건 : 실무인력양성사업은 총 사업비의35% 보조

○ 시행주체 :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금융협회 연수원(금융투자교육원, 보험연수원, 금융연수원)

##### ○ 세부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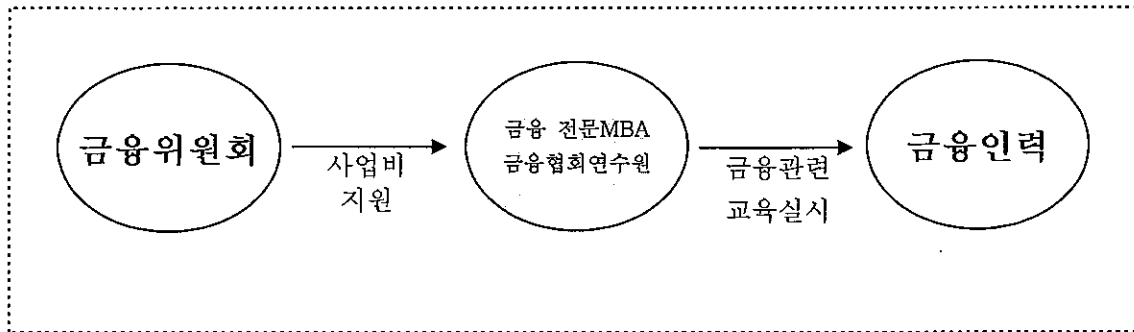
(백만원)

구 분	'08예산	'09예산 (A)	'10예산 (B)	증 감 (B-A)	%
□ 금융전문인력양성		1,500	1,900	400	27
○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출연	2,000	1,000	-	△1,000	△100
○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		500	1,000	500	100
○ 녹색금융특화MBA지원			900	900	

※ 업무협약에 따라 KAIST 금융전문대학원에 대한 지원은 '09년 종료되며 '10년부터는 녹색금융 특화MBA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

□ 사업추진 절차

- 금융위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교육기관(MBA, 금융협회연수원)이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체계



□ '09~'13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백만원)

총사업비	'09년까지	'10년	'11년	'12년	'13
-		1,900	2,600	3,000	3,800

## ⑤ 평가결과

### 1. 사업계획 단계

항목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타당한가?	예	<div> <div> <div>□ 답변 근거 종합</div> <div> <div>○ 금융위는 금융전문인력양성 사업을 통해 금융산업의 핵심 요소인 우수한 금융인력 확보 및 금융교육의 수준 제고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음</div> <div>▪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산업 전망에 비해 우수한 금융인력은 부족하며 금융인력의 수준 또한 금융중심지 경쟁국에 비해 미흡하다고 평가됨</div> <div> <div>* '12년까지 6,600명(Mercer, '07), '15년까지 64,000명(서울대, '09) 부족</div> <div>* 한국의 금융전문인력 국제순위는 61개국 중 42위(IMD, '07)</div> </div> <div>○ 따라서 금융전문인력 양성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우수한 금융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부지원은 긴요</div> <div>▪ 금융위는 이러한 사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산·학 협력 모델을 통한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효과적인 금융인력 양성을 성과목표로 추진하고 있음</div> </div> </div> <div> <div>□ 답변 근거 및 자료</div> <div> <div>① 사업목적과 성과목표 달성과의 연계성</div> <table> <tr> <td>▪ 사업목적</td> <td>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금융교육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전문인력 양성 추진</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성과목표</td> <td> <div> <div>• 우리 산업 전망에 비해 부족한 금융전문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공급</div> <div>• 산·학 협동의 혁신적인 교육모델 제시</div> </div> </td> </tr> <tr> <td>▪ 사업목적과의 연계성</td> <td> <div> <div>• MBA지원, 실무인력양성 사업 등 정부지원을 통해 금융인력 육성이 활성화될 뿐 아니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민·관·학(산·학) 모델 제시와 동시에 금융교육 수준 향상</div> <div>⇒ 이러한 성과목표는 우수한 금융인력 양성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금융인력 양성”이라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 하도록 함</div> </div> </td> </tr> </table> <div> <div>② 사업목적의 명확성</div> <table> <tr> <th>구 분</th> <th>주 요 내 용</th> </tr> <tr> <td>특정문제</td> <td>금융산업 전망에 비해 부족한 금융전문인력의 효과적인 양성</td> </tr> <tr> <td>사업대상자</td> <td>MBA(KAIST금융전문대학원), 금융협회연수원(금융투자교육원, 보험연수원, 금융연수원) 등 금융인력 양성기관</td> </tr> <tr> <td>이해관계자</td> <td>교육을 위탁한 금융기관, 수강생</td> </tr> <tr> <td>사업수요</td> <td>금융기관</td> </tr> <tr> <td>정부지원 필요성</td> <td> <div> <div>금융교육은 일종의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어 우수한 금융교육은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공급되기 어려움</div> <div>따라서 정부가 필요 최소한의 지원을 함으로써 금융교육의 질적수준을 제고하고 부족한 금융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div> </div> </td> </tr> </table> </div> </div> </div> </div>	▪ 사업목적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금융교육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전문인력 양성 추진	↓		▪ 성과목표	<div> <div>• 우리 산업 전망에 비해 부족한 금융전문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공급</div> <div>• 산·학 협동의 혁신적인 교육모델 제시</div> </div>	▪ 사업목적과의 연계성	<div> <div>• MBA지원, 실무인력양성 사업 등 정부지원을 통해 금융인력 육성이 활성화될 뿐 아니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민·관·학(산·학) 모델 제시와 동시에 금융교육 수준 향상</div> <div>⇒ 이러한 성과목표는 우수한 금융인력 양성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금융인력 양성”이라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 하도록 함</div> </div>	구 분	주 요 내 용	특정문제	금융산업 전망에 비해 부족한 금융전문인력의 효과적인 양성	사업대상자	MBA(KAIST금융전문대학원), 금융협회연수원(금융투자교육원, 보험연수원, 금융연수원) 등 금융인력 양성기관	이해관계자	교육을 위탁한 금융기관, 수강생	사업수요	금융기관	정부지원 필요성	<div> <div>금융교육은 일종의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어 우수한 금융교육은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공급되기 어려움</div> <div>따라서 정부가 필요 최소한의 지원을 함으로써 금융교육의 질적수준을 제고하고 부족한 금융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div> </div>	3.0
▪ 사업목적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금융교육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전문인력 양성 추진																							
↓																								
▪ 성과목표	<div> <div>• 우리 산업 전망에 비해 부족한 금융전문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공급</div> <div>• 산·학 협동의 혁신적인 교육모델 제시</div> </div>																							
▪ 사업목적과의 연계성	<div> <div>• MBA지원, 실무인력양성 사업 등 정부지원을 통해 금융인력 육성이 활성화될 뿐 아니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민·관·학(산·학) 모델 제시와 동시에 금융교육 수준 향상</div> <div>⇒ 이러한 성과목표는 우수한 금융인력 양성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금융인력 양성”이라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 하도록 함</div> </div>																							
구 분	주 요 내 용																							
특정문제	금융산업 전망에 비해 부족한 금융전문인력의 효과적인 양성																							
사업대상자	MBA(KAIST금융전문대학원), 금융협회연수원(금융투자교육원, 보험연수원, 금융연수원) 등 금융인력 양성기관																							
이해관계자	교육을 위탁한 금융기관, 수강생																							
사업수요	금융기관																							
정부지원 필요성	<div> <div>금융교육은 일종의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어 우수한 금융교육은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공급되기 어려움</div> <div>따라서 정부가 필요 최소한의 지원을 함으로써 금융교육의 질적수준을 제고하고 부족한 금융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div> </div>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 되지 않는가?	예	<div> <div> <div>□ 답변 근거 종합</div> <div> <div>○ 금융MBA 지원사업의 경우 금융산업의 핵심 요소인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금융전문대학원 설립·지원이라는 고유한 형태로 추진해 왔음</div> <div>- 정부는 KAIST 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06년부터 '09년까지 지원하고 있음</div> <div>○ '09년부터 시작된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금융분야에 특화된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금융위가 독자적으로 추진</div> <div>⇒ 금융분야라는 특화된 분야에서의 인력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유사·중복되지 않음</div> </div> <div> <div>□ 답변 근거 및 자료</div> <div>① 중복·유사사업의 비교</div> <table> <tr> <th>판단기준</th> <th>실무금융전문인력 (금융위)</th> <th>국제금융인력양성 (기재부)</th> </tr> <tr> <td>① 시행주체</td> <td>금융위</td> <td>기재부</td> </tr> <tr> <td>② 사업목적</td> <td>금융업계에 종사하는 중견실무자를 대상으로 업권별 특화된 교육(보험,투자,은행) 제공을 통한 실무능력 향상</td> <td>국제금융분야에서의 예비 전문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재직자의 환위험 관리 능력 향상 지원</td> </tr> <tr> <td>③ 수혜대상</td> <td>금융 산업권(은행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중견 실무인력(근무연수 2년 이상)으로 재직자</td> <td>대학(원) 재학생 및 취업준비생 중소기업의 외환관련 업무 담당자</td> </tr> <tr> <td>④ 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원조건 등)</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비 : 500백만원</li> <li>•교육기간 : 5개월</li> <li>•교육내용 : IB리더과정, 파생상품·자산운용과정, 퇴직연금과정 등 업권별 특화과정</li> <li>•지원조건 : 교육비의 35% 이내</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비 : 720백만원</li> <li>•교육기간 : 1개월내외(대학생), 24시간 이내(중소기업)</li> <li>•교육내용 : 외환, 국제금융, 환위험 관리 등 국제금융</li> <li>•지원조건 : 정부100%지원</li> </ul> </td> </tr> <tr> <td>⑤ 사업방식</td> <td>•민간위탁</td> <td>•민간위탁</td> </tr> </table>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재부 국제금융인력 양성사업은 금융위 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과 목적, 대상, 지원범위가 다름</li> <li>- (대상) 금융위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중견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기재부는 미취업 대학(원)생, 중소기업 재직자</li> <li>- (지원범위) 금융위는 35%이내 지원, 기재부는 100% 지원</li> <li>- (내용) 금융위는 업권별 특화과정(퇴직보험, 파생상품 등)을 개설하는 반면 기재부는 국제금융 분야로 한정</li> </ul> </div> </div> </div> </div>	판단기준	실무금융전문인력 (금융위)	국제금융인력양성 (기재부)	① 시행주체	금융위	기재부	② 사업목적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중견실무자를 대상으로 업권별 특화된 교육(보험,투자,은행) 제공을 통한 실무능력 향상	국제금융분야에서의 예비 전문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재직자의 환위험 관리 능력 향상 지원	③ 수혜대상	금융 산업권(은행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중견 실무인력(근무연수 2년 이상)으로 재직자	대학(원) 재학생 및 취업준비생 중소기업의 외환관련 업무 담당자	④ 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원조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비 : 500백만원</li> <li>•교육기간 : 5개월</li> <li>•교육내용 : IB리더과정, 파생상품·자산운용과정, 퇴직연금과정 등 업권별 특화과정</li> <li>•지원조건 : 교육비의 35% 이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비 : 720백만원</li> <li>•교육기간 : 1개월내외(대학생), 24시간 이내(중소기업)</li> <li>•교육내용 : 외환, 국제금융, 환위험 관리 등 국제금융</li> <li>•지원조건 : 정부100%지원</li> </ul>	⑤ 사업방식	•민간위탁	•민간위탁	3.0
판단기준	실무금융전문인력 (금융위)	국제금융인력양성 (기재부)																				
① 시행주체	금융위	기재부																				
② 사업목적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중견실무자를 대상으로 업권별 특화된 교육(보험,투자,은행) 제공을 통한 실무능력 향상	국제금융분야에서의 예비 전문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재직자의 환위험 관리 능력 향상 지원																				
③ 수혜대상	금융 산업권(은행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중견 실무인력(근무연수 2년 이상)으로 재직자	대학(원) 재학생 및 취업준비생 중소기업의 외환관련 업무 담당자																				
④ 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원조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비 : 500백만원</li> <li>•교육기간 : 5개월</li> <li>•교육내용 : IB리더과정, 파생상품·자산운용과정, 퇴직연금과정 등 업권별 특화과정</li> <li>•지원조건 : 교육비의 35% 이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비 : 720백만원</li> <li>•교육기간 : 1개월내외(대학생), 24시간 이내(중소기업)</li> <li>•교육내용 : 외환, 국제금융, 환위험 관리 등 국제금융</li> <li>•지원조건 : 정부100%지원</li> </ul>																				
⑤ 사업방식	•민간위탁	•민간위탁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3	사업내용 및 추진 방식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예	<div>□ 답변 근거 종합</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한 금융인력은 정부가 직접 양성하는 것 보다 시장수요, 현장의 의견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민간전문 교육기관이 교육을 수행하고 정부는 이러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li> <li>● 특히 상대적으로 고임금 직종이라는 금융산업의 특성 상 정부는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국고를 보조(35%)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교육이 유도되도록 사업을 추진</li> </ul> <div>□ 답변 근거 및 자료</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부사업의 사업목적 달성과의 연계성</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세부사업</th> <th>사업목적 달성과의 연계성</th> </tr> </thead> <tbody> <tr> <td>세부사업 1</td> <td>금융 MBA 지원을 통한 우수 금융 인력의 배출</td> </tr> <tr> <td>세부사업 2</td> <td>실무인력 양성사업을 통한 금융업계 재직자의 역량강화</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방식 관련 검토사항</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검토사항</th> <th>검토결과 및 근거</th> </tr> </thead> <tbody> <tr> <td>① 재원분담 가능성/ 적절성</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MBA지원사업의 경우 대학은 대용투자, 학생 장학금 등으로 사업수행비의 상당부분을 분담하고 있으며 정부는 총 교육비의 일정부분만 지원</li> <li>●KAIST금융전문대학원의 경우 '09년 총 예산 76억 중 13%인 10억 지원</li> <li>○ 실무인력 양성사업의 경우에도 정부는 35%만 보조하고 65%는 교육대상이 부담함으로써 필요최소한 지원</li> </ul> </td> </tr> <tr> <td>② 사업방식/ 조건</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질의 금융인력 양성 교육은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생성되기 어려운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어 국가의 재정지원이 타당</li> <li>● MBA: 교육비 전체 중 일부를 정액지원</li> <li>●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 : 국고 35%지원</li> </ul> </td> </tr> <tr> <td>③ 사업추진 주체</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교육은 민간 교육전문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유일한 방법이므로 현재와 같이 금융전문대학원(MBA), 금융협회 연수원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li> </ul> </td> </tr> <tr> <td>④ 수요예측의 적절성</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BA: 금융MBA 설립이 안정화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므로 최초 지원('06년 38억)에 비해 절감된 수준인 10억을 지원하였음</li> <li>○ 실무금융인력 양성 : '09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사업 추진</li> </ul> </td> </tr> </tbody> </table> <div> <p>* 세부사업인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 사업 추진 필요성 검토(예결위 '09 예산 검토) 지적이 있었으나, 지원대상 축소, 국고 지원비율 축소 등 사업 방식을 변경</p> </div>	세부사업	사업목적 달성과의 연계성	세부사업 1	금융 MBA 지원을 통한 우수 금융 인력의 배출	세부사업 2	실무인력 양성사업을 통한 금융업계 재직자의 역량강화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재원분담 가능성/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MBA지원사업의 경우 대학은 대용투자, 학생 장학금 등으로 사업수행비의 상당부분을 분담하고 있으며 정부는 총 교육비의 일정부분만 지원</li> <li>●KAIST금융전문대학원의 경우 '09년 총 예산 76억 중 13%인 10억 지원</li> <li>○ 실무인력 양성사업의 경우에도 정부는 35%만 보조하고 65%는 교육대상이 부담함으로써 필요최소한 지원</li> </ul>	② 사업방식/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질의 금융인력 양성 교육은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생성되기 어려운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어 국가의 재정지원이 타당</li> <li>● MBA: 교육비 전체 중 일부를 정액지원</li> <li>●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 : 국고 35%지원</li> </ul>	③ 사업추진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교육은 민간 교육전문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유일한 방법이므로 현재와 같이 금융전문대학원(MBA), 금융협회 연수원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li> </ul>	④ 수요예측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BA: 금융MBA 설립이 안정화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므로 최초 지원('06년 38억)에 비해 절감된 수준인 10억을 지원하였음</li> <li>○ 실무금융인력 양성 : '09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사업 추진</li> </ul>	3.0
세부사업	사업목적 달성과의 연계성																			
세부사업 1	금융 MBA 지원을 통한 우수 금융 인력의 배출																			
세부사업 2	실무인력 양성사업을 통한 금융업계 재직자의 역량강화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재원분담 가능성/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MBA지원사업의 경우 대학은 대용투자, 학생 장학금 등으로 사업수행비의 상당부분을 분담하고 있으며 정부는 총 교육비의 일정부분만 지원</li> <li>●KAIST금융전문대학원의 경우 '09년 총 예산 76억 중 13%인 10억 지원</li> <li>○ 실무인력 양성사업의 경우에도 정부는 35%만 보조하고 65%는 교육대상이 부담함으로써 필요최소한 지원</li> </ul>																			
② 사업방식/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질의 금융인력 양성 교육은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생성되기 어려운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어 국가의 재정지원이 타당</li> <li>● MBA: 교육비 전체 중 일부를 정액지원</li> <li>●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 : 국고 35%지원</li> </ul>																			
③ 사업추진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교육은 민간 교육전문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유일한 방법이므로 현재와 같이 금융전문대학원(MBA), 금융협회 연수원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li> </ul>																			
④ 수요예측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BA: 금융MBA 설립이 안정화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므로 최초 지원('06년 38억)에 비해 절감된 수준인 10억을 지원하였음</li> <li>○ 실무금융인력 양성 : '09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사업 추진</li> </ul>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 민간 보조	보조지속 여부를 재검토하고, 수혜대상 선정 및 매칭 여건을 적절하게 고려하였는가?	예	<p>□ 답변종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취지, 목적을 감안할 경우 민간교육기관이 직접 금융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수행하고, 정부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됨</li> <li>○ 특히 금융중심지 법(§10 ③) 및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양성계획(부처공동, '08.9)」 등 시책에 따라 우수한 금융인력을 양성할 명확한 목표와 책임을 갖고 있음</li> <li>○ 금융위는 사업의 효과를 꾸준히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09년부터 추진된 실무인력양성의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액을 차등화 하는 등 수혜대상 선정 및 매칭요건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li> </ul> <p>□ 답변근거 및 자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당초 목적 달성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9년 실무금융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중견실무자 129명에 대한 교육 추진으로 인력의 수준 업그레이드함으로써 “금융산업 수준 제고 및 금융교육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li> </ul> </li> <li>② 명확한 국고지원의 근거가 있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중심지법 §10 ③ 금융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li> <li>▪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양성계획(부처공동, '08.9)」에 따라 '13년까지 실무인력양성 사업을 통해 1,300명의 우수한 금융인력 양성</li> </ul> </li> <li>③ 지원 효과가 명확한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지원에 따라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금융인력이 배출된다는 점에서 사업의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남</li> <li>▪ 더불어 실무인력 양성 위탁 금융기관 상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가 81%에 이르는 점(5점 만점에 4.05점)은 교육의 효과가 분명함을 나타내주는 척도라 할 수 있음</li> </ul> </li> <li>④ 민간 자체 추진이 바람직한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인력 양성은 노후가 축적된 전문 교육기관이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li> </ul> </li> <li>⑤ 수혜대상 선정 및 매칭요건을 고려하였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무인력 양성 사업의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액을 차등화 하는 등 수혜대상 선정 및 매칭요건 고려를 위하여 노력</li> <li>* '09년에는 금융연수원, 금융투자 교육원은 각 215백만원(43%), 보험연수원은 70백만원(14%) 배정하였으나, '09년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10년에는 금융투자교육원 390백만원(39%), 금융연수원 27백만원(27%), 보험연수원 340백만원(34%)로 차등지원</li> </ul> </li> </ol>	3.0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출연·출자	대상기관의 경영상황 점검결과 적정규모의 지원인가?	예	<p>□ 답변 근거 종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사업 금융전문대학원 인력양성사업에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취지에 맞는 적정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음</li> <li>* 38('06) → 20('07) → 15('08) → 10('09)</li> </ul> <p>□ 답변 근거 및 자료</p> <p>① 출연·출자대상기관의 점검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AIST 비영리법인으로서 연간수지 균형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사업비는 적정하게 지원</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 금융전문대학원 경영상황 &gt; (백만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08 실수입액</th> <th colspan="2">'08 지출액</th> </tr> <tr> <th>내역</th> <th>금액</th> <th>내역</th> <th>합계</th> </tr> </thead> <tbody> <tr> <td>· 자체수입</td> <td>6,809</td> <td>· 운영경비</td> <td>7,654</td> </tr> <tr> <td>- 금융MBA 과정</td> <td>5,448</td> <td>- 인건비(교원유치포함)</td> <td>1,946</td> </tr> <tr> <td>- 금융전문가과정</td> <td>501</td> <td>- MBA과정 강사료</td> <td>340</td> </tr> <tr> <td>- 기타수입</td> <td>860</td> <td>- 장학보조비</td> <td>826</td> </tr> <tr> <td>· 정부 출연금</td> <td>1,500</td> <td>- 재무정보실 운영</td> <td>398</td> </tr> <tr> <td></td> <td></td> <td>- 교육연구 경비</td> <td>1,350</td> </tr> <tr> <td></td> <td></td> <td>- 경상운영 경비</td> <td>2,794</td> </tr> <tr> <td></td> <td></td> <td>· 시설·교육기자재</td> <td>225</td> </tr> <tr> <td></td> <td></td> <td>· 차기 이월금</td> <td>430</td> </tr> <tr> <td>계</td> <td>8,309</td> <td>계</td> <td>8,309</td> </tr> </tbody> </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09년 실수입액</th> <th colspan="2">'09년 지출액</th> </tr> <tr> <th>항목</th> <th>금액</th> <th>항목</th> <th>2009년</th> </tr> </thead> <tbody> <tr> <td>1. 자체수입</td> <td>6,209</td> <td>1. 인건비</td> <td>1,504</td> </tr> <tr> <td>· MBA납입금</td> <td>4,684</td> <td>2. 교육경비</td> <td>2,812</td> </tr> <tr> <td>· 비학위과정</td> <td>930</td> <td>· 금융MBA</td> <td>1,351</td> </tr> <tr> <td></td> <td></td> <td>· 비학위운영</td> <td>471</td> </tr> <tr> <td>2. 기타수입</td> <td>595</td> <td>· 교육공동</td> <td>990</td> </tr> <tr> <td></td> <td></td> <td>지원비</td> <td></td> </tr> <tr> <td>3. 이월금</td> <td>429</td> <td>3. 금융공학</td> <td>303</td> </tr> <tr> <td></td> <td></td> <td>연구센터</td> <td></td> </tr> <tr> <td>4. 정부출연금</td> <td>1,000</td> <td>4. 학사행정운영</td> <td>507</td> </tr> <tr> <td></td> <td></td> <td>5. 전입비</td> <td>2,458</td> </tr> <tr> <td></td> <td></td> <td>6. 시설자산비</td> <td>55</td> </tr> <tr> <td>계</td> <td>7,639</td> <td>계</td> <td>7,639</td> </tr> </tbody> </table> <p>② 출연·출자가 적정규모라고 판단하는 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위는 KAIST 금융전문대학원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설립·지원 하고 있음</li> <li>▪ 지원 초기에는 시설 및 기초 infra구축을 위해 38억의 예산을 투입하였다면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09년에는 자체수입으로 충당되지 않는 부족분 10억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적정수준으로 지원</li> </ul>	'08 실수입액		'08 지출액		내역	금액	내역	합계	· 자체수입	6,809	· 운영경비	7,654	- 금융MBA 과정	5,448	- 인건비(교원유치포함)	1,946	- 금융전문가과정	501	- MBA과정 강사료	340	- 기타수입	860	- 장학보조비	826	· 정부 출연금	1,500	- 재무정보실 운영	398			- 교육연구 경비	1,350			- 경상운영 경비	2,794			· 시설·교육기자재	225			· 차기 이월금	430	계	8,309	계	8,309	'09년 실수입액		'09년 지출액		항목	금액	항목	2009년	1. 자체수입	6,209	1. 인건비	1,504	· MBA납입금	4,684	2. 교육경비	2,812	· 비학위과정	930	· 금융MBA	1,351			· 비학위운영	471	2. 기타수입	595	· 교육공동	990			지원비		3. 이월금	429	3. 금융공학	303			연구센터		4. 정부출연금	1,000	4. 학사행정운영	507			5. 전입비	2,458			6. 시설자산비	55	계	7,639	계	7,639	3.0
'08 실수입액		'08 지출액																																																																																																										
내역	금액	내역	합계																																																																																																									
· 자체수입	6,809	· 운영경비	7,654																																																																																																									
- 금융MBA 과정	5,448	- 인건비(교원유치포함)	1,946																																																																																																									
- 금융전문가과정	501	- MBA과정 강사료	340																																																																																																									
- 기타수입	860	- 장학보조비	826																																																																																																									
· 정부 출연금	1,500	- 재무정보실 운영	398																																																																																																									
		- 교육연구 경비	1,350																																																																																																									
		- 경상운영 경비	2,794																																																																																																									
		· 시설·교육기자재	225																																																																																																									
		· 차기 이월금	430																																																																																																									
계	8,309	계	8,309																																																																																																									
'09년 실수입액		'09년 지출액																																																																																																										
항목	금액	항목	2009년																																																																																																									
1. 자체수입	6,209	1. 인건비	1,504																																																																																																									
· MBA납입금	4,684	2. 교육경비	2,812																																																																																																									
· 비학위과정	930	· 금융MBA	1,351																																																																																																									
		· 비학위운영	471																																																																																																									
2. 기타수입	595	· 교육공동	990																																																																																																									
		지원비																																																																																																										
3. 이월금	429	3. 금융공학	303																																																																																																									
		연구센터																																																																																																										
4. 정부출연금	1,000	4. 학사행정운영	507																																																																																																									
		5. 전입비	2,458																																																																																																									
		6. 시설자산비	55																																																																																																									
계	7,639	계	7,639																																																																																																									

## 2. 성과계획 단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예	<p>□ 답변 근거 종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북아 금융중심지 조성에 필요한 우수한 금융전문인력 양성은 신규인력배출, 기존 인력의 질적수준 제고 등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음</li> <li>▪ 따라서 신규인력 배출 척도로써 ①MBA 졸업생 수 (취업성취도), ②실무인력 양성 수강생 수가 지표로 제시되거나 질적수준 제고의 척도로써 ③MBA입학생 지원율(경쟁률)이 채택된 것은 사업목적과 긴밀히 연계된 성과 지표로 구성된 것이라 할 수 있음</li> <li>* 단, MBA 신입생 경쟁률은 본 사업목적인 금융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부적절하며, 본 사업 지원효과보다는 외부효과에 의해 성과가 결정될 수 있는 지표이므로 사용 지양 필요</li> <li>* 실무금융전문인력, 금융MBA 지원을 통한 금융인력 양성의 성과로 금융인력 부족에 대한 충족 정도를 보일 수 있는 지표 또는 교육에 따른 금융인력 수준의 향상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설정 필요</li> </ul> <p>□ 답변 근거 및 자료</p> <p>① 사업목적과 성과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적 : 금융산업의 핵심요소인 금융전문인력 양성</li> <li>○ 성과지표 : MBA 입학생 지원율, MBA 졸업생 취업성취도,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 교육인원</li> </ul> <p>▪ 성과지표① : MBA 입학생 지원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재정지원대상인 KAIST 금융전문대학원 정원(100명) 대비 신입생 지원자 비율</li> <li>* 측정산식 : 당해연도 MBA 지원자 수/MBA 입학정원</li> <li>* 측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대상기간 : 09.1.1~09.12.30</li> <li>- 측정수행기관 : KAIST 금융전문대학원</li> <li>- 측정대상 표본 수 및 선정방법 : 대학내부자료 활용</li> </ul> </li> </ul> <p>▪ 성과지표② : MBA 졸업생 취업성취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지원대상 MBA(KAIST 금융전문대학원)를 통해 양성하고자 하는 목표인원 대비 실제 해당연도 졸업생 수</li> <li>* 측정산식 : 해당연도 MBA졸업생 중 취업인원</li> <li>* 측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대상기간 : 09.1.1~09.12.30</li> <li>- 측정수행기관 : KAIST 금융전문대학원</li> </ul> </li> </ul>	7.5

- 측정대상 표본 수 및 선정방법 : 전수

▪ 성과지표③ :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 교육인원

\* 개념: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당해연도에 교육받은 인원

\* 측정산식 : 해당년도 실무인력양성 교육인원

\* 측정방법 : 전수

- 측정대상기간 : 09.1.1~09.12.30

- 측정수행기관 : 금융협회연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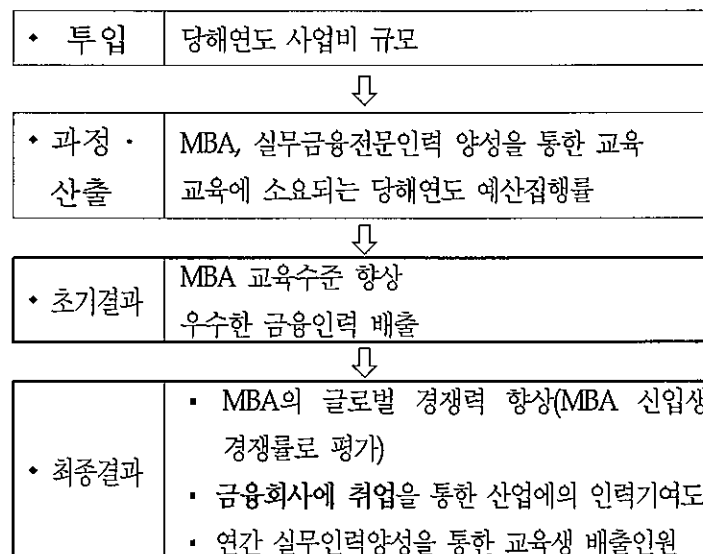
- 측정대상 표본 수 및 선정방법 : 전수

② 사업목적과 성과지표가 인과관계를 가지는지 여부

- 정부지원을 통해 1) 우수한 금융전문인력을 2) 어느정도 양성해내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금융 MBA가 우수한 기관이며, 매년 정량적으로 금융인력이 얼마나 배출되고 있는지가 평가되어야 함

③ 결과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는지 여부

- 성과지표가 투입(예산지원액)이나 단순 결과(졸업생) 지표가 아닌 사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MBA의 경쟁력, 금융회사에서 요구하는 취업 배출, 실무인력 교육생 인원)로 설정됨으로써 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로 구성됨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의욕적인가?	아 니 요	<div> <div> <div>□ 답변 근거 종합</div> <div>○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사업방식 개선 등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을 반영하여 설정하였으나, 성과계획서 상 목표치 사전 설정되지 않음</div> <div> <div>&lt;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 현황 &gt;</div> <table> <tr> <th>구 분</th> <th>'06</th> <th>'07</th> <th>'08</th> <th>'09</th> <th>'10</th> <th>'11</th> </tr> <tr> <td colspan="7">○MBA 입학생 지원을</td> </tr> <tr> <td>▪ 계획</td> <td></td> <td></td> <td></td> <td>3:1</td> <td>3:1</td> <td></td> </tr> <tr> <td>▪ 달성</td> <td></td> <td></td> <td></td> <td>3.1:1</td> <td></td> <td></td> </tr> <tr> <td colspan="7">○졸업생 취업성취도</td> </tr> <tr> <td>▪ 계획</td> <td></td> <td></td> <td>신규</td> <td>개선 (84)</td> <td>90</td> <td></td> </tr> <tr> <td>▪ 달성</td> <td></td> <td></td> <td>79</td> <td>89</td> <td></td> <td></td> </tr> <tr> <td colspan="7">○ 실무금융전문인력양성</td> </tr> <tr> <td>▪ 계획</td> <td></td> <td></td> <td></td> <td>신규</td> <td>100</td> <td></td> </tr> <tr> <td>▪ 달성</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div> </div> </div> <div> <div>□ 답변 근거 및 자료</div> <div>① 목표치 사전 설정 여부</div> <div>○ MBA지원사업의 경우 '09 성과계획서 제출 시 목표(입학생 지원율, 졸업생 취업 성취도)를 사전에 설정</div> <div>- 졸업생 취업자 수의 경우 성과계획서 상에 '09년 목표치를 '개선'으로 제시하여 목표치 사전 설정 여부 인정 곤란</div> <div>○ 다만,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경우 '09년 신규사업으로 성과목표치가 계량적으로 제시되고 있지는 못하나 '09년 신규사업으로써 산출된 목표치를 기준을 '10년 부서의 목표치 산출을 위한 기준이 되고 있음</div> <div>- 실무금융전문인력양성 지표는 성과계획서 상에 누락되어 목표치 사전 설정 여부 인정 곤란</div> <div>②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 반영 여부</div> <div>○ 예산지원 MBA의 교육정원 등 고정적, 단순수치로 목표치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지원 MBA에 대한 수요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학생 지원율'로 목표치를 선정</div> <div>○ 더불어 금융권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인 '졸업인원'은 매년 개선된 내용을 목표치로 설정함으로써 사업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전향적인 목표치로 성과목표 설정</div> </div>	구 분	'06	'07	'08	'09	'10	'11	○MBA 입학생 지원을							▪ 계획				3:1	3:1		▪ 달성				3.1:1			○졸업생 취업성취도							▪ 계획			신규	개선 (84)	90		▪ 달성			79	89			○ 실무금융전문인력양성							▪ 계획				신규	100		▪ 달성							0
구 분	'06	'07	'08	'09	'10	'11																																																																				
○MBA 입학생 지원을																																																																										
▪ 계획				3:1	3:1																																																																					
▪ 달성				3.1:1																																																																						
○졸업생 취업성취도																																																																										
▪ 계획			신규	개선 (84)	90																																																																					
▪ 달성			79	89																																																																						
○ 실무금융전문인력양성																																																																										
▪ 계획				신규	100																																																																					
▪ 달성																																																																										

### 3. 사업관리 단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1	재원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아 니 요	<p><input type="checkbox"/> 답변 근거 종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BA지원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분기별 지원예산이 정상교부·집행되었으나,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은 '09년 예산 5억원 중 4억원을 집행하여 집행실적이 다소 미흡함</li> </ul> <p><input type="checkbox"/> 답변 근거 및 자료</p> <p>① 당초 집행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9년도 당초 계획의 상당부분 집행 완료  <div style="text-align: right;">(백만원)</div> <table border="1"> <tr> <th>구 분</th><th>예산(A)</th><th>결산(B)</th><th>집행률(B/A)</th></tr> <tr> <td>'09</td><td>1,500</td><td>1,402</td><td>94</td></tr> </table> <div style="text-align: right;">(백만원)</div>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 '09년 분기별 국고보조금 교부현황 &gt;</p> <div style="text-align: right;">(백만원)</div> <table border="1"> <tr> <th>구 분</th><th>계('09년)</th><th>1/4분기</th><th>2/4분기</th><th>3/4분기</th><th>4/4분기</th></tr> <tr> <td>계획</td><td>1,500</td><td>250</td><td>250</td><td>250</td><td>750</td></tr> <tr> <td>교부</td><td>1,402</td><td>250</td><td>250</td><td>250</td><td>652</td></tr> <tr> <td>잔액</td><td>98</td><td>0</td><td>0</td><td>0</td><td>98</td></tr> </table> <p>※ 100% 미집행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경우 '09년 회계년도 중간부터 시작된 신규 사업임에 따라 교육생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 예산 일부 불용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러나 집행율은 94%에 이르는 등 당초 계획의 상당부분을 착실히 달성</li> </ul> </li> </ul> <p>②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는지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BA지원사업은 해당금융전문대학원에 지원금액이 분기별로 전액 교부('09년 예산 10억)됨으로써 원활하게 사업수행</li> <li>○ 실무인력양성사업의 경우 교육종료시점에 교육기관의 요구 사업비가 전액 집행됨으로써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li> </ul> <p>③ 간접집행사업의 경우 2차집행(실집행)실적 부진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사항 없음</li> </ul>	구 분	예산(A)	결산(B)	집행률(B/A)	'09	1,500	1,402	94	구 분	계('09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1,500	250	250	250	750	교부	1,402	250	250	250	652	잔액	98	0	0	0	98	0
구 분	예산(A)	결산(B)	집행률(B/A)																																	
'09	1,500	1,402	94																																	
구 분	계('09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1,500	250	250	250	750																															
교부	1,402	250	250	250	652																															
잔액	98	0	0	0	98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2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가?	예	<p><b>□ 답변 근거 종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BA 지원과 관련하여 매년 2회(3월, 12월) 금융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당해연도 예산편성안, 교육운영실적 등을 모니터링 하고 있음</li> <li>○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경우 금융위 자체적으로 교육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충실도, 교육효과에 대해 모니터링을 추진</li> </ul> <p><b>□ 답변 근거 및 자료</b></p> <p>① 모니터링명 : KAIST 금융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p> <table border="1"> <tr> <th>구 분</th><th>주요내용</th></tr> <tr> <td>주기</td><td>연 2회</td></tr> <tr> <td>실시시기</td><td>'09. 3월, 12월</td></tr> <tr> <td>주체</td><td>금융전문대학원 운영위원 9인(금융위: 추경호, 금정국장)</td></tr> <tr> <td>점검내용·방법</td><td>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09년 예산 편성안, 결산 내용 심의, 교수 충원현황 등 운영실적에 대하여 점검을 추진함</td></tr> <tr> <td>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td><td>MBA의 교수충원 실적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지적</td></tr> <tr> <td>해결실적</td><td>금융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10년까지 교수 대 학생의 충원비율이 1:10이 되도록 교수충원 내용을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 하기로 하였음</td></tr> </table> <p>② 모니터링명 :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 만족도조사</p> <table border="1"> <tr> <th>구 분</th><th>주요내용</th></tr> <tr> <td>주기</td><td>연 1회</td></tr> <tr> <td>실시시기</td><td>'09. 12월~'10.1월</td></tr> <tr> <td>주체</td><td>코리아 데이터 네트워크센터(민간위탁으로 수행)</td></tr> <tr> <td>점검내용·방법</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 커리큘럼, 강사의 질적 수준, 전반적인 강의내용에 대하여 만족도조사를 실시</li> <li>특히 수강생 뿐만 아니라 수강생의 상급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병행함으로써 교육의 효과에 대하여 전방위적으로 평가</li> <li>수강생을 대상으로 대면설문조사, 상급자를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li> </ul> </td></tr> <tr> <td>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td><td>실무인력양성 교육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약80%)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교육과정, 강사의 자질문제 등 교육기간에서 미흡한 점도 지적됨</td></tr> <tr> <td>해결실적</td><td>차기 사업연도 계획 수립 시 만족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강의내용 구성, 강사섭외, 교육시간 조정 등을 추진</td></tr> </table> <p>※ 참고2)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 만족도 조사 용역계획</p>	구 분	주요내용	주기	연 2회	실시시기	'09. 3월, 12월	주체	금융전문대학원 운영위원 9인(금융위: 추경호, 금정국장)	점검내용·방법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09년 예산 편성안, 결산 내용 심의, 교수 충원현황 등 운영실적에 대하여 점검을 추진함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MBA의 교수충원 실적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지적	해결실적	금융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10년까지 교수 대 학생의 충원비율이 1:10이 되도록 교수충원 내용을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 하기로 하였음	구 분	주요내용	주기	연 1회	실시시기	'09. 12월~'10.1월	주체	코리아 데이터 네트워크센터(민간위탁으로 수행)	점검내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 커리큘럼, 강사의 질적 수준, 전반적인 강의내용에 대하여 만족도조사를 실시</li> <li>특히 수강생 뿐만 아니라 수강생의 상급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병행함으로써 교육의 효과에 대하여 전방위적으로 평가</li> <li>수강생을 대상으로 대면설문조사, 상급자를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li> </ul>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실무인력양성 교육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약80%)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교육과정, 강사의 자질문제 등 교육기간에서 미흡한 점도 지적됨	해결실적	차기 사업연도 계획 수립 시 만족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강의내용 구성, 강사섭외, 교육시간 조정 등을 추진	8.0
구 분	주요내용																															
주기	연 2회																															
실시시기	'09. 3월, 12월																															
주체	금융전문대학원 운영위원 9인(금융위: 추경호, 금정국장)																															
점검내용·방법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09년 예산 편성안, 결산 내용 심의, 교수 충원현황 등 운영실적에 대하여 점검을 추진함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MBA의 교수충원 실적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지적																															
해결실적	금융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10년까지 교수 대 학생의 충원비율이 1:10이 되도록 교수충원 내용을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 하기로 하였음																															
구 분	주요내용																															
주기	연 1회																															
실시시기	'09. 12월~'10.1월																															
주체	코리아 데이터 네트워크센터(민간위탁으로 수행)																															
점검내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 커리큘럼, 강사의 질적 수준, 전반적인 강의내용에 대하여 만족도조사를 실시</li> <li>특히 수강생 뿐만 아니라 수강생의 상급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병행함으로써 교육의 효과에 대하여 전방위적으로 평가</li> <li>수강생을 대상으로 대면설문조사, 상급자를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li> </ul>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실무인력양성 교육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약80%)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교육과정, 강사의 자질문제 등 교육기간에서 미흡한 점도 지적됨																															
해결실적	차기 사업연도 계획 수립 시 만족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강의내용 구성, 강사섭외, 교육시간 조정 등을 추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3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 평가를 실시하였는가?	예	<p>□ 답변 근거 종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무금융인력 양성 사업의 경우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추후 평가를 통한 사업의 개선, 보완에 사용하도록 사업 구상</li> <li>○ '09년 사업 종료 시 사업의 특성에 적합한 분석기법(정량, 정성평가)을 활용하여 평가를 추진하였으며,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성과를 측정·분석하여 평가의 신뢰도, 타당도를 높였음</li> <li>※ 평가결과는 '10년 예산배정, 교육기관 개선 등에 활용</li> <li>* 실무금융전문인력양성사업은 '09년 신규 사업으로 사업평가 적용 불가하며, 금융MBA 사업실적평가는 해당 사업 운영 및의 적절성 및 효과성 검토에 대한 사업평가로 인정</li> <li>* 향후 본 교육사업이 금융전문인력 양성에 미치는 효과성을 심층적으로 평가할 필요</li> </ul> <p>□ 답변 근거 및 자료</p> <p>1.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p> <p>&lt; 사업평가 개요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명 : '09년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 평가</li> <li>○ 평가기간 : 2009년 12월~2010년 1월까지(2개월)</li> <li>○ 평가요소 : 교육계획의 적합성, 목표달성 여부, 정책적 고려항목 달성 정도(여성교육인원 확보 등), 교육생 및 상급자의 만족도</li> <li>○ 평가기법 : 만족도조사, 정량·정성평가 등을 병행</li> </ul> <p>&lt; 성과데이터 분석방법 &gt;</p> <table border="1"> <tr> <th>구분</th><th>추진내용</th><th>주요결과물</th></tr> <tr> <td>자료분석</td><td>- 성과목표 달성결과 분석</td><td>- 목표인원달성을 예산집행율, 여성교육인원 실적, 외국인 강사 활용 등 수치결과 확보</td></tr> <tr> <td>설문조사</td><td>- 각 사업별 수강생, 상급자 만족도조사 실시</td><td>- 교육과정, 강사 등에 대한 만족도 결과 자료</td></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결과 : 교육기관별로 평가점수(순위)가 도출됨</li> <li>- 효과성</li> </ul> <table border="1"> <tr> <th>성과 구분</th><th>주요 지표</th><th>주요 결과</th><th>비고</th></tr> <tr> <td>교육계획의 적정성</td><td>○ 교육의 합목적성</td><td>○ 금융투자교육원 : 8.8 ○ 보험연수원: 8.2 ○ 금융연수원: 7</td><td>총점: 10</td></tr> <tr> <td>사업집행의 성실성</td><td>○ 목표달성(인원, 예산) ○ 교육프로그램의 적절성(프로그램, 강사, 전담조직, 시설, 성취도평가)</td><td>○ 금융투자교육원: 49.6 ○ 보험연수원: 48.6 ○ 금융연수원: 29.6</td><td>총점: 55</td></tr> <tr> <td>교육의 성과</td><td>○ 정책적 고려항목 달성의 적정성(외국인 강사, 여성교육생 유치, 취업준비생 교육, 외부인원 유치) ○ 만족도(수강생, 상급자)</td><td>○ 금융투자교육원: 32.93 ○ 보험연수원: 29.05 ○ 금융연수원: 24.27</td><td>총점: 35</td></tr> </table> <p>&lt; 사업평가 주체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기관 : 금융전문인력 분과위원회</li> <li>* 금융전문인력 분과위원회는 금융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금융</li> </ul>	구분	추진내용	주요결과물	자료분석	- 성과목표 달성결과 분석	- 목표인원달성을 예산집행율, 여성교육인원 실적, 외국인 강사 활용 등 수치결과 확보	설문조사	- 각 사업별 수강생, 상급자 만족도조사 실시	- 교육과정, 강사 등에 대한 만족도 결과 자료	성과 구분	주요 지표	주요 결과	비고	교육계획의 적정성	○ 교육의 합목적성	○ 금융투자교육원 : 8.8 ○ 보험연수원: 8.2 ○ 금융연수원: 7	총점: 10	사업집행의 성실성	○ 목표달성(인원, 예산) ○ 교육프로그램의 적절성(프로그램, 강사, 전담조직, 시설, 성취도평가)	○ 금융투자교육원: 49.6 ○ 보험연수원: 48.6 ○ 금융연수원: 29.6	총점: 55	교육의 성과	○ 정책적 고려항목 달성의 적정성(외국인 강사, 여성교육생 유치, 취업준비생 교육, 외부인원 유치) ○ 만족도(수강생, 상급자)	○ 금융투자교육원: 32.93 ○ 보험연수원: 29.05 ○ 금융연수원: 24.27	총점: 35	4.0
구분	추진내용	주요결과물																											
자료분석	- 성과목표 달성결과 분석	- 목표인원달성을 예산집행율, 여성교육인원 실적, 외국인 강사 활용 등 수치결과 확보																											
설문조사	- 각 사업별 수강생, 상급자 만족도조사 실시	- 교육과정, 강사 등에 대한 만족도 결과 자료																											
성과 구분	주요 지표	주요 결과	비고																										
교육계획의 적정성	○ 교육의 합목적성	○ 금융투자교육원 : 8.8 ○ 보험연수원: 8.2 ○ 금융연수원: 7	총점: 10																										
사업집행의 성실성	○ 목표달성(인원, 예산) ○ 교육프로그램의 적절성(프로그램, 강사, 전담조직, 시설, 성취도평가)	○ 금융투자교육원: 49.6 ○ 보험연수원: 48.6 ○ 금융연수원: 29.6	총점: 55																										
교육의 성과	○ 정책적 고려항목 달성의 적정성(외국인 강사, 여성교육생 유치, 취업준비생 교육, 외부인원 유치) ○ 만족도(수강생, 상급자)	○ 금융투자교육원: 32.93 ○ 보험연수원: 29.05 ○ 금융연수원: 24.27	총점: 35																										

중심지 추진위원회 산하에 구성

- 평가자 : 분과위원회 위원5명(전성빈 분과위원장 포함)

#### < 평가대상 사업범위 >

- 세부사업을 모두 포괄한 사업의 전체에 대한 성과를 측정·분석
- ※ 참고3)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 평가계획

#### 2 KAIST 금융전문대학원 지원사업

##### < 사업평가 개요 >

- 평가명 : KAIST 금융전문대학원에 대한 성과평가
- 평가기간 : 2009년 12월~2010년 1월까지(2개월)
- 평가요소 : KAIST 금융전문대학원의 장기발전계획에 포함된 7개 주요 area(비전 및 전략, 교수채용, 학생선발, 교과과정, 산학협력, 조직구조, 교수캠퍼스, 예산·발전기금)에 대하여 분석
- 평가기법 : 금융전문대학원의 성과 수준을 정량적·정성적으로 측정  
< 성과데이터 분석방법 >

구분	추진내용	주요결과물
중점과제별 정량평가	FT Ranking 평가자료 참고 중점과제 및 MOU 세부내용 참고	전임교원수, 우수학생 유치 수 등
이수사항별 정성평가	내·외부 인터뷰 결과 종합 Deloitte EIAM을 통한 정성적 수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AIST 금융전문대학원이 보유한 국내 금융산업내 명성</li> <li>국제화 및 다양한문화의 가시적 성과, 채용 전략 강화 부문에서 성과</li> </ul>
유사사례와 비교 및 개선점 도출	Global Network를 통한 Best Practice 수준 내·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학네트워크 축적여부</li> <li>교과목 다양성 등</li> </ul>

- 평가결과 : KAIST 금융전문대학원은 정부지원을 통하여 국내 우수 금융인력 양성기관으로 확실히 자리매김 함  
- 효과성

성과 구분	주요 지표	주요 결과	비고
교수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수진의 국제화·다양화</li> <li>우수역량 교원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 전임교수 비율 격차, 여성 전임교수 비율 격차 등이 감소되는 등 개선됨</li> <li>실무강의교원 비중이 증가('06년 4% → '09년 20%)되는 등 교원확보 역량 증가</li> </ul>	
우수학생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자격 학생 수·비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수의 경우 '06년 46명 → '09년 99명으로 증가</li> <li>학생 비율 역시 평균 28% → 56%로 2배증가</li> </ul>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과목 다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6년 대비 '09년 MBA에서 제공되는 교과목수가 51 → 68로 33% 이상 증가</li> </ul>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학협력 확대</li> <li>대학간 국제교류 확대</li> <li>동문네트워크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학협력을 통해 총 22개 회원사와 협력추진</li> <li>'06년 총 3개 미국대학과 dual degree운영</li> <li>특정 분야에서의 강한 졸업생 네트워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반적인 동문 네트워크는 확대 필요하다고 평가됨</li> </ul>
리서치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수 1인당 SCI급 논문게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수1인당 SCI급 논문게재수는 1편(연간)으로 Top Biz School보다 높다고 평가됨</li> </ul>	
관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무건전성 유지</li> <li>발전기금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출연금 감소에 따른 지속적 수입다변화 방안 모색필요</li> <li>기업체 발전기금은 '09년 4.7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동문 발전기금은 여전히 미약</li> </ul>	
캠퍼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첨단재무정보실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형강의실 부족 등이 지적됨</li> </ul>	

		인프라	· 학생 연구시설 효율성 증대		
		<p>&lt; 사업평가 주체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기관 : 안진·Deloitte 회계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년간의 정부지원에 따른 객관적인 평가를 추진하고자 '금융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요청으로 KAIST 금융전문대학원이 외부기관에 의뢰</li> </ul> </li> <li>○ 평 가 자 : 회계법인의 전문 컨설턴트</li> </ul>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민간 보조	민간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은 충실 한가?	예	<p>□ 답변 근거 종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적으로는 예산 편성 시부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였으며, 사후적으로는 사업 종료 후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음</li> </ul> <p>□ 답변 근거 및 자료</p> <p>① 민간사업자의 사업수행실태 관리·감독 실시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감독 방식 : 사전적으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예산 편성의 합리성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사후적으로는 평가 및 정산작업을 실시함으로써 관리감독을 추진</li> <li>○ 관리·감독 주기 : 연1회</li> <li>* 매년 그 해 사업 계획단계에 대해 금융전문인력 분과위원회,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심의를 추진함으로써 관리·감독을 실시</li> <li>* 사업 종료 단계에서 평가 및 정산 추진</li> <li>○ 관리·감독 사항 : 교육계획의 적합성, 예산 집행의 타당성</li> <li>* 금융전문인력 분과위원회('09.5),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09.5), 금융위원회('09.6) 개최를 통해 사전적으로 교육계획의 합리성·타당성에 대하여 심의</li> <li>* '09년 예산 집행에 대한 정산 실시로 예산사용의 타당성 검증</li> <li>○ 관리·감독 결과</li> <li>*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감독 결과는 '10년 예산에 반영</li> <li>*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은 전액 환수조치</li> </ul>	4.0

#### 4. 사업성과 및 환류 단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어느 정도	<p>□ 답변 근거 종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사업은 당초 계획한 성과를 모두 달성하였으며, 양적측면 뿐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우수한 효과를 거두었음을 입증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BA 입학생 지원율 : 목표3:1, 달성 3.1:1(103%)</li> <li>▪ MBA 졸업생 성취도 : 목표 84, 달성 89 (106%)</li> <li>▪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 : 달성 129명</li> </ul> </li> <li>○ 그러나 2-2가 '아니요'이므로 지침상 '어느 정도'에 해당</li> </ul> <p>□ 답변 근거 및 자료</p> <p>① 성과지표의 목표치(2-2) 달성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BA 입학생 지원율(목표 3:1 → 달성 3.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9년 정원100명 대비 지원자 수 310명으로 103%달성</li> </ul> </li> <li>○ MBA 졸업생 취업성취도(목표 84 → 달성 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9년 MBA졸업생 가운데 취업자 수는 89명으로 목표인원 84대비 약 106% 달성율을 보임</li> </ul> </li> <li>○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9년 사업시작 첫 해로써 129명의 교육생을 배출함으로써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를 거둠</li> </ul> </li> </ul> <p>※ 참고4) KAIST 금융전문대학원 '09년 취업자 명단</p>	10.0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4-2	사업평가 결과,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	아 니 요	<p>□ 답변 근거 종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BA 졸업생의 경우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100% 취업 및 대부분 금융회사에 취업함으로써 우수인력 양성이라는 목표에 부합하여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평가됨</li> <li>○ 실무인력양성사업의 경우 수강생 뿐 아니라 위탁한 금융기관 직무 상급자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80%에 이른다는 점에서 교육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다고 할 수 있음</li> <li>○ 그러나, 금융인력 양성의 성과인 금융인력 부족에 대한 충족 정도나 금융인력 수준의 향상 정도에 대한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아 인정 곤란</li> </ul> <p>□ 답변 근거 및 자료</p> <p>&lt; 효과성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9년 상반기 MBA전체 경쟁률이 27대1이었으나(하반기 19대1), KAIST 금융MBA의 경우 31대1로 더 높은 경쟁률을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은 학생지원율은 정부지원을 받은 KAIST MBA가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증거</li> </ul> </li> <li>○ '09년 금융위기로 경제상황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생 전원이 취업한 것은 금융MBA가 시장에서 요구하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히 졸업생 89명은 100% 취업하였으며, 대부분 금융회사에 취업하여 우수한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교육의 효과가 분명함을 나타냄</li> </ul> </li> <li>○ '09년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학습자의 만족도는 평균4점(5점만점), 금융기관의 만족도는 평균 4.05(5점만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li> </ul> </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검토사항</th> <th>검토결과 및 근거</th> </tr> </thead> <tbody> <tr> <td>① 사용데이터 (출처, 기간 등)</td> <td>2009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 수강생 및 금융기관 상관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개별 항목, 전반적인 강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td> </tr> <tr> <td>② 분석결과</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 만족도(전체103명 응답) : 전체 4.0, 3.97(금융투자교육원), 3.99(보험연수원), 4.05(금융연수원)</li> <li>▪ 금융기관 만족도(전체104명 응답) : 전체 4.05, 3.96(금융투자교육원), 4.06(보험연수원), 4.22(금융연수원)</li> </ul> </td> </tr> <tr> <td>③ 순효과</td> <td>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비교적 단기, 이론 위주의 강의로 구성되던 금융인력 양성교육이 비교적 장기, 사례교육 강화로 구성되어 현장의 실무능력 제고 효과를 거둠</td> </tr> <tr> <td>④ 정책적 시사점</td> <td>앞으로도 실무위주의 강의, 선진사례 학습 등 교육수준을 제고하여 자본시장 통합 등으로 수요가 증가한 금융분야의 우수한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td> </tr> </tbody> </table>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사용데이터 (출처, 기간 등)	2009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 수강생 및 금융기관 상관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개별 항목, 전반적인 강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	② 분석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 만족도(전체103명 응답) : 전체 4.0, 3.97(금융투자교육원), 3.99(보험연수원), 4.05(금융연수원)</li> <li>▪ 금융기관 만족도(전체104명 응답) : 전체 4.05, 3.96(금융투자교육원), 4.06(보험연수원), 4.22(금융연수원)</li> </ul>	③ 순효과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비교적 단기, 이론 위주의 강의로 구성되던 금융인력 양성교육이 비교적 장기, 사례교육 강화로 구성되어 현장의 실무능력 제고 효과를 거둠	④ 정책적 시사점	앞으로도 실무위주의 강의, 선진사례 학습 등 교육수준을 제고하여 자본시장 통합 등으로 수요가 증가한 금융분야의 우수한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0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사용데이터 (출처, 기간 등)	2009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 수강생 및 금융기관 상관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개별 항목, 전반적인 강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													
② 분석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 만족도(전체103명 응답) : 전체 4.0, 3.97(금융투자교육원), 3.99(보험연수원), 4.05(금융연수원)</li> <li>▪ 금융기관 만족도(전체104명 응답) : 전체 4.05, 3.96(금융투자교육원), 4.06(보험연수원), 4.22(금융연수원)</li> </ul>													
③ 순효과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비교적 단기, 이론 위주의 강의로 구성되던 금융인력 양성교육이 비교적 장기, 사례교육 강화로 구성되어 현장의 실무능력 제고 효과를 거둠													
④ 정책적 시사점	앞으로도 실무위주의 강의, 선진사례 학습 등 교육수준을 제고하여 자본시장 통합 등으로 수요가 증가한 금융분야의 우수한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사용데이터 (출처, 기간 등)		2009 MBA '09년 하반기 신입생 모집 및 운영현황
② 분석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MBA 경쟁률 : 2.3대1</li> <li>* 상반기 : 정원435, 지원자수1,183, 경쟁률2.72대1</li> <li>* 하반기 : 정원362, 지원자수683, 경쟁률1.9대1</li> <li>▪ KAIST MBA 경쟁률 : 3.1:1</li> <li>* 정원 100, 지원자수 310</li> </ul>
③ 순효과		▪ 경쟁률이 높을수록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고급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
④ 정책적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BA에 대한 정부지원이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 제공, MBA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li> </ul>
<p>※ 참고5)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 만족도 조사(책자) 참고5-1) '09년 MBA 경쟁률(보도자료, 교과부)</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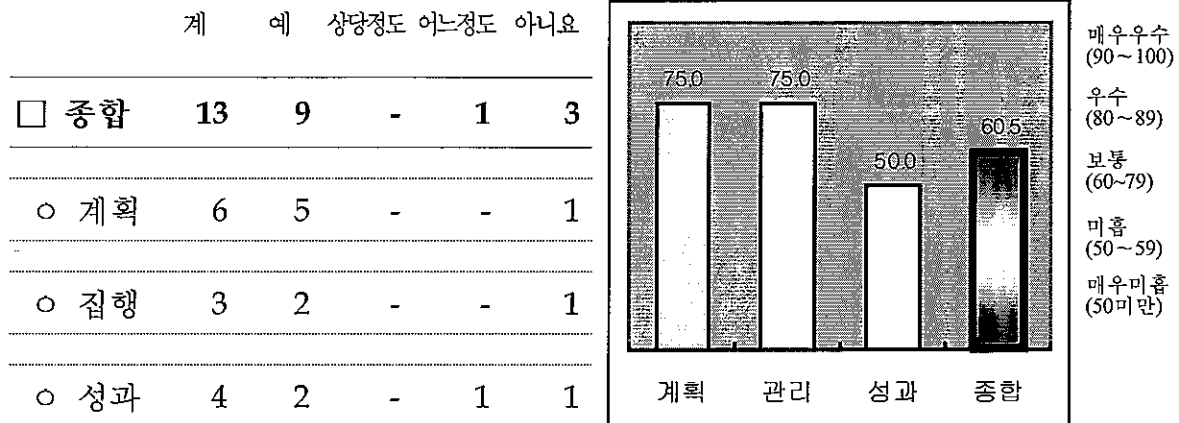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43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였는가?	아 니 요	<div>□ 답변 근거 종합</div> <div>○ 민간위탁을 통해 경험 많은 기관의 노하우를 습득함으로써 금융전문인력이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div> <div>- 더불어 금융회사가 65%를 부담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비용을 절감</div> <div>- 그러나 정부 지원 35%는 사업방식에 대한 내용으로, 특별한 노력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의한 예산절감 실적으로 보기 어려움</div> <div>□ 답변 근거 및 자료</div> <div>① 예산절감 내용</div> <div>○ 추진배경</div> <div>▪ 정부가 금융인력 양성 예산의 전부를 부담하기 보다 일부만 지원(35%)하고, 나머지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공동부담(65%)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인력양성 비용을 절감할 뿐 아니라, 민·관 협력모델 제시를 통한 교육의 효과도, 집중도를 제고</div> <div>○ 예산절감 규모</div> <div>(억원, %)</div> <table> <tr> <td>'09예산(A)</td> <td>절감액(B)</td> <td>절감율(B/A)</td> </tr> <tr> <td>5(실무금융전문인력)</td> <td>9.3(교육기관 부담)</td> <td>186%</td> </tr> </table> <div>○ 예산절감 내역</div> <div>▪ 타 정부인력양성 교육은 보통 정부가 80~100% 지원하나(별첨), 금융위의 인력양성사업은 정부가 최소한의 지원(35%)</div> <div>- 전체 교육비인 14.3억 중 정부는 35%인 5억원 예산을 지원 나머지는 금융기관이 부담함으로써 정부지원 100%로 추진할 때 보다 약 9.3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옴</div> <div>※ 참고6) 타부처 일자리 사업 현황</div>	'09예산(A)	절감액(B)	절감율(B/A)	5(실무금융전문인력)	9.3(교육기관 부담)	186%	0
'09예산(A)	절감액(B)	절감율(B/A)								
5(실무금융전문인력)	9.3(교육기관 부담)	186%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44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예	<div> <div> <div>□ 답변 근거 종합</div> <div> <div>○ '09년 교육에 대한 평가결과는 '10년 사업 시 교육인원 예산 배정 등에 반영</div> <div>○ 3-3평가를 교육기관(사업수행기관)에 통보하여 교육과정 설계 시부터 반영(feed back)되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교육 수준 개선추구</div> </div> </div> <div> <div>□ 답변 근거 및 자료</div> <div> <div>① 평가결과를 '10년 교육인원 예산배정에 반영</div> <table> <tr> <th>구 분</th> <th>주요내용</th> </tr> <tr> <td>제기자</td> <td>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 '10년 교육 예산배분은 '09년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추진('09.5, 제5차 추진위원회)</td> </tr> <tr> <td>개선내용</td> <td>○ '09년 교육에 대한 평가결과는 '10년 사업 시 교육인원, 예산 배정 등에 반영 * 1위 교육기관에 전체 예산의 약39%인 3.9억 배정, , 2위 기관에 32%인 3.4억, 3위 기관에 29%인 2.7억 배정</td> </tr> <tr> <td>추진일정</td> <td>'10.2월부터 추진</td> </tr> <tr> <td>확정절차</td> <td>▪ '09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10년 교육기관별 교육인원, 지원금액은 제7차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09.2) 심의로 확정</td> </tr> </table> <div>② '09년 평가, 만족도 조사결과를 교육계획 수립 시 반영</div> <table> <tr> <th>구 분</th> <th>주요내용</th> </tr> <tr> <td>제기자</td> <td>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 교육생(수강생), 평가단</td> </tr> <tr> <td>개선내용</td> <td>▪ '09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10년 교육커리큘럼 개선·보완 * 강의과정이 비교적 장기였다는 교육생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라 250시간이었던 강의시간을 10%이상 감축, 상당수의 강의는 200시간 미만이 되도록 조정  * 강사 수준의 향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던 바, 외국 우수 MBA와 협약을 체결하여 해외에서 선진금융교육을 수강하는 기회 등 다양한 교수법을 제시하도록 유도</td> </tr> <tr> <td>추진일정</td> <td>'10.2월부터 추진</td> </tr> <tr> <td>확정절차</td> <td>▪ 사업평가를 바탕으로 한 '10년 구체적인 커리큘럼, 인원배정 등 교육계획은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3.4) 3월에 개최될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심의로 확정될 예정</td> </tr> </table> </div> </div> </div>	구 분	주요내용	제기자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 '10년 교육 예산배분은 '09년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추진('09.5, 제5차 추진위원회)	개선내용	○ '09년 교육에 대한 평가결과는 '10년 사업 시 교육인원, 예산 배정 등에 반영 * 1위 교육기관에 전체 예산의 약39%인 3.9억 배정, , 2위 기관에 32%인 3.4억, 3위 기관에 29%인 2.7억 배정	추진일정	'10.2월부터 추진	확정절차	▪ '09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10년 교육기관별 교육인원, 지원금액은 제7차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09.2) 심의로 확정	구 분	주요내용	제기자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 교육생(수강생), 평가단	개선내용	▪ '09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10년 교육커리큘럼 개선·보완 * 강의과정이 비교적 장기였다는 교육생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라 250시간이었던 강의시간을 10%이상 감축, 상당수의 강의는 200시간 미만이 되도록 조정  * 강사 수준의 향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던 바, 외국 우수 MBA와 협약을 체결하여 해외에서 선진금융교육을 수강하는 기회 등 다양한 교수법을 제시하도록 유도	추진일정	'10.2월부터 추진	확정절차	▪ 사업평가를 바탕으로 한 '10년 구체적인 커리큘럼, 인원배정 등 교육계획은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3.4) 3월에 개최될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심의로 확정될 예정	10.0
구 분	주요내용																							
제기자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 '10년 교육 예산배분은 '09년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추진('09.5, 제5차 추진위원회)																							
개선내용	○ '09년 교육에 대한 평가결과는 '10년 사업 시 교육인원, 예산 배정 등에 반영 * 1위 교육기관에 전체 예산의 약39%인 3.9억 배정, , 2위 기관에 32%인 3.4억, 3위 기관에 29%인 2.7억 배정																							
추진일정	'10.2월부터 추진																							
확정절차	▪ '09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10년 교육기관별 교육인원, 지원금액은 제7차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09.2) 심의로 확정																							
구 분	주요내용																							
제기자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 교육생(수강생), 평가단																							
개선내용	▪ '09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10년 교육커리큘럼 개선·보완 * 강의과정이 비교적 장기였다는 교육생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라 250시간이었던 강의시간을 10%이상 감축, 상당수의 강의는 200시간 미만이 되도록 조정  * 강사 수준의 향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던 바, 외국 우수 MBA와 협약을 체결하여 해외에서 선진금융교육을 수강하는 기회 등 다양한 교수법을 제시하도록 유도																							
추진일정	'10.2월부터 추진																							
확정절차	▪ 사업평가를 바탕으로 한 '10년 구체적인 커리큘럼, 인원배정 등 교육계획은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3.4) 3월에 개최될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심의로 확정될 예정																							

## 2.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일반회계, 출자, 보통)

\* 담당자 : 금융서비스국장(홍영만), 은행과장(김근익), 사무관(조충행), 전화번호 : 02-2156-9816

### ① 평가결과



### ② 예산현황(억원)

2008(결산)

2,000

2009(결산)

4,000  
(추경 예산 2,000억원 포함)

2010(예산)

-

### ③ 성과계획

#### ☐ 성과목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

- 보금자리론 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
- 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한 장기채권시장의 활성화

#### ☐ 성과지표

	'06	'07	'08	'09	'10	'11
○보금자리론 공급실적 달성도(%)	26.7	97.2	114.7	118.9		
▪ 계획(억원)	52,000	37,000	37,000	50,000		
▪ 실적(억원)	13,867	35,952	42,436	59,430		
○유동화증권 발행실적 달성도(%)	26.2	70.8	98.6	223.5		
▪ 계획(억원)*	52,000	42,000	39,000	42,000		
▪ 실적(억원)*	13,622	29,730	38,468	93,850		

\* SLBS를 제외한 MBS기준(채권보유 순증액포함), 2009년 계획은 금융위 성과계획서 기준

#### 4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10년 이상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확대하여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한 장기채권시장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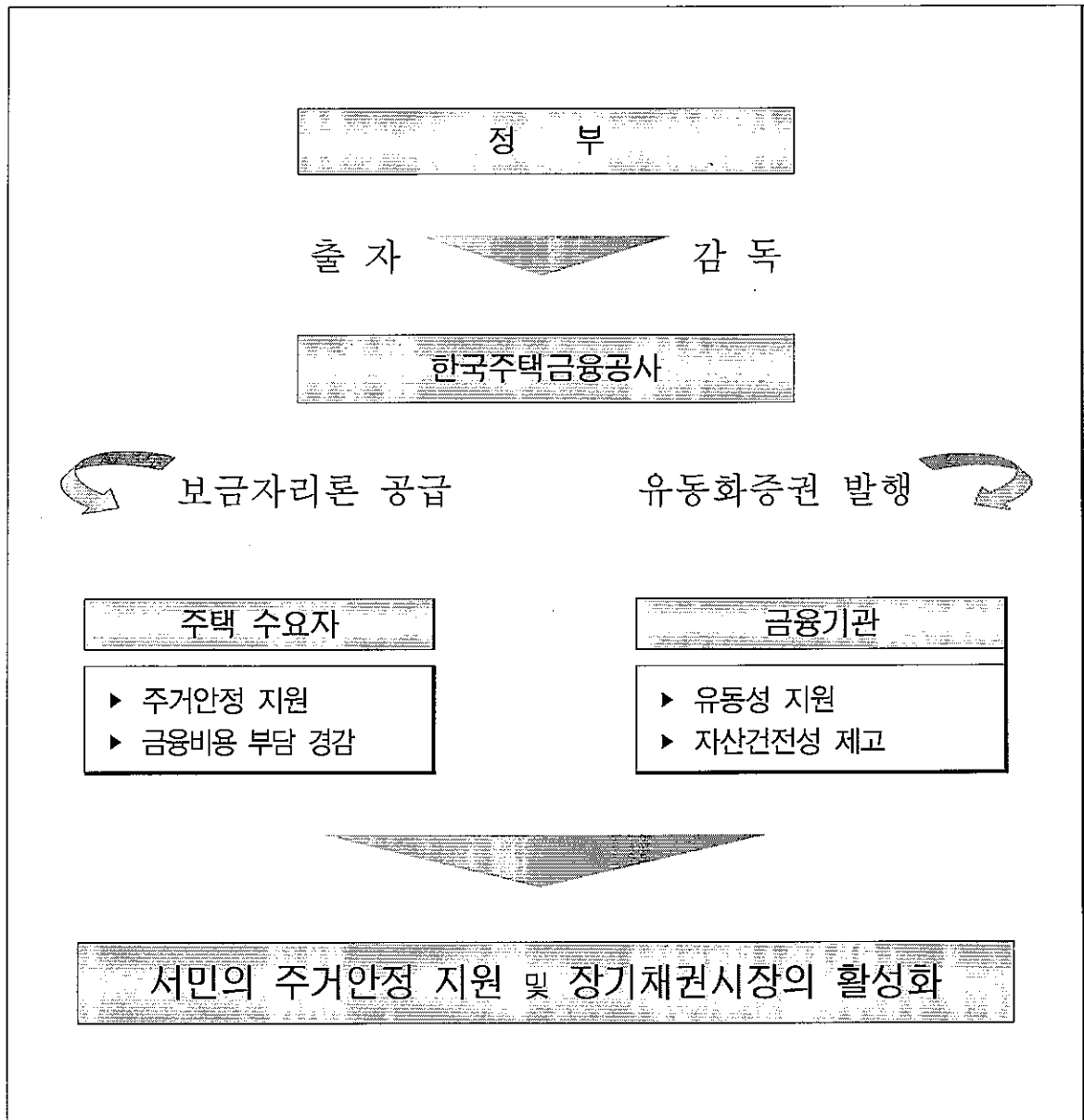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계속사업('04년 ~ 계속)
- 총사업비 : 10,766억원\*('09년까지 기 출자액)  
\* 정부출자 6,600억원, 한국은행 및 국민주택기금 출자 4,166억원
- 사업규모 : '09년도 보증자리론 5조원 공급 및 유동화증권 4.2조원 발행
- 지원대상 : 주택 구입 수요자, 금융기관
- 지원형태 : 주택담보대출 공급 및 주택담보대출의 유동화
- 지원조건 : 무주택 또는 1주택자, 9억원 이하 주택, 대출한도 5억원 등
- 사업시행 주체 : 한국주택금융공사
- 세부내역

(백만원)

구 분	'08 예산	'09 예산 (A)	'10 예산 (B)	증 감 (B-A)	%
□ 한국주택금융공사	200,000	400,000	-	△400,000	△100.0
□ 세출예산비목	200,000	400,000	-	△400,000	△100.0

□ 사업추진 절차



□ '09~'13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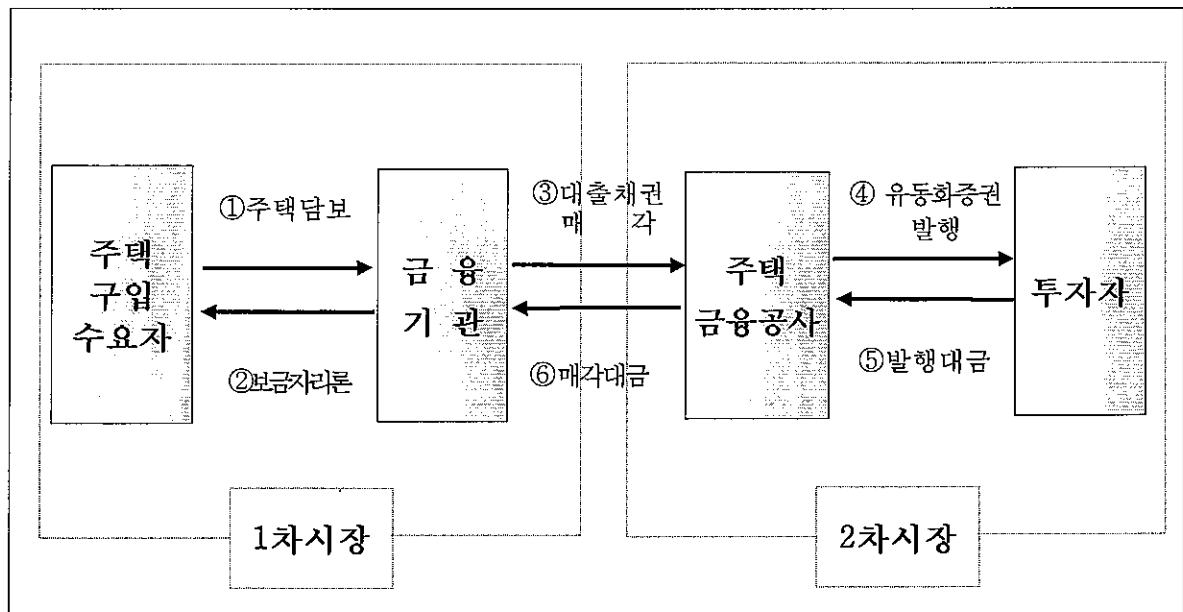
총사업비	'09년까지	'10년	'11년	'12년	'13년
20,000	10,766	-	1,000	1,000	1,000

## □ 참고사항

### ① 보금자리론의 유동화 절차

- 주택구입 수요자가 금융기관에서 보금자리론을 받으면 금융기관은 주택저당채권을 보유하게 되고 공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유동화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채권시장으로부터 장기저리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여 대출재원을 공급함.

<유동화 흐름도>



### ② 보금자리론 이용자 특성

구분	연령	연소득	대출금액	대출만기	주택면적	주택가격
평균	37세	34백만원	83백만원	18년	72m²	160백만원

### ③ 보금자리론 공급실적

(건, 억원)

구분	04	05	06	07	08	09	계
건수	47,841	55,758	18,590	42,179	45,840	59,984	270,192
금액	33,320	42,192	13,867	35,952	42,436	59,430	227,197

## 5 평가결과

### 1. 사업계획 단계

항목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타당한가?	예	<p><input type="checkbox"/> 답변 근거 종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이상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공급을 통하여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장기 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하여 장기채권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라는 명확한 사업 목적을 보유</li> <li>○ 사업목적은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와 연계성을 갖고 있으며, 추진근거가 법령 및 각종 계획에도 구체적으로 명시</li> <li># 참고자료(1-1-1)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발췌</li> </ul> <p><input type="checkbox"/> 답변 근거 및 자료</p> <p>① 사업목적과 성과목표 달성과의 연계성</p> <table border="1"> <tr> <td>사업목적</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이상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확대하여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한 장기채권시장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li> </ul> </td></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td></tr> <tr> <td>성과목표</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li> </ul> </td></tr> <tr> <td>사업목적과의 연계성</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통한 서민의 내집마련 지원 및 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한 장기채권시장 활성화 등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가능</li> </ul> </td></tr> </table> <p>② 사업목적의 명확성</p> <table border="1"> <tr> <th>구 분</th><th>주 요 내 용</th></tr> <tr> <td>특정문제</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주택금융은 금리변동 및 유동성 위험이 큰 단기 일시상환의 변동금리대출이 약 92%를 점하여 금리 상승시 가계대출 차주의 채무부담이 급증하는 등의 시장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음</li> <li>▪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 문제가 부각되고 국내 채권시장이 단기채 위주로 형성되어 장기채시장이 미성숙한 상태임</li> </ul> </td></tr> <tr> <td>사업대상자</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집마련을 위해 장기 분할상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실수요자 및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금융기관</li> </ul> </td></tr> <tr> <td>이해관계자</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금자리론 판매 금융기관, 유동화증권 발행 관계기관 등</li> </ul> </td></tr> <tr> <td>사업수요</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금자리론 수요의 대폭적인 증가 및 새로운 유동화방식 (모기지-MBS 스왑) 도입 등으로 '09년도 유동화증권 발행 예정액이 약9.4조원(전년 실적 대비 144%증가)이 예상되어 적정 지급보증 배수 유지를 위한 자본금 확충 필요</li> </ul> </td></tr> </table>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이상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확대하여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한 장기채권시장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li> </ul>	↓		성과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li> </ul>	사업목적과의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통한 서민의 내집마련 지원 및 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한 장기채권시장 활성화 등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가능</li> </ul>	구 분	주 요 내 용	특정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주택금융은 금리변동 및 유동성 위험이 큰 단기 일시상환의 변동금리대출이 약 92%를 점하여 금리 상승시 가계대출 차주의 채무부담이 급증하는 등의 시장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음</li> <li>▪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 문제가 부각되고 국내 채권시장이 단기채 위주로 형성되어 장기채시장이 미성숙한 상태임</li> </ul>	사업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집마련을 위해 장기 분할상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실수요자 및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금융기관</li> </ul>	이해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금자리론 판매 금융기관, 유동화증권 발행 관계기관 등</li> </ul>	사업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금자리론 수요의 대폭적인 증가 및 새로운 유동화방식 (모기지-MBS 스왑) 도입 등으로 '09년도 유동화증권 발행 예정액이 약9.4조원(전년 실적 대비 144%증가)이 예상되어 적정 지급보증 배수 유지를 위한 자본금 확충 필요</li> </ul>	3.75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이상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확대하여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한 장기채권시장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li> </ul>																					
↓																						
성과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li> </ul>																					
사업목적과의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통한 서민의 내집마련 지원 및 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한 장기채권시장 활성화 등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가능</li> </ul>																					
구 분	주 요 내 용																					
특정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주택금융은 금리변동 및 유동성 위험이 큰 단기 일시상환의 변동금리대출이 약 92%를 점하여 금리 상승시 가계대출 차주의 채무부담이 급증하는 등의 시장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음</li> <li>▪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 문제가 부각되고 국내 채권시장이 단기채 위주로 형성되어 장기채시장이 미성숙한 상태임</li> </ul>																					
사업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집마련을 위해 장기 분할상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실수요자 및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금융기관</li> </ul>																					
이해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금자리론 판매 금융기관, 유동화증권 발행 관계기관 등</li> </ul>																					
사업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금자리론 수요의 대폭적인 증가 및 새로운 유동화방식 (모기지-MBS 스왑) 도입 등으로 '09년도 유동화증권 발행 예정액이 약9.4조원(전년 실적 대비 144%증가)이 예상되어 적정 지급보증 배수 유지를 위한 자본금 확충 필요</li> </ul>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타당한가? (계속)	예	<div data-bbox="544 815 639 893" data-label="Text"> <p>정부지원 필요성</p> </div> <div data-bbox="671 232 1278 1476"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업 금융기관은 장기 분할상환 고정금리 대출 취급에 수반되는 Risk(자금 조달과 운용간 만기 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위험, 금리변동 위험, 신용위험 등) 때문에 장기 분할상환 고정금리 대출 취급을 기피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정하여 시중 금리 상승, 채권시장의 수급상황 악화,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 등의 금융시스템이 흔들리는 위기상황이 발생</li> </ul> </li> <li>▪ 금융위기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금융비용 부담완화 및 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한 금융기관 유동성 지원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유동화 방식인 모기지-MBS 스왑 도입* 등을 통한 유동화증권 발행 확대(약 4조원 추가발행)에 따른 법정 지급보증배수 유지 및 채권시장 수급 악화에 따른 채권유동화 손실보전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불가피.</li> <li>*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유동화(모기지-MBS 스왑)함으로써 금융기관의 BIS비율 개선 뿐 아니라 금융위기에 따른 유동성 부족 및 대출부실 문제 해결</li> <li>- 08년 9월부터 채권시장 불안에 따른 가산금리 급등*으로 유동화증권 발행금리가 큰 폭 상승하여, 유동화 손실 급증**에 따른 유동화증권 발행 중단 사태 발생</li> <li>* 08년 가산금리 급등 : 43bp(3월)→79bp(6월)→251bp(9월)→390bp(12월)</li> <li>** 08년 손실액:△2,598억원, 09년 손실예상액: 최대 2,000억원</li> <li>- 자본금 출자가 없을 경우, 지급보증배수는 09년 49.6배가 예상되어 적정 지급보증배수 40배 초과사태 발생이 우려되며 이 경우 기 발행 유동화증권의 시장성 상실 및 신규발행 차질로 영업중단 사태발생 우려</li> </ul> </li> </ul> </div> <div data-bbox="544 1532 1051 1610" data-label="Footnote"> <p># 참고자료(1-1-2) : 보증자리론 고객 현황 # 참고자료(1-1-3) : 유동성지원 금융기관 현황</p> </div>	3.75
-----	--------------------------	---	---	------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 되지 않는가?	예	<div> <div>□ 답변 근거 종합</div> <div> <div>○ 본 사업은 국내 유일한 장기 고정금리 보증자리론 공급 및 유동화 증권 발행 등 장기채권시장 활성화 분야에 특화된 사업으로</div> <div>▪ 정부의 다른 예산사업 또는 타 재정사업과의 중복·유사성 없음</div> <div>▪ 단 저소득층을 위한 ‘금리우대 보증자리론’은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유사하나 사업목적, 수혜 대상, 사업내용, 사업방식이 다르며,</div> <div>－ ‘금리우대 보증자리론’ 사업은 전체 보증자리론 공급사업의 약 21%로 극히 일부분임</div> </div> <div> <div>(억원 %)</div> <table> <tr> <th colspan="2">구분</th> <th>05</th> <th>06</th> <th>07</th> <th>08</th> <th>09</th> <th>누적</th> </tr> <tr> <td>보증자리론</td> <td>금액 (비중)</td> <td>42,074 (99.7)</td> <td>13,181 (95.1)</td> <td>35,446 (98.6)</td> <td>40,824 (96.2)</td> <td>58,356 (98.2)</td> <td>189,881 (97.9)</td> </tr> <tr> <td>금리우대 보증자리론</td> <td>금액 (비중)</td> <td>118 (0.3)</td> <td>686 (4.9)</td> <td>506 (1.4)</td> <td>1,612 (3.8)</td> <td>1,074 (1.8)</td> <td>3,996 (2.1)</td> </tr> <tr> <td>계</td> <td>금액 (비중)</td> <td>42,192 (100.0)</td> <td>13,867 (100.0)</td> <td>35,952 (100.0)</td> <td>42,436 (100.0)</td> <td>59,430 (100.0)</td> <td>193,877 (100.0)</td> </tr> </table> </div> <div> <div>□ 답변 근거 및 자료</div> <div>① 중복·유사사업의 비교</div> <table> <tr> <th>판단기준</th> <th>금리우대 보증자리론</th> <th>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th> </tr> <tr> <td>① 시행주체</td> <td>한국주택금융공사</td> <td>국민주택기금</td> </tr> <tr> <td>② 사업목적</td> <td>서민·저소득층의 주거안정</td> <td>국민의 주거안정</td> </tr> <tr> <td>③ 수혜대상</td> <td>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서민(상여금/수당포함)</td> <td>좌동(상여금/수당 제외)</td> </tr> <tr> <td>④ 사업내용</td> <td> <div>고정금리</div> <div>1억원</div> <div>3억원이하, 85㎡ 이하</div> <div>시세의 최대 70%</div> <div>5년 이내 1%~2%</div> </td> <td> <div>변동금리</div> <div>1억원(다자녀가구 15억원)</div> <div>좌동</div> <div>담보사정가의 100%</div> <div>없음</div> </td> </tr> <tr> <td>⑤ 사업방식</td> <td>유동화+이차보전</td> <td>직접융자</td> </tr> </table> <div> <div>○ 08년 예결위 결산 시 두 사업의 신청대상 및 주택범위 등에 대한 중복성 지적에 따라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을 폐지하고 금리우대 보증자리론 공급확대 검토</div> <div>▪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 등 관련부처가 두 사업의 통합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이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 도출</div> </div> <div># 참고자료(1-2-1) : 금리우대 보증자리론 공급확대 검토</div> </div> </div>	구분		05	06	07	08	09	누적	보증자리론	금액 (비중)	42,074 (99.7)	13,181 (95.1)	35,446 (98.6)	40,824 (96.2)	58,356 (98.2)	189,881 (97.9)	금리우대 보증자리론	금액 (비중)	118 (0.3)	686 (4.9)	506 (1.4)	1,612 (3.8)	1,074 (1.8)	3,996 (2.1)	계	금액 (비중)	42,192 (100.0)	13,867 (100.0)	35,952 (100.0)	42,436 (100.0)	59,430 (100.0)	193,877 (100.0)	판단기준	금리우대 보증자리론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	① 시행주체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주택기금	② 사업목적	서민·저소득층의 주거안정	국민의 주거안정	③ 수혜대상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서민(상여금/수당포함)	좌동(상여금/수당 제외)	④ 사업내용	<div>고정금리</div> <div>1억원</div> <div>3억원이하, 85㎡ 이하</div> <div>시세의 최대 70%</div> <div>5년 이내 1%~2%</div>	<div>변동금리</div> <div>1억원(다자녀가구 15억원)</div> <div>좌동</div> <div>담보사정가의 100%</div> <div>없음</div>	⑤ 사업방식	유동화+이차보전	직접융자	3.75
구분		05	06	07	08	09	누적																																															
보증자리론	금액 (비중)	42,074 (99.7)	13,181 (95.1)	35,446 (98.6)	40,824 (96.2)	58,356 (98.2)	189,881 (97.9)																																															
금리우대 보증자리론	금액 (비중)	118 (0.3)	686 (4.9)	506 (1.4)	1,612 (3.8)	1,074 (1.8)	3,996 (2.1)																																															
계	금액 (비중)	42,192 (100.0)	13,867 (100.0)	35,952 (100.0)	42,436 (100.0)	59,430 (100.0)	193,877 (100.0)																																															
판단기준	금리우대 보증자리론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																																																				
① 시행주체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주택기금																																																				
② 사업목적	서민·저소득층의 주거안정	국민의 주거안정																																																				
③ 수혜대상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서민(상여금/수당포함)	좌동(상여금/수당 제외)																																																				
④ 사업내용	<div>고정금리</div> <div>1억원</div> <div>3억원이하, 85㎡ 이하</div> <div>시세의 최대 70%</div> <div>5년 이내 1%~2%</div>	<div>변동금리</div> <div>1억원(다자녀가구 15억원)</div> <div>좌동</div> <div>담보사정가의 100%</div> <div>없음</div>																																																				
⑤ 사업방식	유동화+이차보전	직접융자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 되지 않는가? (계속)	예	<p>② 중복·유사성이 있더라도, 효율성·형평성 제고 혹은 추가 혜택 제공 가능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은 기금에서 저리로 조달한 자금을 재원으로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대출을 전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단 대출이 지원되면 원금이 회수되기까지 20년이 소요됨에 따라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계층에 대해 지원 곤란</li> </ul> </li> <li>○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은 공사가 유동화를 통해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재원마련이 무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0.5~1%p의 이차만 지원하면 되므로 소액의 예산으로 많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효율적 구조</li> <li>▪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은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기 때문에 변동금리 대출에 비해 서민의 주택구입에 따른 금융부담이 적어 안정적인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므로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가 가능함</li> </ul> </li> </ul>
-----	---	---	--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3	사업내용 및 추진 방식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예	<div> <div> <div>□ 답변 근거 종합</div> <div>○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장기채권시장의 활성화’라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4가지 사항을 점검한 결과 현행 사업방식이 최선의 대안임</div> <div>□ 답변 근거 및 자료</div> <div>○ 세부사업의 사업목적 달성과의 연계성</div> <table> <tr> <th>세부사업</th> <th>사업목적 달성과의 연계성</th> </tr> <tr> <td>보금자리론 공급</td> <td>▪ 장기 분할상환 고정금리의 대출비중을 확대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주택금융시장 안정을 도모</td> </tr> <tr> <td>유동화증권 발행</td> <td>▪ 장기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장기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제고</td> </tr> </table> <div>○ 사업방식 관련 검토사항</div> <table> <tr> <th>검토사항</th> <th>검토결과 및 근거</th> </tr> <tr> <td>① 재원분담 가능성/ 적절성</td> <td>▪ 사업지원대상인 서민이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서민의 내집 마련 지원이라는 사업특성상 지자체 재정분담이나 민간의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td> </tr> <tr> <td>② 사업방식/ 조건</td> <td> <div>▪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업을 운영하는 현행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div> <div>- 공사가 채권시장에서 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후, 이를 기초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현행 사업방식이 정부의 재정부담을 최소화 가능</div> <div>▪ 정부의 재정지원(약1.1조원)을 통한 승수효과 발생</div> <div>- 보금자리론 약23조원 공급 : 20.9배의 승수효과</div> <div>- 유동화증권 약30조원 발행 : 27.3배의 승수효과</div> <div>※ 예결위 08년 결산 시 헷지거래에 의한 손실이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요청</div> <div>○ 헷지대상금액 산정의 합리화를 위해 공정가치금액(대출채권의 평가금액)을 사용하여 헷지비용 산정 및 오버헤지 거래의 상한설정</div> <div>○ 공사채 매칭을 통한 금리리스크 관리체계 도입</div> <div>○ 헷지거래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 중(10.3월~5월)</div> </td> </tr> <tr> <td>③ 사업추진 주체</td> <td> <div>▪ 현행 공공금융기관 운영체제가 합리적</div> <div>- 본 사업은 ‘주택’과 ‘유동화’라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금융분야에 특화된 사업이므로, 전문 인력과 별도의 수행기관이 반드시 필요</div> <div>- 따라서 주택금융 전문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본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부의 공공부문 역할을 지원하고 주택신용보증업무 및 주택연금보증업무와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현행의 사업추진체계가 최상의 대안임</div> </td> </tr> </table> </div> </div>	세부사업	사업목적 달성과의 연계성	보금자리론 공급	▪ 장기 분할상환 고정금리의 대출비중을 확대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주택금융시장 안정을 도모	유동화증권 발행	▪ 장기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장기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제고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재원분담 가능성/ 적절성	▪ 사업지원대상인 서민이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서민의 내집 마련 지원이라는 사업특성상 지자체 재정분담이나 민간의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② 사업방식/ 조건	<div>▪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업을 운영하는 현행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div> <div>- 공사가 채권시장에서 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후, 이를 기초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현행 사업방식이 정부의 재정부담을 최소화 가능</div> <div>▪ 정부의 재정지원(약1.1조원)을 통한 승수효과 발생</div> <div>- 보금자리론 약23조원 공급 : 20.9배의 승수효과</div> <div>- 유동화증권 약30조원 발행 : 27.3배의 승수효과</div> <div>※ 예결위 08년 결산 시 헷지거래에 의한 손실이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요청</div> <div>○ 헷지대상금액 산정의 합리화를 위해 공정가치금액(대출채권의 평가금액)을 사용하여 헷지비용 산정 및 오버헤지 거래의 상한설정</div> <div>○ 공사채 매칭을 통한 금리리스크 관리체계 도입</div> <div>○ 헷지거래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 중(10.3월~5월)</div>	③ 사업추진 주체	<div>▪ 현행 공공금융기관 운영체제가 합리적</div> <div>- 본 사업은 ‘주택’과 ‘유동화’라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금융분야에 특화된 사업이므로, 전문 인력과 별도의 수행기관이 반드시 필요</div> <div>- 따라서 주택금융 전문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본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부의 공공부문 역할을 지원하고 주택신용보증업무 및 주택연금보증업무와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현행의 사업추진체계가 최상의 대안임</div>	3.75
세부사업	사업목적 달성과의 연계성																	
보금자리론 공급	▪ 장기 분할상환 고정금리의 대출비중을 확대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주택금융시장 안정을 도모																	
유동화증권 발행	▪ 장기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장기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제고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재원분담 가능성/ 적절성	▪ 사업지원대상인 서민이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서민의 내집 마련 지원이라는 사업특성상 지자체 재정분담이나 민간의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② 사업방식/ 조건	<div>▪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업을 운영하는 현행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div> <div>- 공사가 채권시장에서 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후, 이를 기초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현행 사업방식이 정부의 재정부담을 최소화 가능</div> <div>▪ 정부의 재정지원(약1.1조원)을 통한 승수효과 발생</div> <div>- 보금자리론 약23조원 공급 : 20.9배의 승수효과</div> <div>- 유동화증권 약30조원 발행 : 27.3배의 승수효과</div> <div>※ 예결위 08년 결산 시 헷지거래에 의한 손실이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요청</div> <div>○ 헷지대상금액 산정의 합리화를 위해 공정가치금액(대출채권의 평가금액)을 사용하여 헷지비용 산정 및 오버헤지 거래의 상한설정</div> <div>○ 공사채 매칭을 통한 금리리스크 관리체계 도입</div> <div>○ 헷지거래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 중(10.3월~5월)</div>																	
③ 사업추진 주체	<div>▪ 현행 공공금융기관 운영체제가 합리적</div> <div>- 본 사업은 ‘주택’과 ‘유동화’라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금융분야에 특화된 사업이므로, 전문 인력과 별도의 수행기관이 반드시 필요</div> <div>- 따라서 주택금융 전문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본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부의 공공부문 역할을 지원하고 주택신용보증업무 및 주택연금보증업무와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현행의 사업추진체계가 최상의 대안임</div>																	

1-3	사업내용 및 추진 방식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계속)	예	<div data-bbox="497 190 660 1021">④ 수요예측의 적절성</div> <div data-bbox="660 190 1275 1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민의 주거안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유동화증권 발행규모 확대(약4조원 추가)에 필요한 적정 지급보증 운용배수* 유지에 약 1,000억원 소요</li> <li>* 운용배수(적정 40배) : 07말 30.8배 → 08말 37.6배 → 09말 49.6배 예상(추경시 36.4배)</li> <li>- 유동화증권 발행확대를 통해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BIS비율을 개선하는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 가능</li> <li>▪ 금융위기 이후 채권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한 손실 보전*에 약 1,000억원 소요</li> <li>* 유동화손실 : 08년 2,598억원→09년 최대 2,000억원 예상</li> <li>- 시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공사로서는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업무의 중단없이 유동화를 통해 계속적으로 보금자리론 공급 필요</li> <li>▪ 보금자리론의 지속적 공급을 위해서는 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필요하나, 자본금 출자가 없을 경우 법정 지급보증배수를 유지하기 위해 09년도 보금자리론 공급치를 5조원에서 3조원으로 축소해야 하는 상황 발생</li> </ul> </div> <div data-bbox="497 1021 1275 1093"># 참고자료(1-3-1) : 헷지거래 관련 개선실적</div>	3.75
-----	---	---	---	------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출연·출자	대상기관의 경영상황 점검결과 적정 규모의 지원인가?	예	<div>□ 답변 근거 종합</div> <div>○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정부의 출자 규모는 합리적 추정에 의해 산출된 수입, 지출규모 및 유동화증권 발행에 따른 지급보증배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된 적정규모의 지원임</div> <div>□ 답변 근거 및 자료</div> <div>① 출연·출자대상기관의 점검내용(수지상황, 사업비 수준 등)</div> <div>○ '09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의한 출자금(2,000억원)은 공사의 지속적인 사업운용을 위한 납입자본금으로 유동화에 따른 지급보증배수* 여력 확보의 재원으로 사용됨</div> <div>* 법정지급보증 배수 : 50배</div> <div>▪ '09년도 수입은 4,538억원, 지출은 4,181억원으로 357억원의 수지잉여가 발생</div> <div>▪ 자본금 확충에 따른 매입보유 확대 등 운용수익의 증가, 유동화증권 발행방식 개선(총액인수→입찰 후 잔액 인수)으로 인한 발행비용 절감, 유동화자산의 건전성 제고에 따른 대손상각비 감소 등으로 경영수지가 개선되었으며 '09년도 수익 357억원은 '10년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임</div> <div>&lt; 한국주택금융공사 경영상황 &gt; (억원)</div> <table><tr><th colspan="2" rowspan="2">구분</th><th colspan="2">'08년도</th><th colspan="2">'09년도</th></tr><tr><th>계 획</th><th>실 적</th><th>계 획</th><th>실 적</th></tr><tr><td rowspan="5">수입 (A)</td><td>▪ 이자수익</td><td>816</td><td>734</td><td>1,490</td><td>1,744</td></tr><tr><td>▪ 수수료수익</td><td>470</td><td>487</td><td>519</td><td>655</td></tr><tr><td>▪ 기타영업수익 등</td><td>413</td><td>2,405</td><td>16</td><td>1,968</td></tr><tr><td>▪ 영업외 수익 등</td><td>1</td><td>2</td><td>0</td><td>171</td></tr><tr><td>소 계</td><td>1,700</td><td>3,628</td><td>2,025</td><td>4,538</td></tr><tr><td rowspan="6">지출 (B)</td><td>▪ 이자비용</td><td>564</td><td>492</td><td>1,119</td><td>1,226</td></tr><tr><td>▪ 수수료비용</td><td>218</td><td>249</td><td>61</td><td>106</td></tr><tr><td>▪ 기타영업비용</td><td>2,691</td><td>4,746</td><td>939</td><td>2,191</td></tr><tr><td>▪ 판매비 및 관리비</td><td>316</td><td>697</td><td>391</td><td>658</td></tr><tr><td>▪ 법인세</td><td>0</td><td>42</td><td>0</td><td>0</td></tr><tr><td>소 계</td><td>3,789</td><td>6,226</td><td>2,510</td><td>4,181</td></tr><tr><td colspan="2">수지(A-B)</td><td>△2,089</td><td>△2,598</td><td>△485</td><td>357</td></tr><tr><td colspan="2">▪ 보증자리론 공급</td><td>37,000</td><td>42,436</td><td>50,000</td><td>59,430</td></tr><tr><td colspan="2">▪ 유동화증권 발행</td><td>62,400</td><td>53,530</td><td>70,000</td><td>117,918</td></tr><tr><td colspan="2">▪ 지급보증배수</td><td>41.3</td><td>37.6</td><td>30.3</td><td>29.9</td></tr></table>	구분		'08년도		'09년도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수입 (A)	▪ 이자수익	816	734	1,490	1,744	▪ 수수료수익	470	487	519	655	▪ 기타영업수익 등	413	2,405	16	1,968	▪ 영업외 수익 등	1	2	0	171	소 계	1,700	3,628	2,025	4,538	지출 (B)	▪ 이자비용	564	492	1,119	1,226	▪ 수수료비용	218	249	61	106	▪ 기타영업비용	2,691	4,746	939	2,191	▪ 판매비 및 관리비	316	697	391	658	▪ 법인세	0	42	0	0	소 계	3,789	6,226	2,510	4,181	수지(A-B)		△2,089	△2,598	△485	357	▪ 보증자리론 공급		37,000	42,436	50,000	59,430	▪ 유동화증권 발행		62,400	53,530	70,000	117,918	▪ 지급보증배수		41.3	37.6	30.3	29.9	3.75
구분		'08년도				'09년도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수입 (A)	▪ 이자수익	816	734	1,490	1,744																																																																																										
	▪ 수수료수익	470	487	519	655																																																																																										
	▪ 기타영업수익 등	413	2,405	16	1,968																																																																																										
	▪ 영업외 수익 등	1	2	0	171																																																																																										
	소 계	1,700	3,628	2,025	4,538																																																																																										
지출 (B)	▪ 이자비용	564	492	1,119	1,226																																																																																										
	▪ 수수료비용	218	249	61	106																																																																																										
	▪ 기타영업비용	2,691	4,746	939	2,191																																																																																										
	▪ 판매비 및 관리비	316	697	391	658																																																																																										
	▪ 법인세	0	42	0	0																																																																																										
	소 계	3,789	6,226	2,510	4,181																																																																																										
수지(A-B)		△2,089	△2,598	△485	357																																																																																										
▪ 보증자리론 공급		37,000	42,436	50,000	59,430																																																																																										
▪ 유동화증권 발행		62,400	53,530	70,000	117,918																																																																																										
▪ 지급보증배수		41.3	37.6	30.3	29.9																																																																																										

1-출연·출자

대상기관의  
경영상황 점검  
결과 적정  
규모의 지원  
인가?  
(계속)

예

② '09년 출연·출자가 적정규모라고 판단하는 근거

○ '09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의한 출자금(2,000억원)은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 및 금융기관의 유동성지원을 위한 유동화 증권 지급보증 재원으로 활용되어 '09.12월말 현재 지급보증 배수는 29.9배로 적정 지급보증 한도인 40배 수준 이내로 운용 중으로 출자규모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

- 추가경정예산에 의해 2천억원의 자본금 출자가 되지 않았을 경우 지급보증배수는 적정한도인 약40배를 초과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보증자리론 공급 중단 및 서민의 금융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우려가 있었음

< 지급보증배수 현황 >

구 분	'08.12말	'09.1월*	'09.5월말**	'09.12말
지급보증잔액(조원)	17.0	17.5	20.6	25.7
자기자본(억원)	4,518	6,531	8,353	8,588
지급보증배수(배)	37.6	26.8	24.6	29.9

\* '09 본예산 2천억원 증자 \*\* '09 추경예산 2천억원 증자

○ 특히 추경예산으로 확충된 자본금을 활용하여 '09년 하반기 중 시장(손익균형)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보증자리론을 운용함으로써 서민의 내집마련 부담 완화와 동시에 적절한 수익을 실현 할 수 있었으므로 출자규모는 적정하였음

<금리운용현황('09년 하반기)>

(단위 : %)

시기	시장(손익균형) 금리(A)	보증자리론 대출금리(B)	차이(A-B)
7월	6.69	6.08	0.61
8월	6.67	6.07	0.60
9월	6.61	6.07	0.54
10월	6.60	6.07	0.53
11월	6.47	6.07	0.40
12월	6.29	6.08	0.21

3.75

## 2. 성과계획 단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예	<p>□ 답변 근거 종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을 전체적으로 의미있게 반영하고 있으며, 명확한 인과관계를 나타내고 있음</li> <li>* 단, 보금자리론 공급을 통한 서민 내집 마련 지원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인 무주택 서민 중 보금자리론 이용률' 등의 지표 설정 필요</li> <li>* 보금자리론 지원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자의 대출 지원을 등 부정 수급에 대한 관리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설정 필요</li> </ul> <p>□ 답변 근거 및 자료</p> <p>① 사업목적과 성과지표</p> <p style="text-align: center;">&lt;사업목적과 성과관리 체계도&gt;</p> <p>○ 사업목적 : 10년 이상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확대하여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한 장기 채권시장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p> <p>○ 성과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표명 ① : 보금자리론 공급실적</li> </ul>	7.5

		<p>* 개념 : 보금자리론 공급실적의 달성도(%)</p> <p>* 측정산식 : 달성도 = 공급실적 / 공급계획 x 100</p> <p>* 측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대상기간 : 09.1.1~09.12.31</li> <li>- 측정수행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li> <li>-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li> </ul>																					
		<p>※ 보조지표 ①-1 : 보금자리론 잔액점유율(성과지표를 보완하기 위해 기관장 경영지표로 운영)</p> <p>* 개념 : 전체 주택담보대출잔액 대비 보금자리론 잔액비중(%)</p> <p>* 측정산식 : 점유율 = 보금자리론 잔액 / (은행 주택담보대출잔액 + 보금자리론 잔액) x 100</p> <p>* 측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대상기간 : 09.1.1~09.12.31</li> <li>- 측정수행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li> <li>-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보금자리론 잔액점유율&gt;</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구 분</th> <th>06 실적</th> <th>07 실적</th> <th>08 실적</th> <th>09 실적</th> </tr> <tr> <td>잔액점유율(%)</td> <td>2.84</td> <td>3.56</td> <td>4.29</td> <td>4.69</td> </tr> </table> <p>※ 보조지표 ①-2 : 보금자리론 연체율 Gap</p> <p>* 개념 : 보금자리론의 연체율과 은행주택담보대출 연체율 간 Gap(%)</p> <p>* 측정산식 : Gap = 보금자리론 연체율 - 은행주택담보대출 연체율</p> <p>* 측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대상기간 : 09.1.1~09.12.31</li> <li>- 측정수행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li> <li>-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보금자리론 연체율 Gap&gt;</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구 분</th> <th>06 실적</th> <th>07 실적</th> <th>08 실적</th> <th>09 실적</th> </tr> <tr> <td>연체율 Gap(%)</td> <td>1.20</td> <td>0.51</td> <td>0.25</td> <td>0.10</td> </tr> </table> <p>▪ 지표명 ② : 유동화증권 발행실적</p> <p>* 개념 : 유동화증권 발행실적의 달성도(%)</p> <p>* 측정산식 : 달성도 = 발행실적 / 발행계획 x 100</p> <p>* 측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대상기간 : 09.1.1~09.12.31</li> <li>- 측정수행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li> <li>-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li> </ul> <p>※ 보조지표 ②-1 : 유동화증권 인수비율</p> <p>* 개념 : 유동화증권 투자가능고객 대비 실제 인수기관 비율(%)</p> <p>* 측정산식 : 비율 = 유동화증권 인수기관수 / 유동화증권 투자</p>	구 분	06 실적	07 실적	08 실적	09 실적	잔액점유율(%)	2.84	3.56	4.29	4.69	구 분	06 실적	07 실적	08 실적	09 실적	연체율 Gap(%)	1.20	0.51	0.25	0.10	
구 분	06 실적	07 실적	08 실적	09 실적																			
잔액점유율(%)	2.84	3.56	4.29	4.69																			
구 분	06 실적	07 실적	08 실적	09 실적																			
연체율 Gap(%)	1.20	0.51	0.25	0.10																			



		<p>가능기관수(88개) x 100</p> <p>* 측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대상기간 : 09.1.1~09.12.31</li> <li>- 측정수행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li> <li>-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li> </ul> <p>&lt;유동화증권 인수기관 비율&gt;</p> <table border="1"> <tr> <th>구 분</th> <th>06 실적</th> <th>07 실적</th> <th>08 실적</th> <th>09 실적</th> </tr> <tr> <td>인수기관 비율(%)</td> <td>36.4</td> <td>44.3</td> <td>48.9</td> <td>64.8</td> </tr> </table>	구 분	06 실적	07 실적	08 실적	09 실적	인수기관 비율(%)	36.4	44.3	48.9	64.8	
구 분	06 실적	07 실적	08 실적	09 실적									
인수기관 비율(%)	36.4	44.3	48.9	64.8									
		<p>② 사업목적과 성과지표가 인과관계를 가지는지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이라는 성과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인과성이 높은 「보금자리론 공급실적」, 「보금자리론 잔액점유율」, 「보금자리론 연체율 Gap」을 성과지표와 보조지표로 설정하였으며,</li> <li>▪ 사업목적과 성과목표는 성과지표를 통해 달성되며 사업목적의 달성여부도 성과지표를 통해 명확한 평가가 가능</li> </ul> <table border="1"> <tr> <td>보금자리론 공급실적 (주지표)</td> <td>합리적인 주요예측에 기반하여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한 국민의 복지증진이라는 사업목적에 기여한 정도를 측정하는 핵심적인 결과지표</td> </tr> <tr> <td>보금자리론 잔액점유율 (보조지표)</td> <td>단기 변동금리 위주의 주택금융시장에서 장기 고정금리 보급자리론의 비중을 측정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기능 수행을 통한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td> </tr> <tr> <td>보금자리론 연체율 Gap (보조지표)</td> <td>성환능력이 취약한 서민을 지원하는 보급자리론 특성상 은행주택담보대출보다 연체율이 높으나, 연체규모에 따라 지급보증 충당금을 설정하므로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보급자리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보급자리론의 전전성 관리를 측정하는 지표</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채권시장의 활성화'라는 성과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인과성이 높은 「유동화증권 발행실적」 및 「유동화증권 인수비율」을 성과지표와 보조지표로 설정하였으며,</li> <li>▪ 사업목적과 성과목표는 성과지표를 통해 달성되며 사업목적의 달성여부도 성과지표를 통해 명확한 평가가 가능</li> </ul> <table border="1"> <tr> <td>유동화증권 발행실적 (주지표)</td> <td>보금자리론 공급실적과 연계한 유동화증권 발행목표를 설정하고 효율적인 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장기채권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사업목적에 기여한 정도를 측정하는 선행지표이자 결과지표</td> </tr> <tr> <td>유동화증권 인수비율 (보조지표)</td> <td>유동화증권에 투자가 가능한 전체기관 중 실제 유동화증권을 인수한 기관의 비중으로서 궁극적으로 '장기채권시장의 활성화'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함축적 지표인 결과지표</td> </tr> </table>	보금자리론 공급실적 (주지표)	합리적인 주요예측에 기반하여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한 국민의 복지증진이라는 사업목적에 기여한 정도를 측정하는 핵심적인 결과지표	보금자리론 잔액점유율 (보조지표)	단기 변동금리 위주의 주택금융시장에서 장기 고정금리 보급자리론의 비중을 측정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기능 수행을 통한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보금자리론 연체율 Gap (보조지표)	성환능력이 취약한 서민을 지원하는 보급자리론 특성상 은행주택담보대출보다 연체율이 높으나, 연체규모에 따라 지급보증 충당금을 설정하므로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보급자리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보급자리론의 전전성 관리를 측정하는 지표	유동화증권 발행실적 (주지표)	보금자리론 공급실적과 연계한 유동화증권 발행목표를 설정하고 효율적인 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장기채권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사업목적에 기여한 정도를 측정하는 선행지표이자 결과지표	유동화증권 인수비율 (보조지표)	유동화증권에 투자가 가능한 전체기관 중 실제 유동화증권을 인수한 기관의 비중으로서 궁극적으로 '장기채권시장의 활성화'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함축적 지표인 결과지표	
보금자리론 공급실적 (주지표)	합리적인 주요예측에 기반하여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한 국민의 복지증진이라는 사업목적에 기여한 정도를 측정하는 핵심적인 결과지표												
보금자리론 잔액점유율 (보조지표)	단기 변동금리 위주의 주택금융시장에서 장기 고정금리 보급자리론의 비중을 측정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기능 수행을 통한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보금자리론 연체율 Gap (보조지표)	성환능력이 취약한 서민을 지원하는 보급자리론 특성상 은행주택담보대출보다 연체율이 높으나, 연체규모에 따라 지급보증 충당금을 설정하므로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보급자리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보급자리론의 전전성 관리를 측정하는 지표												
유동화증권 발행실적 (주지표)	보금자리론 공급실적과 연계한 유동화증권 발행목표를 설정하고 효율적인 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장기채권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사업목적에 기여한 정도를 측정하는 선행지표이자 결과지표												
유동화증권 인수비율 (보조지표)	유동화증권에 투자가 가능한 전체기관 중 실제 유동화증권을 인수한 기관의 비중으로서 궁극적으로 '장기채권시장의 활성화'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함축적 지표인 결과지표												

추진과제	성과지표	성과목표 및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개선 상품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보금자리론 공급 확대</li> <li>· 원가절감을 통한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금자리론 공급</li> <li>· 보금자리론 잔액 점유율</li> <li>· 보금자리론 연체율 Gap</li> </ul>	<div>서민주거 안정 지원 및 장기채권시장 활성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div>	<div>국민복지 증진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동화증권의 시장성 제고</li> <li>· 유동화증권 발행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발행비용 절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동화증권 발행</li> <li>· 유동화증권 인수비율</li> </ul>		

③ 결과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는지 여부

-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 결과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음
  - 보금자리론 공급 및 유동화증권 발행은 주택금융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과 장기금융시장 활성화 제고에 대한 최종 결과지표임

· 투입	·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	---------------

↓

· 과정·산출	· 보금자리론의 상품경쟁력 제고를 통한 보금자리론 공급확대 및 유동화증권 발행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유동화증권 발행확대
---------	--

↓

· 초기결과	· 사회안전망 기능을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과 장기채권시장의 활성화
--------	---

↓

· 최종결과	· 국민의 복지 증진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	-----------------------------

※ 과정·산출지표를 불가피하게 설정·사용하는 이유

- 보금자리론의 자금용도는 여타 기관의 생산물과 같이 재화·서비스의 생산 또는 부가가치의 창출 등 직접적인 경제활동과 연계되는 지원이 아닌, 인간의 기본권인 “住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 보금자리론 공급 결과에 따른 서민의 내집마련 증대효과 등 국민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하고, 그 효율성을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따라서 보금자리론 공급 및 유동화증권 발행의 결과가 ‘국민의 주거안정 지원 및 장기채권시장의 활성화’라는 점에서 과정·산출지표인 동시에 결과지표에 해당됨
- 성과지표를 보완할 수 있는 보조지표로서 ‘보금자리론 잔액점유율’, ‘보금자리론 연체율 Gap’, ‘유동화증권 인수비율’을 운영중
  - # 참고자료(2-1-1) : ‘09년도 업무계획서(유동화부문) 발체
  - # 참고자료(2-1-2) : 성과지표와 사업목적간 연계성

<주택금융 관련 유사사업의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경우 06년 기금운용평가 시 '서민 주거안정 보증지원 강화'라는 성과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인과성이 높은 '보증공급달성도' 및 '임차자금보증 공급달성도'를 성과지표 및 보조지표로 설정하였으며,</li> <li>○ '기본재산 확충을 통한 제정자립기반 구축'이라는 성과목표의 달성을 위해 '사고순증율', '구상권누적회수율' 등을 성과지표와 보조지표로 설정한바 있음</li> <li>○ 06년도 기금운영평가 시 주택신보의 성과지표는 설립취지를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서 사업목표와 적절하게 연계된 성과지표로 인정</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lt;06년도 기금운용평가 결과&gt;</p> <p>■ 평가부문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명확한 인과관계</p> <p>■ 평가단 평가결과 : 예</p> <p>■ 세부 평가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신보는 성과목표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지원 강화'와 '기본재산 확충을 통한 자립기반 확충'을 성과목표로 제시하고 성과지표로 5가지(3개의 주지표와 2개의 보조지표) 양적지표를 제시하는 등 구체적으로 설정</li> <li>○ 사고순증율달성도 및 구상권회수달성도, 구상권누적회수율 달성도는 기본재산의 손실방지를 최소화함으로써 자립기반 확충과 밀접히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순증율의 축소 및 구상권회수율의 개선 등은 기본재산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인과관계가 높은 것으로 평가</li> </ul> </li> </ul> </div>
--	--	--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의욕적인가?	아니요	<div> <div>□ 답변 근거 종합</div> <div> <div>○ 보금자리론 공급실적 지표가 성과계획서에 누락되어 목표치 사전 설정 여부 확인 곤란</div> <div>○ 유동화증권 발행실적에 대해 과거 물량 분석 및 계획 수립에 근거하여 목표치 설정 필요</div> </div> <div> <div>&lt;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 현황 &gt;</div> <table> <tr> <th>구분</th> <th>'06</th> <th>'07</th> <th>'08</th> <th>'09</th> <th>'10</th> <th>'11</th> </tr> <tr> <td>○ 보금자리론 공급실적 달성도(%)</td> <td>26.7</td> <td>97.2</td> <td>114.7</td> <td>118.9</td> <td></td> <td></td> </tr> <tr> <td>▪ 계획(억원)</td> <td>52,000</td> <td>37,000</td> <td>37,000</td> <td>50,000</td> <td></td> <td></td> </tr> <tr> <td>▪ 실적(억원)</td> <td>13,867</td> <td>35,952</td> <td>42,436</td> <td>59,430</td> <td></td> <td></td> </tr> <tr> <td>○ 유동화증권 발행실적 달성도(%)</td> <td>26.2</td> <td>70.8</td> <td>98.6</td> <td>223.5</td> <td></td> <td></td> </tr> <tr> <td>▪ 계획(억원)</td> <td>52,000</td> <td>42,000</td> <td>39,000</td> <td>42,000</td> <td></td> <td></td> </tr> <tr> <td>▪ 실적(억원)</td> <td>13,622</td> <td>29,730</td> <td>38,468</td> <td>93,850</td> <td></td> <td></td> </tr> </table> </div> <div> <div>□ 답변 근거 및 자료</div> <div> <div>① 목표치 설정 출처(사전설정 여부 확인)</div> <div>○ 보금자리론 공급금액 및 유동화증권 발행금액의 목표치는 09년 주택금융공사 업무계획 수립시 사전설정 <div>▪ 보조지표인 보금자리론 잔액점유율은 09년 내부목표 수립시 사전 설정</div> </div> <div>② 목표치 수준(의욕적인 수준인지 여부를 확인)</div> <div>○ 보금자리론 공급액은 전년 실적 대비 18%, 유동화증권 발행액은 전년 실적 대비 9% 증가한 목표치를 설정함으로써, 금융위기 상황에서 통상적인 사업수행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설정</div> <div>③ 목표치 설정 근거(구체적인 근거 확인)</div> <div>○ 보금자리론 공급 목표 <div>▪ '08년 말 보금자리론 잔액점유율은 약4.29% 수준이며 '09년도 잔액점유율 목표치는 전년기준 121%인 5.2%로 설정 <div>－ '09년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잔액을 금융연구원의 '주택담보대출 수요함수 모형'을 활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약248조원 추정</div> <div>－ 보금자리론 잔액점유율 목표 달성을 위해 신규 공급해야 할 보금자리론은 약 4.1조원으로 추정</div> </div> <div>▪ 아파트입주물량 및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모두 감소추세인 대외 여건을 감안시, 09년도 보금자리론 공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div>* 아파트입주물량 : (05~07년 평균) 31만호 → (08년) 32만호</div> </div> </div> </div> </div> </div>	구분	'06	'07	'08	'09	'10	'11	○ 보금자리론 공급실적 달성도(%)	26.7	97.2	114.7	118.9			▪ 계획(억원)	52,000	37,000	37,000	50,000			▪ 실적(억원)	13,867	35,952	42,436	59,430			○ 유동화증권 발행실적 달성도(%)	26.2	70.8	98.6	223.5			▪ 계획(억원)	52,000	42,000	39,000	42,000			▪ 실적(억원)	13,622	29,730	38,468	93,850			0
구분	'06	'07	'08	'09	'10	'11																																															
○ 보금자리론 공급실적 달성도(%)	26.7	97.2	114.7	118.9																																																	
▪ 계획(억원)	52,000	37,000	37,000	50,000																																																	
▪ 실적(억원)	13,867	35,952	42,436	59,430																																																	
○ 유동화증권 발행실적 달성도(%)	26.2	70.8	98.6	223.5																																																	
▪ 계획(억원)	52,000	42,000	39,000	42,000																																																	
▪ 실적(억원)	13,622	29,730	38,468	93,850																																																	

		<p>→ (09년 예상) 28만호</p> <p>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 (05~07년 평균) 50만호 → (08년) 35만호 → (09년 예상) 35만호 수준</p> <p>－ 보금자리론 잔액점유율 제고 등 공급확대 의지목표로써 최종 5조원으로 설정</p>	
		<p>○ 유동화증권 발행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동화증권 발행규모는 기초자산인 보금자리론 공급규모와 연계되어 있음</li> <li>▪ 09년도 보금자리론 공급목표치 5조원 설정함에 따라 유동화증권 발행 목표치는 4.2조원으로 설정</li> <li>－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가산금리 급등으로 유동화증권 발행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의욕적인 목표임</li> <li>* 보금자리론 대출금리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상황 하에서 유동화증권 가산금리가 급등(6월:79bp→12월:390bp)함에 따라 채권유동화에 따른 공사의 손실발생 불가피</li> <li>－ 가산금리 급등에 따른 시장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장기 채권 시장에 유동화증권 발행, 모기자-MBS 스왑 및 탄력적인 매입보유 추진 등을 적극 시행해야 달성 가능한 목표치임</li> <li>－ 금융회사의 보금자리론 대출취급 시점부터 공사의 유동화증권 발행까지는 약 3개월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09년 보금자리론 공급목표 5조원 중 09.10~12월에 공급될 약 1.3조원은 당해연도에 유동화증권 발행이 불가</li> <li>* 근저당권 설정, 대출서류 취합, 자산실사, 금융위 양도등록 등</li> <li>－ 반면, 08.10~12월에 공급된 보금자리론을 기초로 09년 상반기 중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야 하나 해당기간에 공급된 보금자리론은 약 0.3조원으로 저조*</li> <li>* 08년 하반기 금융위기에 따른 가산금리 급등, 채권시장 수급 악화 등으로 공사의 손실이 급증함에 따라 보금자리론 공급시 자금용도를 제한하는 등의 공급량 축소조치 시행</li> <li>－ 따라서, 09년 중 유동화증권 발행가능 금액은 당해연도 발행이 불가한 1.3조원 차감하고 08년도 하반기 공급분 약 0.3조원을 반영한 4조원이 적정 발행금액이나,</li> <li>－ 유동화증권 발행확대의 의지목표로써 최종 4.2조원으로 설정</li> </ul>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2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가?	예	<div> <div> <div>□ 답변 근거 종합</div> <div>○ 사업추진 실태에 대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생한 문제점을 수시 보완함으로써 사업목적 달성 및 산출의 질 제고 위해 노력</div> </div> <div> <div>□ 답변 근거 및 자료</div> <div>① 모니터링명 : 보금자리론 공급 현황</div> <table> <tr> <th>구 분</th> <th>주요내용</th> </tr> <tr> <td>주기</td> <td>▪매일</td> </tr> <tr> <td>실시시기</td> <td>▪매일</td> </tr> <tr> <td>주체</td> <td>▪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td> </tr> <tr> <td>점검내용·방법</td> <td>▪일별 보금자리론 공급실적 보고서를 생산하여 공급실적 변동 추이 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td> </tr> <tr> <td>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td> <td>▪주택담보대출의 약 92%를 차지하는 은행권 변동금리 대출의 이자부담 전가로 서민가계 부실화가 우려되므로 장기 고정 금리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지속적 공급 확대 필요* *09.6월말 보금자리론 공급실적 달성도(36.4%) 저조</td> </tr> <tr> <td>해결실적</td> <td>▪시장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금리 인상 억제 노력 및 판매 금융기관 확대 등 상품경쟁력 제고를 통해 장기 고정 금리 대출 수요 증가* *09.12월말 보금자리론 공급계획 초과 달성(118.9%)</td> </tr> </table> <div>② 모니터링명 : 금리동향 및 유동화증권 발행 스프레드 현황</div> <table> <tr> <th>구 분</th> <th>주요내용</th> </tr> <tr> <td>주기</td> <td>▪매주</td> </tr> <tr> <td>실시시기</td> <td>▪매주 금요일</td> </tr> <tr> <td>주체</td> <td>▪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td> </tr> <tr> <td>점검내용·방법</td> <td>▪금리동향 및 유동화증권 발행 스프레드 현황 보고서를 통하여 공사의 손익 및 자금조달 상황을 점검</td> </tr> <tr> <td>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td> <td>▪리먼사태 이후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유동성위기가 심각하게 부각되어 국고채를 제외한 신용채권에 대한 수요가 위축됨 ▪이에 따른 유동화증권 발행스프레드의 비정상적 급등으로 보금자리론 재원 조달에 차질 발생</td> </tr> <tr> <td>해결실적</td> <td>▪공사채 발행(13,400억원)을 통한 매입보유 추진 등의 증권발행 시기 조절 및 은행 단기차입금 연장을 통해 보금자리론 공급재원 조달의 안정적 추진</td> </tr> </table> </div> </div>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매일	실시시기	▪매일	주체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점검내용·방법	▪일별 보금자리론 공급실적 보고서를 생산하여 공급실적 변동 추이 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주택담보대출의 약 92%를 차지하는 은행권 변동금리 대출의 이자부담 전가로 서민가계 부실화가 우려되므로 장기 고정 금리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지속적 공급 확대 필요* *09.6월말 보금자리론 공급실적 달성도(36.4%) 저조	해결실적	▪시장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금리 인상 억제 노력 및 판매 금융기관 확대 등 상품경쟁력 제고를 통해 장기 고정 금리 대출 수요 증가* *09.12월말 보금자리론 공급계획 초과 달성(118.9%)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매주	실시시기	▪매주 금요일	주체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점검내용·방법	▪금리동향 및 유동화증권 발행 스프레드 현황 보고서를 통하여 공사의 손익 및 자금조달 상황을 점검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리먼사태 이후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유동성위기가 심각하게 부각되어 국고채를 제외한 신용채권에 대한 수요가 위축됨 ▪이에 따른 유동화증권 발행스프레드의 비정상적 급등으로 보금자리론 재원 조달에 차질 발생	해결실적	▪공사채 발행(13,400억원)을 통한 매입보유 추진 등의 증권발행 시기 조절 및 은행 단기차입금 연장을 통해 보금자리론 공급재원 조달의 안정적 추진	10.0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매일																															
실시시기	▪매일																															
주체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점검내용·방법	▪일별 보금자리론 공급실적 보고서를 생산하여 공급실적 변동 추이 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주택담보대출의 약 92%를 차지하는 은행권 변동금리 대출의 이자부담 전가로 서민가계 부실화가 우려되므로 장기 고정 금리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지속적 공급 확대 필요* *09.6월말 보금자리론 공급실적 달성도(36.4%) 저조																															
해결실적	▪시장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금리 인상 억제 노력 및 판매 금융기관 확대 등 상품경쟁력 제고를 통해 장기 고정 금리 대출 수요 증가* *09.12월말 보금자리론 공급계획 초과 달성(118.9%)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매주																															
실시시기	▪매주 금요일																															
주체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점검내용·방법	▪금리동향 및 유동화증권 발행 스프레드 현황 보고서를 통하여 공사의 손익 및 자금조달 상황을 점검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리먼사태 이후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유동성위기가 심각하게 부각되어 국고채를 제외한 신용채권에 대한 수요가 위축됨 ▪이에 따른 유동화증권 발행스프레드의 비정상적 급등으로 보금자리론 재원 조달에 차질 발생																															
해결실적	▪공사채 발행(13,400억원)을 통한 매입보유 추진 등의 증권발행 시기 조절 및 은행 단기차입금 연장을 통해 보금자리론 공급재원 조달의 안정적 추진																															

③ 모니터링명 : 유동화증권 지급보증배수 현황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매월
실시시기	▪매월 말
주체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점검내용·방법	▪지급보증배수 운영 현황 보고서를 통하여 지급보증 범정한도(50배) 관리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모기자-MBS 스왑 등의 유동화증권 발행 확대로 인해 지급보증배수 한도가 소진되어 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차질 발생
해결실적	▪추경예산을 통한 자본금 지원 및 예산절감 노력 등 경영효율화 추진으로 적정 지급보증운용배수* 유지 *09말 지급보증배수 29.9배

④ 모니터링명 : VOC(고객의 소리) 분석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매월
실시시기	▪월중
주체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점검내용·방법	▪보금자리론 이용고객의 불편 및 제도건의 사항 등을 홈페이지, 고객센터 해피콜, 우편 등을 통하여 조사 및 접수하여 개선과제를 선정 및 추진경과 관리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대출금리, 금융기관 위탁취급에 따른 업무처리 불편 등에 고객 불만 편중
해결실적	▪대출원가 절감을 통해 금리경쟁력을 제고하고 On-line 대출신청시스템 확대를 통해 고객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보금자리론 신상품을 10년 6월 출시 예정

# 참고자료(3-2-1) : VOC(고객의 소리) 분석 사례(12월) 발췌



⑤ 모니터링명 :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주택보유수 관리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매년
실시시기	▪연중
주체	▪한국주택금융공사
점검내용·방법	▪대출실행 및 대출채권 유동화를 위한 자산실사 시 주택 보유수 확인을 통해 이차보전의 자격 여부 확인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대출실행 후 주택 추가취득에 대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관련기준 미흡
해결실적	▪주택보유수에 대한 사후관리를 국토해양부의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연 1회 이상 확인하도록 사후관리 강화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이차보전 부당수령자에 대해 환수 조치 신설

※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의 이차보전은 자본금 출자를 통한 지원이 아닌,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사업으로 전체 보금자리론 공급사업의 약 21%로 극히 일부분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3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 가?	아니요	<p>□ 답변 근거 종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사업의 특성에 적합한 계량, 비계량평가 기법을 활용하며 독립된 외부전문기관이 사업의 전체에 대해 사업성과를 평가 하였으나,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해당 사업의 목적인 '서민 내집마련 지원 및 장기채권시장 활성화'에 대한 본 사업의 효과성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사업평가로 보기 어려움</li> </ul> <p>□ 답변 근거 및 자료</p> <p>&lt; 사업평가 개요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 가 명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li> <li>○ 평가기간 : '08.3~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9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10.7월에 발표 예정으로 '08년도 경영 실적평가 결과를 제시함(최근 3년 이내 실시한 평가 인정 가능)</li> </ul> </li> <li>○ 평가요소 : 사업성과를 계량적 평가 및 사업계획, 성과계획, 사업추진관리, 성과환류 방식의 적절성을 비계량 평가</li> <li>○ 평가기법 : 계량, 비계량 평가</li> <li>○ 평가결과 : 2008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지 표 명</th> <th>가중치(점)</th> <th>등급</th> </tr> </thead> <tbody> <tr> <td>주요사업 추진계획</td> <td>5</td> <td>A</td> </tr> <tr> <td>장기금융시장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td> <td>5</td> <td>B</td> </tr> <tr> <td>주택금융 등 조달실적</td> <td>5</td> <td>5.000</td> </tr> </tbody> </table> <p>&lt; 사업평가 주제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기관 : 기획재정부</li> <li>○ 평 가 자 : 200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단</li> </ul> <p>&lt; 평가대상 사업 범위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사업의 전체에 대한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함</li> </ul> <p># 참고자료(3-3-1) : '08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보고서 (유동화부문)</p>	지 표 명	가중치(점)	등급	주요사업 추진계획	5	A	장기금융시장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	5	B	주택금융 등 조달실적	5	5.000	0
지 표 명	가중치(점)	등급														
주요사업 추진계획	5	A														
장기금융시장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	5	B														
주택금융 등 조달실적	5	5.000														

#### 4. 사업성과 및 환류 단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어느 정도	<div> <div> <div>□ 답변 근거 종합</div> <div> <div>○ 본 사업의 당초 계획한 성과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2-2가 “아니요”이므로 달성도는 “어느 정도”에 해당</div> <div>○ 본 사업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공급하고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사업임</div> <div>○ 본 사업의 당초 계획한 성과를 모두 초과 달성하였음 <div> <div>▪ 보금자리론 공급실적 : 목표 50,000억원, 달성 59,430억원</div> <div>▪ 유동화증권 발행실적 : 목표 42,000억원, 달성 93,850억원</div> </div> </div> </div> <div> <div>□ 답변 근거 및 자료</div> <div> <div>① 성과지표의 목표치(2-2) 달성도</div> <div> <div>○ 보금자리론 공급실적(목표 50,000억원 → 달성 59,430억원) <div> <div>▪ 한국주택금융공사 통계에 의하면 보금자리론 공급실적은 목표치인 50,000억원을 초과하여 달성함</div> </div> </div> <div>○ 유동화증권 발행실적(목표 42,000억원 → 달성 93,850억원) <div> <div>▪ 한국주택금융공사 통계에 의하면 유동화증권 발행실적은 목표치인 42,000억원을 초과하여 달성함</div> </div> </div> </div> </div> <div> <div>(억원, %)</div> <table> <tr> <th>구분</th> <th>계획(A)</th> <th>달성(B)</th> <th>달성률(B/A)</th> </tr> <tr> <td>▪ 보금자리론 공급실적</td> <td>50,000</td> <td>59,430</td> <td>118.9</td> </tr> <tr> <td>▪ 유동화증권 발행실적</td> <td>42,000</td> <td>93,850</td> <td>223.5</td> </tr> </table> </div> </div> </div> </div>	구분	계획(A)	달성(B)	달성률(B/A)	▪ 보금자리론 공급실적	50,000	59,430	118.9	▪ 유동화증권 발행실적	42,000	93,850	223.5
구분	계획(A)	달성(B)	달성률(B/A)												
▪ 보금자리론 공급실적	50,000	59,430	118.9												
▪ 유동화증권 발행실적	42,000	93,850	223.5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4.2	사업평가 결과,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	아니요	<div> <div> <div>□ 답변 근거 종합</div> <div> <div>○ 3-3이 “아니요”이므로 지침상 “아니요”에 해당</div> <div>○ ‘08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 전반적인 사업의 효과성 및 운영적절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었음</div> </div> <div>□ 답변 근거 및 자료</div> <div>&lt; 사업효과 &gt;</div> <div> <div>○ ‘04.3월 공사 설립이후 총 27만 세대의 내집마련 지원 및 장기 분할상환 대출 규모 확대 등의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였고,</div> <div>○ 민간 금융기관 보유 주택담보대출 유동화 등을 포함하여 약 30조원의 유동화증권을 발행함에 따라 금융기관에 유동성 지원과 자산건전성 제고 등 장기채권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였음</div> </div> </div> <table> <tr> <th>검토사항</th> <th>검토결과 및 근거</th> </tr> <tr> <td>① 사용데이터 (출처, 기간 등)</td> <td>▪보금자리론 공급금액 및 유동화증권 발행금액 (‘04.3월 공사 설립이후부터 ‘09년 12월말까지)</td> </tr> <tr> <td>② 분석결과</td> <td> <div>&lt;보금자리론 공급&gt;</div> <div>▪공사 설립이후 총 27만 세대에게 총 23조원의 보금자리론을 공급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함</div> <div>&lt;유동화증권 발행&gt;</div> <div>▪공사 설립이후 총 30조원의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장기채권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함</div> </td> </tr> <tr> <td>③ 순효과</td> <td> <div>▪보금자리론 공급은 단기 변동금리에 과도하게 편중된 주택담보대출시장을 안정적인 장기·고정금리 대출 시장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함</div> <div>-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06.12월) 5.2% → (‘09.3월) 7.6%</div> <div>- 만기 10년이상 장기대출 비중 확대 (‘04.12월) 20.7% → (‘08.12월) 59.6%</div> <div>⇒ 주택담보대출시장의 선진화 및 안정화에 기여</div> </td> </tr> <tr> <td>④ 정책적 시사점</td> <td>▪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장기채권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역할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장기 고정금리 보금자리론 공급과 유동화증권 발행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td> </tr> </table> </div>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사용데이터 (출처, 기간 등)	▪보금자리론 공급금액 및 유동화증권 발행금액 (‘04.3월 공사 설립이후부터 ‘09년 12월말까지)	② 분석결과	<div>&lt;보금자리론 공급&gt;</div> <div>▪공사 설립이후 총 27만 세대에게 총 23조원의 보금자리론을 공급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함</div> <div>&lt;유동화증권 발행&gt;</div> <div>▪공사 설립이후 총 30조원의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장기채권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함</div>	③ 순효과	<div>▪보금자리론 공급은 단기 변동금리에 과도하게 편중된 주택담보대출시장을 안정적인 장기·고정금리 대출 시장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함</div> <div>-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06.12월) 5.2% → (‘09.3월) 7.6%</div> <div>- 만기 10년이상 장기대출 비중 확대 (‘04.12월) 20.7% → (‘08.12월) 59.6%</div> <div>⇒ 주택담보대출시장의 선진화 및 안정화에 기여</div>	④ 정책적 시사점	▪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장기채권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역할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장기 고정금리 보금자리론 공급과 유동화증권 발행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0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사용데이터 (출처, 기간 등)	▪보금자리론 공급금액 및 유동화증권 발행금액 (‘04.3월 공사 설립이후부터 ‘09년 12월말까지)													
② 분석결과	<div>&lt;보금자리론 공급&gt;</div> <div>▪공사 설립이후 총 27만 세대에게 총 23조원의 보금자리론을 공급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함</div> <div>&lt;유동화증권 발행&gt;</div> <div>▪공사 설립이후 총 30조원의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장기채권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함</div>													
③ 순효과	<div>▪보금자리론 공급은 단기 변동금리에 과도하게 편중된 주택담보대출시장을 안정적인 장기·고정금리 대출 시장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함</div> <div>-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06.12월) 5.2% → (‘09.3월) 7.6%</div> <div>- 만기 10년이상 장기대출 비중 확대 (‘04.12월) 20.7% → (‘08.12월) 59.6%</div> <div>⇒ 주택담보대출시장의 선진화 및 안정화에 기여</div>													
④ 정책적 시사점	▪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장기채권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역할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장기 고정금리 보금자리론 공급과 유동화증권 발행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43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였는가?	예	<div> <div> <div>□ 답변 근거 종합</div> <div> <div>○ 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유동화증권 발행방식 개선으로 발행비용 절감 및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On-Line을 활용한 e-보금자리론 공급 확대 등의 효율성을 제고함</div> <div> <div>▪ 유동화증권 발행비용 약 200억원 절감</div> <div>▪ e-보금자리론 공급금액 전년 대비 5,159억원 증가</div> </div> </div> <div>□ 답변 근거 및 자료</div> <div> <div>① 비용절감 내용</div> <div> <div>○ 추진배경</div> <div> <div>▪ 기존 유동화증권 발행 시 주관회사의 제안 스프레드에 따라기는 '총액인수방식'으로 인해 발행비용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으나,</div> <div>▪ '입찰 후 잔액인수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중소 증권사와 투자가에 대한 인수기회 확대 및 경쟁체제 강화 등의 발행 방식 개선으로 발행비용 절감 추진</div> </div> </div> <div> <div>○ 발행비용 절감 규모</div> <div>(억원 %)</div> <table> <tr> <th>'09 예상 발행비용*(A)</th> <th>절감액(B)</th> <th>절감율(B/A)</th> </tr> <tr> <td>2,558</td> <td>200</td> <td>7.82</td> </tr> </table> <div>*모기지-MBS 스왑은 제외</div> </div> <div> <div>○ 비용절감 내역</div> <div>▪ 유동화증권 발행방식 개선 이후 발행비용 절감(약 200억원)</div> <table> <tr> <th>발행 회차</th> <th>발행일</th> <th>발행액</th> <th>제안 스프레드</th> <th>입찰 스프레드</th> <th>절감 스프레드</th> <th>비용 절감액</th> </tr> <tr> <td>SLBS 2009-4</td> <td>'09.08.25</td> <td>6,235</td> <td>104bp</td> <td>84bp</td> <td>20bp</td> <td>50억원</td> </tr> <tr> <td>MBS 2009-8</td> <td>'09.09.15</td> <td>5,527</td> <td>91bp</td> <td>78bp</td> <td>13bp</td> <td>28억원</td> </tr> <tr> <td>MBS 2009-10</td> <td>'09.10.16</td> <td>4,958</td> <td>93bp</td> <td>74bp</td> <td>19bp</td> <td>37억원</td> </tr> <tr> <td>MBS 2009-11</td> <td>'09.11.10</td> <td>5,444</td> <td>83bp</td> <td>67bp</td> <td>16bp</td> <td>34억원</td> </tr> <tr> <td>MBS 2009-12</td> <td>'09.11.20</td> <td>3,143</td> <td>85bp</td> <td>68bp</td> <td>17bp</td> <td>21억원</td> </tr> <tr> <td>MBS 2009-14</td> <td>'09.12.18</td> <td>3,575</td> <td>81bp</td> <td>60bp</td> <td>21bp</td> <td>30억원</td> </tr> <tr> <td>합 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200억원</td> </tr> </table> </div> </div> </div> </div>	'09 예상 발행비용*(A)	절감액(B)	절감율(B/A)	2,558	200	7.82	발행 회차	발행일	발행액	제안 스프레드	입찰 스프레드	절감 스프레드	비용 절감액	SLBS 2009-4	'09.08.25	6,235	104bp	84bp	20bp	50억원	MBS 2009-8	'09.09.15	5,527	91bp	78bp	13bp	28억원	MBS 2009-10	'09.10.16	4,958	93bp	74bp	19bp	37억원	MBS 2009-11	'09.11.10	5,444	83bp	67bp	16bp	34억원	MBS 2009-12	'09.11.20	3,143	85bp	68bp	17bp	21억원	MBS 2009-14	'09.12.18	3,575	81bp	60bp	21bp	30억원	합 계				-	-	200억원	5.0
'09 예상 발행비용*(A)	절감액(B)	절감율(B/A)																																																																
2,558	200	7.82																																																																
발행 회차	발행일	발행액	제안 스프레드	입찰 스프레드	절감 스프레드	비용 절감액																																																												
SLBS 2009-4	'09.08.25	6,235	104bp	84bp	20bp	50억원																																																												
MBS 2009-8	'09.09.15	5,527	91bp	78bp	13bp	28억원																																																												
MBS 2009-10	'09.10.16	4,958	93bp	74bp	19bp	37억원																																																												
MBS 2009-11	'09.11.10	5,444	83bp	67bp	16bp	34억원																																																												
MBS 2009-12	'09.11.20	3,143	85bp	68bp	17bp	21억원																																																												
MBS 2009-14	'09.12.18	3,575	81bp	60bp	21bp	30억원																																																												
합 계				-	-	200억원																																																												

- 유동화증권 발행비용 절감을 통해 대출금리 인상요인을 억제함으로써 실질적인 금리인하 효과를 실현
- \* 09년 하반기 발행방식을 개선하지 않았을 경우 약60bp의 역마진이 발생하게 되어 공사의 손실방지를 위해서는 공사가 감당할 수 있는 역마진 약 40bp 이외에 약 20bp의 금리인상 또는 보금자리론 공급축소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 \* 발행방식 개선을 통하여 역마진 수준을 약40bp 내외로 축소 운용하여 금리인상을 최대한 억제

시기	손익균형금리		보금자리론 대출금리(C)	A-C	B-C
	발행방식 개선(A)	발행방식 개선(B)			
9월	6.74	6.61	6.07	0.67	0.54
10월	6.79	6.60	6.07	0.72	0.53
11월	6.64	6.47	6.07	0.57	0.40
12월	6.50	6.29	6.08	0.42	0.21
평균	6.67	6.49	6.07	0.60	0.42

# 참고자료(4-3-1) : 입찰 후 잔액인수 방식 도입의 노력과 성과

## ② 사업효율성 제고 내용

- On-Line 공급채널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 노력으로 전년도 공급금액(1.2조원) 대비 약42% 증가한 1.7조원의 e-보금자리론 공급
  - e-보금자리론 시스템의 업무프로세스 확대
    - \* 금리우대, 금리설계보금자리론 등 처리상품 다양화
    - \* 대출한도 시뮬레이션, 본인인증 다양화, 원격지원시스템 도입, 담보물 맞춤검색 등 고객 편의성 증대를 위한 기능 구축
  - e-보금자리론 취급기관 확대를 통한 고객 접근성 제고
    - \* '08년도 10개 → '09년도 12개 금융기관으로 확대 (신한은행, 부산은행)
  - 기존 e-보금자리론 시스템과는 별도로 새로운 On-Line을 활용한 보금자리론 개발 추진('10. 6월 출시예정)
    -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직접 고객을 유치하고 사전 양수적격 심사 및 사후관리를 수행함으로써 금융기관 지급수수료 절감
    - \* 금융기관이 대출취급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직접 원리금 수납부터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개발 착수
- ⇒ 금융기관 지급수수료 절감을 통한 0.3% 내외의 금리인하 효과 발생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4-4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 사항을 사업구조 개선에 환류하였는가?	예	<div> <div>□ 답변 근거 종합</div> <div>○ 국정감사, 정부의 경영실적평가 및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관련제도를 개선함</div> </div> <div> <div>□ 답변 근거 및 자료</div> <div> <div>① 보증자리론 금리경쟁력 약화</div> <table> <tr> <th>구 분</th> <th>주요내용</th> </tr> <tr> <td>제기자(일시)</td> <td>■국회('09.10.09 국정감사)</td> </tr> <tr> <td>개선내용</td> <td>■보증자리론 평균금리가 은행 평균 금리보다 높은 상황에서 보증자리론 금리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금리인하 방안 필요</td> </tr> <tr> <td>추진일정</td> <td> <div>■2009.11:금리 경쟁력을 갖춘 신상품* 개발 검토</div> <div>■2010. 1~6:신상품 개발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div> <div>■2010. 6:신상품 출시</div> <div>* 양수 시전적격심사 및 원리금직접수납시스템 등의 공사 직접 수행에 따른 비용 절감분을 금리 인하 재원으로 활용</div> </td> </tr> <tr> <td>확정절차</td> <td>■금융위 담당사무관 보고('09.12) → '10년도 예산에 시스템 구축 비용 반영</td> </tr> </table> <div> <div>② 민간 금융기관 보유 주택담보대출 유동화 실적 저조</div> <table> <tr> <th>구 분</th> <th>주요내용</th> </tr> <tr> <td>제기자(일시)</td> <td>■200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단('09.08)</td> </tr> <tr> <td>개선내용</td> <td> <div>■민간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기초로 공사 지급보증부 MBS를 발행하고 발행된 MBS를 금융기관이 매입하는 구조</div> <div>-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는 35%인 반면 MBS는 0%이므로 금융기관 BIS 비율 개선 및 주택담보대출의 신용위험 제거</div> <div>- 시장매각이나 RP거래를 통해 유동성 확보 가능</div> </td> </tr> <tr> <td>추진일정</td> <td> <div>■'08.12:발행기관 선정 및 MBS 회계처리 방안 수립</div> <div>■'09. 1:민간 금융기관과 MOU체결 자산선정 기준 및 거래구조 협의</div> <div>■'09. 3:우리은행 보유 주택담보대출 유동화(3,671억원)</div> <div>■'09. 4:SC제일은행 보유 주택담보대출 유동화(19,681억원)</div> <div>■'09. 6:씨티은행 보유 주택담보대출 유동화(3,292억원)</div> <div>■'09. 9:국민은행 보유 주택담보대출 유동화(18,088억원)</div> <div>■'09.12:삼성생명보험 보유 주택담보대출 유동화(4,633억원)</div> </td> </tr> <tr> <td>확정절차</td> <td>■금융위 담당과장 보고('08.10)</td> </tr> </table> </div> </div> </div>	구 분	주요내용	제기자(일시)	■국회('09.10.09 국정감사)	개선내용	■보증자리론 평균금리가 은행 평균 금리보다 높은 상황에서 보증자리론 금리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금리인하 방안 필요	추진일정	<div>■2009.11:금리 경쟁력을 갖춘 신상품* 개발 검토</div> <div>■2010. 1~6:신상품 개발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div> <div>■2010. 6:신상품 출시</div> <div>* 양수 시전적격심사 및 원리금직접수납시스템 등의 공사 직접 수행에 따른 비용 절감분을 금리 인하 재원으로 활용</div>	확정절차	■금융위 담당사무관 보고('09.12) → '10년도 예산에 시스템 구축 비용 반영	구 분	주요내용	제기자(일시)	■200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단('09.08)	개선내용	<div>■민간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기초로 공사 지급보증부 MBS를 발행하고 발행된 MBS를 금융기관이 매입하는 구조</div> <div>-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는 35%인 반면 MBS는 0%이므로 금융기관 BIS 비율 개선 및 주택담보대출의 신용위험 제거</div> <div>- 시장매각이나 RP거래를 통해 유동성 확보 가능</div>	추진일정	<div>■'08.12:발행기관 선정 및 MBS 회계처리 방안 수립</div> <div>■'09. 1:민간 금융기관과 MOU체결 자산선정 기준 및 거래구조 협의</div> <div>■'09. 3:우리은행 보유 주택담보대출 유동화(3,671억원)</div> <div>■'09. 4:SC제일은행 보유 주택담보대출 유동화(19,681억원)</div> <div>■'09. 6:씨티은행 보유 주택담보대출 유동화(3,292억원)</div> <div>■'09. 9:국민은행 보유 주택담보대출 유동화(18,088억원)</div> <div>■'09.12:삼성생명보험 보유 주택담보대출 유동화(4,633억원)</div>	확정절차	■금융위 담당과장 보고('08.10)	10.0
구 분	주요내용																							
제기자(일시)	■국회('09.10.09 국정감사)																							
개선내용	■보증자리론 평균금리가 은행 평균 금리보다 높은 상황에서 보증자리론 금리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금리인하 방안 필요																							
추진일정	<div>■2009.11:금리 경쟁력을 갖춘 신상품* 개발 검토</div> <div>■2010. 1~6:신상품 개발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div> <div>■2010. 6:신상품 출시</div> <div>* 양수 시전적격심사 및 원리금직접수납시스템 등의 공사 직접 수행에 따른 비용 절감분을 금리 인하 재원으로 활용</div>																							
확정절차	■금융위 담당사무관 보고('09.12) → '10년도 예산에 시스템 구축 비용 반영																							
구 분	주요내용																							
제기자(일시)	■200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단('09.08)																							
개선내용	<div>■민간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기초로 공사 지급보증부 MBS를 발행하고 발행된 MBS를 금융기관이 매입하는 구조</div> <div>-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는 35%인 반면 MBS는 0%이므로 금융기관 BIS 비율 개선 및 주택담보대출의 신용위험 제거</div> <div>- 시장매각이나 RP거래를 통해 유동성 확보 가능</div>																							
추진일정	<div>■'08.12:발행기관 선정 및 MBS 회계처리 방안 수립</div> <div>■'09. 1:민간 금융기관과 MOU체결 자산선정 기준 및 거래구조 협의</div> <div>■'09. 3:우리은행 보유 주택담보대출 유동화(3,671억원)</div> <div>■'09. 4:SC제일은행 보유 주택담보대출 유동화(19,681억원)</div> <div>■'09. 6:씨티은행 보유 주택담보대출 유동화(3,292억원)</div> <div>■'09. 9:국민은행 보유 주택담보대출 유동화(18,088억원)</div> <div>■'09.12:삼성생명보험 보유 주택담보대출 유동화(4,633억원)</div>																							
확정절차	■금융위 담당과장 보고('08.10)																							

### ③ 친환경주택에 대한 혜택 제고

구 분	주요내용
제기자(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주택금융공사 창익경영협의회 결과를 토대로 추진('09.06)</li> <li>- '09년 하반기에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한 친환경 금융상품 개발 검토 후 '10년 상반기 중 상품 출시 예정</li> </ul>
개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환경주택*을 담보로 보증자리론을 신청하는 고객에 대하여 금리 등 대출조건 우대</li> <li>* '주택도시연구원' 등의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주택</li> </ul>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9. 8~12: 녹색보증자리론 상품(안) 검토</li> <li>'10. 1~2: 상품 및 전산개발 등 금융기관 업무협의</li> <li>'10. 3: 친환경주택에 대한 가산금리 적용 배제 시행</li> </ul>
확정절차	금융위 담당사무관 보고('09.12), '10년도 업무계획서에 반영

### ④ 보증자리론 투기수요 억제

구 분	주요내용
제기자(일시)	국회('09.10.09 국정감사)
개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증자리론 대출한도 하향조정 및 투기적 수단 활용 지적에 따라 투기지역 및 6억원 초과주택에 대해 가산금리를 신설하여 고액대출 및 투기수요를 간접억제</li> </ul>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9.10: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보증자리론 가산금리 운영 검토</li> <li>'09.11: 가산금리 운영을 위한 공사 및 금융기관 전산시스템 구축</li> <li>'09.12: 보증자리론 가산금리 시행</li> </ul>
확정절차	금융위 담당사무관 보고('09.11)



### 3.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시행된 서민정책 현황 및 사업실적, 추진계획

① (서민금융 공급 확대) 미소금융, 햇살론, 희망홀씨대출을 통해 서민금융 공급 확대

□ 미소금융(미소금융지점) : 제도권 금융 접근이 곤란한 서민에게 대출과 더불어 자활컨설팅을 지원

○ '09.12월 미소금융 출범이후 지점설립과 동시에 대출 및 컨설팅 지원, 제도개선 등 미소금융의 조기 착근에 주력

○ (지점설립) 전국적으로 총 64개 지점 설립 (기업재단 29, 은행재단 16개, 지역지점재단 19개)을 설립

○ (대출) '10년중 8.31 현재까지 총 6,815명에 396.1억원 대출

\* 미소금융지점 224.6억원/2,595명(8.31기준), 기존 복지사업자 171.5억원 / 4,220명(8.31기준)

○ (활성화) 미소금융 방문자에 대한 서민금융 원스톱 서비스, 소액대출 활성화\*, 자원봉사단을 통한 자활지원 강화, 공공기관 무상임대 추진 등을 통해 미소금융 활성화 노력

- 특히, 소득이 낮은데도 신용등급이 양호(5~6등급)하여 금융회사 대출이 어려운 서민도 미소금융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평가체계를 개선(5, 6등급 해당자 약 1천만명 중에서

약 200만명이 대출대상에 포함)

- \* 운영자금의 영업기간요건 단축(2년→1년이상) 등 대출요건 완화 및 기업·은행계 재단의 특성화상품 도입(전통시장 상인, 용달사업자 등 대상)
- \*\* 미소금융희망봉사단 : 8.31일 기준, 1,395명 모집(전문지식 577명, 재능나눔 51명, 일손지원 596명 등)

□ **햇살론(서민금융회사)** : 정부 및 민간출연금으로 보증재원을 조성하여 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역할을 복원

- 성실한 경제활동으로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대부업 등에서 30~40%대 고금리를 부담해야하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10%대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
-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근로자(일용직·임시직 포함)에게
  - 생계자금·운영자금·창업자금을 신용등급, 사업자 등록 유무, 점포보유 유무에 따라 차등하여 대출
- 정부와 서민금융회사\* 공동으로 보증재원을 조성(2조원) 하여 향후 5년간 10조원을 대출할 계획

\*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저축은행

- '10.7.26 출시 이후 8.31까지 61,663명에 총 5,453.7억원 대출

□ **희망홀씨대출(은행)** : 은행이 서민전용대출을 개발하여 지원함으로써 은행의 공익적 역할을 이행

- '09.3월부터 16개 시중은행이 저신용·저소득 서민을 위한 대출상품을 개발하여 지원중(2천만원 이내, 평균금리 13%대)
- '09.3월~'10.6월까지 34만9천명에게 총 2.3조원을 대출
- 대출방식별 비중은 신용대출 7,684억원(33.4%),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부대출 1조5,324억원(66.6%)로 보증부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

## 2 금리·수수료 부담 경감

- (카드수수료 인하) 대형마트와의 경쟁 등으로 어려운 사업 여건하에 놓여 있는 영세한 전통시장 상인 및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인하
  - (전통시장 가맹점) 연매출 9,600만원 미만인 전통시장 가맹점의 신용카드수수료율 상한을 2.0~2.2%에서 1.6~1.8%로 인하
  - (중소 가맹점) 전통시장 가맹점 이외에 연간 매출 9,600만원 미만인 가맹점의 신용카드수수료율 상한을 3.3~3.6%에서 2.0~2.15%로 인하
- (최고금리 인하) 7.21, 대부업 등 전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대출금리 법정상한을 5%p인하(연49%→연44%)
-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출 금리인하 등) 현재 실태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일부 대형 여전회사를 중심으로 대출

## 금리 인하 및 취급수수료 폐지 시행

### ③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 '금융채무불이행자' 대상의 채무조정 (원리금 감면·만기연장)을 통해 신용회복지원

- '08년 이후 신용회복위원회(비영리단체) 21만명, 신용회복기금 (자산관리공사) 11만명 등 총 32만명이상에게 채무조정을 지원

□ (취업지원) 정부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는 별도로 신용회복기금으로 취업지원펀드를 조성하여 1인 채용시 1년간 최대 810만원(정부 540만원, 금융권 270만원) 지원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 채용 유도(금년 7.1부터 시행 중)

- 7월이후 8.31까지 총 162명의 취업을 지원(신복위 126명, 신복기금 36명)

□ (전환대출)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서민들의 20%이상 고금리대출(대부업체·캐피탈 등)을 은행의 12%내외 대출로 전환토록 지원

- '08.12월 전환대출 시행 이후 금년 8월말까지 24,174명에 2,354억원 전환대출 지원

□ (신용회복프로그램 성실이행자 소액대출) 신용회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년이상 성실상환자에 생활안정자금

을 500만원 이내에서 4%로 대출(향후 5년간 1,500억원)하여  
성공적 재기를 지원

- \* 신용회복기금 : 1,589명 49억원('10.6~8월)
- 신용회복위원회 : 11,792명 366억원('10.1~8월)

#### 4. 최근 3개년 동안 연도별 금융 공공기관, 국책은행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내용 및 평가순위 표

##### □ 금융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관련

- 경영평가단(기획재정부)이 작성한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및 보도자료 별첨

##### ※ 별첨 내용

- '08~'10년도 경영실적 평가관련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 국책은행(산은, 기은, 수은) 경영실적 평가내용 및 평가순위

##### ○ 평가내용

- 재무분야(10점내외) : 수익성관리 노력
- 고객분야(60점내외) : 고객만족도, 자금조달 및 공급목표달성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등
- 책임경영분야(30점내외) : 경영관리합리화, 금융리스크관리 등

##### ○ 평가순위(등급)

	08	09	10
산은	S	S	A
기은	S	S	A
수은	S	S	A

5. 국책은행 및 금융공공기관별 2009년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급 및 성과급 지급율(직원, 상임이사, 기관장 구분)

☐ 국책은행별 평가 등급 및 성과급 지급율

	평가등급	성과급 지급율*
산은	A	90%
기은	A	90%
수은	A	90%

\* 직원, 상임이사, 기관장 모두 동일

☐ 금융공공기관별 2009년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급 및 성과급  
지급율

○ 별첨참조

<b>기획재정부</b> <small>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REPUBLIC OF KOREA</small>		<b>보도자료</b>	
		<b>보도일시</b>	<b>2008. 6.20(금) 17:00 이후</b>
<b>배포일시</b>	2008. 6.20(금) 10:00	<b>담당부서</b>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
<b>담당과장</b>	박성동(2150-5550)	<b>담당자</b>	이종석 서기관(2150-5551) 변민정 사무관(2150-5554) 윤윤국 사무관(2150-5553)

## 제 목 : 공기업·준정부기관 '07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

- ◆ 기획재정부는 101개 공공기관(공기업 24개, 준정부기관 77개)에 대한 '07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발표하였음

### 1. '0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개요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는 종합경영, 주요사업, 경영관리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 경영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수·회계사 등 민간전문가(139명)로 경영평가단(단장 : 현오석 현 고려대점임교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음
- '07년도 경영실적 평가의 특징은
  - 금년부터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기업(24개)과 준정부기관(77개)을 통합하여 평가체계를 일원화하고
  -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를 준정부기관까지 전면 확대하여 실시하였으며
  -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개선 실태 감사지적 사항 등을 반영하였음



## 2. 경영실적 평가결과

-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07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전반적으로 주요사업 실적 부진, 경영관리 비효율 등으로 인해 전년에 비해 하락
- ◇ 기관장의 평가결과도 책임경영 노력 미흡 등으로 전년보다 낮은 수준

### 【 공기업(24개 기관) 】

- ① 24개 공기업의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주요사업 실적 부진 등으로 전년에 비해 하락

#### < 공기업 평가결과 >

구 분	'07년(A)	'06년(B)	증감(A-B)
최 고(점)	80.0	83.5	△3.5
최 저(점)	60.2	62.3	△2.1
평 균(점)	73.2	75.7	△2.5

### ② 유형별 평가결과

- 한국전력공사(공기업1)는 정전시간 49% 단축과 아제르바이잔 등 해외사업 호조, 한국지역난방공사(공기업2)는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으로 1위 차지
- 대한석탄공사(공기업1)는 재무구조 취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공기업2)는 효과적 투자유치 프로그램 미흡 등으로 최하위

### ③ 기관장 평가결과

- 24개 공기업 기관장 평가결과는 책임경영 및 이사회 활성화 노력 부족 등으로 저조

#### < 공기업 유형별 기관장 평가결과 >

구 분	'07년(A)	'06년(B)	증감(A-B)
공기업1	74.1	77.5	△3.4
공기업2*	67.6	-	-
공기업 전체	71.4	-	-

\* 종전 정부산하기관인 공기업2 유형은 금년에 기관장 평가 처음 실시

## 【 준정부기관(77개 기관) 】

- ① 77개 준정부기관의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책임경영 미흡과 경영관리 비효율 등으로 전년보다 하락

### < 준정부기관 평가결과 >

구 분	'07년(A)	'06년(B)	증감(A-B)
최 고(점)	81.8	83.6	△1.8
최 저(점)	57.8	52.8	5.0
평 균(점)	71.4	72.4	△1.0

## ② 유형별 평가결과

- 에너지관리공단(산업진흥1)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DB구축, 에너지 절약 촉진 등의 성과로 준정부기관 전체 1위 차지
- 증권예탁결제원(산업진흥1)이 예산관리의 비효율, 경영정보관리의 취약 등으로 최하위

## ③ 기관장 평가결과

- 금년에 기관장 평가를 처음 실시한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평가점수는 67.9점으로 공기업(71.4점)보다 저조
- 유형별로는 산업진흥1 유형이 71.7점으로 상위 수준, 산업진흥2 유형이 65.8점으로 하위 수준

### < 준정부기관 유형별 기관장 평가결과 >

유형	기관수	평균	유형별 순위
검사·검증	12개	67.5	3
문화·국민생활	15개	67.2	5
산업진흥1*	11개	71.7	1
산업진흥2**	15개	65.8	6
교육훈련·연구지원	11개	67.2	4
연·기금운용	13개	68.8	2
준정부기관 전체	77개	67.9	-

\* 정원 300인 이상

\*\* 정원 300인 미만

### 3. 평가결과 후속조치

#### ① 인센티브 성과급 차등 지급

-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성과급은 지급한도내에서 지급률을 결정하여 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

##### <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한도 >

구분	공기업1 (중전 정부투자기관, 14개)	공기업2 (중전 정부신하기관, 10개)	준정부기관* (77개)
직원	월기본급의 200~500%	월기본급의 250~500%	기준월봉의 100~200%
상임이사	기본연봉의 0~100%	기본연봉의 0~100%	기준연봉의 20~100%
기관장	기본연봉의 0~200%	기본연봉의 0~200%	

\* 다만 중전 정부투자기관인 준정부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은 공기업1 유형의 성과급 지급한도 적용

#### ② 우수·부진기관에 대한 조치

- 16개 우수기관(8개 유형별 상위 2개 기관)에 대해서는
  -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및 차년도 경비예산을 기관별 여건을 고려하여 1%이내에서 증액
- 15개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 기관경고 및 차년도 경비예산을 1% 삭감
  - 경영효율화를 위해 경영컨설팅을 받도록 조치하고
    - \* 부진기관의 경영효율화 방안 마련 지원을 위해 경영컨설팅 전문가풀을 구성·운영
  - 경영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이행점검

##### < 유형별 부진기관 현황 >

- 공기업(2) : 대한석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준정부기관(13) : 한국소방검정공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과학문화재단, 독립기념관,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우정사업진흥회, 증권예탁결제원, 한국산업기술재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노동교육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선정기준 : 유형별 하위 20%이내 기관중 평가점수가 66.7점(만점대비 2/3) 미만

#### 4. 향후 추진계획

□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금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해소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음

□ 아울러, '09년부터는 경영평가 결과의 환류 강화를 통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 평가지표를 기능별 지표에서 과정별 지표로 변경하고,

\* (기능별 지표) 종합경영, 주요사업, 경영관리 →  
(과정별 지표) 리더십·전략(계획) - 경영시스템(집행) - 경영성과(결과)

- 평가방법도 보다 객관적인 6단계 등급으로 전환하는 등 경영평가가 공공기관의 경영성과 향상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임

첨부 : 공기업·준정부기관 2007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기획재정부 대변인**

6월 20일(금) 17:00이후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2007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2008. 6. 20

**기 획 재 정 부**

# 목 차

<b>I. 평가개요</b> .....	1
<b>II. 경영실적 평가결과</b> .....	2
1. 공기업 .....	2
2. 준정부기관 .....	4
<b>III. 평가결과 후속조치</b> .....	6
1.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	6
2. 우수·부진기관에 대한 조치 .....	7
<b>IV. 향후 추진계획</b> .....	8
<b>&lt; 참 고 &gt;</b> .....	9

---

## I. 평가개요

---

### ① 평가목적

- 경영실적에 대한 외부평가를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책임성을 확보하고 경영개선에 활용

### ② 평가근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 ③ 평가대상 및 평가기간

- 평가대상 : 공기업·준정부기관(참고1)
- 평가기간 : 매년 3.20~6.20까지

### ④ 평가 추진체계 및 평가절차

-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수·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활용하여 실시(참고2)
- 평가절차
  - ① 평가편람 시행('06년도말)
    - \* '07.12월, 평가편람을 수정의결하여 시행
  - ② 공기업·준정부기관별 기관운영('07년)
  - ③ 경영평가단 구성('08.3월, 현오석 단장 및 총괄간사 2명 등 139명)
  - ④ 경영실적보고서 검토, 현장실사 등 평가실시(매년 3월~6월)
    - \* 기관 경영실적 및 기관장 경영계약이행실적을 평가(참고3, 4)
  - 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평가결과 확정(매년 6.20까지)

## Ⅱ. 경영실적 평가결과

### 1. 공기업

#### 가.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 ① 기관 평가결과는 전반적으로 전년에 비해 하락

- 주요사업 실적 부진과 경영관리 비효율 등으로 전년대비 경영평가결과가 저조

	'07년(A)	'06년(B)	증감(A-B)
공기업1	74.6	78.4	△3.8
공기업2	71.2	72.8	△1.6
공기업 전체	73.2	75.7	△2.5

- 부문별로는 주요사업부문의 점수 하락수준이 종합경영 및 경영관리부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주요사업부문 득점이 공기업1은 ('06년) 81.4% → ('07년) 74.3%(△7.1), 공기업2는 ('06년) 81.6% → ('07년) 78.6%(△3.0)으로 하락

##### ② 유형별 평가결과

- 한전은 정전시간 49% 단축과 아제르바이잔 등 해외사업 호조, 지역난방공사는 신생에너지 활용, 지방 신사업 진출 등으로 1위
- 광진공, 철도공사, 부산항만공사는 흑자전환 또는 매출액 증가에 따른 노동·자본생산성 제고 등으로 각 유형의 상위권 차지
- 대한석탄공사는 재무구조 취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효과적 투자유치 프로그램 미흡 등으로 최하위권



< 공기업 기관 경영실적 평가내용 >

분류	공기업1 (14개)	공기업2 (10개)
우수 (4개)	한국전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산항만공사
양호 (10개)	한국철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관광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감정원 인천항만공사 한국마사회 산재의료관리원
보통 (8개)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조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주택보증(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방송광고공사
부진 (2개)	대한석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나.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결과

☐ 기관장 평가결과도 기관 평가결과 및 책임경영성과 부진 등으로 저조

- 공기업1 유형은 공기업2 유형보다 전반적으로 우수하나, 책임경영 및 이사회 활성화 성과 부진 등으로 전년보다 하락

	'07년(A)	'06년(B)	증감(A-B)
공기업1	74.1	77.5	△3.4
공기업2*	67.6	-	-
공기업 전체	71.4	-	-

\* 종전 정부산하기관인 공기업2 유형은 금년에 기관장 평가 처음 실시

## 2. 준정부기관

### 가.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 ① 기관 평가결과는 전반적으로 전년에 비해 하락

- 전반적인 경영실적 저조와 일부 신규 평가기관의 경영관리 비효율 등으로 인해 준정부기관 평가점수 평균이 전년대비 1.0점 하락
- 부문별로는 종합경영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주요사업 및 경영관리부문은 하락

구분	'07년(A)	'06년(B)	증감(A-B)
검사·검증	71.6	72.1	△0.5
문화·국민생활	69.9	70.9	△1.0
산업진흥1	72.3	76.2	△3.9
산업진흥2	69.9	71.4	△1.5
교육훈련·연구지원	70.7	71.4	△0.7
연·기금운용	74.3	73.2	1.1
준정부기관 전체	71.4	72.4	△1.0

#### ② 유형별 평가결과

-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DB 구축,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개발 촉진 등 실적이 우수한 에너지관리공단(산업진흥1)이 준정부기관 전체 1위
- 예산관리, 경영정보관리 등이 취약한 증권예탁결제원(산업진흥1)이 준정부기관 전체 최하위

**< 준정부기관 기관 경영실적 평가내용 >**

분류	검사·검증 (12개)	문화· 국민생활 (15개)	산업진흥1 (11개)	산업진흥2 (15개)	교육훈련 · 연구지원 (11개)	연·기금운용 (13개)
우수 (12개)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건강보험공단 정보문화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철도시설공단	소프트웨어진흥원 교육학술정보원	건설교통평가원 과학재단	수출보험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양호 (26개)	대한지적공사 전파진흥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석유품질관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용정보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산업안전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촌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	정보사회진흥원 인터넷진흥원 문화콘텐츠진흥원 디자인진흥원 정보보호진흥원	학술진흥재단 산업인력공단 요업기술원 청소년수련원	사학연금관리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국민연금관리공단
보통 (26개)	축산물등급판정소 교통안전공단 시설안전기술공단 산업기술시험원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우편사업지원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보훈복지의료공단 소비자원	산업단지공단 전력거래소 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방송영상산업진흥원 광해방지사업단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보건산업진흥원 환경기술진흥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산업기술평가원 해양수산연수원	근로복지공단 주택금융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자산관리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부진 (13개)	소방검정공사 승강기안전관리원	과학문화재단 독립기념관 원자력문화재단	우정사업진흥회 증권예탁결제원	산업기술재단 영화진흥위원회 부품소재산업진흥원	청소년상담원 노동교육원	문화예술위원회

**나.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결과**

- 종전 정부산하기관인 준정부기관은 금년에 기관장 평가를 처음 실시
- 기관장 평가점수 평균은 67.9점으로 공기업(71.4점)보다 저조
  - 유형별로는 산업진흥1 유형이 71.7점으로 준정부기관 중 우수, 산업진흥2 유형이 65.8점으로 하위 수준

유형	기관수	평균	유형별 순위
검사·검증	12개	67.5	3
문화·국민생활	15개	67.2	5
산업진흥1	11개	71.7	1
산업진흥2	15개	65.8	6
교육훈련·연구지원	11개	67.2	4
연·기금운용	13개	68.8	2
준정부기관 전체	77개	67.9	-

### Ⅲ. 평가결과 후속조치

#### 1.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 금년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성과급은 유형별로 성과급 지급한도 내에서 지급률을 결정

구분	공기업1 (종전 정부투자기관 14개)	공기업2 (종전 정부산하기관 10개)	준정부기관* (77개)
직원	월기본급의 200~500%	월기본급의 250~500%	기준월봉의 100~200%
상임이사	기본연봉의 0~100%	기본연봉의 0~100%	기준연봉의 20~100%
기관장	기본연봉의 0~200%	기본연봉의 0~200%	

\* 다만 종전 정부투자기관인 준정부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은 공기업1 유형의 성과급 지급한도 적용

- 성과급 지급률은 평가순위보다는 평가점수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지급 되도록 성과급 지급기준 적용

#### 【 성과급 지급기준 】

- 직원 및 상임이사 :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률 산정
  - 직원 : (월기본급 또는 기준월봉) × (지급률)\*
  - 상임이사 : (기본연봉 또는 기준연봉) × (지급률)\*
- \* 지급률(%) = 지급률하한 + { (기관점수-최저점수) / (최고점수-최저점수) } × (지급률상한-지급률하한)
- 기관장 :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률 산정
  - 기관장 : (기본연봉 또는 기준연봉) × (지급률)\*
- \* 지급률(%) = 지급률하한 + { (기관점수-최저점수) / (최고점수-최저점수) } × (지급률상한-지급률하한)

## 2. 우수·부진기관에 대한 조치

### ① 우수기관(16개 기관)에 대한 조치

※ 우수기관은 8개 유형별로 상위 2개 기관을 선정

#### ① 기획재정부장관 표창(관련 유공자표창 포함)

- 유공자 표창은 추후 기관별 3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상

#### ② 차년도 경비예산을 기관별 여건을 고려하여 1%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

### ② 부진기관(15개 기관)에 대한 조치

※ 부진기관은 유형별 하위 20% 기관 중 평가점수가 66.7점미만(만점대비 2/3)인 기관을 선정

#### ① 기관경고 및 차년도 경비예산을 1% 삭감하여 편성

#### ② 경영효율화를 위해 경영컨설팅을 받도록 조치

\* 부진기관의 경영효율화 방안 마련 지원을 위해 경영컨설팅 전문가풀을 구성·운영

#### ③ 경영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이행점검

---

## IV. 향후 추진계획

---

- ① 경영실적 평가결과 주무부처 및 기관 통보
- ②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경영실적 평가결과 설명회 개최(8월중)
- ③ 최종 평가보고서 대통령·국회 보고

<참고1> 공공기관 평가유형 분류(금년도 평가대상 101개 기관)

□ 공기업(24개 기관)

유형	기관명
공기업1 (14개)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공기업2 (10개)	대한주택보증, 부산항만공사, 산재의료관리원,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준정부기관(77개 기관)

유형	기관명
검사·검증 (12개)	교통안전공단, 대한지적공사, 산업기술시험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품질관리원, 한국소방검정공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파진흥원
문화·국민생활 (15개)	국제방송교류재단, 독립기념관,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과학문화재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한국우편사업지원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업진흥1 (11개)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우정사업진흥회, 증권예탁결제원, 한국농촌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산업진흥2 (15개)	광해방지사업단, 영화진흥위원회,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환경기술진흥원
교육훈련 · 연구지원 (11개)	요업기술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과학재단, 한국노동교육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연·기금운용 (13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 <참고2> 경영평가단 명단

부문 유형	종합경영	주요사업	경영관리	제량
단장·총괄간사(기관수)	단장 : 현오석(고려대 겸임교수) 총괄간사 : 신완선(성균관대, 산업공학), 조택(이대, 행정)			
공기업1 (14)	김준기(서울대, 행정) 박진(KDI대학원, 경제) 홍동표(김&장법률, 경제) 이병태(KAIST, 경영공학) 윤영원(안진회계, 회계신) 박노옥(조세연, 성과관리) 백동현(한양대, 경영학)	박순애(서울대, 행정) 박환용(경원대, 도시계획) 이석준(건국대, 경영학) 박선규(성균관대, 토목공학) 홍성훈(전북대, 산업공학) 이강석(한서대, 항공교통) 안승범(인천대, 교통) 변재현(경상대, 산업공학)	이창우(서울대, 회계학) 배수현(한국공공연구원, 경영) 이정현(명지대, 경영) 권선국(경북대, 회계학) 박중구(서울산업대, 경제학) 임병곤(임병곤세무회계, 세무) 유민봉(성균관대, 행정학)	안숙찬(덕성여대, 회계) 최준빈(안진회계) 손해진(삼일회계) 이민재(성도회계) 윤재원(홍익대, 회계)
공기업2 (10)	고종권(한양대, 회계) 김연성(인하대, 경영) 김수옥(서울대, 경영) 송진규(라이프, 법학) 하혜수(상주대, 행정) 윤병섭(벤처정보대, 회계)	김진욱(건국대, 도시공학) 정형곤(KIEP, 경제) 김홍식(충남대, 경영학) 정명기(한남대, 경제) 김창봉(중앙대, 국제물류)	이영면(동국대, 경영) 이창길(세종대, 행정) 최진욱(고려대, 행정학) 이기환(해양대, 경영학) 홍철규(중앙대, 회계학) 김태규(한남대, 정보통계)	신승모(인하대, 회계) 정대길(삼정회계, 회계) 배성규(한영회계, 회계) 송석창(충정회계, 회계)
검사·검증 (12)	이명석(성대, 행정) 신은종(단대, 경영) 이동규(경희대, 경영) 조만(KDI, 경제) 차동옥(성대, 경영)	윤진호(과기원, 기술정책) 오양호(태평양법무, 법률) 정재희(산업대, 안전학) 안선웅(한양대, 산업학)	이원희(한경대, 행정) 송수영(중앙대, 경영) 오영균(수원대, 행정) 전영섭(서울대, 경제) 허찬영(한남대, 경영)	이성엽(다산회계, 회계) 이기화(다산회계, 회계) 강재희(신한회계, 회계)
문화·국민생활 (15)	오재인(단국대, 경영) 이상철(부산대, 행정) 이근주(이대, 행정) 김주찬(광운대, 행정) 박중보(한양대, 법학) 홍길표(백석대, 경영)	오철호(숭실대, 행정) 이승길(아주대, 법학) 이기효(인제대, 보건) 김정인(중앙대, 경제) 주효진(현도대, 문화정책)	조경호(국민대, 행정) 김재훈(산업대, 행정) 송종길(경기대, 신방) 김종우(한양대, 경영정보) 윤태화(경원대, 회계)	라현주(삼일회계, 회계) 양현승(신한회계, 회계) 이재경(새빛회계, 회계) 최원석(시립대, 회계)
산업진흥1 (11)	이종원(카톨릭대, 행정) 박석희(카톨릭대, 행정) 김영신(충남대, 소비자) 반병길(경영조직연, 경영) 조만형(한남대, 행정)	이명호(연세대, 경제) 왕성우(백석대, 농경제) 이영재(경북대, 교량공학) 이상복(서경대, 산업공학)	이의영(군산대, 경제) 김태영(경희대, 행정) 박성용(예일회계) 박진우(고려대, IT) 서진완(인천대, 행정)	김용운(삼일회계, 회계) 최대규(성도회계, 회계) 김상부(천지회계, 회계)
산업진흥2 (15)	원윤희(서울시립대, 세무) 김태일(고대, 행정) 임승민(명지대, 행정) 손원익(조세연, 경제) 정준금(울산대, 행정)	김동욱(서울대, 행정) 김정원(강원대, 경영) 장진규(과기원, 경제) 황선웅(중앙대, 경영)	홍성걸(국민대, 행정) 김신곤(광운대, MIS) 정순관(순천대, 행정) 성명재(조세연, 경제) 박재환(중앙대, 회계)	김완희(경원대, 회계) 김문현(외대, 경영) 유기석(삼정회계, 회계) 전홍(삼일회계, 회계)
교육훈련·연구지원 (11)	서원석(행정연, 행정) 고기영(연대차연, 경영) 노시평(서경대, 행정) 유한주(숭실대, 경영) 이상화(국민대, 경제)	전주상(배제대, 정책) 조동호(이대, 경제) 조국현(동북아역사, 기술정책)	배용수(공주대, 행정) 최훈석(성대, 심리) 이장희(충북대, 회계) 원종학(조세연, 경제) 황해신(행정연, 행정)	유봉환(프로티비티, 회계) 윤여충(삼덕회계, 회계) 정형목(키톨릭대, 회계)
총139명	42명(단장등포함)	33명	38명	26명



### <참고3> 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

유형	공기업1유형		공기업2유형 및 준정부기관	
평가 부분	평 가 지 표	점수 (점)	평 가 지 표	점수 (점)
종합경영	<35>		<35>	
	○ 책임경영구현 및 공익성 제고를 위한 최고경영진의 노력과 성과	6	○ 책임경영 구현 및 공익성 제고를 위한 최고경영진의 노력과 성과	6
	○ 경영혁신 노력과 성과	10	○ 이사회 (위원회) · 감사 기능의 활성화 노력과 성과	4
	○ 이사회 · 감사기능의 활성화 노력과 성과	4	○ 경영혁신 노력과 성과	10
	○ 생산성		○ 고객만족도 ① 고객만족 개선도 ② 고객만족경영체제 구축노력과 성과	5 5
	- 노동생산성 <부가가치/평균인원>	5		
	- 영업비용 관리 <영업비용/매출액>	5		
주요사업	※기관별 주요사업	<35>	○ 설립목적과 사업과의 연계성 * 기관별 주요사업	6 <35>
경영관리	<30>		<30>	
	○ 조직관리	2	○ 조직 및 인사·보수관리의 합리성 ① 조직관리 ② 인사·보수관리 ③ 인건비 인상률 관리 노력 ④ 계량인건비	3 4 1 2
	○ 인사관리	4		
	○ 보수관리			
	- 보수관리의 합리화	2		
	- 인건비 인상률 관리 노력	3	○ 재무 및 예산관리의 합리성 ① 자산운용의 적정성 ② 예산관리 ②-1 계량관리업무비	4 4 3
	- 계량인건비 <인건비/매출액>	2		
	○ 노사관리	4		
			○ 경영정보관리의 합리성	2
	○ 재무정책	5	○ 내부평가제도의 적정성 및 외부평가와의 연계성	3
	○ 예산운용	3		
	- 계량관리업무비 <관리업무비/매출액>	5		

<참고4> 기관장 경영계약이행실적 평가지표

평가부문	평가지표	점수
책임경영	<15>	
	· 책임경영 노력과 성과	8
	· 지배구조 적정화 노력과 성과	3
	· 고객만족경영 실천노력과 성과	4
혁신경영	<15>	
	· 혁신리더십 및 비전과 전략	7
	· 경영혁신 노력과 성과	8
윤리경영	<10>	
	· 윤리경영 실천 노력과 성과	5
	· 사회적 책임성 강화 노력과 성과	5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 정부권장정책이행실적	<10>
조직 경영성과	· 기관 종합평가의 결과 반영	<50>

## <참고5> 유형별 최상위기관(8개) 주요 평가내용

유형	기관명	주요 평가결과
공기업1	한국전력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계전력피크 억제와 전력 최대수요 패턴분석을 통한 운영방법 개선 등을 통해 전력수급의 안정성 제고</li> <li>▪ 해외사업 추진 성과가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제르바이잔 민자발전사업권 획득, 배전기술·시스템의 수출 확대</li> </ul> </li> </ul>
공기업2	한국지역난방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집단에너지사업 모델 개발</li> <li>- Heat Pump 활용 집단에너지사업* 추진 실적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활용 온도차 에너지자원인 하수처리수에서 열에너지를 회수하여 활용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li> </ul> </li> </ul> </li> <li>▪ 공기업 최초로 전 사업장에 대한 ‘한국서비스 품질우수기업’ 인증(지식경제부 주관)을 획득하는 등 고객만족경영 수준 우수</li> </ul>
검사 검증	한국가스안전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T기반 검사시스템을 통한 효율적 안전관리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객편의 증진을 위해 사이버지사를 운영</li> <li>- 행정관청 가스안전 지원시스템(G-Topia) 구축을 통한 가스 안전관리 위탁업무 관련 행정업무 대폭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Topia : 공사의 안전관리 DB를 행정관청과 연결, 정보 공유</li> </ul> </li> </ul> </li> </ul>
문화 국민생활	국민건강보험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보험담여비 지출모니터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여조사통합관리시스템 신규 구축·운영을 통한 재정누수 방지(부당청구로 확인된 청구금액 규모가 전년대비 61% 증가)</li> <li>- 부당수급 사후관리를 통한 부당진료비 환수 강화(환수결정액이 전년대비 21.7% 증가)</li> </ul> </li> </ul>
산업 진흥1	에너지관리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변화협약 등 대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실적이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정개발체제 컨설팅 및 진단통합관리시스템 구축</li> <li>-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DB 구축</li> <li>- 산업계에 업종별 대책반 구성 및 전문교육 실시</li> </ul> </li> </ul>
산업 진흥2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W산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프트웨어 기술성평가기준*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참여율이 29.9%→40.6%로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보호·육성 관련배점을 5점→10점으로 확대</li> </ul> </li> </ul> </li> </ul>
교육훈련 연구지원	한국건설교통기술 평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구조 및 사업상호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사업구조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구조를 기존 나열식 16개 사업에서 9개 사업으로 축소하여 집중 관리</li> <li>-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10대 대형실용화 VC사업* 중점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C-10 사업 : 스마트하이웨이, 도시형자기부상열차 등 사업</li> </ul> </li> </ul> </li> </ul>
연기금 운용	한국수출보험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거래 지원실적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기업(LG전자, 삼성등)의 신규 해외재판매 법인 발굴 등을 통해 재판매 수출거래실적이 전년대비 11% 증가</li> </ul> </li> <li>▪ 통합적 리스크관리와 사업비 지출한도의 설정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예산절감 노력 강화(계획 대비 지출을 23.4% 절감, 632억원 규모)</li> </ul>

## <참고6> 유형별 최하위기관(8개) 주요 평가내용

유형	기관명	주요 평가결과
공기업1	대한석탄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무구조의 안정성이 취약</li> <li>- 전체 차입금 중 6월이내 만기 차입금이 66%로 재무위험에 노출</li> <li>-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이 27%로 부채상환에 어려움 예상</li> <li>정부의 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2%) 위반</li> </ul>
공기업2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사회 운영 성과 미흡 및 경영공시 활동 저조</li> <li>서귀포미항 1단계공사 추진실적 저조 및 개발사업 추진노력 부진</li> <li>인력활용의 팀별/업무별 인원재배치 노력이 부족</li> </ul>
검사 검증	한국승강기안전 관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무관련 경영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li> <li>- 매출액영업이익율(-3.9%), 총자산순이익율(-5.1%) 및 자기자본순이익율(-7%) 등이 저조</li> <li>- '06년 당기순이익 7.8억원 → '07년 당기순손실 9.8억원으로 전환</li> </ul>
문화 국민생활	한국원자력 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합리적 경영정보관리체계 미흡 및 사용편이성 등을 고려한 시스템 고도화 노력 부족</li> <li>-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ERP 사용 등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수준(34%)</li> <li>정부의 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2%) 위반</li> </ul>
산업 진흥1	증권예탁결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섭외성 경비의 과도집행 등 방만경영 심각</li> <li>- 유흥경비의 법인카드 집행, 골프접대비, 상품권 구매 등 업무와 무관한 경비지출 과다</li> <li>정부의 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2%) 위반</li> </ul>
산업 진흥2	한국부품소재산업 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반적인 경영관리시스템 효율성 미흡</li> <li>- '05.7월 신설기관으로 보수체계의 단순화, 팀장에 대한 권한위임 등 합리적 조직관리 추진실적 저조</li> <li>개발사업 기술료 관련 어음의 회수관리 부실 등 재무 및 예산관리체계 취약</li> </ul>
교육훈련 연구지원	한국노동교육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사업의 구체적 추진전략 타당성 부족</li> <li>직급체계, 결재단계 간소화 실적 미흡 및 동기부여·조직문화 성과 등 전반적인 조직관리 합리성 저조</li> <li>연봉제 적용직급의 확대(기존 1~2급→3급 교수직 포함) 노력 부족 및 성과중심 임금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li> </ul>
연기금 운용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7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실적 저조</li> <li>- 기금사업 지원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기금사업 신청건수는 전년대비감소</li> <li>체계적 예산관리 노력 부족</li> <li>- 종합적 예·결산 차이분석에 따른 예산편성 피드백 미흡 및 성과주의 예산제도 미도입</li> <li>정부의 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2%) 위반</li> </ul>

**200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09. 6

기 획 재 정 부

## 1. 평가등급별 성과급 지급기준

### ① 직원 (전년도 월기본급 또는 기준월봉 기준, %)

구분		S	A	B	C	D	E
공기업	· 종전 투자기관(11개)	400	352	304	256	208	200
	· 이외 기관(13개)	400	360	320	280	250	250
준정부 기관	· 종전 투자기관(3개)	400	352	304	256	208	200
	· 이외 기관(73개)	160	144	128	112	100	100

### ② 상임이사 (전년도 기본연봉 기준, %)

구분	S	A	B	C	D	E
공기업(24개)	80	64	48	32	16	0
준정부기관(76개)	48	38.4	28.8	19.2	9.6	0
· 7개 금융형 기관	80	64	48	32	16	0

### ③ 기관장 (전년도 기본연봉 기준, %)

구분	S	A	B	C	D	E
공기업(24개)	160	128	96	64	32	0
준정부기관(76개)	48	38.4	28.8	19.2	9.6	0
· 7개 금융형 기관	80	64	48	32	16	0

## 2. 기관별 평가등급 및 성과급 지급률

### 1] 공기업

평가유형	기관명	평가등급	직원	상임이사	기관장	
					기관장 평가수검 <sup>1</sup>	기관장 평가비수검 <sup>2</sup>
SOC (14개)	한국수자원공사	A	352.0	64.0	96.0	128.0
	한국전력공사	A	352.0	64.0	64.0	128.0
	한국도로공사	B	304.0	48.0	64.0	96.0
	한국지역난방공사	B	320.0	48.0	96.0	96.0
	한국철도공사	B	304.0	48.0		96.0
	한국토지공사	B	304.0	48.0	32.0	96.0
	대한주택공사	C	256.0	32.0	32.0	64.0
	부산항만공사	C	280.0	32.0	64.0	64.0
	인천국제공항공사	C	280.0	32.0	32.0	64.0
	인천항만공사	C	280.0	32.0	64.0	64.0
	한국가스공사	C	280.0	32.0		64.0
	한국공항공사	C	280.0	32.0	64.0	64.0
	한국석유공사	C	256.0	32.0	32.0	64.0
	한국전력에너지서비스공단	D	250.0	16.0		32.0
서비스· 진흥·제조 (10개)	한국광물자원공사	A	352.0	64.0	96.0	128.0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B	320.0	48.0		96.0
	한국감정원	B	320.0	48.0	32.0	96.0
	한국관광공사	B	304.0	48.0	64.0	96.0
	한국마사회	B	320.0	48.0	64.0	96.0
	한국조폐공사	B	304.0	48.0	64.0	96.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C	280.0	32.0		64.0
	한국산재의료원	C	280.0	32.0	0.0	64.0
	대한석탄공사	D	208.0	16.0	0.0	32.0
	한국방송광고공사	D	250.0	16.0	0.0	32.0

\* 음영처리된 기관은 기관장 경영계획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기관으로 기관장 성과급 산출시 기관 평가점수를 활용

\* 주1)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를 받는 현직기관장

\* 주2) 경영계획서작성지침 시행전 퇴임기관장('08.6.10일 이전 퇴임),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를 받지 않는 현직기관장('08.10.1일 이후 임명),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기준일 전 퇴임기관장('08.6.10~'09.3.31일 퇴임)

## 2 준정부기관

평가유형	기관명	평가등급	직원	상임이사	기관장	
					기관장 평가수점 <sup>1</sup>	기관장 평가비수점 <sup>2</sup>
검사·검증 (6개)	대한지적공사	B	128.0	28.8	19.2	28.8
	한국가스안전공사	B	128.0	28.8		28.8
	한국전기안전공사	B	128.0	28.8		28.8
	교통안전공단	C	112.0	19.2	19.2	19.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D	100.0	9.6	9.6	9.6
	한국전파진흥원	D	100.0	9.6	9.6	9.6
문화· 국민생활 (9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A	144.0	38.4		38.4
	국민건강보험공단	A	144.0	38.4	19.2	38.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B	128.0	28.8	19.2	28.8
	국제방송교류재단	C	112.0	19.2	9.6	19.2
	도로교통공단	C	112.0	19.2	9.6	19.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C	112.0	19.2	9.6	19.2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C	112.0	19.2	9.6	19.2
	국립공원관리공단	D	100.0	9.6	9.6	9.6
	한국정보문화진흥원	D	100.0	9.6	0.0	9.6
산업진흥1 (10개)	한국농어촌공사	A	352.0	38.4	28.8	38.4
	농수산물유통공사	B	304.0	28.8	19.2	28.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B	304.0	28.8	28.8	28.8
	에너지관리공단	B	128.0	28.8	19.2	28.8
	한국산업단지공단	C	112.0	19.2	19.2	19.2
	한국예탁결제원	C	112.0	32.0	16.0	32.0
	한국전력거래소	C	112.0	19.2	9.6	19.2
	한국철도시설공단	C	112.0	19.2	19.2	19.2
	한국환경자원공사	C	112.0	19.2	9.6	19.2
	환경관리공단	C	112.0	19.2	9.6	19.2

\* **음영**처리된 기관은 기관장 경영계획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기관으로 기관장 성과급 산출시 기관 평가점수를 활용

\* 주1)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를 받는 현직기관장

\* 주2) 경영계획서작성지침 시행전 퇴임기관장('08.6.10일 이전 퇴임),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를 받지 않는 현직기관장('08.10.1일 이후 임명),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기준일 전 퇴임기관장('08.6.10~'09.3.



평가유형	기관명	평가등급	직원	상임이사	기관장	
					기관장 평가수점 <sup>1</sup>	기관장 평가비수점 <sup>2</sup>
산업진흥2 (6개)	한국광해관리공단	B	128.0	28.8	19.2	28.8
	한국교육학술정보원	B	128.0	28.8	9.6	28.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C	112.0	19.2	9.6	19.2
	한국정보사회진흥원	C	112.0	19.2	0.0	19.2
	한국디자인진흥원	D	100.0	9.6		9.6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D	100.0	9.6		9.6
교육훈련 연구지원 (6개)	한국산업인력공단	A	144.0	38.4	19.2	38.4
	한국과학재단	B	128.0	28.8		28.8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B	128.0	28.8	19.2	28.8
	한국학술진흥재단	B	128.0	28.8		28.8
	한국산업기술평가원	C	112.0	19.2	9.6	19.2
	한국세라믹기술원	D	100.0	9.6		9.6
연기금 운용 (14개)	근로복지공단	A	144.0	38.4	19.2	38.4
	기술보증기금	A	144.0	64.0	48.0	64.0
	신용보증기금	A	144.0	64.0	32.0	64.0
	공무원연금관리공단	B	128.0	28.8	9.6	28.8
	국민연금공단	B	128.0	28.8	19.2	28.8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B	128.0	28.8	19.2	28.8
	국민체육진흥공단	B	128.0	28.8	9.6	28.8
	예금보험공사	B	128.0	48.0	32.0	48.0
	한국수출보험공사	B	128.0	48.0	48.0	48.0
	한국자산관리공사	B	128.0	48.0	32.0	48.0
	한국주택금융공사	B	128.0	48.0	48.0	48.0
	정보통신연구진흥원	C	112.0	19.2	9.6	19.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D	100.0	9.6		9.6
	영화진흥위원회	E	100.0	0.0	0.0	0.0

\* **음영**처리된 기관은 기관장 경영계획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기관으로 기관장 성과급 산출시 기관 평가점수를 활용

\* 주1)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를 받는 현직기관장

\* 주2) 경영계획서작성지침 시행전 퇴임기관장('08.6.10일 이전 퇴임),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를 받지 않는 현직기관장('08.10.1일 이후 임명),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기준일 전 퇴임기관장('08.6.10~'09.3.

평가유형	기관명	평가등급	직원	상임이사	기관장	
					기관장 평가수점 <sup>1</sup>	기관장 평가비수점 <sup>2</sup>
중소형 기관 (25개)	독립기념관	A	144.0	38.4	19.2	38.4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A	144.0	38.4	19.2	38.4
	한국과학창의재단	A	144.0	38.4	28.8	38.4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A	144.0	38.4	19.2	38.4
	한국산업기술재단	A	144.0	38.4	9.6	38.4
	한국소방산업기술원	A	144.0	38.4	19.2	38.4
	한국정보보호진흥원	A	144.0	38.4	19.2	38.4
	한국환경기술진흥원	A	144.0	38.4	28.8	38.4
	선박안전기술공단	B	128.0	28.8	19.2	28.8
	한국고용정보원	B	128.0	28.8	19.2	28.8
	한국소비자원	B	128.0	28.8	0.0	28.8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B	128.0	28.8		28.8
	한국시설안전공단	B	128.0	28.8	9.6	28.8
	한국우편물류지원단	B	128.0	28.8	19.2	28.8
	한국인터넷진흥원	B	128.0	28.8	9.6	28.8
	한국청소년수련원	B	128.0	28.8	0.0	28.8
	한국해양수산연수원	B	128.0	28.8	9.6	28.8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C	112.0	19.2		19.2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C	112.0	19.2		19.2
	한국원자력문화재단	C	112.0	19.2		19.2
	축산물등급판정소	D	100.0	9.6	0.0	9.6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D	100.0	9.6		9.6
	한국석유관리원	D	100.0	9.6	9.6	9.6
	한국우편사업지원단	D	100.0	9.6		9.6
	한국청소년상담원	D	100.0	9.6	9.6	9.6

\* **음영**처리된 기관은 기관장 경영계획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기관으로 기관장 성과급 산출시 기관 평가점수를 활용

\* 주1)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를 받는 현직기관장

\* 주2) 경영계획서작성지침 시행전 퇴임기관장('08.6.10일 이전 퇴임),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를 받지 않는 현직기관장('08.10.1일 이후 임명),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기준일 전 퇴임기관장('08.6.10~'09.3)

#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10. 6. 14(월) 16:00	담당부서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
담당과장	홍 두 선 (2150-5550)	담당자	류종재 사무관 (2150-5551) 김장훈 사무관 (2150-5552) 태원창 사무관 (2150-5554)

## 제목 : '0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 기획재정부는 '0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10.6.14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발표

### I. '0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요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0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에 대한 기관장 평가\*와 기관 평가\*\*를 실시하였음

\* 기관장 평가 : 총 96명 (공기업 20, 준정부기관 64, 기타공공기관 12)

\*\* 기관 평가 : 총 96개 (공기업 23, 준정부기관 73)

- 이 과정에서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교수·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로 기관장\*과 기관\*\* 평가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

\* 기관장 평가단 : 단장 이만우 교수 (고려대 경제학과), 총 55명

\* 기관 평가단 : 단장 이창우 교수 (서울대 경영학과), 총 130명

□ '0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10.3월 공표된 4대 중점운용방향\*에 따라 이루어졌음

\* '10.3.12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0년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 운용방향」 참고

① **[평가단 구성]** 평가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평가단 구성을 조기에 완료하고 워크숍\* 등을 통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함

\* 관계부처·전문가 추천 등을 거쳐 평가단을 작년보다 1개월 정도 일찍 구성 (2월중순)하고, 평가위원 워크숍을 조기에 개최

② **[평가단 운영]** 평가단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도화 (10.3.11일)

\*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의 주요내용 : ▲피평가기관으로부터의 연구 용역, 강의, 기타 청탁 등을 금지, ▲윤리 서약서, 상피제 서약서 작성 등

③ **[평가과정]** 공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운영

\* 기관장 예우 차원에서 기관장 인터뷰는 평가단이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관의 경영실적보고서 작성분량을 축소 : '08년도 600p 이내 → '09년도 550p 이내

④ **[평가제도]** 성과중심의 계량평가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량평가지표 비중 확대

: ('08년도) 공기업(45%), 준정부(40%) → ('09년도) 공기업(50%), 준정부(45%)

\* 계량평가만 하는 중소형기관의 범위를 정원 100인미만에서 500인미만으로 확대

: 중소형기관 수 ('08년도) 25개 → ('09년도) 40개 (+15개)

## Ⅱ. '0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 '0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그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과 공공기관 경영실적 개선 등으로 전년에 비해 개선

### 【 기관장 평가 】

① **평가대상** : 96명\* 공공기관장의 경영계획서(선진화 계획 포함) 이행 실적

\* 평가대상 기관장 중 재임기간이 6개월미만은 제외 <참고1>

### ② **평가방식**

- ▲기관장 리더십, ▲공공기관 선진화(경영효율화, 노사관계), ▲고유과제로 구분하여 각각 20%, 40%, 40%의 가중치로 평가
- 기관장 평가결과는 6등급\*으로 구분하여 산출

평가등급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미흡"
종합점수	90점 이상	80~90점	70~80점	60~70점	50~60점	50점 미만

\* 평가결과에 상응하는 성과급 지급률 차등화 등 합리적 후속조치를 위해 당초 "보통" 구간(60-80점)을 공운위의 의결을 거쳐 "양호"(70-80점)와 "보통"(60-70점)으로 세분화

### ③ **평가결과**

- 우수 5명, 양호 26명, 보통 45명, 미흡 19명이고 아주미흡 1명
- '08년에 비해 양호이상 기관장 비중이 증가하는 등 평가결과가 개선

#### < 기관장 평가결과 등급 분포 >

(명)

연도	기관수 (비중)	등급 분포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미흡
'09년	96 (100%)	0 (0%)	5 (5.2%)	26 (27.1%)	45 (46.9%)	19 (19.8%)	1 (1.0%)
'08년	92 (100%)	0 (0%)	0 (0%)	24 (26.1%)	47 (51.1%)	17 (18.5%)	4 (4.3%)

※ < 참고 2 > '09년도 기관장평가 등급별 현황

## 【 기관 평가 】

① **평가대상** : 96개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09년도 경영실적 <참고1>

### ② **평가방식**

- 『리더십 · 전략(계획) - 경영시스템(집행) - 경영성과(산출)』 3개 부문  
20~30개 지표로 평가
- 기관의 평가결과는 **6등급으로** 구분하여 산출 (S, A~E)

### ③ **평가결과**

- S등급 1개, A등급 22개, B등급 44개, C등급 16개, D등급 12개이고  
E등급은 1개
- '08년에 비해 A등급이상 기관이 증가하는 등 경영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

#### < 기관 평가결과 등급 분포 >

(개)

	기관수	S	A	B	C	D	E
'09년	96	1	22	44	16	12	1
▪ 공기업	23	1	7	9	1	5	-
▪ 준정부기관	33	-	10	14	6	3	-
▪ 중소형기관	40	-	5	21	9	4	1
'08년	100	-	18	38	27	16	1

※ < 참고 3 > '09년도 기관평가 등급별 현황

### Ⅲ. 평가결과 후속조치

#### ① 기관장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조치

- 평가결과가 “아주미흡”(50점 미만)인 기관장(한국시설안전공단)에 대해서는 해임건의
- 평가결과가 “미흡”(50점이상 ~ 60점미만)인 기관장 19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 평가결과가 미흡인 기관장 19명중 3명은 2년연속 경고이나, 현재 모두 공석으로 경고조치

#### ② 경영평가 성과급 차등 지급

##### ① 기관장 성과급

- 기관장 평가와 기관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성과급 지급률을 산정

\* 종합점수 = 기관 경영 평가(50%) + 기관장 평가(50%)

- 다만, “아주미흡”(50점 미만)인 기관장은 성과급을 미지급하고 2년연속경고되는 기관장은 성과급을 50% 삭감 지급

##### ② 임·직원 성과급

- 올해부터 기관 평가결과뿐만 아니라 기관장 평가결과도 고려하여 성과급 지급률 산정

\* 기관장 평가결과가 보통인 경우 기관평가 성과급 지급률을 그대로 인정하되, 양호 이상인 경우는 가산하고, 미흡 이하인 경우는 차감

---

## IV. 향후 추진계획

---

- ① 금번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공공기관의 개혁과 선진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임
- 공공기관 선진화 과제 평가지표 개선·발굴 등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이 공공기관 선진화에 보다 많은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
  - 한편 이면합의 등 노사관계가 문제가 있는 경우는 향후 감사원에서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별도 해임 건의 등 추가적인 조치를 할 계획
- ② 아울러, ▲성과중심 평가지표로의 개선, ▲평가단 구성·운영시 투명성·윤리성 확보, ▲평가수검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경영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 공공기관의 핵심성과와 연계성이 낮은 평가지표나 유사성격의 평가지표 통폐합 등을 통해 성과위주로 평가체계를 단순화
  - 올해 제도화된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더욱 보강
    - 경영평가수용도 조사 등을 통해 평가위원을 매년 일정규모씩 교체해 나가고 평가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는 평가위원은 중도 해촉하는 등 평가 모니터링도 강화
  - 평가지표 중 계량평가비중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공공기관의 평가수검부담을 완화



# ① 기관장평가 대상기관 (96개)

	평가대상 기관
<p><b>I 유형</b> (공기업) 20개</p>	<p>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보증(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조폐공사</p>
<p><b>II 유형</b> (검사검증/ 비금융형연기금) 17개</p>	<p>교통안전공단, 대한지적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p>
<p><b>III 유형</b> (문화국민) 20개</p>	<p>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독립기념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우편사업지원단,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p>
<p><b>IV 유형</b> (산업진흥) 21개</p>	<p>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우편물류지원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p>
<p><b>V 유형</b> (기타/금융형 연기금) 18개</p>	<p>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울산항만공사, 중소기업은행,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투자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p>

## ② 기관평가 대상기관 [96개]

		평가대상 기관
공기업	SOC (13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서비스·진흥 · 제조 (10개)	대한주택보증, 한국산재의료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준정부기관	검사검증 (4개)	교통안전공단, 대한지적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문화국민생활 (8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산업진흥 (6개)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거래소, 한국환경공단
	연·기금 운용 (15개)	(금융형기관 6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비금융형기관 9개)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중소형 (40개)	(검사·검증 8개) 선박안전기술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문화·국민생활 14개) 독립기념관, 한국소비자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우편사업지원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연구재단
		(산업진흥 18개)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우편물류지원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참고 2

## '09년도 기관장평가 등급별 현황 (96개)

등급	기관명
탁월 (100~90점)	-
우수 (90~80점) (5개)	근로복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양호 (80~70점) (26개)	교통안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에너지관리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조폐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보통 (70~60점) (45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지적공사, 도로교통공단, 독립기념관, 부산항만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인천항만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은행,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송강기안전관리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우편물류지원단, 한국우편사업지원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투자공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환경관리공단
미흡 (60~50점) (19개)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보증(주), 울산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자원공사
아주미흡 (50~0점) (1개)	한국시설안전공단

\* 등급내 기관 순서는 가나다순

### 참고 3

### '09년도 기관평가 등급별 현황 (96개)

등급	기관명
S (1개)	한국전력공사
A (22개)	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용보증기금,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B (44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지적공사, 독립기념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예금보험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거래소,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우편물류지원단, 한국우편사업지원단,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C (16개)	공무원연금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도로교통공단, 영화진흥위원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환경공단
D (12개)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보증, 부산항만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문화예술회관위원회,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한국산재의료원,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수련원
E (1개)	한국전파진흥원

\* 등급내 기관 순서는 가나다순

## 참고 4

## 기관장 평가단 및 기관 평가단 명단

### 1 기관장 평가단 (55명)

	평가단 명단
단장	이만우(고려대)
총괄간사	조택(이화여대)
부문간사 (5명)	박순애(서울대), 박영범(한성대), 손해진(삼일회계), 신완선(성균관대), 오철호(송실대)
팀장 (5명)	김동현(고려대), 배용수(공주대), 이강군(서경대), 이상학(국민대), 이종욱(서울여대)
평가위원 (48명)	강석훈(울촌법무), 강혜영(포스코연구원), 구문모(한라대), 김병덕(금융연구원), 김수욱(서울대), 김승열(양현법무), 김신곤(광운대), 김주섭(노동연구원), 김주찬(광운대), 김창호(글로벌연구소), 김철영(씨에스법무), 문명재(연세대), 박길호(세일회계), 박만섭(고려대), 박상규(중앙대), 박석희(카톨릭대), 박용성(단국대), 박용승(경희대), 박종희(고려대), 박희준(서울대), 반병길(경영조직연), 배근호(동의대), 손원익(조세연), 신성환(홍익대), 우윤석(송실대), 윤성호(한양대), 이건창(성균관대), 이기환(해양대), 이병태(KAIST), 이승태(HCore), 이정(외대), 이정동(서울대), 이철수(서울대), 장영순(딜로이트법무), 전주상(배재대), 정규석(강원대), 정봉관(대주회계), 정용남(한림대), 정준금(울산대), 조광현(일신회계), 조승우(신한회계), 차문중(KDI), 허식(중앙대)

## 2 기관 평가단 (130명)

	리더십/전략	주요사업	경영효율화	경영성과	소계
단장	이창우(서울대, 경영)				1명
간사	곽채기(동국대, 행정), 오재인(단국대, 경영), 이명호(KAIST, 경제), 김완희(경원대, 회계)				4명
공기업1 (SOC)	김진욱(건국대, 경제) 백동현(한양대, 경영) 홍성훈(전북대, 산업공) 장현준(KAIST, 에너지) 이은형(국민대, 경영) 이진무(전임CEO, 경영)	이우일(서울대, 기계공) 김근용(국토연구원) 이원우(에너지경제연) 김지홍(KDI, 경제) 남익현(서울대, 경영)	권선국(경북대, 회계) 유민봉(성균관대, 행정) 조성욱(서울대, 경영) 금현섭(서울대, 행정) 김장환(중앙대, 경영)	전규안(숭실대, 회계) 윤영원(안진, 회계) 나철호(재정, 회계) 이성엽(다산, 회계) 공영철(삼정, 회계) 최원석(시립대, 회계)	22명
공기업2 (서비스· 진흥·제조)	홍철규(중앙대, 회계) 김태규(한남대, 정보통계) 박경래(형사정책연, 행정) 강응선(경원대, 경제) 김태승(인하대, 경제) 박성웅(예일, 회계)	한경식(숭실대, 경영) 정형곤(KIEP, 경제) 조영재(세종법무법인) 윤병섭(서울벤처정보) 신은종(단국대, 행정) 이충기(고려대, 지역경제) 이상엽(한서대, 행정)	하해수(경북대, 행정) 박상욱(서울대, 경영) 장원창(인하대, 경제) 박주석(경희대, 경영) 김철희(한남대, 행정) 강준모(홍익대, 경제)	배성규(한영회계) 홍길표(백석대, 경영) 이민재(성도, 회계) 김인근(화인경영, 회계) 김문현(외대, 회계) 박종성(숙대, 회계)	25명
준정부1 (검사·검 증/ 산업 진흥)	정철용(상명대, 경영) 황혜신(행정연구원, 행정) 이덕만(건국대, 경제) 김우진(고려대, 무역) 김연철(한남대, 정치언론국제)	이원희(한경대, 행정) 김창봉(중앙대, 무역) 이희상(성균관대, 기술경영) 이상휘(경희대, 무역) 한도숙(인천대, 재정) 최형재(고려대, 경제)	한상록(능률협회, 경영) 강일준(한림대, 식품영양학) 오승환(인사이트그룹, 경영) 성태경(경기대, 경영정보) 최경규(동국대, 경영)	김갑순(동국대, 회계) 최대규(성도, 회계) 이수미(삼일, 회계) 조진호(한영, 회계)	20명
준정부2 (문화· 국민생활)	임승빈(명지대, 행정) 이강성(삼육대, 경영) 홍필기(서울디지털대, 경영) 양원근(전임CEO, 재정)	김동욱(성균관대, 통계) 조승우(서울시립대, 경영) 홍석표(보사연, 복지) 김정인(중앙대, 산업경제) 김계현(인하대, 자원공학)	송인국(단국대, 경영정보) 최헌재(서울대, 소비자) 임호창(서울여대, 경영) 김병일(강남대, 세무)	김상부(천지, 회계) 정형록(경희대, 회계) 김은영(삼정, 회계)	16명
연기금 운용	정현숙(상명대, 가족복지) 남기찬(서강대, 경영) 박선규(성균관대, 토목) 유평준(연세대, 행정) 이성우(동아대, 금융법) 박덕배(현대경제연, 금융) 박진우(외대, 국제금융) 백승관(홍대, 경제)	이동규(경희대, 경영) 정지만(상명대, 금융경제) 고동원(성균관대, 법률) 이의영(군산대, 경제) 박철(서울대, 경영) 전영순(중앙대, 회계) 오은진(여성정책연, 인사) 윤창현(서울시립대, 금융)	윤덕룡(KIEP, 국제금융) 최준욱(조세연, 경영) 오세진(강남대, 경영) 김경엽(국가발전전략연, 재정) 이기영(경기대, 경제) 강준호(서울대, 체육교육) 원승연(명지대, 경영) 구민교(연세대, 행정)	이주현(안진, 회계) 정대길(삼정, 회계) 김철희(삼일, 회계) 정도진(중앙대, 회계) 양일근(예일, 회계) 박재환(안진, 회계) 조원덕(삼정, 회계)	31명
중소형 기관	-	-	-	김용운(삼일, 회계) 안성열(삼덕, 회계) 김상현(단국대, 회계) 김정기(신정, 회계) 안섭(화인, 회계) 김태훈(조세연, 회계) 임미영(안진, 회계) 김동수(삼일, 회계) 남혜정(동국대, 회계) 강정구(동국대, 회계) 조성연(한영, 회계)	11명
소계	34명(단장·간사포함)	31명	28명	37명	130명

## 6. 최근 5년간 소송사건 연도별 처리현황 및 일부 패소 사건의 증감 현황

### □ 소송사건 처리 현황<sup>1)</sup> (최근 5년간, 연도별)

(단위 : 건, %)

구 분	합계	취하	각하	국가승소	일부패소	국가패소	패소율 <sup>2)</sup>
2006년	15	2	2	10	-	1	6.6%
2007년	10	-	-	7	1	2	30%
2008년	24	1	-	20	1	2	12.5%
2009년	10	3	-	6	-	1	10%
2010년 (8월말 현재)	6	3	-	3	-	-	0%
합계	65	9	2	46	2	6	12.3%

주) 1) 종결사건(최종확정판결) 기준

2) 일부패소는 패소로 간주

### ※ 패소사건 처리 현황

종결년도	사건명	사건내용	심급별 결과
2006년	경영개선명령등 처분 취소	○○ 외 1명이 경영개선명령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 제기	1심: 패 2심: 패 (종결)
2007년	감리결과조치처분취소	○○이 외감법 위반에 대한 감사업무 참여제한(1년)이 부당함을 주장	1심: 패 2심: 패 3심: 패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기술이전계약 허위 공시 등으로 488,746,570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주)○○이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	1심: 승 2심: 패 3심: 패
"	경영관리개시 처분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취소	○○은행 외 1명이 동 은행에 대한 경영관리 개시 및 영업의 정지처분이 부당함을 주장 ※ 영업정지 처분만 금융위 승소	1심: 일부 패 2심: 일부 패 3심: 일부 패
2008년	손해배상(기)	○○ 외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공인 회계사 시험문제의 출제오류에 대한 손해 360,000,000원의 배상을 구함	1심: 승 2심: 일부 패 3심: 일부 패
"	해임요구처분취소	○○ 외 1명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조치처분(해임요구)의 취소 요구	1심: 패 (종결)
"	해임요구처분취소	○○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조치처분(해임요구)의 취소 요구	1심: 패 (종결)
2009년	해임요구처분취소	○○ 외 1명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조치처분(해임요구)의 취소 요구	1심: 패 2심: 패 (종결)



## 7. 최근 3년간 소관 기금 간접투자상품 투자 평가 손익 내역

### A. 공적자금관리위원회

□ 간접투자상품 투자 평가손익(2007.1 ~ 2010.7)

(단위 : 억원)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7월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MMF	운용금액	100	582	854	16,270
		평가손익	-	1	1	43
부실채권 정리기금	수익증권	운용금액	3,740	-	700	150
		평가손익	61	-	13	7
	MMF	운용금액	-	-	55	530
		평가손익	-	-	-	1
	계	운용금액	3,740	-	755	680
		평가손익	61	-	13	8
구조조정 기금	수익증권	운용금액	“해당사항 없음”			730
		평가손익				7
	MMF	운용금액				30
		평가손익				-
	계	운용금액				760
		평가손익				7

\* 수익증권 및 MMF : 연기금투자상품

\*\* 평가손익 : 기말 잔액에 대한 평가손익

\*\*\* 공적자금상환기금은 해당사항 없음

## B. 산업금융과

### <신보>

☐ 간접투자상품 : 연기금투자폴

(단위: 억원)

구 분	'07년	'08년	'09년	'10.6월
운용규모*	3,679	3,703	9,259	7,222
운용손익	146	315	306	197

\* 운용규모는 연평균 개념임

### <기보>

☐ 해당사항 없음

### <농신보>

☐ 간접투자상품 : 연기금투자폴

(단위 : 백만원, %)

구 분	운용규모	운용손익
09년	4,576	176

\* 2009년 4월부터 연기금투자폴 투자를 시작

## 8. 연도별 공적자금 지원/회수현황(회수율 포함) 및 회수계획

### ① 연도별 공적자금 지원/회수현황(회수율 포함)

#### □ 공적자금 I

##### ○ 지원

(단위 : 억원)

연 도	채 권 발행	회 수 자금 재 사용	공 공 자금	기 타 자금	계
1998년	388,252	-	156,416	11,035	555,703
1999년	251,709	57,006	45,738	1	354,454
2000년	89,435	200,099	8,299	74,351	372,184
2001년	291,980	49,730	△ 1,696	△ 69,863	270,151
2002년	-	20,296	-	16,782	37,078
2003년	-	15,909	△ 4,603	10,352	21,658
2004년	-	40,324	△ 1,168	6	39,162
2005년	-	32,743	△ 3,514	-	29,229
2006년	-	4,053	△ 968	-	3,085
2007년	-	1,616	△ 168	-	1,448
2008년	-	862	△ 268	-	594
2009년	-	2,125	△ 468	-	1,657
2010.6월	-	657	△ 584	-	73
합 계	1,021,376	425,420	197,016	42,664	1,686,476

## 9. 최근 3년간 금융기관별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발생현황 및 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내역

### ☐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발생현황

○ 첨부1,2,3 참고(자료출처: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 ☐ 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내역

(2010년 7월말 기준, 단위: 억원)

구분	금액
휴면예금	3,341.6
휴면보험금*	1,531.4
계	4,873

\* 휴면보험금의 경우 원권리자 지급 청구 비율이 높아 실제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되는 금액은 적음

<첨부1>

## 은행권 휴면예금 발생현황

(단위 : 천건, 억원)

은행명	2007년		2008년		2009년	
	계좌수	금액	계좌수	금액	계좌수	금액
산업은행	14	4	8	3	9	2
농협중앙회	1,389	151	1,254	268	950	166
신한은행	550	119	691	109	309	58
우리은행	1,184	110	1,124	87	803	97
SC제일은행	295	52	557	76	218	40
하나은행	871	114	682	95	392	53
기업은행	768	77	706	71	628	77
국민은행	2,122	69	1,772	65	2,003	672
외환은행	538	76	528	72	1,258	59
한국씨티은행	223	22	283	24	260	44
수협중앙회	41	10	39	6	26	6
대구은행	75	31	96	12	145	33
부산은행	356	38	325	37	406	43
광주은행	—	—	114	5	183	12
제주은행	9	—	3	—	3	—
전북은행	78	10	73	11	67	9
경남은행	131	9	146	10	74	7
HSBC	1	1	2	5	3	4
총 계	8,645	893	8,403	956	7,737	1,382

<첨부 2>

## 생명보험사 휴면보험금 발생현황

(단위 : 천건, 억원)

보험사명	2007년		2008년		2009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한	64	1,826	57	447	53	1,065
알리안츠	48	167	23	129	17	184
삼성	176	3,447	146	1,729	137	9,583
흥국	51	247	41	92	35	81
교보	149	5,891	110	456	83	714
우리아비바	4	9	5	11	4	12
미래에셋	66	144	52	65	37	97
금호	39	47	44	55	39	80
동부	6	11	11	19	11	26
동양	53	262	11	71	8	85
메트라이프	12	46	15	33	17	52
푸르덴셜	13	22	13	35	9	38
신한	58	82	50	72	57	79
PCA	6	4	9	5	13	11
뉴욕	1	3	1	3	1	3
ING	26	97	33	75	39	98
SH&C	1	10	1	15	1	16
녹십자	4	21	3	9	3	10
라이나	100	40	80	34	51	34
AIG	66	45	80	56	85	82
하나HSBC	4	2	5	3	6	6
KB	1	7	1	9	1	9
총 계	948	12,430	791	3,423	707	12,365

<첨부 3>

## 손해보험사 휴면보험금 발생현황

(단위 : 천건, 억원)

보 험 사 명	2007년		2008년		2009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메리츠	26.8	67.4	48.6	46.9	51.5	64.6
한화	5.3	19.1	12.4	22.7	16.7	26.7
롯데	2.0	9.5	2.1	5.3	2.8	8.6
그린	1.6	6.0	2.0	5.4	8.2	9.0
흥국쌍용	7.3	12.4	17.2	16.0	45.5	21.0
제일	21.3	23.6	25.9	21.4	6.6	17.5
삼성	65.8	733	76.8	320	83.3	283
현대	19.0	58.4	41.9	67.5	63.0	82.3
LIG	22.9	93.0	29.8	88.7	37.4	90.2
동부	25.9	78.2	46.4	61.3	57.6	66.6
총 계	197.9	1,100.6	303.1	655.2	372.6	669.5

**10. 최근 3년간 금융위 소속 「금융 공공기관 경영예산 심의회」  
구성현황(명단 등) 및 법적근거, 심의의결 주요안건 목록**

□ 3년간 심의회 위원 구성 현황

○ 2008년

구 분	소 속	직 책	성 명
위원장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 지 순
심의위원	삼정회계법인	부대표	김 교 태
심의위원	한영회계법인	전무	김 교 환
심의위원	딜로이트 컨설팅	전무	김 우 진
심의위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 준 경
심의위원	금융연구원	부원장	박 재 하
심의위원	법무법인 탐	변호사	박 정 익
심의위원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신 진 영
심의위원	삼일회계법인	상무	양 일 수
심의위원	A.T Kearney 컨설팅	부사장	정 대 형
심의위원	중앙대 회계학과	교수	황 인 태

○ 2009년

구 분	소 속	직 책	성 명
위원장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 지 순
심의위원	삼정회계법인	부대표	김 교 태
심의위원	한영회계법인	전무	김 교 환
심의위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 준 경
심의위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박 경 서
심의위원	금융연구원	부원장	박 재 하
심의위원	법무법인 탐	변호사	박 정 익
심의위원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	신 완 선
심의위원	삼일회계법인	전무	양 일 수
심의위원	딜로이트 컨설팅	부사장	이 정 인
심의위원	중앙대 회계학과	교수	황 인 태



○ 2010년

구 분	소 속	직 책	성 명
위원장	송실대	교수	윤 석 현
심의위원	삼정회계법인	부대표	김 교 태
심의위원	한영회계법인	전무	김 교 환
심의위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박 경 서
심의위원	연세대	교수	성 태 윤
심의위원	고려대	교수	소 종 일
심의위원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	신 완 선
심의위원	삼일회계법인	전무	양 일 수
심의위원	금융연구원	실장	이 병 윤
심의위원	딜로이트 컨설팅	부사장	이 정 인
심의위원	중앙대 회계학과	교수	황 인 태

□ 법적근거

-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금융위 훈령)

※ 별첨 참고

□ 심의의결 주요안건 목록

구 분	주요 안건 목록
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년 계량지표 목표설정 적절성 심의</li> <li>- 국책은행 07년도 경영평가</li> <li>- 08년도 경영평가 지침안 논의</li> </ul>
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9년 경영평가 지침안</li> <li>- 08년 경영실적 보고</li> <li>- 국책은행 경영평가 개선안 심의</li> </ul>
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9년 경영실적 보고</li> </ul>

## 11. 국책은행 및 보증기관의 최근 10년간 중소기업 시설자금 지원실적)

### □ 국책은행 지원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7
산은	10,638	14,805	15,156	14,882	15,301	17,607	26,754	36,622	31,048	17,339
기은	21,728	36,713	35,225	40,712	52,100	72,069	85,268	90,647	87,370	48,870

### □ 보증기관 보증 공급 현황

(단위: 억원)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6
신보	7,408	13,543	19,218	24,837	22,598	28,721	29,998	23,902	23,022	16,585
기보	7,983	5,997	7,775	4,428	9,390	9,643	13,017	13,020	16,538	8,247

주) 일반보증 기준

## 12. 은행별, 금융지주회사별 자본확충펀드 지원내역 및 BIS 비율 개선 추이

### □ 은행자본확충펀드 지원내역

- '09.3.31일 8개 기관이 발행한 약 4조원의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권 매입

<펀드지원 대상 금융기관>

(단위 : 억원)

구 분	우리 지주	우리	국민	하나	농협	수협	경남	광주	합계
신종자본증권	-	10,000	10,000	4,000	7,500	1,000	1,160	870	34,530
후순위채권	3,000	-	-	-	-	-	1,160	870	5,030
합 계	3,000	10,000	10,000	4,000	7,500	1,000	2,320	1,740	39,560

### □ BIS 비율 개선 추이

(단위 : %)

구 분	2008년말		2009.12월말		2010.3월말	
	BIS 비율	Tier1 비율	BIS 비율	Tier1 비율	BIS 비율	Tier1 비율
우 리	11.68	7.69	14.39	10.40	14.82	11.01
하 나	13.51	9.43	14.98	11.25	16.16	12.22
국 민	13.18	9.92	14.04	10.82	13.89	11.09
광 주	12.12	7.58	13.82	8.49	13.62	8.86
경 남	11.78	7.84	13.70	9.68	13.19	9.74
농 협	11.12	6.78	15.62	10.78	15.15	10.60
수 협	11.26	5.95	13.53	7.54	13.87	7.74

**13. 은행권 자본확충펀드 지원내역(중소기업지원, 구조조정 지원으로 구분하되, 세부 지원항목별로 명기)**

□ '09.3~12월중 지원 실적(단순 합계) : 42.5조원

- '09.3~12월 중 은행권은 중소기업지원 31.5조원, 구조조정 지원 11.1조원 등 총 42.5조원 지원

<'09.3 ~ 12월중 지원 실적(단순 합계)>

(단위 : 억원)

분류	지원 항목	'09.12월말 누계
중소기업지원	중소기업 대출	127,114
	중기지원 성격의 대기업 대출	10,535
	중소기업 직접투자	968
	중소기업투자펀드출자	494
	Fast Track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	127,697
	신기보 등 보증기관 특별출연	5,691
	수출금융 지원	14,264
	서민금융 지원	13,861
	부실우려 차주지원	14,182
	소 계(A)	314,805
구조조정지원	구조조정기업 신규자금 지원	7,270
	구조조정 관련 총당금 전입액	20,882
	부실채권 매각 관련 손실 금액	5,124
	출자전환 및 채무면제금액	1,447
	과거 3년 평균 초과 특별상각·매각	75,924
	소 계(B)	110,647
합 계(A+B)		425,452

**14. 최근 3년간 과징금·과태료 부과내역 및 수납실적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 처리현황**

□ 최근 3년간 과징금·과태료 부과현황 등

(단위 : 백만원)

연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07	24,395	10,453	13,764	177
'08	26,194	7,825	16,352	2,017
'09	30,273	7,251	22,188	834

## 15. 2009년 금융위원회의 벌금 미수납과 관련, 징수유예 처리 사유별 건수 및 금액

- 징수유예 2,584백만원은 법원의 회생절차진행 5건 604백만원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진행 7건 1,979백만원임

### < 징수유예 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건수	금액
법원회생절차	씨엔중공업 등 5건	604,300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대한은박지 등 7건	1,979,300

16.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관계장관(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회의”와 관련, 협의관련 송수신 공문 일체 및 금융위원장에게 보고된 내부보고(검토) 문서 1부

□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관계장관(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회의”와 관련, 협의관련 송수신 공문은 없음

□ 금융위원장에게 보고된 문서

○ 별첨 :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2010.8.29)

---

#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

**2010. 8. 29.**

**기획재정부 · 국토해양부 · 금융위원회**



# **||| 목 차 |||**

<b>I.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b>	<b>1</b>
---------------------------------	----------

<b>II. 대응방안 .....</b>	<b>6</b>
-----------------------	----------

1. 서민·중산층의 실수요 주택거래 지원 .....	6
------------------------------	---

2. 주거비 경감 등 서민 주거지원 확대 .....	9
------------------------------	---

3.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일부 조정 .....	10
----------------------------	----

4. P-CBO 등을 통한 건설사 유동성 지원 .....	11
---------------------------------	----

<b>III. 추진계획 .....</b>	<b>12</b>
------------------------	-----------

## 1. 주택거래 및 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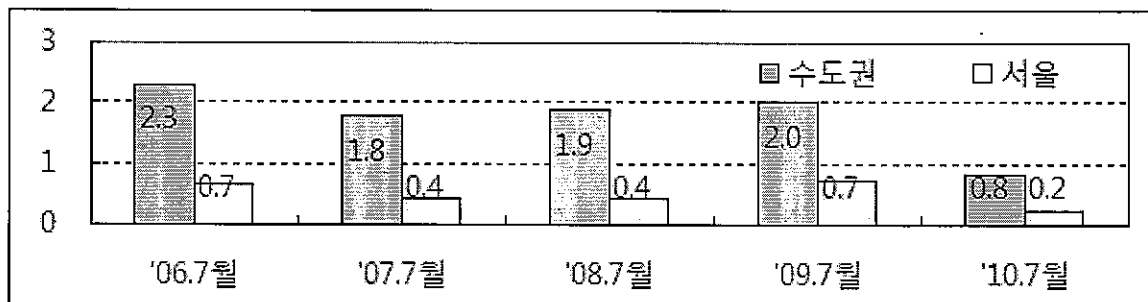
□ 아파트 거래가 수도권 중심으로 '09.10월부터 위축되기 시작하여 감소폭이 확대 (다만, 지방은 예년 수준을 유지)

○ 6~7월에는 수도권·서울 모두 예년대비 50% 이상 감소하여 금융위기('09.1월) 이후 최저 수준

< 아파트 거래량 증감률 추이(% , '06~'09년 동월평균비) >

구 분	'10.1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 국	18.3	7.7	-0.6	-4.7	-29.2	-28.9	-20.2
수도권	-14.3	-26.2	-35.5	-46.2	-59.6	-60.7	-55.4
(서울)	(-1.9)	(-13.5)	(-35.5)	(-54.9)	(-66.7)	(-65.2)	(-58.8)
지 방	41.5	34.4	30.1	33.6	0.4	-0.5	10.4

< 아파트 거래 건수(만건) >



□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권(-54.4%) 보다 강북권(-60.8%)이 큰 폭으로 감소('10.1~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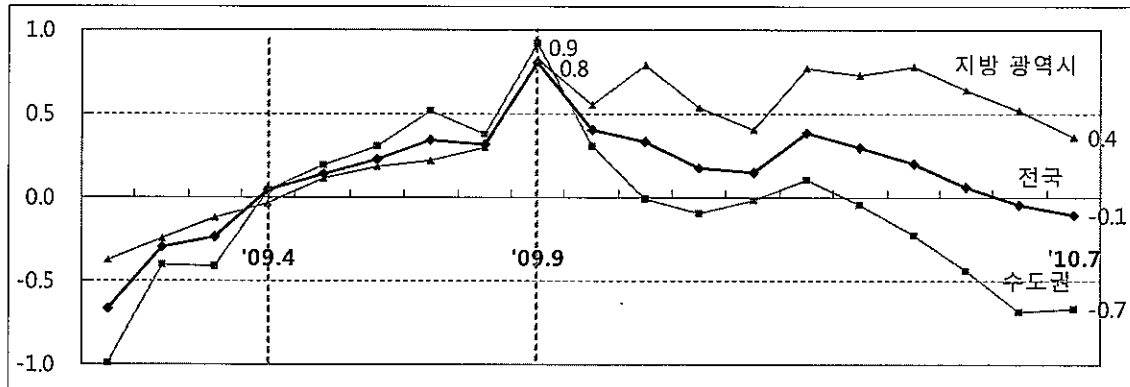
○ 경기도에서는 1기 신도시(-63.4%) 등 서울 인접지역의 거래가 크게 위축

\* 7월에 서울 25개구중 20개, 경기 31개 시군중 20개, 인천 8개구중 6개 지역에서 50% 이상 감소

□ 주택가격은 '09.9월 이후 하향 안정세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수도권은 3월 중순 이후 25주 연속 하락세 지속

\* 지방의 경우 일부 광역시 중심으로 소폭 상승세

<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증감률(%) >



□ '05~'06년중 크게 상승했던 과천·분당 등은 고점대비 10% 이상 하락하여 체감하락률이 높은 상황

○ 최근 신규입주가 집중된 고양·용인 등도 하락폭이 커지면서 분양당시 가격보다 시세가 낮은 단지도 발생

\* 중대형 아파트 중심으로 시세가 분양가보다 5천만원~1억원 정도 하락

< 아파트 매매가격 증감률(%) >

구분	수도권	서울	강남	강북	강남3구 재건축	과천	분당	고양	용인
'10.3~7월중	-2.0	-1.6	-1.6	-1.7	-6.5	-6.0	-3.5	-4.6	-3.2
고점대비	-3.8	-1.5	-1.6	-2.5	-9.2	-11.4	-15.6	-8.3	-14.7

○ 이에 따라 신규주택 시장도 위축되어 대부분 지역에서 청약경쟁률\*이 저조하고, 분양물량\*\*도 감소

\* 1~7월 민간분양 130개 단지중 청약미달 94개(수도권 46, 지방 48)

\*\* 수도권 7월 공동주택 분양승인은 최근 5년 동월평균 대비 39% 감소

○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

< 대법원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

구분	'10.1월	3월	5월	7월
서울	84.0	83.3	79.6	78.4
경기	82.2	81.1	75.8	74.1

□ 최근 주택가격 안정세는 그간 상승폭이 컸던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하향 조정되는 과정으로 평가

○ 가격 안정은 금년 입주물량 증가, 집값하락 기대심리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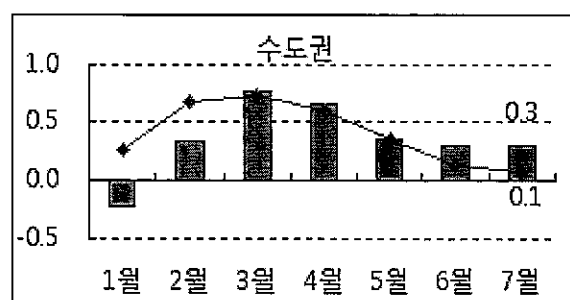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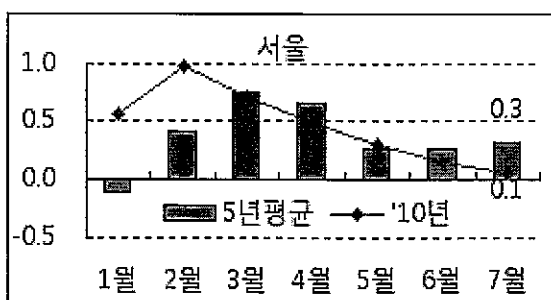
○ 수급여건\*을 감안할 때, 안정세가 지속될 전망

\* '10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예정물량(17.5만호)은 '07~'09년 평균의 116% 수준이며, 이중 54%가 하반기에 입주 예정

□ 전셋값은 2~3월중 상승하다가 4월 이후 안정화되고 있음

○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예년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전세수요 증가 예상

\* 입주물량이 풍부한 은평(6~8월중 -2.6%), 파주(-2.3%), 고양(-1.9%)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셋값 하락현상도 발생



## 2. 주택건설 및 입주 동향

- 주택건설(인허가)은 금융위기 이후 급감했던 작년보다는 증가했으나, 예년보다 저조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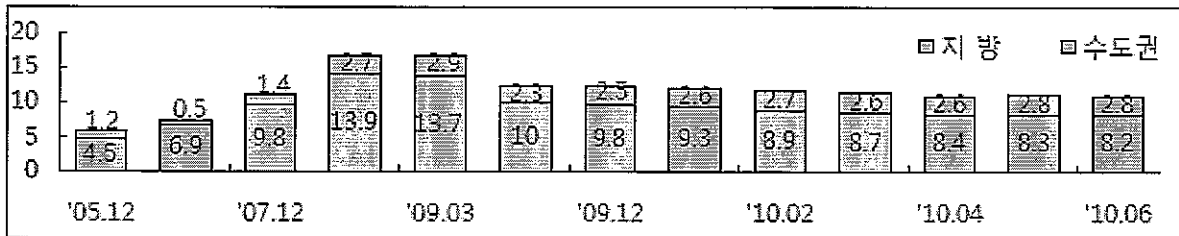
< 주택건설 인·허가 현황 (단위 : 만호) >

구 분	'05~'09년 평균		'09년		'10년		
	연간	1~7월	연간	1~7월	1~7월	예년동기비	전년동기비
실 적	44.9	18.2	38.2	12.2	12.7	-30.2%	4.2%

- 미분양은 장기평균(7~8만호) 보다 많은 11만호로 적체 지속

- 특히, 준공후(47%)와 중대형(60%) 비중이 높아 시장기능을 통한 해소에 한계

< 미분양 아파트 현황 (단위 : 만호) >



- 신규아파트 입주율은 거래위축에 따른 기존주택 매각애로 등으로 평균 40% 수준에 불과

- 특히, 지방과 중소업체 아파트의 입주율이 더욱 낮은 상황

< 입주실태 조사결과(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건설협회, 건설사) >

구 분		단지	총세대	분양세대(A)	입주세대(B)	입주율(B/A)
계		76	31,525	25,755	10,451	40.6%
지역별	수도권	43	15,268	13,586	5,941	43.7%
	지방	33	16,257	12,169	4,510	37.1%
업체 규모별	대형업체	23	13,123	10,978	6,956	63.4%
	중소업체	53	18,402	14,777	3,495	23.7%

[입주지정 종료일 기준]

- 업체들은 선입주-잔금납부 유예, 입주기간 연장(2→6개월), 연체이자 감면 등 입주촉진을 위한 자구노력 시행중

### 3. 평 가

- 집값 안정에 따라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 실수요 중심의 시장재편 등 긍정적 효과 발생
- 그러나, 거래위축이 장기화되면서 입주예정자와 기존주택 처분희망자를 중심으로 입주·거래불편이 심화
  -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도 거래가 안 되어 이사 곤란
  - 신규 분양주택 입주예정자들도 기존주택 거래 위축으로 인한 자금조달 애로로 입주지연 증가
  - 대출을 받아 신규 분양주택에 입주한 가구도 기존주택 매도가 안 되어 상당한 금융비용 부담 발생
- 거래침체에 따른 미입주 증가 등으로 주택업체의 어려움 가중
  -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하도급·자재업체 등도 동반 위축되고 있으며,
  - 이사·중개·인테리어 업체 등 서민종사 업종도 침체되면서 서민경제 위축
    - \* '10.상반기 경기도 폐업 중개업소는 3,833개(경기전체 등록업소의 15%)
    - \* '10.6월말 서울 이삿짐업체는 969개로 전년동월비 6% 감소
    - \* '10.5월 기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건수 전년동월비 25% 감소

⇒ 최근의 주택시장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 마련이 시급

## II

## 대응방안

- ◇ 현재의 집값 안정 기조는 확고히 유지
- ◇ 실수요자의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보완적·한시적 대책 마련
- ◇ 전세자금 지원 확대 등 서민 주거안정 강화

### 1. 서민·중산층의 실수요 주택거래 지원

#### ① 주택기금을 통한 자금지원 확대 (총 1조원)

- ① 신규주택 분양을 받은 자가 소유한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대해 구입자금 지원요건 완화 (4.23 대책 보완)

- (적용대상 기존주택)

- 신규주택 입주일 경과자 소유주택 → 입주 예정자(입주 6개월전~입주일)의 소유주택도 포함
- 85㎡ 이하, 6억원 이하 → 85㎡ 이하 (금액제한 폐지)

- (구입자 소득)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시행기간) '10년말까지 → '11.3월말까지

\* 지원조건은 현행 유지

(호당 2억원 한도, 연 5.2%, 20년 상환, 투기지역 제외)

⇒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 ('10.9)

②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 주택  
기금에서 구입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 (신설)

- (지원대상)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가구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대상주택) 85㎡ 이하, 6억원 이하(투기지역 제외)
- (지원조건) 호당 2억원 한도내에서 연 5.2% 금리 적용
- (지원시기) '11.3월말까지 한시 지원

⇒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10.9)

② 주택 실수요자의 거래 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① 실수요자가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율 심사·결정(투기지역 제외)

- (지원대상)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
- \* 주택취득후 2년 이내 매도조건 부과
- (대상주택)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 (적용기한) '11.3월말까지

※ LTV(담보인정비율)는 현행 유지

⇒ 금융회사 내규 개정('10.9)

② 저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 애로 해소를 위해 대출금액  
1억원까지 소득증빙을 면제 (현재 5천만원까지 면제)

⇒ 감독규정 개정, 금융회사 내규 개정('10.9~10)



### ③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 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제도(일반세율 6~35%)의 일몰  
시한('10년말 종료)을 2년 연장

\* 다주택자 중과세율 : 2주택 50%, 3주택 60%

※ 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완화제도의 일몰시한도 2년 연장

- ② 수도권(서울제외)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완화,  
종부세 비과세 및 법인세 추가과세 면제요건 완화

< 수도권(서울제외) 매입임대 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 >

구 분	현 행	확 대
임대호수	5호 이상	3호 이상
임대기간	10년 이상	7년 이상
취득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6억원 이하

\* 주택면적 기준 85㎡ 이하는 현행 유지

- ③ 취득·등록세 50% 감면 시한('10년말 종료)을 1년 연장 추진

- 세부적인 감면대상 주택 등에 대해서는 9월중 별도방안  
마련 예정 (행안부)

\* '06.9~'10.12월까지 취득세 2→1%, 등록세 2→1%로 감면중

## 2. 주거비 경감 등 서민 주거지원 확대

### ① 주택기금의 서민·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확대

- 전세값이 높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4,900 → 5,600만원)
  - 3자녀 이상 세대에 대해서는 추가지원 (5,600 → 6,300만원)
  - \* (대상) 60㎡이하, 보증금 8천만원 이하,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이내
- 서민들의 전세자금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기간 연장시 가산금리 인하(0.5→0.25%p)
  - \* (대상) 85㎡ 이하,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대출한도 6천만원

⇒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10.9)

### ②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지원 확대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세대에 대한 보증한도 확대
  - \* (현행) 전세금의 70%와 연간인정소득의 1~2.5배 중 적은 금액
  - (개선) 전세금의 80%와 연간인정소득의 1.5~3배 중 적은 금액
- 보증시 소득입증이 어려운 서민층의 소득입증방법 다양화
  - \* (현행)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등 소득증빙자료로 확인
  - (개선)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환산한 방식 등 추가

⇒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등('10.10)

- 주신보 보증분에 대해서는 신용가산금리 부과를 금지하고, 보증부 대출의 금리실태 점검 등 감독 강화

⇒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약관 개정 등('10.9~10)

### ③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보증 지원

- 임차인의 이사 등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기간 만료시 임대인이 반환할 전세금 부족자금 대출에 주신보가 보증

\* (보증대상) 9억원 이하 주택 임대인, (보증한도) 주택당 5천만원, (보증기한) 2년, 연장시 최장 4년

⇒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등('10.10)

### 3.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일부 조정

-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당초 계획('12년까지 수도권 60만호, 지방 14만호)대로 사업승인 등 추진

- 다만, 금년 하반기 지정예정인 4차 지구는 3차지구(광명시흥) 이월물량 등을 감안하여 지구수 축소 검토

\* (1~3차) 각 4~6개 지구 지정 → (4차) 2~3개 지구수준 지정

- 현재 주택시장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사전예약 물량을 줄이고, 사전예약 시기도 탄력 조정

- 3차 지구 사전예약('10.11) 물량은 80 → 50% 이하로 축소하고, 4차 지구 사전예약('11.상) 물량·시기는 추후 조정

- 보금자리지구내 민영주택 공급비율(현행 25%)은 지구별 특성을 감안하여 상향 조정

- 민영주택도 수요·지구여건 등을 감안, 85㎡ 이하 건설 허용

## 4. P-CBO 등을 통한 건설사 유동성 지원

### ① P-CBO(또는 CLO)를 통한 건설사 유동성 지원

- 총 3조원규모의 P-CBO · CLO\*(건설업 비중 50%\*\*) 발행 추진
  - ‘10년 하반기부터 발행하되 1차로 5천억 규모를 발행하고, 수요를 보아 가며 추가발행 추진
- \* Primary Collateralized Bond · Loan Obligations : 건설사 및 기타 업종의 회사채 또는 대출채권을 기초로 유동화자산을 구성하여 신보 보증을 통해 최우량등급으로 상향된 증권을 시장에 매각
- \*\* 건설업외에 비건설업을 50% 편입하여 업종편중에 따른 위험 완화
- 후순위증권은 발행기업, 건설관련 기관 · 단체, 신용보증기금이 순차적으로 부담

### ② 미분양주택 매입조건 완화 (4.23 대책 보완)

-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대상과 업체별 매입한도 확대
  - 매입대상 : 공정률 50 → 30% 이상 (지방 미분양주택)
    - \* 하반기 매입실적을 보아가며 수도권(서울제외)으로 확대여부 검토
  - 매입한도 : 업체당 1,500 → 2,000억원
- ⇒ 대한주택보증 내규 개정을 거쳐 차기 매입시부터 적용
- 미분양 리츠 · 펀드 매입대상을 현재 준공후 미분양주택에 한정하고 있으나 금년말까지 준공예정인 미분양까지 확대하고, 추가적인 활성화 방안을 지속 강구

### III

### 추진계획

추진과제	조치사항	추진일정	소관기관
<b>① 서민·중산층의 실수요 주택거래 지원</b>			
· 기존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 기금 융자요건 완화(4.23 보완)	기금운용계획 변경	'10.9	국토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10.9	국토부
· 주택 실수요자 거래 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감독규정, 금융회사 내규개정 등	'10.9~10	금융위 금감원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시한 연장	소득세법 개정	'10.하	재정부
·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관련세법 시행령 개정	'10.10	재정부
· 취득등록세 감면 시한 연장	지방세법 개정	'10.하	행안부
<b>② 주거비 경감 등 서민 주거지원 확대</b>			
· 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 확대	기금운용계획 변경	'10.9	국토부
· 주신보 전세자금 대출보증 지원 확대	주택금융공사 내규 등 개정	'10.9~10	금융위 금감원
·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보증 지원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등	'10.10	금융위
<b>③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일부 조정</b>			
· 사전예약 물량·시기 조정 등 공급 보완		'10.하~	국토부
<b>④ P-CBO 등을 통한 건설사 유동성 지원</b>			
· P-CBO 발행 지원	금융위지침 통보	'10.9~	금융위
· 환매조건부 매입대상 및 업체별 매입한도 확대(4.23 보완)	대한주택보증 내규 개정	'10.9~	국토부
· 미분양 리츠·펀드 매입대상 확대(4.23 보완)		'10.9~	국토부

## 17. 2008년 이후 금융위원회의 보도해명자료 목록

### □ 보도해명자료 목록

번호	제 목	작성일
1	이데일리,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김종창씨 추천』	20080324
2	한국경제 『대우조선해양 매각 기대감에 5일째 상승』 (08.3.25)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20080325
3	서울경제 『기업어음 전자증권제 도입』 (08.3.26) 제하의 기사 관련	20080326
4	한국경제 「한국판 골드만 삭스 물거품 우려」 제하의 기사 관련	20080331
5	문화일보 「금융사 분담금 축소.....퇴직자 민간취업 제한은 완화」 제하의 기사 관련	20080401
6	매일경제 「저축은행에 신탁·외환 업무 허용」 제하의 기사 관련	20080407
7	“금융 공기업 기관장 일괄사표 제출” 보도 관련	20080417
8	연합뉴스 「금융기관장 이번주 회비 갈린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080422
9	중앙일보 제E1면 「공기업 매각 주간사, 국내 IB(투자은행)에 우선권」 제하 기사 관련	20080422
10	동아일보 「2012년부터 은행거래 자금 실소유자 확인」 제하 기사 (08.4.25 B 2면) 관련	20080425
11	금융위원장의 산업은행 민영화관련 발언에 대한 보도해명	20080502
12	아시아경제, “금융위금감원 ‘氣 싸움’”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20080507
13	동아일보 퇴직연금 괴담 제하 기사(08.5.7 B 2면) 관련	20080507
14	「펀드 보수·수수료 체계 합리화」 관련 보도 참고 자료	20080507
15	연합인포맥스 「전광우 금융위원장, “다음달 금리인하 얘기 있어”」 제하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20080509
16	매일경제 제a11면 「産銀지주, 3년내 우체국금융 인수 검토」 제하	20080513

	기사 관련	
17	매일경제 제a05면 「금융위·법무부‘포이즌필’도입 합의」 제하 기사 관련	20080516
18	서울경제 A3면 「국책은행 민영화, 한미 FTA 복병되나」 제하 기사 관련	20080519
19	이데일리 「밥그릇 싸움에 산업만 멎는다」 제목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20080520
20	이데일리 「제2의 송계문 되지 않으려면」 제목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20080521
21	이데일리 「10년째 내부파벌싸움」 제목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20080521
22	국민일보, 『금융지주 자회사 고객정보 멋대로 활용』('08.5.23.)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20080523
23	파이낸셜타임즈 아시아판 「HSBC는 외환은행(KEB) 문제 해결을 주목」 제하 인터넷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20080526
24	헤럴드경제, 금융‘낙하산인사’부활 파문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20080528
25	헤럴드경제 제1면 및 제6면 「우리·기업銀 2012년까지 매각」 제하 기사 등 관련	20080604
26	이데일리 「NDF 규제확대..“환율하락 심리 저지 역할”」 제하 인터넷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20080604
27	연합뉴스 「내년 6월까지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 완화」 제하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20080612
28	서울신문 「인터넷 뱅크 설립땀 실명제 폐기?」 제하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20080624
29	서울경제 「은행‘방카’판매인력 제한 없앤다」 제하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20080627
30	연합뉴스 「기업 은행소유 2011년 허용 검토」 제하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20080721
31	한국경제 제a25면 「외환銀, 산업은행 품으로?」 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	20080723
32	조선일보(08.7.24일자 a01면) 「HSBC, 외환은행 인수할 듯」 제하	20080724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33	서울경제(7.28일자 인터넷판) 「예대율 한도설정 검토」 제하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20080728
34	“기업은행 2011년 이후 민영화”, “기업은행 민영화 지연” 취지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20080729
35	연합뉴스(2008.7.30, 06:01) 「건보 가입자 질병정보 유사시 민영 보험과 공유 추진」	20080730
36	금융위의 건보공단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권 관련 시민단체 등의 제기사안에 대한 입장	20080730
37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도 통폐합」 제하 기사 관련	20080813
38	“신·기보 1~2년 뒤 통합 추진”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20080819
39	“금융위 국제·국내 금융 기능 통합을”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20080825
40	아시아경제(08.8.26 인터넷판) “금융위, HSBC 외환銀 인수 추석前 승인 보도해명자료	20080826
41	2009.9.1(월) The Times 「South Korea heads for black September as problems pile up for the ailing won」 제하 기사 관련	20080902
42	연합뉴스(08.9.4 인터넷판), 문화일보(08.9.4) “금융시장 혼란속 금융위 어디있나”	20080904
43	서울경제(08.9.9 인터넷판),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방안 백지화 가능성 높아」 제하의 기사 관련 해명	20080909
44	한국경제 제 a38면 「불확실성 키우는 정부」 제하 기사 관련	20080909
45	연합뉴스 「‘펀드런’나면 한은 통한 유동성 지원 추진」 제하 기사 관련	20080916
46	KBS 「공매도 무방비」 제하 기사 관련	20080923
47	머니투데이(08.9.26 1면), 「금산분리 단번에 대폭 완화」 제하의 기사 관련	20080926
48	국제신문(08.9.29 1~3면), 「‘금융중심지’부산탈락 說」 등 제하의 기사 관련	20080929
49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한국의 은행들 과거 실수 망각」 기사에 대한 해명	20081009



50	한국경제(08.10.13 A1면), 「건설업계 자금 숨통 트인다... 정부, 만기어음 상환연장」 제하의 기사 관련	20081013
51	국내 일반은행의 예대율 현황	20081013
52	Financial Times, "Sinking feeling" 기사 (08.10.14일자) 관련	20081014
53	한국경제 A04면 등 「펀드런맨 韓銀이 유동성 지원」 제하 기사 관련	20081023
54	매일경제 A01면 등 「모든기업환손실 회계처리 안한다」 제하 기사에 대한 해명	20081027
55	이데일리(인터넷판), 「건설경기 부양에 올인... DTI·LTV 더 푼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081028
56	매일경제 A01면 「기업보유주식·채권 시가평가 유예」 제하 기사에 대한 해명	20081103
57	매일경제 제a03면 「산은 민영화 무기한 보류」 제하 기사 관련	20081104
58	경향신문 제21면 「‘뒷북대응’ 금융위」, 세계일보 제18면 「... 뒷북행정 빈축」 제하 기사 관련	20081106
59	매일경제 제1면 「산은·연기금, 은행에 자본투입」 제하 기사 관련	20081113
60	동아일보 B1면 「16개 시중銀 지급보증 140억달러 신청하기로」 제하 기사 관련	20081117
61	11. 18일자 동아일보 보도에 대한 해명	20081118
62	「서울신문‘사채7조’서민빚 눈덩이」 제하 기사 관련	20081118
63	문화일보 1면 「한은, 채권시장안정펀드에 긴급자금 투입」 제하 기사 관련	20081119
64	2008. 11. 20 연합뉴스 등 「전광우 금융위원장 은행권 구조조정 시사」 제하 기사 관련	20081120
65	매일경제신문의 「PF대출 부실 끓아터지기전 저축은행 구조조정 신속히」 기사에 대한 해명	20081121
66	한겨레 제1면 「정부, 은행에 공적자금 투입 검토」 제하 기사 관련	20081126
67	매일경제 제1면(가판) 「정부, 은행부실채 산다」 제하 기사 관련	20081127

68	연합뉴스 「구조조정위 부활검토」 제하 기사 관련	20081201
69	「연합뉴스「저축은행에 공적자금 1조원 투입」」 제하 기사 관련	20081203
70	조선일보 「대주단 가입 신청 29개사 모두 승인 추진」 제하 기사 관련 해명	20081205
71	「문화일보「정부, 건설업 신용보증 확대 올 3000억원→ 내년 2조원」」 제하 기사 관련	20081208
72	연합뉴스 「이창용“내년 성장을 2% 밀돌수 있다”」 제하 기사 관련	20081208
73	매일경제 「통합민간구조조정기구 곧 설립」 제하 기사 관련	20081208
74	조선일보, 「은행BIS비율 12% 채워라, 정부, 미달땀 강제 구조조정」 기사에 대한 해명	20081211
75	서울경제 「미분양 해소 대책 어떻게 나올까?」 제하 기사 관련	20081216
76	연합인포맥스 「금융위, BIS 8% 이상 은행에도 공적자금투입.. 법개정 검토」 기사 관련	20081216
77	연합뉴스 「건설·조선 구조조정시 경영진 평판 고려」 제하 기사 및 이데일리 「조선·건설사 구조조정 기준 확정」 제하 기사 관련	20081231
78	내일신문 제1면 「모든 은행에 공적자금 투입」 제하 기사 관련	20090106
79	문화일보 제14면 「기업‘자사株’담보펀드 나온다」 제하 기사 관련	20090107
80	서울경제, 「부실 저축은행 내달중 속아낸다」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109
81	이데일리, 「금감원장‘BIS10%’발언....금융위와 주도권선점용?」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112
82	이데일리 「전광우“동부·두산 등 중견그룹 모니터링”」 제하 기사 관련	20090113
83	한국경제 「금감원 건설·조선사 옥석가리기 직접 나설것」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115
84	연합뉴스 「은행들 건설·조선사 퇴출 없다」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116
85	머니투데이 「건설·조선사 구조조정 미진 때 은행문책」 및 연합뉴스 「금감원, A.B등급 부도나면 은행문책 」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119
86	매일경제 「은행 BIS비율 내달 완화한다」 가판 기사 관련	20090130

87	한국경제 「자통법에 발목잡힌 국민연금」 기사 관련	20090205
88	한국일보, 「부실징후 대기업 자구안 내라」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206
89	연합뉴스, 「정부, 구조조정 속도 낸다」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209
90	한국경제 「기업대출보증 모두 만기연장」 및 「파격적 보증으로 中企 자금난 해소…수출보험도 무제한 지원」(09.2.12)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211
91	서울경제 「올해 만기 중기대출 2금융권도 전액 연장」 관련 보도 해명	20090216
92	연합뉴스 「BIS비율 '8% 이상 은행도 공적자금 투입」 제하 보도 관련 해명자료	20090219
93	The Economist 「Domino theory」(09.2.26일자)기사 관련	20090227
94	국내은행 외화차입금 현황(보도참고자료)	20090227
95	파이낸셜뉴스 「정부, 해운사 배 100척 매입」 제하 보도 관련 해명자료	20090303
96	연합뉴스 「금강원 “정상기업도 신용위험 재평가」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309
97	이데일리 「정부, 회사채 신속인수제 부활 검토」 제하 보도 관련 해명자료	20090320
98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등 「주식 공매도 재허용 검토」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20090324
99	이데일리 「상장중소 2011년 국제회계기준 적용 연기 검토」 제하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20090326
100	서울경제, 「금융당국, “저축은행 합쳐라”」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417
101	파이낸셜뉴스, 「증권사‘허술한 입단속’어쩌나」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511
102	매일경제 「주식 공매도 곧 재개」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20090513
103	공매도 냉각기간제도 시행여부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20090524
104	한국경제 「車운행 많으면 보험료 더 낸다」 기사 관련	20090527
105	“정부 유동성공급 지속 곤란”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20090527

106	“보험사기 합동조사팀”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20090604
107	주택담보대출 LTV·DTI 규제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20090618
108	OCI(주) 조사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	20090715
109	위원장 기자간담회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20090720
110	연합뉴스 「금융당국 주택대출 확대 은행에 불이익」 제하의 기사 관련	20090811
111	머니투데이 「우리금융, 조기 민영화 금융위에 요청」 제하의 기사 관련	20090813
112	CBS 노컷뉴스 「정부, 금융공기업도 임금 5% 반납」 제하의 기사 관련	20090903
113	아시아투데이 「정부, 신용평가사 자회사 보유 금지 추진」 제하의 기사 관련	20090911
114	헤럴드경제 「‘미소금융’ 불참…외국계銀 해도 너무하네」 관련 보도 해명	20090925
115	동아일보 「경영권 무관한 우리금융지주 지분 23% 정부, 전량매각 미리 의결키로」 제하의 기사 관련 해명	20091005
116	10.21 연합인포맥스 「증권·자산운용사 콜시장 참여제한」, 「콜시장 제한·통안증권 국채전환 등 단기자금시장 대개편」 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	20091021
117	연합뉴스 「우리금융지분 7%, 11월내 매각」 제하의 기사 관련	20091027
118	매일경제 「은행 美국채 보유 의무화 내년 7월 시행」 제하의 기사 관련	20091109
119	동아일보의 「은행장 후보, 금융당국이 사전심사」 보도 관련	20091119
120	연합뉴스 “돈세탁 의심거래 무조건 신고추진”관련	20091127
121	매일경제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의무화 (금융위 금융산업 중장기 비전)”관련	20091202
122	매일경제 “부실보험 판매대리점이 배상…” (금융위 금융산업 중장기 비전)”관련	20091203
123	연합뉴스의 「빅4 회계법인에 외부감사 몰아주기」 보도 관련	20091203

124	헤럴드경제 “금융회장 선출에 주주대표 참여”관련	20091204
125	한국경제신문, 「대우건설 産銀에 넘겨라」 기사에 대한 해명	20091228
126	연합뉴스, 서울신문의 「기업인수목적회사제도 허점투성이」 기사에 대한 해명	20091228
127	매일경제 「우리금융 민영화 일정 내주 발표」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103
128	서울경제 등 「우리금융 등 은행간 M&A 빨라진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104
129	연합뉴스 「KB회장, 사외이사제 개선후 뽑아야」 제하기사 관련	20100110
130	서울경제 「새 보험료 산출방식 의무도입 "유예"」 제하 기사 관련	20100113
131	서울경제 “은행서도 ‘랩어카운트’판매한다	20100119
132	세계일보 「公자금 상환 부진 '혈세만 줄줄'」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119
133	서울경제 「2금융권 미소금융 출자‘난색’」 제하기사 관련	20100120
134	서울경제 인터넷판 「예금보장제 10여년만에 대수술」 제하 기사 관련	20100126
135	한국경제 「우리금융, 합병통해 민영화한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208
136	한국경제 「우리금융 합병 쉽게‘예보 MOU’판다」 등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209
137	서울경제 「예보, 금융위로부터 독립해야」 제하기사 관련	20100216
138	이데일리, 「금융당국, 증권사 신규인가 전면 재검토」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222
139	헤럴드경제 「우리지주 자사주 차입매입 허용」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223
140	연합뉴스 「금융사별 예금보호한도 차등화 검토」 제하기사 관련 보도해명	20100226
141	연합인포맥스 「금융당국, 외은지점 달러차입제한 강력규제 본격 검토」, 매경 「국민연금과 통화스왑 늘려 제2 외환보유액 확보한다」 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	20100226
142	서울경제 「금융안정을 위한 상시협의체 신설 검토」 및 「금융권	20100301

	총당금체계 확 바뀐다」 제하기사 관련	
143	경향신문 등의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사전 적격성 심사제도」에 관련 기사 관련	20100303
144	서울경제 「저축銀도 유동성비율 100%이상 맞춰야」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305
145	한국경제 「모든 스마트폰서 인터넷뱅킹 된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307
146	연합뉴스 「저축銀 감독강화.. 자산운용 규제도 검토」 및 「대형 저축은행 매년 종합검사 받는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314
147	매일경제 「개인신용정보 종합DB 만든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328
148	연합뉴스 「저신용자 신용대출 받기 쉬워진다」 제하의 기사 관 련	20100401
149	경향신문, 「車요일제보험 할인 준비부족에 또 연기」 보도 관련	20100401
150	헤럴드경제 「정부, 서민금융위해 저축은행에도 이익출연 강요」 및 이데일리 「금융위 서민금융TF, 개인프리카아웃제 연장」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406
151	헤럴드경제 「미소금융 금리 두자리수로 올려 모럴해저드 막는다」 및 「모럴해저드 차단불구 지나친 고금리 도마에」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407
152	이투데이 「금융위“직접 징계의 칼을 들겠다”」 및 「금융위금강원 제재권 놓고 ‘신경전’」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408
153	연합뉴스 「서민금융사 보증부 대출금리 11%대」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411
154	뉴스핍, 「은행 사외이사제 석달만에 또 재수술」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412
155	연합뉴스 등의 「지방미분양 문제 완화방안검토」에 관한 기사 관련	20100414
156	헤럴드경제 「은행권 외화차입 규제검토」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419
157	이데일리 「금강원 제재권한 축소 법안 기습제출」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420
158	문화일보의 「감사의견 거절 급증… 해당 상장폐지기업 감리 강화」 보도 관련	20100420

159	헤럴드경제 「보이스피싱 관련법 급조 ... 피해자들 두 번 운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430
160	한국경제신문의 「세계단일 회계기준 2013년 새로 도입한다」 보도 관련	20100514
161	[보도해명]서울경제 「변호사·회계사도‘자금세탁 보고’의무화, 이르면 내년부터」 제하 기사 (10.5.17 A01면, A06면) 관련	20100517
162	동아일보 「대부업체 “고객정보 못줘”... 10조원 규모 서민대출 무산 ?」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522
163	서울신문 「은행세 내년 도입 확정」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601
164	한국경제 「보험사에서 증권계좌 만들면 불법?」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608
165	헤럴드 경제 「KB·우리지주 합병돼도 득과점 문제없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616
166	이데일리 「은행세 요율, 금융 재정거래 억제수준 부과 검토」 제하의 보도 관련	20100617
167	헤럴드경제('10.6.20) 「대부업체 고객정보 공개 반대 여전」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620
168	서울경제('10.6.23) 「금융위 '금융상품 백화점' 도입재추진」 제하 기사 관련	20100622
169	연합인포맥스 「정부, 은행세 걷어 '환율안정펀드' 조성」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623
170	파이낸셜뉴스('10.6.30) 「금융위금감원 또 제재권 신경전」 제하 기사 관련	20100629
171	한국경제('10.6.30) 「금융위금감원 또 총돌조짐」 제하 기사 등 관련	20100629
172	한겨레신문 「은행세 20조원 부과 검토」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609
173	한국경제('10.7.2) 「금감원 '펀드 시세조종 조사」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702
174	헤럴드경제('10.7.9) 「보험연구원 분리 논란 심화...보개원' 부글 부글」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709
175	내일신문 「금융위'행복잡이 프로젝트' 혼선」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715

176	연합인포맥스, 「DTI, 서울 60%, 인천·경기 70%로 완화 검토」 제하 기사 관련	20100719
177	연합뉴스('10.7.29) 「햇살론 연체이자율 제각각 '훈선」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20100729
178	SBS 8시 뉴스('10.7.31) 「가뭄의 단비	20100802
179	국민일보('10.8.4) 「서민들 되레 사채시장 내몰린다」 관련 기사에 대한 설명	20100804
180	연합뉴스('10.8.8), '연소득 5천만원 넘으면 햇살론 제한 검토 ' 제하의 기사관련 보도해명	20100808
181	이데일리('10.8.9 11:19), 「예금보험대상 변액포함...CMA·ELS 제외」 제하 기사 관련	20100809
182	헤럴드경제(10.8.10), 「금융소비자 보호업무 대폭 강화」 제하의 보도 관련	20100810
183	서울경제('10.8.11), 「입장 누그러진 금융위 ... DTI 완화 저울질」 제하 기사 관련	20100811
184	서울경제('10.8.12 가판), 「시장조성제도 부활한다」 제하 기사 관련	20100811



## 18. 최근 5년간 캠코 고유계정을 통한 은행권 부실 PF대출채권 매입현황

□ 「저축은행 PF대출채권 대책 추진방향」('08.12.3), 「저축은행 PF대출 문제에 대한 대책 및 감독강화 방안」('10. 6.25) 발표에 따라

○ 자산관리공사는 공사 고유계정을 통해 저축은행으로부터 총 2조 942억원의 PF대출채권을 「매입대금 사후정산방식\*」으로 1조 5,828억원에 매입하였음

\* 계약체결시 개산매입대금을 우선지급하고 향후 실제 회수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

### < 은행권 PF대출채권 인수현황(캠코 고유계정) >

(단위 : 억원)

구 분	인수일자	채권액	매입금액
저축은행	'08.12.30	5,023	2,638
저축은행	'09. 3.18	12,416	10,627
저축은행	'10. 6.30	3,503	2,563
계		20,942	15,828

## 19. 최근 5년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중복보증 금액 총액 및 중복보증 해소방안

### □ 신기보 중복보증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분	업체수			잔액		
	총보증	중복보증	비율	총보증	중복보증	비율
2005년	203,101	22,752	11.2	289,312	75,356	26.0
2006년	188,677	12,103	6.4	283,817	33,772	11.9
2007년	183,413	8,309	4.5	284,832	22,782	8.0
2008년	193,438	6,875	3.6	303,821	20,118	6.6
2009년	218,721	6,423	2.9	392,488	24,920	6.3
2010.6월	229,113	6,084	2.7	409,771	24,128	5.9

주) 일반보증직접분, 위탁분기준

### □ 중복보증 해소방안

- 중복보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체결한 '신보·기보간 업무 협약(09.12)' 이후 중복보증은 크게 감소

\* 중복보증 추이 : ('05) 26.0% → ('07) 8.0% → ('09) 6.3% → ('10.6월) 5.9%

- 양기관은 동일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합산하여 운용함으로써 과다 보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나,
  - 기업의 보증이용상 편의 제고 측면에서 어려운 점도 있는 것이 사실임
- 향후 신보·기보의 중복보증을 최소화하면서도 기업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

20. 최근 3년간 국책은행 및 금융공공기관별  
상임이사, 기관장의 연봉 및 성과급 등

☐ 금융공공기관 별 CEO 연봉 및 성과급

☐ 첨부 참조

< 금융공공기관 별 CEO 연봉, 성과급 및 복리후생비용 >

(단위 : 백만원)

금융공공기관		2008			2009			2010 <sup>주1)</sup>		
		연봉	성과급	급여성불리 후생비 <sup>주2)</sup>	연봉	성과급	급여성불리 후생비 <sup>주2)</sup>	연봉	성과급	급여성불리 후생비 <sup>주2)</sup>
정책금융공사 <sup>주2)</sup>	기관장	-	-	-	161	-	-	161	-	-
	상임이사	-	-	-	-	-	-	-	-	-
산은금융지주 <sup>주2)</sup>	기관장	-	-	-	161	-	-	161	-	-
	상임이사	-	-	-	143	-	-	143	-	-
산업은행	기관장	424	262	-	462	301	-	161	-	-
	상임이사	341	136	-	295	166	-	129	-	-
중소기업은행	기관장	572	242	-	484	323	-	161	-	-
	상임이사	317	139	-	311	187	-	129	-	-
예금보험공사	기관장	292	14	-	182	19	19.2	161	-	-
	상임이사	188	14	7.0	129	23	2.4	104	-	-
자산관리공사	기관장	301	7	8.8	186	19	6.2	161	-	-
	상임이사	165	-	0.3	127	23	0.4	104	-	-
주택금융공사	기관장	247	85	-	239	77	-	161	-	-
	상임이사	217	52	2.9	143	38	-	104	-	-
신용보증기금	기관장	457	149	8.4	246	79	5.0	161	-	-
	상임이사	252	85	2.6	170	53	0.4	117	-	-
기술신용보증기금	기관장	456	150	6.4	264	96	7.1	161	-	-
	상임이사	231	75	6.0	167	48	2.4	117	-	-

금융공공기관		2008			2009			2010 <sup>주1)</sup>		
		연봉	성과급	급여성분리 후생비부담	연봉	성과급	급여성분리 후생비부담	연봉	성과급	급여성분리 후생비부담
한국거래소	기관장	803	419	12.2	648	345	5.0	161	-	-
	상임이사	493	218	11.2	382	189	11.9	129	-	-
예탁결제원	기관장	210	48	-	204	43	0.5	161	-	-
	상임이사	241	24	25.9	174	42	2.5	129	-	-
기온캐피탈	기관장	285	95	-	172	25	0.5	152	-	0.5
	상임이사	197	66	-	119	17	0.5	105	0.5	-
IBK신용정보	기관장	174	43	-	175	70	-	105	-	-
	상임이사	146	36	-	152	64	-	88	-	-
IBK시스템	기관장	194	63	-	189	64	-	105	-	-
	상임이사	163	53	-	164	60	-	88	-	-
코스콤	기관장	411	181	17.8	411	181	36.5	224	-	31.5
	상임이사	258	74	14.2	274	79	42.0	178	-	25.0
한국기업데이터	기관장	348	181	-	279	181	-	290	-	-
	상임이사	197	53	-	208	98	-	220	110	-

\* 연봉은 기본급, 수당, 상여금 및 성과급을 포함한 합계기준, 성과급은 경영평가 성과급 및 기타 성과상여금 (알리오 공시 기준)

\*\* 주1) 2010년 연봉은 연간 지급 예상금액, 성과급은 경영평가 이후 지급예정

주2) 정책금융공사 및 산은금융지주는 '09.10.28일 설립으로 '09년은 연간 지급액으로 환산하여 기재, 실제로는 설립 ('09.10.28)이후 2개월분만 지급

주3) 급여성 분리후생비란 알리오 공시 기준에 따라 "인건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으로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개인 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복리후생비적 성격의 비용 (예 : 자가운전보조금, 장기근속격려금, 통근보조비, 휴가비, 각종 축하 위로금, 연료보조비, 당직비, 건강진단비 등)

## 21-1.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인데, 금리 인상 등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영향과 전망은?

□ 가계부채 수준이 경제규모 대비 높은 것은 사실임

- 다만, 그간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노력 등의 영향으로 증가속도는 다소 완화되고 있음

\* 가계대출 증감(은행+비은행 조원) : (09.1/4) 14, (2/4) 11.1, (3/4) 10.2, **(4/4) 12.1, (10.1/4) 3.5**

□ 향후 시중금리가 인상될 경우 가계의 이자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 현재의 경제·금융 회복기조 및 가계대출 건전성 등을 감안시 급격한 금융권 부실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i) 최근 경기회복에 따라 소득 및 고용여건이 개선 추세

\* GDP성장률(% , 전년동기비) : (08년) 2.2, (09년) 0.2, (10.1/4) 7.8(전기비 1.4)

\* 취업자증감(만명, 전년동월비) : (10.1)0.5, (2)12.5, (3)26.7, (4)40.1, (5)58.6

(ii) LTV, DTI 규제 등의 영향으로 그간 금융권은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

\* 주요국 LTV 비율(09.7말) : 韓 47.1%, 美 74.9%, 英 85.2%(07.12말)

(iii) 금융회사의 충격흡수 능력도 양호한 수준

\* 은행 당기순이익(조원) : (08.4Q) △0.5, (09.1Q) 0.6, (2Q) 2.1, (3Q) 2.3, (4Q) 1.5, (10.1Q) 3.5

\* BIS 비율(%) : (08.4Q) 12.3, (09.1Q) 12.9, (2Q) 13.7, (3Q) 14.1, (4Q) 14.4, (10.1Q) 14.7

□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음

## 21-2. 저소득층 및 하위신용등급의 가계부채 조정 대책(실적)

□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청을 받아 채권금융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최장 8년 분할상환)

- '02.10월 출범이후 총 338만명을 상담하고 이 가운데 85만명에 채무조정을 지원(10.2만명 신용회복 완료)

(단위: 천명)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 4월말 현재	합 계
상 담	1,014	646	305	252	447	588	127	3,379
접 수	350	194	86	64	79	102	27	902
채무조정	304	208	87	62	73	93	24	852

- 3개월이상 연체자 대상 '개인워크아웃'과 1~3개월 연체자 대상 '개인프리워크아웃'\*을 중심으로 지원

\* '09.4월, 가계부채 연체율 상승에 따라 금융채무불이행자 증가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11.4.12일까지 시행)

□ (신용회복기금) 신용회복기금의 재원으로 3개월이상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채무조정(원리금 감면·만기연장)을 지원

- '08.12월 이후 75만명의 연체채무를 매입하여 현재까지 9.8만명에 채무조정을 지원(채무액 4,500억원)

## 22. 최근 10년간 국내 금융기관 공적자금 지원 현황 및 투입사유(구체적으로)

### □ 투입사유

#### ○ 출자 : 경영정상화 가능 금융회사 대상

- 출자란 주식회사 형태의 금융회사에 대하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기준에 이를 때까지 주금을 납입하고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방법
- 출자를 통한 지원은 금융회사의 거래대상과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청·파산 등에 의한 정리방식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매각 또는 자구 노력으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활용

⇒ 제일·서울·조흥은행, 서울보증보험 등 자금지원시 활용

#### ○ 출연 : 계약이전(P&A) 등 시 인수 금융회사 대상

- 출연이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게 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부실금융회사를 매각하거나 계약이전에 의해 정리하는 경우 순자산 부족액을 지원하는 방법
- 매각시 BIS 비율을 일정부분 보전하기 위한 출자이외에 순자산 부족액을 지원하는 출연을 병행하기도 하며, 부실



금융회사를 계약이전하는 경우 인수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만큼 공적자금을 출연

⇒ 5개 은행(대동·동화·동남·경기·충청), 손보사 등 자금지원시 활용

○ 예금대지급 : 희생이 불가능한 금융회사 대상

- 예금대지급은 금융회사 예금의 지급정지, 인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예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대신 예금을 지급하는 방법
- 예금대지급의 경우 계약이전이나 매각에 의한 정리시 지원되는 출연금보다 직접비용 소요액이 일반적으로 크지만, 부실금융회사의 희생이 불가능하고 동 금융회사의 폐쇄에 따른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을 경우에 활용

⇒ 신탁이나 상호저축은행 등 자금지원시 활용

○ 부실채권매입

-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매입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방법
- 부실채권의 담보물건 또는 비업무용자산에 대하여 한국감정원 등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 등을 참고하여 매입

## □ 공적자금 지원현황

### ○ 연도별

(’97. 11월 ~ ’10. 7월말, 단위 : 조원)

연 도	채권발행	회수자금 재사용	공공자금	기타자금	계
1998년	38.8	-	15.7	1.1	55.6
1999년	25.2	5.7	4.6	-	35.5
2000년	8.9	20.0	0.8	7.4	37.1
2001년	29.2	5.1	△0.2	△7.0	27.1
2002년	-	1.9	-	1.8	3.7
2003년	-	1.6	△0.5	1.0	2.2
2004년	-	4.0	△0.1	-	3.9
2005년	-	3.3	△0.4	-	2.9
2006년	-	0.4	△0.1	-	0.3
2007년	-	0.2	△0.02	-	0.1
2008년	-	0.1	△0.03	-	0.1
2009년	-	0.21	△0.05	-	0.2
2010.7월	-	0.07	△0.06	-	0.01
누계	102.1	42.5	19.7	4.3	168.6

## ○ 금융권별

(’97. 11월 ~ ’10. 7월 말, 단위 : 조원)

금융권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등	부실채권매입	계
은 행		34.0	13.9	-	14.4	24.6	86.9
제 2 금 융 권	총 금	2.7	0.7	18.3	-	1.0	22.8
	증권·투신	10.9	0.4	0.01	2.1	8.5	21.9
	보 험	15.9	3.1	-	0.3	1.8	21.2
	신 협	-	-	4.7	0.3	-	5.0
	저축은행	-	0.4	7.3	0.6	0.2	8.5
	소 계	29.5	4.7	30.3	3.3	11.5	79.4
해외금융기관등		-	-	-	-	2.4	2.4
계		63.5	18.6	30.3	17.8	38.5	168.6

## ○ 투입기관별

(’97. 11월 ~ ’10. 7월 말, 단위 : 조원)

기 관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등	부실채권매입	계
예금보험공사	50.8	18.6	30.3	11.2	-	110.9
자산관리공사	-	-	-	-	38.5	38.5
정 부 등	12.7	-	-	6.6	-	19.3
계	63.5	18.6	30.3	17.8	38.5	168.6

## 23. 금융위기 전후 금융기관 규제 관련 논의현황 시사점, 정책검토 현황

□ 금융위기 이후 G20 및 FSB를 중심으로 금융규제개혁 관련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

□ 우리나라의 경우 G20차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 이행방안을 마련·추진 중이며,

### \* 주요 합의 사항

- ① 보상원칙 관련 : FSB 보상원칙의 국내 이행을 위해 은행·증권·보험·금융지주회사 등 4개 업권에 대해 **보상원칙 모범규준 마련**(10.1월)
- ② 장외파생상품시장 규제 관련 : '10년 중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도입 방안 및 관련 법령 개정안 등을 마련할 계획
- ③ 신용평가사 규제 관련 : 개정 신용정보법('09.10월 시행)에 따라 IOSCO 행동강령('08.5월)을 반영한 내부통제기준 및 모범규준을 마련

○ 아직 논의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국내 도입의 효과와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제적 공조를 통해 대응해 나가고 있음

□ 구체적인 논의동향 등은 첨부한 「금융규제개혁 관련 국제적 논의 동향」을 참조하시기 바람

## 최근 금융규제개혁 관련 국제적 논의 동향

### 1. 그간의 경과

① (워싱턴 정상회의, '08.11.15)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47개 개혁과제 선정 (41개 과제가 금융분야)

② (런던 정상회의, '09.4.2) 41개 과제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8개 분야에서 구체적인 행동계획 도출

※ ① FSB 설립, ② 국제협력 강화(위기대응계획, 정리절차), ③ 건전성 규제 (자본의 질·양, 유동성 규제) 강화, ④ 규제범위 확대(장외파생상품시장 등), ⑤ 보상체계 개혁, ⑥ 비협조적 지역 감시 강화, ⑦ 회계제도 개선, ⑧ 신용평가회사 규제개혁 등

③ (피츠버그 정상회의, '09.9.24) 런던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8개 분야 개혁과제를 중요성에 따라 6개 우선과제로 재분류

※ ① 은행 자본규제 강화, ②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축소, ③ 보상원칙 이행 강화, ④ 장외파생상품시장 규제 강화, ⑤ 회계기준 개선, ⑥ 비협조적 지역 감시 강화

④ (토론토 정상회의, '10.6.26) 11월 서울 정상회의시 은행 자본규제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규제 등 핵심 과제를 마무리 하기로 선언

※ ① 건전성 규제강화, ② 효과적 감독, ③ 정리체계 구축 및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규제, ④ 투명한 국제적 평가와 상호점검

◆ (FSB 설립, 09.6.26) G20 런던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기존 FSF\*를 FSB(Financial Stability Board)로 확대 개편

\* G-7주도로 '99.2월 FSF(Financial Stability Forum)로 설립

⇒ FSB는 G20 정상회의에서 mandate를 받아 금융규제 관련 국제기준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임무를 수행

## 2. 금융규제 분야 개혁 프로세스

- ① 런던 정상회의 이전에는 각국의 금융규제 담당 고위급이 참여하는 별도 Working Group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
  - ② 런던 정상회의 이후에는 별도의 전문가그룹 구성없이 '09.6월 설립된 FSB 주도로 논의를 전개하고 그 결과를 G20에 보고
- FSB는 BCBS · IOSCO · IASB 등 국제기준 정립기구(SSBs, Standards Setting Bodies)들의 기준마련 상황을 점검

### <G20, FSB 및 SSBs간 논의 및 보고 체계도>

(G20) 주요 이슈에 대한 규제개혁의 기본방향에 합의



(FSB, SSBs)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제기준에 반영



(FSB)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G20에 보고



(G20) FSB의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행일정 등 추가사항 합의

### <FSB, SSBs 등 주요 국제기구들의 역할>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 금융안정위원회
  - 총괄, 보상체계 원칙, 국경간 위기관리 원칙, 공동감시단 운영방안 마련등
- **BCBS**(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 바젤은행감독위원회
  - 완충자본, 최저자본요구량, 단순지표, 유동성 규제 등 건전성규제 개선
- **IOSCO**(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 국제증권감독기구
  - 헤지펀드, 장외파생상품시장, 신용평가사 등 자본시장 관련 기준 개선
- **IAIS**(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 국제보험감독기구
  - 다국적 보험사 감독을 위한 당국간 협력 강화
-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 국제회계기준위원회
  - 회계 투명성, 공정가치, 동태적 대손충당금 등 회계기준 개선
  - 국제 회계기준(IFRS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 Standards) 제정
- **FASB**(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
  - GAAP(General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제정

### 3. 주요 과제별 논의 현황

#### 가. 은행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강화

- (의의) '10.9.12일 BCBS회의에서, 각국은 규제수준(calibration)과 이행시기(phase-in arrangements) 등을 합의\*
-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은행의 복원력(resilience) 강화 및 유동성 위험 축소를 위한 BCBS 차원의 논의 마무리
- (규제수준) 자본규제비율은 보통주 4.5%, Tier1 6%, 총자본 8%, 자본보전완충자본은 2.5%(보통주 기준) 수준
- (이행시기) 보통주 및 Tier1 비율은 '15년초, 자본보전완충자본은 '19년초, 단기유동성 비율은 '15년초부터 본격 시행

- ① (레버리지 비율) : (11~12년) 당국 모니터링 → (13~16년) 병행운영, 15년 공시 → (17년) 최종수정(상반기) → (18년) Pillar I 규제 도입
- ② (중장기 유동성 비율) : (12~17년) 관찰기간 → (18년) 규제 도입

- (경과기간) 현행 기타 Tier1 및 Tier2의 경우 '13년초부터 10년간 제거, 既투입된 공적자본은 '18년초까지 유예인정, 공제 항목은 '14~'18년중 전액 조정완료(매년 20% 공제)

⇒ (향후 일정) BCBS 합의안은 11월 G20 서울정상회의에 제출되어 최종 확정될 예정

## 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SIFI ;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 (논의배경) 다수 국가에서 실물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대형 금융회사를 정리하지 못하고 공적자금 투입
- (주요 논의사항) 피츠버그 정상회의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SIFI 논의는 3가지 검토방향을 중심으로 진행

- ① SIFI 부실화 가능성 최소화(surcharge, 감독 강화 등)
- ② SIFI가 부실화된 이후 이를 질서 있게 정리하는 방안
- ③ 부실전염을 차단하기 위한 시장인프라 강화 방안

⇒ (향후 일정) FSB는 10.10월까지 SIFI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G20 서울 정상회의에 보고할 예정

## 다. 보상규제 강화

- (논의배경) 단기성과 위주, 비대칭적\* 보상체계가 과도한 위험 부담을 촉진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

\* 성과급 등 보수체계가 양(+)의 성과만 있고, 음(-)의 성과가 없음

- (논의사항) 09.4월 런던 정상회의에서는 FSB의 보상원칙을 채택하고, 각국은 중요한 진전을 이루기로 합의

○ '09.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시 FSB의 보상원칙 집행기준 채택

\* 한국은 FSB 보상원칙 국내 이행을 위한 업권별 모범기준 마련('10.1.7)



## **라. 장외파생상품시장(OTC derivative market) 규제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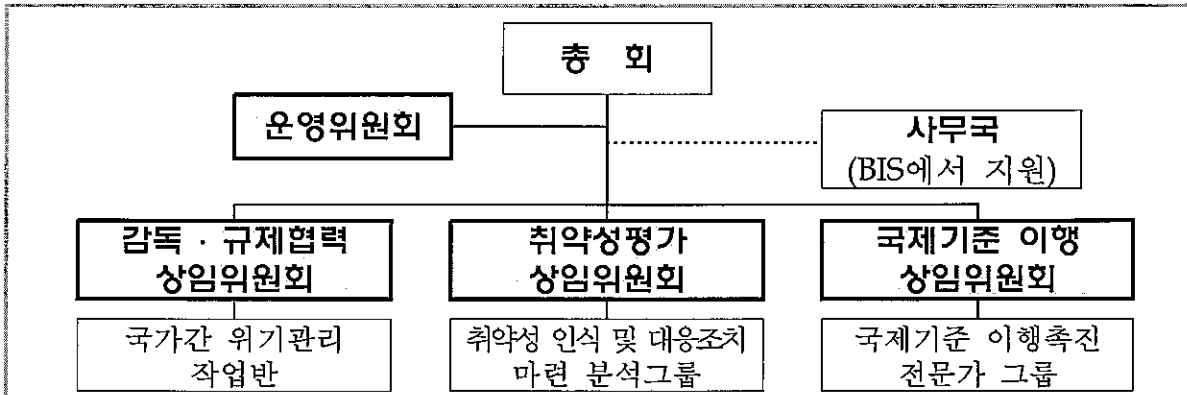
- ☐ (논의배경) CDS 등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규제·감독이 미흡하여 금번 금융위기가 증폭
- ☐ (논의사항)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거래상대방 리스크(counterparty risk) 축소를 위한 방안 합의
  - ① 모든 장외파생상품거래는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
  - ②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은 '12년까지 CCP를 통해 청산

## **마. 회계기준 개선**

- ☐ (논의배경) 금번 금융위기증폭 요인이 국가별로 다른 회계기준에 있어 고품질의 단일 회계기준 마련의 중요성이 강조
- ☐ (논의사항) 국제회계기준위원회와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는 2011년말까지 회계기준을 합치하고, 국제회계기준 제정시 신흥국 등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 참고

## FSB 조직체계



<b>운영위원회 (SC)</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장 : FSB 의장(이태리 중앙은행 총재 M. Draghi)</li> <li>· 구성 : 16개국 및 10개 국제기구가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개국 : G7, 네덜란드, 호주, 스위스, 한국, BRICs, 멕시코</li> <li>- 10개 국제기구 : IMF, BIS, BCBS, IAS, IOSCO, IASB, CGFS, CPSS, ECB, EC</li> <li>* G20 국가중 신규회원은 우리나라와 BRICs 및 멕시코임</li> </ul> </li> <li>· 역할 : FSB 운영방향 설정(총회운영 보좌)</li> </ul>
-----------------------	---

<b>상임위원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장 : FSB의장 추천으로 선출</li> <li>· 구성 : 상임위 의장이 20-25명 수준에서 지역별·기관별 안분</li> </ul>
--------------	---

<b>감독·규제협력 상임위원회 (SRC)</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장: FSA J.A. Turner 의장</li> <li>· 역할: 규제당국의 조정과제 공론화 및 정책개발, 공동 감시단의 설립과 수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제시, 시스템 차원의 추세와 취약성 묘사, Best Practice 조사</li> <li>* 국경간 위기관리(cross border crisis management)에 대한 정책조언</li> </ul>
<b>취약성평가 상임위원회 (SCVA)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장 : BIS Jaime Caruana 총재</li> <li>· 역할 :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응을 FSB에 보고</li> <li>* IMF와의 협업중인 조기경보체계(EWE)의 기초자료로 이용</li> </ul>
<b>국제기준이행 상임위원회 (SCSI)</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장: 캐나다 재무부 Tiff Macklem 차관</li> <li>· 역할: 참가국 관할의 거시건전성 규제·감독기준 이행에 대한 상호평가실시, 동결과를 이용하여 전체 평가 자료를 만들고 총회승인 후 공표</li> <li>* 국가별 뿐 아니라 주제별 평가도 병행</li> </ul>

## 24. 최근 5년간 공적자금상환기금 및 구조조정기금 운용 금융기관 현황, 상품별 연도별 운용실적

### A. 공적자금상환기금 및 구조조정기금

#### □ 공적자금상환기금 및 구조조정기금 운용 금융기관 현황

##### <공적자금상환기금 운용 금융기관 현황(2005~2009년)>

(단위 : 억원, 기말잔액 기준)

금융상품	금융기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예치금	SC제일은행	2,916	-	-	-	-
	경남은행	500	-	100	-	-
	국민은행	-	200	-	-	-
	광주은행	-	80	338	-	72
	제주은행	-	-	100	100	-
	우리은행	-	-	-	661	-
	하나은행	-	-	-	-	1
	기업은행	-	-	200	-	-
합 계		3,416	280	738	761	73

##### <구조조정기금 운용 금융기관 현황(2005~2009년)>

(단위 : 억원, 기말잔액 기준)

금융상품	금융기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예치금	신한은행	“해당사항 없음”				776
합 계						776

□ 공적자금상환기금 및 구조조정기금 상품별 운용실적

<공적자금상환기금 상품별 운용실적(2005~2009년)>

(단위 : 억원, 기말잔액 기준)

금융상품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대분류	중분류					
예치금	MMDA	3,416	280	-	-	-
	정기예금	-	-	738	761	73
	표지어음	-	-	-	-	-
합 계		3,416	280	738	761	73

<구조조정기금 상품별 운용실적(2005~2009년)>

(단위 : 억원, 기말잔액 기준)

금융상품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대분류	중분류					
예치금	MMDA	“해당사항 없음”				776
합 계						776

## B. 기보, 신보, 농신보

□ 최근 5년간 연도별 보증잔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5월
신보	일반	291,528	285,243	285,422	303,868	392,494	405,054
	시장안정	-	-	-	-	19,524	18,194
	은행자본확충					26,373	24,749
	유동화회사보증	19,460	11,097	3,749	13,563	30,741	37,990
기보	일반	115,013	111,508	112,459	125,935	171,448	171,406
농신보	일반	55,543	45,014	35,524	29,882	25,877	25,141
	특별	122,545	106,689	93,717	89,671	79,154	76,537

### C. 부실채권정리기금, 예보채상환기금

□ 최근 5년간 운용 금융기관 현황

####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 금융기관 현황(2005~2009년)>

(단위 : 억원, 기말잔액 기준)

금융상품	금융기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예치금	경남은행	1,430	1,280	1,280	0	
	광주은행	2,400	2,700	2,400	200	160
	국민은행	8,230	8,500	6,120	340	
	기업은행	8,578	11,020	9,640	1,920	360
	농협중앙	1,300	4,570	4,770	300	300
	대구은행	700	3,200	2,970	800	100
	부산은행		600	800	100	200
	산업은행	930	3,200	0		720
	수협중앙	3,400	4,654	2,916	100	95
	신한은행	3,212	11,212	8,411	1,521	247
	외환은행		2,500	0		200
	우리은행	8,350	12,850	6,170	2,120	530
	전북은행			200	0	300
	제일은행	3,514	3,759	3,629	0	
	제주은행			710	510	165
	하나은행	3,580	7,740	6,365	800	300
실적배당 상품	삼성자산운용	100	2,750	3,740	0	755
합 계		45,724	80,535	60,121	8,711	4,432

\*사용이 제한된 에스크로금액 등 제외

**<예보채상환기금 운용 금융기관 현황(2005~2009년)>**

(단위 : 억원, 기말잔액 기준)

금융상품	금융기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예치금	경남은행	-	-	-	-	-
	광주은행	-	200	201	257	1,096
	국민은행	350	150	800	27	1,691
	기업은행	716	200	1,629	-	1,089
	농협	218	106	1,868	120	900
	대구은행	-	-	73	-	-
	부산은행	-	-	-	-	-
	수협	-	-	200	-	300
	산업은행	500	84	312	-	-
	신한은행	753	591	1,708	1,794	1,796
	씨티은행	-	-	-	581	1,401
	외환은행	42	651	117	-	2,172
	우리은행	3,732	1	-	-	1,105
	전북은행	-	-	-	616	92
	제주은행	-	100	301	67	-
	제일은행	-	106	2	-	-
	하나은행	585	500	702	609	1,722
채권	산업은행	7,133	5,341	3,079	297	304
	기업은행	3,849	5,263	5,976	892	1,801
	수출입은행	-	-	-	-	498
	정책금융공사	-	-	-	-	202
	주택금융공사	-	-	-	-	201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 (국공채)	706	403	-	-	104
	한국은행(통안채)	34,800	8,759	2,041	-	-
연기금투자 MMF	삼성자산운용	-	-	100	582	854
합 계		53,384	22,455	19,109	5,842	17,328

□ 최근 5년간 상품별 운용실적

**<부실채권정리기금 상품별 운용실적(2005~2009년)>**

(단위 : 억원, 기말잔액 기준)

금융상품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대분류	중분류					
예치금	발행어음 등					47
	MMDA	309	145	25	184	
	정기예금	9,073	19,835	17,690	450	570
	CD	29,992	54,005	38,216	7,627	2,340
	RP	6,250	3,800	450	450	720
연기금투 자폴	MMF	100				55
	수익증권		2,750	3,740		700
합 계		45,724	80,535	60,121	8,711	4,432

\*사용이 제한된 에스크로금액 등 제외

**<예보채상환기금 상품별 운용실적(2005~2009년)>**

(단위 : 억원, 기말잔액 기준)

금융상품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대분류	중분류					
채 권	국공채	706	403	-	-	104
	통안채	34,800	8,759	2,041	-	-
	산금채	7,133	5,341	3,079	297	304
	중금채	3,849	5,263	5,976	892	1,801
	정책금융공사채	-	-	-	-	202
	수출입은행채	-	-	-	-	498
	MBS	-	-	-	-	201
	전체	46,488	19,766	11,096	1,189	3,110
예치금	MMDA 등	4,682	247	602	722	97
	정기예금	2,214	2,442	7,311	2,649	12,671
	은행CD	-	-	-	-	596
	은행RP	-	-	-	700	-
	전체	6,896	2,689	7,913	4,071	13,364
연기금투 자폴	MMF	-	-	100	582	854
합 계		53,384	22,455	19,109	5,842	17,328



## D.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주택금융공사는 공사 고유계정으로 보금자리론, MBS 발행 등 주택금융업무를 수행
  - 특히 이 중에서 저소득층·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 지원을 목적으로 금리우대 모기지론을 운영하며 이에 따른 역마진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으로 이차보전
- 또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는 주택구입자 및 주택공급자의 보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 기금의 재원으로 정부가 출연 가능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공급실적 및 정부출연

(단위 : 억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주택신용보증	48,054	41,214	50,889	67,603	96,545
주택담보노후 연금보증	-	-	11	156	531
정부출연금	1,300	1,000	1,000	-	-

## □ 모기지론 이차보전 사업

### ○ 사업내용

- 저소득층·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 지원 및 모기지론 활성화를 위해 무주택 서민에 대해 모기지론 금리 우대(0.5~1.0% 인하)

### ○ 금리우대 모기지론 취급 금융기관

- 신한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삼성화재, 부산은행

## ○ 금리우대 모기지론 집행실적

(단위 : 억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누계
공급건수	239	1,379	928	2,796	1,956	7,298
공급건수	118	685	507	1,613	1,075	3,998
이차보전 집행액	6		8	19	27	60

## 25. 금융회사 지배구조 검토현황 및 자료

-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가칭)」 제정을 위한 T/F를 구성(3.5일)하고 이를 통해 주요사항 등을 논의해 왔습니다.
- 금융연구원은 최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10.6.23일) 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금융연구원의 발표내용 및 금융회사,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입장을 정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 별첨 > 금융연구원 공청회 자료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기본방향

2010. 6.23



한국금융연구원  
KOREA INSTITUTE OF FIN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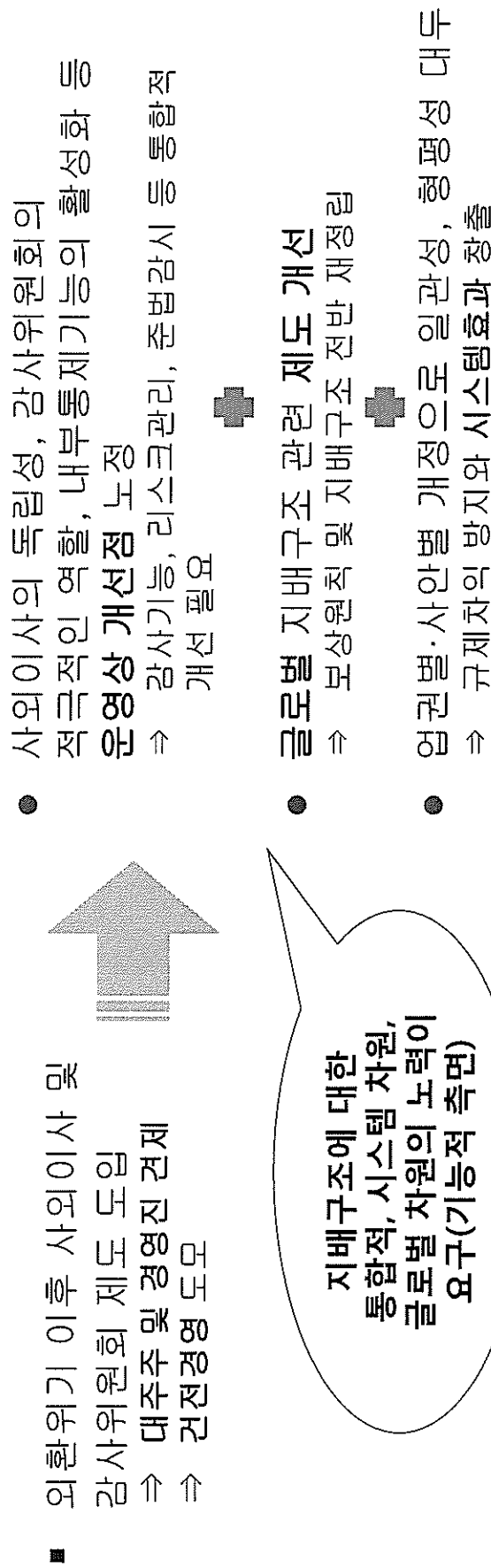
## 목 차

---

- I. 서
- II.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문제점
- III. 해외사례
- IV. 금융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 V. 세부방안

#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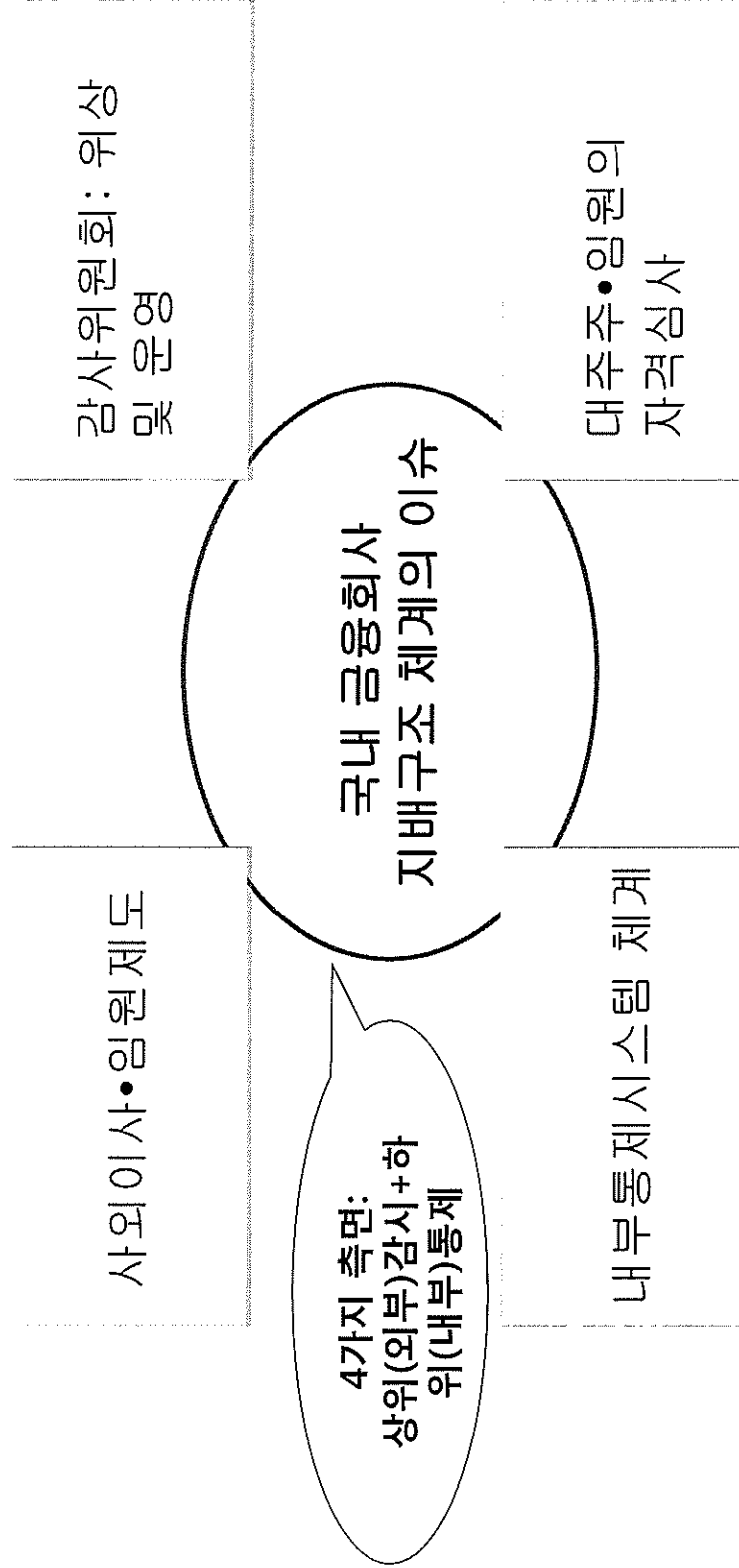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글로벌 차원의 제도개혁, 금융법률 간 일관성 제고를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기본방향과 세부과제를 논의함.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법률적 개편 모색”  
(regulatory approa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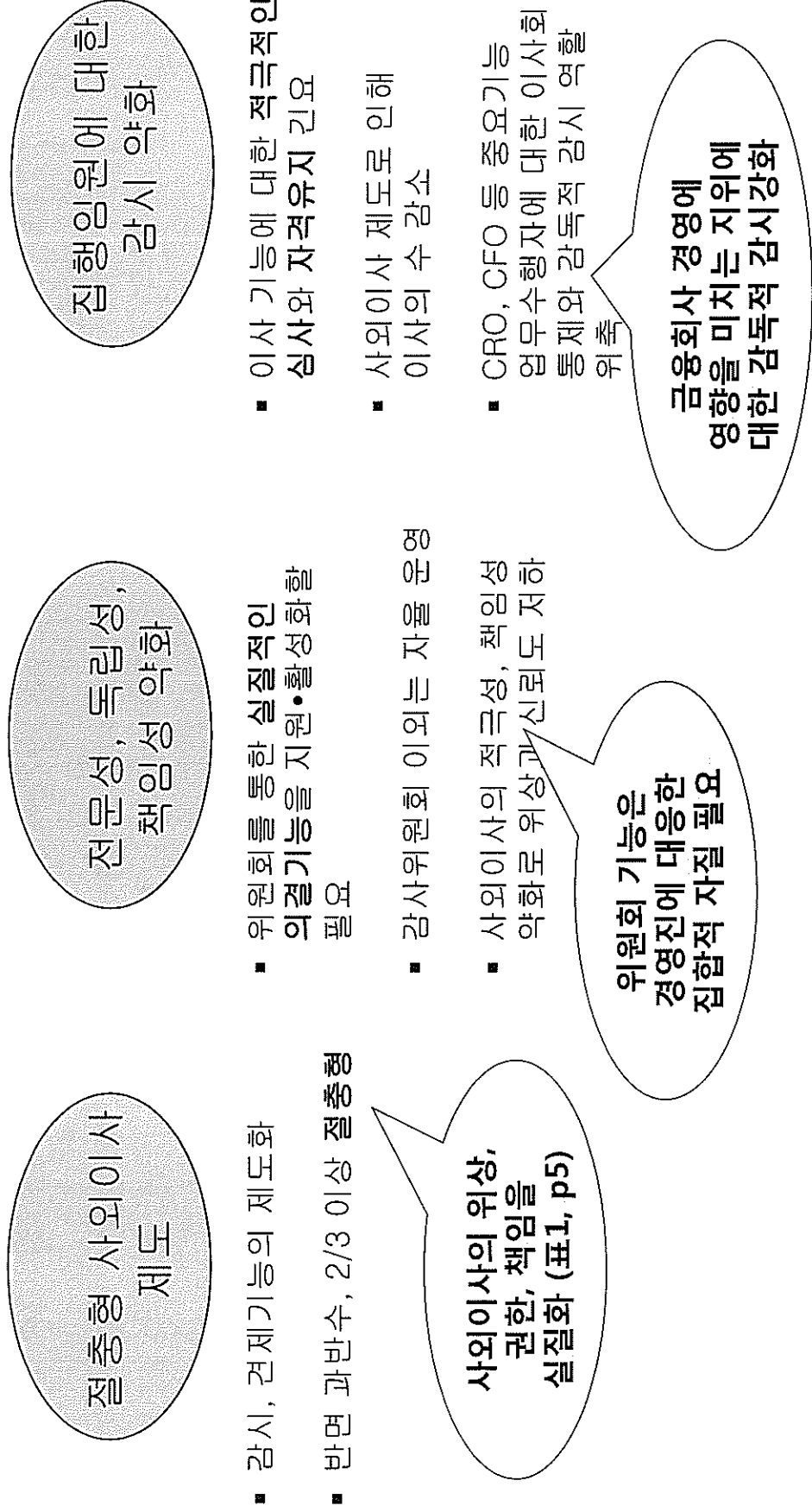
## II.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문제점

-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문제점은 사외이사 및 임원제도, 감사위원회의 기능 및 위상, 내부통제 기능, 대주주 및 임원의 자격심사 등과 밀접히 관련



## II.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문제점: 사외이사·임원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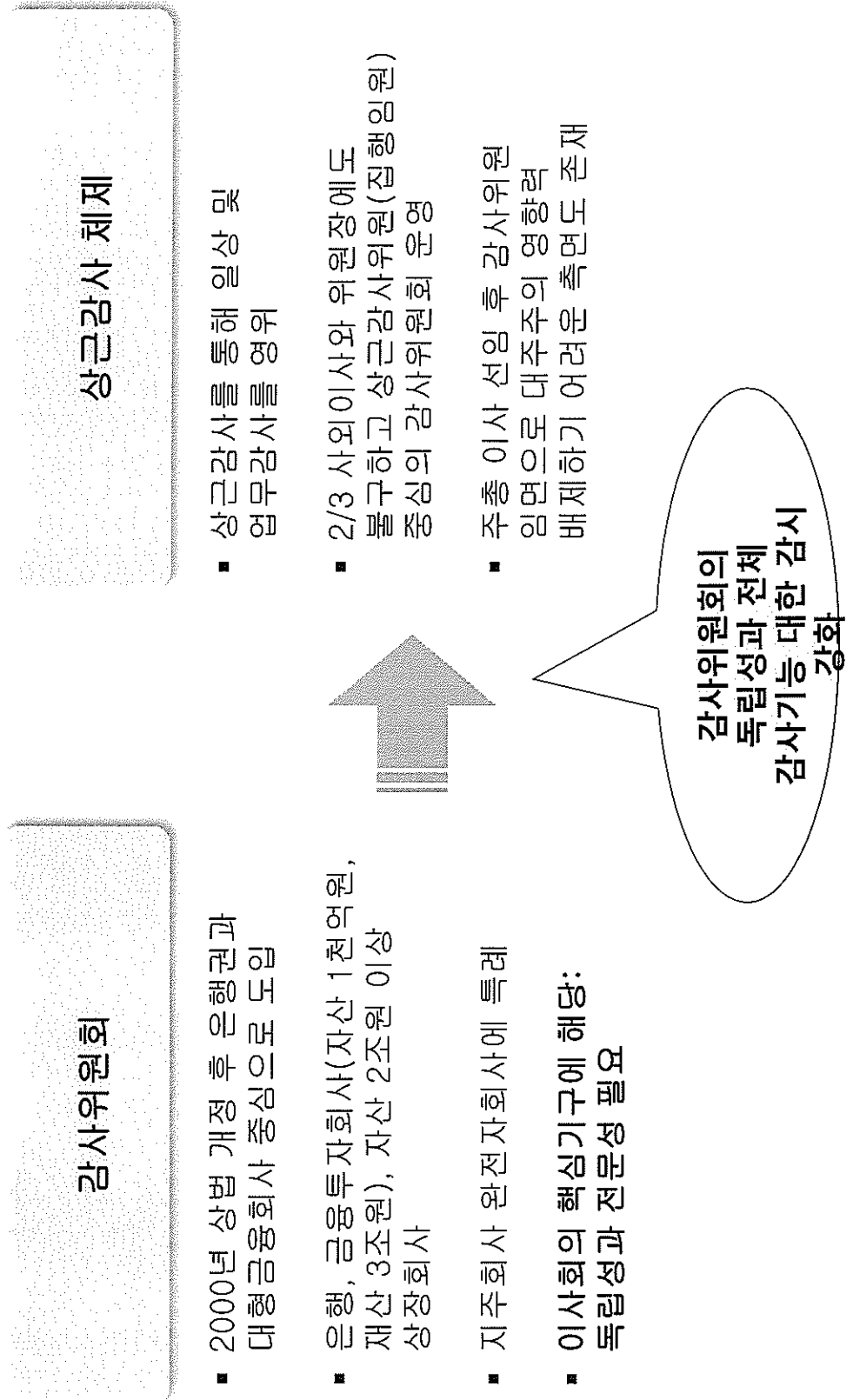
- 사외이사의 전문성, 독립성, 책임성에 대한 규율체계가 미흡하고 이사기능을 담당하는 집행임원에 대한 감시, 심사기능이 취약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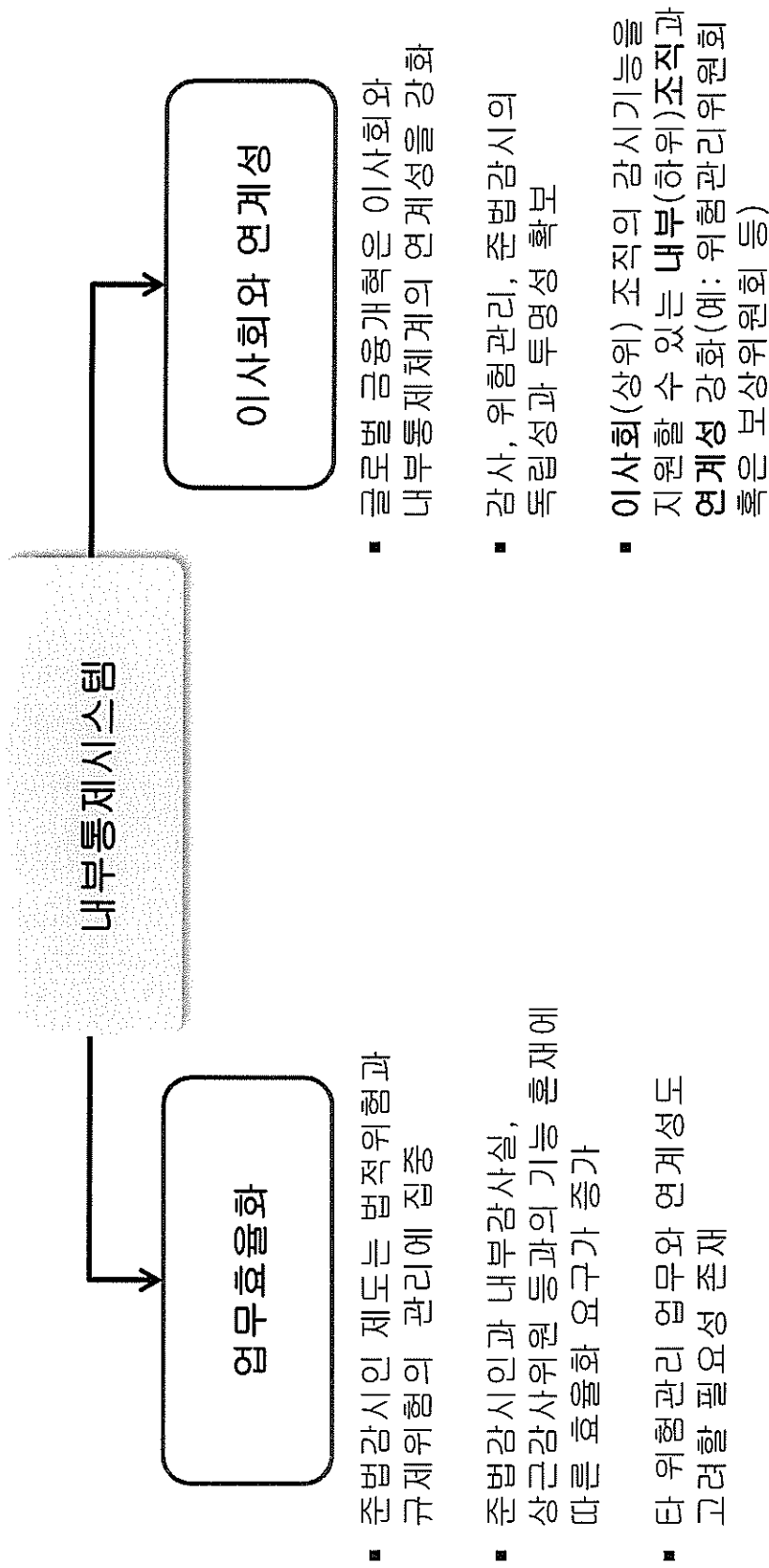
## II.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문제점: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의 핵심기능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상근감사에 의한 대체 혹은 임면과정에서 독립성 보장이 미흡한 상황



## II.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문제점: 내부통제시스템

- 준법감시인 제도를 중심으로 업무 효율화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재점검과 글로벌 금융개혁 차원의 내부통제의 연계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



## II.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문제점: 대주주 · 임원 자격심사

-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문제점은 사외이사 및 임원제도, 감사위원회의 기능 및 위상, 내부통제 기능, 대주주 및 임원의 자격심사 등과 밀접히 관련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원의 경우 결격사유와 경과기준 위주의 심사: 경과기준의 <b>업종간 일관성도 부재</b></li> <li>■ 과도한 제한 혹은 중대한 과실에 대한 도덕적 해이 소지 가능성 존재</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재절차는 감독규정, 세칙에 <b>은연</b></li> <li>■ 제재효과를 감안하여 절차, 처분의 기록 및 공시 기능을 규범화 할 필요</li> <li>■ 제재 조치는 지배구조의 <b>사후관리(동태적 관리) 체계에 해당</b></li> </ul> |
|---|---|---|

# 해오래

- NYSE의 상장기준, 영국의 금융감독, 일본의 회사법, 독일의 지배구조법, OECD 및 BCBS를 중심으로 점검

	이사회	임원	제재	위험관리 · 내부통제 · 보상 등
NYSE 상장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반수 독립이사</li> <li>- 감사위원회: 전문성, 전원 사외이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관 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 및 저축은행 임원에 대한 해임 (OCC)</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상내용 공시</li> <li>- 보상위원회: 독립이사</li> </ul>
영국 금융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 비상임이사</li> <li>- CEO와 의장 분리</li> <li>- 감사위원회: 3인 이상 사외이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와 집행임원 분리</li> <li>- 이사 기능과 특정 통제기능 담당자도 의 경우 FSA 승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재 및 준법경력</li> <li>- 고려 금융회사, 업무, 전문 금융회사, 금융수행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감시인은 FSA 승인</li> <li>- 보상위원회: 3인 이상 사외이사</li> <li>- 모상정책, 무효, 회수 및 변경 등</li> </ul>
일본 회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법상 임의기구</li> <li>- 감사위원회: 2인 사외이사+1인 상근감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 의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각총리대신은 금융회사의 해임권(금융청 장관 위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 전결</li> </ul>
독일 지배구조코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원적(감독+경영) 구조</li> <li>- 감사위원회: 전원 감독이사, 전문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이사회 이사 출근출</li> <li>- 감독이사회가 선임기 5년 이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법에 의한 의무 감사위원회에서 결정</li> <li>- 업무적모수 행사기간, 금액 근거 등</li> </ul>
OECD 지배구조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EO와 이사회 의장 분리 혹은 공시</li> <li>-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R0에 의한 모고 독립이사에 의한 과외결정(장기성과)을 관리체계 및 위원회</li> </ul>
BCBS 은행 지배구조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 의 전략 위험, 지배구조 가치 등 권한 강화</li> <li>- 자회사에 대한 책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관리 · 내부통제: 독립성, 권한 지위 등 CR0에 의한 모고 FSB 모상원칙 준수</li> </ul>

### III. 해외사례 : 시사점

---

- 금융회사에 대한 지배구조 규율은 사외이사의 책임성 강화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제고, 내부통제체계의 위상 강화 등을 통해 이사회에 의한 경영진 감시를 구체화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됨.

- i. 이사회는 핵심은 경영진에 대한 견제 및 감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으로 평가
- ii. 사외이사는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commitment)을 갖추므로 경영진에 대한 대등적 역량을 갖추는 데 중점
- iii.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에의 핵심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금융회사의 상황에 따라 전략 및 위험관리, 보상 등의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독립성 확보 필요)
- iv. 금융회사는 위험관리, 유인체계, 감사체계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사회 기능을 지원토록 권고
- v. 금융회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배기능을 포함한 주요통제기능에 대한 지속적인 자력심사제도를 유지

## IV.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제정 필요성

-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법률의 제정취지는 감독기능 측면, 법률구조의 강화, 국제적 정합성 제고 측면에서 통합·기능적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음.

### 업종간 지배구조 일관성과 시스템안정성

- 경영에 대한 감시 및 견제뿐만 아니라 책임과 제재 강화(적극적 의미)  
⇒ 업종간 차이 축소가 바람직

- 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한 일관된 원칙 적용  
⇒ 연계성과 복잡화 고려

● 통일된 규칙을 통해 금융소비자(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보호

### 지배구조의 통합체계 마련

- 이사회 기능과 내부 하부기능과 연계  
⇒ 내부통제, 준법감시, 위험관리 등과 연계
- 임원, 집행임원, 주요업무담당자에 대한 심사, 평가, 제재 등을 연계

- 주요 핵심업무에 대한 통합규율 마련

### 국제적 측면의 국제적 정합성

- 글로벌 금융개혁의 핵심과제 수용  
⇒ 규범화 및 법률화
- 기능적 규율체계 전환에 따른 법률기반 개선

## IV.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6대 방향

- 금융지배구조 관련 법률 제정의 기본방향은 이하의 6가지로 요약

- 사외이사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 강화(collective qualifications)
- 이사회와 집행임원에 대한 규율 강화

### 가. 이사회와 신뢰도 및 감시기능 제고

#### 나.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기반 마련

- 사외이사 중심의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제고
- 단, 내부감사 및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를 통해 보완
- 이사회와 감사기능 정확

#### 다. 주주와 임원에 대한 적극성 강화

- 사후적인 자력심사 강화
-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유지조건 강화

#### 마. 보상체계 규율의 제도화

- 보상정책의 의결과정 체계화(보상위원회)

#### 바. 지배구조 관련 기능적 규제체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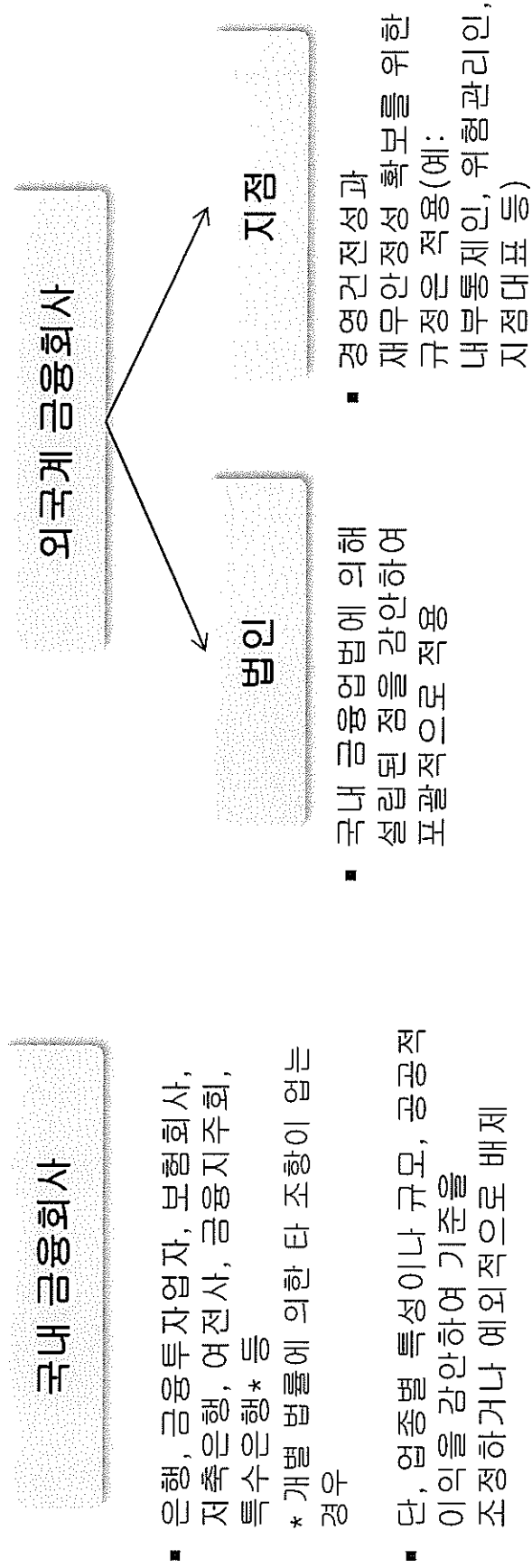
- 이사회 구성, 소수주주권, 냉각기간, 제재절차 등의 통합

#### 라. 준법감시자, 위험관리자의 역할·위상 제고

- 내부통제인(준법감시, 위험관리)에 대한 보호 및 권한, 위상 강화
- 위험관리 조직과 업무의 규범화

## V. 세부과제 : 적용범위

- 국내 금융회사와 외국계 국내법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적용하며, 금융회사의 설립근거, 규모 및 업무영역, 공공이익의 등을 감안하여 기준을 조정하거나 배제





## V. 세부과제 : 개요

### ■ 주요 세부과제와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음

세부방안	세부과제	개선안
이사회 의 경영진 감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사회 의 독립성 강화</li> <li>-사외이사 전문성, 책임성 제고</li> <li>-이사회 권한, 의결사항 명시</li> <li>-원칙준수, 예외공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상임이사 냉각기간 연장</li> <li>-사외이사 비율 강화: 과반수</li> <li>-이사회 의장: 원칙적으로 사외이사-예외적으로 대표이사</li> <li>-사외이사 수 확대: 일정 기준 5인 이상</li> <li>-사외이사 연속재임기간 제한: 최대 5년, 초과시 결격사유</li> <li>-사외이사 수: 3개사, 초과시 공시의무</li> <li>-사외이사 교육정책 공시</li> <li>-이사회 개최: 분기 2회 이상</li> <li>-은행법에 준하는 이사회 의 의결대상 구체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원기준 정비</li> <li>-임직원 겸직제도 정비</li> <li>-집행간부 제도 도입, 통제</li> <li>-임원의 자격심사 방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li> <li>-임원: 이사, 감사, 집행간부</li> <li>-겸직: 일반금융회사: 계열사간 겸직 확대(사후보고), 지주회사 금융회사: 겸직 확대, 사외이사는 겸직 확대 혹은 주력 자회사 한정, 완전자회사: 사외이사 겸직 확대 혹은 특례</li> <li>-집행간부 정의: 임무집행지시자 혹은 주요임무 담당자</li> <li>-자격심사: 자체 심사-사전협의 혹은 자체심사-사후통지</li> </ul>
감사위원회 본연의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사위원회 역할 강화</li> <li>-감사위원 선출방식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행 또는 100% 사외이사</li> <li>-감사위원 선임: 분리 선임 혹은 상법 기준</li> </ul>
내부통제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부통제기능의 권한, 역할 재정립</li> <li>-내부통제인의 결격기준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부통제체계 개편: 현행유지와-CEO 보고와 내부통제인-이사회보고(임면)</li> <li>-내부통제인 결격기준: 임원(문책경고), 직원(일방)</li> </ul>
위험관리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험관리위원회 설치</li> <li>-위험관리인 지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험관리위원회 설치: 전체 금융회사 혹은 일정 기준</li> <li>-위험관리인 제도: 선임 의무화</li> </ul>
보상위원회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상위원회 설치: 일정 기준 이상</li> <li>-보상정책: 권리제한적 규정 포함한 포괄적 규정 혹은 지급방식 등에 대한 의무준수</li> </ul>
대주주·임원의 자격유지·심사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주주 자격 유지</li> <li>-임직원 선임 제한제도의 정비 및 강화</li> <li>-제재절차의 보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주주의 변경 및 자격유지는 일반적으로 규정</li> <li>-자격종족 미달 시: 의결권제한, 매각명령, 이행강제금 부과</li> <li>-제재내용과 형평성 제고: 징계-자격제한 연계 혹은 임원자격제한조치 제도 도입</li> <li>-제재절차 통합: 지배구조보장 관련 제재 혹은 개별 법률의 일반 제재 포함</li> </ul>

## V. 세부과제: 이사회와 경영진 감시강화: 기본 취지

---

- ① 이사회는 경영진 감시를 위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 ②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체계 강화를 위한 리더십과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
- ③ 사외이사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도모를 위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

## V. 세부과제 : 이사회와 경영진 감시강화(계속)

### 가. 이사회와 경영진으로부터

#### 독립성 강화

◎ 비상임이사  
냉각기간 연장

#### 도입 취지

- 비상임이사에 대한 별도의 냉각기간 부재(독립성 약화)
- 상임 임직원 기준과 통일

#### 개선 방안

◎ 냉각기간 : 2년→3년

◎ 사외이사 위원으로  
구성

- 경영 감시의 효율성과 독립성 확보

◎ 사외이사 과반수로 구성

◎ 이사회 의장:  
원칙적으로 사외이사

- 사외이사에 의한 이사회 주도 여건 마련
- 대표이사가 의사회 의장 겸임 시 독립성 보장 장치 마련

(1안)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이 아닌 경우 선임사외이사를 선임

(2안) 사외이사의 전원 동의

◎ 사외이사 수 확대

- 사외이사의 역할, 위상, 권한 강화 위해 필요
- 사내이사 축소에 대한 유인 방지
- 시스템위험과 사외이사 활용 부담 고려

◎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주요 금융회사는 5인 이상의 사외이사

◎ 사외이사 연속  
재임기간 제한

- 장기 재임으로 인한 독립성 훼손 방지

◎ 연속 재임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로 규정



## V. 세부과제 : 이사회와 경영진 감시강화(계속)

### 다. 이사회 권한·의결사항

#### 명시

#### 도입 취지

- 금윙회사 이사회의 결정권한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이사회의 책무 강화

#### 개선 방안

- 금윙회사의 의결대상은 은행법에 준하는 형태로 구체화

〈표 7〉 이사회 권한에 대한 규정 비교

상법	은행법	OECD의 지배구조 원칙	영국의 통합 지배구조 규정	프랑스의 상장기업지배구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의사항</li> <li>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li> <li>대규모 재산차입</li> <li>지배인의 선임·해임</li> <li>지정 설치·이권·폐지 등</li> <li>기타</li> <li>이사의 직무집행 감독</li> <li>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임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 요구</li> <li>3월에 1회 이상 임무 집행상황 이사회 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사회 의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영목표 및 평가</li> <li>정관의 변경</li> <li>임직인 보수를 포함한 예산 및 결산</li> <li>예산·경영양도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li> <li>내부통제기준</li> </ul> </li> <li>상법(§393)상 이사회 권한 중 해임·지정·설치·이권·폐지는 정관에 의하여 위임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략·리스크·예산 검토 및 평가</li> <li>지배구조 감시</li> <li>주요 경영진 임면 및 보수 감시</li> <li>주주 이익과 부합하는 경영진·이사회 보상</li> <li>투명한 이사회 지명·선출</li> <li>공시와 의사소통 절차 감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략목표 설정</li> <li>목표 달성 위한 재무적·인적 자원 확보</li> <li>경영진 성과 평가</li> <li>리스크 평가</li> <li>가치 평가 및 기준설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략 수립</li> <li>전략 수행에 적합한 임원 임명</li> <li>의장과 CEO 분리</li> <li>와, 통합 등 조직 실행</li> <li>회계 등 경영상태 감독</li> </ul>

## V. 세부과제: 금융회사 임원제도 정비

### 가. 임원기준의 정비

- ◎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 명확히 구분
- ◎ 임원 등 이사, 감사, 집행관부로 구분

### 나. 임직원 겸직제도 정비

#### ◎ 금융회사 성격 감안 겸직 허용

#### 도입 취지

- 금융회사의 속성과 사외이사 독립성을 고려하여 겸직제도를 정비
- 일반 금융회사: 상근임직원의 타 영리법인 겸직과 사외이사의 계열사 겸직은 제한
- 지주회사 소속 금융회사: 지주회사와 자회사 겸직 허용함. 단, 상임 임직원의 자회사 사외이사 허용으로 독립성 훼손
- 완전자회사: 내부통제기준을 충족하는 한 감사위원회 설치 면제

#### 개선 방안

- 일반 금융회사: ① 타 영리법인 종사는 금지, ② 계열사 간 겸직은 사후보고, ③ 사외이사 겸직규정은 현행 유지
- 지주회사 소속 금융회사: ① 소속 계열사간 상근, 비상근 겸직 허용, ② 사외이사의 경우: (1안) 주력자회사만 겸직 허용 (2안) 이해상충 문제가 없는 한 폭넓게 허용
- 완전자회사: (1안) 사외이사의 겸직 폭넓게 허용하여 이사회 설치 요구 (2안) 지주회사가 자회사 역할 대체(자회사가 복잡해질 경우 문제 발생 소지)

## V. 세부과제 : 금융회사 임원제도 정비(계속)

### 다. 집행간부 제도 정비 및 통제

#### ◎ 집행간부에 대한 정의

#### 도입 취지

- 집행간부에 대한 이사회와 감독강화를 위해 자격 및 권한, 책임과 의무, 제재 근거 등을 법제화할 필요

### 라. 임원의 자격심사 방식

#### ◎ 심사주체와 심사방식 규정

#### 개선 방안

- (1안) 상법상의 사실상 업무집행지시자 중 집행간부로 하고 이를 공시  
\* 실제 집행간부 개념과 유사하나 집행간부의 범위가 불분명
- (2안) 금융회사의 주요업무로 규정하고 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  
\*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다는 부담
- 임면, 책임·의무, 제재 등은 경영진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
  - 임기보장 규정은 검토 필요
- (1안) 금융회사가 자체 심사 후 필요시 감독당국에 요청  
\* 사전협의 측면에서 신뢰도 문제 제기 소지
- (2안) 금융회사가 자체 심사 후 감독당국에 사후 통지  
\* 금융회사의 자율성 및 책임은 강화되나 미정경 사유로 인한 부담

- 개별 법에서 결격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나 심사과정이나 절차는 관행적(자체심사 혹은 사전 의뢰)

- 지배구조의 핵심수단임으로 투명하고 통일기준을 마련

## V. 세 부과제 : 감사위원회 본연의 기능 강화

### 가. 감사위원회 역할 강화

◎ 사외이사 구성비율  
조정

#### 도입 취지

- 감사위원회 독립성 제고를 위해 2/3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
- 사외이사 아닌 상근감사위원의 참여로 사외이사 역할이 위축

#### 개선 방안

- (1안) **현행 제도를 유지**  
\* 현행 제도 유지에 따른 장점은 있으나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은 약화될 소지
- (2안) **100% 사외이사로 구성**  
\* 전문성 제고를 위한 외부자문 조직의 활용 필요  
\* 상시 업무를 담당하는 내부통제인의 역할 및 위상 개편이 병행될 필요

### 나. 감사위원회 선출방식 개선

◎ 감사위원 선임  
방식 개선

- 감사위원 선출 시 상장여부에 따라 차이: 상장(주총 사외이사 선임 후 선임), 비상장(주총 후 이사회에서 선임)
- 감사위원 임면에 대한 대주주의 영향력 배제가 어려워 독립성 약화 소지

- (1안) **비상장 포함 감사위원 여부를 분리해서 선임**  
\* 현행은 행법과 자본시장법  
\* 독립성 강화되나 집중투표제에 취약 소지
- (2안) **현행 상법과 동일하게 주총에서 선임**  
\* 금융회사에만 의무화: 기존에 설치된 위원회 활용 가능



## V. 세 부과제 : 내부통제제도

### 가. 내부통제기능의 권한·역할 재정립

◎ 내부통제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분리·조정 혹은  
내부통제업무와  
감사위원회의  
연계성을 강화

#### 도입 취지

- 준법감시인, 감사실, 상  
근감사위원 등에 의한 기  
능 중복이나 업무분담  
을 완화
- 내부통제기능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권한을 강화  
할 필요

(1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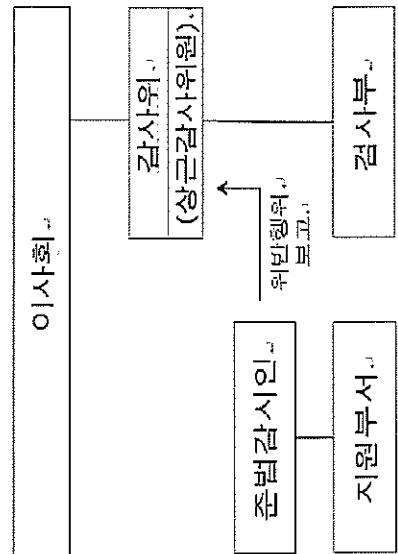
감사위원회(현행)를 유지하고 준법  
감시인은 CEO에 보고하는 체계  
\* 기능적 중복은 모범규준 통해 해소  
\* CEO 영향력 확대로 독립성 약화 소  
지

(2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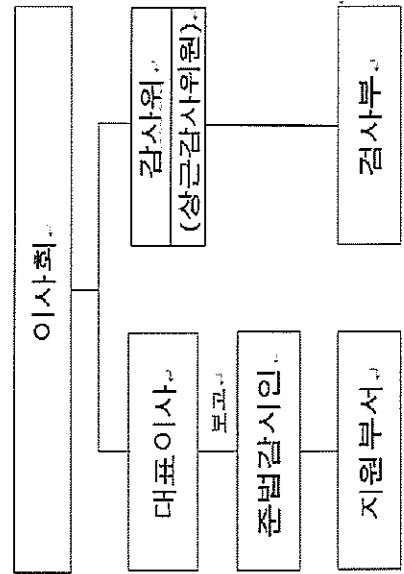
감사위원회(전원 사외이사)와 상시  
업무는 내부통제인이 담당  
\* 단, 감사위원회가 준법감시인에 대  
한 보고, 해임요구 가능  
\* 준법감시인의 임기(3년) 보장과 이사  
회에서 임면

#### 개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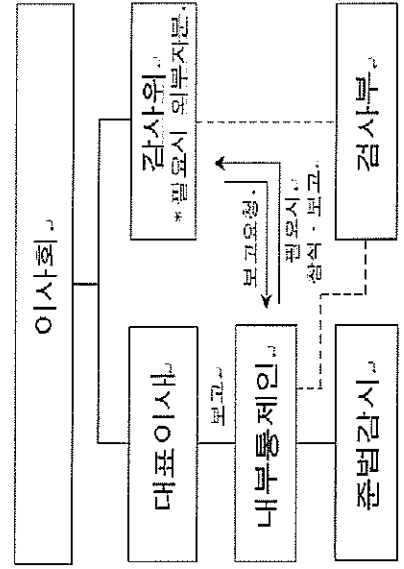
< 현행 제도 >



< 1안 >



< 2안 >



## V. 세부과제 : 내부통제제도(계속)

### 나. 내부통제인의 결격기준 강화

#### ⊙ 내부통제인의 결격사유 조정

#### 도입 취지

- 주의 혹은 경고단계의 준법감시인 자격 제한으로 엄격한 측면이 존재
-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하감시인의 내부 확립
- 경미한 사안 등 제재의 내용을 고려한 자격요건 검토 필요

#### 개선 방안

- (임원) 문책경고 이상
- (직원) 감봉이상

## V. 세부과제 : 위험관리제도

### 가. 위험관리위원회 설치

◎ 위험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 도입 취지

- 금융회사의 위험관리를 위한 위원회 설치는 필요 조건
- 이미 대형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운영 중

#### 개선 방안

- (1안) 전체 금융회사로 범제화: 준  
수비용 증가 우려
- (2안)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회사  
에만 의무화: 기존에 설치된  
위원회 활용 가능

### 나. 위험관리인의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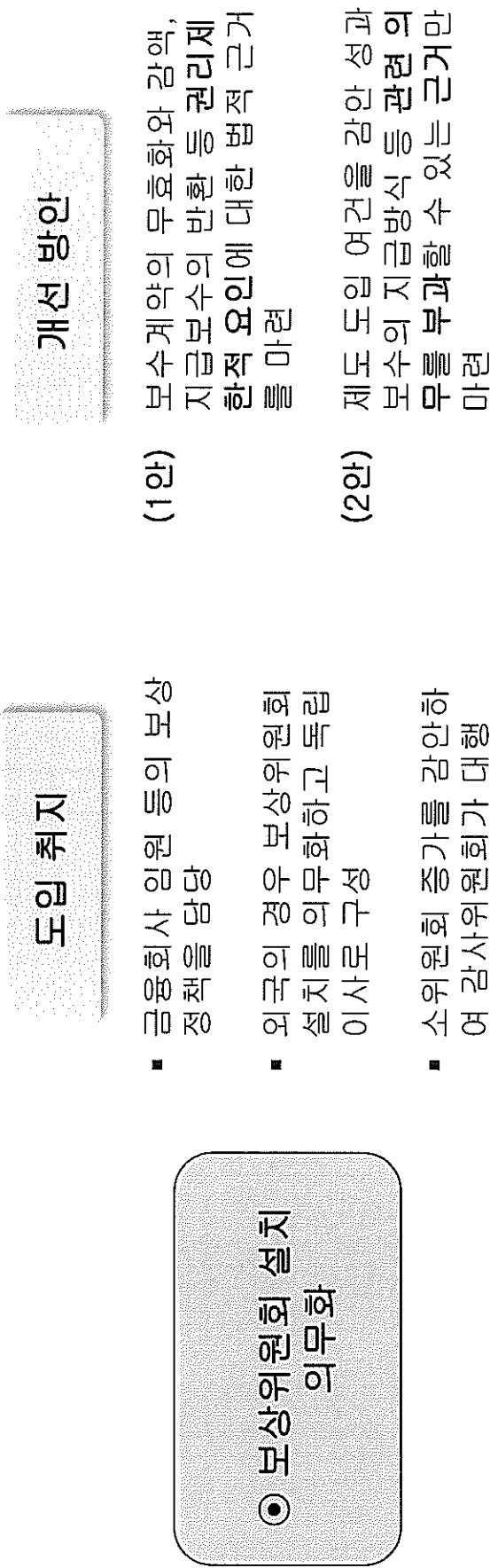
◎ 위험감시인 제도의  
도입

- 전체 금융회사의 위험감시 업무 강화를 통해 건  
전성 제고
- CRO(chief risk officer)  
를 적극적으로 활용

- 위험관리를 총괄하는 위  
험감시인 제도를 도입
- 이사회에 의한 임면과 보  
수체계의 차별화 부과

## V. 세부과제: 보상위원회 설치 및 운용

- 금융회사의 과도한 리스크 부담이나 단기 성과주의를 방지하고 보상과 성과를 연계하는 등 보상정책 전반에 대한 결정을 담당하는 조직체계를 마련



## V. 세 부과제 : 대주주•임원의 자격유지•심사제도

### 가. 대주주 자격유지

#### ◎ 대주주 변경 및 자격유지 규정

#### 도입 취지

- 대주주의 자격유지 요건 부과는 법률간 차이(은행(지주), 금융투자업, 저축은행 등)
- 심사주기와 심사방식 심사내용이 불명확

#### 개선 방안

- ◎ 인허가 요건은 개별법 사안
- ◎ 대주주 변경 및 자격유지는 지배구조법에서 규정
  - \* 경영지배구조의 안정성과 주기적 심사, 진입요건과의 차이 등을 감안 심사범위와 대상은 차등
- ◎ 자격요건 미달이나 미충족시 의결권제한, 이행강제금 또는 매각명령 등 부과

### 나. 임직원 선임 제한 제도의 정비 및 강화

#### ◎ 임원자격 제한 제도의 정비

#### 도입 취지

- 경미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전체 금융회사 임원 선임 제한은 비례원칙상 보완 필요
- 제재시기에 따른 불합리(예 : 임기가 끝난 시점부터 계산)

#### 개선 방안

- (1안) 명확한 법적 절차 하에서 징계
  - 자격제한을 명시
  - \* 임원선임 제한요건을 법률에 구체적 명시
- (2안) 제재와 연계 없이 임원자격제한 조치 제도를 도입
  - \* 영구적 임원금지(해임, 징계면직) 혹은 5년이후 선임제한 철회 요청권, 금융당국이 필요시 5년 범위내에서 자격 제한

## V. 세부과제: 대주주·임원의 자격유지·심사제도(계속)

### 다. 제재 절차의 보완

#### ◎ 제재 절차 관련 규정의 통합

#### 도입 취지

- 사전통지→청문 →  
결정통지 → 이의신청 →  
제재절차에 의한 절차적  
투명성 제고
- 감독 규정 및 세칙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제재심의위원회의 위상  
제고할 필요
- 결격사유 평가에 대한  
감독적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도 제재절차 개선

#### 개선 방안

- (1안) 지배구조법과 관련된 제재의  
근거 등을 제도화
- (2안) 개별 법 상의 일반 제재의  
종류 및 절차도 통합

- ❖ 이번 국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편은 금융인의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시킴으로써 금융회사의 사회적 신뢰도(public interest)를 개선을 도모할 것임.
- ❖ 이사회에 의한 통괄기능(governing function)과 준법감시, 위험관리, 내부감사 체계 등 내부통제기능(internal control function) 간 권한을 명확히 하고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임.
- ❖ 금융지배구조에 대한 기능적 접근은 지배구조에 대한 일관된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업종 간 형평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26. 비과세예금한도 등 정책변동 현황, 서민금융기능 회복 관련 내외지적사항 및 대책(현황 등 검토자료 포함)

### □ 비과세 예금 한도 정책변경 상황

- '09. 1월부터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1인당 2천만원 →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

\*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및 국회 기획재정위 대안을 통해 비과세 한도금액 상향 조정('08.12)

### □ 서민금융기능 회복 관련 내외 지적사항 및 대책

- 서민금융기능 회복과 관련한 내외 지적과 대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마련한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10.4.7)”을 참고하시기 바람



별첨

---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

---

2010. 4. 7

기 획 재 정 부    행 정 안 전 부  
농림식품수산부    금 융 위 원 회  
중 소 기 업 청



## 목 차



I. 추진배경 .....	1
1. 서민금융 현황 및 평가 .....	1
2. 서민금융 활성화 정책방향 .....	2
II. 서민금융 공급 확대 방안 .....	3
1. 서민계층에 대한 보증부 대출 공급 확대 .....	3
2. 신용회복 대상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8
3. 대부업의 최고이자율 인하 .....	9
4. 미소금융 운영개선 .....	10
5. 신용정보관리시스템 개선 .....	12
III.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	13

## I. 추진배경

### 1 서민금융 현황 및 평가

□ 금융위기 후 경기침체 및 고용감소로 생활이 어려워진 서민의 자금수요는 증가하였으나,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은 축소되어 서민의 금융이용기회 감소

○ 저축은행, 신탁 등 서민금융회사는 '03년 가계신용위기 이후 서민대출을 줄이고 부동산, 기업 관련 여신을 주로 취급

※ 신용 6등급이하 대출 비중(%) : 은행 21, 상호금융 36, 저축은행 87, 대부업 91

□ '09년말 출범한 「미소금융」은, 자활의지는 있으나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창업·운영 자금 지원 개시

○ 지난 3개월간 약 2만명이 방문·상담하는 등 서민층의 관심이 매우 컸으나, 그 금융수요를 모두 해소하기에 한계

□ 저신용 서민들의 대부업체 등 사금융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고금리 부담 등 서민생활 어려움 가중

※ 등록 대부업 시장규모(조원) : 4.1('07.9) → 5.6('08.9) → 5.9('09.9)

⇒ 서민의 금융수요 충족과 고금리 부담의 경감을 위해서는 미소금융과 함께 농·수협, 산림조합, 신탁,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을 통한 양질의 서민금융 공급 확대 필요

- ①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없어 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층에 대한 금융이용 기회 확대
  - 저신용(신용등급 6등급 이하)·저소득층에 대한 신용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의 출연재원을 바탕으로 보증공급을 확대
- ② 신용회복 대상자의 안정적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생활자금 지원을 확대
  - 신용회복기금의 여유자금을 바탕으로 한 신규 지원을 개시하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기존 지원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성실 채무상환자에 대해 자금지원 추진
- ③ 고금리 부담 완화를 통해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상의 최고이자율을 단계적으로 인하 추진
- ④ 미소금융으로 지원할 수 없는 서민에 대하여는 보증부대출 등 다른 서민금융지원 서비스를 연계 제공
  - 아울러 미소금융 지방지점 확충 등을 통해 서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미소금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육 및 컨설팅 능력 강화
- ⑤ 서민금융회사가 보다 충실한 여신심사를 바탕으로 서민 금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신용평가역량을 확충

## Ⅱ. 서민금융 공급 확대 방안

### 1 서민계층에 대한 보증부 대출 공급 확대

#### < 현황 및 문제점 >

□ 은행에 비해 신용평가 역량이 부족한 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들은 담보 및 신용이 부족한 서민들에 대한 대출을 꺼리는 실정

○ 이에 서민대출에 대한 보증공급을 확대하여 서민금융회사의 자금공급을 늘릴 필요

※ 미국은 지역개발금융펀드(CDFI)를 조성, 저소득층의 건강·교육·긴급자금 등을 지원하고, 일본은 정책금융공사를 통해 금융소외자에게 사업자금, 생활위생개선자금, 창업자금 등을 지원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영세자영업자, 근로자 등 서민에 대한 보증지원은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

※ 보증공급 규모 (조원)

	중소기업	자영업자	근로자
'08년	41.6	3.9	-
'09년	56.5	8.4	0.2
'10년(목표)	52.6	5.3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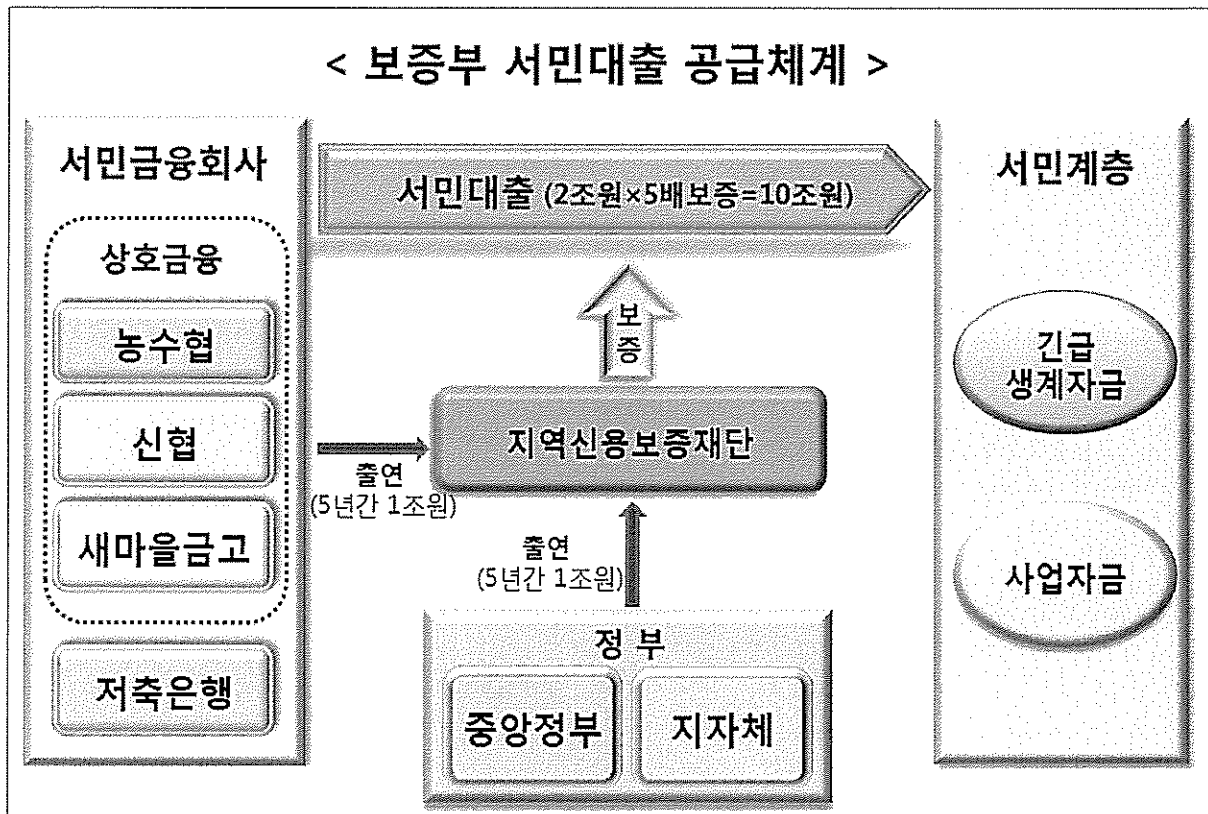
□ 현재 서민에 대한 특례보증은 글로벌 금융위기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한시적(금년중 종료예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 보증기관이 대출위험 전부를 부담하거나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낮아 금융회사가 대출을 소극적으로 취급하는 문제

⇒ 보다 많은 서민이 보증지원 혜택을 누리고 금융회사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 특례보증을 마무리하고 이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상시적 지원제도로 탈바꿈시킬 필요

## < 개선방안 >

- ◇ 정부와 민간의 공동재원 출연을 바탕으로 서민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 추진



### ① 보증부 서민대출 공급 목표 : 5년간 최대 10조원 공급

- 대부업체 대출규모 총 10조원임을 감안하여 대출 공급 목표 설정
- 서민대출의 부실율(10% 가정)을 감안할 때 약 5배 이내의 보증배수 적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보증재원으로 향후 5년간 총 2조원 수준(매년 4,000억원) 소요 전망

⇒ 해당 소요재원을 민간과 정부가 「50 : 50」으로 출연하여 조성하는 방안 추진

## < 보증재원 조성방안 >

**민간 출연 : 5년간 총 1조원(연간 약 2,000억원)**

○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이 「40 : 10」 으로 분담 출연

- 상호금융과 저축은행간 여신규모 차이(4배), 상호금융 회사에 대한 비과세 예금 혜택 등 감안

**(상호금융) : 5년간 총 8,000억원(연간 약 1,600억원)**

※ 상호금융내 업권별 연간 출연 규모 예상액('09.12월말 잔액기준)

	농협	수협	산림	신협	새마을금고	계
비과세예금(조원)	55.5	4.8	1.2	19.6	34	115
출 연 금(억원)	833	72	18	294	510	1,727

**(저축은행) : 5년간 총 2,000억원(연간 약 400억원)**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서민금융회사의 출연 의무화 추진('10년 상반기중)

**정부 출연 : 5년간 총 1조원(연간 약 2,000억원)**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민신용보증의 공공성, 지역주민 수혜,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분담비율 결정

**기타 : 보증수수료 수입 등**

## ② 보증대상

- 저신용(예: 신용 6등급이하) 또는 저소득(예 : 차상위계층) 영세자영업자, 근로자, 농·어업인(상호금융) 등

※ 제외대상 : 부도, 금융채무불이행자,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 진행중, 보증사고 관련자 등

## ③ 보증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담당

- ‘서민신용보증 전담’ 보증기관 신설방안도 검토 가능하나, 유사기관간 기능 중복, 보증 경쟁에 의한 부작용 등을 감안, 현재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활용 바람직

※ 2009.4월 법개정을 통해 지역신보는 소기업, 소상공인에 더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보증이 가능해 짐

- 보증재원은 ‘저축은행,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6개 업권별로 별도 분리 운영\*

\* 업권별 보증규모는 출연재원에 비례하여 결정하고 특정업권의 출연금을 타 업권에서 사용치 않음

- 일정기간(예: 1년)동안 분리 운영한 후 그 실적을 평가하여 필요시 업권간 경쟁유도를 위해 보증재원의 통합 운영 검토
- 금융위와 중기청이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신보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 앞으로 늘어날 보증업무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지역신보 중앙회의 역량을 확충



#### ④ 대출 운용방안

- (취급기관) 서민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상호금융회사(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및 저축은행
  - ※ '09년말 서민금융회사는 총 3,989개 : 저축은행 104, 상호금융 3,885 (농협 1,178, 수협 91, 산림조합 133, 신협 982, 새마을금고 1,501)
- (보증비율) 원칙적으로 대출금액의 80~85%수준을 보증하고, 나머지는 서민금융회사가 자기책임하에 대출
- (대출금리) 서민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취급할 유인을 부여하기 위해 “적정금리”로 운용
  - 금리 상한\*을 설정하되, 대출금리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경쟁방식 도입
  - \* 은행의 희망할씨대출 평균금리(14%), 쏘은행 6~10등급 평균 신용대출금리(19%)
- (자금용도) 긴급생계자금(5백만원 이내), 사업자금(1~5천만원 이내), 기존 고금리 대출의 상환자금 등
- (마케팅) 미소금융, 보증자리론과 같이 “통합 브랜드”를 사용, 인지도 제고 및 마케팅 비용 절감

#### ⑤ 시행시기 : '10년 하반기부터 대출상품 출시

- 관련 법령 개정과 기존 한시적 특례보증의 마무리 일정을 감안

## ① 성실한 채무상환자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 확대

-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우 채무조정기간 중에 금융거래가 곤란하여 생활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빈번

\* '02년~'09년, 신용회복위 채무조정자 83만명 중 24만명(29%)이 생활비 수요 등 때문에 중도 탈락

⇒ 성실채무상환자\*의 안정적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 신용회복기금(자산관리공사)은 여유자금을 활용, 긴급 생활 안정자금 대출을 신규 개시

- 신용회복위원회는 재원을 확충하여 기존 대출\*\*을 지속 확대

\* 신용회복지원중인 자(76만명) 중 1년이상 성실채무상환자 : 67만명

\*\* '06.11월 이후 소액대출 실적 : 20,746명, 623억원

※ 신규 지원 목표 : 5년간 1,500억원, 5만명(평균 3백만원, 연 4%)

## ②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Pre-workout) 연장

- '09.4월부터 3개월 미만 단기연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자감면, 만기연장 등 사전채무조정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중

- '10.3월말까지 총 31,785명이 상담, 이 중 9,402명(29.6%)이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등 금융안전망 역할 수행

⇒ 1년간 연장하여 운영

### 3 대부업의 최고이자율 인하

- 현행 대부업법령상 최고이자율은 연 49%로 이는 대부업자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에 동일하게 적용

※ 미등록 대부업체는 최고이자율을 30%로 적용하여 양성화 유도

- 대부분의 대부업체, 일부 저축은행 및 여전사는 동 금리를 기준으로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수취하여 주된 이용자인 서민층에 과도한 부담

- '07.10월 최고이자율 인하(66%→49%) 이후 한은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 인하 추세를 감안시, 동 최고이자율 인하 필요

※ 한국은행 기준금리 : ('07.9) 5% → ('10.2) 2%  
은행 평균여신금리 : ('07.9) 6.7% → ('10.2) 5.9%

- 일본도 금년 6월부터 최고이자율을 29.2%에서 20%로 인하할 예정('06.12월 출자법개정)

- 최고이자율 인하시 대부업체 음성화 및 서민대출 위축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나

- 금번 대책에 포함된 '보증부 서민대출'의 확대 실시에 따른 서민층에 대한 신용공급 증가로 보완 기대

⇒ 대부업법령상 최고이자율을 10%p (49%→39%) 인하 추진

- 우선 조속히 5%p 인하 (즉시 대부업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추진)
- 보증대출의 정착, 시장금리 변동추이 등 경제여건 변화를 보아가면서 1년 이내에 5%p 추가 인하 추진

※ 5%p 인하시 금리부담 완화 기대효과 : 연간 2,000억원\*

\*4조원(등록 대부업체 신용대출규모) × (49% - 44%)

## 4 미소금융 운영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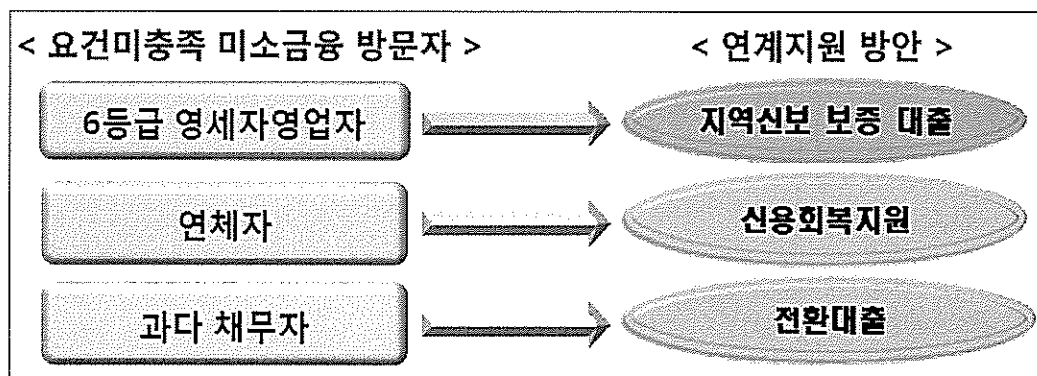
### ① 미소금융 창구에서 서민금융 One-Stop 서비스 제공

- 지점 방문자중 미소금융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보증 대출(지역신보), 신용회복(신복위, 신복기금) 등 다른 서민금융 지원수단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10.3월까지 미소금융지점 방문·상담자 총 19,995명중 11,638명(58.2%)이 미소금융의 대출요건을 미충족 (신용등급 우수 32%, 부채 과다 16% 등)

⇒ 지역신용보증재단, 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 직원(지점당 1인 파견)이 미소금융창구에서 대면상담 및 현장 신청 접수

- 향후 미소금융 지점 증가시에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순환근무하는 방안도 검토



### ② 지방지점 확대, 홍보활동 등을 통한 미소금융 접근성 제고

- 지방소재 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상반기중 지방에 20개 이상 지점을 추가 신설(총 50개 이상)

\* '10.3월까지 총 34개 지점 설립(수도권 16개, 지방 18개)

- 다양한 서민금융지원제도를 리플렛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서민들이 개별상황에 적합한 지원제도를 활용토록 유도

\* 서민층이 왕래하는 지자체·고용지원센터 등에 리플렛 중점 배포

### ③ 미소금융 지점 사무실 지원

- 서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공공기관 내에 미소금융 지점 설치를 지원하여 사무실 운영비용 절감 추진(지자체 협조)

\* 현재 전국 34개 지점 중 11개 지점에 대해 지자체가 지원

### ④ 미소금융 관련 컨설팅 능력 제고

- 미소금융중앙재단에 「부설 교육센터」 설치하여 전문인력 양성 추진
- (가칭) '미소희망봉사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재능의 기부'를 유도하고 미소금융의 컨설팅 능력 제고

\* 전국적으로 법률·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 퇴직인력 약 1천명을 모집하여 미소금융 수혜자에게 경영 노하우 등 지원

## ① 저축은행의 개인신용평가 역량 제고

- 상환위험이 큰 저신용층의 대출을 위해서는 정확한 신용평가가 필수적이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저축은행은 총 104개 중 23개(22.1%)에 불과

⇒ 저축은행 중앙회를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신용정보를 집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회가 운영하는 「표준신용평가시스템」을 확충

- 개별 저축은행은 「표준신용평가시스템」을 공동 활용하거나 개별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 '10.6월까지 29개사가 추가로 자체적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계획

## ② 대부업체간 신용정보 공유 확대

- 대부업체는 2개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의 그룹내에서만 여신정보(대출잔액, 연체액)를 폐쇄적으로 공유하고 있어

- 대출 신청자의 정확한 신용상태 파악이 어려워 리스크 관리 비용이 증가

⇒ 대부업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개인신용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 대부업체의 서민대출 금리를 낮추는 계기로 활용

- 중장기적으로 대형 대부업체의 대출관련 정보를 제도권 금융회사와 공유하는 방안 추진

### Ⅲ.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일정

#### 1 기대효과

□ 서민금융회사를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로 서민층의 금융이용 기회를 늘리고 금리부담 완화 기대

①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200만명\*) 서민대출 확대 기대

- 보증부 대출 : 10조원(상호금융 8조원, 저축은행 2조원)
- 신용회복 대상자 소액대출 : 1,500억원

\* (가정) 1인당 평균 5백만원씩(생계자금대출 한도) 보증부 대출(만기 5년)

② 향후 10년간 최대 10조원의 서민층 금리 부담 경감

- 보증부 대출로 대출금리 부담이 평균 20%p(30%대 중반 → 10%대중반) 가량 인하 기대(8조원)
- 대부업의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른 금리 부담 경감(2조원)

#### 2 향후 추진일정

□ 당정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확정

□ 관련 법령·규정을 조속히 개정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개정 : 금년 상반기중(중기청)
- 대부업법시행령 개정 : 금년 4월중 추진(금융위)
- 공유재산관리법 또는 휴면예금관리재단법 개정 : 금년중(행안부, 금융위)

## 27-1. 예대율 규제계획(현황, 영향 등 검토자료)

- (규제계획) '09.12.16일 금융위원회는 「2010년 업무계획」에서, 은행간 외형 경쟁유인을 최소화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 예대율 제도를 도입하기로 발표하고, '10년중 예대율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고,
  - 금융위원회는 지난 8.18일 예대율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규정안을 의결하였음

### □ 예대율 제도의 주요내용

- (수준 및 시기) 예대율 규제비율은 100%로 하되, 2013년말까지 유예기간 부여
- (정의) 예대율을 원화대출금과 원화예수금을 기준으로 하되, 원화예수금 중 CD는 제외하고 평잔기준으로 산정

$$\text{예대율} = \frac{\text{원화대출금}}{\text{원화예수금(CD 제외)}} \leq 100\%$$

- (적용대상) 원칙적으로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인 은행\*(외은지점 포함)

\* ① 모든 일반은행(시중은행+지방은행), ②외은지점 중 HSBC, ③ 특수은행 중 농협

- (영향) '10.6월 현재 예대율 적용대상 은행의 예대율은 101.3% 수준으로 '09.12월 예대율 도입 발표 후 빠르게 하락

<적용대상 은행권의 예대율 추이(CD제외, 평잔기준, %)>

	'06말	'07말	'08말	'09말	'10.2월	'10.4월	'10.6월
예대율	108.4	122.2	118.0	112.4	106.0	104.3	101.3



## 27-2. LTV, DTI 규제 변동현황

### 1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추이

- ☐ LTV비율 60% 이내로 규제('02.9~10)
- ☐ 투기지역 등에 대해 LTV비율을 50% 이내로 규제('03.5.28.)  
→ 40%이내로 강화('03.10.30)
- ☐ 비은행금융기관 LTV규제 강화(60~70%→50%) ('06.11.15.)
- ☐ 수도권(투기지역 제외) LTV 비율 규제 강화(60% → 50%) ('09.7.6)

### 2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추이

- ☐ 투기지역 일정조건\* 의 담보대출시 DTI비율을 40% 이내로 규제('05.8.30.)
  - \*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받은 기혼차주 및 만 30세 미만 미혼 차주
- ☐ DTI비율을 40% 이내로 규제('06.3.30.)
  - \* 투기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
- ☐ 수도권(투기지역외)에 대하여 DTI비율 규제(서울 50%이내, 경기·인천 60%이내) ('09.9.7.)

## 28. 서민금융(햇살론, 미소금융 등 관련)

### 28-1. 각 상품별 개요 및 현황(금융기관별 자격 및 조건 포함)

#### □ 햇살론 개요 및 현황

- **(목적)**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저신용·저소득 서민계층의 금융이용기회 확대 및 고금리 부담완화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 지원
  - **(대출규모)** 금년 7월말부터 향후 5년간 약 10조원 목표
  - **(대출대상)**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이거나, “신용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근로자, 농림어업인 등
  - **(대출금리)** 금리상한이내\*에서 서민금융회사 자율결정
- \* ‘10. 9. 기준 상호금융회사 10.54% / 저축은행 13.28%
- **(자금용도)** 긴급생계자금(최고 1천만원), 사업운영자금(최고 2천만원), 창업자금(최고 5천만원)

붙임

---

서민전용 대출상품

## **‘햇살론’ 운영방안**

---

2010. 7. 20

금 융 위 원 회	중 소 기 업 청
농 협 중 앙 회	수 협 중 앙 회
신 협 중 앙 회	산 림 조 합 중 앙 회
새 마 을 금 고 연 합 회	저 축 은 행 중 앙 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목 차



I. 추진배경 .....	1
II. 보증대출 대상 .....	2
1. 기본요건 .....	2
2. 보증제한 .....	4
III. 대출 운용방안 .....	5
1. 보증비율 .....	5
2. 대출금리 .....	5
3. 자금용도별 운영방안 .....	7
IV. 보증재원 조성 .....	9
V. 출연재원 관리 및 보증지원 체계 .....	11
VI. 보증부 서민대출 활성화 조치 .....	12
VII. 기대효과 .....	13
VIII. 향후 계획 .....	15

-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의 자금 수요는 늘어났으나, 서민금융회사\*는 유가증권투자, 부동산 개발 대출에 치중한 결과 서민대출이 감소

\* 농·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 서민들의 사금융 및 대부업 의존도가 높아져 대부업 시장이 급성장하고 결과적으로 서민계층의 금리부담도 동반 증가

\* 특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시중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경우 서민가계의 이자부담도 늘어날 전망

-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 4월 정부는 비상경제대책 회의(4.1), 당정협의(4.7)를 거쳐 「서민금융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보증부 서민대출('햇살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

- '햇살론' 활성화시 서민금융이 확대되어 서민의 금융애로 해소 기대

- 그 동안 서민금융회사가 서민의 낮은 신용도와 취약한 담보력 때문에 서민대출을 꺼려 왔으나 보증공급으로 이를 보완하여 서민대출에 주력할 수 있는 여건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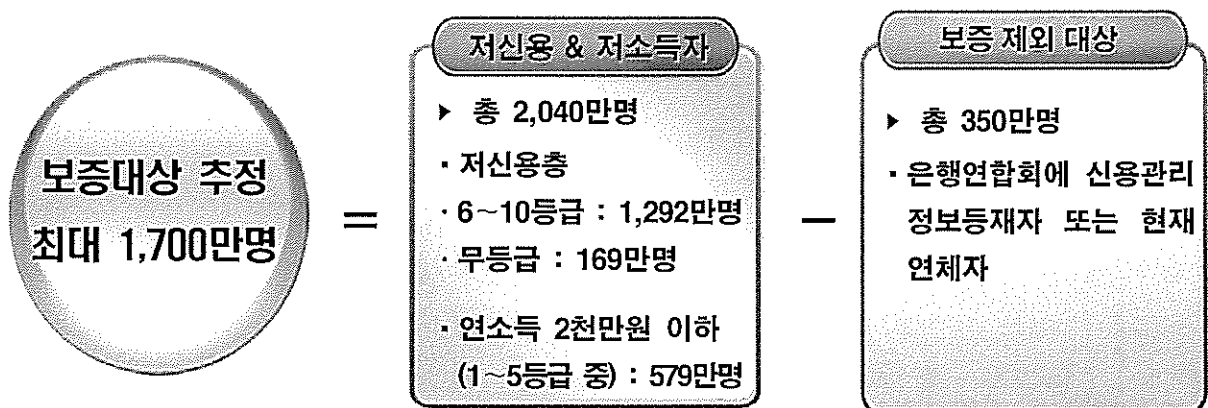
- 서민입장에서는 사금융·제도권 금융회사 보다 금리와 이용도 면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 받을 수 있어 금융 소외 현상 완화

## 1. 기본요건

- 신용6~10등급(무등급 포함) 또는 저소득층인 자영업자  
(법인기업 제외) · 농림어업인 및 근로자(일용 · 임시직 포함)
- 무등록 · 무점포 자영업자는 상인회장 · 인근 고정사업주의  
사업영위확인서를 받아 제출시 사업자로 인정
- \* 농림어업인은 농지원부, 영농 · 영어확인서 등을 통해 종사여부 확인
- 일용직 · 임시직, 근로소득 미신고자는 고용주의 근로(고용)  
확인서, 급여통장 원본 제출시 근로자로 인정

## &lt;보증대상자 例示&gt;

- (자영업자) 행상 · 노점상(무등록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문판매원 · 우유배달원 · 보험설계사 · 학원강사 등
- (농림어업인) 농 · 수협, 산림조합 조합원, 농림어업인 후계자
- (근로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인 정규직, 일용직, 임시직, 파트  
타임직 (근로소득 미신고자도 가능)



\* '10.4 신용평가사 고객(3,950만명) 기준으로 추정 (참고1 보증가능자 추정)

<보증대출 가능자>

신용등급 ↑ 1등급 6등급 10등급 무등급	보증대출 가능	보증대출 불가능
	보증대출 가능	보증대출 가능
	저소득	2천만원 고소득
	연소득수준 →	

□ 신용등급 요건

- 대출신청일 현재 3개 신용정보회사\*에서 평가한 개인 신용이 6~10등급(1,292만명)인 사람(소득규모와 상관없이 인정)
  - \*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 서민금융회사가 이용가능한 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 중 고객에게 유리한 등급을 적용
- 신용 무등급자(169만명)도 금융소외자이므로 대출대상에 포함

□ 저소득 요건

- 기초생활 수급자(약158만명) · 차상위 계층(약116만) 및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사람(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인정)
  - 연소득 2천만원으로 기준설정시 총 887만명 중 신용등급이 1~5등급으로 우량한 579만명 추가
  - \*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누적분포 약23%(신용평가사, 참고2)

○ 소득기준은 대출 신청자 개인별로 인정

- 가구당 소득 적용시 가구원 전체 소득을 증명 ·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대출실행이 제약될 소지

- \* 유사사례
  - (희망홀씨 대출) 개인별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복지부, 저소득층 운영자금 융자) 가구당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재산 1억원 이하

○ 보유재산 기준은 확인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미적용

## 2. 보증제한

-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218만명)및 공공정보\*\*(189만명)가 등재된 자

\* 연체(3개월 이상 등) · 부도 · 대위변제, 금융질서문란정보

\*\* 조세 · 과태료 · 고용보험료 등 체납, 신용회복지원 정보(회생 · 파산 · 면책)

- ☐ 취급일 현재, 지역신보(중앙회 포함) · 신보 · 기보의 보증 사고 또는 대위변제와 관련이 있는 자

- ☐ 취급일 현재, 신보 · 기보 보증잔액이 있는 자 또는 지역 신보(중앙회 포함) 보증잔액이 보증부 서민대출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자

- ☐ 대출 신청일 현재 연체중인 자(63.7만명)

- ☐ 보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사업소득세를 납부 하는 인적용역제공자 중 유흥접객원 및 댄서, 다단계 판매원

\* 유흥업소 · 무도장, 사치향락업종 등(참고 3)

- ☐ 빈번한 연체경력\*이 있는 근로자

\*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 대출금을 보유한 사실이 있거나,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자

➡ 상품출시 후 6개월~1년 동안 운영경과를 보고 필요시 보증대출 대상 조정



## 1. 보증비율 : 85%

○ 서민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여신심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분보증으로 운영

- 중소기업 보증비율 정상화조치('10.7이후)\* 및 보증기관의 평균 보증비율\*\* 수준을 고려 85% 적용

\* (지역신보) : 일반보증 비율 95 → 85%

(신·기보) : 최고 90 → 85% (신규보증 '10.1월부터 최고 85%)

\*\* (농 신 보) 농·어업인 85%(법인 80%) / (신·기보) 약88%('09년 평균)

## 2. 대출금리

### ① 금리 결정방식

○ 「금리상한」 내에서 서민금융회사가 금리를 자율결정

○ 이용자 선택에 따라 3, 6, 12개월 단위로 조정되는 변동금리 방식(조달원가 + 스프레드)

- (조달원가) 대출 또는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1년 만기 정기예금 신규 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

- (Spread) 대손비용 + 판매관리비 + 마진

\*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스프레드 상한으로 적극적 취급유인 부여

## ② 권역별 취급금리 상한

- (상호금융) 조달원가 + 6.38%(스프레드 상한) ➡ 약 11%  
(저축은행) 조달원가 + 8.99%(스프레드 상한) ➡ 약 13%
- 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상호금융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저축은행의 영업행태, 비용구조 차이를 감안하여 취급금리 상한을 결정
- 금년 7월 기준 취급금리상한은 상호금융업권 약 10.6%, 저축은행은 약 13.1% 수준
  - \* 이용자는 보증잔액에 대해 연 1%의 보증수수료를 부담하므로, 보증 비율 85%를 고려시 대출잔액에 대해 연0.85%의 추가적 부담 존재
  - \*\* 조달금리('10.5월 1년 만기 정기예금) : 상호금융 4.27%, 저축은행 4.15%
-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의 신용대출을 이용하던 서민들이 '햇살론'을 받게 될 경우,
  - 금리수준이 30~40%대에서 10%대로 낮아져 서민의 이자부담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기대됨

※ 신용대출 금리비교('10.7현재)

은행 (희망홀씨)	저축은행 (6~10등급)	대부업 (‘09.12월)	보증부 서민대출	
			상호 금융	저축 은행
13.4%(평균) * 7~19%	32.56	41.2%	10.6% (상한)	13.1% (상한)

- 또한 상호금융업권의 신용대출을 이용하던 서민들이 '햇살론'을 이용할 경우 금리는 10~15%(6~10등급)에서 약 10% 수준으로 소폭 떨어지나,
  - 기존에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일부 경우 연대보증을 세워야했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 기대

### 3. 자금용도별 운영방안

#### ① 사업 운영자금

- (대출대상) 영업 중인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 최소 경력요건 배제

- (대출한도) 최고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등급, 사업자 등록 유무, 점포보유(임차포함) 여부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등하여 신용도에 비해 과도한 대출을 방지

\* 지역신보 평균보증액 : ('07) 23백만원 → ('08) 20백만원 → ('09) 17백만원

※ 사업운영자금 대출한도

신용등급	유등록 사업자	무등록 사업자	
		점포보유(임차포함)	점포 미보유(노점 등)
6등급	2,0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7등급	1,700만원	1,200만원	800만원
8등급	1,400만원	900만원	600만원
9등급이하	1,100만원	700만원	400만원

\* 신용 5등급 이상 저소득 사업자는 대상유형별 최고금액 지원

-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1년거치 4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

- (보증수수료) 연 1%(창업·생계자금도 동일 수수료 적용)

\* (지역신보) 일반보증 평균보증료 1.35%, 금융소외자영업자 특례보증 1.0%, 저신용 근로자 생계 보증 0.5%

(신·기보) '09년 1.2%, '10년 평균 보증료 목표수준 1.3%

#### ② 창업자금

- 대출대상

- 정부, 공공기관의 창업교육을 이수한 창업자

-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가 사업자 등록 후 점포를 구비하는 경우(사업경력이 존재하므로 창업교육 이수조건 미적용)

## ○ 대출 요건

### i) 창업교육 이수 : 12시간(장애인 사업자 10시간) 이상 이수

- (교육기관 例示) : 소상공인진흥원 '성공창업패키지' 교육과정(7,000명), 창업진흥원 '기술창업학교'(1,200명), 소상공인지원센터(22,000명)·근로복지공단(100명) 창업교육 등
- 현재 창업교육 이수자는 매년 3만명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 향후 관계부처 및 서민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창업교육 인정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

### ii) 창업요건

- 사업장 확보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후 개업한지 1년 이내이어야 함(단,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는 개업한지 3개월 이내)

## ○ 대출한도

- 사업장 마련을 위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하고,
- 필요한 경우 5천만원에서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한도 내에서 운영자금까지 지원하여 창업을 지원
- \*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時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취득하여 도덕적 해이 방지

## ○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1년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

### ③ 생계자금

- (대출대상)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일용직, 임시직 포함)와 영업중인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농림어업인에게 자금을 지원
- (대출한도) 최고 1천만원\*으로 한도 내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한도 차등화

\* 당초 계획(4.7발표)은 5백만원이었으나 지원 금액 확대

신용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이하
대출금액	1천만원	8백만원	6백만원	4백만원

\* 신용5등급 이상 저소득자는 신용6등급의 대출한도 적용

- (상환방법) 3년 또는 5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IV 보증자원 조성

### 1. 서민금융회사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에 따라 모든 서민금융회사(단위조합, 금고, 저축은행)가 업권 중앙회를 거쳐 매월 출연

- 6년간\* 목표 출연금을 출연하도록 하되,

\* 당초 계획은 5년이었으나 대출 초기에는 많은 보증재원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6년간 출연으로 변경하여 서민금융회사 출연부담을 완화

- 사정변동(예 : 대출금 증가추이 감소 등)에 대비하여 출연기간은 10년 이내로 정하고(지역신보법 시행령),
- 목표 출연금이 모두 출연되면 중기청장이 업권별로 각 중앙회에 출연 종료일을 통보(종료 3월 전까지)

## □ 서민금융회사 총 출연금 1조원

- 상호금융 : 매년 약 1,333억원 (6년간 총 8,000억원)  
저축은행 : 매년 약 333억원 (6년간 총 2,000억원)
- 출연요율은 출연기준 대출금의 일정비율로 출연율 설정

\*\* 업권별 연간 출연금 및 출연율

구분	계	상 호 금 융						저축 은행
		소계	농협	수협	신협	신협	금고	
총 목표출연액 (억원)	10,000	8,000	3,859	334	83	1,362	2,362	2,000
연간 출연액 (억원)	1,666	1,333	643	56	14	227	394	333
출연요율 (천분비)	0.45	0.51	0.37	0.54	0.77	0.71	0.82	0.40

## 2. 정부재정 : '11년 예산부터 매년 2천억씩 반영

- (재원출연기간) '11.1~'15.12. 5년간 1조원 납부
  - 서민금융회사는 '10.9~'16.8까지 6년간 1조원을 납부하여 출연금 부담원칙(1:1) 유지

'11.1	정부재정 출연금 납부 (총 1조원)	'15.12
'10.9	서민금융회사 출연금 납부 (총 1조원)	'16.8

- (중앙정부) 매년 1,200억원을 출연(전액 복권기금으로 충당)
- (지 자 체) 매년 800억원을 출연
  - 자치단체별 출연금 분담기준은 관계부처,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보증대출 규모,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계획

## 1. 출연재원 관리

-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각 권역별 출연금액에 비례하여 보증한도를 업권별로 구분운영
  - 업권별 출연금과 정부 출연금을 합산한 금액의 5배 보증대출을 보장
- 대출개시 1년 후 운영성과를 평가(금융위·중기청)하여 업권간 경쟁유도를 위해 필요시 상호금융회사와 협의하여 보증한도 통합운영 검토

## 2. 보증지원 체계

- 보증심사
  - (비사업자) 서류심사로 적격판단이 가능하므로 서민금융회사가 직접 보증심사
  - (사업자) 지역신보가 보증심사하되,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사업영위 사실 확인 등 일부업무를 서민금융회사에 위탁

대출대상	보증주체	보증심사
근로자 등 비사업자	○ 신용보증 재단 중앙회	○ 서민금융회사 직접심사 (중앙회가 보증을 위탁)
자영업자	○ 지역신보	○ 지역신보 (서민금융회사는 보증상담, 서류 접수 및 사업 영위사실 확인 등의 업무 수행)

### ○ 전자보증시스템

- 온라인을 통한 정보조회, 전자문서에 의한 보증서 발급 등 추진
- \* 서민대출 보증상품은 소액이면서 발급건수가 많아 실시간 전자 보증서 발급처리가 필수적
- '09년 보증서 발급건수 : 지역재단 66만건, 신보 21만건, 기보 4.6만건

## 1. 통합 브랜드 사용 및 공동 마케팅

- 업권 공통의 통합 브랜드 '햇살론' 사용으로 상품 인지도 제고하고, 공동 홍보기금을 조성하여 대출상품 홍보추진

## 2. 경영실태 평가기준에 반영

- '경영관리 적정성' 평가에 보증재원 출연, 서민대출 취급 등 사회공헌활동의 활발한 이행 정도를 '기타 경영 실태 평가'시 중요 평가지표로 평가
- \* (예시) 사회공헌 전략의 수립 및 저신용자 금융이용기회 확대를 위한 보증재원의 출연, 서민대출의 취급 등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 3. 판매실적 우수 금융회사 포상

- 매년 부처별 포상수여시 서민금융회사 보증부 서민대출 판매 실적을 반영
- \* 매년 서민금융회사 감독부처 포상수여 현황(약 150개)
  - (행안부) 금고 약90개, (농림부·산림청) 농·수협·산림조합 약 40개, (금융위) 신탁 10개
- 대통령·총리 포상 및 주무부처 장관포상 추진



① (금융이용자 측면) 서민층의 금융이용 기회가 확대되고  
고금리 부담의 완화가 기대됨

- 1인당 평균 1천만원 대출을 가정하면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 대출시 약 100만명의 서민에게 대출 가능

\* (가정) '09년 지역신보의 1인당 평균 보증금액 17백만원이므로 저신용자 대출임을 고려하여 1인당 1천만원 대출을 가정

- 저축은행,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이용자가 '햇살론'으로 전환할 경우 금리부담이 30~40%대에서 10%대로 낮아져 총 6조원 가량의 금리부담 경감가능

\* (가정) 대부업 평균 대출금리 41.2%('09.12),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6~10등급) 32.6%('10.4)의 단순 평균치 37%와 '10.7월 기준 '햇살론'의 1년 거치 4년분할상환의 가중평균 대출금리 12%와의 차이를 감안( $37\% - 12\% = 25\%$ )

- 특히, 상호금융권의 경우 일정규모(예: 신탁 1천만원 등)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 일부 경우는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나 '햇살론'은 이러한 부담이 없어 이용도를 제고

- ② (금융회사 측면) 농협, 신협, 금고 등 상호금융회사가  
비과세 예금 한도확대\*로 얻는 혜택의 일부를 보증재원  
으로 출연하여,

○ 비과세 예금을 서민대출로 연계할 수 있는 틀을 마련

\* '09년 2천만원→3천만원, 비과세 예금 ('08) 81조원 → ('09)115조원 (+34조원)

○ 서민대출 보다 부동산 PF대출과 유가증권 투자를 늘려  
왔던 서민금융회사가 서민금융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회복  
하는데 기여

- ③ (금융 정책측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출시  
했던 전액보증 상품을 부분보증 상품으로 전환한 결과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한편,

\*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09.1~'10.7 약 1.58조원)은 '햇살론'  
출시와 동시에 종료될 예정

○ 전액보증시 보다 동일한 보증재원으로 더 많은 서민에게  
자금공급 가능

○ 또한 서민금융회사에게 적정마진을 보장하여 취급  
유인을 부여함으로써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고, 결과적  
으로 은행이용이 어려운 계층의 금융소외 완화 기대

- 농협, 신한,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수협은 7.26(월)부터, 산림조합은 8.16(월)부터 보증대출 취급 개시
- 운영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 대출상품 판매 경과를 보아 보증대상, 대출한도 등 상품 운영방안에 대한 조정도 검토할 계획

# 참고 1

## 보증부 서민대출 보증가능자 추정

KCB 신용 등급	총 고객 현황		대출제한 대상		최종 대출가능자		
	총고객수	전체 구성비	고객수	등급별 비율	고객수	등급별 구성비	전체 구성비
1	2,980,269	7.5%	23	0.0%	263,624	8.8%	1.6%
2	4,810,314	12.2%	1,026	0.0%	493,374	10.3%	2.9%
3	3,639,853	9.2%	3,274	0.1%	472,221	13.0%	2.8%
4	4,328,467	11.0%	5,861	0.1%	779,239	18.0%	4.6%
5	9,107,664	23.1%	11,438	0.1%	3,754,684	41.2%	22.2%
6	4,539,446	11.5%	47,136	1.0%	4,492,310	99.0%	26.6%
7	4,752,986	12.0%	1,367,638	28.8%	3,385,348	71.2%	20.0%
8	2,268,334	5.7%	1,122,099	49.5%	1,146,235	50.5%	6.8%
9	957,230	2.4%	576,110	60.2%	381,120	39.8%	2.3%
10	398,278	1.0%	352,472	88.5%	45,806	11.5%	0.3%
6~10 소계	12,916,274	32.6%	3,465,455	26.8%	9,450,819	73.2%	55.9%
무등급	1,693,749	4.3%	15,681	0.9%	1,678,068	99.1%	9.9%
총계	39,476,590	100.0%	3,502,758	8.9%	16,892,029	42.8%	100.0%

※ 자료 : 신용평가사(10.4월 현재), 등급별 인원 및 대출제한 대상

\* 무등급 : 미성년자, 금융거래 6개월미만, 금융질서문란등재자 등 신용등급산출에서 제외된 사람

\*\* 대출제한 대상 :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회생/파산/면책, 현재연체고객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 참고 2

## 신용등급별 소득분포

(단위 : 만명, %)

소득구간	신용 1~10등급		신용 1~5등급		신용 6~10등급	
	누적인원	누적비율	누적인원	누적비율	누적인원	누적비율
2천만원이하	886.7	23.4%	578.5	23.2%	308.2	23.8%
21백만원이하	1,093.3	28.9%	706.7	28.4%	386.7	29.9%
22백만원이하	1,330.4	35.2%	851.5	34.2%	478.9	37.1%
23백만원이하	1,626.2	43.0%	1,031.7	41.5%	594.5	46.0%
24백만원이하	1,871.0	49.5%	1,181.8	47.5%	689.2	53.3%
3천만원이하	2,939.7	77.7%	1,875.1	75.3%	1,064.6	82.4%
5천만원이하	3,657.9	96.7%	2,390.6	96.1%	1,267.3	98.1%
총계	3,781.1	100.0%	2,488.9	100.0%	1,292.3	100.0%

\* 신용평가사 자료('10.4월 차주수 기준), 여신 심사시 제출한 등록소득을 우선시 하되 정보 부재시에는 신용평가사의 소득추정모형을 이용

표준산업분류	보증제한 업종
561 중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다음 각1호의 경우는 제외 가. 기관구내식당에 대한 여신 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소재 식당업에 대한 여신 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좋은식단” 실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개선 시설자금 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여신
5621	주점업. 단, 생계형 기타주점업(소상공인) 제외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자문 및 동일장소에서 6개월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개업(6822) 영위 소상공인은 제외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49	기타 gambling 및 배팅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9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 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 참고 4

## 보증 업무절차 흐름도

업무구분	업무처리 내용	담당기관
보증상담 신청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용보증 대상여부 및 보증금액 상담</li> <li>보증신청자 신용보증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 인)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 사본 등</li> <li>(사업자) 사업자등록증(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장임차계약서,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li> </ul> </li> </ul>	서민금융사
보증심사 대출	<div>개 인 (비사업자)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전통보된 보증심사 제규정에 따라 보증심사 후 대출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대출예방시스템에서 사전 조회</li> </ul> </li> </ul>	서민금융사 [위탁보증]
	<div>등록·무등록 사업자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실사를 통한 사업영위사실 확인</li> <li>접수서류 지역신보에 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신보 전자보증서를 받고 대출</li> </ul> </li> </ul>	서민금융사 [위탁업무 수행]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증심사</li> <li>전자보증서 서민금융사에 송부</li> </ul>	지역신보
신용보증 사고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용보증 사고발생 통지</li> <li>재산조사 및 발견재산 채권보전조치 실시</li> </ul>	서민금융사
보증채무 이행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신보(중앙회) 보증채무이행 청구</li> </ul>	서민금융사
보증채무 이행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증 및 여신취급의 적정성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용보증 제규정 및 약관 준수, 면책기준 저촉 여부 등</li> </ul> </li> <li>신용보증 사고관리 적정성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채권신고,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 누락 여부</li> </ul> </li> </ul>	지역신보 [중앙회]
대위변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민금융사 보증대출 채권 대위변제</li> </ul>	지역신보 [중앙회]
구상채권 관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상채권에 대한 최소한의 회수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정보 활용을 통한 추가 재산조사 및 법적조치</li> <li>구상금청구소 제기 및 채권보전조치 물건 강제집행</li> <li>신용정보의 관리(신용불량거래처 등록 및 해제 등)</li> </ul> </li> <li>구상실익 없는 채권에 대한 상각 실시</li> </ul>	지역신보 [중앙회]

## 28-2. 금융기관별 서민금융 운용 개요, 실적, 수익, 상세 현황

### □ 금융기관별 햇살론 취급현황

○ 취급기관 :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 취급일시 : '10. 7. 26 ~

\* 산림조합은 '10.8.26.부터 취급 개시

○ 취급기관별 대출실적

('10.9.15. 기준 / 단위 : 건수, 억원)

구분	계	상 호 금 융						저축 은행
		소계	농협	수협	산림	신협	새마을 금고	
대출금	8,164	7,733	3,087	133	27	1,584	2,901	431
대출 건수	89,890	84,597	35,171	1,497	335	17,023	30,571	5,293



### 28-3. 금융기관별 서민금융 부실 상세현황

- 7.26일 햇살론이 출시된 이후 경과기간이 짧아 현재 파악된 부실자료는 없음
- 햇살론 취급 금융회사는 대출금의 원리금 납입 연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지역신보 또는 지역신보 중앙회에 대위변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점 감안 시
  - 대출 개시후 최소 4~5개월이 경과해야 전체적인 부실규모의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28-4.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 등과 협의내역,  
관련 공문 사본

□ 정부 및 금융기관 등과 협정한 관련 공문은 없음

- 다만, 관계기관과 협정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붙임  
『햇살론 운영방안(“10.7.20)』을 참고하시기 바람

## 28-5. 금리결정 원칙, 기준 및 금융기관, 정부와 협의내역, 관련 공문 사본

### □ 금리결정 원칙 및 기준

- 저신용·저소득층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고 서민금융회사에게 취급유인을 부여할 수 있는 금리상한 범위 내에서 서민금융회사가 금리를 자율 결정하도록 하였음
  - 금리상한은 조달원가와 스프레드를 포함하여 결정
    - (조달원가) 대출 또는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1년 만기 정기예금 신규 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
    - (스프레드) 대손비용, 판매관리비, 마진을 고려하여 설정
    - 금감원은 매월 말 조달원가와 스프레드 상한을 반영하여 다음 달 적용될 금리상한을 업권에 통보
- ※ 10. 9월 적용금리 상한
- (상호금융)  $4.16(\text{조달원가}) + 6.38(\text{스프레드}) = 10.54$
- (저축은행)  $4.29(\text{조달원가}) + 8.99(\text{스프레드}) = 13.28$
- 금리는 이용자 선택에 따라 3, 6, 12개월 단위로 조정되는 변동금리 방식으로 운영됨

□ 정부 및 금융기관 등과 협의한 관련 공문은 없음

- 다만, 관계기관과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붙임  
『햇살론 운영방안(10.7.20)』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민전용 대출상품

# **‘햇살론’ 운영방안**

---

2010. 7. 20

금 융 위 원 회	중 소 기 업 청
농 협 중 앙 회	수 협 중 앙 회
신 협 중 앙 회	산 림 조 합 중 앙 회
새 마 을 금 고 연 합 회	저 축 은 행 중 앙 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목 차



I. 추진배경 .....	1
II. 보증대출 대상 .....	2
1. 기본요건 .....	2
2. 보증제한 .....	4
III. 대출 운용방안 .....	5
1. 보증비율 .....	5
2. 대출금리 .....	5
3. 자금용도별 운영방안 .....	7
IV. 보증재원 조성 .....	9
V. 출연재원 관리 및 보증지원 체계 .....	11
VI. 보증부 서민대출 활성화 조치 .....	12
VII. 기대효과 .....	13
VIII. 향후 계획 .....	15

-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의 자금 수요는 늘어났으나, 서민금융회사\*는 유가증권투자, 부동산 개발 대출에 치중한 결과 서민대출이 감소

\* 농·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 서민들의 사금융 및 대부업 의존도가 높아져 대부업 시장이 급성장하고 결과적으로 서민계층의 금리부담도 동반 증가

\* 특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시중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경우 서민가계의 이자부담도 늘어날 전망

-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 4월 정부는 비상경제대책 회의(4.1), 당정협의(4.7)를 거쳐 「서민금융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보증부 서민대출('햇살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

- '햇살론' 활성화시 서민금융이 확대되어 서민의 금융으로 해소 기대

- 그 동안 서민금융회사가 서민의 낮은 신용도와 취약한 담보력 때문에 서민대출을 꺼려 왔으나 보증공급으로 이를 보완하여 서민대출에 주력할 수 있는 여건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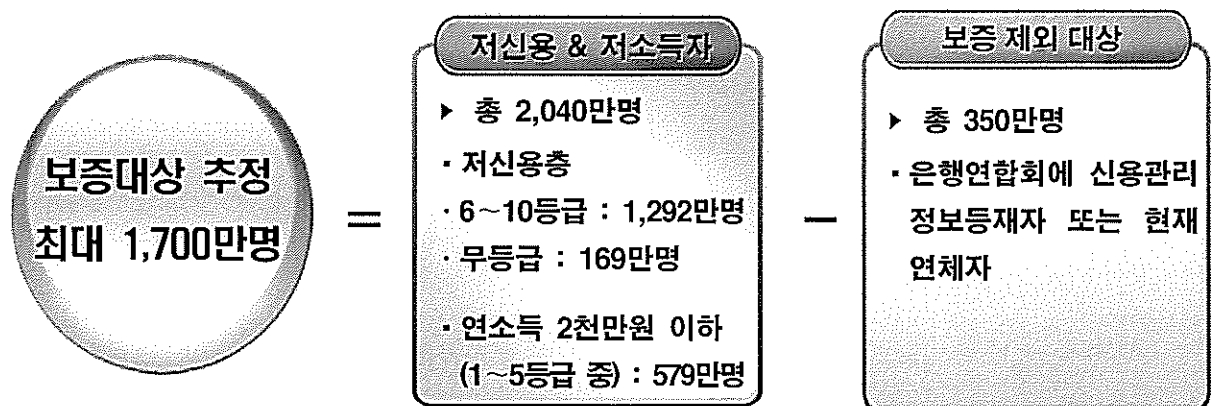
- 서민입장에서는 사금융·제도권 금융회사 보다 금리와 이용도 면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 받을 수 있어 금융 소외 현상 완화

## 1. 기본요건

- 신용6~10등급(무등급 포함) 또는 저소득층인 자영업자  
(법인기업 제외) · 농림어업인 및 근로자(일용 · 임시직 포함)
- 무등록 · 무점포 자영업자는 상인회장 · 인근 고정사업주의  
사업영위확인서를 받아 제출시 사업자로 인정
- \* 농림어업인은 농지원부, 영농 · 영어확인서 등을 통해 종사여부 확인
- 일용직 · 임시직, 근로소득 미신고자는 고용주의 근로(고용)  
확인서, 급여통장 원본 제출시 근로자로 인정

## &lt;보증대상자 例示&gt;

- (자영업자) 행상 · 노점상(무등록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문판매원 · 우유배달원 · 보험설계사 · 학원강사 등
- (농림어업인) 농 · 수협, 산림조합 조합원, 농림어업인 후계자
- (근로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인 정규직, 일용직, 임시직, 파트  
타임직 (근로소득 미신고자도 가능)



\* '10.4 신용평가사 고객(3,950만명) 기준으로 추정 (참고1 보증가능자 추정)



<보증대출 가능자>

신용등급 ↑ 1등급 6등급 10등급 무등급	보증대출 가능	보증대출 불가능
	보증대출 가능	보증대출 가능
	저소득	고소득
	연소득수준 →	

□ 신용등급 요건

- 대출신청일 현재 3개 신용정보회사\*에서 평가한 개인 신용이 6~10등급(1,292만명)인 사람(소득규모와 상관없이 인정)
  - \*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 서민금융회사가 이용가능한 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 중 고객에게 유리한 등급을 적용
- 신용 무등급자(169만명)도 금융소외자이므로 대출대상에 포함

□ 저소득 요건

- 기초생활 수급자(약158만명) · 차상위 계층(약116만) 및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사람(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인정)
  - 연소득 2천만원으로 기준설정시 총 887만명 중 신용등급이 1~5등급으로 우량한 579만명 추가

\*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누적분포 약23%(신용평가사, 참고2)

○ 소득기준은 대출 신청자 개인별로 인정

- 가구당 소득 적용시 가구원 전체 소득을 증명 ·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대출실행이 제약될 소지

- \* 유사사례
  - (희망홀씨 대출) 개인별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복지부, 저소득층 운영자금 융자) 가구당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재산 1억원 이하

○ 보유재산 기준은 확인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미적용

## 2. 보증제한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218만명)및 공공정보\*\*(189만명)가 등재된 자

\* 연체(3개월 이상 등)·부도·대위변제, 금융질서문란정보

\*\* 조세·과태료·고용보험료 등 체납, 신용회복지원 정보(회생·파산·면책)

☐ 취급일 현재, 지역신보(중앙회 포함)·신보·기보의 보증 사고 또는 대위변제와 관련이 있는 자

☐ 취급일 현재, 신보·기보 보증잔액이 있는 자 또는 지역 신보(중앙회 포함) 보증잔액이 보증부 서민대출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연체중인 자(63.7만명)

☐ 보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사업소득세를 납부 하는 인적용역제공자 중 유흥접객원 및 댄서, 다단계 판매원

\* 유흥업소·무도장, 사치향락업종 등(참고 3)

☐ 빈번한 연체경력\*이 있는 근로자

\*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 대출금을 보유한 사실이 있거나,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자

➡ 상품출시 후 6개월~1년 동안 운영경과를 보고 필요시 보증대출 대상 조정

## 1. 보증비율 : 85%

○ 서민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여신심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분보증으로 운영

- 중소기업 보증비율 정상화조치('10.7이후)\* 및 보증기관의 평균 보증비율\*\* 수준을 고려 85% 적용

\* (지역신보) : 일반보증 비율 95 → 85%

(신·기보) : 최고 90 → 85% (신규보증 '10.1월부터 최고 85%)

\*\* (농 신 보) 농·어업인 85%(법인 80%) / (신·기보) 약88%('09년 평균)

## 2. 대출금리

### ① 금리 결정방식

○ 「금리상한」 내에서 서민금융회사가 금리를 자율결정

○ 이용자 선택에 따라 3, 6, 12개월 단위로 조정되는 변동금리 방식(조달원가 + 스프레드)

- (조달원가) 대출 또는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1년 만기 정기예금 신규 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

- (Spread) 대손비용 + 판매관리비 + 마진

\*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스프레드 상한으로 적극적 취급유인 부여

## ② 권역별 취급금리 상한

- (상호금융) 조달원가 + 6.38%(스프레드 상한) ➡ 약 11%  
(저축은행) 조달원가 + 8.99%(스프레드 상한) ➡ 약 13%
- 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상호금융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저축은행의 영업행태, 비용구조 차이를 감안하여 취급금리 상한을 결정
- 금년 7월 기준 취급금리상한은 상호금융업권 약 10.6%, 저축은행은 약 13.1% 수준
  - \* 이용자는 보증잔액에 대해 연 1%의 보증수수료를 부담하므로, 보증 비율 85%를 고려시 대출잔액에 대해 연0.85%의 추가적 부담 존재
  - \*\* 조달금리('10.5월 1년 만기 정기예금) : 상호금융 4.27%, 저축은행 4.15%
-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의 신용대출을 이용하던 서민들이 '햇살론'을 받게 될 경우,
  - 금리수준이 30~40%대에서 10%대로 낮아져 서민의 이자부담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기대됨

※ 신용대출 금리비교('10.7현재)

은행 (희망홀씨)	저축은행 (6~10등급)	대부업 ('09.12월)	보증부 서민대출	
			상호 금융	저축 은행
13.4%(평균) * 7~19%	32.56	41.2%	10.6% (상한)	13.1% (상한)

- 또한, 상호금융업권의 신용대출을 이용하던 서민들이 '햇살론'을 이용할 경우 금리는 10~15%(6~10등급)에서 약 10% 수준으로 소폭 떨어지나,
  - 기존에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일부 경우 연대보증을 세워야했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 기대

### 3. 자금용도별 운영방안

#### ① 사업 운영자금

- (대출대상) 영업 중인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 \* 최소 경력요건 배제
- (대출한도) 최고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등급, 사업자 등록 유무, 점포보유(임차포함) 여부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등하여 신용도에 비해 과도한 대출을 방지

\* 지역신보 평균보증액 : ('07) 23백만원 → ('08) 20백만원 → ('09) 17백만원

※ 사업운영자금 대출한도

신용등급	유등록 사업자	무등록 사업자	
		점포보유(임차포함)	점포 미보유(노점 등)
6등급	2,0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7등급	1,700만원	1,200만원	800만원
8등급	1,400만원	900만원	600만원
9등급이하	1,100만원	700만원	400만원

\* 신용 5등급 이상 저소득 사업자는 대상유형별 최고금액 지원

-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1년거치 4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
- (보증수수료) 연 1%(창업·생계자금도 동일 수수료 적용)

\* (지역신보) 일반보증 평균보증료 1.35%, 금융소외자영업자 특례보증 1.0%, 저신용 근로자 생계 보증 0.5%

(신·기보) '09년 1.2%, '10년 평균 보증료 목표수준 1.3%

#### ② 창업자금

- 대출대상
  - 정부, 공공기관의 창업교육을 이수한 창업자

-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가 사업자 등록 후 점포를 구비하는 경우(사업경력이 존재하므로 창업교육 이수조건 미적용)

## ○ 대출 요건

### i) 창업교육 이수 : 12시간(장애인 사업자 10시간) 이상 이수

- (교육기관 例示) : 소상공인진흥원 '성공창업패키지' 교육과정(7,000명), 창업진흥원 '기술창업학교'(1,200명), 소상공인지원센터(22,000명)·근로복지공단(100명) 창업교육 등
- 현재 창업교육 이수자는 매년 3만명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 향후 관계부처 및 서민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창업교육 인정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

### ii) 창업요건

- 사업장 확보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후 개업한지 1년 이내이어야 함(단,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는 개업한지 3개월 이내)

## ○ 대출한도

- 사업장 마련을 위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하고,
- 필요한 경우 5천만원에서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한도 내에서 운영자금까지 지원하여 창업을 지원
- \*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時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취득하여 도덕적 해이 방지

## ○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1년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

### ③ 생계자금

- (대출대상)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일용직, 임시직 포함)와 영업중인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농림어업인에게 자금을 지원
- (대출한도) 최고 1천만원\*으로 한도 내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한도 차등화

\* 당초 계획(4.7발표)은 5백만원이었으나 지원 금액 확대

신용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이하
대출금액	1천만원	8백만원	6백만원	4백만원

\* 신용5등급 이상 저소득자는 신용6등급의 대출한도 적용

- (상환방법) 3년 또는 5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IV 보증재원 조성

### 1. 서민금융회사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에 따라 모든 서민금융회사(단위조합, 금고, 저축은행)가 업권 중앙회를 거쳐 매월 출연

- 6년간\* 목표 출연금을 출연하도록 하되,

\* 당초 계획은 5년이었으나 대출 초기에는 많은 보증재원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6년간 출연으로 변경하여 서민금융회사 출연부담을 완화

- 사정변동(예 : 대출금 증가추이 감소 등)에 대비하여 출연기간은 10년 이내로 정하고(지역신보법 시행령),
- 목표 출연금이 모두 출연되면 중기청장이 업권별로 각 중앙회에 출연 종료일을 통보(종료 3월 전까지)

□ 서민금융회사 총 출연금 1조원

- 상호금융 : 매년 약 1,333억원 (6년간 총 8,000억원)
- 저축은행 : 매년 약 333억원 (6년간 총 2,000억원)
- 출연요율은 출연기준 대출금의 일정비율로 출연을 설정

\*\* 업권별 연간 출연금 및 출연율

구분	계	소계	상 호 금 융					저축 은행
			농협	수협	신협	신협	금고	
총 목표출연액 (억원)	10,000	8,000	3,859	334	83	1,362	2,362	2,000
연간 출연액 (억원)	1,666	1,333	643	56	14	227	394	333
출연요율 (천분비)	0.45	0.51	0.37	0.54	0.77	0.71	0.82	0.40

2. 정부재정 : '11년 예산부터 매년 2천억씩 반영

- (재원출연기간) '11.1~'15.12. 5년간 1조원 납부
  - 서민금융회사는 '10.9~'16.8까지 6년간 1조원을 납부하여 출연금 부담원칙(1:1) 유지

'11.1	정부재정 출연금 납부 (총 1조원)	'15.12
'10.9	서민금융회사 출연금 납부 (총 1조원)	'16.8

- (중앙정부) 매년 1,200억원을 출연(전액 복권기금으로 충당)
- (지 자 체) 매년 800억원을 출연
  - 자치단체별 출연금 분담기준은 관계부처,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보증대출 규모,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계획



## 1. 출연재원 관리

-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각 권역별 출연금액에 비례하여 보증한도를 업권별로 구분운영
  - 업권별 출연금과 정부 출연금을 합산한 금액의 5배 보증대출을 보장
- 대출개시 1년 후 운영성과를 평가(금융위·중기청)하여 업권간 경쟁유도를 위해 필요시 상호금융회사와 협의하여 보증한도 통합운영 검토

## 2. 보증지원 체계

- 보증심사
  - (비사업자) 서류심사로 적격판단이 가능하므로 서민금융회사가 직접 보증심사
  - (사업자) 지역신보가 보증심사하되,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사업영위 사실 확인 등 일부업무를 서민금융회사에 위탁

대출대상	보증주체	보증심사
근로자 등 비사업자	○ 신용보증 재단 중앙회	○ 서민금융회사 직접심사 (중앙회가 보증을 위탁)
자영업자	○ 지역신보	○ 지역신보 (서민금융회사는 보증상담, 서류 접수 및 사업 영위사실 확인 등의 업무 수행)

### ○ 전자보증시스템

- 온라인을 통한 정보조회, 전자문서에 의한 보증서 발급 등 추진
- \* 서민대출 보증상품은 소액이면서 발급건수가 많아 실시간 전자보증서 발급처리가 필수적
- '09년 보증서 발급건수 : 지역재단 66만건, 신보 21만건, 기보 4.6만건

## 1. 통합 브랜드 사용 및 공동 마케팅

- 업권 공통의 통합 브랜드 '햇살론' 사용으로 상품 인지도 제고하고, 공동 홍보기금을 조성하여 대출상품 홍보추진

## 2. 경영실태 평가기준에 반영

- '경영관리 적정성' 평가에 보증재원 출연, 서민대출 취급 등 사회공헌활동의 활발한 이행 정도를 '기타 경영 실태 평가'시 중요 평가지표로 평가

\* (예시) 사회공헌 전략의 수립 및 저신용자 금융이용기회 확대를 위한 보증재원의 출연, 서민대출의 취급 등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이행 하고 있는지의 여부

## 3. 판매실적 우수 금융회사 포상

- 매년 부처별 포상수여시 서민금융회사 보증부 서민대출 판매 실적을 반영

\* 매년 서민금융회사 감독부처 포상수여 현황(약 150개)

- (행안부) 금고 약90개, (농림부·산림청) 농·수협·산림조합 약 40개, (금융위) 신탁 10개

- 대통령·총리 포상 및 주무부처 장관포상 추진

① (금융이용자 측면) 서민층의 금융이용 기회가 확대되고  
고금리 부담의 완화가 기대됨

- 1인당 평균 1천만원 대출을 가정하면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 대출시 **약 100만명의 서민에게 대출 가능**

\* (가정) '09년 지역신보의 1인당 평균 보증금액 17백만원이므로 저신용자 대출임을 고려하여 1인당 1천만원 대출을 가정

- 저축은행,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이용자가 '햇살론'으로 전환할 경우 금리부담이 30~40%대에서 10%대로 낮아져 **총 6조원 가량의 금리부담 경감가능**

\* (가정) 대부업 평균 대출금리 41.2%('09.12),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6~10등급) 32.6%('10.4)의 단순 평균치 37%와 '10.7월 기준 '햇살론'의 1년 거치 4년분할상환의 가중평균 대출금리 12%와의 차이를 감안( $37\% - 12\% = 25\%$ )

- 특히, 상호금융권의 경우 일정규모(예: 신탁 1천만원 등)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 일부 경우는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나 '햇살론'은 이러한 부담이 없어 이용도를 제고

- ② (금융회사 측면) 농협, 신한, 금고 등 상호금융회사가  
비과세 예금 한도확대\*로 얻는 혜택의 일부를 보증재원  
으로 출연하여,

○ 비과세 예금을 서민대출로 연계할 수 있는 틀을 마련

\* '09년 2천만원→3천만원, 비과세 예금 ('08) 81조원 → ('09)115조원 (+34조원)

○ 서민대출 보다 부동산 PF대출과 유가증권 투자를 늘려  
왔던 서민금융회사가 서민금융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회복  
하는데 기여

- ③ (금융 정책측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출시  
했던 전액보증 상품을 부분보증 상품으로 전환한 결과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한편,

\*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09.1~'10.7 약 1.58조원)은 '햇살론'  
출시와 동시에 종료될 예정

○ 전액보증시 보다 동일한 보증재원으로 더 많은 서민에게  
자금공급 가능

○ 또한 서민금융회사에게 적정마진을 보장하여 취급  
유인을 부여함으로써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고, 결과적  
으로 은행이용이 어려운 계층의 금융소외 완화 기대

## VIII 향후 계획

-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수협은 7.26(월)부터, 산림조합은 8.16(월)부터 보증대출 취급 개시
- 운영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 대출상품 판매 경과를 보아 보증대상, 대출한도 등 상품 운영방안에 대한 조정도 검토할 계획

# 참고 1

## 보증부 서민대출 보증가능자 추정

KCB 신용 등급	총 고객 현황		대출제한 대상		최종 대출가능자		
	총고객수	전체 구성비	고객수	등급별 비율	고객수	등급별 구성비	전체 구성비
1	2,980,269	7.5%	23	0.0%	263,624	8.8%	1.6%
2	4,810,314	12.2%	1,026	0.0%	493,374	10.3%	2.9%
3	3,639,853	9.2%	3,274	0.1%	472,221	13.0%	2.8%
4	4,328,467	11.0%	5,861	0.1%	779,239	18.0%	4.6%
5	9,107,664	23.1%	11,438	0.1%	3,754,684	41.2%	22.2%
6	4,539,446	11.5%	47,136	1.0%	4,492,310	99.0%	26.6%
7	4,752,986	12.0%	1,367,638	28.8%	3,385,348	71.2%	20.0%
8	2,268,334	5.7%	1,122,099	49.5%	1,146,235	50.5%	6.8%
9	957,230	2.4%	576,110	60.2%	381,120	39.8%	2.3%
10	398,278	1.0%	352,472	88.5%	45,806	11.5%	0.3%
6~10 소계	12,916,274	32.6%	3,465,455	26.8%	9,450,819	73.2%	55.9%
무등급	1,693,749	4.3%	15,681	0.9%	1,678,068	99.1%	9.9%
총계	39,476,590	100.0%	3,502,758	8.9%	16,892,029	42.8%	100.0%

※ 자료 : 신용평가사(10.4월 현재), 등급별 인원 및 대출제한 대상

\* 무등급 : 미성년자, 금융거래 6개월미만, 금융질서문란등제자 등 신용등급산출에서 제외된 사람

\*\* 대출제한 대상 :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회생/파산/면책, 현재연체고객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 참고 2

## 신용등급별 소득분포

(단위 : 만명, %)

소득구간	신용 1~10등급		신용 1~5등급		신용 6~10등급	
	누적인원	누적비율	누적인원	누적비율	누적인원	누적비율
2천만원이하	886.7	23.4%	578.5	23.2%	308.2	23.8%
21백만원이하	1,093.3	28.9%	706.7	28.4%	386.7	29.9%
22백만원이하	1,330.4	35.2%	851.5	34.2%	478.9	37.1%
23백만원이하	1,626.2	43.0%	1,031.7	41.5%	594.5	46.0%
24백만원이하	1,871.0	49.5%	1,181.8	47.5%	689.2	53.3%
3천만원이하	2,939.7	77.7%	1,875.1	75.3%	1,064.6	82.4%
5천만원이하	3,657.9	96.7%	2,390.6	96.1%	1,267.3	98.1%
총계	3,781.1	100.0%	2,488.9	100.0%	1,292.3	100.0%

\* 신용평가사 자료('10.4월 차주수 기준), 여신 심사시 제출한 등록소득을 우선시 하되 정보 부재시에는 신용평가사의 소득추정모형을 이용

표준산업분류	보증제한 업종
561 중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다음 각1호의 경우는 제외 가. 기관구내식당에 대한 여신 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관 광특구 소재 식당업에 대한 여신 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좋은식단”실 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개선 시설자금 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여신
5621	주점업. 단, 생계형 기타주점업(소상공인) 제외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자문 및 동일장 소에서 6개월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개업(6822) 영위 소상공인은 제외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9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앞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 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 참고 4

## 보증 업무절차 흐름도

업무구분	업무처리 내용	담당기관
보증상담 신청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용보증 대상여부 및 보증금액 상담</li> <li>보증신청자 신용보증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 인)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 사본 등</li> <li>(사업자) 사업자등록증(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장임차계약서,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li> </ul> </li> </ul>	서민금융사
보증심사 대출	<div>개 인 (비사업자)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전통보된 보증심사 제규정에 따라 보증심사 후 대출실행</li> <li>* 부정대출에방시스템에서 사전 조회</li> </ul>	서민금융사 (위탁보증)
	<div>등록·무등록 사업자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실사를 통한 사업영위사실 확인</li> <li>접수서류 지역신보에 송부</li> <li>* 지역신보 전자보증서를 받고 대출</li> </ul>	서민금융사 (위탁업무수행)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증심사</li> <li>전자보증서 서민금융사에 송부</li> </ul>	지역신보
신용보증 사고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용보증 사고발생 통지</li> <li>재산조사 및 발견재산 채권보전조치 실시</li> </ul>	서민금융사
보증채무 이행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신보(중앙회) 보증채무이행 청구</li> </ul>	서민금융사
보증채무 이행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증 및 여신취급의 적정성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용보증 제규정 및 약관 준수, 면책기준 저촉 여부 등</li> </ul> </li> <li>신용보증 사고관리 적정성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채권신고,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 누락 여부</li> </ul> </li> </ul>	지역신보 (중앙회)
대위변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민금융사 보증대출 채권 대위변제</li> </ul>	지역신보 (중앙회)
구상채권 관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상채권에 대한 최소한의 회수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정보 활용을 통한 추가 재산조사 및 법적조치</li> <li>구상금청구소 제기 및 채권보전조치 물건 강제집행</li> <li>신용정보의 관리(신용불량거래처 등록 및 해제 등)</li> </ul> </li> <li>구상실익 없는 채권에 대한 상각 실시</li> </ul>	지역신보 (중앙회)

## 29. 소규모 펀드 운용 관련 문제점과 대책

- 소규모 펀드는 운용상의 비효율성\* 등으로 투자수익률 하락 등 투자자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 발생

\* 운용규모가 적을 경우 분산투자효과 등 펀드로서의 특성을 살리기 어렵워 수익률 하락 등 운용상의 비효율성 발생

- 또한 소규모 펀드의 난립은 투자자 선택을 교란하여 펀드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킬 가능성 존재

### < 금액별 펀드현황 >

(단위 : 개, 십억원(설정원본기준), '10.6월말 기준)

		0~10억원		10~50억원		50~100억원		100억원이상		합계	
		숫자	금액	숫자	금액	숫자	금액	숫자	금액	숫자	금액
공모	추가	1,060	284	774	1,984	303	2,134	1,082	214,333	3,219	218,795
	단위	86	35	200	530	93	649	137	4,839	516	6,084
전체펀드		1,973	783	2,795	6,940	1,023	7,113	3,197	319,369	8,988	334,205

-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펀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안의 일부내용\*을 既시행 중이며

\* 모자형 펀드전환 허용, 투자자에 대한 공시강화 등

- 소규모 펀드간 합병절차 간소화 등 법률개정을 통해 시행가능한 방안은 향후 국회제출 예정

\* 유사한 성격의 소규모 펀드가 합병의 경우에는 수익자 총회를 면제하되, 반대수익자 매수청구권과 같은 투자자 보호장치를 추가

- 향후 금융당국은 소규모 펀드의 정리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필요시 추가방안도 검토할 계획

## **소규모 펀드 정리방안**

### **1.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

- ☐ (합병절차 간소화) 투자목적·투자전략 등이 유사한 소규모 펀드간 합병의 경우 수익자총회를 면제
  - 펀드합병에 반대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반대수익자 매수청구권' 제도를 준용

### **2. 시행령 개정으로 既시행 중인 사항**

- ☐ (소규모 펀드 기준변경) 논의대상을 공모·추가형으로 한정하고, 소규모 펀드 금액기준을 현행 '원본액 100억원미만'에서 '원본액 50억원미만'으로 인하
  - \* 추가형은 투자자의 추가모집이 가능한 펀드를 의미하며, 추가모집이 제한되는 단위형의 반대되는 개념임
- ☐ (펀드 등록유지제도 도입) 펀드등록 이후 1년이 경과했음에도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일 경우 자산운용사가 해당펀드를 해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 ☐ (펀드 전환제도 마련) 소규모 펀드에 속한 자산을 新펀드에 그대로 이전하되, 투자자는 新펀드의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모자형 펀드 전환을 허용
- ☐ (소규모 펀드의 투자자에 대한 공시강화) 수시공시 및 수익률·비용 등의 비교공시를 강화하여 투자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

### 30. 공기업 채무 및 PF 관련(한국주택금융공사)

30-1. 최근 10년간 연도별 국내외 채무 상세현황(금융기관, 채무액, 사유, 기간 및 조건, 상환 및 연체내역 등)

30-2. 최근 10년간 국내외 PF 상세현황(금융기관, 사업내역, 사업기간, 컨소시엄 구성현황, 조건, 상환 및 연체내역 등)

#### 1. 최근 10년간 연도별 국내외 채무 상세현황

##### □ 채무 발생 사유

○ 한국주택금융공사(고유계정)

-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전 주택저당채권의 매입자금 목적으로 조달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외환위기 당시 보증채무이행 증가로 인한 보증한도 소진 해소를 목적으로 IBRD 재정차관을 산업은행을 통해 차입

## □ 연도별 채무내역

### ○ 한국주택금융공사(고유계정)

(단위: 억 원)

연도	구분	채권기관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차입금리	비 고
2004	해당사항 없음						
2005	단기 차입금	우리은행	100	'05.11.10	'06.01.26	4.08%	
		우리은행	500	'05.12.21	'06.01.26	4.15%	
		우리은행	1,340	'05.12.21	'06.05.25	4.25%	
		조흥은행	600	'05.12.16	'06.01.26	4.14%	
		외환은행	500	'05.12.21	'06.01.26	4.15%	
	계	3,040					
2006	차입 유가증권	국고0475-1109 (국고06-4)	100	'06.12.28	'07.12.27	0.46%	상환금액 10,046,270천원
	계	100					
2007	단기 차입금	우리은행	1,350	'07.11.26	'08.01.24	5.65%	
			2,650	'07.11.26	'08.01.24	5.65%	
		신한은행	100	'07.11.26	'08.01.24	5.79%	
			100	'07.11.26	'08.01.24	5.79%	
			100	'07.11.26	'08.01.24	5.79%	
		하나은행	200	'07.12.20	'08.03.20	6.80%	
			600	'07.12.28	'08.03.20	6.87%	
			120	'07.12.28	'08.03.20	6.87%	
	일반자금 대출	국민은행	456	'07.12.28	'08.03.20	6.61%	
		하나은행	235	'07.12.28	'08.03.20	6.47%	
		농협중앙회	205	'07.12.28	'08.03.20	6.59%	
		대구은행	80	'07.12.28	'08.03.20	6.35%	
		신한은행	70	'07.12.28	'08.03.20	6.48%	
		우리은행	74	'07.12.28	'08.03.20	6.34%	
		기업은행	70	'07.12.28	'08.03.20	6.80%	
		부산은행	50	'07.12.28	'08.03.20	6.80%	
		전북은행	50	'07.12.28	'08.03.20	6.20%	
	RP매도	기업은행	1,400	'07.12.05	'08.03.04	5.80%	
	계	7,910					

연도	구분	채권기관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차입금리	비 고
2008	단기 차입금	우리은행	400	'08.10.28	'09.01.06	6.64%	
			400	'08.10.29	'09.01.06	6.65%	
			700	'08.11.20	'09.01.08	6.15%	
			500	'08.11.27	'09.01.08	6.15%	
		외환은행	1,000	'08.11.27	'09.01.15	6.20%	
	RP매도	기업은행	1,400	'08.11.25	'09.02.20	5.73%	
	사채	1회	1,900	'08.09.25	'09.09.25	6.72%	
		2회(1)	400	'08.10.16	'09.10.16	6.98%	
		2회(2)	1,200	'08.10.16	'11.10.16	7.10%	
		3회(1)	400	'08.10.29	'09.10.29	6.85%	
		3회(2)	2,000	'08.10.29	'11.10.29	6.90%	
		4회(1)	700	'08.11.12	'09.11.12	6.45%	
		4회(2)	1,100	'08.11.12	'11.11.12	6.70%	
		5회	900	'08.11.13	'10.11.13	6.56%	
		6회	1,600	'08.11.14	'09.11.14	6.50%	
		7회	300	'08.11.18	'10.11.18	6.87%	
		8회	600	'08.11.20	'09.11.20	6.45%	
		9회	900	'08.11.25	'11.11.25	7.12%	
		10회	1,100	'08.12.03	'09.12.03	6.59%	
		11회	1,300	'08.12.09	'09.12.09	6.20%	
		12회	600	'08.12.16	'10.12.16	5.05%	
	계	19,400					
2009	단기 차입금	신한은행	1,900	'09.12.22	'10.02.19	3.85%	
		우리은행	500	'09.10.26	'10.01.25	3.76%	
		외환은행	200	'09.10.26	'10.01.25	3.76%	
	RP매도	기업은행	1,400	'09.11.20	'10.02.19	3.04%	
		외환은행	450	'09.12.22	'10.01.14	2.70%	
	사채	2회(2)	1,200	'08.10.16	'11.10.16	7.10%	
		3회(2)	2,000	'08.10.29	'11.10.29	6.90%	
		4회(2)	1,100	'08.11.12	'11.11.12	6.70%	
		5회	900	'08.11.13	'10.11.13	6.56%	
		7회	300	'08.11.18	'10.11.18	6.87%	
		9회	900	'08.11.25	'11.11.25	7.12%	
		12회	600	'08.12.16	'10.12.16	5.05%	
		13회	800	'09.01.29	'12.01.29	4.60%	
		14회	1,700	'09.04.07	'10.10.07	3.46%	
		15회	1,500	'09.05.21	'10.11.21	3.34%	
		16회	500	'09.05.28	'11.05.28	3.94%	
		17회	2,000	'09.08.04	'10.08.04	2.99%	변동금리
		18회(1)	100	'09.08.14	'10.08.14	2.99%	변동금리
		18회(2)	1,100	'09.08.14	'11.08.14	3.53%	변동금리
		19회	1,500	'09.09.24	'12.09.24	5.12%	
		20회	2,500	'09.10.28	'10.10.28	3.19%	
		21회	1,700	'09.11.27	'11.11.27	4.58%	
	계	24,850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단위: 10M USD)

연도	구분	채권기관	차입잔액	차입일	만기일	차입금리	비 고
2004	IBRD 재정차관 재전대 차입금	산업은행	170	'98.05.28	'13.05.15	6M Libor + 0.9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조건
2005			150				
2006			130				
2007			110				
2008			90				
2009			70				

☐ 연체내역 없음

**2** 최근 10년간 국내외 PF 상세현황(금융기관, 사업내역, 사업기간, 권소시점 구성현황, 조건, 상환 및 연체내역 등

☐ 해당사항 없음

**30. 공기업 채무 및 PF 관련(한국주택금융공사)**

**30-3. 최근 10년간 연도별 · 공기업별 국내외 채무  
상세현황**

**30-4. 최근 10년간 연도별 · 공기업별 국내외 PF  
상세현황**

☐ 최근 10년간 연도별 · 공기업별 국내외 채무 상세현황  
: 붙임파일 참조

☐ 최근 10년간 연도별 · 공기업별 국내외 PF 상세현황  
: 해당사항 없음

붙임 : 최근 10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내외 채무 상세  
현황 1부. 끝.



## 최근 10년간 채무 상세현황

### □원화차입

(단위:억원)

구분	금융기관	종류	채무액(연말잔액)	사유	상환	전년대비	만기일	조건
2000년	서울은행	일반대출	632	무담보채권인수 등			2001-09-30	수시상환
	조흥은행	일반대출	780	NPL98-1지분매입 등			2001-10-24	수시상환
소계			1,412					
2001년	서울은행	일반대출	-	전액상환	632	△1,412		
	조흥은행	일반대출	-	전액상환	780			
소계					1,412			
2002년	해당사항 없음		-			0		
소계					-			
2003년	국민은행	물차입	400	구조조정기업자산인수			2004-01-14	만기일시상환
	사채(사모)	제1회공사채	849	무담보채권인수		1,421	2006-08-29	만기일시상환
	사채(사모)	제2회공사채	172	무담보채권인수			2006-09-30	만기일시상환
소계			1,421		-			
2004년	기업어음	기업어음발행	5,600	부실채권 인수자금			3개월만기	만기일시상환
	한일투신	물차입	400	부실채권 인수자금			2005-01-04	만기일시상환
	국민은행	일반대출	-	전액상환	400	4,579		
	사채(사모)	제1회공사채	-	전액상환	849			
	사채(사모)	제2회공사채	-	전액상환	172			
소계			6,000		1,421			
	기업어음	기업어음발행	2,000	자입금상환 및 부실채권매입	5,600		3개월만기	만기일시상환
	한일투신	물차입	-	전액상환	400			
	CJ자산운용	물차입	801	자입금상환 및 부실채권매입			2006-01-05	만기일시상환
	국민은행	한도대출	20	국유부동산위탁개발자금			2006-09-26	만기일시상환

## 최근 10년간 채무 상세현황

### □ 원화차입

(단위: 억원)

구분	금융기관	종류	채무액(연말잔액)	사유	상환	전년대비	만기일	조건
2005년	사채	제3회공사채	1,200	차입금상환 및 부실채권매입		2,021	2008-03-17	만기일시상환
	사채	제4회공사채	1,000	차입금상환 및 부실채권매입			2008-10-14	만기일시상환
	사채	제5회공사채	1,000	차입금상환 및 부실채권매입			2008-10-20	만기일시상환
	사채	제6회공사채	1,000	차입금상환 및 부실채권매입			2008-11-16	만기일시상환
	사채	제7회공사채	1,000	차입금상환 및 부실채권매입			2008-11-23	만기일시상환
소계			8,021		6,000			
2006년	국민은행	기업어음	-	전액상환	2,000	△2,022		
		콜차입	-	전액상환	801			
	우리CS자산운용	콜차입	1,000	차입금상환 및 부실채권매입			2007-01-02	만기일시상환
		한도대출	99	국유부동산위탁개발자금			2007-09-26	수시상환
	국민은행	제3회공사채	1,200	전년도이월			2008-03-17	만기일시상환
		제4회공사채	1,000	전년도이월			2008-10-14	만기일시상환
	사채	제5회공사채	800	전년도이월 및 일부상환	200		2008-10-20	만기일시상환
		제6회공사채	900	전년도이월 및 일부상환	100		2008-11-16	만기일시상환
	사채	제7회공사채	1,000	전년도이월			2008-11-23	만기일시상환
			5,999		3,101			
소계					1,000			
2007년	우리CS자산운용	콜차입	-	전액상환		1,655		
		콜차입	2,530	차입금상환 및 부실채권매입			2008-01-02	만기일시상환
	국민은행	한도대출	324	국유부동산위탁개발자금			2008-09-26	수시상환
		제3회공사채	1,200	전년도이월			2008-03-17	만기일시상환
	사채	제4회공사채	900	전년도이월 및 일부상환	100		2008-10-14	만기일시상환
	사채	제5회공사채	800	전년도이월			2008-10-20	만기일시상환
	사채	제6회공사채	900	전년도이월			2008-11-16	만기일시상환
	사채	제7회공사채	1,000	전년도이월			2008-11-23	만기일시상환

## 최근 10년간 채무 상세현황

### □원화차입

		(단위: 억원)					
구분	금융기관	종류	채무액(연말잔액)	사유	상환	전년대비	만기일
2008년	소계		7,654		1,100		
	삼성투자자산운용외	콜차입	-	전액상환	2,530		
	기업어음	기업어음발행	5,900	차입금상환 및 부실채권매입			3개월만기
	국민은행	한도대출	866	국유부동산위탁개발자금			2011-09-26
	사채	제3회공사채	-	전액상환	1,200		
	사채	제4회공사채	-	전액상환	900		
	사채	제5회공사채	-	전액상환	800		
	사채	제6회공사채	-	전액상환	900		
	사채	제7회공사채	-	전액상환	1,000		
	사채	제8회공사채	800	부실채권 인수자금			2011-10-23
2008년	소계		16,904		7,330	9,250	
	기업어음	기업어음발행	-	전액상환	5,900		
	국민은행	한도대출	1,125	국유부동산위탁개발자금			2011-09-26
	한국정책금융공사	은행자본확충펀드	6,594	은행자본확충목적			2015-01-01
	사채	제8회공사채	800	전년도이월			2011-10-23
	사채	제9회공사채	1,100	전년도이월 및 일부상환	400		2011-10-30
2009년	소계		1,300	전년도이월		9,603	2011-11-06
	사채	제10회공사채					

## 최근 10년간 채무 상세현황

### □ 원화차입

		(단위: 억원)				
구분	금융기관	종류	채무액(연말잔액)	사유	상환	전년대비
	사채	제11회공사채	1,500	전년도이월 및 일부상환	400	2011-12-04
	사채	제12회공사채	2,000	전년도이월		2010-12-09
	사채(사모)	제13회공사채	1,717	전년도이월 및 일부상환	921	2011-12-30
	사채(사모)	제14회공사채	10,443	PF대출인수자금	184	2012-03-18
	사채(사모)	제15회공사채	18	PF대출인수자금		2012-12-10
소계			26,597		7,805	
2010년 8월말	국민은행	한도대출	1,061	일부상환 및 전년도이월	64	2011-09-26
	한국정예금융공사	은행자본확충펀드	6,594	전년도이월		2015-01-01
	사채	제8회공사채	800	전년도이월		2011-10-23
	사채	제9회공사채	1,100	전년도이월		2011-10-30
	사채	제10회공사채	1,300	전년도이월		2011-11-06
	사채	제11회공사채	1,500	전년도이월		2011-12-04
	사채	제12회공사채	2,000	전년도이월		2010-12-09
	사채(사모)	제13회공사채	1,635	전년도이월 및 일부상환	82	2011-12-30
	사채(사모)	제14회공사채	10,155	전년도이월 및 일부상환	288	2012-03-18
	사채(사모)	제15회공사채	18	전년도이월		2012-12-10
	사채(사모)	제16회공사채	2,514	PF대출인수자금		2013-06-30
			28,677		434	
						2,080
						수시상환
						만기일시상환
						만기일시상환
						만기일시상환
						만기일시상환
						만기일시상환
						만기일시상환
						만기일시상환
소계						

## 최근 10년간 채무 상세현황

### □ 외화차입

(단위:미화백만불)

구분	금융기관	종류	채무액(연말잔액)	사유	상환	전년대비	만기일	조건
2000년	재경부	ADB차관	500	금융산업구조조정			2005-12-31	만기일시상환
소계			500					
2001년	재경부	ADB차관	500	전년도이월		131	2005-12-31	만기일시상환
	산업은행	IBRD차관	131	CRC,RV 출자 및 금융기관 부실채권 매입			2013-05-15	10년 균등분할상환
소계			631					
2002년	재경부	ADB차관	500	전년도이월		0	2005-12-31	만기일시상환
	산업은행	IBRD차관	131	전년도이월			2013-05-15	10년 균등분할상환
소계			631					
2003년	정부	ADB차관	500	전년도이월		344	2005-12-31	만기일시상환
	산업은행	IBRD차관	475	CRC,RV 출자 및 금융기관 부실채권 매입	25		2013-05-15	10년 균등분할상환
소계			975		25			
2004년	정부	ADB차관	500	전년도이월		△50	2005-12-31	만기일시상환
	산업은행	IBRD차관	425	전년도이월 및 일부상환	50		2013-05-15	10년 균등분할상환
소계			925		50			

## 최근 10년간 채무 상세현황

### □ 외화차입

(단위:미화백만불)

구분	금융기관	종류	채무액(연말잔액)	사유	상환	전년대비	만기일	조건
2005년	정부	ADB차관	0	전액상환	500	△550	2005-12-31	만기일시상환
	산업은행	IBRD차관	375	전년도이월 및 일부상환	50		2013-05-15	10년 균등분할상환
소계			375		550			
2006년	산업은행	IBRD차관	325	전년도이월 및 일부상환	50	△50	2013-05-15	10년 균등분할상환
소계			325		50			
2007년	산업은행	IBRD차관	275	전년도이월 및 일부상환	50	△50	2013-05-15	10년 균등분할상환
소계			275		50			
2008년	산업은행	IBRD차관	225	전년도이월 및 일부상환	50	△50	2013-05-15	10년 균등분할상환
소계			225		50			
2009년	산업은행	IBRD차관	175	전년도이월 및 일부상환	50	△50	2013-05-15	10년 균등분할상환
소계			175		50			
2010년8월말	산업은행	IBRD차관	150	전년도이월 및 일부상환	25	△25	2013-05-15	10년 균등분할상환
소계			150		25			

# 현 경 병 의원

# 1. 2009.10월 ~ 2010.8월 현재까지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및 해명보도자료 목록

## □ 보도자료 목록

번호	제 목	작성일
1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각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20091001
2	채권 유통시장 개선 방안 마련	20091005
3	(가칭)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설립 인가	20091007
4	금융투자회사 인가업무단위 추가 본인가 의결	20091007
5	금융투자업 인가	20091007
6	‘녹색금융이 이끄는 녹색성장’ 컨퍼런스 축하	20091009
7	09년도 국정감사 관련 업무현황	20091012
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20091014
9	㈜네오리소스 등 8개사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	20091014
10	한국,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정회원 가입	20091014
11	금융투자회사 인가업무단위 추가 본인가 의결	20091021
12	제46회 「저축의 날」 행사	20091027
13	[보도참고자료] 한국정책금융공사 및 산은금융지주사 설립	20091027
14	한국정책금융공사 창립 기념식 축하	20091028
15	유럽연합상공회의소 세미나 연설문	20091028
16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91028
17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20091029
18	2009년 8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91102
19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20091105
20	「2009 KRX 상장기업 IR 엑스포」 기조연설	20091105



21	신용정보 협회 출범식 격려사	20091105
22	2009 서울국제금융 축사	20091106
23	[보도참고자료] 한국 조선산업 경기회복 선제대응에 나서	20091109
24	[보도참고자료]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해운산업 자생력 확보 계기 마련	20091109
25	승용차요일제 자동차보험 개선 추진	20091110
26	IGE·IMF 국제금융컨퍼런스	20091111
27	㈜비엔디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091111
28	자동차보험료(자차·대물) 할증기준 개선 추진	20091112
29	국회 경제정책포럼 세미나	20091116
30	Korean G20 Leadership 연설문	20091118
31	전남서부신협과 문장신협의 합병 등 인가	20091118
32	비씨카드(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	20091118
33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과 메릴린치인터내셔널은행 서울지점 간 영업양수도 등에 대한 예비인가	20091118
34	미래상호저축은행 등의 한일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20091118
35	금융투자회사 금융투자업 본·예비인가 의결	20091118
36	금융투자업 인가	20091118
37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및 감독 강화 방안	20091119
38	‘회계감사업무시 전문가 평가의견 활용’ 관련 회계감독 강화	20091125
39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91125
40	㈜헤세나 등 6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091125
41	제7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20091125
42	2009년 9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91127
43	「제3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 개최	20091127
44	두바이월드 채무상환유예요청 관련 비상금융합동대책반 회의 개	20091129

	최	
45	「증권시장 결제제도 선진화」 추진	20091130
46	금융투자회사 금융투자업 본·예비인가 의결	20091202
47	(가칭)한국씨티금융지주(주) 설립 예비인가	20091202
48	[위원장] UBS Korea CEO/CFO Forum 2009	20091203
49	[위원장] AMCHAM Luncheon Speech	20091209
50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20091211
51	맥쿼리은행 서울지점 신설 인가	20091214
52	2010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20091216
53	바젤위원회, 금융규제 개편방안 초안 발표	20091217
54	2009년 10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91218
55	제8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20091218
56	한화손해보험(주) 및 제일화재해상보험(주)의 합병 인가 등	20091218
57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과 메릴린치인터내셔널은행 서울지점 간 영업양수도 등에 대한 인가 등	20091218
58	금융투자업 변경인가(본인가) 의결	20091218
59	제6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20091221
60	미소금융 설립 및 운영현황 등	20091221
61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091222
62	금융위원장 및 금융유관기관장 「연말연시 국군장병 위문」	20091223
63	주식 불공정거래 형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91223
64	(주)신명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 및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실시	20091223
65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20091223
6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차관회의 통과	20091224
67	증권유관기관 수수료체계 개편 및 수수료 인하	20091229

68	금융투자업 인가	20091229
69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20091229
70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20091229
71	금호아시아나그룹 구조조정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20091230
72	일반기업회계기준 제정	20091231
73	KIFRS하에서의 질의회신제도 시행	20091231
74	(전북)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 명령(영업정지)	20091231
75	[위원장] 2010년 금융위원회 신년사(시무식)	20100104
76	재래시장·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대폭 인하	20100104
77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보증제도 개선	20100104
78	은행권 사외이사 제도 개편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20100104
79	[위원장] 2010년 범금융기관 신년사	20100105
80	FSB 보상원칙 국내 이행을 위한 업권별 모범규준 마련	20100106
81	(주)스타맥스 등 6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00106
82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새단장 오픈	20100107
83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20100107
84	진동수 금융위원장,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	20100108
85	'미소(美少)금융'신청자격을 인터넷에서 확인하세요	20100111
86	제3차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결과	20100111
87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20100112
88	금융위원장, 금융 공공기관장 회의 개최	20100112
89	외국인 금융투자자 등에 대한 출입국 편의제공 확대	20100113
90	[보도참고] 금융위원장, 7개 금융협회장 간담회 참석	20100114
91	미소금융 1개월간 설립·운영현황 등	20100118
92	[위원장]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1년 세미나 기초연설	20100118

93	[보도참고] 진동수 금융위원장 취임 1주년 성과와 과제	20100119
94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만기도래 현황 및 리스크 평가	20100120
95	2010년도 미소금융 추진계획	20100120
96	㈜트라이콤 등 2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00120
97	[위원장] 금융경영인 조찬 강연(2010년 금융정책의 과제와 방향)	20100122
98	더케이손해보험(주)에 대한 보험종목 추가 영위 허가	20100127
99	결합재무제표 기준서 제정	20100127
100	금융투자업 변경(예비)인가 의결	20100127
101	제9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20100127
102	제재내용 공개수준 확대방안	20100128
103	미소금융을 사칭하는 영업행위에 주의하세요	20100128
104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00128
105	2009년 11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100129
106	‘09.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및 정리 추진 실적	20100201
107	금융위원장, 설 대비 중소기업 금융지원 현장방문	20100202
108	‘위기 이후 한국 금융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	20100203
109	[보도참고] 우리나라 사모펀드 규제체계 평가와 개선방안 용역 추진	20100203
110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실시	20100203
111	여신금융회사 이자율제한 위반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	20100205
112	[보도참고] 그리스 등 남유럽 재정적자 우려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	20100207
113	제10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20100208
114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도입 관련 추진계획	20100210
115	금융위원장, 설 대비 미소금융 지원 현장점검	20100210
116	에스케이텔레콤에 대한 하나카드 대주주 승인	20100210

117	공시위반 과징금 관련 제도개선 사항(조사업무규정)	20100211
118	[보도참고] 서민금융 정책협의회 제1차 회의 개최 결과	20100217
119	제287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20100218
120	[보도참고] 금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20100218
121	2009년 12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100219
122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20100224
123	미소금융 2개월간 운영현황	20100224
124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00224
125	㈜일공공일안경콘택트에 대한 조사 , 감리결과 조치	20100224
126	제11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20100224
127	부동산 PF대출 및 PF ABCP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 추진	20100302
128	케이디비칸서스밸류 PEF의 금호생명보험(주) 대주주 승인	20100303
129	한국신용정보(주)의 채권추심업·신용조사업 분할 인가	20100303
130	금융투자업 변경(예비)인가 및 합병승인 의결	20100303
131	금융투자업 인가	20100303
132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개선방안 용역 추진	20100305
133	2010년 1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100305
134	금융위 부위원장, 회계감독당국과 회계법인 조찬간담회 개최	20100311
135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의결	20100317
136	한중일 고위급 금융당국 회의 및 한중일 금융협력세미나 참석 결과	20100318
137	펀드업계 「기존 투자자 펀드 판매보수 단계별 인하」 추진	20100318
138	제12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20100319
139	제10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20100322
140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00323

141	[위원장] 금융선진화포럼 정책세미나	20100324
142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20100324
143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00324
144	(주)야호커뮤니케이션 등 2개사 및 화인경영회계법인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00324
145	회계투명성제고를 위한 2010년 감리업무 운영방향	20100325
146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단기사채법’) 제정안 차관회의 통과	20100325
147	예대율 제도 도입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20100326
148	[보도참고] 금융위원장, 금융투자업계 간담회 참석	20100326
149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리 비교공시 강화	20100330
150	2010년 2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100402
151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당정협의 개최	20100407
152	금융투자업 인가	20100407
153	금융투자회사의 외환파생상품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20100407
154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의결	20100407
155	예나래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인가	20100407
156	2010년도 금융발전심의회 출범	20100408
15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00408
158	서민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방안	20100409
159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 예고	20100412
160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00413
161	제289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20100414
162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최고이자율을 연 49%에서 연 44%로 5%p 인하	20100415

163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20100416
164	美 SEC의 골드만삭스 기소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20100420
165	[보도참고] 대부업법 시행령 최고이자율 인하 적용대상 관련	20100420
166	[위원장] 2010 세계 경제·금융컨퍼런스	20100421
167	[보도참고] 보증부대출 금리부과체계 개선방안	20100421
168	금융투자업 인가 및 영업양수도 승인 의결	20100421
169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안 승인	20100421
170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의 하나로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20100421
171	현행 IFRS 외화환산회계 개선을 위한 그간의 노력 및 향후계획	20100422
172	2010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보형분과 개최	20100422
173	주택 미분양 해소와 거래 활성화로 경제회복 견인	20100423
174	제14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20100423
175	『FSB와 글로벌 금융규제개혁』 발간	20100426
176	재래시장·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대폭 인하	20100427
177	IFRS 정보이용자 조찬간담회 개최	20100427
178	행정지도 운영 투명화 방안 추진	20100428
179	[보도참고] S&P의 그리스·포르투갈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관련	20100428
180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00428
181	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20100430
182	전화금융사기 피해구제 제도개선 관계기관 T/F 구성 및 운영계획	20100506
183	금융위 부위원장, 미소금융 현장점검 대전 동구지점 개소식 참석 및 KB 미소지점 현장점검	20100506
184	녹색금융특화 MBA 업무협약 체결	20100507
185	남유럽발 금융불안에 대응한 비상금융합동대책반회의 개최	20100507
186	2010년 3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100507

187	[보도참고]금융인 초청 오찬간담회의 금융위원장 발표자료	20100507
188	[보도참고]경제, 금융상황점검회의 결과	20100510
189	서민금융 통합서비스 개시 점검	20100510
190	금융위, 한국경제 해외설명회 개최	20100510
191	[보도참고]2010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중소서민금융분과 개최	20100512
192	2010년도 금융선진화 합동회의 제1차회의 개최	20100512
193	(가칭) 아이비케이 연금보험(주)의 보험업 예비허가	20100512
194	금융투자업 폐지 및 해산 승인 의결	20100512
195	금융투자업 인가	20100512
196	[보도참고]권혁세 부위원장, 싱가포르에서 한국금융 IR 활동 전개	20100513
197	2010년 제2차 금융발전심의회 자본시장분과 개최	20100514
198	[보도참고]제17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20100514
199	미소금융 소액대출 확대	20100517
200	제4차 「IFRS 정착 추진단」 회의 개최	20100517
201	[위원장]2010 Korean Economic Forum	20100519
202	금융위 부위원장, 미소금융 현장점검 신한미소금융재단 부산 해운대지점 개소식 참석	20100519
203	진동수 금융위원장 국제 컨퍼런스 참석 및 독일금융청과의 금융협력/정보교환 양해각서 체결추진	20100519
204	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변경안 예고	20100520
205	'09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20100520
206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00520
207	2010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 선정 등	20100520
208	[위원장] 독일 재무부 주최 국제회의의 Keynote Speech	20100521
209	천안항 조사결과 발표 이후 대내외 금융시장 점검을 위한 비상	20100523



	금융합동대책반회의 개최	
210	금융위 위원장, 미소금융 현장점검 기업은행(IBK) 미소금융재단 부천지점 개소식 참석	20100525
211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00526
212	(가칭)한국씨티금융지주㈜ 설립 인가 등	20100526
213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00526
214	금융투자업 인가	20100526
215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및 대주주변경 등 승인 의결	20100526
216	『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지원 방안』 신용회복과 일자리 모두 찾기, ‘행복잡(Job)이’ 프로젝트	20100527
217	「금융중심지의 조성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차 관회의 통과	20100527
218	제18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20100528
219	향후 금융투자업 인가방향과 운용계획	20100531
220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00601
221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00603
222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20100603
223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00603
2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 의 통과	20100603
225	2010년 4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100604
22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00608
227	한국, IOSCO MMOU 정식회원으로 가입	20100609
228	국민신용정보㈜에 대한 업무 일부정지(2월) 조치	20100609
229	진동수 금융위원장, 제4차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및 미국 금융당국과의 협력강화 회의 참석	20100614

230	[보도참고]거시 건전성(MacroPrudential Measures) 제고를 위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20100614
231	제19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20100614
232	"글로벌 금융위기와 마이크로파이낸스 : 도전과 국제협력" 국제 컨퍼런스 개최	20100615
233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00616
234	진동수 금융위원장, 미국 FRB 버넬키 의장, SEC 샤피로 의장 면담 및 FRB, OCC, FDIC, OTS와 MOU 체결	20100617
235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 개시	20100618
236	제20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20100618
237	제291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20100622
238	한국 증시 MSCI 선진국 시장 편입 발표 관련	20100622
239	[보도참고]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00623
240	경북경산제일신협과 청도군신협의 합병 등 인가	20100623
241	미니금선물시장 개설을 위한 거래소 규정개정안 승인	20100623
242	금융투자업 인가조건 취소	20100623
243	금융투자업 인가 및 대주주변경 등 승인 의결	20100623
244	공인인증서 사용규제 개선을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20100623
245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안 승인	20100624
246	2010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20100624
247	『시장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금융위금감원예보 합동 워크숍 개최	20100624
248	[보도참고]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20100625
249	[보도참고]2010년도 대기업 신용위험평가의 영향 및 대응방안	20100625
250	「시장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금융위금감원예보 합동 워크숍 개최	20100625

251	저축은행 PF대출 문제에 대한 대책 및 감독강화 방안	20100625
252	「(가칭)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기본방향」 토론회 개최	20100629
253	미소희망봉사단 창단	20100629
254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의결	20100629
255	2010년 제2차 금융발전심의회 보험분과 개최	20100630
256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00630
257	[보도참고] 금융정보분석원, 룩셈부르크등 2개국 FIU와 양해각서 체결	20100630
258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00630
259	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한 「펀드 공시제도 개선」 추진	20100701
260	금융위원장, 미소금융 현장점검(전주지점 개소식) 기업, 은행계 미소재단, 다양한 미소금융 지원 시작	20100702
261	2010년 제2차 금융발전심의회 은행분과회의 개최	20100702
262	저축은행에 유동성비율 제도 도입	20100707
263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20100708
264	2010년 제3차 금융발전심의회 자본시장분과회의 개최	20100709
265	2010년 5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100709
266	[보도참고] 『시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금융위 전직원 워크숍 개최	20100709
267	‘미래와 금융: 일자리 창출 및 고령화 대책’세미나	20100714
268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00714
269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00714
270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00714
271	중소기업 및 서민 금융지원 현장 점검 실시	20100715
272	‘10년 제2차 금융발전심의회 정책분과위 개최결과	20100715
273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 마련 일정	20100716

274	금융위 부위원장, 회계법인 조찬간담회 개최	20100720
275	7.26일부터 서민전용 대출상품 “햇살론”본격출시	20100720
276	은행업감독규정,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20100721
277	금융투자업 인가 의결	20100721
278	금융투자업 인가	20100721
279	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20100721
280	[금융위](주)탑라인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및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대주주 변경 승인 등	20100721
281	한도거래 대부계약에 대한 최고이자율 적용 관련	20100721
282	[금융위]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등 개정안 등	20100721
283	금융감독원 저축은행부문 인력 충원을 위한 특별예비비 사용 승인 등	20100721
284	[보도참고]상장 중소기업들에 대해 예정대로 2011년부터 IFRS를 시행	20100722
285	금융위원장 미소금융 간담회 참석	20100723
286	금융위원장, 서민전용 대출 ‘햇살론’출시 기념식 참석	20100726
287	장기 국채선물시장 활성화 방안	20100726
288	투자자 정보제공 확대를 위한 애널리스트 및 리포트 공시제도 도입 추진	20100727
289	콜시장 건전화 및 단기지표채권 육성 등을 통한 단기금융시장 개선방안 추진	20100727
290	은행부행장 조찬간담회 개최 및 은행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00728
291	[보도참고] ‘햇살론’ 취급현황	20100728
292	[보도참고] 위험회피(헷지) 회계 관련 IFRS 개정 동향 및 한국의 대응 노력	20100729
293	[보도참고]‘햇살론’ 취급현황	20100729
294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착수	20100730

295	[보도참고] ‘햇살론’ 취급현황	20100730
296	[보도참고]중소기업 현장애로 실태조사 결과 발표(하도급, 인력, 자금이 주요 애로요인인 것으로 조사)	20100730
297	2010년 6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100730
298	[보도참고]‘햇살론’ 취급현황	20100802

## □ 해명보도자료 목록

번호	제 목	작성일
1	동아일보 「경영권 무관한 우리금융지주 지분 23% 정부, 전량매각 미리 의결키로」 제하의 기사 관련 해명	20091005
2	10.21 연합인포맥스 「증권·자산운용사 콜시장 참여제한」, 「콜시장 제한·통안증권 국채전환 등 단기자금시장 대개편」 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	20091021
3	연합뉴스 「우리금융지분 7%, 11월내 매각」 제하의 기사 관련	20091027
4	매일경제 「은행 美국채 보유 의무화 내년 7월 시행」 제하의 기사 관련	20091109
5	동아일보의 은행장 후보, 금융당국이 사전심사 보도 관련	20091119
6	연합뉴스 “돈세탁 의심거래 무조건 신고추진”관련	20091127
7	매일경제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의무화 (금융위 금융산업 중장기 비전)”관련	20091202
8	매일경제 “부실보험 판매대리점이 배상…” (금융위 금융산업 중장기 비전)”관련	20091203
9	연합뉴스의 빅4 회계법인에 외부감사 몰아주기 보도 관련	20091203
10	헤럴드경제 “금융회장 선출에 주주대표 참여”관련	20091204
11	한국경제신문, 대우건설 産銀에 넘겨라 기사에 대한 해명	20091228

12	연합뉴스, 서울신문의 「기업인수목적회사제도 허점투성이」 기사에 대한 해명	20091228
13	매일경제 「우리금융 민영화 일정 내주 발표」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103
14	서울경제 등 「우리금융 등 은행간 M&A 빨라진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104
15	연합뉴스 「KB회장, 사외이사제 개선후 뽑아야」 제하기사 관련	20100110
16	서울경제 「새 보험료 산출방식 의무도입 "유예"」 제하 기사 관련	20100113
17	서울경제 “은행서도 ‘웹어카운트’판매한다	20100119
18	세계일보 「숫자금 상황 부진 '혈세만 줄줄'」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119
19	서울경제 「2금융권 미소금융 출자‘난색’」 제하기사 관련	20100120
20	서울경제 인터넷판 「예금보장제 10여년만에 대수술」 제하 기사 관련	20100126
21	한국경제 「우리금융, 합병통해 민영화한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208
22	한국경제 「우리금융 합병 쉽게‘예보 MOU’폰다」 등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209
23	서울경제 「예보, 금융위로부터 독립해야」 제하기사 관련	20100216
24	이데일리, 「금융당국, 증권사 신규인가 전면 재검토」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222
25	헤럴드경제 「우리지주 자사주 차입매입 허용」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223
26	연합뉴스 「금융사별 예금보호한도 차등화 검토」 제하기사 관련 보도해명	20100226
27	연합인포맥스 「금융당국, 외은지점 달러차입제한 강력규제 본격 검토」, 매경 「국민연금과 통화스왑 늘려 제2 외환보유액 확보한다」 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	20100226
28	서울경제 「금융안정을 위한 상시협의체 신설 검토」 및 「금융권 총당금체계 확 바뀐다」 제하기사 관련	20100301
29	경향신문 등의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사전 적격성 심사제도에	20100303

	관한 기사 관련	
30	서울경제 「저축銀도 유동성비율 100%이상 맞춰야」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305
31	한국경제 「모든 스마트폰서 인터넷뱅킹 된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307
32	연합뉴스 「저축銀 감독강화.. 자산운용 규제도 검토」 및 「대형 저축은행 매년 종합검사 받는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314
33	매일경제 「개인신용정보 종합DB 만든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328
34	연합뉴스 「저신용자 신용대출 받기 쉬워진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401
35	경향신문, 「車요일제보험 할인 준비부족에 또 연기」 보도 관련	20100401
36	헤럴드경제 「정부, 서민금융위해 저축은행에도 이익출연 강요」 및 이데일리 「금융위 서민금융TF, 개인프리워크아웃制 연장」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406
37	헤럴드경제 「미소금융 금리 두자리수로 올려 모럴해저드 막는다」 및 「모럴해저드 차단불구 지나친 고금리 도마에」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407
38	이투데이 「금융위“직접 징계의 칼을 들겠다”」 및 「금융위금감원 제재권 놓고 ‘신경전’」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408
39	연합뉴스 「서민금융사 보증부 대출금리 11%대」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411
40	뉴스핍, 「은행 사외이사제 석달만에 또 재수술」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412
41	연합뉴스 등의 지방미분양 문제 완화방안검토에 관한 기사 관련	20100414
42	헤럴드경제 「은행권 외화차입 규제검토」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419
43	이데일리 「금감원 제재권한 축소 법안 기습제출」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420
44	문화일보의 「감사의견 거절 급증... 해당 상장폐지기업 감리 강화」 보도 관련	20100420
45	헤럴드경제 「보이스피싱 관련법 급조 ... 피해자들 두 번 운다」	20100430

	제하의 기사 관련	
46	한국경제신문의 「세계단일 회계기준 2013년 새로 도입한다」 보도 관련	20100514
47	[보도해명]서울경제 「변호사·회계사도 ‘자금세탁 보고’의무화, 이르면 내년부터」 제하 기사 (10.5.17 A01면, A06면) 관련	20100517
48	동아일보 「대부업체 “고객정보 못줘”… 10조원 규모 서민대출 무산 ?」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522
49	서울신문 「은행세 내년 도입 확정」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601
50	한국경제 「보험사에서 증권계좌 만들면 불법?」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608
51	헤럴드 경제 「KB·우리지주 합병되도 독과점 문제없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616
52	이데일리 「은행세 요율, 금융 재정거래 억제수준 부과 검토」 제하의 보도 관련	20100617
53	헤럴드경제(‘10.6.20) 「대부업체 고객정보 공개 반대 여전」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620
54	서울경제(‘10.6.23) 「금융위 ‘금융상품 백화점’ 도입재추진」 제하 기사 관련	20100622
55	연합인포맥스 「정부, 은행세 걷어 ‘환율안정펀드’ 조성」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623
56	파이낸셜뉴스(‘10.6.30) 「금융위금감원 또 제재권 신경전」 제하 기사 관련	20100629
57	한국경제(‘10.6.30) 「금융위금감원 또 총돌조짐」 제하 기사 등 관련	20100629
58	한겨레신문 「은행세 20조원 부과 검토」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609
59	한국경제(‘10.7.2) 「금감원 ‘펀드 시세조종 조사」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702
60	헤럴드경제(‘10.7.9) 「보험연구원 분리 논란 심화...보개원 ‘부글부글」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709
61	내일신문 「금융위 ‘행복잡이 프로젝트’ 혼선」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715
62	연합인포맥스, 「DTI, 서울 60%, 인천·경기 70%로 완화 검토」 제하 기사 관련	20100719



63	연합뉴스('10.7.29) 「햇살론 연체이자율 제각각 '혼선」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20100729
----	---	----------

## 2. 2007~2009년도 국정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불임참조

2007년도 국정감사시 지적 및  
시정사항 처리결과

# 목 차

## 1. 舊금융감독위원회 소관

- (1)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 이후 일자리 창출 부진, 불완전 판매, 보험료 인하효과 부족 등 문제가 있으므로 실태파악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후 방카슈랑스 제도의 확대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 ..... 3
- (2) 채무유예서비스(DCDS)는 적은 금액만 부담하면 연체시 카드대금을 보상해주는 좋은 제도이므로 확대 실시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4
- (3) 휴면예금이 '08.3월에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 만큼 원소유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5
- (4)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치에 등록된 사람들은 전체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만큼 금융채무불이행자들에 대한 대책을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6

## 2. 舊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소관

- (5) 국책금융기관의 경영혁신 촉진 ..... 7
- (6) 국책금융기관의 역할재정립 방안 보완 ..... 8
- (7) 금융 전문인력 양성체계의 개선 ..... 9
- (8)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 확대 ..... 10
- (9) 상호저축은행 부실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 ..... 11
- (10) 방카슈랑스 부작용에 대한 보완대책 강구 ..... 12

## 1. 舊금융감독위원회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 이후 일자리 창출 부진, 불완전 판매, 보험료 인하효과 부족 등 문제가 있으므로 실태파악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후 방카슈랑스 제도의 확대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p>	<p><input type="checkbox"/> 당초 정부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보험 설계사 실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p> <p>○ 4단계 방카슈랑스(개인보장성·자동차보험)를 예정대로 '08.4월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p> <p>※ 설계사 실업 및 불완전 판매 방지 방안</p> <p>① 은행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입증책임 전환</p> <p>② 해당은행과 대출 등 거래관계가 있는 이해상충자에 대한 판매제한</p> <p>③ 은행의 보험판매시 현행 판매임직원수 2인제한 유지</p> <p>④ 판매관련 준수 의무 위반시 처벌강화 등</p> <p><input type="checkbox"/> 그러나, '08.2월 국회논의 과정에서 여야합의를 통해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을 철회하고,</p> <p>○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한 관련 규제는 현행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p> <p>⇒ 이에 따라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을 철회하는 내용의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을 완료('08.3.28일)</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 채무유예서비스(DCDS)는 적은 금액만 부담하면 연체시 카드 대금을 보상해주는 좋은 제도 이므로 확대 실시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p>	<p>□ 현재 일부 신용카드사가 채무면제·유예서비스(DCDS)를 제공하고 있음</p> <p>○ 아울러, 동 서비스 취급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카드사 자체적으로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운영 중</p> <p>□ 이에 따라 DCDS와 같이 보험상품의 성격을 갖추고 있는 상품에 대해 보험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08.12.18일)</p> <p>○ 현재 동 개정안이 정무위 계류중으로 향후 국회 차원의 심도있는 논의 예상</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3) 휴면예금이 '08.3월에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 만큼 원소유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p>	<p>□ 정부는 은행연합회 등의 휴면계좌 조회시스템*을 통해 원권리자가 휴면예금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동시에</p> <p>* 간단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통신망으로 본인의 휴면계좌를 조회하도록 하는 시스템</p> <p>○ 「휴면계좌 이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07.11)하여 30만원 이하 휴면예금은 원권리자의 활동계좌로 자동이체하였고,</p> <p>○ 30만원 이상 휴면예금에 대해서도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이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하기 1개월 이전에 원권리자에게 문서로 통지토록 하였으며</p> <p>○ 또한 금융기관이 재단에 출연한 이후에도 원권리자의 지급 청구시 재단이 휴면예금을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4)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치에 등록된 사람들은 전체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만큼 금융채무불이행자들에 대한 대책을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 금융소외계층의 생존에 관한 문제는 사회복지제도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과 자활을 위해 소액서민금융재단 설립, 신용회복기금 설치, 금융소외자 종합자활지원 네트워크* 등을 포함한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08.7월)하여 추진중</li> <li>* 각 기관에 산재한 자활지원제도를 집중하여 지원내용·지원대상·자격요건을 분석하고 금융소외자의 현황을 종합 조회하여 개인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자활제도 도출</li> <li>○ 또한 기존의 신용회복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병행·추진해 나갈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캠프 배드뱅크 등 민간 자율프로그램과 법적 지원제도(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운영중</li> <li>- 아울러, 신복위는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에 병원비, 학자금 등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소액금융사업과 취업알선 등을 시행중</li> </ul> </li> </ul>



## 2. 舊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5) 국책금융기관의 경영 혁신 촉진</p> <p>각 국책금융기관에 대한예산 승인시 경영혁신을 감안하여 지출수준을 합리적으로 통제</p>	<p>□ 국책금융기관의 객관적 경영실적 평가 및 공정한 예·결산 심의를 위해 「국책금융기관 경영·예산 심의회」*를 설치·운영('06.11월)</p> <p>* 경영·예산·회계 등 각계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p> <p>○ 동 심의회를 통해 각 기관별 경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예산승인시 반영</p> <p>- 경영평가는 '07년에 파일럿테스트를 실시하였고('07.9월), '08년부터 정식평가 실시('08.5월)</p> <p>- '08, '09, '10년도 예산 승인시 심의회를 거쳐 예산 승인</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6) 국책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 방안 보완</p> <p>'07년 발표한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방안에 제시된 국책은행간 업무중복 해소나 상업금융기관과의 차별화 대책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08년 국정감사시 보고할 것</p>	<p>□ 시장마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산업은행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여('08.6) 민영화하고 새로운 정책금융기관인 한국개발펀드(KDF)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은행 민영화 및 한국개발펀드 설립방안' 발표</p> <p>* 동 방안에 따라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09.4)</p> <p>* KDF는 입법과정에서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 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09.10)</p> <p>□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금융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승계하여 중소기업 전문금융회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p> <p>○ 증시상황을 보아가며, 소수지분 매각을 추진</p> <p>○ 다만, 지배지분 매각은 중기대출의 상업화 진전, 여타 중소기업 정책금융 공급체계의 정착여부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후 추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7)금융전문인력 양성체계의 개선</p> <p>금융중심지 조성의 선결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금융관련 자격증 제도와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실무전문지식과 윤리 등에 대한 전문교육프로그램과 관련 자격증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실시현황 등을 '08년 국회 업무보고시 보고할 것</p>	<p>□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KAIST 금융대학원에 '08년 15억, '09년 10억을 출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AIST 금융대학원에 산학 연계교육을 강화하기위한 금융전문가 과정을 설치 (100명, '07년)</li> <li>○ 금융협회 연수원별로 중·장기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토록 유도하고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09년 4개 과정*, 4.1억 지원)</li> </ul> <p>* IB리더과정, 퇴직연금전문가과정, 자산운용·파생상품 전문가과정</p> <p>□ 금융투자분야 자격제도는 금융투자협회가 '09.12월 제도를 전면 개편하였고, '10.24일부터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투자협회 내에 전문인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자격 및 시험제도를 체계적 으로 운영중임</li> </ul> <p>* 금융투자분야 자격증은 민간자격증이며, 자격 제도는 자율규제사항으로서 금융투자 협회에서 규정하고 운영</p> <p>&lt;참고 : 자격제도 개편안의 개요&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증을 20종 → 7종(시험은 11종 → 6종)으로 대폭 통폐합함으로써 자격 제도를 단순 명료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였음</li> <li>○ 이번 개편안은 영업현실을 반영하되, 시험 내실화 및 보수교육 강화 등으로 투자자 보호는 강화하였음</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8)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 확대</p> <p>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및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공익재단을 통한 금융소외계층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그 실적을 '08년 국정감사시 보고할 것</p>	<p>□ 정부는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과 자활을 위해 소액서민금융재단 설립, 신용회복기금 설치, 금융소외자 종합자활지원 네트워크 등을 포함한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08.7월)하여 추진중</p> <p>○ 또한 기존의 신용회복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병행·추진해 나갈 계획</p> <p>-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캠프 배드뱅크 등 민간 자율프로그램과 법적 지원제도(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운영중</p> <p>- 아울러, 신복위는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에 병원비, 학자금 등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소액금융사업과 취업알선 등을 시행중</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9) 상호저축은행 부실 우려에 따른 대책 마련</p> <p>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높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에 대한 대책 마련</p>	<p><input type="checkbox"/> 저축은행, 여전사 및 상호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LTV(50%~60%), DTI(투기지역 6억원이상 APT, 40%) 규제를 도입하여 리스크 관리를 강화</p> <p><input type="checkbox"/> M&amp;A 통한 부실저축은행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p> <p>○ 부실저축은행 인수자에 대한 영업구역외 지역에 지점설치 허용 등(저축은행법 시행령개정, '08.9.30)</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0) 방카슈랑스 부작용에 대한 보완대책 강구</p> <p>방카슈랑스 확대시행이 예정된 상황에서 방카 슈랑스 도입 이후 대출 연계한 보험권유 행위 및 불완전판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보험 대리점의 보험 판매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방카슈랑스의 부작용 발생 현황을 파악한 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08년 국정감사시 보고할 것</p>	<p>□ 당초 정부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보험설계사 실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단계 방카슈랑스(개인보장성·자동차보험)를 예정대로 '08.4월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li> </ul> <p>※ 설계사 실업 및 불완전 판매 방지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은행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입증책임 전환</li> <li>② 해당은행과 대출 등 거래관계가 있는 이해상충자에 대한 판매제한</li> <li>③ 은행의 보험판매시 현행 판매임직원수 2인제한 유지</li> <li>④ 판매관련 준수 의무 위반시 처벌강화 등</li> </ul> <p>□ 그러나, '08.2월 국회논의 과정에서 여야합의를 통해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을 철회하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한 관련 규제는 현행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li> </ul>

2008년도 국정감사시 지적 및  
시정사항 처리결과

# 목 차

## 1. 금융위기 대책 관련

- (1)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전환되지 않도록 금융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 ..... 5
- (2) 최근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대책이 단기대책 중심으로 되어 있는 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 ..... 5
- (3)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정책당국간 조율되지 않은 정책이 일방적으로 발표됨으로써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관련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함 ..... 6
- (4) 은행의 유동성 부족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자금을 회수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각해 질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 자금난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6
- (5) 은행의 대출 거부 및 꺾기에 대해 검사해서 제재할 것 ..... 7
- (6) 펀드의 대량 환매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권사 및 자산운용회사의 유동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시급 ..... 7
- (7) 은행채가 편입된 펀드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 · 7
- (8) 은행에 대한 원화 유동성 공급 대책 수립이 필요 ..... 7
- (9)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 8



## 2. 은행에 대한 외화 유동성 공급 정책 관련

- (1) 은행 스스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임금삭감 등을 비롯하여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당국은 mou체결 등을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 9
- (2) 국가간 통화스왑계약 체결 규모를 증액시킬 필요가 있음 ..... 9
- (3) 공공기관 평가시 중소기업은행에의 예치금 규모를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10

## 3. (KIKO 피해 관련) 키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10

## 4. (펀드 및 파생금융상품관련) 불완전 판매에 대한 대책을 마련, 파생상품의 위험도를 표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10

## 5. 대부업체에 대해 금융총괄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을 강화 ..... 11

## 6. 대부업체 관리에 대한 권한 및 업무를 관계부서와 조정할 것 12

## 7. 직불카드·체크카드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 12

## 8. 전자금융 보안 인프라에 대해 점검할 것 ..... 13

## 9. 금융위원회의 관리 감독권을 증권예탁결제원 정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13

## 10. KB 금융 지주의 김중희 상임이사 임명과 관련하여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위반여부에 대한 법제처의 법적 해석을 받을 것 ..... 14

## 11. (신용회복기금 관련) 안정적 재원조달방안과 법적 근거를 확보할 것, ‘금융기관 업무 협의회’의 성과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 할 것 ..... 14

12. 금융공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과 예산낭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15
13. 보험모집조직의 교육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 15
14. 주택금융공사가 CP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 16
15. 외환 씨티 SC제일은행 은행장 및 임원들 급여에 대해 금융  
위원장이 받아서 제출 하겠다고 했으나 시중은행이 거부하고  
있다는 핑계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바, 금융위원장이 답변  
한대로 조속하게 해당 자료를 각 은행에 받아 제출하기  
바람 ..... 16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b>1 금융위기 대책 관련</b>  (1)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전환되지 않도록 금융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	<input type="checkbox"/>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발표·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동성 신속 지원을 위한 Fast Track 프로그램 실시('08.10)</li> <li>○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08.12)</li> <li>○ 기존보증 전액 만기연장, 보증지원 기준 완화 등 신용보증 확대방안 발표('09.2.12)</li> <li>○ 20조원의 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 발표('09.2.25)</li> <li>○ 구조조정기금 설치 등 구조조정을 위한 추진방향과 전략마련('09.3.13)</li> <li>○ 사전채무조정제도 시행('09.4.8)</li> <li>○ 관계기관 합동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방안 마련('09.4.9)</li> <li>○ 금융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금산법 개정('09.5.27) 및 40조원의 구조조정기금 설치를 위한 자산관리공사법 개정('09.5.13)</li> <li>○ 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발표('09.6.23)</li> </ul>
(2) 최근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대책이 단기대책 중심으로 되어 있는 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input type="checkbox"/> 금융위는 국제금융위기에 직면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위기 관리대책을 추진  <input type="checkbox"/> 이와 함께 위기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금융안정기금('09.5.27) 및 구조조정기금('09.5.13)을 설치</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정책당국간 조율되지 않은 정책이 일방적으로 발표됨으로써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관련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함	<p><input type="checkbox"/>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는 경제금융대책회의, 금융업무협의회 등을 통해 긴밀하게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책을 조율</p> <p><input type="checkbox"/> 향후에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시장 상황에 충실히 대응해 나가겠음</p>
(4) 은행의 유동성 부족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자금을 회수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각해 질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 자금난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p><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은행의 신용위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비율을 85%수준에서 95%로 확대하였음('10년부터 점진적으로 정상화)</p> <p>※ 금융위기시 시행한 주요 중소기업금융 지원조치</p> <p>① 유동성 신속지원을 위한 Fast Track 프로그램 실시('08.10)</p> <p>* '10.6월말까지 총 27.6조원 지원</p> <p>② 매출액 감소 등을 반영하여 보증 심사기준 완화, 보증절차 개선 등 보증 운영 비상조치 실시('09.1)</p> <p>③ 기존보증 전액 만기연장, 보증지원 기준 완화, 핵심분야 보증비율·보증 한도 특례적용 등 신용보증 확대방안 발표('09.2)</p> <p>* '09.8월말까지 신규보증 28.6조원, 만기 연장 20조원 등 총 48.6조원의 보증 지원</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④ 은행권 자율결의로 중기대출 전액 만기연장 시행 유도(09.2월)</p> <p>⑤ 국책은행(산은·기은) 중기대출 확대*</p> <p>* ('08년 실적) 39.1조원 → ('09년 실적) 48조원</p>
(5) 은행의 대출 거부 및 꺾기에 대해 검사해서 제재할 것	<p>□ '09.4.28~5.22 기간중 16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구속성 행위(일명 꺾기) 실태에 대한 현장 검사 실시</p> <p>○ 16개은행 687개 점포에서 총 2231건 430억원의 불건전 구속성 행위 적발</p> <p>○ 위규 행위자 768명에 대하여 제재 조치(견책이상 42명, 주의 726명)</p>
(6) 펀드의 대량 환매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권사 및 자산운용회사의 유동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시급	□ 자산운용사의 유동성 확보가 용이하도록 증권금융을 통해 한은 RP 지원('08.10)
(7) 은행채가 편입된 펀드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세제적격 장기회사채펀드 의무편입대상 자산의 범위에 은행채 카드채를 추가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반영('09.2)
(8) 은행에 대한 원화 유동성 공급 대책 수립이 필요	<p>□ 은행 원화유동성 비율제도 개선(08.10월 말)</p> <p>(비율규제 적용대상 유동성 자산·부채를 '3개월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완화)</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여 8개 금융기관이 발행한 4조원상당의 신종자본증권(3.5조원) 및 후순위채권(0.5조원) 매입('09.3월말)
(9)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input type="checkbox"/> 금융위, 재정부, 한은 등으로 구성된 「합동대책반」을 구성('08.9.16)하여 범정부적으로 대응 <input type="checkbox"/> '08.9.22~12.31간 증권선물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 수수료를 면제하여 증권사와 투자자의 거래비용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1.4일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수수료 체계개편 및 인하</li> </ul> <input type="checkbox"/> '08.10.1일부터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하여 공매도가 시장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9.6.1일부터 비금융주에 대해 공매도 제한을 해지</li> </ul> <input type="checkbox"/> 시장불안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처벌 <input type="checkbox"/> 08.10, 장기주식형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 <input type="checkbox"/> 증권유관기관(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공동으로 증시안정펀드(총 5150억원 규모)를 조성·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11월~'09.3월간 매월 1/5 (1,030억원) 순차적으로 투입</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은행에 대한 외화 유동성 공급 정책 관련	
(1) 은행 스스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임금삭감 등을 비롯하여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당국은 MOU체결 등을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p><input type="checkbox"/> '08.11월 은행별로 실물경제 지원과 경영 합리화 등의 내용으로 MOU를 체결</p> <p>○ MOU에 임직원의 연봉 및 스톡 옵션 등 보수체계의 합리적 조정, 보상체계의 장기화, 증자 및 적정 배당수준 유지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 등의 자구노력을 포함</p> <p><input type="checkbox"/> MOU 체결 이후, 정기적으로 MOU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p> <p>○ 점검결과를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고, 이행실적 부진은행에 대해서는 주의촉구 조치 등 시행</p>
(2) 국가간 통화스왑계약 체결 규모를 증액시킬 필요가 있음	<p><input type="checkbox"/> '08.12.12 한-일 통화스왑 200억\$로 증액('10.4.30일 증액 종료)</p> <p><input type="checkbox"/> '08.12.12 한-중 통화스왑(1,800억 위안/38조원) 체결('11.12.11일 종료 예정)</p> <p><input type="checkbox"/> '09.2.4, '09.6.26, 한-미 통화스왑 만기 연장('10.2.1일 종료)</p> <p><input type="checkbox"/> '10.6.22 한-일 통화스왑 만기 연장('13.7.3일 종료 예정)</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 공공기관 평가시 중소기업은행에의 예 치금 규모를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input type="checkbox"/>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노력*을 종합적으로 경영평가시 반영  * 공공기관 평가시 중소기업 제품구매 실적, 온누리상품권 구매실적 등 반영
<b>3. KIKO(키코) 피해 관련</b> - 키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유동성 특별지원 프로그램 (Fast Track)을 통해 KIKO 피해기업에 대해 대출전환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 지속  <input type="checkbox"/> 장외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장외 파생시장 감독 선진화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08.12)  ※ 투자자 보호 관련 사항 등 법령 개정사항은 '09.1월 법 개정 등을 통해 반영 완료
<b>4. 펀드 및 파생금융상품관련</b> - 불완전판매에 대한 대책을 마련 - 파생금융상품의 위험도를 표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input type="checkbox"/> 미스터리쇼핑, 판매인력 등급제 도입 등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강화('09.1월)  <input type="checkbox"/> 파생상품 위험도 표시관련 고위험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손실범위별로 경고제도 실시 (노란색→주황색→ 적색경고문)('09.2월)  <input type="checkbox"/> 파생상품시장 감독체계 개선 방안 마련 ('08.12월)  · 시장모니터링 강화: 취합정보 세분화 (거래상대방, 거래목적등), 파생거래 정보DB 구축('09.12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자 보호 강화: 일반투자자의 헤지거래기준·투자권유준칙 마련, 파생상품업무책임자 지정, 상장법인 등 파생상품 투자시 일반투자자로 분류 등('09.2월)</li> <li>· 금융사 내부통제강화 강화 : 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 업무책임자 지정 및 금융위 보고('09.2월), 장기성과 등을 감안하도록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개선 등('10.1월)</li> <li>·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도 도입 : 금융투자협회에 사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규 파생상품에 대한 설명자료의 충실성, 상품구조, 타당성 등을 심의('10.6월)</li> </ul>
<p>5. 대부업체에 대해 금융총괄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을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업의 관리·감독 및 대부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대부업법을 개정·시행('09.4.22)하였음</li> <li>○ 대부중개업의 별도 등록, 대부업자 등의 교육의무, 상호에 관한 규제, 채무관련 서류 열람제공 및 증명서 발급 의무, 변제능력 증빙서류 징구의무, 허위·과장 광고 규제 신설 등 대부업 이용자의 보호를 강화</li> <li>□ 대부업법 개정·시행('10.4.26)을 통해 대부업체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영업방식의 투명성 제고</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정사업장 보유 의무화, 범죄조직 관련 처벌받은 자 등 종사자 결격요건 확대, 제3자 담보제공시 확인 의무 신설 등</li> </ul>
6. 대부업체 관리에 대한 권한 및 업무를 관계부서와 조정할 것	<p><input type="checkbox"/> 현재 매분기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관계 행정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운영해 나가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9.1.21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관계 행정기관간 필요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대부업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li> </ul> <p>* 대부업정책협의회는 06.12월부터 운영</p>
7. 직불카드·체크카드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p><input type="checkbox"/> 직불·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하여 직불·체크카드 결제범위를 확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시행, '09.6.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前) 직불·체크카드 결제 가능 범위가 재화·용역의 공급 대가로 한정(신용카드 결제 가능 범위와 동일)</li> <li>○ (개정後) 직불·체크·신용카드 결제 범위 규정을 네거티브 형태로 변경하는 한편, 신용카드와 달리 직불·체크카드의 경우 대출 상환, 주식·펀드 투자 등도 결제가 가능토록 결제 범위를 확대</li> </ul> <p>* 신용카드의 경우 대출 상환, 주식·펀드 투자에 대해 결제 금지</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input type="checkbox"/> 아울러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와 직불·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을 차등화(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 '10.1.1)</p> <p>○ (개정前) 신용카드와 직불·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동일(20%)</p> <p>○ (개정後) 직불·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을 25%로 상향조정</p>
8. 전자금융 보안 인프라에 대해 점검할 것	<p><input type="checkbox"/> '09년중 : 국민·신한은행 등 금융회사의 일회용비밀번호(OTP) 사용 등 전자금융보안인프라 점검(은행(21)·금융투자(7)·보험(7)·카드(5)·기타(2))</p> <p>* 점검결과 : 금융회사가 OTP 등 현행 보안매체 뿐만 아니라 보다 안전한 새로운 보안매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전자금융서비스의 안전성을 강화토록 지도</p>
9.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권을 증권예탁결제원 정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input type="checkbox"/> 현재 증권예탁결제원의 관리·감독권은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동 법에 근거하여 예탁원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철저히 수행하겠음</p> <p>※ (참조) 현행 자본시장법은 예탁결제원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규정하고 있음</p> <p>* 제299조 : 정관 변경시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함</p> <p>* 제305조 : 예탁업무규정과 결제업무규정 제정·변경·폐지시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외 업무 규정의 제정·변경·폐지시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함</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06조: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함</li> <li>* 제307조: 금융위원회는 예탁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계약의 인계명령, 위법행위의 시정명령·중지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li> </ul>
<p>10. KB금융지주의 김종희 상임이사 임명과 관련하여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위반여부에 대한 법제처의 법적 해석을 받을 것</p>	<p><input type="checkbox"/> '08.10.22 공직자윤리법 주무부처인 행안부를 거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12.12 법제처 유권해석을 행안부를 경유하여 접수</li> </ul> <p><input type="checkbox"/> 유권해석 요지: 공직자윤리위의 승인 절차 등을 거칠 필요 없음</p> <p>(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제한제도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엄격히 해석해야 함</li> <li>○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영리업체가 고시되어 있지 않으면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승인 절차 등을 거칠 필요 없음</li> <li>○ 신설 등의 이유로 고사에서 누락된 영리업체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li> </ul>
<p>11. 신용회복기금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적 재원조달방안과 법적 근거를 확보할 것</li> <li>- '금융기관 업무 협의회'의 성과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li> </ul>	<p><input type="checkbox"/>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중 금융회사 배분금 4,995억원을 출자받음으로써 ('09.1월) 신용회복기금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였고,</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회사 법인세 이연 조치를 통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여 1,942억원 추가 재원 확보('09.5월)</li> <li>□ 자산관리공사가 신용회복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산관리공시법 시행령도 개정('08.12월)</li> <li>□ 법적근거 마련 이전에도 신용회복기금의 투명성,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시행중</li> <li>□ '금융기관 업무협의회'를 통해 금융회사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기금을 운용</li> </ul> <p>* 연체채권 매입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금융회사의 적극 참여를 유도('08.12월 1천만원 이하 → '09.4월 3천만원 이하 연체채권 매입으로 확대)</p>
12. 금융공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과 예산낭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위원회는 「'09년도 금융공공기관 예산 지침」을 통해</li> <li>○ 산은·수은·기은·예보·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의 '09년도 임원 보수를 평균 10% 내외로 감액하고, 총인건비를 동결</li> </ul>
13. 보험모집조직의 교육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 등이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모집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제85조의2)을 마련 국회에 제출('08.12.18), 국회의결('10.6.29)</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또한 「10년도 금융공공기관 예산 지침」에 따라 금융공공기관의 총인건비를 전년대비 5% 삭감 편성토록 하고, 대졸 초임도 20%내외 삭감</p> <p>○ 향후 시행령 등 하이 법령 개정시 설계사에 대한 보수교육 제도가 효과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반영할 계획</p>
<p>14. 주택금융공사가 CP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p>	<p>□ 주택금융공사법 개정(10.1.25 시행)으로 CP발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2월부터 발행 시작(10.5.27까지 누계 7,800억원)</p>
<p>15. 외환 씨티 SC제일은행 은행장 및 임원들 급여에 대해 금융위원장이 받아서 제출 하겠다고 했으나, 시중은행이 거부하고 있다는 핑계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바, 금융위원장이 답변한대로 조속하게 해당 자료를 각 은행에 받아 제출하기 바람</p>	<p>□ 외환, 씨티, SC제일은행의 경우 은행장 및 임원 급여에 대해 동결 또는 10% 자율적으로 삭감한 바 있으나, 급여 금액 수준의 공개여부의 경우, 이의 제출을 요구하기는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p>

# 2009년도 국정감사시 지적 및 시정사항 처리결과

# 목 차

## 1. 금융위기 대응 및 출구전략 관련

- 1) 외환관리에 있어 예대율 관리, 통화스왑등에 대한 실질적 관리를 통해 건전성 감독방안을 마련할 것 ..... 7
- 2) 가계부채 증가와 미국 등 세계경제의 침체(더블딥) 우려로 인한 제2의 금융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 ..... 7
- 3) 경제위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차원에서 이루어진 각종 조치(기금, 펀드 등)의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내실 있는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 ..... 8
- 4) 출구전략을 시행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 시행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 ..... 8

## 2. 미소금융 및 금융소외자 지원 관련

- 1) 미소금융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있어 관치금융 논란이 없도록 조치할 것 ..... 9
- 2) 미소금융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그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 9
- 3) 미소금융재단 이사회가 방만경영을 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 10
- 4) 미소금융이 지속가능한 서민금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 인력의 전문 능력제고 등 운영의 내실화 방안을 강구할 것 ..... 10
- 5) 미소금융이 기존의 서민금융(희망홀씨 대출 등)과 중복, 상충됨이 없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10
- 6) 서민에 대한 대출시 정부의 보증을 통한 신용을 보장하는 방안과 실직·폐업 상태에 있는 서민에 대한 긴급 소액 생계비 대출이 가능하도록 그 대책을 강구할 것 ..... 11



### 3. 녹색금융추진관련

- 1) 녹색금융의 정의와 지원기준을 시급히 마련하여 과거 벤처 거품과 같은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 운영에 내실을 기할 것 ..... 11

### 4. 우리은행 파생상품 투자손실관련

- 1)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의 관리, 감독상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MOU 점검방식의 개선 등의 대책을 수립할 것 ..... 12

### 5. 한국은행법 개정관련

- 1) 지난 9월 체결한 정보공유 MOU를 충실히 이행하고, 한국은행에 대한 단독 검사권부여 등이 우리 금융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 ..... 12

### 6. 신용카드 관련

- 1)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관련하여 원가공개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영세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인하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 13
- 2) 현금서비스 취급 수수료 폐지 등 현금서비스 이자율을 인하하는 한편, 체크카드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13
- 3) 포인트·마일리지형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 15

### 7. 주택담보대출관련

- 1) 주택담보대출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 및 자산 버블을 방지하기 위해 DTI등 규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15

8. 주택청약저축 가입자의 폭증의 배경에는 해당 은행들의 과다 경쟁과 비이성적인 영업 행태가 지적되고 있는 바, 특히 기업 은행 등 금융 공기업이 다단계 업체처럼 강제 할당식 꺾기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할 것 ..... 16
9.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설립 이후 지원실적이 미흡하므로 실적 개선에 노력할 것 ..... 16
10. 중소기업지원관련
  - 1) 향후 중소기업 대출 및 보증 축소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대책(신·기보 적정 보증 규모 확보 등)의 마련과 함께 한계 중소기업의 퇴출을 포함한 구조조정 노력도 지속 추진할 것 ..... 18
  - 2) 보증부대출의 고금리 문제 및 여신거래약정서에 금리를 미기재하는 등의 문제를 T/F 구성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18
  - 3) 중견기업의 육성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 19
11. 현행 대출금리의 산정기준인“CD+가산금리”체계에 대하여 CD금리가 자의적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고 가산금리책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조사하고, 금리결정 구조에 대한 개선책 및 금리 인하 방안을 강구할 것 ..... 20
12. 저축은행의 고금리 문제 해소와 저축은행계정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 ..... 20
13. 해운산업의 구조조정과 이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 21

14.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감독체계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22

15. 자산관리공사의 희망모아, 시중은행이 설립한 민간배드뱅크 등의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함께 면책기록의 보존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 정도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23

## 16. 금융소비자 보호관련

1)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 교육을 강화(정책 수립)하고, 금융민원의 원활한 해소 등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등을 비롯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 ..... 23

17. 금융중심지 추진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산지역 등에 대해 금융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할 것 ..... 24

18. 금융전문인력 양성 관련 자격증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24

## 19. 펀드 관련

1) 대리인에 의한 펀드 개설시 적합성 원칙과 투자자 편의 문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25

2) 펀드 판매 수수료 및 펀드 운용보수 인하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26

3) 계열사 소속 자산운용사가 자기계열 회사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를 출시하고 있는 것은 이해상충방지 측면에서 문제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26

4) 펀드 판매회사가 높은 판매보수를 수취하고 있어 장기투자자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지속되므로, 숨겨진 비용인 판매보수 폐지 및 판매수수료와의 이중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27

- 5)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위한 미스터리쇼핑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바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개선노력을 기울일 것. .... 28
20. 은행의 DCDS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를 법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할 것 ..... 28
21. 은행연합회를 공적 자율규제기능을 수행하는 법적 단체로 은행 법상에 규정하되, 그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배 구조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 ..... 29
22. 금융보안체계 구축 관련
- 1) 인터넷공간에서 해킹 등에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금융위원회 보안업무 관련 조직 및 인력 확충방안을 강구할 것 .... 30
23. 신용평가사의 자회사가 신용평가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업체로 오인될 활동 및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30
24.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협회의 회원에 대한 연수 교육업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현재 연수교육 업무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보험대리점협회에서도 회원에 대한 연수 및 교육업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31
25. 금융위원회 중간 간부급 공무원들의 해당 부서 평균 근속기간이 짧아 정책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잦은 인사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일 것
- 1) 중간 간부급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일 것 ..... 31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금융위기 대응 및 출구전략 관련	
1-1) 외환관리에 있어 예대율 관리, 통화스왑 등에 대한 실질적 관리를 통해 건전성 감독방안을 마련할 것	<p><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고 및 감독강화 방안' 시행('10.1.1일)</p> <p>* 외화유동성비율 산정시 유동화가중치 적용 및 증장기 재원조달비율 규제 강화, 국내은행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 신설, 외환파생상품 거래 리스크 관리 신설</p> <p><input type="checkbox"/> '2차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고방안' 시행('10.8.1일)</p> <p>* 외화유동성비율 일일 관리 및 증장기 외화 자금관리 추가 강화, 외은지점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 신설,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 추가 강화</p>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각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방안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p>
1-2) 가계부채 증가와 미국 등 세계 경제의 침체(더블딥) 우려로 인한 제2의 금융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노력* 강화</p> <p>* 금융회사 외화 건전성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 방안 마련, 글로벌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적극 참여 등</p>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금융시장의 잠재적 취약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선제적 대응</p> <p>○ 또한, G20, FSB 등 국제적 논의와 연계 하에 국내 금융 건전성 규제체제 정비 추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3) 경제위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진 각종 조치(기금, 펀드등)의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내실있는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p>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금융위기 당시 도입된 비상조치*의 내실 있는 운용과 점검 추진</p> <p>* 은행자본확충펀드, 채권시장안정펀드, 구조조정 기금, 중소기업 보증만기 연장, 은행 외화채무 지급보증 등</p> <p>○ 아울러 경제·금융 여건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정상화 추진</p> <p>* 은행 외화채무지급보증 종료('09.12)</p> <p>* 중소기업신용보증 확대조치 정상화('10.7)</p>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아직 불안요인이 잔존하는 만큼 비상조치를 경제여건과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단계적으로 정상화 추진</p>
<p>1-4) 출구전략을 시행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 시행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p>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비상조치 환원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추진</p> <p>○ 중소기업 활성화·설비투자 등 민간의 자생적 경기 회복기반 마련</p> <p>○ 기업구조조정추진 등 금융불안에 선제적으로 추진</p>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경기회복과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미소금융 및 금융소외자 지원 관련	
2-1) 미소금융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있어 관치금융 논란이 없도록 조치할 것	<p>&lt;처리결과&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은행의 기부금은 자체 설립한 미소금융재단에 전액 재출연되어 각 기업·은행재단이 자율적으로 미소금융 사업을 수행중</li> <li>○ '10.9.28 현재, 75개 기업·은행권 재단 및 지역지점 설립이 완료</li> <li>○ 기업·은행이 미소금융사업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함으로써 해당 기업·은행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li> </ul>
2-2) 미소금융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그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p>&lt;향후 추진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년중 미소금융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그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령정비를 추진 중</li> <li>○ 휴면예금법 개정안 국회심의 ('10.9.14,정무위 상정)</li> <li>□ 또한 미소금융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선정위원회 (7인)」를 외부전문가(5인) 중심으로 기 재편하고 사업자 선정기준도 이사회에서 사전결정</li> <li>○ 1차('09.12)·2차('10.4) 지역법인 대표자 공모 과정에 기 적용했고 앞으로도 선정 기준·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3) 미소금융재단 이사회가 방만 경영을 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미소금융재단의 감독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는 철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음 (금융위원회는 당연직 이사로 미소금융재단이사회에 참석)</p> <p>* '10.2월, 6월중 감사원의 미소재단 감사 실시</p>
2-4) 미소금융이 지속가능한 서민금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인력의 전문 능력 제고 등 운영의 내실화 방안을 강구할 것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운영인력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운영인력의 전문능력 제고 등 운영의 내실화방안을 시행중</p> <p>○ 예) 미소희망봉사단을 통한 전문인력 재능기부, 현대차미소학습원 운영, 금융연수원과 공동으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추진 등</p>
2-5) 미소금융이 기존의 서민금융 (희망홀씨 대출 등)과 중복 상충됨이 없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미소금융과 희망홀씨대출은 대출자금의 용도가 상이하어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p> <p>○ 미소금융 : 창업자금·운영자금 등 희망홀씨대출 : 생계비 등 일반대출</p> <p><input type="checkbox"/> 미소금융지점 방문자 중 미소금융의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분들에게 희망홀씨대출 등 기타 서민금융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를 병행 중</p> <p>○ 다만, 과도한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를 연계 관리할 예정</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6) 서민에 대한 대출시 정부의 보증을 통한 신용을 보장하는 방안과 실직·폐업 상태에 있는 서민에 대한 긴급 소액 생계비 대출이 가능하도록 그 대책을 강구할 것</p>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보증부 서민대출인 ‘햇살론’을 출시하여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생계자금, 사업자금을 지원(‘10.7.~)</p> <p><input type="checkbox"/>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대출 보증을 통해 저소득층·저신용층 서민을 위한 대출(햇살론)을 확대</p> <p><input type="checkbox"/> 실직·폐업 상태에 있는 서민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긴급 소액 생계비 대출을 실시중</p>
<p>3. 녹색금융추진관련</p>	
<p>3-1) 녹색금융의 정의와 지원기준을 시급히 마련하여 과거 벤처 거품과 같은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 운영에 내실을 기할 것</p>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정책금융기관들이 인증대상 녹색기술·녹색사업(지경부 고시)을 바탕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녹색금융 지원을 하도록 조치</p> <p><input type="checkbox"/> 또한, 금년 4월부터 녹색인증제를 시행하여, 세제혜택(민간투자자)을 받는 민간금융회사의 녹색금융상품 지원 대상을 녹색인증사업 등으로 하고,</p> <p>○ 은행의 녹색금융 및 녹색펀드의 운용 및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업무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은행 녹색금융 운용 모범기준」, 「녹색펀드 판매·운용 모범기준」 마련</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 우리은행 파생상품 투자손실 관련	
4-1)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MOU 점검방식의 개선 등의 대책을 수립할 것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예금보험공사는 MOU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MOU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1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OU 체결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방식을 개선하여 예방기능을 강화</li> <li>○ MOU 재무목표 부여방식과 재무지표 산정방식 개선</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예보가 MOU 이행실적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적절한 사후 조치 등을 취하도록 관리 감독하겠음</p>
5. 한국은행법 개정관련	
5-1) 지난 9월 체결한 정보공유 MOU를 충실히 이행하고, 한국은행에 대한 단독 검사권부여 등이 우리 금융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정보공유 MOU에 따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보 등 각 기관은 관련정보를 원활히 공유하고 있음</p>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5개 기관 부기관장으로 구성된 정보공유 협회 등을 통해서 MOU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개선하겠음</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b>6. 신용카드 관련</b></p> <p>6-1)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관련하여 원가공개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영세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인하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p>	<p><b>&lt;처리결과&gt;</b></p> <p>① (재래시장 가맹점) 연간 매출 9,600만원 미만인 재래시장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상한을 20~22%에서 16~18%로 인하</p> <p>*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재래시장 (약 1,550개)</p> <p>○ 다만, 유흥주점, 무도장, 성인오락실, 귀금속점 등 영세업종으로 보기 어려운 가맹점은 제외(중소 가맹점의 경우도 동일하게 제외)</p> <p>※ (참고) 현재 서울시내 3大 대형마트 신용카드수수료율 : 1.6~1.9%</p> <p>② (중소 가맹점) 재래시장 가맹점 이외에 연간 매출 9,600만원 미만인 가맹점의 신용카드수수료율 상한을 3.3~3.6%에서 2.0~2.15%로 인하</p> <p>○ 신용카드사별 중소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이 2.0~2.15%로 대폭 인하됨에 따라 기존에 2.0~2.3%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던 영세가맹점 (간이과세자)도 일부 인하</p> <p>※ (참고) 현재 서울시내 3大 대형백화점 신용카드수수료율 : 2.0~2.4%</p>
<p>6-2) 현금서비스 취급 수수료 폐지 등 현금서비스 이자율을 인하하는 한편, 체크카드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p>	<p><b>&lt;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gt;</b></p> <p>□ (현금서비스 이자율) '10년 9월기준 카드사는 취급수수료 폐지(8개사) 또는 일부 인하 등의 방법으로 현금서비스 금리를 인하</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카드사별 인하폭(취급수수료 포함)은 0.3%p~4.06%p 수준이며, 평균 현금서비스 금리도 '09년 이후 완만한 하락세 지속</p> <p style="margin-left: 40px;">* 26.4%( '09.1Q)→25.9%( '09.2Q) → 25.7%( '09.3Q) →25.7%( '09.4Q)→24.6%( '10.1Q)</p> <p>○ '10년 3/4분기 중 취급수수료를 폐지하지 않고 일부 인하한 카드사 중</p> <p style="margin-left: 40px;">- 일부 카드사가 추가로 취급수수료 폐지할 예정(10개사)</p> <p>⇒ 서민들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하여 취급수수료 폐지 및 현금서비스 금리 인하 지속 유도</p> <p>□ (체크카드 수수료율) 다음과 같이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既 마련</p> <p>○ 기존에는 직불·체크카드 결제 가능 범위를 재화·용역의 공급 대가로 한정(신용카드 결제 가능 범위와 동일)하고 있었으나 결제 가능 범위 규정을 네거티브 형태로 변경하는 한편 신용카드와 달리 직불·체크카드의 경우 대출 상환, 주식·펀드 투자 등도 결제가 가능토록 결제 범위를 확대</p> <p style="margin-left: 40px;">* 신용카드의 경우 대출 상환, 주식·펀드 투자에 대해 결제 금지</p> <p>② 2010년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율 차별화*(조세특례제한법 개정, '10.1.1)</p> <p style="margin-left: 40px;">* 신용카드 : 20%, 체크카드 : 25%</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이에 따라 향후 소비자의 체크카드 사용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카드사의 체크카드 수수료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유도</p> <p>* 체크카드/신용카드 사용 비중</p> <p>· 2.9%(’05)→6.0%(’07)→9.9%(’09)→10.8%(’10.1Q)</p>
6-3) 포인트·마일리지형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p>&lt; 향후 추진계획 &gt;</p> <p><input type="checkbox"/> 최근 포인트·마일리지의 사용처가 다양화되고 그 이용이 증가추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p> <p>○ 금융당국은 거래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포인트 등 발행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음</p> <p><input type="checkbox"/> 또한, 포인트·마일리지형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성남 의원)이 발의되어 있는 바</p> <p>○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나갈 계획</p>
<b>7. 주택담보대출관련</b>	
7-1) 주택담보대출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 및 자산 버블을 방지하기 위해 DTI등 규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각 개별법에 근거한 감독규정으로 규제중</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주택 및 주택금융시장 동향, 금융회사 건전성 추이 등 관련동향을 보아가며 금융규제 합리화 방안 모색</p>
<p>8. 주택청약저축 가입자의 폭증의 배경에는 해당 은행들의 과다 경쟁과 비이성적인 영업 행태가 지적되고 있는 바, 특히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이 다단계 업체처럼 강제 할당식 꺾기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할 것</p>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2010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실적을 영업점 경영실적평가 기준(KPI)에서 제외('10. 1. 11) 하여 영업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과당 유치 유인 구조를 개선</p> <p><input type="checkbox"/> 불완전 판매 방지 직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p>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캠페인 등 과당 경쟁을 지양하고 정상적인 실수요자 중심의 영업 추진</p>
<p>9.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설립 이후 지원 실적이 미흡하므로 실적 개선에 노력할 것</p>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08년 9월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되어 2년째 운영 중</p> <p><input type="checkbox"/> 그동안 지원센터는 금융기관의 질의·건의사항 처리와 애로사항 해소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금융환경개선에 노력</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해왔으며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진입,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중심지 정책 홍보를 위한 해외 IR('09.11월, '10.5월)을 실시</li> <li>- 서울시-맥쿼리그룹간 한국내 사업 확대를 위한 MOU('09.11월) 및 부산시-칼리온 은행간 선박금융 협력강화 MOU 체결지원('09.11월)</li> <li>- 부산시-佛 Orbeo社간 탄소배출권시장 협력을 위한 MOU 체결지원('10.5월)</li> <li>○ 또한, 금융감독법규 영문화('09.12월), 금융거래 가이드북 발간('10.1월), 금융회사 외국인 임원의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10.4월) 등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li> </ul> <p><b>&lt;향후 추진계획&gt;</b></p> <p>□ 앞으로도 국내사의 해외진출과 외국사의 국내진입을 위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0. 중소기업지원관련	
10-1) 향후 중소기업 대출 및 보증 축소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대책(신·기보 적정 보증 규모 확보 등)의 마련과 함께 한계 중소기업의 퇴출을 포함한 구조조정 노력도 지속 추진할 것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한시적 확대지원조치의 정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 '10년 업무계획에 반영</p> <p>○ '10년중에도 위기이전인 '07~'08년 보다 확대 보증지원</p> <p>* 신·기보 보증공급(조원): ('07) 40.6 → ('08) 41.6 → ('09) 55.4 → ('10) 52.6</p> <p><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구조조정 지연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조치도 병행 추진 ⇒ '10년 업무 계획에 반영</p> <p>○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선별적·제한적으로 보증 만기연장</p> <p>○ 비효율적 부문(한계기업 고액·장기보증기업 등)에 대해서는 가산보증료 부과 등을 통해 보증감축 및 구조조정 유도</p>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위기대응조치의 단계적 정상화 추진 상황과 중기대출·보증 및 중소기업 자금사정을 중점 모니터링하여 연착륙을 유도하는 한편 한계기업 등의 구조조정 촉진</p>
10-2) 보증부대출의 고금리 문제 및 여신거래약정서에 금리를 미기재하는 등의 문제를 T/F 구성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보증부대출의 고금리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4.21일 “보증부 대출 금리부과체계 개선 방안” 발표</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주요내용) ① 보증부분에 신용가산금리 부과 금지, ② 보증부 대출 금리 보증기관에 통보, ③ 보증부 대출 금리관련 은행 내부통제 강화</p>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보증부 대출 금리부과체계 개선 방안 시행 및 사후 점검</p> <p>○ 또한 여신거래약정서 주요사항 기재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p>
10-3) 중견기업의 육성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정부는 금융위·기재부·지경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중견기업 육성 방안 발표(3.18)</p> <p>* (주요내용) ①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 정의 및 지원 범위 규정(지경부), ② 중견기업 조세 부담 완화(기재부), ③ 중견기업 금융 부담 완화(금융위)</p> <p>○ 금융위는 정책금융공사를 통한 중견기업 자금 공급, 신기보 보증 종료 부담완화 등을 추진할 예정</p> <p><input type="checkbox"/> 산업발전법 개정 즉시 중견기업 지원 정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 완료</p> <p>* 정책금융공사 : 자금공급 기준 마련 * 신·기보 : 보증 종료 부담 기준 마련</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산업발전법 개정과 동시에 중견기업 지원 개시</p>
<p>11. 현행 대출금리의 산정기준인 "CD+가산금리" 체계에 대하여 CD 금리가 자의적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고 가산금리 책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조사하고 금리결정 구조에 대한 개선책 및 금리 인하 방안을 강구할 것</p>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은행연합회가 '10.2월부터 새로운 대출 기준금리인 코픽스를 고시하고, 시중 은행이 이를 이용한 대출상품을 출시</p> <p>○ 은행 자금조달비용을 적절히 반영하는 코픽스 연동 대출 도입으로 고가산금리 문제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p> <p>※ CD연동 대출의 코픽스 전환 허용으로 기존 차주의 고가산금리 문제도 상당부분 개선될 전망</p> <p><input type="checkbox"/> 다만, 금리는 시장 자율로 결정할 사항이나, 코픽스 도입 전후 신규 주택담보 대출금리*는 소폭 하락</p> <p>* (1월) 5.88 (3월) 5.47 (5월) 4.78 (7월) 4.70</p>
<p>12. 저축은행의 고금리 문제 해소와 저축은행계정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p>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저축은행의 고금리 서민대출 문제 해소를 위해</p> <p>○ '10.4.7 저축은행의 보증부 서민대출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p> <p>○ 이러한 보증을 통해 서민대출에 따른 리스크를 축소함으로써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유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저축은행의 추가 부실화 방지를 위해 감독 및 검사 강화방안*을 포함한 저축은행법 개정안 국회 의결('10.3.22 공포, '10.9.23 시행)</p> <p>* 대주주에 대한 정기적 적격성 심사제도 (Dynamic fit &amp; proper test) 실시 등 소유·경영 지배구조 개선, 계열저축은행에 대한 대출한도 설정 등 자산운용 규제 강화 등</p> <p>○ 아울러, '10.4.9 저축은행의 건전경영 유도방안을 마련하여 발표(시행령 및 감독규정 반영완료 '10. 9.)</p> <p>- 저축은행의 PF 등 부동산 대출 쏠림현상 완화를 위한 자산운용규제 강화</p> <p>- 저축은행의 외형 확대에 걸맞는 건전성 기준 강화(예: BIS비율을 5%에서 7%로 단계적 상향조정 등)</p>
<p>13. 해운산업의 구조조정과 이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p>	<p>&lt;처리결과&gt;</p> <p>□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선박펀드 활용도 제고('09.11월)</p> <p>○ 구조조정기금 투입 비율을 상향(40% → 60%)하고 건조 중 선박*도 매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운영방식 개선</p> <p>* 공정이 상당히 진행된 선박에 대해서는 지원을 약정하고, 건조완료 후 매입대금 지급 및 인수</p> <p>○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 중</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10.8월까지 7척(건조중 선박 2척 포함)을 매입하였고, 이중 6척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기금 투입비율 상향조정(40%→60%)</p> <p><input type="checkbox"/> 한편, 금년 해운업에 대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6월말)를 통해 1개사(C1)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p> <p>○ 워크아웃 추진 업체는 경영정상화 계획을 확정하는 등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중</p>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10년 하반기에도 선박펀드 등을 통해 해운사 선박 매입을 지속 추진</p> <p><input type="checkbox"/> 현재 추진중인 워크아웃 등을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해 채권단을 적극 독려</p>
<p>14.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명확히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감독체계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p>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서민금융활성화 대부업분과 TF 운영을 통해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개선 방안 논의('10.2~)</p> <p>○ “서민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방안” 발표('10.4)</p> <p>- 대부업 관리·감독체계를 이원화하는 제도 개선 방향 포함</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연구용역·TF 등을 통해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개선 세부방안 마련</p>
15. 시중은행이 설립한 민간배드뱅크 등의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함께 면책기록의 보존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정도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lt;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gt;</p> <p><input type="checkbox"/> 금융위는 09.10월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파산면책정보 관리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였음</p> <p><input type="checkbox"/> 파산면책정보 관리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추가 단축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채무상환의지 약화 등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있으며</p> <p>○ 금융소비자 본인의 신용관리는 물론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우려</p> <p><input type="checkbox"/> 또한, 민간 배드뱅크의 과잉·불법추심행위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 지도 및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음</p>
16. 금융소비자보호관련	
16-1)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 교육을 강화(정책 수립)하고, 금융민원의 원활한 해소 등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원 설립 등을 비롯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용역 발주(KDI, '10.04.13.)</p>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연구용역(KDI)을 토대로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가칭)「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7. 금융중심지 추진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산 지역 등에 대해 금융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할 것</p>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올해부터 실무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지역의 전문인력양성을 지원(전체 교육비의 35%)</p> <p>&lt;부산지역 교육 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모: 145명 교육에 총 3.7억원 지원</li> <li>○ 과정: 선박금융·국제금융(교육기관 : 금융연수원) 해양파생상품, 녹색산업(금융투자협회), 해상보험(보험연수원)</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교육기관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p>
<p>18. 금융전문인력 양성 관련 자격증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p>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분야 자격제도는 금융투자협회가 '09.12월 제도를 전면 개편하였고, '10.2.4일부터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투자협회 내에 전문인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자격 및 시험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중임</li> </ul> <p>* 금융투자분야 자격증은 민간자격증이며, 자격제도는 자율규제사항으로서 금융투자협회에서 규정하고 운영</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lt;참고 : 자격제도 개편안의 개요&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증을 20종 → 7종(시험은 11종 → 6종)으로 대폭 통폐합함으로써 자격제도를 단순명료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였음</li> <li>○ 이번 개편안은 영업현실을 반영하되, 시험 내실화 및 보수교육 강화 등으로 투자자 보호는 강화하였음</li> </ul> <p>□ 공인회계사 자격제도는 금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국가자격제도로써 업무감독과 교육은 금융당국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년부터 전문인력 양성확대를 위해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을 1,000명으로 100%확대했으며 2007년에는 절대평가제를 도입하였음</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p>□ 금융투자분야 전문인력은 향후로도 자율규제기관인 금융투자협회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인력위원회와 전담부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양성·관리해나갈 계획임</p>
19. 펀드 관련	
19-1) 대리인에 의한 펀드 개설시 적합성 원칙과 투자자 편의 문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p>&lt;처리결과 및 개선방안&gt;</p> <p>□ 대리인을 통한 펀드가입시 절차 관련 국내 실태 및 외국 사례 조사를 진행하였음</p> <p>□ 외국 사례 등을 참조하여 적합성 원칙과 투자자편의 문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표준 투자권유</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준칙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중임 (판매절차 개선 TF 논의 결과)</p> <p>* (예시) 위임장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투자자성향 파악을 허용하는 방안 등</p>
<p>19-2) 펀드 판매 수수료 및 펀드 운용보수 인하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p>	<p>&lt;처리결과&gt;</p> <p>□ 펀드 판매 보수 및 수수료 상한을 인하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 하였음('09.12.21 시행)</p> <p>○ 판매 보수 : (종전) 연 5.0% 이내 → (변경) 연 1.0% 이내</p> <p>* 체감식인 경우 1.5%까지 허용하되, 2년 이후부터 1.0%이내로 인하</p> <p>○ 판매 수수료 : (종전) 연 5.0% 이내 → (변경) 연 2.0% 이내</p> <p>□ 신설펀드에 준해서 기존펀드 판매보수도 자율적으로 인하('10.5.3부터 단계별 시행중)</p>
<p>19-3) 계열사 소속 자산운용사가 자기계열 회사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를 출시하고 있는 것은 이해상충 방지 측면에서 문제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p>	<p>&lt;처리결과&gt;</p> <p>□ 인덱스펀드의 이해상충 발생 요소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함</p> <p>○ 인덱스펀드의 운용사는 미리 발표된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대로 자산을 편입하는 소극적 운용을 담당하므로 이해상충 소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여짐</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한편, 계열사 주식 투자 등에 대한 외국사례를 조사한 결과 원칙적으로 계열사 주식에 대한 투자제한은 없으며,</p> <p>○ 자산운용사가 자기계열 회사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가 존재</p> <p>&lt;향후 추진계획&gt;</p> <p>□ 인덱스펀드 출현으로 인해 수익자와 계열그룹간 예상치 못한 이해상충을 야기하는 요소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지속 점검해나갈 계획임</p>
<p>19-4) 펀드 판매회사가 높은 판매 보수를 수취하고 있어 장기투자자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지속 되므로, 숨겨진 비용인 판매보수 폐지 및 판매 수수료와의 이중 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p>	<p>&lt;처리결과&gt;</p> <p>□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 상한을 설정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김동철 의원 발의)에 대한 심사과정에서,</p> <p>○ 판매보수를 완전히 없앨 경우 판매 수수료가 올라가는 풍선효과 등을 감안하여 판매보수제 자체는 존치하되, 판매보수 상한을 설정(연간 1.5% 이내) 하였음</p> <p>&lt;향후 추진계획&gt;</p> <p>□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 상한 인하에 따른 시장변화를 보아가며, 판매보수추가 인하 및 판매보수·수수료 일원화가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해 검토</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9-5)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미스터리쇼핑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바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개선노력을 기울일 것</p>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09년중에 미스터리쇼핑을 2차례 실시한바 있음</p> <p>○ (제1차: 3~ 4월) 20개 판매사, 200개 지점</p> <p>○ (제2차: 9~10월) 30개 판매사, 450개 지점</p> <p>※ '10년 미스터리쇼핑은 6월중 실시하여 결과를 정리중임</p> <p><input type="checkbox"/> 한편, 실시결과 및 개선권고사항 등을 개별금융회사에 서면통지함으로서 판매 회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p>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개선권고사항 등의 이행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등에 반영할 예정임</p> <p><input type="checkbox"/> 감독역량, 효과 극대화 요소 등을 감안하여 대상 판매사 및 점포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나갈 예정임</p>
<p>20. 은행의 DCDS 업무수행이 가능한지를 법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할 것</p>	<p>&lt; 처리결과 &gt;</p> <p><input type="checkbox"/> 현재 DCDS 업무가 은행의 부수업무로 영위가 가능한지, 보험업의 일부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input type="checkbox"/> 보험업법에 DCDS 취급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조항은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란이 있어, 계속 논의중에 있음</p> <p><input type="checkbox"/> 한편, 은행의 부수업무에 DCDS를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박종희 의원안, 09.9.9)이 발의되었으나,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을 감안하여 대안폐기되었음</p>
<p>21. 은행연합회를 자율규제 기능을 수행하는 법적단체로 은행법상 규정하되, 그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p>	<p>&lt; 향후 추진계획 &gt;</p> <p><input type="checkbox"/> 금융감독시스템 측면에서 은행연합회에 대한 자율규제기능의 법적 부여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위기 이후 은행업 규제기관을 통합·일원화하는 국제적 경향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li> </ul> <p><input type="checkbox"/> 또한, 협회는 회원사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한계</p> <p><input type="checkbox"/> 한편, 은행연합회는 신용정보법상 모든 금융업권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므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중기관으로서의 객관성 및 대표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음</li> </ul> <p>* 신용정보협의회 구성 및 운용 개선, 자문위원회 설치 등 검토</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2. 금융보안체계 구축 관련</p> <p><input type="checkbox"/> 금융위 보안 업무 관련 조직 및 인력 확충 방안을 강구할 것</p>	<p>&lt;처리결과 및 개선방안&gt;</p> <p><input type="checkbox"/> 행안부 및 재정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11년 정보화 인력을 일부 확충(7급 1명) 하였고, 향후 사이버 테러의 증가 등 위기 대응 업무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정보화 인력 추가 확충 및 금융보안 전담 조직 신설 등을 위해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p>
<p>23. 신용평가사의 자회사가 신용평가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업체로 오인될 활동 및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p>	<p>&lt; 처리결과 &gt;</p> <p><input type="checkbox"/> 개정 신용정보법('09.10월 시행)은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산정하는 행위”를 “신용조회업”에 명확히 포함하여 감독당국의 규율범위에 편입</p> <p>○ 신용조회업에 편입될 경우, 법적요건 구비 후 금융위 허가 취득, 업무에 대한 감독 등을 받음</p> <p>○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조회와 관련된 업무에 한하여 겸업 가능하며, 다른 업무를 겸업하는 경우에도 이해상충·불공정행위 방지 등을 위한 조직 및 업무체계 구비 필요</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4.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협회의 회원에 대한 연수 교육업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현재 연수 교육업무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보험대리점협회에서도 회원에 대한 연수 및 교육업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p>	<p>&lt;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gt;</p> <p><input type="checkbox"/> 현재 보험대리점협회는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라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업무를 할 수 있음</p> <p>○ 추가적인 정부업무 위탁 등에 대해서는 보험대리점 협회의 조직과 인원 등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겠음</p>
<p>25. 잦은 인사 관련</p> <p><input type="checkbox"/> 중간 간부급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일 것</p>	<p>&lt;처리결과 및 개선방안&gt;</p> <p><input type="checkbox"/> 일부 간부급 공무원들의 이직, 업무 증가에 따른 조직 신설 등으로 불가피한 보직 이동이 있었으나</p> <p><input type="checkbox"/> 향후 정기 인사 실시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금융위 업무가 더욱 원활하게 추진될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p>

### 3. 내·외부감사 관련(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 2008.9월~2010.7월 현재까지 내·외부감사 수행내역
- 완료된 감사의 감사결과 및 처분결과 보고서

#### □ 내·외부 감사 수행내역

수행 기관	피감 기관	감사 내용	기 간	비 고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종합 감사	'08.11.17 ~ '08.11.28	완료
	여신금융협회	종합 감사	'09. 7. 6 ~ '09. 7.17	완료
	금융연수원	종합 감사	'09.11.16 ~ '09.11.27	완료
	회계기준원	종합 감사	'10. 3.29 ~ '10. 4. 6	완료
	금융결제원	종합 감사 <sup>1)</sup>	'10. 5.31 ~ '10. 6.14	진행중
감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기구 운영 및 감독실태	'09. 6.15 ~ '09. 7.17	완료
		2009회계연도 결산	'10. 3.15 ~ '10. 3.19	완료
		서민금융 지원실태 <sup>2)</sup>	'10. 1.28 ~ '10. 4. 2	진행중

<sup>1)</sup> 금융결제원 종합감사는 2010.7월 현재 감사보고서 작성중

<sup>2)</sup> 서민금융 지원실태감사('10.2~'10.4)의 경우 2010년 7월 현재까지 감사원은 처분요구를 하지 아니함

## □ 완료된 감사의 처분요구서 및 조치결과서

### ○ 금융위원회 수행 감사 결과보고서(조치내역 포함)

- 신용보증기금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별첨 1)
- 여신금융협회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별첨 2)
- 금융연수원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별첨 3)
- 회계기준원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별첨 4)

### ○ 감사원 수행 감사결과 보고서

- 금융감독기구 운영 및 감독실태 처분요구서(별첨 5)
  - 금융감독기구 운영 및 감독실태 조치결과서(별첨 6)
- '2009회계연도 결산감사 처분요구서(별첨 7)
  - 조치결과서 : 해당사항 없음
- 서민금융지원실태 처분요구서 : 해당사항 없음

## □ 별도 제출

#### 4. 임직원 국외 출장 내역

○ 별도자료 참조



## <별첨>

### 4. 2008년도 국외출장 현황

#### ① 혁신행정과

연번	출 장 명	출장지 (출장기관)	출장자	소속	직위 (직급)	출장기간	집행액 (천원)
1	통계작성기관 해외연수	룩셈부르크, 벨기에, 포르투갈, 스페인	김○○	혁신행정과	주무관	8.24~9.2	4,205
2	영국 ICMA Centre의 Investment Banking Program 참석	영국	김○○	혁신행정과	사무관	8.30~9.7	3,857
3	2008년도 일본 인사원 훈련 과정 참가	일본	최○○	혁신행정과	기록연구사	9.28~10.5	141
4	고위정책과정 국외연수	이집트, 그리스, 터키, 스페인	진○○	중공교 파견	국장	10.13~25	10,319

#### ② 대변인실

연번	출 장 명	출장지 (출장기관)	출장자	소속	직위 (직급)	출장기간	집행액 (천원)
1	한국자본시장에 대한 북경 IR 참가	북경	유○○ 조○○ 이○○	대변인실 자본시장과	대변인 사무관 과장	10.21~22	3,703

#### ③ 기획조정관

연번	출 장 명	출장지 (출장기관)	출장자	소속	직위 (직급)	출장기간	집행액 (천원)
1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해외연수	핀란드, 스웨덴	전○○	규제개혁 법무담당	사무관	8.25~9.1	3,059
2	OECD한국 경제검토회의 참석	파리	이○○	규제개혁 법무담당	과장	11.10~15	3,533

#### ④ 금융정책국

연번	출 장 명	출장지 (출장기관)	출장자	소속	직위 (직급)	출장기간	집행액 (천원)
1	제13차 한-캐나다 FTA 금융협상 참석	캐나다	이○○	글로벌금융과	서기관	3.25~29	2,682
2	제10차 한-인도 CEPA 협상 참석	인도 뉴델리	이○○	글로벌금융과	서기관	4.1~4.4	1,768
3	대통령 미국 순방 수행	뉴욕, 워싱턴	전○○ 김○○ 이○○ 오○○	금융정책국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위원장 국장 과장 사무관	4.15~4.21	16,874
4	WTO DDA 및 제7차 한-EU FTA 협상 참석	제네바, 브뤼셀	이○○	글로벌금융과	서기관	5.5~5.15	3,949
5	한·중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중국 금융당국과의 회담	베이징, 상하이	전○○ 유○○ 이○○ 고○○ 오○○ 김○○	글로벌금융과 위원장실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대변인실	위원장 대변인 과장 사무관 사무관 사무관	6.12~13	8,293
6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 투자설명회 참석	뉴욕	임○○		사무처장	6.17~6.22	2,447
7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 투자설명회 참석	런던, 프랑크푸르트	이○○		상임위원	6.18~6.22	1,988
8	한-EU FTA 서비스분과 회의 참석	홍콩	이○○	글로벌금융과	서기관	6.27~6.29	2,994
9	제11차 한·인도 CEPA 협상 참여	뉴델리	오○○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7.29~7.31	1,768
10	주요국 금융산업 육성 및 금융산업 선진화 노력 현지조사	호주, 싱가포르, 홍콩	김○○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8.23~8.30	4,116
11	증권연수원의 GCMA 프로그램 해외연수 참가	홍콩	오○○	금융시장분석과	사무관	8.28~9.5	3,147
12	한국시장 IR 참석 및 CBRC 등 주요 당국자간 회담	중국 베이징	전○○ 이○○ 고○○ 신○○	위원장 글로벌금융과 위원장실 글로벌금융과	위원장 과장 사무관 사무관	10.22	6,293
13	한국 금융-경제 현황 설명회 참석	싱가폴	이○○ 이○○ 오○○	글로벌금융과 부위원장실 글로벌금융과	부위원장 사무관 사무관	10.23~25	7,549
14	한국 금융시장 및 경제현황 설명회 참석	뉴욕, 보스턴	이○○ 최○○	글로벌금융과 금융시장분석과	부위원장 과장	11.2~6	13,668

연번	출 장 명	출장지 (출장기관)	출장자	소속	직위 (직급)	출장기간	집행액 (천원)
15	제2차 한·중 경제통상협력 공동작업반 회의 참석	북경	오○○ 김○○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서기관	11.10~13	1,581
16	한국시장 IR 참석 및 FRB NY 총재, FSA의장 등 주요 당국자간 회담	런던, 뉴욕	전○○ 이○○ 최○○ 이○○ 이○○ 오○○ 신○○	글로벌금융과 금융시장분석과 위원장실 자본시장과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위원장 과장 과장 서기관 사무관 사무관 사무관	11.16~20	20,508
17	한국경제 IR 참석	런던	이○○ 이○○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과장	11.16~19	11,194
18	거시경제 및 금융 안정화를 위한 한중일 워크숍 참석	동경	김○○	금융정책국	국장	11.25~26	1,779
19	한국 금융시장 및 경제현황 설명회 참석	홍콩	이○○ 박○○ 오○○	금융정책과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과장 서기관	12.1~3	7,021
20	제5차 금융안정화 포럼(FSF) 참석	홍콩	이○○	글로벌금융과	과장	12.14~16	1,506
21	한-EU FTA 확대수석대표 회담 참석	비엔나	김○○	글로벌금융과	서기관	12.15~19	2,994

## ⑤ 금융서비스국

연번	출 장 명	출장지 (출장기관)	출장자	소속	직위 (직급)	출장기간	집행액 (천원)
1	제4차 국제회계감독기구회의 참석	노르웨이	김○○	공정시장과	주무관	4.7~13	3,126
2	제3차 이주지역보험감독자회의참석	싱가포르	윤○○ 전○○ 홍○○	보험과	사무관 위원장 국장	4.23~26	1,331
3	제33차 IOSCO 연차총회 참석 및 APRC 의장 출마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이○○ 이○○ 이○○ 빈○○	금융서비스국 글로벌금융과 위원장실 자본시장과 글로벌금융과	과장 서기관 사무관 사무관	5.25~5.30	42,615

연번	출 장 명	출장지 (출장기관)	출장자	소속	직위 (직급)	출장기간	집행액 (천원)
4	ADB 워크샵 참석	북경	장○○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5	방중 정상회담 지원	베이징, 칭다오	임○○		사무처장	5.26~29	1,453
6	한·영 미래포럼 참석	영국 런던	이○○	자본시장과	과장	5.27~30	1,457
7	Asian Banking and Finance Conference 참석	영국 런던	김○○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6.1~5	8,547
8	OECD 보험 및 사회적연금회의 참석	파리	손○○		사무관		
9	IOSCO 전문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참석	스페인	박○○	은행과	사무관	6.17~22	3,268
10	제5차 국제회계감독기구회의 참석	남아공	유○○		대변인	6.25~29	3,142
11	CLSA 홍콩 Investors' forum에 참석	홍콩	홍○○	금융서비스국	국장	9.15~19	9,495
12	IAIS 제15차 연차총회 참석	헝가리	최○○	금융서비스국	서기관		
13	한국경제실명을 위한 국외 출장	동경, 홍콩	김○○	공정시장과	사무관	9.20~27	1,177
14	IOSCO 아태지역위원회(APRC) 회의 참석	발리	권○○		상임위원	9.24~26	935
15	Global Asset Management Program 교육 참석	런던	이○○		상임위원	10.13~19	13,883
			주○○	보험과	사무관		
			박○○	은행과	사무관	10.20~22	2,843
			전○○		위원장		
			홍○○	금융서비스국	자연시장정책관	10.31~11.1	8,220
			최○○	보험과	서기관		
			고○○	위원장실	사무관		
			목○○	자산운용과	주무관	11.13~21	4,057

## ⑥ 금융정보분석원

연번	출 장 명	출장지 (출장기관)	출장자	소속	직위 (직급)	출장기간	집행액 (천원)
1	2008 FATF 제19기 2차 총회 및 실무그룹회의 참석	프랑스	양○○	기획행정실	실장		
			마○○	기획행정실	사무관		
			김○○	기획행정실	사무관	08.2.24~08.3.2	14,288
			기○○	기획행정실	사무관		
2	2008년 상호평가훈련 워크샵 참석	싱가포르	이○○	기획행정실	사무관	08.3.16~08.3.22	7,629
			마○○	기획행정실	사무관		

연번	출 장 명	출장지 (출장기관)	출장자	소속	직위 (직급)	출장기간	집행액 (천원)
3	강화된 AML제도 해외 사례조사	미국, 영국	이○○	제도운영과	사무관	08.6.10~08.6.18	10,549
			윤○○	심사분석실	사무관		
			전○○	제도운영과	사무관		
			김○○	기획행정실	사무관		
4	제197기 제3차 FATF 총회 참석	프랑스	양○○	기획행정실	실장	08.6.15~ 08.6.22	23,489
			이○○	심사분석실	검사		
			이○○	기획행정실	사무관		
			이○○	제도운영과	사무관		
			장○○	기획행정실	에디터		
			안○○	기획행정실	팀장		
5	World Bank 주관 자금세탁방지 워크숍 참석	태국	장○○	심사분석실	사무관	08.6.23~08.6.27	3,015
6	제11차 AFG연차 총회 참석	인도	김○○		원장	08.7.7~08.7.12	13,573
			위○○	심사분석실	검사		
			안○○	기획행정실	팀장		
			임○○	심사분석1과	사무관		
7	상기폴 상호평가자 교육	싱가포르	오○○	심사분석실	주무관	08.8.10~08.8.16	5,369
			안○○	기획행정실	팀장		
			이○○	심사분석실	검사		
			강○○	심사분석실	검사		
8	FATF 실무그룹회의 참석	캐나다	이○○	기획행정실	사무관	08.9.12~08.9.20	24,078
			박○○	기획행정실	사무관		
			김○○	제도운영과	사무관		
			김○○	심사분석2과	주무관		
9	FATF 총회 및 실무회의 참석	브라질	양○○	기획행정실	실장	08.10.10~08.10.20	42,470
			이○○	심사분석실	검사		
			윤○○	심사분석실	사무관		
			마○○	기획행정실	사무관		
10	에그몽 실무회의 참석	캐나다	장○○	기획행정실	에디터	08.10.19~08.10.25	6,728
			류○○	기획행정실	주무관		
			윤○○	심사분석3과	경감		
			김○○	제도운영과	사무관		
11	감독/검사업무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미국	김○○	제도운영과	사무관	08.11.08~08.11.15	4,182
12	미국 FINCEN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연구용역	미국	이○○	심사분석실	검사	08.11.29~08.12.07	8,978

## 2. 2009년도 국외출장 현황

### ① 본부(행정인사과, 기재단)

연번	출 장 명	출장지 (출장기관)	출장자	소속	직위 (직급)	출장기간	집행액 (천원)
1	1. 해운시장동향 파악 및 선박가치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자문 2. 선박매입프로그램에 대한 해외은행상대 홍보 및 아시아시장의 현지반응 조사	싱가포르	송○○	기업재무개선 지원단	사무관	7.6 ~ 7.9	1,327
2	국가정보원 주관 중앙행정기관 보안담당관 및 보안담당자의 국외정책연수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	행정인사과	주무관	11.29 ~ 12.12	5,036

### ② 대변인실

연번	출 장 명	출장지 (출장기관)	출장자	소속	직위 (직급)	출장기간	집행액 (천원)
1	홍콩 비즈니스 포럼 참석 및 해외IR	홍콩	유○○ 이○○	대변인실	대변인 사무관	6.24 ~ 6.25	3,162
2	프랑스 현지언론 인터뷰 등 홍보지원	프랑스 파리	이○○	대변인실	전문 계약직	9.13 ~ 9.16	2,605

### ③ 공자위

- 해당사항 없음

#### ④ 기획조정관실

연번	출장명	출장지 (출장기관)	출장자	소속	직위 (직급)	출장기간	집행액 (천원)
1	제4차 고위공무원 정책과정	일본	조○○	기획조정관	국장	1.15~17	143
2	영국대사관 주관 런던집합연수	런던	이○○	기획재정 담당관실	사무관	4.27~5.1	4,054
3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스페인, 이탈리아	조○○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	사무관	8.26~9.2	3,246

#### ⑤ 금융정책국

연번	출장명	출장지 (출장기관)	출장자	소속	직위 (직급)	출장기간	집행액 (천원)
1	한국경제 바로알리기 IR 개최	일본(동경), 싱가폴	이○○ 신○○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사무관	1.21~23	10,847
2	세계 경제포럼(Davos) 참석	스위스(다보스)	이○○		부위원장	1.28~2.1	6,692
3	G-20 WG1 및 한국금융바로알리기	영국, 스위스	이○○ 이○○ 신○○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서기관 사무관	1.31~2.6	13,733
4	제10차 동경라운드 테이블 참석	동경	박○○	금융시장분석과	사무관	3.1~4	2,073
5	한-GCC FTA 협상 참석	사우디 (리야드)	오○○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3.7~11	3,497
6	한국경제바로알리기 미국 IR 개최	미국 (뉴욕,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이○○ 신○○	상임위원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사무관	3.11~21	14,547
7	영국 4대 언론 IR 개최	영국(런던)	이○○ 신○○ 오○○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부위원장 과장 사무관	3.11~15	10,739
8	홍콩 아시아 투자컨퍼런스 참석	홍콩	이○○ 신○○	글로벌금융과	부위원장 과장	3.24~27	5,673

연번	출장명	출장지 (출장기관)	출장자	소속	직위 (직급)	출장기간	집행액 (천원)
9	IFSB 연례회의 참석	싱가폴	고○○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10	한-페루 FTA 협상 참석	페루(리마)	류○○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11	글로벌 금융위기 세미나 참석	파리	김○○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5.6~8	1,769
12	한-호주 FTA 협상 참석	호주(캔버라)	김○○	글로벌금융과	서기관	5.10~16	3,259
			진○○	금융시장분석과	사무관	5.17~23	3,467
13	FSB 오리엔테이션 참석	스위스(바젤), 프랑스(파리), 홍콩	신○○	글로벌금융과	과장	5.17~21	2,303
14	홍콩비즈니스 강연 및 FSB 총회 참석	스위스(바젤), 홍콩	이○○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5.25~28	16,598
			신○○	글로벌금융과	과장		
			김○○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진○○		위원장		
			이○○		상임위원		
			김○○	위원장실	서기관	6.24~27	30,746
			신○○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오○○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김○○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15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현황 파악	독일(프랑크푸르트) 프랑스(파리)	추○○	금융정책과	국장	6.29~7.4	10,979
			김○○	산업금융과	사무관		
16	한중일 거시경제 워크숍 참석	중국 (상하이)	이○○		자문관		
			류○○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6.30~7.2	1,334
			신○○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17	제12차 APG연차총회 참석	호주(브리즈번)	이○○	금융정책과	사무관	7.7~12	2,436
18	FSB 운영위 참석	영국(런던)	이○○		상임위원	8.26~29	7,213
19	FSB 상임위 참석	영국(런던)	이○○		국제협력관	9.7~9	3,361
20	FSB 총회 참석	프랑스(파리)	진○○	글로벌금융과	위원장		
			신○○	글로벌금융과	과장		
			김○○	글로벌금융과	서기관	9.13~15	21,095
			박○○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김○○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21	중국 금융정책 및 금융중심지	상하이	이○○	국제협력팀	사무관	9.20~23	2,072



연번	출장명	출장지 (출장기관)	출장자	소속	직위 (직급)	출장기간	집행액 (천원)
	조성 정책 파악						
22	한-페루 FTA 협상 참석	페루(리마)	신○○ 박○○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과장 주무관	10.19~24	8,053
23	FSB 운영위 참석	이탈리아(로마)	이○○ 류○○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사무관	10.24~28	10,307
24	G20재무장관 회의 참석	영국(세인트앤드류)	김○○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11.4~9	3,871
25	한-GCC FTA 회기간 협상 참석	두바이	박○○	글로벌금융과	주무관	11.15~19	2,503
26	한-호주 FTA 협상 참석	호주(켄버라)	신○○ 박○○ 박○○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과장 법률지원관 주무관	12.1~6	9,264
27	한일 고위급 정례회담 참석	일본(동경)	이○○ 김○○ 전○○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서기관 사무관	12.17~18	4,597
28	제7회 동아시아권퍼런스 참석 및 주요 아시아금융당국 면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홍콩	이○○ 류○○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사무관	12.3~12	8,885

## ⑥ 금융서비스국

연번	출장명	출장지 (출장기관)	출장자	소속	직위 (직급)	출장기간	집행액 (천원)
1	세계저축은행협회 회의참석	칠레산티아고	임○○ 서○○	중소과	상임위원 사무관	4.27~5.4	16,282
2	영국재무성 및 FSA 관계자 면담출장	영국 런던	김○○ 유○○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과장 서기관	5.17~5.21	4,459
3	제2차 한중일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 워크숍 참석	중국 상해	신○○	은행과	사무관	7.1~7.3	1,060
4	OECD 보험 및 사회적연금 회의 참석	프랑스 파리	권○○	보험과	사무관	7.7~7.10	3,700
5	AGP 유형론 워크숍 참석	캄보디아	신○○	은행과	사무관	10.24~10.30	1,638

연번	출 장 명	출장지 (출장기관)	출장자	소속	직위 (직급)	출장기간	집행액 (천원)
6	태평양 보험회의 회의참석	태국, 베트남	성○○ 제○○	보험과 보험과	과장 사무관	11.01~11.8	4,075
7	태국,싱가포르,홍콩 투자자 사전 설명회	태국, 싱가포르, 홍콩	조○○	은행과	사무관	11.16~11.22	2,400
8	OECD 보험 및 사적연금 회의 참석	프랑스 파리	김○○ 김○	보험과 보험과	사무관 주무관	11.29~12.6	7,963
9	IMF 법무부서 세미나 참석	미국 워싱턴D.C.	신○○	은행과	사무관	11.29~12.5	3,722
10	OECD 무역위원회 회의참석	프랑스 파리	마○○ 정○○	은행과 은행과	사무관 주무관	12.14~12.19	6,189

## ⑦ 자본시장국

연번	출 장 명	출장지 (출장기관)	출장자	소속	직위 (직급)	출장기간	집행액 (천원)
1	FTSE 선진지수 편입관련 Roundtable 참석	일본 동경	전○○	자본과	사무관	3.10~11	1,226
2	국제회계감독기구(IFAR) 회의참석	스위스 바젤	김○○	공정과	사무관	4.25~5.1	3,503
3	영국대사관 주관 런던 집합연수	영국 런던	김○○	자산과	사무관	4.26~5.3	4,048
4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연차총회 참석	이스라엘 텔아비브	김○○ 변○○	자산과	증권위원 사무관	6.6~6.12	8,456
5	한국자본시장 투자설명회(IR) 및 일본 금융청 방문	일본 동경	이○○ 이○○	자본과	부위원장 사무관	9.7~9.8	2,898
6	한국자본시장 투자설명회(IR) 및 상해금융감독당국 라운드테이블 참석	중국 상해	김○○ 전○○	증권위원 자본과	증권위원 서기관	9.7~9.10	3,147
7	국제회계감독기구(IFAR) 회의참석	싱가포르	윤○○	공정과	주무관	9.13~9.16	1,523
8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기구(UNDROIT) 회의 참석	스위스 제네바	전○○	자본과	사무관	10.4~10.8	3,754
9	국제연금감독기구(IOPS) 연차총회 참석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정○○	자산과	과장	10.13~10.19	3,775
10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아태지역위원회(APRC) 참석	호주 멜버른	김○○	자산과	사무관	10.21~10.24	1,958

연번	출장명	출장지 (출장기관)	출장자	소속	직위 (직급)	출장기간	집행액 (천원)
11	아시아개발은행(ADB) 및 중국 국영 자산관리공사주관 컨퍼런스 참석	중국 베이징	이○○ 김○○	공정과 자산과	과장 주무관	11.17~11.20	-
12	아시아지역 편도교류 협력방안 논의	홍콩, 베트남	김○○ 김○○	자산과 자산과	사무관 사무관	12.17~12.22	2,710

## ⑧ 금융정보분석원

연번	출장명	출장지 (출장기관)	출장자	소속	직위 (직급)	출장기간	집행액 (천원)
1	FATF 총회 및 실무그룹회의 참석	프랑스	김○○ 박○○ 이○○ 이○○ 박○○	심사분석실 기획행정실 기획행정실 심사분석실	원장 실장 서기관 사무관 에디터	2.22~3.1	27,634
2	에그몽 그룹 실무그룹회의 참석	파테말라	이○○ 전○○ 박○○	심사분석실 심사분석실 심사분석실	검사 주무관 경정	3.1~3.8	12,976
3	카지노 AML/CFT 검사체계 수립을 위한 해외 사례 조사	마카오, 뉴질랜드, 호주	이○○ 이○○ 김○○ 강○○ 이○○ 이○○ 김○○ 박○○	제도운영과 제도운영과 기획행정실 심사분석실 심사분석실 기획행정실 제도운영과 기획행정실	과장 사무관 실장 검사 검사 사무관 사무관 사무관 에디터	4.26~5.7	12,158
4	FATF 상호평가자 회의	호주	이○○ 이○○ 김○○ 박○○ 김○○ 이○○ 김○○ 박○○	기획행정실 심사분석실 심사분석실 기획행정실 제도운영과 기획행정실 기획행정실	사무관 사무관 사무관 사무관 사무관 사무관 사무관 에디터	5.3~5.8	20,059
5	제17차 에그몽 그룹 총회 참석	카타르	김○○ 이○○ 김○○ 박○○	기획행정실 기획행정실 심사분석1과	원장 서기관 사무관 경정	5.24~5.29	13,146



### 3. 2010년도 국외출장 현황

#### ① 본부(행정인사과, 기재단)

- 해당사항 없음

#### ② 대변인실

- 해당사항 없음

#### ③ 공자위

연번	출장명	출장지 (출장기관)	출장자	소속	직위 (직급)	출장기간	집행액 (천원)
1	몽골 금융감독기구 및 부실채권정리기구 업무 협의	몽골, 울란바토르	김○○	운용기획팀	사무관	7.18~7.21	1,789

#### ④ 기획조정관실

연번	출장명	출장지 (출장기관)	출장자	소속	직위 (직급)	출장기간	집행액 (천원)
1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혜외 연수	헝가리, 슬로바키아	김○○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	주무관	6.22~6.29	3,320

## ⑤ 금융정책국

연번	출장명	출장지 (출장기관)	출장자	소속	직위 (직급)	출장기간	집행액 (천원)
1	FSB 총회 참석	스위스(바젤)	진○○	글로벌금융과	위원장	1.8~11	22,757
			신○○	글로벌금융과	과장		
			박○○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서○○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김○○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2	국제적 정부주도 금융구제 현황 등 논의	스위스, 룩셈부르크	우○○	산업금융과	과장	1.10~14	3,530
3	FSB 상임위 참석	영국(런던)	이○○		국제협력관	1.16~19	6,527
4	아시아 금융컨퍼런스 참석	홍콩, 일본(동경)	이○○		상임위원	1.19~22	4,851
			김○○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5	위기 이후 주요 금융중심지 현황조사 및 정책 벤치마킹	더블린, 아테네	정○○	국제협력팀	사무관	2.7~13	4,576
6	FSB 감독규제협력 상임위원회 참석	싱가포르	이○○		국제협력관	3.3~5	4,462
			황○○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7	FSB 운영위원회 및 한-영 경제협의회 참석	스위스, 영국	이○○		상임위원	3.7~11	14,947
			서○○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8	한중일 고위급 금융당국 회의 및 세미나 참석	일본(동경)	고○○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3.16~17	2,596
			이○○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9	미국 금리체계·제도 운용현황 조사	시애틀, 워싱턴, LA	최○○	금융시장분석과	과장	4.11~18	6,114
10	CICI(국제지배구조혁신센터) 컨퍼런스 참석	캐나다(워털루)	박○○		사무관	5.1~7	4,144
			이○○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11	한국금융 IR	싱가포르, 호주	류○○		부위원장	5.10~12	15,090
			권○○		상임위원	5.12~15	
			최○○	국제협력팀	팀장	5.10~15	
			윤○○	대변인실	외신대변인	5.10~15	
			이○○	금융정책과	서기관	5.10~12	
			손○○	국제협력팀	사무관	5.10~15	
12	한-뉴질랜드 FTA 협상 참석	뉴질랜드(웰링턴)	정○○	국제협력팀	사무관	5.10~15	3,163
			황○○	국제협력팀	사무관	5.10~15	
			박○○	글로벌금융과	주무관	5.10~16	

연번	출 장 명	출장지 (출장기관)	출장자	소속	직위 (직급)	출장기간	집행액 (천원)
13	FSB 감독규제협력 상인위원회 참석	스위스(바젤)	이○○ 김○○	글로벌금융과	국제협력관 사무관	5.11~15	11,662
14	FSB 운영위 참석 및 OECD 한국경제검토회의 참석	이탈리아(로마), 프랑스(파리)	이○○ 서○○ 오○○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사무관 사무관	5.15~22	14,407
15	독일재무부 주관 국제컨퍼런스 참석	독일(베를린)	진○○ 최○○	글로벌금융과	위원장 과장	5.19~21	13,886
16	한-호주 FTA 협상 참석	호주(캔버라)	박○○	글로벌금융과	주무관	5.23~27	2,318
17	아시아 신흥국 은행규제 및 금융안정 컨퍼런스 참석	중국(베이징)	이○○ 김○○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사무관	5.25~27	1,582
18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주관 아시아 컨퍼런스 및 은행감독자 회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김○○ 신○○	본부	사무처장 사무관	6.6~10	8,998
19	FSB 감독강화 워크숍 참석	캐나다(오타와)	이○○	글로벌금융과	국장	6.8~13	7,800
20	IIF(국제금융연합회) 춘계총회 참석	오스트리아(비엔나)	이○○ 류○○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사무관	6.8~12	10,689
21	FSB 총회 참석 및 미국금융당국 방문	캐나다(토론토), 미국(워싱턴)	진○○ 최○○ 서○○ 정○○ 고○○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위원장 과장 사무관 사무관 사무관	6.13~17	34,320
22	WTO DDA 서비스 협상 참석	스위스(제네바)	류○○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6.27~7.1	3,486
23	독일경제개발협력부 주최 국제회의 참석	독일(베를린)	이○○ 이○○	글로벌금융과	국제협력관 사무관	7.4~8	3,240
24	금융감독기구 및 부실채권정리기구 역할에 대한 실무자 회의 참석	몽골	이○○	금융정책과	서기관	7.18~21	1,789

## ⑥ 금융서비스국

연번	출 장 명	출장지 (출장기관)	출장자	소속	직위 (직급)	출장기간	집행액 (천원)
1	국제보험학회(IIS) 총회참석	스페인 마드리드	성○○	보험과	과장	6.5~6.11	3,958

## ⑦ 자본시장국

연번	출장명	출장지 (출장기관)	출장자	소속	직위 (직급)	출장기간	집행액 (천원)
1	장외파생상품 감독자포럼 참석	미국 뉴욕	이○○ 전○○	자본과 자본과	과장 사무관	1.14~1.17	5,932
2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참석	영국 런던	김○○	공정과	사무관	1.16~1.21	3,424
3	국제회계감독기구(IFIA) 워크숍 참석	프랑스 파리	구○○	공정과	사무관	2.8~2.13	4,153
4	국제회계감독기구(IFIA) 제7차 정기회의 참석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이○○ 윤○○	공정과 공정과	과장 주무관	3.20~3.25	4,909
5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연차총회 참석 및 미국 투자은행(IB) 기관 방문	캐나다 몬트리올, 미국 뉴욕	최○○ 이○○		상임위원 사무관	6.6~6.13	14,067
6	시장감시교육프로그램 참가	요르단 암만	이○○	공정과	사무관	6.14~6.18	3,066
7	산동기업 한국상장 설명회 참석	중국 제남, 북경	송○○	자본과	서기관	6.30~7.2	1,029
8	국제회계기준(IFRS) 컨퍼런스 참석	일본 동경	최○○	공정과	과장	7.28~7.29	1,208

## ⑧ 금융정보분석원

연번	출장명	출장지 (출장기관)	출장자	소속	직위 (직급)	출장기간	집행액 (천원)
1	증장기 정보화계획 수립관련 호주 FIU 방문	호주	이○○ 김○○ 최○○	심사분석실 기획행정실	팀장 사무관 원장	1.19~2.22	7,165
2	FATF 총회 및 실무그룹회의 참석, APG 공동의장 면담	UAE, 싱가포르	최○○ 이○○ 김○○	심사분석2과 기획행정실 기획행정실	과장 사무관 사무관	2.14~2.20	16,439
3	몽골 고위급 협의 방문	몽골	최○○ 이○○	기획행정실	원장 사무관	2.28~3.3	4,204
4	에그몽 그룹 실무그룹회의 참석	모리셔스	김○○	기획행정실	사무관	2.28~3.6	4,059
5	OECD 제정위원회 8차업반 소그룹회의 참석	프랑스	강○○ 손○○	심사분석실 심사분석실	팀장 사무관	3.9~3.14	13,564



연번	출 장 명	출장지 (출장기관)	출장자	소속	직위 (직급)	출장기간	집행액 (천원)
6	심사분석 업무 개선을 위한 일본 FIU 방문	일본	진○○ 박○○ 김○○	심사분석실 심사분석실 심사분석실	주무관 실장 주무관	5.23~5.26	3,459
7	카지노·금융회사 AML/CFT 검사체계 수립 및 개선을 위한 기관방문	미국	송○○ 이○○	제도운영과 제도운영과	과장 사무관	5.23~5.31	12,347
8	우리나라 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경과보고 등을 위한 FATF 총회 및 실무그룹회의 참가	네델란드	이○○ 김○○ 김○○	기획행정실 기획행정실 심사분석2과	실장 사무관 사무관	6.19~6.26	13,926
9	에그몽 그룹 총회 및 실무그룹회의 참석	콜롬비아	최○○ 이○○ 임○○ 윤○○	기획행정실 기획행정실 기획행정실 심사분석실	원장 서기관 사무관 검사역	6.26~7.4	26,381
10	APG 연차 총회 참석	싱가포르	최○○ 임○○ 이○○	기획행정실 기획행정실 심사분석1과	원장 사무관 사무관	7.11~7.17	8,570

## 5. 임직원 징계 관련

### ☐ 징계 현황

징계 현황		처분사유	처분일시
견책	서기관 1명	음주운전	09.2.27
	행정사무관 1명	음주운전	09.3.23
경고	행정주사 1명	품위유지의무 위반	09.10.9
감봉2월	서기관 2명	청렴의무위반	09.3.19
			09.3.23

### ☐ 징계 관련 내부규정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도 내부규정은 없음)

### ☐ 파면, 해임 및 민·형사상 처벌내역

- 해당사항 없음

## 6. 대부업관련

- 최근 3년간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연차별 구분)
- 전체 대부업체 기본현황
- 각 업체별 자산, 부채, 대출이자율, 대출현황(등록, 미등록업체 구분)
- 최근 3년간 대부업관련하여 접수된 민원 및 처리결과
- 최근 3년간 대부업정책협의회 회의록 일체

□ 붙임 참조

# 사금융 실태조사 결과

## [제3차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포함]

### < 목 차 >

I. 조사개요 .....	1
II.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결과 .....	2
1. 전체 사금융 시장 규모 .....	2
2. 사금융 이용자의 연체 및 제도권 대출 이용 현황 ...	3
3. 사금융 시장의 특성 .....	4
4. 사금융 이용자의 특성 .....	5
III. 정책 시사점 .....	8

## I. 조사 개요

### 1. 목 적

- 금융소외자의 사금융 이용 현황 및 상환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사금융 실태조사를 실시
  - 사금융시장에서의 공급자(등록 대부업체)와 수요자(대부 이용자) 측면에서 각각 조사
- ➡ 지원 가능한 대상의 범위, 지원한도 등을 정하고, 지원 대상자 수, 필요 예산 등을 산정하기 위함

### 2. 경 과

#### ① 등록 대부업자 실태조사 ('08.4월 : 1개월)

- 전체 등록업자 대상 : 전국 약 18,000개 등록 대부업자를 서면으로 조사
  - \* 자료분석이 가능한 7,058개 대부업체의 자료를 기초로 분석
- 일부 현장조사 : 247개\* 등록 대부업자를 방문하여 업무 담당자 및 임원 면접
  - \* 대형업체 67개, 중소법인 80개, 개인업체 100개

#### ② 사금융 이용자 실태조사 ('08.4월 : 1개월)

- 전국민 조사 : 1만명 전화조사 (한국갤럽, 미디어리서치)
- 사금융 이용자 조사 :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3,0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
- 기존 데이터 활용 : 한신평정, 한신정 CB에 등록된 약 3,500만명의 대출정보 분석

## II.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결과

### 1. 전체 사금융 시장 규모

① (사금융 이용자) 전국민(20세이상 3,500만명)의 5.4%인 189만명이 현재 사금융을 이용

- 이중 49.9%는 등록 대부업체, 17.6%는 무등록 대부업체, 32.4%는 지인으로부터 차입

\* 사금융 이용자중 128만명이 대부업체(등록+무등록)를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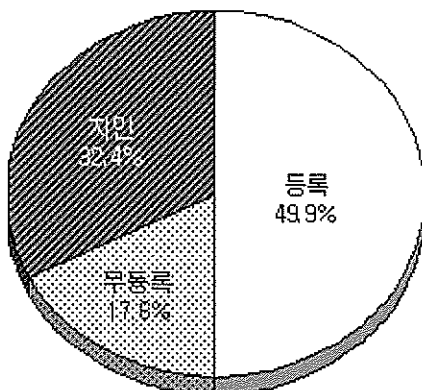
② (사금융 시장규모) 약 16.5조원(189만명×873만원\*)으로 추정

\* 1인당 평균 사금융 이용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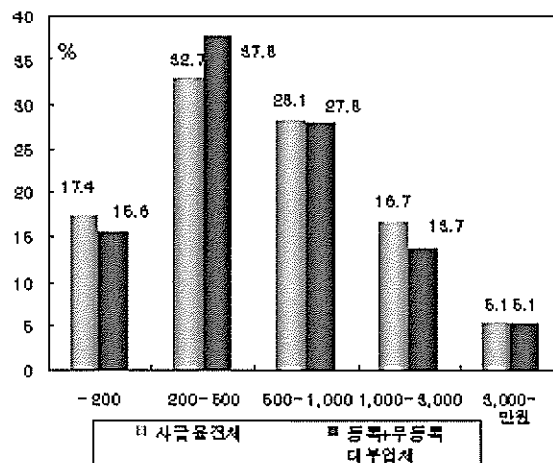
- 이중 지인을 통한 차입을 제외한 등록 및 무등록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규모는 총 10.0조원 (127.6만명×783.4만원\*)

\* 등록 및 무등록 대부업체 이용자의 평균 사금융 이용액

<사금융 이용 형태>



<사금융 대출 금액>



## 2. 사금융 이용자의 연체 및 제도권 대출 이용 현황

### ① (사금융 연체) 사금융 대출자중 연체자의 비율은 약 26.4%

\* CB사에 등록된 대부업체 이용자의 연체율(23%)와 무등록 대부업체 연체율(대부업체 연체율의 1.55배=36%)의 평균

- 연체된 사금융 채무중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가 46.5%로 다수이나, 1년 이상 연체된 채무도 29.4%에 달함

### ② (제도권 대출 이용) 사금융 이용자중 57.4%가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

- 사금융 이용자의 평균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규모는 3천만원

\*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중 신용대출 이용자의 비율은 6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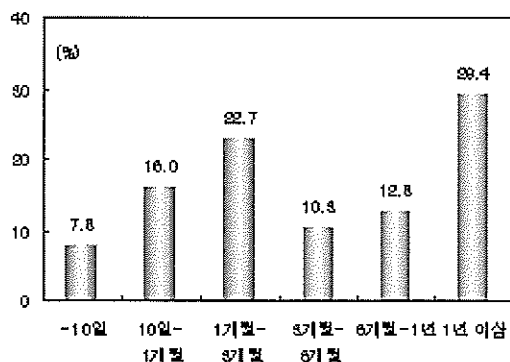
(신용대출의 경우 1천만원 이하 대출자가 53.0%, 3천만원 이하가 84.7%, 5천만원 이하는 91.7%로 평균신용대출 금액은 1,900만원)

-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자중 13.7%가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을 연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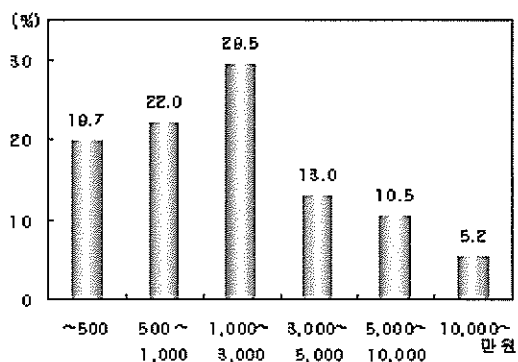
\* 전체 국민의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 연체율(3개월 이상 연체)은 5.2%

- 이중 3개월 이하 연체자는 32.2%이고, 3개월~1년 연체는 29.2%, 1년이상 연체는 37.2%

<사금융 연체일수>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규모>



### 3. 사금융 시장의 특성

#### ① (이자율) 사금융 대출의 이자율 평균은 연 72.2%

○ 연 30% 이하 대출이 17.8%, 연 30~49%가 33.9%, 연 49%이상 대출이 48.1%

\* 등록 대부업체 이자율 평균이 연 68%인 반면, 무등록 대부업체는 이보다 높은 연 78%

\*\* 대부업법상 이자한도 : 49% ('07.10.4일부터 시행)

\*\*\* 사금융 이자율이 법상 이자율보다 크게 높은 것은 사금융 이용자들이 법 개정후 이자가 낮아진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용자는 자신이 부담하는 금리를 높게 인식하기 때문(등록 대부업체 조사결과 신용대출 금리는 약 37~44%로 조사됨)

#### ② (이용업체수) 사금융 이용자는 평균적으로 2곳에서 사금융을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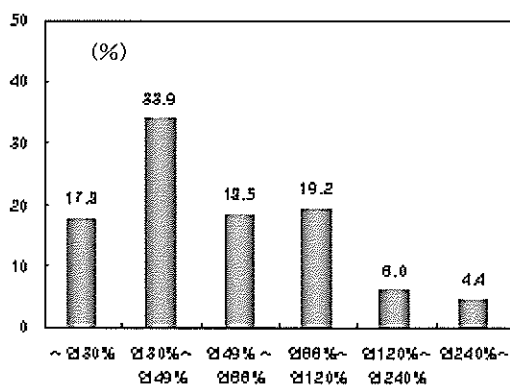
\* 이용업체수 : 1군데(48.5%), 2군데(19.4%), 3군데(17.2%), 4군데(6.6%), 5군데 이상(5.1%)

#### ③ (대출형태) 사금융 시장의 76.0%는 개인 신용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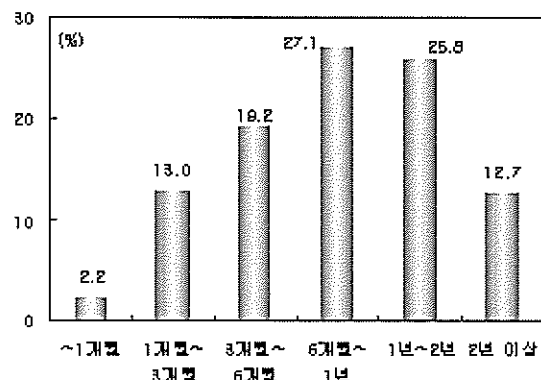
\* 개인 담보대출은 15.4%, 타인신용보증 대출은 8.6%

#### ④ (상환기간) 일반적인 사금융 상환기간은 3개월~1년(46.3%)이지만, 12.7%는 상환기간이 2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함

<사금융 연 이자율>



<사금융 평균 상환기간>





## 4. 사금융 이용자의 특성

① (사금융 이용계기) 주로 가계 생활자금(47.4%)이나 사업(39.6%)을 위해 사금융을 이용

- 가계생활자금 용도로는 생활비 비중이 46.0%로 가장 높고, 교육비(24.5%), 병원비(14.9%) 순임

② (상환의지) 대다수 사금융 이용자들은 상환의지가 비교적 높고, 상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스스로 긍정적으로 평가

- 자력(73.6%) 또는 주변사람들의 도움(10.4%)으로 상환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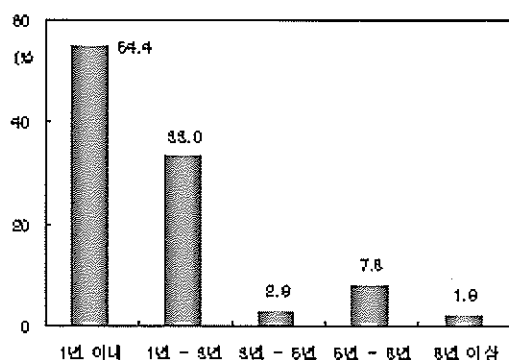
\* 기타답변 :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음(6.2%), 추가대출로 상환(3.2%), 새로운 신용회복 대책 기다림(3.2%), 개인회생이나 파산 활용(1.8%), 현행 신용회복 기구 이용(1.5%)

- 사금융 연체자의 경우에는 36.5%만이 상환할 수 있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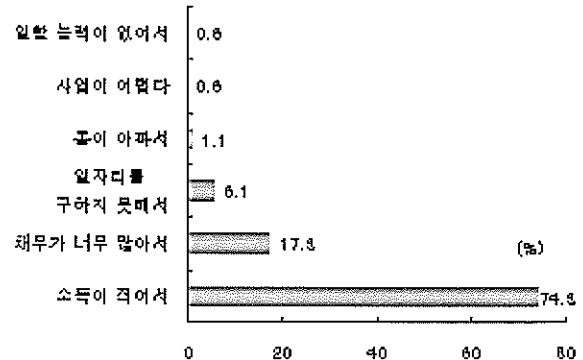
- 이들중 1년 이내에 상환 할 수 있다고 한 이용자는 54.4%

- 상환할 수 없는 이유로는 대체로 소득은 있지만 소득규모가 작거나 소득대비 채무가 많기 때문으로 나타남

<사금융 연체 대출금 상환시기>



<연체 대출금 미상환 이유>



③ (상환능력) 사금융 연체자의 경우 대출상환 가능금액은 월평균 5만원, 정상상환자는 약 62만원

\* 연체자 가구 월평균 가구소득은 166만원, 정상 상환자 월평균 가구 소득은 223만원, 월평균 생활비는 161만원

- 연간 가구소득 대비 총채무액(제도권+등록+무등록)은 100% 미만인 69.8%이고, 100~120%가 5.2%, 120% 이상이 25%

- 사금융 이용자중 6.3%는 무직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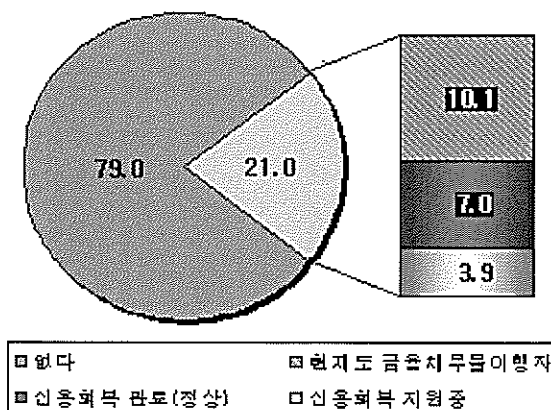
- 현재, 개인의 월평균 부채 상환액은 73만원으로 나타남

④ (금융채무불이행자) 사금융 이용자중 21%는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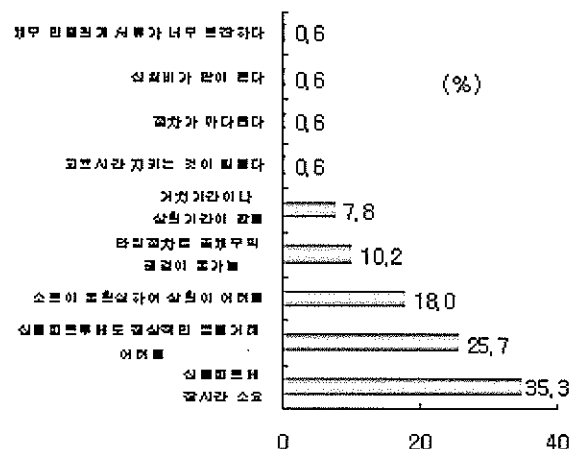
- 이중 현재도 금융채무불이행인 경우는 48.3%, 신용회복 지원 중은 18.4%, 신용회복을 완료하고 정상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는 33.1%로 나타남

- 신용회복 지원제도 이용과 관련한 불편 사항으로 '신용회복에 장시간 소요'(35.3%), '신용회복 이후에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움(25.7%)' 등을 지적

<금융채무불이행자 현황>



<신용회복 지원제도 불편사항>



⑤ (기초수급자) 제도권 금융기관 또는 사금융을 통한 대출이 있는 자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1.5%인 27만명

\*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06년 현재 약 153만명으로 전국민의 3.2% 이지만 소득이 낮아 대출이 어려워 대출자중 비중이 낮음

○ 제도권 금융기관 및 사금융 대출을 연체중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10.3만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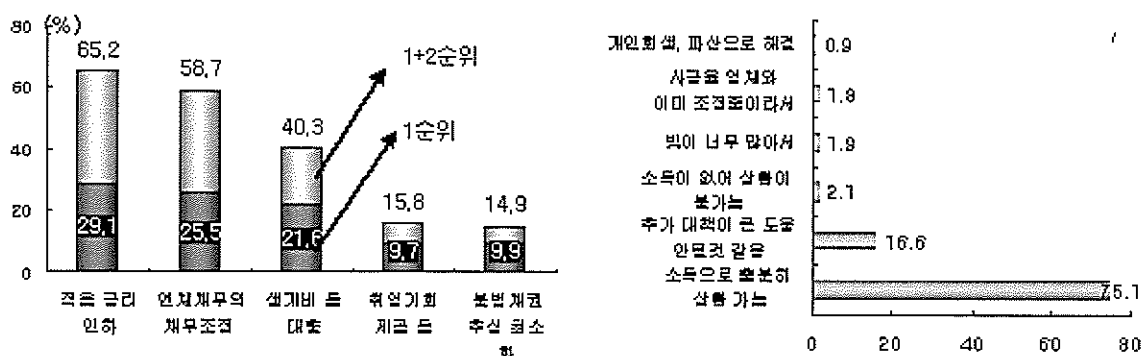
- 제도권 금융기관 및 사금융 대출 연체자(286만명)의 약 3.6%, 대출중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약 38%

⑥ (정부대책) 정부의 추가적인 신용회복 대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61.6%)이 많은 반면, 추가대책 참여 의향은 다소 낮음 (46.2%)

○ 사금융 이용자들이 희망하는 추가 신용회복 대책은 '적용금리 인하', '연체채무의 채무조정(장기분할 상환)', '생계비 대출' 순으로 나타남

○ 추가 신용회복 대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본인의 소득으로 충분히 상환 가능'하기 때문이 대부분 (75.1%)

<희망하는 추가 신용회복 대책> <신용회복 추가대책 비참여 이유>



○ 또한, 정부 자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23.5%가 참여의향을 밝힌 가운데, 창업관련 지원을 주로 희망

\*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 37.3%,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금 대출 32.6%, 중소기업 취업지원 13.3%, 직업훈련 11.9%, 공공근로 4.7%

### Ⅲ. 정책 시사점

#### ① 금융소외자 지원 대상수 추정

전 국 민 4,700 만명	대출 있음 (1,774 만명)	제도권 대출만 있음 (1,646만명)	대부업체 대출 있음(128만명)	
			제도권 대출 있음 (71만명)	제도권 대출 없음 (57만명)
		정상상환 (1,339만명)	정상상환 (49만명)	정상상환 (42만명)
		금융채 무불이행 (240만명)	금융채 무불이행 (20만명) -둘다연체(17만명) -제도권만 연체(3만명)	대부업체 대출 연체 (15만명)
		신용회복중 (67만명)	대부업체 대출만 연체 (2만명)	
	대출없음 (2,926만명)			

➡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및 재정투입 여부  
및 방식 등은 6월중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

## ② 대부업체의 정책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 채무재조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청 대상자의 모든 제도권·사금융 채권을 일괄하여 조정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① 대부업협회와 공동으로 채권매각 등 대부업체가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 노력
  - ② 대부업체로부터 일괄하여 채권을 매입함과 동시에 채무조정 대상자의 다른 사금융 채권도 조정할 수 있도록 개별 매입을 추진하며
  - ③ 불법대부업체의 참여등을 위해 신복위, 대부업 협회 등 민간기구의 채무조정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③ 매입대상 연체채권의 범위

-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 3개월 이상 연체인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로서 금융활동이 제한되므로
  - 금융채무불이행자를 채무조정 대상으로 고려
- (대부업체 대출) 대부업체 연체채권(3개월 이상 연체)중에서 사실상 채권가격이 충분히 낮게 형성되고, 대부업체들도 매각의사를 밝히고 있는 6개월 이상 연체 채권이 정책대상이 될 가능성이 큼
  - \* 대부업체의 경우 6개월 이하의 연체채권은 추심을 통해 어느정도 상환받을 수 있어 매각의사가 없음

#### ④ 사금융 이용자의 상환의지 및 상환능력

- 실태조사 결과 대체로 사금융 이용자들은 상환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
  - 다만, 사금융 연체자의 경우 소득에 비해 채무규모가 커 채무 상환이 어렵다는 답변이 다수
- ➡ 연체 채무자에 대해서는 소득규모에 맞는 상환이 가능하도록 채무를 재조정하여 채무 상환 가능성을 높일 필요

#### ⑤ 사금융 이용자들의 정책 희망사항

- 사금융 이용자들은 적용금리 인하 방안을 가장 선호
  - 현재 사금융시장에서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대출을 제도권 금융기관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조치가 필요
- 또한, 지원제도 시행시 혜택의 폭을 넓히고, 이용을 편리하게 하며,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

#### ⑥ 채무외의 근로 및 창업지원 병행

- 현재 사금융 이용자중 실직자의 비율은 약 6.3%로 실질적인 자활지원과 도덕적 해이 최소화를 위해서는 이들의 상환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지원이 병행될 필요
  - 사금융 이용자들은 자활 지원과 관련하여 근로보다는 창업 지원을 희망
  - 지원제도 참가자중 희망자에 대해서는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창업교육을 완수하고 의지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창업자금을 지원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제4차 ['0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 I. 개 황

※ 보고서를 제출한 10,398개 대부업체 중 대부잔액이 없거나(3,676개사) 작성 오류가 심한 대부업체(64개사) 등 3,740개를 제외한 6,658개만을 대상으로 분석

◇ '08.9월말 현재 분석대상 대부업체의 대부잔액 및 거래자 수는 '08.3월말 대비 증가하였으며,

-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의 대형대부업체로의 집중이 심화\* 되는 추세

\* 전체 대부업체 총 대부금액의 85%를 차지

□ '08.9월말 현재 대부잔액은 5조 6,065억원이고 거래자는 130.7만명으로,

- '08.3월말 대비 금액기준 1.1조원(24.7%), 거래자기준 24.2만명(22.7%) 증가

※ 보고서 제출 업체 증가로 인한 증가분을 제외할 경우 각각 12.2%(금액), 20.3%(거래자) 증가하였으며 자산규모 70억원이상 대형 대부업체의 증가분이 90% 이상을 차지

- 1인당 대출금액은 4.3백만원으로 '08.3월말(4.2백만원)과 비슷한 수준

□ 신용대출이 3조 5,800억원으로 전체의 63.9%를 차지하고, 담보대출은 2조 265억원으로 36.1% 차지('08.3월말 각각 61.7%, 38.3%)

## Ⅱ. 대부업체 규모별 조사 결과

### 가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 대출 현황

- ☐ (대부금액) '08.9월말 현재 자산규모 70억원이상 대부업체(83개사)의 대부잔액은 4조 7,675억원으로 전체 대부금액의 85.0%
  - 거래자수는 106.8만명으로 전체 거래자의 81.7% 수준
- ☐ (대출형태) 신용대출이 3조 2,073억원으로 이들 업체 총 대부금액의 67.2%를 차지하고 담보대출은 1조 5,602억원으로 32.8%
  - 신용대출 중 개인신용대출은 2조 6,080억원(81.3%), 법인신용대출은 5,993억원(18.7%)
- ☐ (대출금리) 개인신용대출 평균금리는 45.3% 수준
- ☐ (5백만원이하 대출현황) 전체 거래자(106.8만명) 중 5백만원 이하 거래자가 102.1만명으로 95.6% 차지('08.3월말 78만명)
  - 5백만원 이하 대출금은 2조 2,374억원으로 총 대출금의 46.9%를 차지('08.3월말 45.2%)

※ 5백만원 이하 거래자 1인당 대출금액 : 2.2백만원
- ☐ (신규대출 직업별·용도별 현황) '08.1~6월 중 신규대출금액은 1조 2,324억원(42사 대부업체 응답)이며 이 중,
  - 회사원이 받은 대출금액은 4,618억원(37.5%)이며 대출금 사용용도는 사업자금이 5,602억원(45.5%) 차지



## 신규대출자의 직업 및 신규대출금의 사용용도 분포('08.1~6월)

(단위 : 억원, %)

신규대출금(비율)	자영업자	회사원	학생, 주부	공무원	기타
12,324(100)	1,973(16.0)	4,618(37.5)	655(5.3)	146(1.2)	4,932(40.0)

(단위 : 억원, %)

신규대출금(비율)	사업자금	타대출 상환	생활비	물품구매	기타
12,324(100)	5,602(45.5)	1,054(8.5)	1,985(16.1)	193(1.6)	3,490(28.3)

### 나 자산 70억원 미만 대부업체 대출 현황

- (대부금액) 소규모법인 대부업체(387개사)의 대부잔액은 4,563억원으로 전체 대부금액의 8.2%이고,
  - 거래자수는 6.7만명으로 전체 거래자의 5.1% 수준
  - 신용대출이 2,162억원으로 이들 업체 총 대부금액의 47.4%를 차지하고 담보대출은 2,401억원으로 52.6%

### 다 개인 대부업자 대출 현황

- (대부금액) 개인 대부업자(6,188개)의 대부잔액은 3,827억원으로 전체 대부금액의 6.8%이고,
  - 거래자수는 17.2만명으로 전체 거래자의 13.2% 수준
  - 신용대출이 1,565억원으로 이들 업체 총 대부금액의 40.9%를 차지하고 담보대출은 2,262억원으로 59.1%

# 제5차 ('09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 I. 개 요

□ '09. 3월말 현재 등록 대부업체는 15,723개로 '08. 9월말 (16,120개) 대비 2.5% (△397개) 감소\*

\* 자진 등록취소 및 지자체에서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대부업체를 직권 등록취소함에 따라 개인 대부업체가 큰폭으로 줄어든 데 기인

- '08. 3월말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 '08. 3월말 17,713개 → '08. 9월말 16,120개

□ 이중 10,632개 업체가 보고서 제출\* (응답률 67.6%) 하여 '08. 9월말 (64.5%) 대비 3.1%p (234개) 상승

\* 자산 70억원 이상 96개, 자산 70억원 미만 849개, 개인 9,687개

※ 보고서 제출율 : '08. 3월말 53.3% → '08. 9월말 64.5%

### 실태조사 보고서 제출 현황

(단위 : 개, %, %p)

구 분		'08. 9월말 (A)		'09. 3월말 (B)		증 감 (B-A)	
		등 록	제 출 (율)	등 록	제 출 (율)	등 록	제 출 (율)
법 인	자산 70억원이상	92	91 (98.9)	100	96 (96.0)	8	5 (△29)
	자산 70억원미만	1,107	813 (73.4)	1,131	849 (75.0)	24	36 (1.6)
개 인		14,921	9,494 (63.6)	14,492	9,687 (66.8)	△429	193 (3.2)
합 계		16,120	10,398 (64.5)	15,723	10,632 (67.6)	△397	234 (3.1)

## II.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10,632개중 대출잔액이 없거나(2,744개) 작성 오류가 심한 업체(62개) 등 2,806개를 제외한 7,826개를 대상으로 분석('08.9월말기준 분석대상 대비 1,168개 증가)

### 1 전국 대부업체 영업 현황

#### 대출 및 거래자 현황

□ '09.3월말 현재 7,826개 분석대상 대부업체가 1,431,656명에게 5조 1,576억원을 대출

○ '08.9월말 대비 보고서 분석대상 업체가 증가(1,168개) 하였음에도 대출금은 감소\* (△8.0%, △0.4조원)

※ 보고서 분석대상업체수 증가분(1,168개)을 제외할 경우에도 대출금은 감소 (△1.8%, △858억원)

○ 한편, 자산 7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가 소액신용대출 위주 영업을 계속 확대함에 따라 시장지배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

□ 1인당 대출금은 3.6백만원으로 '08.9월말(4.3백만원) 대비 70만원 감소

#### 규모별 거래자 및 대출금 현황

(단위 : 명, 억원, %)

구 분	거 래 자			대 출 금			1인당 대출금 (백만원)
	'08.9월말	'09.3월말	증 감 (율)	'08.9월말	'09.3월말	증 감 (율)	
자산 70억원 이상	1,068,118	1,212,652	144,534 (13.5)	47,675	44,748	△2,927 (△6.1)	3.7
자산 70억원 미만	66,946	55,725	△11,221 (△16.8)	4,563	3,092	△1,471 (△32.2)	5.5
개 인	172,207	163,279	△8,928 (△5.2)	3,827	3,737	△90 (△2.4)	2.3
합 계	1,307,271	1,431,656	124,385(9.5)	56,065	51,576	△4,489(△8.0)	3.6

## 형태별 대출금 및 대출금리 현황

- 신용대출이 4조 361억원으로 전체 대출금(5조 1,576억원)의 78.3%를 차지하고, 담보대출이 1조 1,215억원으로 21.7%를 차지
  - '08. 9월말 대비 신용대출은 증가\* (12.7%, 4,561억원) 하였으나, 담보대출은 감소 (△44.7%, △9,050억원)
- \* 대형 대부업체가 소액신용대출 위주로 영업을 확대한 데 기인
- 1인당 평균 신용대출금은 3백만원이고, 담보대출금은 9백만원
-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38.4%로 '08. 9월말 대비 0.5%p 하락 하였으며, 담보대출 평균 금리 (15.6%) 도 1.1%p 하락

## 형태별 대출금 및 대출금리 현황

(단위 : 억원, %, %p)

구 분		'08. 9월말 (A)	'09. 3월말 (B)	증 감 (B-A)
자산 70억원 이상	신용대출금	32,073	36,802	4,729
	금 리	38.9	38.4	△0.5
	담보대출금	15,602	7,946	△7,656
	금 리	11.1	10.2	△0.9
자산 70억원 미만	신용대출금	2,162	1,928	△234
	금 리	35.4	34.1	△1.3
	담보대출금	2,401	1,164	△1,237
	금 리	31.9	30.2	△1.7
개 인	신용대출금	1,565	1,631	66
	금 리	43.1	42.3	△0.8
	담보대출금	2,262	2,106	△156
	금 리	39.0	37.7	△1.3
합 계	신용대출금	35,800	40,361	4,561
	금 리	38.9	38.4	△0.5
	담보대출금	20,265	11,215	△9,050
	금 리	16.7	15.6	△1.1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 96개가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겸업업체로서 대출잔액이 없는 8개를 제외한 88개를 대상으로 분석('08.9월말기준 분석대상 대비 5개 증가)

### 대출 상대별 현황

- '09.3월말 현재 자산규모 7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대출금은 4조 4,748억원으로 전체 대부업체의 86.8%를 차지
    - 거래자수는 1,212,652명으로 전체 거래자의 84.7%
    - 대출금 및 거래자 비중 모두 '08.9월말 (85.0%, 81.7%) 대비 증가
  - 신용대출은 3조 6,802억원으로 이들 대부업체 총 대출금의 82.2%를 차지하고, 전체 대부업체 신용대출금 (4조 361억원)의 91.2% 차지
    - 담보대출은 7,946억원으로 이들 대부업체 총 대출금의 17.8%
- ※ 신용대출거래자 : 1,206,604명 (99.5%), 담보대출거래자 6,408명 (0.5%)

###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대출상대별 대출현황

(단위 : 명, 억원, %)

구 분		거 래 자			대 출 금		
		'08. 9월말	'09. 3월말	증 감 (율)	'08. 9월말	'09. 3월말	증 감 (율)
개 인	신 용	1,055,837	1,203,311	147,474(14.0)	26,080	29,563	3,483(13.4)
	담 보	6,358	4,434	△1,924(△30.3)	8,827	5,924	△2,903(△32.9)
	소 계	1,062,195	1,207,745	145,550(13.7)	34,907	35,487	580(1.7)
법 인	신 용	4,685	3,293	△1,392(△29.7)	5,993	7,239	1,246(20.8)
	담 보	1,238	1,614	376(30.4)	6,775	2,021	△4,754(△70.2)
	소 계	5,923	4,907	△1,016(△17.2)	12,768	9,261	△3,507(△27.5)
전 체	신 용	1,060,522	1,206,604	146,082(13.8)	32,073	36,802	4,729(14.7)
	담 보	7,596	6,048	△1,548(△20.4)	15,602	7,946	△7,656(△49.1)
	계	1,068,118	1,212,652	144,534(13.5)	47,675	44,748	△2,927(△6.1)

## 대출금액별 현황

□ 차주 1인당 5백만원 이하 대출은 2조 5,106억원으로 이들 업체 총 대출의 56.1%를 차지 ('08. 9월말 46.9%)

○ 5백만원 이하 신용대출 (2조 5,076억원) 은 전체 신용대출금의 68.1%를 차지

※ 5백만원 이하 거래자의 1인당 평균 대출금은 2.2백만원

###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금액대별 대출금 현황

(단위 : 명, 억원, %)

구 분	5백만원 이하 거래자 (비율)		5백만원 이하 대출금 (비율)	
	'08. 9월말	'09. 3월말	'08. 9월말	'09. 3월말
신용대출	1,018,978 (96.1)	1,155,104 (95.7)	22,327 (70.6)	25,076 (68.1)
담보대출	2,076 (27.3)	2,121 (35.1)	47 (0.3)	30 (0.4)
합 계	1,021,054 (95.6)	1,157,225 (95.4)	22,374 (46.9)	25,106 (56.1)

주 : ( )내는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신용, 담보, 총대출에서 5백만원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임

## 연체 현황

□ '09.3월말 현재 연체율\*은 17.9%로 '08. 9월말 (13.9%) 대비 4.0%p 상승

\* 1일 이상 연체율

○ 담보대출 연체율 (38.8%)이 신용대출 연체율 (13.6%)의 3배 수준

###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연체율 현황

(단위 : 억원, %, %p)

구 분		'08. 9월말 연체비율 (A)	'09. 3월말			비율증감 (B-A)
			전 체	연 체	비 율 (B)	
대출금	신용대출	10.2	35,009	4,751	13.6	3.4
	담보대출	21.5	7,246	2,808	38.8	17.3
	계	13.9	42,255	7,560	17.9	4.0
거래자	신용대출	9.1	1,204,868	159,188	13.2	4.1
	담보대출	23.1	6,048	1,870	30.9	7.8
	계	9.2	1,210,916	161,058	13.3	4.1

## 신규대출 이용자

- '08. 10월 ~ '09. 3월중 신규대출 (6,870억원) 이용자의 40.4% (2,776억원)가 회사원이고, 15.7% (1,079억원)는 자영업자임
- 주요 대출 목적으로는 생활비 충당 (1,937억원, 28.2%) 및 사업자금 조달(1,819억원, 26.5%)이 많음

### 대출이용자별 신규대출 현황

(단위 : 억원, %)

직업	대출목적					계 (점유비)
	사업자금	타대출상환	물품구매	생활비	기타	
자영업	564	78	16	135	286	1,079 (15.7)
공무원	29	165	19	182	428	823 (12.0)
회사원	117	375	178	1,338	768	2,776 (40.4)
학생·주부	21	40	13	216	216	506 (7.4)
기타	1,088	71	80	66	381	1,686 (24.5)
합계	1,819	729	306	1,937	2,079	6,870 (100.0)

## 대출이용기간

- '08. 10월 ~ '09. 3월 이용자 (대출상환액 기준) 중 46% (5,874억원)는 3개월내 대출금을 상환하고, 1년 초과도 25.1% (3,200억원)나 됨

### 대출상환액의 대출기간별 현황

(단위 : 억원, %)

대출상환액	3월 미만	3~6월 미만	6~12월 미만	1년 이상
12,772	5,874	1,473	2,223	3,200
(비율)	(46.0)	(11.5)	(17.4)	(25.1)

자산 70억원 미만 대부업체는 296개 ('08.9월 대비 91개 감소), 개인 대부업체는 7,442개 ('08.9월 대비 1,254개 증가)를 대상으로 분석

### 대출 및 거래자 현황

□ 자산 70억원 미만 대부업체 (296개)의 대출금은 3,092억원으로 전체 대부업체 대출금의 6.0% 차지

○ 업체당 평균 대출금은 10.4억원\*, 평균 거래자수는 188명

\* 이들 업체는 신용대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 여의치 않아 신용대출 비중이 62.4%로 전체 평균 (82.2%) 보다 낮은 등 담보대출 위주로 영업

○ 거래자 1인당 평균 대출금은 5.5백만원

□ 개인 대부업체 (7,442개)의 대출금은 3,737억원으로 전체 대부업체 대출금의 7.3% 차지

○ 개인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금은 50백만원, 평균 거래자수는 22명

○ 거래자 1인당 평균 대출금은 2.3백만원

### 자산 70억원 미만 및 개인 대부업체의 거래자 및 대출금 현황

(단위 : 건, 억원, %, %p)

구 분	자산 70억 미만			개 인		
	'08.9월말	'09.3월말	증 감	'08.9월말	'09.3월말	증 감
거래자	66,946	55,725	△ 11,221	172,207	163,279	△ 8,928
대출금	4,563	3,092	△ 1,471	3,827	3,737	△ 90
신용 (점유비)	2,296 (50.3)	1,928 (62.4)	△ 368	1,565 (40.9)	1,631 (43.6)	66
담보 (점유비)	2,267 (49.7)	1,164 (37.6)	△ 1,103	2,262 (59.1)	2,106 (56.4)	△ 156
1인당 대출금	6.8	5.5	△ 1.3	2.2	2.3	0.1



## 지역별 현황

- 자산 70억원 미만 대부업체 (296개) 는 서울 (166개, 56.1%), 경기 (42개, 14.2%), 인천 (8개, 2.7%) 등 수도권이 216개로 73%를 차지

※ 개인 대부업체 (7,442개) 는 수도권이 3,739개로 50.2%를 차지

- 거래자 (55,725명) 는 서울 (40,518명, 72.7%), 경기 (3,355명, 6.0%), 인천 (1,601명, 2.9%) 등 수도권이 45,474명으로 81.6% 차지

※ 개인 대부업체 거래자 (163,279명) 는 수도권이 73,002명으로 44.7% 차지

- 대출금 (3,092억원) 은 서울 (2,218억원, 71.7%), 경기 (289억원, 9.4%), 인천 (167억원, 5.4%) 등 수도권이 2,674억원으로 86.5% 차지

※ 개인 대부업체 대출금 (3,737억원) 은 수도권이 2,613억원으로 69.9% 차지

### 자산 70억 미만 및 개인 대부업체의 지역별 대출현황

(단위 : 건,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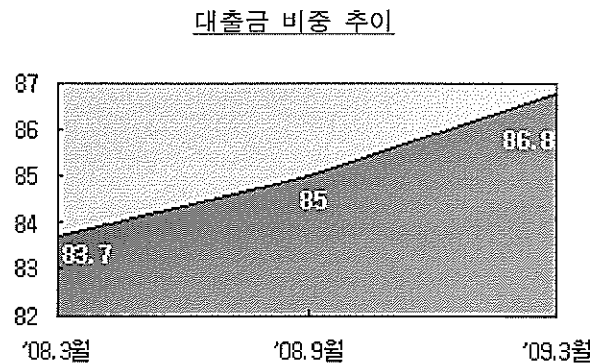
구 분	자산 70억 미만 법인				개 인			
	업체수	거래자수	대출금	1인당대출금 (백만원)	업체수	거래자수	대출금	1인당대출금 (백만원)
서울	166	40,518	2,218	5.5	2,052	35,064	1,685	4.8
경기	42	3,355	289	8.6	1,416	29,567	807	2.7
인천	8	1,601	167	10.4	271	8,371	121	1.4
강원	4	75	11	14.7	250	4,811	93	1.9
충북	3	78	2	2.6	185	2,162	49	2.3
충남	11	360	42	11.7	274	2,278	73	3.2
대전	7	342	25	7.3	271	4,287	99	2.3
전북	6	504	46	9.1	151	1,878	59	3.1
전남	0	0	0	0	219	3,762	43	1.1
광주	5	59	3	5.1	190	4,623	80	1.7
경북	1	58	4	6.9	238	5,410	76	1.4
대구	9	212	31	14.6	537	12,970	85	0.7
경남	4	898	31	3.5	352	11,679	114	1.0
부산	22	7,158	151	2.1	734	29,802	253	0.8
울산	3	260	20	7.7	249	5,048	65	1.3
제주	5	247	52	21.1	53	1,567	38	2.4
계	296	55,725	3,092	5.5	7,442	163,279	3,737	2.3

### Ⅲ. 평가 및 시사점

#### □ (대출규모) 대형 대부업체로의 집중도 지속

- 최고 이자율 인하(66% → 49%) 및 금융위기로 인한 자금조달의 어려움, 홍보효과 등으로 자본력이 풍부한 대형 대부업체로의 집중화가 점차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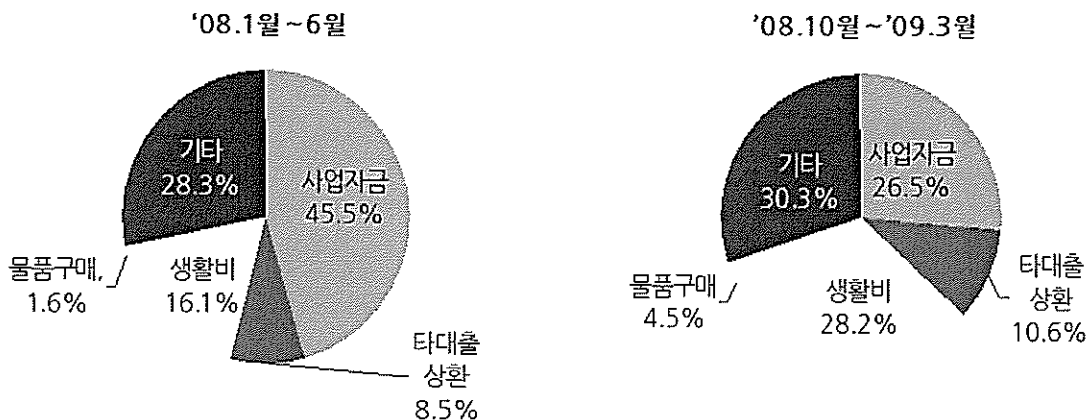
<자산 7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의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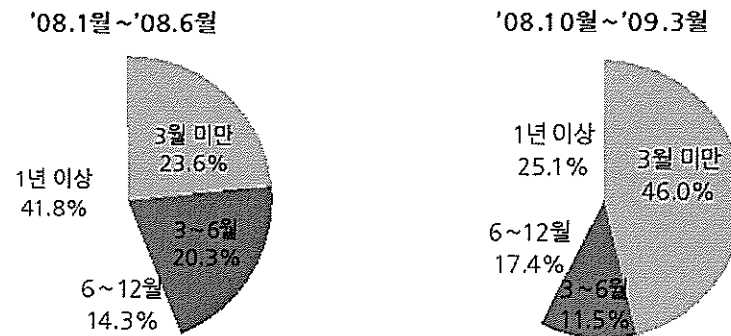
- ⇒ 특히, '08년 말 이후 검찰·경찰의 불법 사금융 집중단속으로 불법 대부업체의 영업이 제한을 받게 되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는 대형 대부업체의 상대적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 □ (대출형태) 신용대출 및 단기·소액 대출의 비중 증가

- 경기침체에 따라 생활비관련 대출은 증가한 반면, 사업자금 관련 대출은 큰 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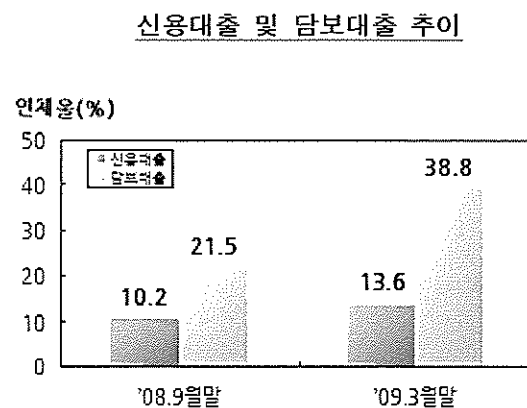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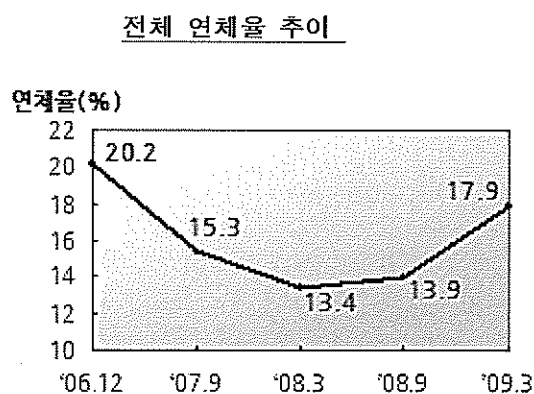
- '08.1월 ~ 6월 기간중에는 1년이상 이용자가 41.8%로 가장 많았으나, '08.10월 ~ '09.3월 기간에는 3월 미만 이용자가 46.0%로 가장 많았음



- 경기침체로 인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출 수요 증가와 더불어 법인 대부업체들의 보수적(소액화) 운용에 따라 단기·소액·신용대출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

#### □ (연체율 상승)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형 법인의 연체율 상승

- 특히, 담보대출 연체율(38.8%)이 신용대출 연체율(13.6%)의 3배 수준



- 담보대출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소득원은 적으나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신용대출보다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제6차 ('09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 I. 개 요

□ '09.12월말 현재 등록 대부업자는 14,783개사로 '09.3월말 (15,723개) 대비 6.0% (△940개) 감소

○ 영업형태별로는 대부업체가 10,904개, 대부 및 대부중개 겸업업체가 2,075개, 대부중개업체가 1,804개임

□ 이중 10,554개 업체가 보고서를 제출\* (응답률 71.4%) 하여 '09.3월말 (67.6%) 대비 3.8%p 상승

\* 자산 70억원 이상 100개, 자산 70억원 미만(지점포함) 920개, 개인 9,534개

※ 보고서 제출율 : '08.9월말 64.5% → '09.3월말 67.6% → '09.12월말 71.4%

### 실태조사 보고서 제출 현황

(단위 : 개, %, %p)

구 분		'09.3월말 (A)		'09.12월말 (B)		증 감 (B-A)	
		등 록	제 출 (율)	등 록	제 출 (율)	등 록	제 출 (율)
법 인	자산 70억원 이상	100	96 (96.0)	100	100 (100.0)	-	4 (4.0)
	자산 70억원 미만	1,131	849 (75.0)	1,251	920 (73.5)	120	71 (△1.5)
개 인		14,492	9,687 (66.8)	13,432	9,534 (71.0)	△1,060	△153 (4.2)
합 계		15,723	10,632 (67.6)	14,783	10,554 (71.4)	△940	△78 (3.8)

## II.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10,554개사중 대출잔액이 없거나(2,710개) 작성 오류가 심한 업체(151개) 등 3,094개사를 제외한 **7,460개사**(대부업 6,688개, 대부중개업 610개, 겸업 162개)를 대상으로 분석

### 1 전국 대부업체 영업 현황

#### 대출 현황

□ '09.12월 말 현재 **6,850개\*** 대부업체가 **1,674,437명**에게 **5조 9,114억원**을 대출

\* 분석대상업체 7,460개 중 대부중개업체(610개) 제외

○ '09.3월말 대비 분석업체가 감소(△976개) 하였음에도 대출금은 증가(↑14.6%, ↑7,538억원)

- '09.3월 실태조사 분석대상과 동일한 업체(3,206개)의 대출추이 비교시에도 '09.3월말 대비 증가(↑7,581억원)

□ **1인당 대출금은 3.5백만원**으로 '09.3월말(3.6백만원) 대비 **10만원 감소**

○ 일부 대형 대부업체에서 소액 신용대출 영업을 확대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

#### 규모별 거래자 및 대출금 현황

(단위 : 명, 억원, %)

구 분	거 래 자			대 출 금			1인당 대출금 (백만원)
	'09.3월말	'09.12월말	증 감(율)	'09.3월말	'09.12월말	증 감(율)	
자산 70억원 이상	1,212,652	1,397,805	185,153 (15.3)	44,748	50,722	5,974 (13.4)	3.6
자산 70억원 미만	55,725	106,590	50,865 (91.3)	3,092	4,627	1,535 (49.6)	4.3
개 인	163,279	170,042	6,763 (4.1)	3,737	3,765	28 (0.7)	2.2
합 계	1,431,656	1,674,437	242,781 (17.0)	51,576	59,114	7,538 (14.6)	3.5

## 형태별 대출금 및 대출금리 현황

- 신용대출이 4조 6,445억원으로 전체 대출금 (5조 9,114억원) 의 78.6%를 차지하고, 담보대출이 1조 2,669억원으로 21.4%를 차지
  - '09.3월말 대비 신용대출은 15.1% (↑6,084억원), 담보대출은 13.0% 증가 (↑1,454억원)
- 1인당 평균 신용대출금은 3백만원이며, 담보대출금은 1천만원
-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41.2%로 '09.3월말 대비 2.8%p 상승\* 하였으며, 담보대출 평균 금리 (19.5%) 도 3.9%p 상승\*\*

\* 고금리 신용대출(법정최고이자 49% 수취) 취급 대형 대부업체들이 영업을 확대한 데 기인

\*\* 일부 저금리(10%미만) 담보대출 취급 업체가 신규대출을 제한하여 대출 비중이 줄어든 데 기인

## 형태별 대출금 및 대출금리 현황

(단위 : 억원, %, %p)

구 분		'09.3월말 (A)	'09.12월말 (B)	증 감 (B-A)
자산 70억원 이 상	신용대출금	36,802	42,152	5,350
	금 리	38.4	41.6	3.2
	담보대출금	7,946	8,570	624
	금 리	10.2	12.4	2.2
자산 70억원 미 만	신용대출금	1,928	2,790	862
	금 리	34.1	37.9	3.8
	담보대출금	1,164	1,837	673
	금 리	30.2	36.6	6.4
개 인	신용대출금	1,631	1,503	△128
	금 리	42.3	35.7	△6.6
	담보대출금	2,106	2,262	156
	금 리	37.7	32.6	△5.1
합 계	신용대출금	40,361	46,445	6,084
	금 리	38.4	41.2	2.8
	담보대출금	11,215	12,669	1,454
	금 리	15.6	19.5	3.9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 100개사가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추심업체, 검업업체로서 대출잔액이 없는 업체 등 21개사를 제외한 79개사를 대상으로 분석

## 대출 현황

- '09.12월말 현재 자산규모 70억원 이상 대부업체 (79개) 의 대출금은 5조 722억원으로 전체 대부업체의 85.8%를 차지
  - 거래자수는 1,397,805명으로 전체 거래자의 83.5%
  - 대출금 및 거래자 모두 '09.3월말 대비 증가 (각 ↑13.4%, ↑15.3%)
    - 업체당 평균 대출금은 642억원, 평균 거래자는 17,694명
- 신용대출 (4조 2,152억원) 은 이들 대부업체 총 대출금의 83.1%를 차지하고, '09.3월말 대비 14.5% 증가
  - 담보대출 (8,570억원, 총 대출의 16.9%) 은 '09.3월말 대비 7.9% 증가
- 개인대출은 증가\* (↑20.1%) 한 반면, 법인대출은 감소 (△12.6%)

\* 대형 대부업체가 개인신용대출 (↑24.2%) 위주로 영업을 확대한 데 기인

###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대출상대별 대출현황

(단위 : 명, 억원, %)

구 분		거 래 자			대 출 금		
		'09.3월말	'09.12월말	증 감 (율)	'09.3월말	'09.12월말	증 감 (율)
개 인	신 용	1,203,311	1,385,649	182,338 (15.2)	29,563	36,707	7,144 (24.2)
	담 보	4,434	7,156	2,722 (61.4)	5,924	5,919	△5 (△0.1)
	소 계	1,207,745	1,392,805	185,060 (15.3)	35,487	42,626	7,139 (20.1)
법 인	신 용	3,293	3,587	294 (8.9)	7,239	5,445	△1,794 (△24.8)
	담 보	1,614	1,413	△201 (△12.5)	2,021	2,651	630 (31.2)
	소 계	4,907	5,000	93 (1.9)	9,261	8,096	△1,165 (△12.6)
전 체	신 용	1,206,604	1,389,236	182,632 (15.1)	36,802	42,152	5,350 (14.5)
	담 보	6,048	8,569	2,521 (41.7)	7,946	8,570	624 (7.9)
	계	1,212,652	1,397,805	185,153 (15.3)	44,748	50,722	5,974 (13.4)

## 대출금액별 현황

- 차주 1인당 5백만원 이하 대출금은 3조 428억원으로 이들 업체 총 대출의 60.0%를 차지('09.3월말 56.1%)
  - 5백만원 이하 대출 중 신용대출 (3조 359억원) 이 99.8%를 차지
  - 5백만원 이하 거래자의 1인당 평균 대출금은 2.3백만원

##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금액대별 대출금 현황

(단위 : 명, 억원, %)

구 분	5백만원 이하 거래자 (비율)		5백만원 이하 대출금 (비율)	
	'09.3월말	'09.12월말	'09.3월말	'09.12월말
신용대출	1,155,104 (95.7)	1,309,488 (94.3)	25,076 (68.1)	30,359 (72.0)
담보대출	2,121 (35.1)	3,155 (36.8)	30 (0.4)	69 (0.8)
합 계	1,157,225 (95.4)	1,312,643 (93.9)	25,106 (56.1)	30,428 (60.0)

주 : ( )내는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신용·담보·총대출에서 5백만원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임

## 연체 현황

- '09.12월말 연체율은 13.2%로 '09.3월말 (17.9%) 대비 4.7%p 하락
  - 연체율 하락은 대출금이 증가(↑5,974억원) 하고, 연체금이 감소(△1,313억원) 한 데 기인

※ 영업유형별 연체율 : 전업업체 13.9%, 겸업업체 4.6%

##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연체율 현황

(단위 : 억원, %, %p)

구 분		'09.3월말 연체비율 (A)	'09.12월말			비율증감 (B-A)
			전 체	연 체	비 율 (B)	
대출금	신용대출	13.6	42,152	4,672	11.1	△2.5
	담보대출	38.8	8,570	2,025	23.6	△15.2
	계	17.9	50,722	6,697	13.2	△4.7
거래자	신용대출	13.2	1,389,236	165,268	11.9	△1.3
	담보대출	30.9	8,569	3,312	38.7	7.8
	계	13.3	1,397,805	168,580	12.1	△1.2



## 신규대출 이용자

- '09.7월 ~ '09.12월중 신규대출 (1조 3,685억원) 이용자의 57.4% (7,855억원)가 회사원이고, 18.9% (2,582억원)는 자영업자임
- 주요 대출 목적으로는 생활비 충당 (4,583억원, 33.5%) 및 사업자금 조달 (2,760억원, 20.2%) 이 많음

### 대출이용자별 신규대출 현황

(단위 : 억원, %)

직업	대출목적					계 (점유비)
	사업자금	타대출상환	물품구매	생활비	기타	
자영업	1,018	300	63	500	701	2,582 (18.9)
공무원	17	83	13	182	118	413 (3.0)
회사원	408	1,353	361	3,333	2,400	7,855 (57.4)
학생·주부	69	88	16	394	248	815 (6.0)
기타	1,248	93	86	174	419	2,020 (14.7)
합계	2,760	1,917	539	4,583	3,886	13,685 (100.0)

## 대출이용기간

- '09.7월 ~ '09.12월 이용자 (대출상환액 기준) 중 45.2% (4,192억원)는 1년 이상 거래를 유지하고, 24.3% (2,252억원)는 3개월 내 상환

### 대출상환액의 대출기간별 현황

(단위 : 억원, %)

대출상환액	3월 미만	3~6월 미만	6~12월 미만	1년 이상
9,266	2,252	1,304	1,518	4,192
(비율)	(24.3)	(14.1)	(16.4)	(45.2)

주 : 평균대출기간을 응답한 63개사의 '09.7~12월 중 대출상환액 기준임

## 업체별 현황

- 영업형태별로는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 (79개) 중 전업업체가 55개사 (69.6%), 겸업업체\*가 24개사 (30.4%)

\* 대부업 이외 제조업 등 기타 영업을 겸영하는 경우 겸업업체로 분류

- 전업업체 대출금이 4조 6,959억원으로 이들 업체 대출금의 92.6%를 차지 (겸업업체 : 대출금 3,763억원, 비중 7.4%)

※ 1인당 대출금 : 전업업체 (3.5백만원), 겸업업체 (8.4백만원)

###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 전업·겸업업체 대출현황

(단위 : 명, 억원, %)

구 분	전업업체 (55사)	겸업업체 (24사)	합 계 (79사)
거래자	1,353,173 (96.8)	44,632 (3.2)	1,397,805 (100.0)
대출금	46,959 (92.6)	3,763 (7.4)	50,722 (100.0)

주 : ( )내는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 전체 거래자, 대출금에서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임

- 한편, 취급상품별로는 신용대출 전문업체\*가 43개사 (54.4%), 담보대출 전문업체가 26개사 (32.9%), 신용 및 담보대출 전문업체가 10개사 (12.7%)

\* 전체 대출금중 해당 대출금 비중이 80% 이상인 경우 전문업체로 분류

- 대출금은 신용대출업체가 82.8% (4조 2,005억원), 담보대출업체가 14.3% (7,240억원), 신용 및 담보대출업체가 2.9% (1,477억원)

※ 1인당 대출금 : 신용대출업체 (3백만원), 담보대출업체 (53백만원),  
담보 및 신용대출 업체 (42백만원)

###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영업형태별 대출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신용대출업체 (43사)	담보대출업체 (26사)	신용및담보대출업체 (10사)	합 계 (79사)
거래자	1,380,677 (92.7)	13,589 (1.0)	3,539 (0.3)	1,397,805 (100.0)
대출금	42,005 (82.8)	7,240 (14.3)	1,477 (2.9)	50,722 (100.0)

주 : ( )내는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 전체 거래자, 대출금에서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산 70억원 미만 대부업체는 411개사 (대부업 395개, 중개업겸업 16개), 개인 대부업자는 6,360개사 (대부업 6,214개, 중개업겸업 146개)를 대상으로 분석

## 대출 현황

- 자산 70억원 미만 대부업체 (411개)의 대출금은 4,627억원으로 전체 대부업체 대출금의 7.8% 차지
  - 업체당 평균 대출금은 11.3억원, 평균 거래자수는 259명
  - 거래자 1인당 평균 대출금은 4.3백만원
- 개인 대부업자 (6,360개)의 대출금은 3,765억원으로 전체 대부업체 대출금의 6.4% 차지
  - 개인 대부업자의 평균 대출금은 59백만원, 평균 거래자수는 27명
  - 거래자 1인당 평균 대출금은 2.2백만원
- 자산 70억원 미만(60.3%) 및 개인 대부업자(39.9%)의 신용대출 비중은 자산 70억원 이상 업체 신용대출 비중(90.8%)을 크게 하회
  - 신용대출의 경우 담보대출에 비해 대출심사 노하우, 전산시스템 구축 필요 등 인적·물적 설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요구되어 영세업체의 경우 신용대출 취급이 어려움

### 자산 70억원 미만 및 개인 대부업자의 거래자 및 대출금 현황

(단위 : 명, 억원, %, %p)

구 분	자산 70억 미만			개 인		
	'09.3월말	'09.12월말	증 감	'09.3월말	'09.12월말	증 감
거래자	55,725	106,590	50,865	163,279	170,042	6,763
대출금	3,092	4,627	1,535	3,737	3,765	28
신용 (점유비)	1,928 (62.4)	2,790 (60.3)	862(△21)	1,631 (43.6)	1,503 (39.9)	△128(△37)
담보 (점유비)	1,164 (37.6)	1,837 (39.7)	673 (2.1)	2,106 (56.4)	2,262 (60.1)	156 (3.7)
1인당 대출금	5.5	4.3	△1.2	2.3	2.2	△0.1

## 지역별 현황

- 자산 70억원 미만 대부업체 (411개) 는 서울 (231개, 56.2%), 경기 (66개, 16.1%), 인천 (13개, 3.2%) 등 수도권이 310개로 75.5%를 차지
  - 개인 대부업자(6,360개)는 수도권이 3,319개로 52.1%를 차지
- 거래자 (106,590명) 는 서울 (71,314명, 66.9%), 경기 (7,161명, 6.7%), 인천 (2,643명, 2.5%) 등 수도권이 81,118명으로 76.1% 차지
  - 개인 대부업자 거래자(170,042명)는 수도권이 85,904명으로 50.5% 차지
- 대출금(4,627억원)은 서울 (3,491억원, 75.4%), 경기 (417억원, 9.0%), 인천 (201억원, 4.3%) 등 수도권이 4,109억원으로 88.8% 차지
  - 개인 대부업자 대출금(3,765억원)은 수도권이 2,654억원으로 70.5% 차지

### 자산 70억 미만 및 개인 대부업자의 지역별 현황

(단위 : 개, 명, 억원)

구 분	자산 70억원 미만 법인				개 인			
	업체수	거래자수	대출금	1인당대출금 (백만원)	업체수	거래자수	대출금	1인당대출금 (백만원)
서울	231	71,314	3,491	4.9	1,864	45,654	1,742	3.8
부산	21	19,466	163	0.8	686	27,973	278	1.0
대구	12	898	34	3.8	320	12,549	91	0.7
인천	13	2,643	201	7.6	264	9,829	142	1.4
광주	15	407	25	6.1	155	3,587	78	2.2
대전	16	2,890	134	4.6	280	4,228	87	2.1
울산	1	3	0.05	1.7	153	4,607	45	1.0
경기	66	7,161	417	5.8	1,191	30,421	770	2.5
강원	3	41	8	19.5	218	4,022	75	1.9
충북	1	45	1	2.2	160	2,673	55	2.1
충남	9	353	22	6.2	183	2,520	91	3.6
전북	6	263	13	4.9	153	1,991	54	2.7
전남	1	21	0.03	0.1	120	2,089	39	1.9
경북	3	67	13	19.4	200	4,264	57	1.3
경남	7	665	45	6.8	373	12,620	143	1.1
제주	6	353	59	16.7	40	1,015	18	1.8
계	411	106,590	4,627	4.3	6,360	170,042	3,765	2.2

법인 대부중개업체 54개사(중개업 38개, 대부업겸업 16개), 개인 대부중개업체 718개사(중개업 572개, 대부업겸업 146개)를 대상으로 분석

□ '09.7월 ~ '09.12월중 대부중개업체 (772개)의 대부중개 금액은 7,479억원 (중개건수 250,814건)

○ 법인 업체 (54개)의 대부중개 금액은 6,131억원, 중개건수는 225,891건

- 중개실적 상위 4개 업체가 전체 중개금액의 66.8%(4,999억원) 차지

○ 개인업체 (718개)의 대부중개 금액은 1,348억원 (중개건수 24,923억원)

□ 업체당 평균 중개금액은 9.7억원, 평균 중개건수는 325건

※ 법인 업체별 : 평균 중개금액 114억원, 평균 중개건수 4,183건

개인 업체별 : 평균 중개금액 1.9억원, 평균 중개건수 35건

□ 동 기간중 대부중개업체는 총 454억원의 중개수수료를 수취 (전체 중개금액의 6.1%)

○ 법인 업체가 404억원 (중개금액의 6.6%), 개인 업체가 50억원 (3.7%)

#### 법인 및 개인 대부중개업체 중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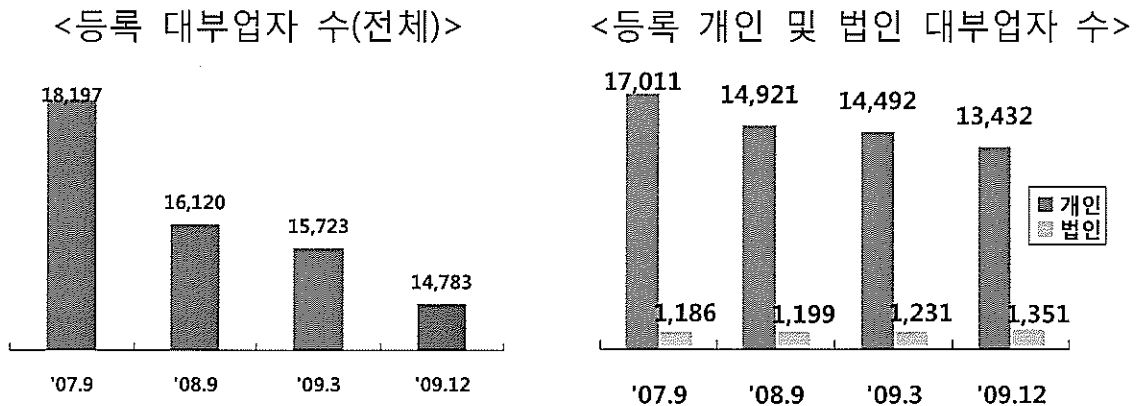
(단위 : 개, 건, 억원, %)

구 분	업체수	중개건수	중개금액	수입수수료	(율)
법 인	54	225,891	6,131	404	6.6
개 인	718	24,923	1,348	50	3.7
합 계	772	250,814	7,479	454	6.1

### Ⅲ. 시사점

#### ① 등록 대부업자 수 지속 감소

- 불법 대부업자 단속 강화 및 등록증 재교부시('09.4~7월) 영업실적이 없는 대부업체의 자진폐업 증가로 등록 대부업자 수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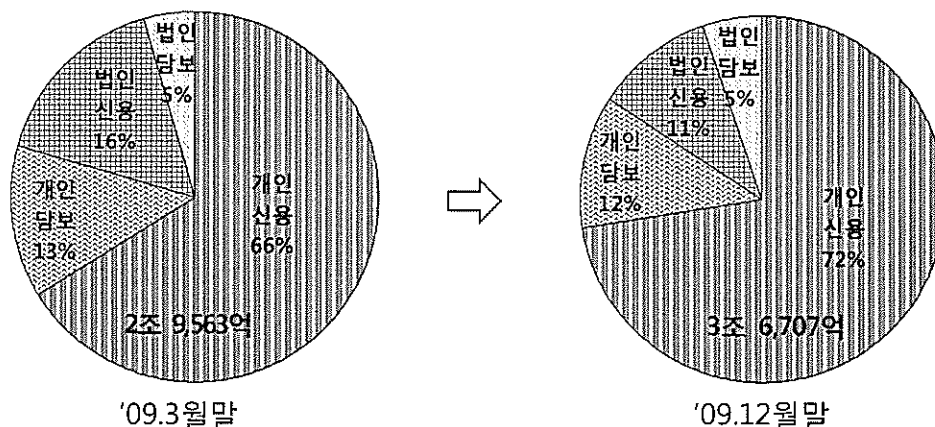
- 향후에도 제도권 금융회사의 서민대출 확대 및 최고이자율 인하(연 49% → 연 44%) 등에 따라 경쟁력이 낮은 중·소형 대부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폐업 대부업체가 음성화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및 단속 강화 필요

#### ② 개인신용대출 확대

- 대형 대부업체가 개인신용대출 위주로 영업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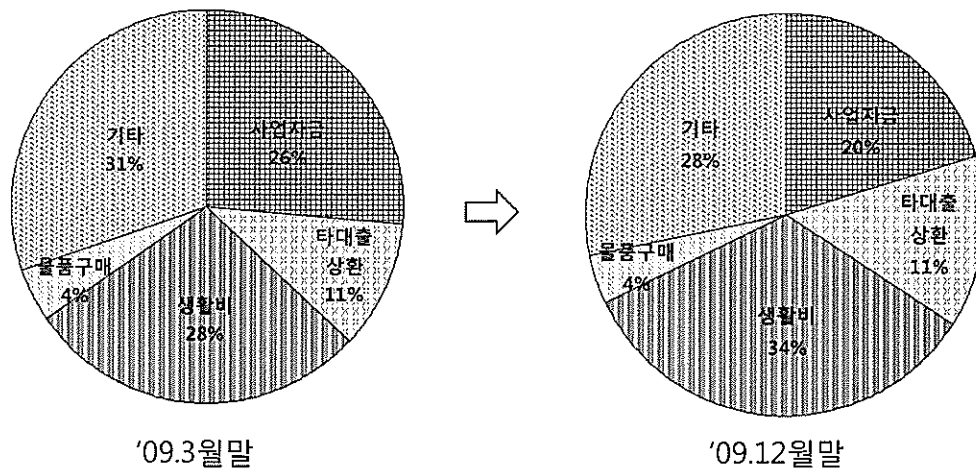
<개인신용대출 추이 (자산 70억원 이상 업체 기준)>



- 이자율이 최고이자율(연 49%)에 근접\*한 개인신용대출의 확대에 따라 전반적인 시장 금리 상승

\* 전업업체 55개사중 30개사가 연 45% 이상 금리를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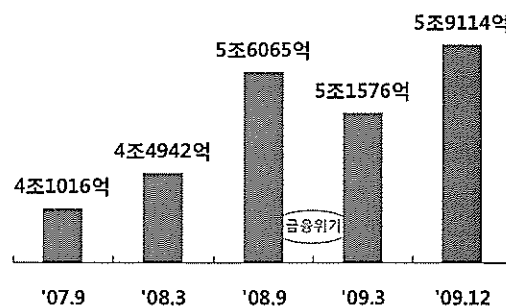
- 대부업자들의 개인신용대출 확대에 따라 소액인 생활비 목적 대출 비중 증가



### ③ 대부업체 수익성 개선

- 경기 회복세에 따라 자금조달이 용이해져 대출규모 증가

<대부 시장 규모>



- 특히 이자율이 높은 개인신용대출이 크게 확대되어 대부업자의 이익 증가

⇒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대출잔액이 있는 79개 업체)의 경우 '09 회계연도 중 3,10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

## 제4차 대부업정책협의회 결과

◇ 대부업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협의하기 위해 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회 대부업정책협의회」의 회의결과임

- 일 시 : 08.1.29(화) 16:00~17:00, 장소 : 재경부 7층 대회의실

### 1. 주요 논의결과

#### ① 대부업체 관리·감독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 강화 필요

- 지방의 행정력, 경찰력, 세무서 등을 통해 대부업체를 관리·감독·단속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
- 현재 시·도별로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활성화

#### ②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 지자체의 대부업 관리·감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정보교류를 위한 행사를 마련

#### ③ 사금융 이용자에 대한 실태조사

- 다음 실태조사시에는 대부업체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대부 시장 이용자들에 대한 분석도 포함
- 대부업체 이용자와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소득, 신용도, 연체정도, 사금융 이용 용도 등을 조사하여 실태를 파악
-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조사를 하여 대안금융을 제공할 대상을 정하고, 저소득층의 금융애로도 발굴



---

## 2. 향후 추진계획

---

- ① 금융소외자 지원방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후 6~7월중 최종방안 발표)
- ② 대부업체DB를 활용한 상시관리시스템 및 사이트 운영에 대한 실무자 회의 개최 ('08.6~7월중)
- ③ 단속기관은 서로간 협조하여 상시적으로 단속을 추진

## 제5차 대부업 정책 협의회 개최 결과

- ◇ 대부업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협의하기 위해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제6차 대부업정책협의회」의 회의결과임  
- 일 시 : 08.6.3(화)

### 1. 주요 논의결과

- ① 등록 대부업체와 사금융 이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 그 동안 사금융 시장 규모는 각 연구소 등에서 18~45조원으로 추산
    - 그러나 동 추정치는 90년대 통계치, 등록 대부업체 조사 등 일부 제한적인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정책자료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
  - ➡ 이에 전국민과 사금융 이용자,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고 다각적인 실태조사를 시행
  - 사금융 시장에 대한 신뢰성 있는 현황 자료를 통해 현실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조사결과 전체 사금융 시장의 규모는 전 국민(20세 이상 3,500만명)의 5.4%인 약 189만명인 것으로 추정
    - 이중 49.9%는 등록 대부업체, 17.6%는 무등록 대부업체, 32.4%는 지인으로부터 차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금융 이용자들의 평균 사금융 이용액은 873만원으로 전체 사금융 시장 규모는 약 16.5조원으로 추정됨

- 사금융 대출의 이자율 평균은 연 72.2%\*이고, 사금융 이용자들은 평균적으로 2곳에서 사금융을 이용

\* 사금융 이자율이 법상 이자율보다 크게 높은 것은 사금융 이용자들이 법 개정후 이자가 낮아진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용자는 자신이 부담하는 금리를 높게 인식하기 때문(등록 대부업체 조사결과 신용대출 금리는 약 37~44%로 조사됨)

- 동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월중 금융소외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및 재원조성 방안 등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회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

## ② 경찰과 검찰은 작년에 이어 금년 3~4월중 불법 사금융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

\* '08.1~4월중 1,185명을 단속

- 하반기에도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추가하여 실시하되
  - 금감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불법 사금융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보다 효과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할 예정
- 또한, 국세청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를 적발해 등록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엄중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공정위에서는 그 동안 대부업체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조사('07.6~12)하여 시정권고·명령하고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표준 대부보증 계약서의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

## ③ (지자체 대부업 관리강화) 대부업체 DB구축, 지자체 대부업 전담인력 보강\*, 시·도관계기관협의회 운영\*\* 등을 지속 추진중

\* 지자체의 대부업 전담인력을 '07~'08.5월중 26명까지 확보

\*\* 16개 시도중 12개 시도 개최

- 각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대부업체 정보의 DB화**를 완료('08.2)
- 향후 관계부처가 단속·조사를 실시하거나, 일반국민이 대부업체 여부 확인시 동 DB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④ 대부업법 개정('08.3 시행)으로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금감원이 직접 검사를 하게 되었음**

\* 2개 이상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경우, 자산규모가 70억원 이상인 경우

- 이에따라, 금감원의 관련조직을 확대개편하고, 현재 지자체를 통해 검사대상 대부업자 현황을 파악중이며, 직권검사 대상 업체에게 설명회를 통해 검사내용 등을 안내
- 금년 하반기부터는 직권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에 따라 지자체에 통보하고 조치를 요구할 계획임

**⑤ (금융소외자 지원방안) 금융소외자의 자활을 위해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추진**

- ① 국민연금 기납부액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② 소액서민 금융재단을 통한 창업·취업지원, 신용대출, ③ 신용회복기금 설치를 통한 연체채무 재조정 및 고금리 채무 환승 지원, ④ '신용회복지원중' 기록말소, ⑤ 불공정 채권추심방지법 제정
- 이를 위해 대부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과 필요한 재원마련 방안도 논의

---

## 2. 향후 추진계획

---

- ① 금융소외자 지원방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후 6~7월중 최종방안 발표)
- ② 대부업체DB를 활용한 상시관리시스템 및 사이트 운영에 대한 실무자 회의 개최 ('08.6~7월중)
- ③ 단속기관은 서로간 협조하여 상시적으로 단속을 추진

## 제6차 대부업 정책 협의회 결과

- ◇ 대부업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협의하기 위해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제6차 대부업정책협의회」의 회의결과임
- 일 시 : 08.9.9(화) 15:00~16:00, 장소 : 금융위 5층 회의실(513호)

### 1. 주요 논의결과

- ① 대부업 관리·감독 및 대부 이용자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대부업법 개정 추진
  - 대부업법 입법예고 기간 중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마련할 필요
- ② 제4차 전국 대부업체 실태조사 추진 계획 및 지자체 파견 전문검사역 활동성과
  - 금감원의 지자체 파견 전문검사역 활동성과 보고
- ③ 불법 사금융 단속 실적
  - 검·경의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실시 및 단속실적, 국세청의 대부업자에 대한 세적정비·세무조사 실시 및 실적
- ④ 지자체 대부업 관리 강화 추진
  - 지자체 인력 확대가 어렵고 아직까지 대부업에 대한 시도의 관심이 미흡한 상황
  - 대부업 상시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실무협의

## ⑤ 대부업 정책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 확보 방안

- 대부업 정책 협의회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책협의회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
- 대부업정책협의회를 법정기구화하는 만큼 연1회 정도 회의를 개최할 필요
- 우선, 실무단계에서 지자체나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건을 선정한 후 정책 협의회에 상정할 필요

---

## 2. 향후 추진계획

---

- 사회적으로 사금융에 의한 문제가 다시 부각될 수 있으므로 각 부처가 서로 협조하여 상시적으로 단속을 추진
- 대부업체 DB를 활용한 상시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한 실무자 회의 개최('08.9월중)

## 제7차 대부업 정책 협의회 결과

- ◇ 대부업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협의하기 위해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제7차 대부업정책협의회」의 회의결과임
- 일 시 : 08.12.15(월) 15:00~16:00, 장소 : 금융위 5층 회의실(513호)

### 1. 주요 논의결과

#### ① 대부업 관리·감독 관련 지자체 연말 포상 실시

- 대부업 관리·감독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언론사·금융위 공동으로 지자체장 및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말 포상 실시
- 「서민금융대상」을 「서민금융 우수 감독 대상」으로 조정하고, 포상대상에 금감원 등을 추가할 필요

#### ②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③ 불법 사금융 단속 실적

- 검·경의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실시 및 단속실적, 국세청의 대부업자에 대한 세적정비·세무조사 실시 및 실적



④ 대부업상시관리시스템의 구축

- 대부업체의 효율적 관리·감독을 위해 등록대부업체 DB화 등 대부업상시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⑤ 제4차 전국 대부업체 실태조사 결과

- '08년 하반기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

---

2. 향후 추진계획

---

- 「서민금융대상」을 「서민금융 우수 감독 대상」으로 조정하고, 포상대상에 금감원 등을 추가하는 방안 검토
- 사회적으로 사금융에 의한 문제가 다시 부각될 수 있으므로 각 부처가 서로 협조하여 상시적으로 단속을 추진

## 제8차 대부업 정책 협의회 결과

◇ 대부업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협의하기 위해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제8차 대부업정책협의회」의 회의결과임

- 일 시 : '09.3.30(월) 17:00~17:40, 장소 : 금융위 부위원장실

### 1. 주요 논의결과

#### ①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정 대부업법에서 위임한 사항(대부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대부계약시 제출받는 소득증명서류의 범위 등)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② 대부거래 표준약관 등의 제·개정 계획

- 대부업체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추진실적 및 대부거래 표준약관 등의 제·개정 계획

#### ③ 불법 사금융 단속 실적

- 검·경의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실시 및 단속실적, 국세청의 대부업자에 대한 세적정비·세무조사 실시 및 실적

#### ④ 지자체 대부업 관리 강화 추진

- 자산 규모 70억원 이상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⑤ 제5차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계획

- 대부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상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

⑥ 사이버금융감시반 운영 현황

- 사이버금융감시반의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 유형 및 적발 현황

---

**2. 향후 추진계획**

---

- ☐ 대부업정책협의회의 주기적 개최를 통해 유관기관간 공조 강화
- ☐ 제5차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 제9차 대부업 정책 협의회 회의결과

◇ 대부업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협의하기 위해 금융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제9차 대부업정책협의회」의 회의결과임

○ 일 시 : '09.4.24(금) 08:00~09:40, 장소 : 금융위 20층 식당 별실

### 1. 주요 내용

#### ① 금융권을 활용한 서민금융 지원강화 대책

- ① 저신용자에게 생활자금 대출 지원
- ② 보유재산 담보부 생계비 저리융자
- ③ 은행 「저신용자 전용대출 상품」 활성화

#### ② 불법 사금융 단속강화 및 사후구제 확대

##### 가. 유관기관 합동의 불법 사금융행위 총력 단속 실시

- ① 불법 대부업 상시 집중단속 강화
- ②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지급제도 신설
- ③ 금융감독기관과 수사기관간 공조강화(금감원·경찰청 협약식 체결)
- ④ 불법 혐의정보 수사기관 즉각 제보
- ⑤ 세금탈루 대부업자 세무조사 및 연중 사업자 등록정비
- ⑥ 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 개설

## 나.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강화

- ① 등록 대부업 DB 인터넷 공개
- ② 무등록업체 광고활동 모니터링 및 수사기관 정기 통보
- ③ 금감원 직권검사 강화 및 지자체에 현장점검 및 상담 지원
- ④ 대부거래 및 보증 표준약관 제정·보급
- ⑤ 업계 자율규제 강화

## 다.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소송지원

- ① 개인회생·파산절차 무료지원
- ② 고리사채 피해자에 대한 무료소송지원

## ③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강화

### 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8.7)전 홍보

#### 나. 서민금융정책 및 피해예방 홍보

- ① 서민금융안내 책자 및 리플렛 발간
- ② 서민금융포털사이트 활용도 제고
- ③ 방송광고 실시

---

## 2. 주요 논의결과

---

### □ 법무부

- 채권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
- 불법 대부행위를 수사기관에 즉각 통보하는 체계의 강화가 필요

## □ 공정거래위원회

- (On-line 홍보) 사채 등에 관련된 단어를 검색하면 즉각 검색 되도록 하는 등 인터넷 홍보를 강화해야 하고, 피해구제 방법도 인터넷 포털에서 정보를 구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약관) 대부거래 및 대부거래 표준약관 인터넷 계약의 경우 대부이용자에게 계약서 송부를 의무화하여 채무자의 권리보장을 강화함

## □ 경찰청

- 민생침해범죄 소탕 60일 작전을 통해 사회안정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불법대부행위가 내밀하게 이루어져 단속이 어려움
-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제도를 도입해 신고활성화를 기할 것임
- 별도의 신고피해전화를 개설하기 보다는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기존의 신고전화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

## □ 국세청

- 세금탈루 혐의 대부업자에 대해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홈페이지의 탈세 신고방에 「대부업자 탈세신고 센터」를 별도로 구분 신설할 것임

## □ 금융감독원

-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고리사채를 치면 바로 「서민금융 119」로 연결되도록 조치하고, Cyber 홍보 등을 지속추진할 것임

## □ 금융위

- 신설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를 통해 업계의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향후 지자체와 연결하여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도모할 것임
-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서민피해를 막기 위해 각 부처는
  - 올 8월 시행예정인 채권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내용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 대부업 관리·감독, 엄정한 단속과 처벌, 피해자 사후구제 등 일련의 관리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처간 상호공조를 공고히 하여 주시기 바람

---

### 3. 향후 추진계획

---

- 금일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국무회의('09.4.28)에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을 보고

## 제10차 대부업 정책 협의회 결과

◇ 대부업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협의하기 위해 개최된 「제10차 대부업정책협의회」의 회의결과임

- 일 시 : '09.10.15(목)

□ 각 부처의 국정감사 일정으로 위원들의 회의참석이 어려워 서면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기재부·법무부·행안부·공정위 모두 전체 안건에 대해 “이견 없음”으로 합의

### 주요내용

#### ①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대책 추진실적

#### ② 대부업 관련제도 개선 추진동향

- 대부업 실태조사 시기를 업무보고서 작성 시기에 맞춰 현재 3월, 9월에서 6월, 12월로 변경

#### ③ 지자체 대부업 관리강화 추진 실적

#### ④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 개정안 주요내용

-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율 상한제한 적용 사례 및 대부업법의 실무 적용 관련 해석사항

#### ⑤ 대부업 감독업무 효율성 제고 방안

- 소재불명 대부업자 일제 정비 추진 및 대부광고시 대부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생활정보지와 협조체제 구축



## 제11차 대부업 정책 협의회 결과

◇ 대부업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협의하기 위해 개최된 「제10차 대부업정책협의회」의 회의결과임

- 일 시 : '09.12.30(수)

□ 각 부처 위원들의 회의참석이 어려워 서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기재부·법무부·행안부·공정위 모두 전체 안건에 대해 “이견 없음”으로 합의

### 주요내용

#### ① 서민금융감독대상 포상계획(안)

○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포상 실시

#### ② 대부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상 최고이자율 인하  
(연 60% → 연 50%)

○ 대부업 등록요건에 고정사업장 요건 추가

○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채권추심 관련폭행·상해죄를 저지른 자의 대부업 고용제한 등

#### ③ 제6차 대부업 실태조사 추진계획

#### ④ 사금융 종합애로지원센터 개소

○ 경찰청(수사), 자산관리공사(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신용회복) 합동으로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실시

## 제12차 대부업 정책 협의회 결과

◇ 대부업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협의하기 위해 개최된 「제10차 대부업정책협의회」의 회의결과임

- 일 시 : '09.12.30(수)

- 각 부처 위원들의 회의참석에 어려워 서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행안부가 '서민금융사 보증부 대출'의 원활한 추진, 등록대부업체 검색시스템 정착 및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른 대부업체 음성화 방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주요내용

#### ① 제6차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 ② 대부업법 최고이자율 인하 방안

-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대부업자와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을 5%p 인하  
(연 60% → 연 50%)

## 제13차 대부업 정책 협의회 결과

◇ 대부업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협의하기 위해 개최된 「제13차 대부업정책협의회」의 회의결과임

- 일 시 : '10.7.23(금)

□ 각 부처 위원들의 회의참석이 어려워 서면회의를 개최

### 주요내용

- ① 불법 사금융 단속 실적 및 계획
- ② 지자체 대부업 관리 강화 추진 현황
- ③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행위 근절방안
  - 대출중개수수료 편취행위 단속 강화
  - 대부업계의 자율 시정노력
  - 관련 기관별 피해예방 홍보 강화
- ④ 제7차 대부업 실태조사 추진계획

## 7. 퇴직임직원의 재취업현황 및 관련규정

성명	직위(직급)	퇴직일자	재취업기관
이○○	금융정보분석원장	08.03.28	한국거래소
전○○	FIU제도운영과장	08.04.30	은행연합회
김○○	상임위원	08.12.09	금융감독원
정○○	부이사관	09.01.05	금융투자협회
양○○	부이사관	09.03.26	한국자금중개
김○○	행정주사	09.04.30	금융투자협회
나○○	서기관	09.05.13	산업은행
한○○	서기관	09.05.15	신영증권
김○○	금융정보분석원장	09.11.17	증권금융
김○○	전산서기보	10.02.17	한국거래소
나○○	행정사무관	10.03.02	한국정책금융공사

※ 관련규정 :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 8. 녹색금융 추진현황

- 전반적인 추진현황 및 계획서
- 세부항목별 추진현황 및 성과, 향후 추진계획

□ 금융위는 2010년 업무계획 마련시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 ①추진 계획 >

□ 녹색기업 인증제 시행(지경부, '10.4월)을 계기로 녹색기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

- 녹색예금·펀드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활용하여 자금 지원을 확대
- 금융공기업의 정책금융을 녹색산업에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 기준, 리스크 관리 모범기준 등을 마련

\* '10년중 녹색산업 정책금융 지원 목표 : 최대 5.0조원

□ '10년부터 시행되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 분야에서도 착실히 지원

\*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보다 30% 감축('09.11.17, 국무회의)

- 녹색금융지원을 '녹색기술·기업'뿐만 아니라 '에너지·탄소 저감 사업'으로 적극 확대
- 온실가스 저감 사업 및 에너지 절약 전문업체(ESCO : Energy Service Company)에 대해 저리자금지원, 신용보증 우대 등 금융 인센티브 제공

-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건설업체에 대한 PF대출 보증 및 주택구입자금의 금리·보증료 우대 실시

#### □ 녹색금융 부문의 전문인력 양성

- 녹색금융 부문에서 금융 MBA과정, 실무금융인력 양성 사업 등 지원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전문인력 육성

#### < ②추진 현황 >

#### □ 녹색기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 추진

- 녹색예금·녹색채권·녹색펀드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조특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10.1.1일 시행), 기재부)

\*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투자할 의무

- 다만 '10.8.6일 현재 녹색금융상품 투자대상인 녹색인증\* 사업은 1건, 녹색전문기업이 4건에 불과하여 아직까지 녹색인증제 관련 금융상품 출시는 없는 상황

\* 전담기관 :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이에따라 정부(지식경제부 등)는 '10.8.11일 제24차 위기관리대책 회의를 통해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녹색인증 수요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마련

\* <별첨> '10.8.11일 지식경제부 보도자료(녹색인증활성화방안) 참고

- 정책금융기관 녹색금융 지원기준 마련('10.1월)

\* 지식경제부 녹색기술·사업 인증대상을 기본으로 각 기관 내부 자금운용 기준 등을 정비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지원을 위한 금융분야 지원

- 중소 에너지 절약 전문업체(ESCO)에 대해 신용보증 지원시 보증료를 0.2%p 차감 적용

\* 지원실적('10.7말 기준) : 신보 59억원, 기보 230억원

- 친환경 주택 건설업체 등에 대한 금융지원

\* 친환경주택 건설사가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로 자금 대출시 보증료 인하(주택금융공사, '10.4월)

\*\* 친환경주택을 담보로 하여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고객에 대하여 금리우대(주택금융공사, '10.6월)

□ 녹색금융 부문의 전문인력 양성

- KAIST와 고려대를 녹색금융특화 MBA 대상으로 선정('10.3월)
- 녹색실무인력양성 일부과정 교육실시(보험연수원 등, '10.6월)

< ③향후 계획 >

- 향후에도 녹색기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

< 별첨 > '10.8.11일 지식경제부 보도자료(녹색인증활성화방안)



2010년 8월 11일(수) 10: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산업기술시장과 강혁기 과장, 권기성 사무관 ☎ 02-2110-5397)

## 녹색인증 활성화를 위한 R&D·자금·판로·인력 등 녹색인증기업 기술사업화 소주기 지원방안 수립

-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8.11(수) 제2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발표함
  - 녹색인증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의거, 지난 4월 14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써 녹색산업 지원대상·범위의 명확한 규정 및 이에 대한 투자활성화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 금번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에서는 녹색인증에 따른 기업혜택을 구체화함으로써 녹색인증 수요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녹색인증 투자대상의 조기 확충을 통해 궁극적으로 금융권의 녹색금융상품 개발을 앞당기고자 함
  - \* '10.8.11 현재 녹색금융상품 투자대상 : 녹색인증사업(1건), 녹색전문기업(4건)
  - \* 반면, 녹색인증 혜택의 구체화 등을 고려하여 신청을 유보하고 있는 기업수는 최소 428개(기관회원등록기업 기준)로 녹색인증 신청기업(191개)의 2배 이상
  - 이를 위해 ①녹색산업융자 지원 확대, ②판로·마케팅 지원 강화, ③기술사업화 기반 조성, ④사업화 촉진시스템 구축 등 4대 분야 26개 지원방안을 마련함

4대 분야	녹색산업융자 지원 확대	판로·마케팅 지원 강화	녹색기술사업화 기반 조성	사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
세부 과제	①신재생에너지 등 보급융자 지원 ②중기정책자금 연계 ③기술보증중점지원 ④수출금융·보험지원	①정부발주공사우대 ②공공구매·국방조달 우대 ③TV·라디오광고료 일부면제 ④해외수출·마케팅 지원	①병역특례지정 업체 추천 ②해외/고급인력 도입 및 파견 ③녹색기술 성능검사 비용 지원 ④국가녹색기술 대상 우대	①R&D 참여시 우대 ②특허우선심사/국제출원 지원 ③녹색기술이전·투자유치 설명회 ④글로벌사업화컨설팅 ⑤국제컨퍼런스 개최



- ‘활성화 방안’에서는 대규모 자금소요 및 긴 투자회임기간 등 녹색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융자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 녹색인증기업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등 산업별 보급융자사업 참여시 우대, 정책자금 융자한도 예외적용 및 기술보증 증점지원을 실시하고,
  - 해외수출시 특례신용대출 우대 및 수출보험료 할인, 보증한도 확대 등 녹색인증기업 특별지원제도를 시행함
- 녹색인증기반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녹색기술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 정부발주공사 등 정부계약 상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공공구매·국방조달시 신인도 가점 부여 등을 통해 국내 판로를 지원하고,
  - KOTRA, 중진공 등의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녹색인증을 연계하여 수출 및 기업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임
- 또한, 녹색기술의 사업화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지원 및 영세중소기업의 녹색인증 취득기회 확대를 위해,
  - 녹색전문기업 부설연구소의 병역특례지원을 강화하고, 해외기술인력 및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지원하는 한편,
  - ‘11년부터 녹색기술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이 신규로 부담한 성능검사비용의 50%를 환급해 주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함
- 녹색인증기업의 기술개발 및 R&D 성과활용, 기술이전·투자유치·글로벌사업화 지원 등 사업화 촉진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임
  - 국가 R&D사업 참여시 우대하고, R&D성과물의 녹색인증 신청 및 국내·외 특허출원을 중점 지원하며,
  - 기술이전·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글로벌사업화컨설팅 지원 강화,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사업화에 필요한 투자유치·정보제공 및 녹색인증기업의 신용평가도를 제고할 계획임

- 이창한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관은 기자브리핑에서 “금번 활성화 방안은 신생기업의 경영안정화를 통한 중소기업 창업·보육 지원이 목적인 벤처기업 등 인센티브와 달리 녹색기술기반 인증기업의 기술사업화 소주기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며,”
  - “금번 대책으로 녹색인증기업 혜택이 구체화된 만큼 향후 녹색인증 활성화를 통해 금융권의 녹색금융상품 개발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한편,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비과세 녹색금융상품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해 녹색인증기업의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등
  -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면밀한 검토를 통해 녹색인증을 통한 기업의 실질적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함

첨부 1 : 분야별 녹색인증기업 지원방안

2 :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제2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안건)

# 분야별 녹색인증기업 지원방안

추진 과제		세부 내용
1. 녹색산업융자 지원 확대	1-1. 산업별 보급용자 참여 우대	신재생에너지설비, 농업종합자금, 관광기금 등
	1-2.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잔액 예외	잔액기준 또는 매출액 한도 예외
	1-3. 기술보증 중점 지원 대상	보증료를 0.5%p 감면, 한도 70억원(추가 3억원)
	1-4. 수출금융(특례신용대출) 우대	평가시 가점(10점), 업체별 한도 30억원
	1-5. 수출 및 금융계약 손실 보상	보험료 할인 20%, 보증한도 2배
2. 판로·마케팅 지원 강화	2-1. 정부발주공사 우대	신인도평가 가점. 선금지급 확대, 계약보증금 감면
	2-2. 공공구매/ 국방조달심사 우대	조달청(1.5점), 국방부(0.5점)
	2-3. TV·라디오 광고료 70% 면제	지상파 3사 & DMB
	2-4. 해외전시회 참가시 우대	신청시 가점(10점)
	2-5.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우대	신청시 가점(5점)
	2-6. 해외수출인큐베이터 우대	신청시 가점(5점)
	2-7.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 지원	신청시 가점(5점)
	2-8.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신청시 가점(10점)
	2-9. Green 보증브랜드 선정시 우대	우선 선정(재무건정성 충족시)
	2-10. 수출중소기업 글로벌브랜드 육성	수출액, 매출액기준 등 참가자격 완화
3.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	3-1. 병역특례지정업체 추천 우대	교과부 추천시 가점 부여
	3-2. 해외기술인력 도입 우대	신청시 가점(5점)
	3-3. 출연연 석·박사급 인력파견 우대	신청시 가점 부여
	3-4. 중소기업 인증 비용부담 경감	인증취득시 시험평가비용 50% 환급
	3-5. 국가녹색기술대상 서류평가 가점	참여시 가점(2점)
4. 사업화촉진 시스템 구축	4-1. 국가R&D 참여우대 및 인증수수료	부처별 R&D사업 가점, R&D수행시 간접비 활용
	4-2. 특허우선심사(초고속심사대상)	특허우선심사(최대 1개월까지 단축)
	4-3. 국제출원비용지원시 가점	5점 가점(1인당 5건, 건당 700만원 이내)
	4-4. 기술이전·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기술공급자·수요자, 거래기관 등 참여
	4-5. 글로벌사업화컨설팅 지원	현지마케팅, 수요기업알선, 전문컨설팅 등
	4-6. 국제컨퍼런스 개최(GGGI 연계)	국내외 평가기관, 투자기관 참여

---

#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

---

2010. 8. 11

관계부처 공동

## 목 차

1. 녹색인증 추진경과 .....	1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	2
3.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 .....	3
가. 기본전략 및 추진과제 .....	3
나. 활성화 방안 .....	4
다. 과제 추진일정 .....	8
4. 후속조치 계획 .....	9

〈참고 1〉 他 인증제도 인센티브 현황 및 녹색인증기업 비교

〈참고 2〉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방안

〈참고 3〉 녹색인증 금융권 연계/녹색금융종합포탈

# 1 녹색인증 추진경과

□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성장 비전” 달성을 위해 녹색기술 기업·사업의 육성 및 이에 대한 투자 활성화 긴요

\* (녹색인증 도입배경) 금융지원 대상이 되는 녹색프로젝트나 기업을 명확히 하여 녹색산업관련 자금유입시스템 실효성 확보(금융권의 녹색산업투자를 용이케 할 목적)

□ (녹색인증제) 녹색산업 지원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 이에 대한 투자저변을 확충

○ 녹색기술(10대분야 256개 기술)·사업(95개) 대상 「녹색인증제」 시행('10.4.14)

\* 녹색인증사업 또는 녹색전문기업(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 중 매출액비중 30% 이상 기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세제지원('10.2.14)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
세제지원 내용	배당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한도	1인당 3천만원	1인당 2천만원	1인당 3천만원
만기	3년 이상	3년 이상	3년 이상

○ 녹색인증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의 자금조달 용이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녹색기술 보유기업의 녹색사업화 능력 제고

\* 네덜란드 Green Funds Scheme : '95~'05년간 신재생에너지 등 4,500개 사업에 80억 유로(110억 달러) 지원

□ (신청·인증현황) '10.8.9 현재 294건(기술248, 사업27 등) 신청, 이중 기술 56건, 사업 1건 인증 및 전문기업 4개 확인

구분	신청	최종결과		평가진행
		인증	불인증	
녹색기술*	248	56	34	158
녹색사업**	27	1	9	17
녹색전문기업***	19	4	1	14

\* (녹색기술) 대기업 14개(57건), 중소기업 152개(174건), 개인사업자 9개(17건) 등 총 175개 기업(248건) 신청

\*\* (녹색사업) 최종심의된 10개 중 1개사업(고출력LED조명기기보급, (주)지에이)만 인증. 불인증된 9개사업은 사업타당성, 녹색기술 활용성 부족

\*\*\* (녹색전문기업(4)) OCI(폴리실리콘), 퓨얼셀파워(연료전지열병합발전시스템), 비전테크(LED), 본우드(외장용 합성목재)

##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문제점) 인증수요기업들은 기존 벤처·이노비즈기업 등에 제공되는 세제·자금·판로·인력 등 인센티브보다 강화된(+a) 혜택 기대 (☞참고1)

\* '10.8.9 현재 녹색기술인증 신청 중소기업(152개) 중 벤처·이노비즈기업이 74%(113개)

○ 금융회사들은 녹색인증 투자대상\* 부족, 의무대출비중\* 등으로 녹색 금융상품 출시 곤란

\* '10.8.9 현재 녹색금융상품 투자대상은 녹색인증사업(1건), 녹색전문기업(4건)  
: 현행 조특법상 비과세 녹색금융상품의 투자대상은 녹색인증사업 및 녹색전문 기업에 국한(녹색기술 인증기업은 제외)

\* 금융회사들은 녹색금융으로 조달한 자금의 60% 이상을 녹색금융상품 투자대상 (사업·기업)에 투자 의무

\* 또한, 현행 세제혜택은 녹색금융상품을 일반투자와 차별화할 수 있는 수준에 미달

★ [제8차 녹색위, '10.7.13] 관계부처 합동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 수립 계획 보고

□ (개선방향) 녹색인증 수요기업 측면에서 차별화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인증 활성화 유인

◆ 녹색인증기업 지원 강화 및 녹색금융상품 활성화를 통해 '인증 → 금융투자 → 기술개발·사업화 → 인증'의 선순환구조 확립

○ 금번 대책을 통해 융자, 판로·마케팅, 기술사업화기반, 사업화 촉진시스템구축 등 "4대 분야 총 26개 과제" 추진

\* 특히, 녹색인증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술력 보유 중소기업의 참여 활성화 (☞참고2)

○ 중장기적으로 비과세 녹색금융상품 관련 제도개선 사항(녹색 기술의 투자대상 포함, 추가 세제지원 등)을 검토해 녹색인증기업의 금융 지원 강화

○ 기타, 녹색인증정보의 금융권 연계 강화로 녹색대출시 전문성 보장 (☞참고3)

\* 녹색인증정보 금융권연계시스템(7.30) 및 녹색금융상품정보 종합포털(12월, 은행 연합회) 구축 등 인프라 확충

### 3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

#### 가. 기본전략 및 추진과제

##### 목표

녹색인증 활성화를 통한 녹색산업 분야 투자 촉진

##### 전략

R&D · 자금 · 인력 · 판로 등  
녹색기술기업의 사업화 활동 쏠주기 지원

##### 4大 과제

##### 녹색산업융자 지원 확대

##### 판로·마케팅 지원

##### 기술사업화 기반 조성

##### 사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

##### 세부 과제

①신재생에너지등  
보급융자 지원

②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계

③기술보증  
중점 지원

④수출금융·보험  
지원

①정부발주공사  
우대

②공공구매·국방  
조달 우대

③TV·라디오광고  
료 일부면제

④해외수출·마케팅  
지원

①병역특례지정  
업체 추천

②해외/고급인력  
도입 및 파견

③녹색기술 성능  
검사비용 지원

④국가녹색기술  
대상 우대

①R&D 참여시 우대  
[가점, 인증수수료]

②특허우선심사/  
국제출원 지원

③녹색기술이전·  
투자유치 설명회

④글로벌사업화  
컨설팅 지원

⑤녹색인증 국제  
컨퍼런스 개최



## 나. 활성화 방안

### ① 녹색산업 융자 지원 확대

- (산업별 보급융자)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절약시설, 농업종합자금, 관광기금, 환경산업융자 등 부처별 융자사업에 녹색인증기업 참여 우대 (10.12월)

<산업별 보급융자 사업(예)>

구 분	주 관	주요내용
신재생에너지보급('10년 913억원)	지경부	신재생에너지 분야 녹색인증 가점
에너지절약시설('10년 5,118억원)	지경부	첨단그린주택 등 분야 녹색인증 가점
농업종합자금융자('10년 1.5조원)	농식품부	친환경농식품 등 분야 녹색인증 가점
관광기금(시설자금, '10년 1,900억원)	문광부	친환경관광 분야 녹색인증 가점
환경산업융자/보조금('10년 780억원)	환경부	환경보호 등 분야 녹색인증 가점

- (정책자금 융자) 녹색인증기업에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융자 잔액 예외규정 적용 (10.6월 既시행)

\* 중소기업 대상 융자시 잔액기준(수도권 45억원, 지방 50억원) 또는 매출액 한도(150% 이내) 예외 적용

- (기술보증) 녹색인증기업을 중점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기술평가 심사 일부면제(사업내용 생략), 보증료율(0.5%p 감면)·보증한도(일반 30억원 → 녹색기술 70억원, R&D 등 3억원 범위내 추가한도) 등 우대(10.6월 既시행)

- (수출금융·보험) 녹색인증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 우대 및 녹색인증기업의 수출계약 및 금융계약 손실보상을 위한 보험·보증 특별지원제도 시행 (10.8월)

\* 특례신용대출 거래이행능력 평가시 가점(10점) 및 업체별 한도 확대(일반 20억원 → 녹색인증기업 30억원)

\* 수출보험료 할인 확대(녹색산업 10%→ 녹색인증 중소기업 20%), 보증한도를 책정가능한도의 2배까지 우대(녹색전문기업)

## ② 녹색인증기술 및 제품의 판로·마케팅 지원

- (정부발주공사 우대) 녹색인증기업의 신인도 평가시 가점 부여, 선금지급 확대, 계약보증금 감면 (10.12월)
  - \* 의무선금지급률 상향(30~50% → 40~60%), 입찰·계약보증금 감면(지급각서 대체)
  -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50조) 및 회계예규 등 개정 (기획재정부)
- (공공구매·국방조달) 녹색인증기업의 조달청(10.8월), 국방부(10.11월)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신인도 부분 가점 부여
  -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및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시 1.5점 가점, 국방부 물품적격심사시 0.5점 가점
- (방송광고료 일부면제) 녹색인증 중소기업 대상으로 KBS등 지상파 3사 및 DMB의 TV·라디오 광고료 70% 할인 (10.9월)
- (해외수출·마케팅) KOTRA(해외전시회, Green보증브랜드 등) 및 중진공(해외수출인큐베이터, 수출기업화지원 등) 등의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연계

### <주요 해외수출·마케팅 지원사업>

구 분	주 관	주요내용
해외전시회 참가 우대	KOTRA 등	녹색인증기업 가점 10점
해외 수출인큐베이터 우대	중기청	녹색인증기업 가점 5점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우대	중기청 등	녹색인증기업 가점 5점
해외 민간네트워크 활용 지원	중기청	녹색인증기업 가점 5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중기청	녹색인증기업 가점 10점
Green 보증브랜드 선정 우대	KOTRA	녹색인증기업 최고가점 부여
수출중소기업 글로벌브랜드 육성	중기청	녹색인증기업 참가자격 완화

### ③ 녹색기술 사업화 기반 구축

- (병역특례) 교과부장관의 병역특례지정업체 선정 추천시 녹색전문 기업의 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가점 부여 (10.12월)
- (해외·고급인력) 녹색인증기업의 전문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해외 기술인력 도입 및 석·박사급 고급인력 지원 (10.12월)
  - \* 해외기술인력 도입 지원사업(중기청, 1인당 2천만원 이내) 신청시 가점(5점)
  - \* 출연연 석·박사급 인력의 파견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 (성능검사비용) 녹색기술 인증취득 중소기업의 경우 인증신청시 신규로 부담한 성능평가기관(산업기술시험원 등)의 성능시험검사비용 50%를 환급 (10.12월)
  - \* 소요재원 : 연간 3억원(= 600건(12월 × 100건 × 50%(인증율)) × 100만원(평균 수수료) × 50%)
- (녹색기술대상) 녹색인증기업의 「국가녹색기술대상」 참여시 서류 평가 가점(2점) 부여 (11.4월)
  - \* 국가녹색기술대상 : 교과부 등 5개부처 공동 주최, 산업기술진흥협회 주관으로 기술성 및 경제성이 뛰어난 녹색기술을 개발한 기업 등 대상으로 대통령상 등 포상

#### ④ 녹색기술 사업화 촉진시스템 구축

- (R&D 우대) 녹색인증기업의 지경부 등 녹색인증 관계부처(8개) R&D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및 녹색인증 수수료 지원 (10.12월)
  - \* 교과부·농식품부·지경부·환경부·국토부·방통위·중기청 R&D 등
  - \* R&D 수행기업의 간접비 사용용도에 녹색인증 신청사항 포함
- (특허우선심사·국제출원지원) 녹색인증기업의 특허 조기확보를 위해 우선심사대상 포함(10.4월 既시행) 및 국제출원비용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10.12월)
  - \* 우선심사 대상 : 녹색인증기술의 특허출원 또는 녹색전문기업의 특허출원
    - 전문조사기관 선행기술조사 의뢰 및 전자출원시스템 이용시 초고속심사대상 (1개월내)에도 포함
  - \* 국제출원비용 지원 : 1인당 5건, 특허·실용신안 건당 700만원(디자인 200만원) 이내
- (기술이전·투자유치 설명회) 녹색인증기업 관련 기술공급자·수요자, 기술거래기관 등이 직접 참여하는 설명회 개최 지원(기업 모집, 일정관리, 자문 및 비용 지원 등)
  - \* (국내) 수시개최(8월~), (해외) 한중 기술이전설명회(8월, 중국 상해), Enterprise Europe Network(EEN) 기술협력설명회(9월, 독일) 등
- (글로벌사업화컨설팅) 중국, 일본 등 글로벌사업화협력센터를 통한 현지 창업·마케팅, 수요기업 알선, 전문컨설팅 등 지원 (10.9월)
  - \* 글로벌사업화협력센터 : 주요국 해외현지 전문기관을 센터로 지정하여 국내 기업의 기술수출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 '10년 현재 중국·동남아·일본 3개 권역에 5개 기관 지정·운영
- (국제컨퍼런스)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창립 1주년 기념 「녹색성장 국제컨퍼런스」 (11.6월)와 연계, 국내·외 우수 투자·평가기관 등이 참여하는 “녹색인증기업 Session\*\*” 개최
  -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녹색성장 이니셔티브 강화를 위해 '10.6.16 출범. 녹색성장 이론적 체계화 및 녹색성장모델 전파 등 수행
  - \*\* 1:1매칭 투자상담회 및 대규모 IR, 인증평가기법 공유, 인증브랜드 신뢰성 확보 등을 통해 녹색인증기업의 투자유치 및 국제신용평가도 제고

## 다. 과제 추진일정

추진 과제		주관부처	추진일정
녹색산업융자 지원 확대 (5개)	▪ 산업별 보급융자 녹색인증기업 참여 우대	각부처	‘10.12월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잔액 예외 적용	중기청	상시
	▪ 기술보증 중점지원 대상에 녹색인증 포함	기보	
	▪ 무담보 특례신용대출 등 수출금융지원 우대	수은	‘10.8월
	▪ 녹색전문기업 수출 및 금융계약 손실 보상	무보	
판로·마케팅 지원 (10개)	▪ 정부발주공사 녹색인증기업 우대	기재부	‘10.12월
	▪ 공공구매/국방조달심사 녹색인증기업 우대	조달청 국방부	‘10.8월 ‘10.11월
	▪ TV·라디오 광고료 부분 면제(70%)	KOBACO	‘10.9월
	▪ 해외전시회 참가시 녹색인증기업 우선권	KOTRA外	‘10.10월
	▪ 해외 수출인큐베이터 녹색인증기업 우대	중기청	‘10.12월
	▪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녹색인증기업 우대	중기청外	
	▪ 녹색인증기업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 지원	중기청	
	▪ 녹색인증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중기청	
	▪ Green 보증브랜드 선정시 우대	KOTRA	
	▪ 수출중소기업 글로벌브랜드 육성 참가우대	중기청	
기술 사업화 기반 구축 (5개)	▪ 녹색전문기업 병역특례지정업체 추천 우대	교과부 병무청	‘10.12월
	▪ 녹색인증기업 해외기술인력 도입 우대	중기청	
	▪ 출연연 석·박사급 인력 파견 우대	지경부	
	▪ 중소기업 녹색인증 비용부담 경감	기재부 지경부	
	▪ 국가녹색기술대상 참여시 서류평가 가점	교과부外	‘11.4월
사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 (6개)	▪ 국가R&D 참여 우대 및 인증수수료 지원	각부처	‘10.12월
	▪ 특허우선심사(신청후 1개월까지 단축가능)	특허청	상시
	▪ 녹색인증기업 국제출원비용지원시 가점(5점)	특허청	‘10.12월
	▪ 기술이전·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지경부	‘10.8월
	▪ 녹색인증기업 글로벌사업화컨설팅 지원	지경부	‘10.9월
	▪ 녹색인증 국제컨퍼런스 개최(GGGI 연계)	지경부	‘11.6월

## 4 후속조치 계획

-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1차) 시행 ('10.8월) 및 녹색금융상품 제도 개선 등 추가 검토 ('10.하반기)

### ①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 시행 및 2차 활성화 방안 검토 · 추진

- '10. 8월 :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 확정 및 시행
- '10. 8~9월 : 녹색금융상품 제도개선 T/F 운영 (기재부, 금융위, 지경부 등 녹색인증 관계부처)
- '10. 9월 : 녹색금융상품 제도개선사항 검토 및 확정
  - \* 녹색인증 수요기업 대상 설문조사 실시(9월, 녹색위) 및 인증제 feed-back
- '10. 하반기 : 제2차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 수립(잠정)

### ② 녹색인증 수요기업 대상 홍보 강화

- (기업단체 · 지자체 연계)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해당 업종별 협 · 단체 및 지자체를 활용하여 중점홍보 실시(기업대상 설명회 및 홍보부스 운영)
  - 녹색전문기업 등 녹색인증기업 대상 간담회 개최(분기별)를 통해 기업활동 애로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병행
- (대국민 녹색인증 인식제고) 주요 일간지 · 방송을 활용해 녹색인증제 및 인증혜택 홍보를 강화하고, 설문조사 · 성공사례집 발간 등 대국민 접점활동 강화
  - 또한, 녹색문화 및 지식 등 창출 · 확산을 위한 전문가 및 녹색관련 생산 · 유통 ·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가칭)녹색커넥트포럼” 운영 (지경부, 환경부, 조달청 등 관계기관 합동, '10년 하반기)

## 참고 1

## 他 인증제도 인센티브 현황 및 비교

□ (인증제도 현황) 신기술 등의 사업화·기업화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벤처기업 확인, 이노비즈기업 인증, 신기술인증(NET) 등 존재

- (벤처기업) 신생기업의 중소기업화를 위한 창업·보육 지원
- (이노비즈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3년 이상) 발굴·육성
- (신기술인증) 신기술의 조기 발견 및 기술 상용화 촉진 목적

□ 각 제도별 중점지원 분야

- (벤처기업) 시장진입이 어려운 초기, 창업기업의 위험(Death valley)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원조달 등 경영안정화 중점 지원
- (이노비즈기업)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R&D, 금융 등 중심
- (신기술인증) 개발신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공공구매 등 판로 중심

### <벤처·이노비즈·NET 비교>

구 분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신기술인증(NET)
기업 등 요건	벤처투자기업: 금융투자 등으로 지분금 10% 이상 연구개발기업: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 연개발비 5천만원 이상 신기술기업: 기술개발 사업에 의한 총매출액 50% 이상 기술평가기업: 기술성 및 사업화능력 우수기업	창업 후 3년 경과 기업으로 OECD 기업혁신성 평가매뉴얼 (Oslo manual)에 근거한 평가 지표에 따라 기술혁신역량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술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기업(목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	인증일기준 향후 2년 이내 상용화 가능하거나 향후 기존 제품 성능을 현저히 개선 시킬 수 있는 기술 (목적: 기업 및 공공연이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 상용화와 기술거래 촉진)
주요 인센티브	세제	- 법인세, 소득세 등 감면(2년)	- 사업용 투자자산 세액공제
	자금	- 정책자금 등 지원시 우대 - 기술보증 우대 지원	- 기술보증 우대 지원
	판로	- 조달청 물품구매심사 등 우대	- 조달청 물품구매심사 등 우대
	인력	- 병무청 병역지정업체심사 우대 - 해외 기술인력도입 지원	-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 우대
	IR	- TV/라디오 광고 감면 혜택 - 코스닥 등록 우대	- TV/라디오 광고 감면 혜택

\* 주요 인센티브 중 국가R&D 참여우대, 수출기업화사업 등 해외판로개척 부분은 공통으로 생략

## □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과 비교

구 분	녹색인증기업 인센티브	벤처·이노비즈 인센티브
산업별 보급용자 참여 우대	신재생에너지설비, 농업종합자금 등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잔액 예외	잔액기준 또는 매출액 한도 예외	잔액기준 또는 매출액 한도 예외
기술보증 중점 지원 대상	보증료율 0.5% 감면, 한도 70억원	보증료율 0.2% 감면, 한도 50억원
수출금융(특례신용대출) 우대	평가시 가점(10점), 한도 30억원	-
수출 및 금융계약 손실 보상	보험료 할인 20%, 보증한도 2배	-
정부발주공사 우대	선금지급 확대, 계약보증금 감면 등	-
공공구매/ 국방조달심사 우대	조달청(1.5점), 국방부(0.5점)	조달청(1.5점), 국방부(0.5점)
TV·라디오 광고료 70% 면제	지상파 3사 & DMB	지상파 3사 & DMB
해외전시회 참가시 우대	신청시 가점(10점)	신청시 가점(10점)
수출기업화 자원사업 우대	신청시 가점(5점)	신청시 가점(5점)
해외수출인큐베이터 우대	신청시 가점(5점)	신청시 가점(5점)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 지원	신청시 가점(5점)	신청시 가점(5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신청시 가점(10점)	신청시 가점(5~10점)
Green 보증브랜드 선정시 우대	우선 선정(재무건정성 충족시)	-
수출중소기업 글로벌브랜드 육성	수출액, 매출액기준 등 참가자격 완화	수출액, 매출액기준 등 참가자격 완화
병역특례지정업체 추천 우대	교과부 추천시 가점	교과부 추천시 가점
해외기술인력 도입 우대	신청시 가점(5점)	신청시 가점(5점)
출연연 석·박사급 인력파견 우대	신청시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인증 비용부담 경감	인증취득시 시험평가비용 50% 환급	-
국가녹색기술대상 서류평가 가점	참여시 가점(2점)	-
국가R&D 참여우대 및 인증수수료	기초원천·지식경제 등 부처R&D 가점	중소기업 R&D 가점
특허우선심사(초고속심사대상)	특허우선심사(최대 1개월까지 단축)	특허우선심사
국제출원비용지원시 가점	1인당 5건, 건당 700만원 이내	-
기술이전·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기술공급자·수요자, 거래기관등 참여	-
글로벌사업화컨설팅 지원	현지마케팅, 수요기업알선, 전문컨설팅	-
국제컨퍼런스 개최	국내외 평가기관, 투자기관 참여	-



## 참고 2

##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방안

□ 전체 4대 분야 26개 추진과제 중에서 중소기업의 지원필요성이 큰 정책자금 융자·판로/마케팅 분야 등 17개 과제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시행

○ 특히, 성능시험검사비용 환급 및 수출금융·정부발주공사 우대, 고급인력 지원 등을 통해,

○ 중소기업의 녹색인증 취득 및 인증 후 사업화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녹색인증 제도의 활용성 제고

\* 신규 성능시험검사비용 환급(50%), 수출보험료 할인 확대(20%), 정부계약시 의무선금지급률 상향(최대 60%), 해외·고급인력 채용 지원 등

### <녹색인증기업 中 중소기업 전용 지원과제 >

NO.	과제명	소관	세부 내용
1-2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잔액 예외	중소기업청	잔액기준 또는 매출액 한도 예외
1-3	기술보증 중점 지원 대상	기술보증기금	보증료율 0.5% 감면, 한도 70억원
1-4	수출금융(특례신용대출) 우대	수출입은행	평가시 가점(10점), 한도 30억원
1-5	녹색수출종합보험 우대 * 보증한도 확대대상 전문기업은 대기업 포함	무역보험공사	보험료 할인 확대(20%)
2-1	정부발주공사 우대	기획재정부	선금지급 확대, 계약보증금 감면
2-3	TV·라디오 광고료 70% 면제	방송광고공사	지상파 3사 & DMB
2-5	해외수출인큐베이터 우대	중소기업청	신청시 가점(5점)
2-6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우대	중소기업청외	신청시 가점(5점)
2-7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 지원	중소기업청	신청시 가점(5점)
2-8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중소기업청	신청시 가점(10점)
2-10	수출중소기업 글로벌브랜드 육성	중소기업청	수출액, 매출액기준 등 참가자격 완화
3-2	해외기술인력 도입 우대	중소기업청	신청시 가점(5점)
3-3	출연연 석·박사급 인력파견 우대	지식경제부	신청시 가점 부여
3-4	중소기업 인증 비용부담 경감	지식경제부	인증취득시 시험평가비용 50% 환급
4-3	국제출원비용지원시 가점	특허청	신청시 가점(5점)
4-4	기술이전·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지식경제부	기술공급자·수요자, 거래기관 등 참여
4-5	글로벌사업화컨설팅 지원	지식경제부	현지마케팅, 수요기업알선, 전문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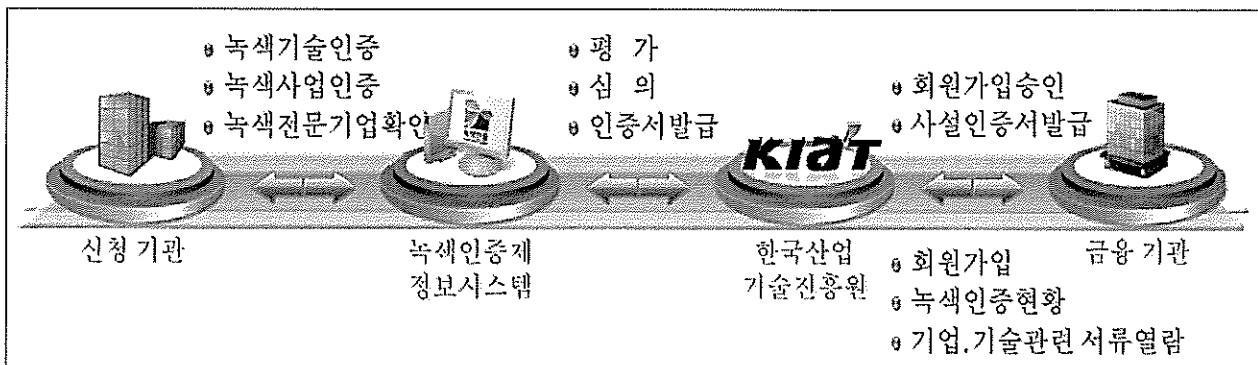
## 참고 8

## 녹색인증 금융권 연계/녹색금융종합포털

□ (녹색인증정보 금융권 연계) 녹색인증 기업정보를 금융권과 공유하는 시스템 개발로 녹색금융상품 활성화 유도(10.7.30 시스템 개발 완료)

○ 녹색인증 신청서류 제출시 기술·경영상태 등 금융권대상 정보 공개 동의과정 추가, 최종 인증취득 후 신청인이 동의한 정보를 금융권에서 조회

\* 전담기관(KIAT) 녹색인증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http://www.greencertif.or.kr)) 내 금융권 전용 페이지를 구성하여 정보 제공(개별 금융기관 대상 기관등록인증서 발급)



○ 녹색인증과 금융권 연계를 통해 녹색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호업무협약 체결(7.14, 제4차 녹색금융협의회)

\* 녹색성장위원회, 녹색금융협의회, 전담기관(KIAT) MOU 체결

□ (녹색금융종합포털) 녹색인증기업이나 금융투자자가 접근 용이한 녹색금융 포털을 통해 녹색금융 창구 일원화

○ 녹색금융상품 정보와 녹색인증제, 세제혜택 등 관련 사항\*을 종합 제공함으로써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12월, 은행연합회)

\* 녹색 정책자금 및 보증 지원 등 각종 추진상황, 녹색자금 조달에 대한 컨설팅, 녹색인증 정보, 녹색 금융상품 내용 및 수익률 비교 등

○ 특히, 중소기업 정보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포털(Biz Info)과 연계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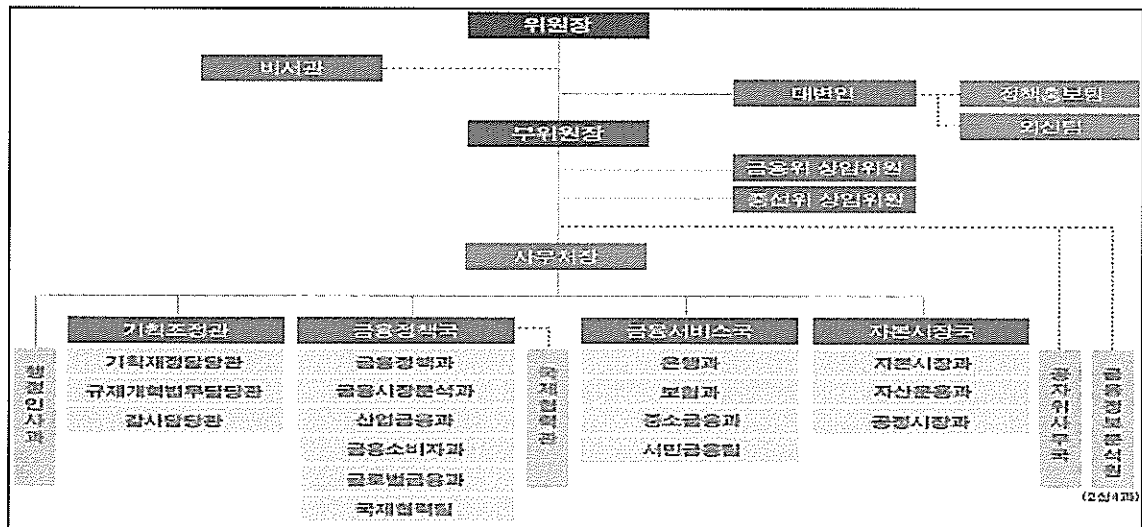
\* '10.6월 대한상공회의소 녹색금융 인식 조사(국내 녹색기업 300개사 대상)  
: 녹색금융 이용해 본 기업비율은 14.4%,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이용방법을 몰라서(53.9%)', '까다로운 이용조건·절차(22%)', '내부자금 충분(15.5%)' 順

9. 금융위 출범 이후 대통령 업무보고 및 정기  
국회 업무보고서 일체

□ 별도제출

## 10. 조직도 및 전화번호표

### □ 조직도



### □ 전화번호표

- 별첨자료 참조

Page 2158

[illegible]

## 11. 은행의 서민금융시장 진출에 대한 견해와 미소금융 추진실적

### □ 은행의 서민금융시장 진출에 대한 견해

- 현재 은행은 사회적 책임의 이행 차원에서 미소금융, 희망홀씨 대출 등을 통하여 다각적으로 서민금융지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 미소금융 : 휴면예금 및 기부금 (향후 10년간 1조원)
- 희망홀씨대출 : 저신용자·저소득자등 서민대출 대행

### □ '10.8.25 현재, 미소금융 금년 추진실적

- 미소금융 지점은 2009.12.15일부터 기업·은행재단 및 지역지점재단의 설립이 이어져 현재까지 총 63개 지점 (기업재단 28, 은행재단 16개, 지역지점재단 19개) 설립
- 미소금융 대출실적(대출건수 4,492건, 대출금액 284억원)
  - 미소금융지점(63개) : 2,358명, 199억원('10.8.25 기준)
  - 기존 복지사업자 : 2,134명, 85억원('10.7.31 기준)

□ 햇살론 실적 총괄

- 7.26. 햇살론 대출개시 후 9.15.까지 취급실적은 총 89,890건 약 8,164억원

□ 햇살론 실적 월별

(‘10. 9. 15. 기준 / 단위 : 건수, 억원)

구분	‘10.7.26~30	‘10.8.1~31	‘10.9.1~15	총계
대출건수	2,940	58,723	28,227	89,890
대출액	234	5,220	2,910	8,164

□ 햇살론 실적 자금용도별

- 생계자금대출 54.8%(4,472억원), 운영자금대출 45.1%(3,685억원)이며, 창업자금대출은 0.1%(7억원)를 차지

## 12. 최근 5년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잔액 추이(지역별/연도별)

□ 최근 5년간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잔액

(단위 : 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34,133	40,326	45,867	59,893	111,955
경기	10,003	11,470	12,034	14,332	23,673
경남	1,582	1,895	2,060	2,824	5,671
광주	1,025	1,131	1,101	1,568	3,328
대구	2,252	3,095	3,571	4,507	7,720
대전	935	906	925	1,190	2,270
부산	2,438	2,902	3,446	4,433	8,930
인천	1,941	2,250	2,754	3,488	7,249
충남	1,558	1,786	2,002	2,528	4,287
충북	601	738	1,005	1,430	2,875
강원	1,034	1,286	1,402	2,099	3,478
서울	7,984	9,326	11,169	15,381	29,234
울산	745	850	853	934	1,958
경북	852	1,065	1,237	1,929	4,634
전남	556	745	944	1,323	2,666
전북	464	575	745	1,021	2,648
제주	164	305	620	907	1,334



홍 재 형 의 원

## 1. 미소금융 운영 현황 자료

- 은행별 출연금 현황
- 최근일 현재 대출실적(건수, 금액 등)

## 2. 미소금융 중앙재단이 운영하는 지점 현황

- 지점명 및 지점별 직원 현황
- 지점별 2010년 예산

### 1-1. '10.9.10 현재, 미소금융 운영 현황 자료

#### ☐ 은행별 출연금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순번	은행명	출연금
휴면예금	1	경남은행	251,844
	2	광주은행	10,216,908
	3	KB은행	7,265,720
	4	IBK은행	29,090,329
	5	농협은행	20,750,897
	6	대구은행	2,115,358
	7	부산은행	3,089,955
	8	산업은행	35,768,186
	9	수협은행	21,896,934
	10	신한은행	125,868
	11	씨티은행	26,961,875
	12	외환은행	59,453,453
	13	우리은행	1,162,978
	14	전북은행	7,300,738
	15	제주은행	1,876,106
	16	하나은행	2,903,678
	17	HSBC은행	23,579,603
	18	SC제일은행	77,982,395
소계			331,792,823

구분	순번	은행명	출연금
기부금	1	신한은행	10,000,000
	2	우리은행	10,000,000
	3	하나은행	4,000,000
	4	IBK은행	10,000,000
	5	KB은행	10,000,000
	소계		44,000,000
부실채권정리 기금	1	경남은행	11,129,763
	2	광주은행	12,800,000
	3	국민은행	4,400,000
	4	기업은행	5,996,087
	5	농협중앙회	6,802,861
	6	대구은행	684,366
	7	부산은행	750,000
	8	산업은행	1,895,454
	9	수출입은행	1,535,651
	10	수협중앙회	900,000
	11	신한은행	495,192
	12	씨티은행	700,000
	13	외환은행	580,506
	14	우리은행	1,000,000
	15	전북은행	3,709,303
	16	제주은행	11,000,000
	17	하나은행	9,395,663
	18	SC제일은행	775,244
	소계		74,550,090
합계			450,342,913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의설립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원권리자의 지급  
청구시 반환하여야 하므로, 조성금액 전체를 사업재원으로 보지는 못함

## 1-2 '10.9.10 현재, 최근일 현재 대출실적(건수, 금액 등)

□ 미소금융사업 대출 현황은 총 7,138명, 426.8억원

- 미소금융지점(68개) : 2,918명, 254.8억원
- 기존 복지사업자 : 4,220명, 172 억원\*

\* '10.1.1~8.31 기준이며, '08·09년도 대출지원 25,919명, 681억원 별도

## 2. '10.9.10 현재, 미소금융 중앙재단이 운영하는 지점 현황

□ 지역지점명 및 지점별 직원 현황

(단위: 명)

구분	지점	직원		
		대표자	자원봉사자	계
1	서울서초구지점	1	3	4
2	충북청주지점	1	3	4
3	서울은평구지점	1	3	4
4	광주서구지점	1	3	4
5	대구서구지점	1	3	4
6	강원춘천지점	1	3	4
7	부산중구지점	1	3	4
8	제주지점	1	4	5
9	대전동구지점	1	3	4
10	경기화성지점	1	3	4
11	대구중구지점	1	3	4
12	충남천안지점	1	3	4
13	경기성남지점	1	3	4
14	서울관악구지점	1	3	4
15	경북안동지점	1	2	3
16	경기구리지점	1	3	4
17	부산연제구지점	1	4	5
18	경남거제지점	1	3	4
19	전북전주지점	1	3	4
계		19	58	77

\* 지역지점 재단은 대표자 1명(무보수 명예직)과 자원봉사자 3명으로 구성이 원칙이나, 지점의 상황에 따라 차이 발생

□ 지점별 2010년 예산

< 2010년 지역지점재단 예산 >

(단위: 천원)

구분	금액	비고
사업비	500,000	- 대출재원
운영비	13,350	- 자산취득비
	36,000	- 자원봉사자(3명) 실비보상 성격의 급여
	25,500	- 기타경비
계	575,000	

\* 지점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초년도에 한하며, 향후 감액할 예정

### 3. 2009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내역

☐ 붙임참조

# 2009년도 국정감사시 지적 및 시정사항 처리결과

# 목 차

## 1. 금융위기 대응 및 출구전략 관련

- 1) 외환관리에 있어 예대율 관리, 통화스왑등에 대한 실질적 관리를 통해 건전성 감독방안을 마련할 것 ..... 7
- 2) 가계부채 증가와 미국 등 세계경제의 침체(더블딥) 우려로 인한 제2의 금융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 ..... 7
- 3) 경제위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차원에서 이루어진 각종 조치(기금, 펀드 등)의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내실 있는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 ..... 8
- 4) 출구전략을 시행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 시행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 ..... 8

## 2. 미소금융 및 금융소외자 지원 관련

- 1) 미소금융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있어 관치금융 논란이 없도록 조치할 것 ..... 9
- 2) 미소금융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그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 9
- 3) 미소금융재단 이사회가 방만경영을 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 10
- 4) 미소금융이 지속가능한 서민금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 인력의 전문 능력제고 등 운영의 내실화 방안을 강구할 것 ..... 10
- 5) 미소금융이 기존의 서민금융(희망홀씨 대출 등)과 중복, 상충됨이 없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10
- 6) 서민에 대한 대출시 정부의 보증을 통한 신용을 보장하는 방안과 실직·폐업 상태에 있는 서민에 대한 긴급 소액 생계비 대출이 가능하도록 그 대책을 강구할 것 ..... 11



### 3. 녹색금융추진관련

- 1) 녹색금융의 정의와 지원기준을 시급히 마련하여 과거 벤처 거품과 같은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 운영에 내실을 기할 것 ..... 11

### 4. 우리은행 파생상품 투자손실관련

- 1)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의 관리, 감독상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MOU 점검방식의 개선 등의 대책을 수립할 것 ..... 12

### 5. 한국은행법 개정관련

- 1) 지난 9월 체결한 정보공유 MOU를 충실히 이행하고, 한국은행에 대한 단독 검사권부여 등이 우리 금융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 ..... 12

### 6. 신용카드 관련

- 1)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관련하여 원가공개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영세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인하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 13
- 2) 현금서비스 취급 수수료 폐지 등 현금서비스 이자율을 인하하는 한편, 체크카드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13
- 3) 포인트·마일리지형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 15

### 7. 주택담보대출관련

- 1) 주택담보대출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 및 자산 버블을 방지하기 위해 DTI등 규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15

8. 주택청약저축 가입자의 폭증의 배경에는 해당 은행들의 과다 경쟁과 비이성적인 영업 행태가 지적되고 있는 바, 특히 기업 은행 등 금융 공기업이 다단계 업체처럼 강제 할당식 꺾기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할 것 ..... 16
9.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설립 이후 지원실적이 미흡하므로 실적 개선에 노력할 것 ..... 16
10. 중소기업지원관련
  - 1) 향후 중소기업 대출 및 보증 축소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대책(신·기보 적정 보증 규모 확보 등)의 마련과 함께 한계 중소기업의 퇴출을 포함한 구조조정 노력도 지속 추진할 것 ..... 18
  - 2) 보증부대출의 고금리 문제 및 여신거래약정서에 금리를 미기재하는 등의 문제를 T/F 구성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18
  - 3) 중견기업의 육성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 19
11. 현행 대출금리의 산정기준인“CD+가산금리”체계에 대하여 CD금리가 자의적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고 가산금리책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조사하고, 금리결정 구조에 대한 개선책 및 금리 인하 방안을 강구할 것 ..... 20
12. 저축은행의 고금리 문제 해소와 저축은행계정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 ..... 20
13. 해운산업의 구조조정과 이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 21

14.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감독체계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22

15. 자산관리공사의 희망모아, 시중은행이 설립한 민간배드뱅크 등의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함께 면책기록의 보존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 정도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23

## 16. 금융소비자 보호관련

1)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 교육을 강화(정책 수립)하고, 금융민원의 원활한 해소 등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등을 비롯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 ..... 23

17. 금융중심지 추진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산지역 등에 대해 금융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할 것 ..... 24

18. 금융전문인력 양성 관련 자격증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24

## 19. 펀드 관련

1) 대리인에 의한 펀드 개설시 적합성 원칙과 투자자 편의 문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25

2) 펀드 판매 수수료 및 펀드 운용보수 인하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26

3) 계열사 소속 자산운용사가 자기계열 회사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를 출시하고 있는 것은 이해상충방지 측면에서 문제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26

4) 펀드 판매회사가 높은 판매보수를 수취하고 있어 장기투자자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지속되므로, 숨겨진 비용인 판매보수 폐지 및 판매수수료와의 이중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27

- 5)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위한 미스터리쇼핑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바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개선노력을 기울일 것. .... 28
20. 은행의 DCDS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를 법적으로 면밀하게 검토 할 것 ..... 28
21. 은행연합회를 공적 자율규제기능을 수행하는 법적 단체로 은행 법상에 규정하되, 그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배 구조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 ..... 29
22. 금융보안체계 구축 관련
  - 1) 인터넷공간에서 해킹 등에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금융위원회 보안업무 관련 조직 및 인력 확충방안을 강구할 것 .... 30
23. 신용평가사의 자회사가 신용평가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업체로 오인될 활동 및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30
24.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협회의 회원에 대한 연수 교육업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현재 연수교육 업무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보험대리점협회에서도 회원에 대한 연수 및 교육업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31
25. 금융위원회 중간 간부급 공무원들의 해당 부서 평균 근속기간이 짧아 정책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잦은 인사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일 것
  - 1) 중간 간부급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일 것 ..... 31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금융위기 대응 및 출구전략 관련	
1-1) 외환관리에 있어 예대율 관리, 통화스왑 등에 대한 실질적 관리를 통해 건전성 감독방안을 마련할 것	<div data-bbox="767 432 1473 533">□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고 및 감독강화 방안’ 시행(‘10.1.1일)</div> <div data-bbox="794 560 1473 739">* 외화유동성비율 산정시 유동화가중치 적용 및 중장기 재원조달비율 규제 강화, 국내은행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 신설, 외환파생상품 거래 리스크 관리 신설</div> <div data-bbox="767 772 1473 873">□ ‘2차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고방안’ 시행(‘10.8.1일)</div> <div data-bbox="794 907 1473 1086">* 외화유동성비율 일일 관리 및 중장기 외화 자금관리 추가 강화, 외은지점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 신설,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 추가 강화</div> <div data-bbox="767 1131 1066 1176">&lt;향후 추진계획&gt;</div> <div data-bbox="767 1209 1473 1310">□ 각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방안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div>
1-2) 가계부채 증가와 미국 등 세계 경제의 침체(더블딥) 우려로 인한 제2의 금융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	<div data-bbox="767 1328 970 1373">&lt;처리결과&gt;</div> <div data-bbox="767 1417 1473 1518">□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노력* 강화</div> <div data-bbox="794 1563 1473 1697">* 금융회사 외화 건전성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 방안 마련, 글로벌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적극 참여 등</div> <div data-bbox="767 1742 1066 1787">&lt;향후 추진계획&gt;</div> <div data-bbox="767 1832 1473 1933">□ 금융시장의 잠재적 취약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선제적 대응</div> <div data-bbox="794 1971 1473 2060">○ 또한, G20, FSB 등 국제적 논의와 연계 하에 국내 금융 건전성 규제체제 정비 추진</div>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3) 경제위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진 각종 조치(기금, 펀드등)의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내실있는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p>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금융위기 당시 도입된 비상조치*의 내실 있는 운용과 점검 추진</p> <p>* 은행자본확충펀드, 채권시장안정펀드, 구조조정 기금, 중소기업 보증만기 연장, 은행 외화채무 지급보증 등</p> <p>○ 아울러 경제·금융 여건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정상화 추진</p> <p>* 은행 외화채무지급보증 종료('09.12)</p> <p>* 중소기업신용보증 확대조치 정상화('10.7)</p>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아직 불안요인이 잔존하는 만큼 비상조치를 경제여건과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단계적으로 정상화 추진</p>
<p>1-4) 출구전략을 시행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 시행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p>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비상조치 환원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추진</p> <p>○ 중소기업 활성화·설비투자 등 민간의 자생적 경기 회복기반 마련</p> <p>○ 기업구조조정추진 등 금융불안에 선제적으로 추진</p>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경기회복과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미소금융 및 금융소외자 지원 관련	
2-1) 미소금융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있어 관치금융 논란이 없도록 조치할 것	<p>&lt;처리결과&gt;</p> <p>□ 기업·은행의 기부금은 자체 설립한 미소금융재단에 전액 재출연되어 각 기업·은행재단이 자율적으로 미소금융 사업을 수행중</p> <p>○ '10.9.28 현재, 75개 기업·은행권 재단 및 지역지점 설립이 완료</p> <p>○ 기업·은행이 미소금융사업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함으로써 해당 기업·은행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p>
2-2) 미소금융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그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p>&lt;향후 추진계획&gt;</p> <p>□ 금년중 미소금융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그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령정비를 추진 중</p> <p>○ 휴면예금법 개정안 국회심의 ('10.9.14,정무위 상정)</p> <p>□ 또한 미소금융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선정위원회 (7인)」를 외부전문가(5인) 중심으로 기 재편하고 사업자 선정기준도 이사회에서 사전결정</p> <p>○ 1차('09.12)·2차('10.4) 지역법인 대표자 공모 과정에 기 적용했고 앞으로도 선정 기준·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3) 미소금융재단 이사회가 방만 경영을 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미소금융재단의 감독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는 철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음 (금융위원회는 당연직 이사로 미소금융 재단이사회에 참석)</p> <p>* '10.2월, 6월중 감사원의 미소재단 감사실시</p>
2-4) 미소금융이 지속가능한 서민금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인력의 전문 능력 제고 등 운영의 내실화 방안을 강구할 것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운영인력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운영인력의 전문능력 제고 등 운영의 내실화방안을 시행중</p> <p>○ 예) 미소희망봉사단을 통한 전문인력 재능기부, 현대차미소학습원 운영, 금융연수원과 공동으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추진 등</p>
2-5) 미소금융이 기존의 서민금융 (희망홀씨 대출 등)과 중복 상충됨이 없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미소금융과 희망홀씨대출은 대출자금의 용도가 상이하여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p> <p>○ 미소금융 : 창업자금·운영자금 등 희망홀씨대출 : 생계비 등 일반대출</p> <p><input type="checkbox"/> 미소금융지점 방문자 중 미소금융의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분들에게 희망홀씨대출 등 기타 서민금융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를 병행 중</p> <p>○ 다만, 과도한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를 연계 관리할 예정</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6) 서민에 대한 대출시 정부의 보증을 통한 신용을 보장하는 방안과 실직·폐업 상태에 있는 서민에 대한 긴급 소액 생계비 대출이 가능하도록 그 대책을 강구할 것</p>	<p>&lt;처리결과&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보증부 서민대출인 ‘햇살론’을 출시하여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생계자금, 사업자금을 지원(‘10.7.~)</li> <li><input type="checkbox"/>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대출 보증을 통해 저소득층·저신용층 서민을 위한 대출(햇살론)을 확대</li> <li><input type="checkbox"/> 실직·폐업 상태에 있는 서민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긴급 소액 생계비 대출을 실시중</li> </ul>
<p>3. 녹색금융추진관련</p>	
<p>3-1) 녹색금융의 정의와 지원기준을 시급히 마련하여 과거 벤처 거품과 같은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 운영에 내실을 기할 것</p>	<p>&lt;처리결과&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정책금융기관들이 인증대상 녹색기술·녹색사업(지경부 고시)을 바탕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녹색금융 지원을 하도록 조치</li> <li><input type="checkbox"/> 또한, 금년 4월부터 녹색인증제를 시행하여, 세제혜택(민간투자자)을 받는 민간금융회사의 녹색금융상품 지원 대상을 녹색인증사업 등으로 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의 녹색금융 및 녹색펀드의 운용 및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업무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은행 녹색금융 운용 모범기준」, 「녹색펀드 판매·운용 모범기준」 마련</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b>4. 우리은행 파생상품 투자손실 관련</b>  4-1)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MOU 점검방식의 개선 등의 대책을 수립할 것	<b>&lt;처리결과&gt;</b>  <input type="checkbox"/> 예금보험공사는 MOU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MOU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10.3)  ○ MOU 체결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방식을 개선하여 예방기능을 강화  ○ MOU 재무목표 부여방식과 재무지표 산정방식 개선  <b>&lt;향후 추진계획&gt;</b>  <input type="checkbox"/>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예보가 MOU 이행실적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적절한 사후 조치 등을 취하도록 관리 감독하겠음
<b>5. 한국은행법 개정관련</b>  5-1) 지난 9월 체결한 정보공유 MOU를 충실히 이행하고, 한국은행에 대한 단독 검사권부여 등이 우리 금융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	<b>&lt;처리결과&gt;</b>  <input type="checkbox"/> 정보공유 MOU에 따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보 등 각 기관은 관련정보를 원활히 공유하고 있음  <b>&lt;향후 추진계획&gt;</b>  <input type="checkbox"/> 5개 기관 부기관장으로 구성된 정보공유 협회 등을 통해서 MOU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개선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b>6. 신용카드 관련</b></p> <p>6-1)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관련하여 원가공개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영세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인하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p>	<p><b>&lt;처리결과&gt;</b></p> <p>㉠ (재래시장 가맹점) 연간 매출 9,600만원 미만인 재래시장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상한을 20~22%에서 1.6~1.8%로 인하</p> <p>*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재래시장 (약 1,550개)</p> <p>○ 다만, 유흥주점, 무도장, 성인오락실, 귀금속점 등 영세업종으로 보기 어려운 가맹점은 제외(중소 가맹점의 경우도 동일하게 제외)</p> <p>※ (참고) 현재 서울시내 3大 대형마트 신용카드수수료율 : 1.6~1.9%</p> <p>㉡ (중소 가맹점) 재래시장 가맹점 이외에 연간 매출 9,600만원 미만인 가맹점의 신용카드수수료율 상한을 3.3~3.6%에서 2.0~2.15%로 인하</p> <p>○ 신용카드사별 중소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이 2.0~2.15%로 대폭 인하됨에 따라 기존에 2.0~2.3%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던 영세가맹점 (간이과세자)도 일부 인하</p> <p>※ (참고) 현재 서울시내 3大 대형백화점 신용카드수수료율 : 2.0~2.4%</p>
<p>6-2) 현금서비스 취급 수수료 폐지 등 현금서비스 이자율을 인하하는 한편, 체크카드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p>	<p><b>&lt;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gt;</b></p> <p>□ (현금서비스 이자율) '10년 9월기준 카드사는 취급수수료 폐지(8개사) 또는 일부 인하 등의 방법으로 현금서비스 금리를 인하</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카드사별 인하폭(취급수수료 포함)은 0.3%p~4.06%p 수준이며, 평균 현금 서비스 금리도 '09년 이후 완만한 하락세 지속</p> <p style="margin-left: 40px;">* 26.4%( '09.1Q)→25.9%( '09.2Q) → 25.7%( '09.3Q) →25.7%( '09.4Q)→24.6%( '10.1Q)</p> <p>○ '10년 3/4분기 중 취급수수료를 폐지하지 않고 일부 인하한 카드사 중</p> <p style="margin-left: 20px;">- 일부 카드사가 추가로 취급수수료 폐지할 예정(10개사)</p> <p>⇒ 서민들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하여 취급수수료 폐지 및 현금서비스 금리 인하 지속 유도</p> <p>□ (체크카드 수수료율) 다음과 같이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既 마련</p> <p>○ 기존에는 직불·체크카드 결제 가능 범위를 재화·용역의 공급 대가로 한정(신용카드 결제 가능 범위와 동일)하고 있었으나 결제 가능 범위 규정을 네거티브 형태로 변경하는 한편 신용카드와 달리 직불·체크카드의 경우 대출 상환, 주식·펀드 투자 등도 결제가 가능토록 결제 범위를 확대</p> <p style="margin-left: 40px;">* 신용카드의 경우 대출 상환, 주식·펀드 투자에 대해 결제 금지</p> <p>② 2010년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를 차별화*(조세특례제한법 개정, '10.1.1)</p> <p style="margin-left: 40px;">* 신용카드 : 20%, 체크카드 : 25%</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이에 따라 향후 소비자의 체크카드 사용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카드사의 체크카드 수수료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유도</p> <p>* 체크카드/신용카드 사용 비중</p> <p>· 2.9%(’05)→6.0%(’07)→9.9%(’09)→10.8%(’10.1Q)</p>
<p>6-3) 포인트·마일리지형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p>	<p>&lt; 향후 추진계획 &gt;</p> <p><input type="checkbox"/> 최근 포인트·마일리지의 사용처가 다양화되고 그 이용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p> <p>○ 금융당국은 거래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포인트 등 발행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음</p> <p><input type="checkbox"/> 또한, 포인트·마일리지형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성남 의원)이 발의되어 있는 바</p> <p>○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나갈 계획</p>
<p>7. 주택담보대출관련</p>	
<p>7-1) 주택담보대출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 및 자산 버블을 방지하기 위해 DTI 등 규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p>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각 개별법에 근거한 감독규정으로 규제중</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주택 및 주택금융시장 동향, 금융회사 건전성 추이 등 관련동향을 보아가며 금융규제 합리화 방안 모색</p>
<p>8. 주택청약저축 가입자의 폭증의 배경에는 해당 은행들의 과다 경쟁과 비이성적인 영업 행태가 지적되고 있는 바, 특히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이 다단계 업체처럼 강제 할당식 쪼기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할 것</p>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2010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실적을 영업점 경영실적평가 기준(KPI)에서 제외('10. 1. 11) 하여 영업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과당 유치 유인 구조를 개선</p> <p><input type="checkbox"/> 불완전 판매 방지 직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p>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캠페인 등 과당 경쟁을 지양하고 정상적인 실수요자 중심의 영업 추진</p>
<p>9.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설립 이후 지원 실적이 미흡하므로 실적 개선에 노력할 것</p>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08년 9월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되어 2년째 운영 중</p> <p><input type="checkbox"/> 그동안 지원센터는 금융기관의 질의·건의사항 처리와 애로사항 해소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금융환경개선에 노력</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해왔으며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진입,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중심지 정책 홍보를 위한 해외 IR('09.11월, '10.5월)을 실시</li> <li>- 서울시-맥쿼리그룹간 한국내 사업 확대를 위한 MOU('09.11월) 및 부산시-칼리온 은행간 선박금융 협력강화 MOU 체결 지원('09.11월)</li> <li>- 부산시-佛 Orbeo社간 탄소배출권시장 협력을 위한 MOU 체결지원('10.5월)</li> <li>○ 또한, 금융감독법규 영문화('09.12월), 금융거래 가이드북 발간('10.1월), 금융회사 외국인 임원의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10.4월) 등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li> </ul> <p><b>&lt;향후 추진계획&gt;</b></p> <p><input type="checkbox"/> 앞으로도 국내사의 해외진출과 외국사의 국내진입을 위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0. 중소기업지원관련	
10-1) 향후 중소기업 대출 및 보증 축소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대책(신·기보 적정 보증 규모 확보 등)의 마련과 함께 한계 중소기업의 퇴출을 포함한 구조조정 노력도 지속 추진할 것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한시적 확대지원조치의 정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 '10년 업무계획에 반영</p> <p>○ '10년중에도 위기이전인 '07~'08년 보다 확대 보증지원</p> <p>* 신·기보 보증공급(조원): ('07) 40.6 → ('08) 41.6 → ('09) 55.4 → ('10) 52.6</p> <p><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구조조정 지연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조치도 병행 추진 ⇒ '10년 업무 계획에 반영</p> <p>○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선별적·제한적으로 보증 만기연장</p> <p>○ 비효율적 부문(한계기업 고액·장기보증기업 등)에 대해서는 가산보증료 부과 등을 통해 보증감축 및 구조조정 유도</p>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위기대응조치의 단계적 정상화 추진 상황과 중기대출·보증 및 중소기업 자금사정을 중점 모니터링하여 연착륙을 유도하는 한편 한계기업 등의 구조조정 촉진</p>
10-2) 보증부대출의 고금리 문제 및 여신거래약정서에 금리를 미기재하는 등의 문제를 T/F 구성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보증부대출의 고금리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4.21일 “보증부 대출 금리부과체계 개선 방안” 발표</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주요내용) ① 보증부분에 신용기산금리 부과 금지, ② 보증부 대출 금리 보증기관에 통보, ③ 보증부 대출 금리관련 은행 내부통제 강화</p> <p><b>&lt;향후 추진계획&gt;</b></p> <p><input type="checkbox"/> 보증부 대출 금리부과체계 개선 방안 시행 및 사후 점검</p> <p>○ 또한 여신거래약정서 주요사항 기재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p>
10-3) 중견기업의 육성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p><b>&lt;처리결과&gt;</b></p> <p><input type="checkbox"/> 정부는 금융위·기재부·지경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중견기업 육성 방안 발표(3.18)</p> <p>* (주요내용) ①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 정의 및 지원 범위 규정(지경부), ② 중견기업 조세 부담 완화(기재부), ③ 중견기업 금융 부담 완화(금융위)</p> <p>○ 금융위는 정책금융공사를 통한 중견기업 자금 공급, 신기보 보증 종료 부담완화 등을 추진할 예정</p> <p><input type="checkbox"/> 산업발전법 개정 즉시 중견기업 지원 정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 완료</p> <p>* 정책금융공사 : 자금공급 기준 마련 * 신·기보 : 보증 종료 부담 기준 마련</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산업발전법 개정과 동시에 중견기업 지원 개시</p>
<p>11. 현행 대출금리의 산정기준인 "CD+가산금리" 체계에 대하여 CD금리가 자의적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고 가산금리 책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조사하고 금리결정 구조에 대한 개선책 및 금리 인하 방안을 강구할 것</p>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은행연합회가 '10.2월부터 새로운 대출 기준금리인 코픽스를 고시하고, 시중 은행이 이를 이용한 대출상품을 출시</p> <p>○ 은행 자금조달비용을 적절히 반영하는 코픽스 연동 대출 도입으로 고가산금리 문제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p> <p>※ CD연동 대출의 코픽스 전환 허용으로 기존 차주의 고가산금리 문제도 상당부분 개선될 전망</p> <p><input type="checkbox"/> 다만, 금리는 시장 자율로 결정할 사항이나, 코픽스 도입 전후 신규 주택담보 대출금리*는 소폭 하락</p> <p>* (1월) 5.88 (3월) 5.47 (5월) 4.78 (7월) 4.70</p>
<p>12. 저축은행의 고금리 문제 해소와 저축은행계정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p>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저축은행의 고금리 서민대출 문제 해소를 위해</p> <p>○ '10.4.7 저축은행의 보증부 서민대출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p> <p>○ 이러한 보증을 통해 서민대출에 따른 리스크를 축소함으로써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유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저축은행의 추가 부실화 방지를 위해 <b>감독 및 검사 강화방안*</b>을 포함한 저축은행법 개정안 국회 의결('10.3.22 공포, '10.9.23 시행)</p> <p>* 대주주에 대한 정기적 적격성 심사제도 (Dynamic fit &amp; proper test) 실시 등 소유·경영 지배구조 개선, 계열저축은행에 대한 대출한도 설정 등 자산운용 규제 강화 등</p> <p>○ 아울러, '10.4.9 저축은행의 건전경영 유도방안을 마련하여 발표(시행령 및 감독규정 반영완료 '10. 9.)</p> <p>- 저축은행의 PF 등 부동산 대출 쏠림현상 완화를 위한 자산운용규제 강화</p> <p>- 저축은행의 외형 확대에 걸맞는 건전성 기준 강화(예: BIS비율을 5%에서 7%로 단계적 상향조정 등)</p>
<p>13. 해운산업의 구조조정과 이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p>	<p>&lt;처리결과&gt;</p> <p>□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선박펀드 활용도 제고('09.11월)</p> <p>○ 구조조정기금 투입 비율을 상향(40% → 60%)하고 건조 중 선박*도 매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운영방식 개선</p> <p>* 공정이 상당히 진행된 선박에 대해서는 지원을 약정하고, 건조완료 후 매입대금 지급 및 인수</p> <p>○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 중</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10.8월까지 7척(건조중 선박 2척 포함)을 매입하였고, 이중 6척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기금 투입비율 상향조정(40%→60%)</p> <p><input type="checkbox"/> 한편, 금년 해운업에 대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6월말)를 통해 1개사(C1)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p> <p>○ 워크아웃 추진 업체는 경영정상화 계획을 확정하는 등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중</p>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10년 하반기에도 선박펀드 등을 통해 해운사 선박 매입을 지속 추진</p> <p><input type="checkbox"/> 현재 추진중인 워크아웃 등을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해 채권단을 적극 독려</p>
<p>14.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명확히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감독체계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p>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서민금융활성화 대부업분과 TF 운영을 통해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개선 방안 논의('10.2~)</p> <p>○ “서민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방안” 발표('10.4)</p> <p>- 대부업 관리·감독체계를 이원화하는 제도 개선 방향 포함</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연구용역·TF 등을 통해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개선 세부방안 마련</p>
<p>15. 시중은행이 설립한 민간배드뱅크 등의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함께 면책기록의 보존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정도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p>	<p>&lt;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gt;</p> <p><input type="checkbox"/> 금융위는 09.10월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파산면책정보 관리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였음</p> <p><input type="checkbox"/> 파산면책정보 관리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추가 단축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채무상환의지 약화 등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있으며</p> <p>○ 금융소비자 본인의 신용관리는 물론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우려</p> <p><input type="checkbox"/> 또한, 민간 배드뱅크의 과잉·불법추심행위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 지도 및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음</p>
<p>16. 금융소비자보호관련</p>	
<p>16-1)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 교육을 강화(정책 수립)하고, 금융민원의 원활한 해소 등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원 설립 등을 비롯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p>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용역 발주(KDI, '10.04.13.)</p>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연구용역(KDI)을 토대로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가칭)「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7. 금융중심지 추진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산 지역 등에 대해 금융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할 것</p>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올해부터 실무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지역의 전문인력양성을 지원(전체 교육비의 35%)</p> <p>&lt;부산지역 교육 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모: 145명 교육에 총 3.7억원 지원</li> <li>○ 과정: 선박금융·국제금융(교육기관 : 금융연수원) 해양파생상품, 녹색산업(금융투자협회), 해상보험(보험연수원)</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교육기관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p>
<p>18. 금융전문인력 양성 관련 자격증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p>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분야 자격제도는 금융투자협회가 '09.12월 제도를 전면 개편하였고, '10.2.4일부터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투자협회 내에 전문인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자격 및 시험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중임</li> </ul> <p>* 금융투자분야 자격증은 민간자격증이며, 자격제도는 자율규제사항으로서 금융투자협회에서 규정하고 운영</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lt;참고 : 자격제도 개편안의 개요&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증을 20종 → 7종(시험은 11종 → 6종)으로 대폭 통폐합함으로써 자격제도를 단순명료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였음</li> <li>○ 이번 개편안은 영업현실을 반영하되, 시험 내실화 및 보수교육 강화 등으로 투자자 보호는 강화하였음</li> </ul> <p>□ 공인회계사 자격제도는 금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국가자격제도로써 업무감독과 교육은 금융당국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년부터 전문인력 양성확대를 위해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을 1,000명으로 100%확대했으며 2007년에는 절대평가제를 도입하였음</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p>□ 금융투자분야 전문인력은 향후로도 자율규제기관인 금융투자협회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인력위원회와 전담부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양성·관리해나갈 계획임</p>
19. 펀드 관련	
19-1) 대리인에 의한 펀드 개설시 적합성 원칙과 투자자 편의 문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p>&lt;처리결과 및 개선방안&gt;</p> <p>□ 대리인을 통한 펀드가입시 절차 관련 국내 실태 및 외국 사례 조사를 진행하였음</p> <p>□ 외국 사례 등을 참조하여 적합성 원칙과 투자자편의 문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표준 투자권유</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준칙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중임 (판매절차 개선 TF 논의 결과)</p> <p>* (예시) 위임장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투자자성향 파악을 허용하는 방안 등</p>
<p>19-2) 펀드 판매 수수료 및 펀드 운용보수 인하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p>	<p>&lt;처리결과&gt;</p> <p>□ 펀드 판매 보수 및 수수료 상한을 인하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 하였음('09.12.21 시행)</p> <p>○ 판매 보수 : (종전) 연 5.0% 이내 → (변경) 연 1.0% 이내</p> <p>* 체감식인 경우 1.5%까지 허용하되, 2년 이후부터 1.0%이내로 인하</p> <p>○ 판매 수수료 : (종전) 연 5.0% 이내 → (변경) 연 2.0% 이내</p> <p>□ 신설펀드에 준해서 기존펀드 판매보수도 자율적으로 인하('10.5.3부터 단계별 시행중)</p>
<p>19-3) 계열사 소속 자산운용사가 자기계열 회사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를 출시하고 있는 것은 이해상충 방지 측면에서 문제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p>	<p>&lt;처리결과&gt;</p> <p>□ 인덱스펀드의 이해상충 발생 요소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함</p> <p>○ 인덱스펀드의 운용사는 미리 발표된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대로 자산을 편입하는 소극적 운용을 담당하므로 이해상충 소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여짐</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한편, 계열사 주식 투자 등에 대한 외국사례를 조사한 결과 원칙적으로 계열사 주식에 대한 투자제한은 없으며,</p> <p>○ 자산운용사가 자기계열 회사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가 존재</p> <p>&lt;향후 추진계획&gt;</p> <p>□ 인덱스펀드 출현으로 인해 수익자와 계열그룹간 예상치 못한 이해상충을 야기하는 요소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지속 점검해나갈 계획임</p>
<p>19-4) 펀드 판매회사가 높은 판매 보수를 수취하고 있어 장기투자자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지속 되므로, 숨겨진 비용인 판매보수 폐지 및 판매 수수료와의 이중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p>	<p>&lt;처리결과&gt;</p> <p>□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 상한을 설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김동철 의원 발의)에 대한 심사과정에서,</p> <p>○ 판매보수를 완전히 없앨 경우 판매 수수료가 올라가는 풍선효과 등을 감안하여 판매보수제 자체는 존치하되, 판매보수 상한을 설정(연간 1.5% 이내) 하였음</p> <p>&lt;향후 추진계획&gt;</p> <p>□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 상한 인하에 따른 시장변화를 보아가며, 판매보수추가 인하 및 판매보수·수수료 일원화가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해 검토</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9-5)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미스터리쇼핑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바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개선노력을 기울일 것</p>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09년중에 미스터리쇼핑을 2차례 실시한바 있음</p> <p>○ (제1차: 3~ 4월) 20개 판매사, 200개 지점</p> <p>○ (제2차: 9~10월) 30개 판매사, 450개 지점</p> <p>※ '10년 미스터리쇼핑은 6월중 실시하여 결과를 정리중임</p> <p><input type="checkbox"/> 한편, 실시결과 및 개선권고사항 등을 개별금융회사에 서면통지함으로서 판매회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p>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개선권고사항 등의 이행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등에 반영할 예정임</p> <p><input type="checkbox"/> 감독역량, 효과 극대화 요소 등을 감안하여 대상 판매사 및 점포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나갈 예정임</p>
<p>20. 은행의 DCDS 업무수행이 가능한지를 법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할 것</p>	<p>&lt; 처리결과 &gt;</p> <p><input type="checkbox"/> 현재 DCDS 업무가 은행의 부수업무로 영위가 가능한지, 보험업의 일부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input type="checkbox"/> 보험업법에 DCDS 취급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조항은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란이 있어, 계속 논의중에 있음</p> <p><input type="checkbox"/> 한편, 은행의 부수업무에 DCDS를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박종희 의원안, 09.9.9)이 발의되었으나,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을 감안하여 대안폐기되었음</p>
<p>21. 은행연합회를 자율규제 기능을 수행하는 법적단체로 은행법상 규정하되, 그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p>	<p>&lt; 향후 추진계획 &gt;</p> <p><input type="checkbox"/> 금융감독시스템 측면에서 은행연합회에 대한 자율규제기능의 법적 부여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위기 이후 은행업 규제기관을 통합·일원화하는 국제적 경향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li> </ul> <p><input type="checkbox"/> 또한, 협회는 회원사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한계</p> <p><input type="checkbox"/> 한편, 은행연합회는 신용정보법상 모든 금융업권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므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중기관으로서의 객관성 및 대표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음</li> </ul> <p>* 신용정보협의회 구성 및 운용 개선, 자문위원회 설치 등 검토</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2. 금융보안체계 구축 관련</p> <p><input type="checkbox"/> 금융위 보안 업무 관련 조직 및 인력 확충 방안을 강구할 것</p>	<p>&lt;처리결과 및 개선방안&gt;</p> <p><input type="checkbox"/> 행안부 및 재정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11년 정보화 인력을 일부 확충(7급 1명) 하였고, 향후 사이버 테러의 증가 등 위기 대응 업무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정보화 인력 추가 확충 및 금융보안 전담 조직 신설 등을 위해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p>
<p>23. 신용평가사의 자회사가 신용평가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업체로 오인될 활동 및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p>	<p>&lt; 처리결과 &gt;</p> <p><input type="checkbox"/> 개정 신용정보법('09.10월 시행)은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산정하는 행위”를 “신용조회업”에 명확히 포함하여 감독당국의 규율범위에 편입</p> <p>○ 신용조회업에 편입될 경우, 법적요건 구비 후 금융위 허가 취득, 업무에 대한 감독 등을 받음</p> <p>○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조회와 관련된 업무에 한하여 겸업 가능하며, 다른 업무를 겸업하는 경우에도 이해상충·불공정행위 방지 등을 위한 조직 및 업무체계 구비 필요</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4.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협회의 회원에 대한 연수 교육업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현재 연수 교육업무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보험대리점협회에서도 회원에 대한 연수 및 교육업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p>	<p>&lt;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gt;</p> <p><input type="checkbox"/> 현재 보험대리점협회는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라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업무를 할 수 있음</p> <p>○ 추가적인 정부업무 위탁 등에 대해서는 보험대리점 협회의 조직과 인원 등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겠음</p>
<p>25. 잦은 인사 관련</p> <p><input type="checkbox"/> 중간 간부급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일 것</p>	<p>&lt;처리결과 및 개선방안&gt;</p> <p><input type="checkbox"/> 일부 간부급 공무원들의 이직, 업무 증가에 따른 조직 신설 등으로 불가피한 보직 이동이 있었으나</p> <p><input type="checkbox"/> 향후 정기 인사 실시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금융위 업무가 더욱 원활하게 추진될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p>

#### 4.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 현황

- 정부는 산은 민영화를 위해 지난해 산은법 개정('09.4월) 등 제도적 기반을 완비
  - 산업은행 자산분할을 통해 산은지주사 및 정책금융공사를 설립('09.10월)하는 등 하드웨어 개편을 마무리
- 현 시점에서는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매각가치 제고 등을 위해 산은의 재무·수익구조 개선 등 체질개선을 추진
  - 세부 민영화 일정은 이러한 체질 개선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국내 금융산업 발전, 국내외 시장여건, 매각가치 극대화 등의 관점에서 구체화해 나갈 계획

## 5. 2008년 이후 녹색산업 정책금융 지원 목표 및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2008		2009		2010. 8월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산업은행	-	-	10,000	7,387	10,000	5,280
정책금융공사	-	-	-	-	5,000	3,191
중소기업은행			10,000	11,654	10,000	14,770
신용보증기금	-	-	15,000	26,240	20,000	26,584
기술보증기금	-	-	13,000	16,621	15,000	11,415

## 6.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계획

- 정부(녹색위원회 총괄)는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및 거래소 도입을 추진중에 있음

- \* 배출권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관리방법 및 거래소 설치·운영 등은 별도 법률을 마련토록 규정(녹색성장기본법 제46조)

- 녹색위는 금년중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계획을 확정할 예정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및 거래소 담당기관 선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중

- 한편, 금융위는 한국거래소(KRX)가 탄소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 7. 녹색산업 전용펀드 현황 및 녹색펀드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 현재 녹색펀드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비과세(‘10.1월)\*를 통해 상품개발을 유도하고 있으나,

### < 조세특례제한법(§91조의13) 상 비과세 요건 >

- 펀드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녹색산업 관련 자산(녹색인증제상 인증 및 확인 필요)에 투자
- 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이고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원금 또는 수익금의 인출 및 제3자로의 양도가 없을 것
- 1인당 납입한도 3천만원

- 녹색인증제도가 최근에 시행(‘10.4월)되어 펀드에 편입할 대상기업이 충분치 않은\* 등의 이유로 녹색펀드 상품 출시는 없는 상황

\* ‘10.9.27일 현재 녹색금융상품 투자대상인 녹색인증사업은 1개, 녹색 전문기업은 13곳이며, 펀드 구성에는 통상 20~30개의 기업이 필요

- 또한, 상대적으로 투자 회수기간이 길고 위험이 높은 녹색 펀드에 대한 현행 세제혜택이 부족하다는 평가

- 향후 원활한 펀드 설정을 위해서는 녹색인증 기업·산업이 늘어나서 투자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 이를 위해 정부(지경부등)는 녹색산업융자 지원 확대 등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 수립·발표(‘10.8.11일 제2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 필요시 녹색펀드 활성화를 위해 조세지원 등 정책적 지원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 예정

\* 세제 관련 내용은 기획재정부(세제실) 협의사항

## 8. 녹색금융상품 발행현황 - 금융기관별, 연도별 현황

□ 현행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을 받는 녹색금융상품으로는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이 있으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① 조달자금의 100분의 60이상을 '녹색인증제'상 인증 또는 확인된 녹색사업·녹색전문기업에 투자(대출포함)할 것
- ② 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이고, 중도 인출(채권의 경우 상환) 및 제3자에게 양도되지 않을 것
- ③ 1명당 3천만원(예금은 2천만원)의 한도 이내일 것

### < 세제혜택 내용 >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
세제지원 내용	배당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한도	1인당 3천만원	1인당 2천만원	1인당 3천만원
만기	3년 이상 5년 이하	3년 이상 5년 이하	3년 이상 5년 이하

□ 이에 지식경제부는 '10.4월부터 '녹색인증제'를 시행하여, 민간금융회사의 녹색금융상품개발을 유도하고 있으나,

- 녹색인증시행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현재 녹색인증사업 및 녹색전문기업이 미미\*하여 아직까지 녹색인증제 관련 금융상품 출시는 없는 상황

\* `10.9.27일 현재 녹색금융상품 투자대상인 녹색인증사업은 1, 녹색전문기업은 13

□ 이에따라 정부(지경부등)는 '10.8.11일 제2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 을 수립하고 발표하여 금융권의 녹색금융상품 개발을 앞당기고자 노력중에 있음

○ 녹색산업융자 지원 확대, 판로·마케팅 지원 강화, 기술사업화 기반 조성, 사업화 촉진시스템 구축 등 4대 분야 26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 녹색인증에 따른 기업혜택을 구체화함으로써 녹색인증 수요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녹색인증 투자대상을 조기 확충코자 함

< 별첨 > `10.8.11일 지식경제부 보도자료(녹색인증활성화방안)

□ 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10.1.) 및 녹색인증제시행('10.4.) 이전에는 녹색금융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녹색금융 상품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2010년 8월 11일(수) 10: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산업기술시장과 강혁기 과장, 권기성 사무관 ☎ 02-2110-5397)

## 녹색인증 활성화를 위한 R&D·자금·판로·인력 등 녹색인증기업 기술사업화 소주기 지원방안 수립

-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8.11(수) 제2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발표함
  - 녹색인증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의거, 지난 4월 14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써 녹색산업 지원대상·범위의 명확한 규정 및 이에 대한 투자활성화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 금번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에서는 녹색인증에 따른 기업혜택을 구체화함으로써 녹색인증 수요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녹색인증 투자대상의 조기 확충을 통해 궁극적으로 금융권의 녹색금융상품 개발을 앞당기고자 함
  - \* '10.8.11 현재 녹색금융상품 투자대상 : 녹색인증사업(1건), 녹색전문기업(4건)
  - \* 반면, 녹색인증 혜택의 구체화 등을 고려하여 신청을 유보하고 있는 기업수는 최소 428개(기관회원등록기업 기준)로 녹색인증 신청기업(191개)의 2배 이상
  - 이를 위해 ①녹색산업융자 지원 확대, ②판로·마케팅 지원 강화, ③기술사업화 기반 조성, ④사업화 촉진시스템 구축 등 4대 분야 26개 지원방안을 마련함

4대 분야	녹색산업융자 지원 확대	판로·마케팅 지원 강화	녹색기술사업화 기반 조성	사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
세부 과제	①신재생에너지 등 보급융자 지원 ②중기정책자금 연계 ③기술보증중점지원 ④수출금융보험지원	①정부발주공사우대 ②공공구매·국방조달 우대 ③TV·라디오광고료 일부면제 ④해외수출·마케팅 지원	①병역특례지정 업체 추천 ②해외/고급인력 도입 및 파견 ③녹색기술 성능검사 비용 지원 ④국가녹색기술 대상 우대	①R&D 참여시 우대 ②특허우선심사/국제출원 지원 ③녹색기술이전·투자유치 설명회 ④글로벌사업화컨설팅 ⑤국제컨퍼런스 개최

- ‘활성화 방안’에서는 대규모 자금소요 및 긴 투자회임기간 등 녹색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융자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 녹색인증기업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등 산업별 보급융자사업 참여시 우대, 정책자금 융자한도 예외적용 및 기술보증 중점지원을 실시하고,
  - 해외수출시 특례신용대출 우대 및 수출보험료 할인, 보증한도 확대 등 녹색인증기업 특별지원제도를 시행함
- 녹색인증기반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녹색기술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 정부발주공사 등 정부계약 상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공공구매·국방조달시 신인도 가점 부여 등을 통해 국내 판로를 지원하고,
  - KOTRA, 중진공 등의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녹색인증을 연계하여 수출 및 기업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임
- 또한, 녹색기술의 사업화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지원 및 영세중소기업의 녹색인증 취득기회 확대를 위해,
  - 녹색전문기업 부설연구소의 병역특례지원을 강화하고, 해외기술인력 및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지원하는 한편,
  - ‘11년부터 녹색기술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이 신규로 부담한 성능검사비용의 50%를 환급해 주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함
- 녹색인증기업의 기술개발 및 R&D 성과활용, 기술이전·투자유치·글로벌사업화 지원 등 사업화 촉진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임
  - 국가 R&D사업 참여시 우대하고, R&D성과물의 녹색인증 신청 및 국내·외 특허출원을 중점 지원하며,
  - 기술이전·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글로벌사업화컨설팅 지원 강화,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사업화에 필요한 투자유치·정보제공 및 녹색인증기업의 신용평가도를 제고할 계획임

- 이창한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관은 기자브리핑에서 “금번 활성화 방안은 신생기업의 경영안정화를 통한 중소기업 창업·보육 지원이 목적인 벤처기업 등 인센티브와 달리 녹색기술기반 인증기업의 기술사업화 소주기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며,”
  - “금번 대책으로 녹색인증기업 혜택이 구체화된 만큼 향후 녹색인증 활성화를 통해 금융권의 녹색금융상품 개발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한편,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비과세 녹색금융상품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해 녹색인증기업의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등
  -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면밀한 검토를 통해 녹색인증을 통한 기업의 실질적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함

첨부 1 : 분야별 녹색인증기업 지원방안

2 :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제2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안건)

# 분야별 녹색인증기업 지원방안

추진 과제		세부 내용
1. 녹색산업융자 지원 확대	1-1. 산업별 보급용자 참여 우대	신재생에너지설비, 농업종합자금, 관광기금 등
	1-2.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잔액 예외	잔액기준 또는 매출액 한도 예외
	1-3. 기술보증 증점 지원 대상	보증료율 0.5%p 감면, 한도 70억원(추가 3억원)
	1-4. 수출금융(특례신용대출) 우대	평가시 가점(10점), 업체별 한도 30억원
	1-5. 수출 및 금융계약 손실 보상	보험료 할인 20%, 보증한도 2배
2. 판로·마케팅 지원 강화	2-1. 정부발주공사 우대	신인도평가 가점. 선금지급 확대, 계약보증금 감면
	2-2. 공공구매/ 국방조달심사 우대	조달청(1.5점), 국방부(0.5점)
	2-3. TV·라디오 광고료 70% 면제	지상파 3사 & DMB
	2-4. 해외전시회 참가시 우대	신청시 가점(10점)
	2-5.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우대	신청시 가점(5점)
	2-6. 해외수출인큐베이터 우대	신청시 가점(5점)
	2-7.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 지원	신청시 가점(5점)
	2-8.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신청시 가점(10점)
	2-9. Green 보증브랜드 선정시 우대	우선 선정(재무건정성 충족시)
	2-10. 수출중소기업 글로벌브랜드 육성	수출액, 매출액기준 등 참가자격 완화
3.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	3-1. 병역특례지정업체 추천 우대	교과부 추천시 가점 부여
	3-2. 해외기술인력 도입 우대	신청시 가점(5점)
	3-3. 출연연 석·박사급 인력파견 우대	신청시 가점 부여
	3-4. 중소기업 인증 비용부담 경감	인증취득시 시험평가비용 50% 환급
	3-5. 국가녹색기술대상 서류평가 가점	참여시 가점(2점)
4. 사업화촉진 시스템 구축	4-1. 국가R&D 참여우대 및 인증수수료	부처별 R&D사업 가점, R&D수행시 간접비 활용
	4-2. 특허우선심사(초고속심사대상)	특허우선심사(최대 1개월까지 단축)
	4-3. 국제출원비용지원시 가점	5점 가점(1인당 5건, 건당 700만원 이내)
	4-4. 기술이전·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기술공급자·수요자, 거래기관 등 참여
	4-5. 글로벌사업화컨설팅 지원	현지마케팅, 수요기업알선, 전문컨설팅 등
	4-6. 국제컨퍼런스 개최(GGGI 연계)	국내외 평가기관, 투자기관 참여

---

#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

---

2010. 8. 11

관계부처 공동



## 목 차

1. 녹색인증 추진경과 .....	1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	2
3.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 .....	3
가. 기본전략 및 추진과제 .....	3
나. 활성화 방안 .....	4
다. 과제 추진일정 .....	8
4. 후속조치 계획 .....	9

〈참고 1〉 他 인증제도 인센티브 현황 및 녹색인증기업 비교

〈참고 2〉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방안

〈참고 3〉 녹색인증 금융권 연계/녹색금융종합포탈

# 1 녹색인증 추진경과

□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성장 비전” 달성을 위해 녹색기술 기업·사업의 육성 및 이에 대한 투자 활성화 긴요

\* (녹색인증 도입배경) 금융지원 대상이 되는 녹색프로젝트나 기업을 명확히 하여 녹색산업관련 자금유입시스템 실효성 확보(금융권의 녹색산업투자를 용이케 할 목적)

□ (녹색인증제) 녹색산업 지원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 이에 대한 투자저변을 확충

○ 녹색기술(10대 분야 256개 기술)·사업(95개) 대상 「녹색인증제」 시행(10.4.14)

\* 녹색인증사업 또는 녹색전문기업(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 중 매출액비중 30% 이상 기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세제지원(10.2.14)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
세제지원 내용	배당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한도	1인당 3천만원	1인당 2천만원	1인당 3천만원
만기	3년 이상	3년 이상	3년 이상

○ 녹색인증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의 자금조달 용이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녹색기술 보유기업의 녹색사업화 능력 제고

\* 네덜란드 Green Funds Scheme : '95~'05년간 신재생에너지 등 4,500개 사업에 80억 유로(110억 달러) 지원

□ (신청·인증현황) '10.8.9 현재 294건(기술248, 사업27 등) 신청, 이중 기술 56건, 사업 1건 인증 및 전문기업 4개 확인

구분	신청	최종결과		평가진행
		인증	불인증	
녹색기술*	248	56	34	158
녹색사업**	27	1	9	17
녹색전문기업***	19	4	1	14

\* (녹색기술) 대기업 14개(57건), 중소기업 152개(174건), 개인사업자 9개(17건) 등 총 175개 기업(248건) 신청

\*\* (녹색사업) 최종심의된 10개 중 1개사업(고출력LED조명기기보급, (주)지에이)만 인증. 불인증된 9개사업은 사업타당성, 녹색기술 활용성 부족

\*\*\* (녹색전문기업(4)) OCI(폴리실리콘), 퓨얼셀파워(연료전지열병합발전시스템), 비전테크(LED), 본우드(외장용 합성목재)

##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문제점) 인증수요기업들은 기존 벤처·이노비즈기업 등에 제공되는 세제·자금·판로·인력 등 인센티브보다 강화된(+α) 혜택 기대 (☞참고1)

\* '10.8.9 현재 녹색기술인증 신청 중소기업(152개) 중 벤처·이노비즈기업이 74%(113개)

○ 금융회사들은 녹색인증 투자대상\* 부족, 의무대출비중\* 등으로 녹색 금융상품 출시 곤란

\* '10.8.9 현재 녹색금융상품 투자대상은 녹색인증사업(1건), 녹색전문기업(4건)  
: 현행 조특법상 비과세 녹색금융상품의 투자대상은 녹색인증사업 및 녹색전문 기업에 국한(녹색기술 인증기업은 제외)

\* 금융회사들은 녹색금융으로 조달한 자금의 60% 이상을 녹색금융상품 투자대상 (사업·기업)에 투자 의무

\* 또한, 현행 세제혜택은 녹색금융상품을 일반투자와 차별화할 수 있는 수준에 미달

★ [제8차 녹색위, '10.7.13] 관계부처 합동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 수립 계획 보고

□ (개선방향) 녹색인증 수요기업 측면에서 차별화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인증 활성화 유인

◆ 녹색인증기업 지원 강화 및 녹색금융상품 활성화를 통해 '인증 → 금융투자 → 기술개발·사업화 → 인증'의 선순환구조 확립

○ 금번 대책을 통해 융자, 판로·마케팅, 기술사업화기반, 사업화 촉진시스템구축 등 "4대 분야 총 26개 과제" 추진

\* 특히, 녹색인증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술력 보유 중소기업의 참여 활성화 (☞참고2)

○ 중장기적으로 비과세 녹색금융상품 관련 제도개선 사항(녹색 기술의 투자대상 포함, 추가 세제지원 등)을 검토해 녹색인증기업의 금융 지원 강화

○ 기타, 녹색인증정보의 금융권 연계 강화로 녹색대출시 전문성 보강 (☞참고3)

\* 녹색인증정보 금융권연계시스템(7.30) 및 녹색금융상품정보 종합포털(12월, 은행 연합회) 구축 등 인프라 확충

### 3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

#### 가. 기본전략 및 추진과제

##### 목표

녹색인증 활성화를 통한 녹색산업 분야 투자 촉진

##### 전략

R&D · 자금 · 인력 · 판로 등  
녹색기술기업의 사업화 활동 소주기 지원

##### 4大 과제

녹색산업융자  
지원 확대

판로·마케팅  
지원

기술사업화  
기반 조성

사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

##### 세부 과제

①신재생에너지등  
보급융자 지원

②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계

③기술보증  
중점 지원

④수출금융·보험  
지원

①정부발주공사  
우대

②공공구매·국방  
조달 우대

③TV·라디오광고  
료 일부면제

④해외수출·마케팅  
지원

①병역특례지정  
업체 추천

②해외/고급인력  
도입 및 파견

③녹색기술 성능  
검사비용 지원

④국가녹색기술  
대상 우대

①R&D 참여시 우대  
[가점, 인증수수료]

②특허우선심사/  
국제출원 지원

③녹색기술이전·  
투자유치 설명회

④글로벌사업화  
컨설팅 지원

⑤녹색인증 국제  
컨퍼런스 개최

## 나. 활성화 방안

### ① 녹색산업 융자 지원 확대

- (산업별 보급융자)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절약시설, 농업종합자금, 관광기금, 환경산업융자 등 부처별 융자사업에 녹색인증기업 참여 우대 (10.12월)

<산업별 보급융자 사업(예)>

구 분	주관	주요내용
신재생에너지보급('10년 913억원)	지경부	신재생에너지 분야 녹색인증 가점
에너지절약시설('10년 5,118억원)	지경부	첨단그린주택 등 분야 녹색인증 가점
농업종합자금융자('10년 1.5조원)	농식품부	친환경농식품 등 분야 녹색인증 가점
관광기금(시설자금, '10년 1,900억원)	문광부	친환경관광 분야 녹색인증 가점
환경산업융자/보조금('10년 780억원)	환경부	환경보호 등 분야 녹색인증 가점

- (정책자금 융자) 녹색인증기업에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융자 잔액 예외규정 적용 (10.6월 既시행)

\* 중소기업 대상 융자시 잔액기준(수도권 45억원, 지방 50억원) 또는 매출액 한도(150% 이내) 예외 적용

- (기술보증) 녹색인증기업을 중점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기술평가 심사 일부면제(사업내용 생략), 보증료율(0.5%p 감면)·보증한도(일반 30억원 → 녹색기술 70억원, R&D 등 3억원 범위내 추가한도) 등 우대(10.6월 既시행)

- (수출금융·보험) 녹색인증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 우대 및 녹색인증기업의 수출계약 및 금융계약 손실보상을 위한 보험·보증 특별지원제도 시행 (10.8월)

\* 특례신용대출 거래이행능력 평가시 가점(10점) 및 업체별 한도 확대(일반 20억원 → 녹색인증기업 30억원)

\* 수출보험료 할인 확대(녹색산업 10%→ 녹색인증 중소기업 20%), 보증한도를 책정가능한도의 2배까지 우대(녹색전문기업)

## ② 녹색인증기술 및 제품의 판로·마케팅 지원

- (정부발주공사 우대) 녹색인증기업의 신인도 평가시 가점 부여, 선금지급 확대, 계약보증금 감면 (10.12월)
  - \* 의무선금지급률 상향(30~50% → 40~60%), 입찰·계약보증금 감면(지급각서 대체)
  -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50조) 및 회계예규 등 개정 (기획재정부)
- (공공구매·국방조달) 녹색인증기업의 조달청(10.8월), 국방부(10.11월)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신인도 부분 가점 부여
  -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및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시 1.5점 가점, 국방부 물품적격심사시 0.5점 가점
- (방송광고료 일부면제) 녹색인증 중소기업 대상으로 KBS등 지상파 3사 및 DMB의 TV·라디오 광고료 70% 할인 (10.9월)
- (해외수출·마케팅) KOTRA(해외전시회, Green보증브랜드 등) 및 중진공(해외수출인큐베이터, 수출기업화지원 등) 등의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연계

### <주요 해외수출·마케팅 지원사업>

구 분	주 관	주요내용
해외전시회 참가 우대	KOTRA 등	녹색인증기업 가점 10점
해외 수출인큐베이터 우대	중기청	녹색인증기업 가점 5점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우대	중기청 등	녹색인증기업 가점 5점
해외 민간네트워크 활용 지원	중기청	녹색인증기업 가점 5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중기청	녹색인증기업 가점 10점
Green 보증브랜드 선정 우대	KOTRA	녹색인증기업 최고가점 부여
수출중소기업 글로벌브랜드 육성	중기청	녹색인증기업 참가자격 완화

### ③ 녹색기술 사업화 기반 구축

- (병역특례) 교과부장관의 병역특례지정업체 선정 추천시 녹색전문기업의 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가점 부여 (10.12월)
- (해외·고급인력) 녹색인증기업의 전문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해외 기술인력 도입 및 석·박사급 고급인력 지원 (10.12월)
  - \* 해외기술인력 도입 지원사업(중기청, 1인당 2천만원 이내) 신청시 가점(5점)
  - \* 출연연 석·박사급 인력의 파견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 (성능검사비용) 녹색기술 인증취득 중소기업의 경우 인증신청시 신규로 부담한 성능평가기관(산업기술시험원 등)의 성능시험검사비용 50%를 환급 (10.12월)
  - \* 소요재원 : 연간 3억원(= 600건(12월 × 100건 × 50%(인증율)) × 100만원(평균 수수료) × 50%)
- (녹색기술대상) 녹색인증기업의 「국가녹색기술대상」 참여시 서류평가 가점(2점) 부여 (11.4월)
  - \* 국가녹색기술대상 : 교과부 등 5개부처 공동 주최, 산업기술진흥협회 주관으로 기술성 및 경제성이 뛰어난 녹색기술을 개발한 기업 등 대상으로 대통령상 등 포상

#### 4 녹색기술 사업화 촉진시스템 구축

- (R&D 우대) 녹색인증기업의 지경부 등 녹색인증 관계부처(8개) R&D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및 녹색인증 수수료 지원 (10.12월)
  - \* 교과부·농식품부·지경부·환경부·국토부·방통위·중기청 R&D 등
  - \* R&D 수행기업의 간접비 사용용도에 녹색인증 신청사항 포함
- (특허우선심사·국제출원지원) 녹색인증기업의 특허 조기확보를 위해 우선심사대상 포함(10.4월 既시행) 및 국제출원비용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10.12월)
  - \* 우선심사 대상 : 녹색인증기술의 특허출원 또는 녹색전문기업의 특허출원
    - 전문조사기관 선행기술조사 의뢰 및 전자출원시스템 이용시 초고속심사대상 (1개월내)에도 포함
  - \* 국제출원비용 지원 : 1인당 5건, 특허·실용신안 건당 700만원(디자인 200만원) 이내
- (기술이전·투자유치 설명회) 녹색인증기업 관련 기술공급자·수요자, 기술거래기관 등이 직접 참여하는 설명회 개최 지원(기업 모집, 일정관리, 자문 및 비용 지원 등)
  - \* (국내) 수시개최(8월~), (해외) 한중 기술이전설명회(8월, 중국 상해), Enterprise Europe Network(EEN) 기술협력설명회(9월, 독일) 등
- (글로벌사업화컨설팅) 중국, 일본 등 글로벌사업화협력센터를 통한 현지 창업·마케팅, 수요기업 알선, 전문컨설팅 등 지원 (10.9월)
  - \* 글로벌사업화협력센터 : 주요국 해외현지 전문기관을 센터로 지정하여 국내 기업의 기술수출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 '10년 현재 중국·동남아·일본 3개 권역에 5개 기관 지정·운영
- (국제컨퍼런스)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창립 1주년 기념 「녹색성장 국제컨퍼런스」 (11.6월)와 연계, 국내·외 우수 투자·평가기관 등이 참여하는 “녹색인증기업 Session\*\*” 개최
  -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녹색성장 이니셔티브 강화를 위해 '10.6.16 출범. 녹색성장 이론적 체계화 및 녹색성장모델 전파 등 수행
  - \*\* 1:1매칭 투자상담회 및 대규모 IR, 인증평가기법 공유, 인증브랜드 신뢰성 확보 등을 통해 녹색인증기업의 투자유치 및 국제신용평가도 제고



## 다. 과제 추진일정

추진 과제		주관부처	추진일정
녹색산업융자 지원 확대 (5개)	▪ 산업별 보급융자 녹색인증기업 참여 우대	각부처	'10.12월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잔액 예외 적용	중기청	상시
	▪ 기술보증 중점지원 대상에 녹색인증 포함	기보	
	▪ 무담보 특례신용대출 등 수출금융지원 우대	수은	'10.8월
	▪ 녹색전문기업 수출 및 금융계약 손실 보상	무보	
판로·마케팅 지원 (10개)	▪ 정부발주공사 녹색인증기업 우대	기재부	'10.12월
	▪ 공공구매/국방조달심사 녹색인증기업 우대	조달청 국방부	'10.8월 '10.11월
	▪ TV·라디오 광고료 부분 면제(70%)	KOBACO	'10.9월
	▪ 해외전시회 참가시 녹색인증기업 우선권	KOTRA外	'10.10월
	▪ 해외 수출인큐베이터 녹색인증기업 우대	중기청	'10.12월
	▪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녹색인증기업 우대	중기청外	
	▪ 녹색인증기업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 지원	중기청	
	▪ 녹색인증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중기청	
	▪ Green 보증브랜드 선정시 우대	KOTRA	
	▪ 수출중소기업 글로벌브랜드 육성 참가우대	중기청	
기술 사업화 기반 구축 (5개)	▪ 녹색전문기업 병역특례지정업체 추천 우대	교과부 병무청	'10.12월
	▪ 녹색인증기업 해외기술인력 도입 우대	중기청	
	▪ 출연연 석·박사급 인력 파견 우대	지경부	
	▪ 중소기업 녹색인증 비용부담 경감	기재부 지경부	
	▪ 국가녹색기술대상 참여시 서류평가 가점	교과부外	'11.4월
사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 (6개)	▪ 국가R&D 참여 우대 및 인증수수료 지원	각부처	'10.12월
	▪ 특허우선심사(신청후 1개월까지 단축가능)	특허청	상시
	▪ 녹색인증기업 국제출원비용지원시 가점(5점)	특허청	'10.12월
	▪ 기술이전·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지경부	'10.8월
	▪ 녹색인증기업 글로벌사업화컨설팅 지원	지경부	'10.9월
	▪ 녹색인증 국제컨퍼런스 개최(GGGI 연계)	지경부	'11.6월

## 4 후속조치 계획

-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1차) 시행 ('10.8월) 및 녹색금융상품 제도 개선 등 추가 검토 ('10.하반기)

### ①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 시행 및 2차 활성화 방안 검토 · 추진

- '10. 8월 :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 확정 및 시행
- '10. 8~9월 : 녹색금융상품 제도개선 T/F 운영 (기재부, 금융위, 지경부 등 녹색인증 관계부처)
- '10. 9월 : 녹색금융상품 제도개선사항 검토 및 확정
  - \* 녹색인증 수요기업 대상 설문조사 실시(9월, 녹색위) 및 인증제 feed-back
- '10. 하반기 : 제2차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 수립(잠정)

### ② 녹색인증 수요기업 대상 홍보 강화

- (기업단체 · 지자체 연계)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해당 업종별 협 · 단체 및 지자체를 활용하여 중점홍보 실시(기업대상 설명회 및 홍보부스 운영)
  - 녹색전문기업 등 녹색인증기업 대상 간담회 개최(분기별)를 통해 기업활동 애로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병행
- (대국민 녹색인증 인식제고) 주요 일간지 · 방송을 활용해 녹색인증제 및 인증혜택 홍보를 강화하고, 설문조사 · 성공사례집 발간 등 대국민 접점활동 강화
  - 또한, 녹색문화 및 지식 등 창출 · 확산을 위한 전문가 및 녹색관련 생산 · 유통 ·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가칭)녹색커넥트포럼” 운영 (지경부, 환경부, 조달청 등 관계기관 합동, '10년 하반기)

## 참고 1

## 他 인증제도 인센티브 현황 및 비교

□ (인증제도 현황) 신기술 등의 사업화·기업화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 벤처기업 확인, 이노비즈기업 인증, 신기술인증(NET) 등 존재

- (벤처기업) 신생기업의 중소기업화를 위한 창업·보육 지원
- (이노비즈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3년 이상) 발굴·육성
- (신기술인증) 신기술의 조기 발견 및 기술 상용화 촉진 목적

□ 각 제도별 중점지원 분야

- (벤처기업) 시장진입이 어려운 초기, 창업기업의 위험(Death valley)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원조달 등 경영안정화 중점 지원
- (이노비즈기업)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R&D, 금융 등 중심
- (신기술인증) 개발신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공공구매 등 판로 중심

### <벤처·이노비즈·NET 비교>

구 분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신기술인증(NET)
기업 등 요건		벤처투자기업: 금융투자 등으로 자본금 10% 이상 연구개발기업: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 연개발비 5천만원 이상 신기술기업: 기술개발 사업에 의한 총매출액 50% 이상 기술평가기업: 기술성 및 사업화능력 우수기업	창업 후 3년 경과 기업으로 OECD 기업혁신성 평가매뉴얼 (Oslo manual)에 근거한 평가 지표에 따라 기술혁신역량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술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기업(목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	인증일기준 향후 2년 이내 상용화 가능하거나 향후 기존 제품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목적: 기업 및 공공연이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 상용화와 기술거래 촉진)
주요 인센티브	세제	- 법인세, 소득세 등 감면(2년)		- 사업용 투자자산 세액공제
	자금	- 정책자금 등 지원시 우대 - 기술보증 우대 지원	- 정책자금 등 지원시 우대 - 기술보증 우대 지원 - 금융지원 협약보증	- 기술보증 우대 지원
	판로	- 조달청 물품구매심사 등 우대	- 조달청 물품구매심사 등 우대	- 조달청 물품구매심사 등 우대
	인력	- 병무청 병역지정업체심사 우대 - 해외 기술인력도입 지원	- 병무청 병역지정업체심사 우대 - 국내외 기술인력도입 지원	-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 우대
	IR	- TV/라디오 광고 감면 혜택 - 코스닥 등록 우대	- TV/라디오 광고 감면 혜택	

\* 주요 인센티브 중 국가R&D 참여우대, 수출기업화사업 등 해외판로개척 부분은 공통으로 생략

## □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과 비교

구 분	녹색인증기업 인센티브	벤처·이노비즈 인센티브
산업별 보급용자 참여 우대	신재생에너지설비, 농업종합자금 등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잔액 예외	잔액기준 또는 매출액 한도 예외	잔액기준 또는 매출액 한도 예외
기술보증 중점 지원 대상	보증료율 0.5% 감면, 한도 70억원	보증료율 0.2% 감면, 한도 50억원
수출금융(특례신용대출) 우대	평가시 가점(10점), 한도 30억원	-
수출 및 금융계약 손실 보상	보험료 할인 20%, 보증한도 2배	-
정부발주공사 우대	선금지급 확대, 계약보증금 감면 등	-
공공구매/ 국방조달심사 우대	조달청(1.5점), 국방부(0.5점)	조달청(1.5점), 국방부(0.5점)
TV·라디오 광고료 70% 면제	지상파 3사 & DMB	지상파 3사 & DMB
해외전시회 참가시 우대	신청시 가점(10점)	신청시 가점(10점)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우대	신청시 가점(5점)	신청시 가점(5점)
해외수출인큐베이터 우대	신청시 가점(5점)	신청시 가점(5점)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 지원	신청시 가점(5점)	신청시 가점(5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신청시 가점(10점)	신청시 가점(5~10점)
Green 보증브랜드 선정시 우대	우선 선정(재무건정성 충족시)	-
수출중소기업 글로벌브랜드 육성	수출액, 매출액기준 등 참가자격 완화	수출액, 매출액기준 등 참가자격 완화
병역특례지정업체 추천 우대	교과부 추천시 가점	교과부 추천시 가점
해외기술인력 도입 우대	신청시 가점(5점)	신청시 가점(5점)
출연연 석·박사급 인력파견 우대	신청시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인증 비용부담 경감	인증취득시 시험평가비용 50% 환급	-
국가녹색기술대상 서류평가 가점	참여시 가점(2점)	-
국가R&D 참여우대 및 인증수수료	기초원천·지식경제 등 부처R&D 가점	중소기업 R&D 가점
특허우선심사(초고속심사대상)	특허우선심사(최대 1개월까지 단축)	특허우선심사
국제출원비용지원시 가점	1인당 5건, 건당 700만원 이내	-
기술이전·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기술공급자·수요자, 거래기관등 참여	-
글로벌사업화컨설팅 지원	현지마케팅, 수요기업알선, 전문컨설팅	-
국제컨퍼런스 개최	국내외 평가기관, 투자기관 참여	-

## 참고 2

##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방안

□ 전체 4대 분야 26개 추진과제 중에서 중소기업의 지원필요성이 큰 정책자금 융자·판로/마케팅 분야 등 17개 과제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시행

○ 특히, 성능시험검사비용 환급 및 수출금융·정부발주공사 우대, 고급인력 지원 등을 통해,

○ 중소기업의 녹색인증 취득 및 인증 후 사업화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녹색인증 제도의 활용성 제고

\* 신규 성능시험검사비용 환급(50%), 수출보험료 할인 확대(20%), 정부계약시 의무선금지급률 상향(최대 60%), 해외·고급인력 채용 지원 등

### <녹색인증기업 중 중소기업 전용 지원과제 >

NO.	과제명	소관	세부 내용
1-2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잔액 예외	중소기업청	잔액기준 또는 매출액 한도 예외
1-3	기술보증 중점 지원 대상	기술보증기금	보증료율 0.5% 감면, 한도 70억원
1-4	수출금융(특례신용대출) 우대	수출입은행	평가시 가점(10점), 한도 30억원
1-5	녹색수출종합보험 우대 * 보증한도 확대대상 전문기업은 대기업 포함	무역보험공사	보험료 할인 확대(20%)
2-1	정부발주공사 우대	기획재정부	선금지급 확대, 계약보증금 감면
2-3	TV·라디오 광고료 70% 면제	방송광고공사	지상파 3사 & DMB
2-5	해외수출인큐베이터 우대	중소기업청	신청시 가점(5점)
2-6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우대	중소기업청외	신청시 가점(5점)
2-7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 지원	중소기업청	신청시 가점(5점)
2-8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중소기업청	신청시 가점(10점)
2-10	수출중소기업 글로벌브랜드 육성	중소기업청	수출액, 매출액기준 등 참가자격 완화
3-2	해외기술인력 도입 우대	중소기업청	신청시 가점(5점)
3-3	출연연 석·박사급 인력파견 우대	지식경제부	신청시 가점 부여
3-4	중소기업 인증 비용부담 경감	지식경제부	인증취득시 시험평가비용 50% 환급
4-3	국제출원비용지원시 가점	특허청	신청시 가점(5점)
4-4	기술이전·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지식경제부	기술공급자·수요자, 거래기관 등 참여
4-5	글로벌사업화컨설팅 지원	지식경제부	현지마케팅, 수요기업알선, 전문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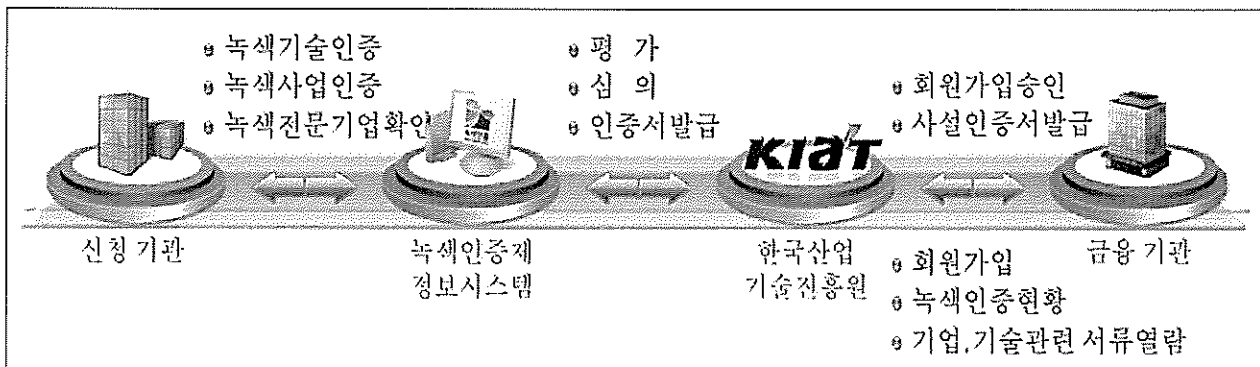
### 참고 3

## 녹색인증 금융권 연계/녹색금융종합포탈

□ (녹색인증정보 금융권 연계) 녹색인증 기업정보를 금융권과 공유하는 시스템 개발로 녹색금융상품 활성화 유도(10.7.30 시스템 개발 완료)

○ 녹색인증 신청서류 제출시 기술·경영상태 등 금융권대상 정보 공개 동의과정 추가, 최종 인증취득 후 신청인이 동의한 정보를 금융권에서 조회

\* 전담기관(KIAT) 녹색인증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http://www.greencertif.or.kr)) 내 금융권 전용 페이지를 구성하여 정보 제공(개별 금융기관 대상 기관등록인증서 발급)



○ 녹색인증과 금융권 연계를 통해 녹색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호업무협약 체결(7.14, 제4차 녹색금융협의회)

\* 녹색성장위원회, 녹색금융협의회, 전담기관(KIAT) MOU 체결

□ (녹색금융종합포탈) 녹색인증기업이나 금융투자자가 접근 용이한 녹색금융 포털을 통해 녹색금융 창구 일원화

○ 녹색금융상품 정보와 녹색인증제, 세제혜택 등 관련 사항\*을 종합 제공함으로써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12월, 은행연합회)

\* 녹색 정책자금 및 보증 지원 등 각종 추진상황, 녹색자금 조달에 대한 컨설팅, 녹색인증 정보, 녹색 금융상품 내용 및 수익률 비교 등

○ 특히, 중소기업 정보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포털(Biz Info)과 연계 검토

\* '10.6월 대한상공회의소 녹색금융 인식 조사(국내 녹색기업 300개사 대상)  
: 녹색금융 이용해 본 기업비율은 14.4%,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이용방법을 몰라서(53.9%)', '까다로운 이용조건·절차(22%)', '내부자금 충분(15.5%)' 順

## 9. 2009년 이후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현황(건수, 금액)

- 금융기관별

### □ 2009년 이후 가계대출 금융기관별 프리워크아웃현황

(단위:명, 억원)

구 분	금융업권	건 수	금액(조정후채무액)
1	은행권	22,790	132,915
2	카드업권	21,904	95,513
3	할부금융사	6,474	35,985
4	생보사	1,378	6,776
5	손보사	26	558
6	상호저축	2,926	12,670
7	기 타	1,516	11,197
계		57,014	295,614

## 10.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제도 현황

☐ '10.4.7 발표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 자료 별첨



#별첨

---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

---

2010. 4



## 목 차



<b>I. 추진배경</b>	<b>1</b>
1. 서민금융 현황 및 평가	1
2. 서민금융 활성화 정책방향	2
 <b>II. 서민금융 공급 확대 방안</b>	 <b>3</b>
1. 서민계층에 대한 보증부 대출 공급 확대	3
2. 신용회복 대상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8
3. 대부업의 최고이자율 인하	9
4. 미소금융 운영개선	10
5. 신용정보관리시스템 개선	12

## I. 추진배경

### 1 서민금융 현황 및 평가

□ 금융위기 후 경기침체 및 고용감소로 생활이 어려워진 서민의 자금수요는 증가하였으나,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은 축소되어 서민의 금융이용기회 감소

○ 저축은행, 신협 등 서민금융회사는 '03년 가계신용위기 이후 서민대출을 줄이고 부동산, 기업 관련 여신을 주로 취급

※ 신용 6등급이하 대출 비중(%) : 은행 21, 상호금융 36, 저축은행 87, 대부업 91

□ '09년말 출범한 「미소금융」은, 자활의지는 있으나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창업·운영 자금 지원 개시

○ 지난 3개월간 약 2만명이 방문·상담하는 등 서민층의 관심이 매우 컸으나, 그 금융수요를 모두 해소하기에 한계

□ 저신용 서민들의 대부업체 등 사금융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고금리 부담 등 서민생활 어려움 가중

※ 등록 대부업 시장규모(조원) : 4.1('07.9) → 5.6('08.9) → 5.9('09.9)

⇒ 서민의 금융수요 충족과 고금리 부담의 경감을 위해서는 미소금융과 함께 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을 통한 양질의 서민금융 공급 확대 필요

## Ⅱ. 서민금융 공급 확대 방안

### 1 서민계층에 대한 보증부 대출 공급 확대

#### < 현황 및 문제점 >

□ 은행에 비해 신용평가 역량이 부족한 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들은 담보 및 신용이 부족한 서민들에 대한 대출을 꺼리는 실정

○ 이에 서민대출에 대한 보증공급을 확대하여 서민금융회사의 자금공급을 늘릴 필요

※ 미국은 지역개발금융펀드(CDFI)를 조성, 저소득층의 건강·교육·긴급자금 등을 지원하고, 일본은 정책금융공사를 통해 금융소외자에게 사업자금, 생활위생개선자금, 창업자금 등을 지원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영세자영업자, 근로자 등 서민에 대한 보증지원은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

※ 보증공급 규모 (조원)

	중소기업	자영업자	근로자
'08년	41.6	3.9	-
'09년	56.5	8.4	0.2
'10년(목표)	52.6	5.3	0.5

□ 현재 서민에 대한 특례보증은 글로벌 금융위기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한시적(금년중 종료예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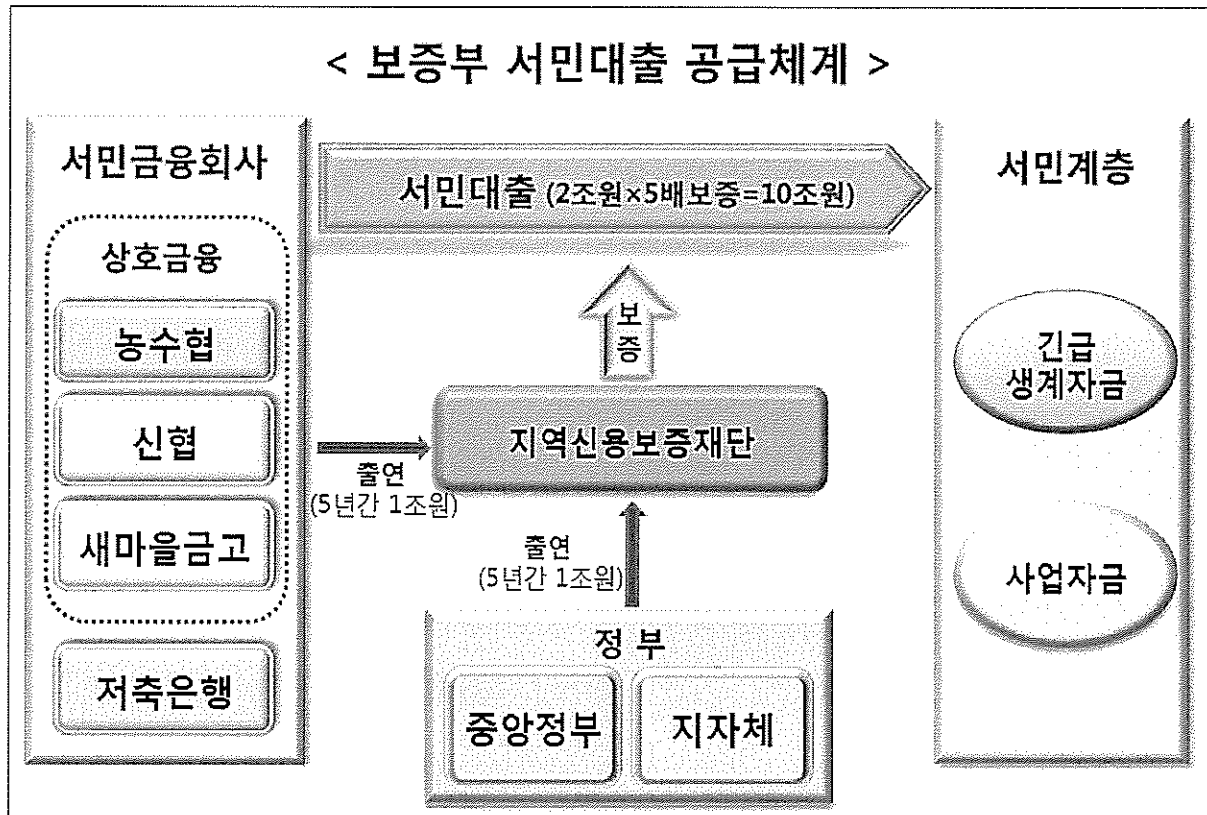
○ 보증기관이 대출위험 전부를 부담하거나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낮아 금융회사가 대출을 소극적으로 취급하는 문제

## 2 서민금융 활성화 정책방향

- ①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없어 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층에 대한 금융이용 기회 확대
  - 저신용(신용등급 6등급 이하)·저소득층에 대한 신용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의 출연재원을 바탕으로 보증공급을 확대
- ② 신용회복 대상자의 안정적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생활자금 지원을 확대
  - 신용회복기금의 여유자금을 바탕으로 한 신규 지원을 개시하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기존 지원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성실 채무상환자에 대해 자금지원 추진
- ③ 고금리 부담 완화를 통해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상의 최고이자율을 단계적으로 인하 추진
- ④ 미소금융으로 지원할 수 없는 서민에 대하여는 보증부대출 등 다른 서민금융지원 서비스를 연계 제공
  - 아울러 미소금융 지방지점 확충 등을 통해 서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미소금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육 및 컨설팅 능력 강화
- ⑤ 서민금융회사가 보다 충실한 여신심사를 바탕으로 서민 금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신용평가역량을 확충

## < 개선방안 >

- ◇ 정부와 민간의 공동재원 출연을 바탕으로 서민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 추진



### ① 보증부 서민대출 공급 목표 : 5년간 최대 10조원 공급

- 대부업체 대출규모 총 10조원임을 감안하여 대출 공급 목표 설정
- 서민대출의 부실율(10% 가정)을 감안할 때 약 5배 이내의 보증배수 적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보증재원으로 향후 5년간 총 2조원 수준(매년 4,000억원) 소요 전망

⇒ 해당 소요재원을 민간과 정부가 「50:50」으로 출연하여 조성하는 방안 추진

## < 보증재원 조성방안 >

**민간 출연 : 5년간 총 1조원(연간 약 2,000억원)**

○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이 「40 : 10」 으로 분담 출연

- 상호금융과 저축은행간 여신규모 차이(4배), 상호금융 회사에 대한 비과세 예금 혜택 등 감안

**(상호금융) : 5년간 총 8,000억원(연간 약 1,600억원)**

※ 상호금융내 업권별 연간 출연 규모 예상액('09.12월말 잔액기준)

	농협	수협	산림	신협	새마을금고	계
비과세예금(조원)	55.5	4.8	1.2	19.6	34	115
출 연 금(억원)	833	72	18	294	510	1,727

**(저축은행) : 5년간 총 2,000억원(연간 약 400억원)**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서민금융회사의 출연 의무화 추진('10년 상반기중)

**정부 출연 : 5년간 총 1조원(연간 약 2,000억원)**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민신용보증의 공공성, 지역주민 수혜,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분담비율 결정

**기타 : 보증수수료 수입 등**

## ② 보증대상

- 저신용(예: 신용 6등급이하) 또는 저소득(예 : 차상위계층) 영세자영업자, 근로자, 농·어업인(상호금융) 등

※ 제외대상 : 부도, 금융채무불이행자,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 진행중, 보증사고 관련자 등

## ③ 보증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담당

- ‘서민신용보증 전담’ 보증기관 신설방안도 검토 가능하나, 유사기관간 기능 중복, 보증 경쟁에 의한 부작용 등을 감안, 현재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활용 바람직

※ 2009.4월 법개정을 통해 지역신보는 소기업, 소상공인에 더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보증이 가능해 짐

- 보증재원은 ‘저축은행,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6개 업권별로 별도 분리 운영\*

\* 업권별 보증규모는 출연재원에 비례하여 결정하고 특정업권의 출연금을 타 업권에서 사용치 않음

- 일정기간(예: 1년)동안 분리 운영한 후 그 실적을 평가하여 필요시 업권간 경쟁유도를 위해 보증재원의 통합 운영 검토

- 금융위와 중기청이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신보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 앞으로 늘어날 보증업무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지역신보 중앙화의 역량을 확충



#### 4 대출 운용방안

- (취급기관) 서민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상호금융회사(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및 저축은행

※ '09년말 서민금융회사는 총 3,989개 : 저축은행 104, 상호금융 3,885 (농협 1,178, 수협 91, 산림조합 133, 신협 982, 새마을금고 1,501)

- (보증비율) 원칙적으로 대출금액의 80~85%수준을 보증하고, 나머지는 서민금융회사가 자기책임하에 대출

- (대출금리) 서민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취급할 유인을 부여하기 위해 “적정금리”로 운용

- 금리 상한\*을 설정하되, 대출금리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경쟁방식 도입

\* 은행의 희망홀씨대출 평균금리(14%), 소은행 6~10등급 평균 신용대출금리(19%)

- (자금용도) 긴급생계자금(5백만원 이내), 사업자금(1~5천만원 이내), 기존 고금리 대출의 상환자금 등

- (마케팅) 미소금융, 보증자리론과 같이 “통합 브랜드”를 사용, 인지도 제고 및 마케팅 비용 절감

#### 5 시행시기 : '10년 하반기부터 대출상품 출시

- 관련 법령 개정과 기존 한시적 특례보증의 마무리 일정을 감안

## 2 신용회복 대상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① 성실한 채무상환자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 확대

-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우 채무조정기간 중에 금융거래가 곤란하여 생활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빈번

\* '02년~'09년, 신용회복위 채무조정자 83만명 중 24만명(29%)이 생활비 수요 등 때문에 중도 탈락

⇒ 성실채무상환자\*의 안정적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 신용회복기금(자산관리공사)은 여유자금을 활용, 긴급 생활 안정자금 대출을 신규 개시
- 신용회복위원회는 재원을 확충하여 기존 대출\*\*을 지속 확대

\* 신용회복지원중인 자(76만명) 중 1년이상 성실채무상환자 : 67만명

\*\* '06.11월 이후 소액대출 실적 : 20,746명, 623억원

※ 신규 지원 목표 : 5년간 1,500억원, 5만명(평균 3백만원, 연 4%)

### ②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Pre-workout) 연장

- '09.4월부터 3개월 미만 단기연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자감면, 만기연장 등 사전채무조정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중

- '10.3월말까지 총 31,785명이 상담, 이 중 9,402명(29.6%)이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등 금융안전망 역할 수행

⇒ 1년간 연장하여 운영

### 3 대부업의 최고이자율 인하

□ 현행 대부업법령상 최고이자율은 연 49%로 이는 대부업자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에 동일하게 적용

※ 미등록 대부업체는 최고이자율을 30%로 적용하여 양성화 유도

○ 대부분의 대부업체, 일부 저축은행 및 여전사는 동 금리를 기준으로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수취하여 주된 이용자인 서민층에 과도한 부담

□ '07.10월 최고이자율 인하(66%→49%) 이후 한은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 인하 추세를 감안시, 동 최고이자율 인하 필요

※ 한국은행 기준금리 : ('07.9) 5% → ('10.2) 2%  
은행 평균여신금리 : ('07.9) 6.7% → ('10.2) 5.9%

○ 일본도 금년 6월부터 최고이자율을 29.2%에서 20%로 인하할 예정('06.12월 출자법개정)

□ 최고이자율 인하시 대부업체 음성화 및 서민대출 위축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나

○ 금번 대책에 포함된 '보증부 서민대출'의 확대 실시에 따른 서민층에 대한 신용공급 증가로 보완 기대

⇒ 대부업법령상 최고이자율을 10%p (49%→39%) 인하 추진

○ 우선 조속히 5%p 인하 (즉시 대부업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추진)

○ 보증대출의 정착, 시장금리 변동추이 등 경제여건 변화를 보아가면서 1년 이내에 5%p 추가 인하 추진

※ 5%p 인하시 금리부담 완화 기대효과 : 연간 2,000억원\*

\*4조원(등록 대부업체 신용대출규모) × (49% - 44%)

## 4 미소금융 운영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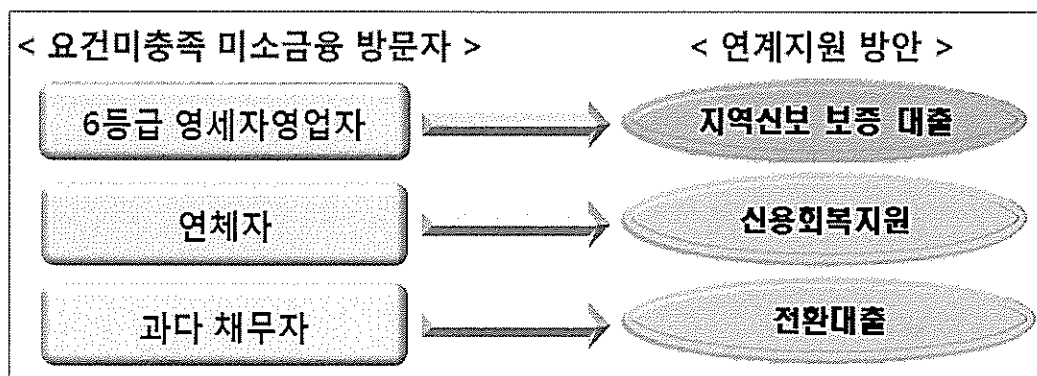
### ① 미소금융 창구에서 서민금융 One-Stop 서비스 제공

- 지점 방문자중 미소금융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보증 대출(지역신보), 신용회복(신복위, 신복기금) 등 다른 서민금융 지원수단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10.3월까지 미소금융지점 방문·상담자 총 19,995명중 11,638명(58.2%)이 미소금융의 대출요건을 미충족 (신용등급 우수 32%, 부채 과다 16% 등)

⇒ 지역신용보증재단, 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 직원(지점당 1인 파견)이 미소금융창구에서 대면상담 및 현장 신청 접수

- 향후 미소금융 지점 증가시에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순환근무하는 방안도 검토



### ② 지방지점 확대, 홍보활동 등을 통한 미소금융 접근성 제고

- 지방소재 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상반기중 지방에 20개 이상 지점을 추가 신설(총 50개 이상)

\* '10.3월까지 총 34개 지점 설립(수도권 16개, 지방 18개)

- 다양한 서민금융지원제도를 리플렛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서민들이 개별상황에 적합한 지원제도를 활용토록 유도

\* 서민층이 왕래하는 지자체·고용지원센터 등에 리플렛 중점 배포

### ③ 미소금융 지점 사무실 지원

- 서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공공기관 내에 미소금융 지점 설치를 지원하여 사무실 운영비용 절감 추진(지자체 협조)

\* 현재 전국 34개 지점 중 11개 지점에 대해 지자체가 지원

### ④ 미소금융 관련 컨설팅 능력 제고

- 미소금융중앙재단에 「부설 교육센터」 설치하여 전문인력 양성 추진
- (가칭) '미소희망봉사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재능의 기부'를 유도하고 미소금융의 컨설팅 능력 제고

\* 전국적으로 법률·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 퇴직인력 약 1천명을 모집하여 미소금융 수혜자에게 경영 노하우 등 지원

## 5 신용정보관리시스템 개선

### ① 저축은행의 개인신용평가 역량 제고

- 상환위험이 큰 저신용층의 대출을 위해서는 정확한 신용평가가 필수적이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저축은행은 총 104개 중 23개(22.1%)에 불과

⇒ 저축은행 중앙회를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신용정보를 집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회가 운영하는 「표준신용평가시스템」을 확충

- 개별 저축은행은 「표준신용평가시스템」을 공동 활용하거나 개별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 '10.6월까지 29개사가 추가로 자체적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계획

### ② 대부업체간 신용정보 공유 확대

- 대부업체는 2개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의 그룹내에서만 여신정보(대출잔액, 연체액)를 폐쇄적으로 공유하고 있어

- 대출 신청자의 정확한 신용상태 파악이 어려워 리스크 관리 비용이 증가

⇒ 대부업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개인신용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 대부업체의 서민대출 금리를 낮추는 계기로 활용

- 중장기적으로 대형 대부업체의 대출관련 정보를 제도권 금융회사와 공유하는 방안 추진

## 11. 중소기업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현황 및 계획

- ('07.8) 카드사태 이후 큰 폭의 손실을 거쳐 '05년 이후 카드사 경영실적이 호전되면서 카드 수수료율 인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

\* '03년 이후 전업카드사 당기순익 추이(억원)  
 · △77,289('03) → △13,408('04) → 3,423('05) → 21,637('06)  
 → 26,087('07) → 16,557('08)

###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수준>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신용카드	영세가맹점*	2.0~4.5%	2.0~2.3%
	일반가맹점	1.5~4.5%	1.5~3.5%
체크카드		1.5~4.5%	1.5~2.3%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연간 매출 4천8백만원 미만)

- ('08.10) 중소기업가맹점(수수료율 2.3~3.5% 적용 대상) 중 이·미용실, 의류, 식당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율 추가 인하<sup>1)2)</sup>

1) 인하대상 : 카드사별 약 20만개~90만개 (150만개 유효가맹점 기준)

2) 인하수준 : 평균 2.74% → 2.57% (0.17%p 인하)

□ ('09.2) 재래시장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대형  
마트, 대형백화점 등 대형가맹점 수준으로 인하<sup>1)2)</sup>

\* 카드사별로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수준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1) 인하대상 : 카드사별 약 2만~4만여개 가맹점

2) 인하수준 : (현행) 2.0~3.5% → (개선) 2.0~2.2%

□ ('10.4) 재래시장가맹점 및 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  
료율을 각각 대형마트, 대형백화점 수준 이하로 인하

**【재래시장 가맹점】**

- 연간 매출 9,600만원 미만인 재래시장 가맹점\*의 신용  
카드수수료율 상한을 2.0~2.2%에서 1.6~1.8%로 인하

\* 전국 1,550개 재래시장내 가맹점 5만9천개(카드사 평균) 중 카드사  
별로 평균 54.2%(3만2천개)가 수혜

- 다만, 유흥주점, 성인오락실, 귀금속점 등 영세업종으로  
보기 어려운 가맹점은 제외

※ (참고) 현재 서울시내 3대 대형마트 신용카드수수료율 : 1.6~1.9%

**【중소 가맹점】**

- 재래시장 가맹점 이외에 연간 매출 9,600만원 미만인  
가맹점\*의 신용카드수수료율 상한을 3.3~3.6%에서  
2.0~2.15%로 인하

\* 재래시장 가맹점을 제외한 전체 가맹점 229만개(카드사 평균) 중  
카드사별로 평균 40.2%(92만개)가 수혜



- 신용카드사별 중소 가맹점 신용카드수수료율 상한이 2.0~2.15%로 대폭 인하됨에 따라 기존에 2.0~2.3%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던 영세가맹점(간이과세자)도 일부 인하

※ (참고) 현재 서울시내 3大 대형백화점 신용카드수수료율 : 2.0~2.4%

- 다만, 유흥주점, 성인오락실, 귀금속점 등 유흥·사치 업종은 인하대상 중소가맹점의 범위에서 제외

# 홍 준 표 의 원

## 1. 대부업 관련

### -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계획(서비스)

#### □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계획

- '10년 8월말 현재 대형 대부업체 29개(채권매입 대부업 등록업체 제외)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협약에 가입, 채무조정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 하고 있음
- 향후 소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대부업협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약 가입을 권고할 계획임

## 2.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 관련 언론기사 일체 및 보도자료와 보도해명자료 일체

### ☐ 금융위원회 관련 언론기사 일체

#### ☐ 언론기사 일체 1부 (별도송부)

### ☐ 보도자료

번호	제 목	작성일
1	보험상품 심사제도 개선 추진	20080305
2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공개 개선」 추진	20080306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080311
4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080311
5	금융위원장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개최	20080314
6	베어스튼스 관련 국내 금융회사 익스포저 평가 및 대응	20080318
7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대부이자 부담 완화 및 대형 대부업체 금감원 직권검사 근거규정 마련	20080318
8	[참고자료]한경미래포럼 강연자료	20080320
9	위원장 기자 간담회 개최	20080320
10	금융위원회 워크숍 개최	20080321
11	금융위원회 워크숍 개최결과	20080324
12	(전북)현대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20080324
13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행장과의 상견례 개최	20080325

14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매일경제 주최 “국제 금융 컨퍼런스” 강연	20080326
15	탈런트 유동근, 전인화씨 부부 소액서민금융재단 홍보대사로 위촉	20080326
16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계 CEO와 상견례 개최	20080327
17	소액서민금융재단(휴먼예금관리재단) 출범	20080327
18	[금융위 의결안건] 증권회사의 대주주 변경 승인	20080328
19	[금융위 의결안건] 동양종합금융증권(주) 등 5개 증권사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경영인가	20080328
20	금융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	20080331
21	선물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080331
22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70차 한경 밀레니엄 포럼 강연	20080402
23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보험회사 CEO와 상견례 개최	20080402
24	2008년 2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80402
25	매일경제 제1면 「산은지분 5% 외국계에 먼저 매각」 제하 기사 관련	20080403
26	금융산업에 거는 새정부의 기대와 우리의 다짐	20080403
27	금융위원장과 중소서민 금융회사 대표 상견례	20080404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20080407
29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실시	20080408
30	08.1/4분기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절반이상이 금융분야	20080410
31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080410

32	[금융위 의결안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처리안 의결	20080411
33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파이낸셜뉴스 주최“제9회 서울국제금융포럼”축사	20080417
34	회계제도 선진화를 위한 민관 합동 T/F 구성 및 추진방안	20080417
35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규제개혁심사단」 회의 모두말씀	20080423
36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방미 성과 관련 기자간담회	20080424
37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경련 강연 말씀자료	20080424
38	제1차 금융규제개혁심사단 회의 개최	20080424
39	금융규제개혁 추진방안	20080425
40	은행의 서민금융시장 진출에 따른 기대효과	20080428
41	지역 기술기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추진	20080429
42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외신기자 간담회 말씀자료	20080429
43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20080430
44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080501
45	2008년 3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80502
46	투자자 거래비용 절감 및 경영효율화를 위한 증권유관기관 수수료 대폭 인하 추진	20080506
47	금융위 소관 산하기관 재산임 심사 결과	20080507
48	증권업 예비허가 심사 결과	20080509
49	금융위원회 「스승의 날」 맞이 장애인 학교 방문	20080515
50	제16차 에그몽 그룹 총회 서울 개최	20080519
51	금융회사 전산시스템 안전성 현황 점검회의 개최	20080519
52	공시 불공정거래 제도 개선 T/F 구성 및 향후 추진계획	20080520

53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머니투데이 주최“대한민국 IB 대상”축사	20080521
54	2008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업집단 선정 등	20080521
55	주식 불공정거래 형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80521
56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WSB(세계저축은행협회) 제14회 아태지역총회 개최축사	20080522
57	신용카드 가맹점의 고객정보 보안관리 강화 지도 및 향후 추진 계획	20080522
58	KITA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	20080523
59	밸류에프원유한회사의 (서울)영풍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20080523
60	대한생명보험(주) 및 흥국생명보험(주)의 신탁업 경영 인가	20080523
61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부산 초청 강연 말씀자료	20080523
62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 (1) - ① 업무영역 관련 규제개선 사항	20080523
63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 (1) - ② 진입관련 규제개선 사항	20080523
64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명	20080526
65	제16차 에그몽 그룹 총회 개막, 국무총리 개막연설	20080526
66	전광우 금융위원장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아태지역위원회(APRC) 의장 선출	20080527
67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20080527
68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지원 신청.접수 개시	20080529
69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경제TV 주최“헤지펀드 컨퍼런스”기조연설	20080529
70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 제16차 에그몽 총회 만찬 환영사	20080529
71	금융규제개혁심사결과(2차) 보도자료	20080529
72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 이행실태 점검 결과	20080530

73	제16차 에그몽 그룹 총회 서울 개최 결과	20080530
74	교차모집 시행 준비현황	20080530
75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 (3차) - 금융회사 해외진출 및 외국 금융회사 관련 규제 개선사항	20080602
76	전광우 금융위원장 Chatham House 강연 및 유럽계 IB초청 런던라운드테이블 개최	20080602
77	산업은행 수장, 26년여 만에 민간 전문가 임명으로 성공적인 산은 민영화 (“공공기관”→“민간금융회사”) 및 획기적인 공기업 인사쇄신의 계기를 마련	20080602
78	산업은행 민영화 및 한국개발펀드(KDF) 설립 방안	20080602
79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명장 수여식 개최	20080602
80	2008년 4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80603
81	제5회 대부업정책협의회 개최(사금융 실태조사)	20080604
82	‘회계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 방안’공청회 개최	20080604
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20080604
84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 (4차) - 서민금융(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관련 규제 개선사항	20080605
85	단위 신탁의 공동유대 범위 확대 추진	20080605
86	여전업 발전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전면개정 검토	20080605
87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 (5차) - 여신전문금융회사 관련 규제 개선사항	20080605
88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34차 한국언론재단 포럼 강연	20080605
89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ICOSA(국제증권업협회 협의회) 제21차 연차총회 기조연설	20080609
90	은행의 자회사 대출상품 판매 대행 및 소비자 보호 강화	20080609



91	새 정부의 금융시장 정책방향	20080509
92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제54회 정기총회 축사	20080610
93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ICISA(세계증권업협회 협의회) 국제세미나 기조연설	20080611
94	“시장과 함께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발표	20080611
95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GIPS (Global Investment Performance Standards) 국제 컨퍼런스”축사	20080611
96	금융규제개혁심사결과(6차 보도자료-공시, 신용정보 관련 규제 등)	20080611
97	영진약품공업(주) 등 11개사에 대한 조사 감리 결과 조치	20080612
98	중국 은행의 우리나라 자본시장 투자 가능토록 협의 추진 계획	20080612
99	전광우 금융위원장, 상하이 증권거래소를 방문하여 한.중 양국 우량기업의 상대국 거래소 상장을 제안	20080612
100	은행권 휴면예금 출연금 확정	20080612
101	전광우 금융위원장 한.중 양국 자본시장에 대한 상호투자를 확대키로 중국 금융당국 수장들과 합의	20080613
102	국내 금융회사 중국진출 지원방안	20080613
103	신용회복 지원 기록 삭제 관련 추가조치 시행	20080612
104	금융위 부위원장, 은행권 간담회 발표자료	20080612
105	교원나라자동차보험(주)에 대한 보험종목 추가 영위 허가	20080616
106	흥국생명보험(주)의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주) 대주주 승인	20080616
107	애플러스자산운용(주) 등 4개사의 자산운용업 허가	20080616
108	(서울)HK상호저축은행의 (부산)동광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20080616

109	대부업자 등록 갱신 관련 안내	20080617
110	금융규제개혁심사결과(7차 보도자료-영업행위 관련 규제 개선사항1)	20080617
11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투자업계 간담회 개최	20080618
112	제18차 조선경제포럼 위원장님 강연	20080618
113	전광우 금융위원장 IAS Triannual Meeting 환영 만찬	20080617
114	「IAS 정례회의 및 글로벌 세미나」 개최	20080612
115	금융위원회, 캄보디아 재경부와 정보공유 및 고위급회담에 관한 MOU 체결	20080619
116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2008 ICGN 서울 연차총회 만찬사 연설	20080620
117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20080620
118	「IAS 정례회의 및 글로벌 세미나」 결과	20080620
119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 (8차) - 자산운용 관련 규제 개선사항(1)	20080623
120	금융투자회사 재인가 재등록 처리 방안	20080624
121	외환카드 주가조작 항소심 선고 판결 관련	20080624
122	「금융투자업규정」 제정 예고	20080625
123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80625
124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20080625
125	유가증권 차입거래 제한 폐지 등을 위한 「은행업 부수업무지침」 개정	20080625
126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9차) 및 추가 금융규제 개선사항 - 자본시장 규제 개선사항	20080625
127	금융규제개혁 기본방향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4차 회의 보고 사항	20080626
128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의결	20080626

129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Korean Economic Forum 기조 연설	20080626
130	기업은행 감사 임명	20080627
131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20080627
132	(주)한화건설 등 5개사의 제일화재해상보험(주) 대주주 승인	20080627
133	(주)KB금융지주회사 설립 예비인가	20080627
134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 (10차) - 영업행위 관련 규제 개선사항	20080630
135	소액서민금융재단 지원금 교부행사 개최	20080630
136	제1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20080630
137	2007 자금세탁방지 연차보고서 발간	20080701
138	금융민원센터 개소 및 온라인 원스톱 민원시스템 개통	20080701
139	2008년 5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80702
140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시행령 제정안 등 입법예고	20080702
141	금융위 제1차 회계제도심의위원회 개최	20080711
142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명 등	20080711
143	동부화재의 동부증권에 대한 자회사 소유 승인	20080711
144	메리츠자산운용(주) 등 3개사의 자산운용업 허가	20080711
145	한국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714
146	전자증권제도의 효율적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 참석	20080715
147	하반기 국내 금융시장·산업 상황 점검을 위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 워크숍 개최	20080715
148	은행장간담회 개최	20080717
14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차관회의 의결	20080717

150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정책 토론회 개최	20080718
15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080723
152	아이메카㈜ 등 2개사 및 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080723
153	주식 불공정거래 형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80723
154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	20080724
155	금융 영업규제 선진화 및 감독역량 강화방안	20080724
156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 콜센터 운영	20080724
157	(가칭)한국투자운용지주㈜ 설립 예비인가	20080725
158	자산운용업 및 신탁업 인허가	20080725
159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위원회 의결	20080725
160	증권업 및 선물업 경영허가안 의결	20080725
161	비엔지증권중개(주)의 대주주 승인	20080725
162	하나대투증권(주) 등 4개 증권사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경영인가	20080725
163	부동산권리보험에 대한 보험업 허가	20080725
164	공기업 특위 업무보고 관련 자료	20080728
16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등 입법예고	20080728
166	금융위의 건보공단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권 관련 시민단체 등의 제기사안에 대한 입장	20080731
167	KIKO 거래현황 및 대책	20080801
168	2008년 6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80804
169	한국금융투자협회 설립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20080806

170	증권예탁결제원 사장 임명	20080807
171	HSBC,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 보유 승인 신청 관련 보완자료 제출	20080812
172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	20080813
173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개정	20080813
174	금융공기업 기관장 경영계약 체결 보도자료	20080814
17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20080818
176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방안 추진	20080819
177	상호저축은행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20080820
178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80820
179	공시·불공정거래 제도개선 주요 추진과제	20080821
180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임명 제청 및 신용보증기금 전무 임명	20080822
181	금융선진화를 위한 정책노력과 향후과제	20080825
182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080826
183	중국투자자금 유치를 위한 한국자본시장 IR 개최	20080826
184	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정기재계산 결과	20080826
185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20080826
186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서울경제 참보험인 대상 축사	20080826
187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140회 경총포럼 강연	20080828
18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20080901
189	신용회복기금 출범식 개최	20080902
190	「2008년도 공적자금관리백서」 발간	20080902

191	2008년 7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80904
192	제43회 공인회계사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080904
193	美 CME 그룹과의 연계를 통한 선물시장 글로벌화 추진	20080904
194	시장상인들을 위한 「전통시장 소액대출 프로그램」 추진	20080905
195	정기국회 업무보고자료	20080908
196	한국개발펀드법안 입법예고	20080909
197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20080909
198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은행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20080909
19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909
200	금융중심지지원센터(Fn Hub Korea) 개소	20080909
201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관련 자료 제출	20080909
202	메디에스앤피(주) 등 4개사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	20080910
203	금융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조찬강연자료 송부	20080911
204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개소 및 은행별 금융애로 상담반 가동	20080911
205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공시 규정 등 규정개정 승인	20080912
206	CJ투자증권(주) 및 CJ자산운용(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	20080912
207	미국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국내금융시장 영향 및 대응	20080915
208	리먼브러더스 बैं크하우스 서울지점 및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조치	20080916
209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위,금감원 합동 대책팀 구성.운영	20080916
210	한국 증시 FTSE 선진국 시장 편입	20080918

211	HSBC, 론스타와의 계약 파기 관련	20080919
212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 강연	20080922
213	금융공기업 기관장 경영계약 체결 (2차)	20080922
214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 방안	20080924
215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80924
216	(가칭)㈜KB금융지주회사 및 (가칭)한국투자운용지주㈜ 설립 인가 등	20080926
217	(가칭) D.A.S. 법률비용보험(주)의 보험업 예비허가	20080926
218	이트레이드증권(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	20080926
219	상호저축은행의 자율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현황	20080926
220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방안」 추진	20080929
221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연구원 개원 기념 국제컨퍼런스」 기조연설	20080930
222	공매도 및 자사주 관련 제도 개선	20080930
223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관련 당정협의 개최	20081001
224	2008년 8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81001
225	서울경제(08.10.2 인터넷판), 「연기금.PEF가 은행 M&A 주도할 듯」 제하의 기사 관련	20081006
226	은행장 간담회 말씀자료 송부	20081006
227	[금융위]은행장 간담회 개최 결과	20081006
228	2008년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개최	20081006
229	애널리스트 간담회 주요 현안 설명자료	20081007
230	금융투자회사 재인가·재등록 신청 결과	20081007

23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20081008
23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081009
233	중소기업은행 전무이사 임명	20081010
234	아시아신용정보(주)에 대한 일부 업무정지(1월) 조치	20081010
235	금산분리 완화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 자료	20081013
236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제금융중심지 서울세미나」 개최식 축사	20081013
237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 관련 후속조치(중기지원 Fast Track 프로그램 지침 확정)	20081014
238	KIKO 등 파생상품 손실 거래소 상장기업 지원 방안	20081015
239	2008년도 국정감사 자료	20081016
240	국제 금융시장 불안 극복 방안	20081019
241	증권펀드 세제지원 방안 추진	20081019
24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1021
243	“신용회복지원중”기록 삭제 추진	20080602
244	‘신용카드업 제도개선 방안’공청회 개최	20081021
245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 추진	20081021
246	파생상품 평가 관련 회계처리 개선	20081022
247	한국 투자시장 홍보 및 한·중 협력 관계 강화	20081022
248	네스테크(주) 등 4개사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	20081022
249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81022
250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20081022



251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20081024
252	외신기자 간담회	20081027
253	국회 정무위 현안보고자료	20081024
254	제45회 「저축의 날」 행사	20081028
255	금융권 유동성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20081029
256	전광우 금융위원장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아태지역위원회(APRC) 회의 주재.참석(10.30 회의 당일)	20081029
257	증권시장 악성루머에 대한 단속 강화	20081029
258	24개 KIKO 등 거래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개시	20081030
259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아태지역위원회(APRC)회의결과	20081030
260	제21차 한미재계회의 위원장님 기조연설	20081031
261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가입심사 실시	20081103
262	10조원 규모의 수정예산안 편성 - 경제난국 극복과 지방살리기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 -	20081103
263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20081104
264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시행령 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20081104
265	2008년 9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81105
266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1105
267	2008.11.5 연합뉴스 '내달부터 금융소외자 빚부담 덜어준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입니다.	20081105
268	(주)포이보스 등 2개사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	20081105
269	오바마 후보 당선에 대한 금융위원회 입장	20081105
270	11.5(水) 주요 은행장 조찬 간담회 결과 보도참고자료	20081105

271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개정 공개초안 발표	20081106
272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20081106
273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취득 승인	20081107
274	「중기 유동성 지원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	20081110
275	신용회복기금,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채무재조정 신청.접수 개시	20081110
276	자본시장 통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20081110
277	Financial Times(11.11,火, 04면) 전광우 금융위원장 인터뷰 기사 보도	20081111
278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2008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 축사	20081112
279	신성건설 관련 대응방안(보도 참고자료)	20081112
280	11.12(水) 증권·자산운용 CEO 조찬 간담회 결과	20081112
281	수출입금융 지원을 위한 외화유동성 공급 방안	20081113
282	위원장님 기자간담회 말씀자료	20081113
283	업무현안 및 2009년도 예산안 보고	20081114
284	한국시장 홍보를 위한 민·관합동 ‘글로벌 IR’ 개최	20081117
285	금융위원장, 중소기업 밀집지역 은행 현장 방문	20081117
286	권혁세 증선위원 「아시아 채권 시장 전망」 국제 컨퍼런스 기조연설	20081118
287	금융위, 런던·뉴욕 국가 IR (Korea Investors	20081119
288	김용환 금융위원 「채권시장 정책 심포지엄」 축사	20081119
289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81119
290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단기매매차익반환규정 개정	20081121

291	하나대투증권(주)과 하나IB증권(주)의 합병 인가	20081121
292	도이치증권(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	20081121
293	한국은행의 유동성지원 관련 결정에 대한 입장	20081124
29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 차관회의 통과	20081124
29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081125
296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각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081125
297	세계경제연구원 국제 컨퍼런스 오찬 연설자료(국문)	20081125
298	기업재무개선 지원단 설립	20081126
299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소액보험 지원금 교부 및 보험증권 전달식 축하	20081127
300	「제2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 개최	20081128
301	미국투자자 코스피200선물 투자 가능	20081201
302	2008. 12. 1. 헤럴드보험대상 축하	20081201
303	2008년 10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81203
304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해외 금융전문인력 채용·취업 지원 개시	20081203
305	저축은행 PF대출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및 대책	20081203
306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UBS Korea Conference 오찬 기조 연설	20081204
307	08.11월 중기지원 실적 및 추가지원 방안	20081204
30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의결	20081205
309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명	20081208

310	금융위-서울시,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소액대출 프로그램 본격 시행	20081209
311	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081209
312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081209
313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20081209
314	'08년 2차 P-CBO 2,500억원 발행	20081210
315	외부감사인의 IFRS 도입용역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20081210
316	(주)파로스이앤아이 등 3개사에 대한 조사 감리 결과 조치	20081210
317	리먼브러더스뱅크하우스 서울지점 영업 일부정지 조치 연장	20081212
318	신용공여한도 초과 예외 인정	20081212
319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및 긴급조치 연장	20081212
320	추가 출자·재원 확보 현황	20081215
321	금융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	20081218
322	신용회복기금 채무재조정 환승론 본격 시행 및 '금융소외자 종합자활 지원 네트워크'개통	20081218
323	제8차 한·일 금융당국 고위급 연례회담, 서울에서 개최	20081219
324	파생상품 시장 감독체계 개선방안 마련	20081222
325	'0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20081222
32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20081222
32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20081222
328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20081222
329	외화환산 관련 회계처리 개선방안	20081222

330	신종자본증권 BIS기본자본 인정한도 확대	20081223
331	『실물금융종합지원단』(가칭) 구성을 위한 지경부·금융위간 협의	20081224
332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20081224
333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81224
334	부실 외부평가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및 감독강화	20081224
335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081226
336	(전북)전북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20081226
337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등 개정	20081226
338	금융 공공기관 대통령 업무보고 주요내용	20081230
339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서민금융 감독 대상」 시상식 축하	20081230
340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제도 운영 방안	20081230
341	대부업법 개정안 공포 및 시행 지연에 따른 당부사항	20081231
342	2009년 증권선물시장 개장식 치사	20090102
343	09년 금융권 인턴사원 채용 계획	20090105
344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 신년사	20090105
345	2008년 11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90107
346	08년중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적 및 09년 지원계획	20090108
347	국내은행, 기업 설자금으로 9조 1천억원 지원예정	20090109
348	금융위, 금감원 공동 「IFSB 이슬람금융 세미나」 개최	20090112
349	제280회 국회(임사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20090112

350	「이슬람금융 세미나」 대통령 축하(금융위원장 대독)	20090113
35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090113
352	매경 증권인상 축하	20090114
353	노무라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 및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의 영업양수도 인가	20090114
354	외화환산 등 관련 회계기준 확정	20090114
355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20090115
356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 동향	20090115
357	금융위원회 청사 이전	20090116
358	설 대비, 「원스톱 현장 중기 금융지원반」 운영	20090119
359	中小협력업체지원을 위한 「상생보증 프로그램」 협약식 개최	20090119
360	권혁세 증선위원, 자본시장통합법 국제세미나 축하	20090120
361	건설사 및 중소조선사 구조조정의 영향 및 대응방안	20090120
362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및 시행 관련	20090120
363	재래시장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20090121
364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90121
365	주택금융 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 추진	20090121
366	금융중심지 지정 심의 결과	20090121
367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개선 추진 계획	20090122
368	09년도 금융위원회 규제개혁계획 수립	20090122
369	자본시장 통합법 관련 공시규정 제·개정	20090128
370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090128

371	한맥선물(주) 및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	20090129
37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등	20090129
373	2008년 12월중 유가증권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 실적	20090129
374	워크아웃 대상 업체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	20090130
375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환승론) 확대 시행	20090202
376	자본시장 통합법상 정보교류 차단장치 운영방안 설명회 개최	20090202
377	금융투자회사 재인가, 재등록 완료	20090202
378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워크아웃 추진기업 애로 해소방안 강구	20090204
379	금융공공기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지원감사 실시	20090205
380	09.1월 중기지원 실적	20090205
381	2008년 12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90205
382	권혁세 증선위원, 부산 금융중심지 토론회 기조연설	20090209
383	Moody's, 국내은행 장기외화부채 신용등급 변경의 의미	20090209
384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확대방안	20090212
385	「투자권유」 관련 업무처리 해설지침 마련 안내	20090212
38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칭 통일 등	20090212
387	휴면예금관리재단 이사장 임명	20090212
388	은행 및 금융당국 합동워크숍 개최 계획	20090213
389	은행 및 금융당국 합동 워크숍 논의결과	20090216
390	주택연금 활성화 추진 등	20090218
391	「신용보증 확대방안」 후속조치	20090218

392	흥국생명보험(주)의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한 자회사 소유 승인	20090218
393	(가칭)㈜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회사 설립 예비인가	20090218
394	에스신용정보(주)에 대한 신용정보업 영위 허가	20090218
395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과 전략	20090219
396	금융위원회, “금산분리 규제 개혁”관련 UCC 제작	20090219
397	제281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20090223
398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20090224
399	수출입 기업 환헤지 지원을 위한 장내 통화선물 리모델링 추진	20090224
400	「은행 자본확충 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	20090225
401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20090225
402	㈜대전상호저축은행 등 2개사에 대한 조사, 감리 결과 조치	20090225
403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90225
404	국제금융시장 불안 장기화에 따른 우리경제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	20090226
405	부도율·회수율 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20090227
406	「은행 자본확충 펀드」 신청 현황	20090227
407	금융위원장, 금융소외자 지원 현장 점검	20090304
408	(경기)토마토상호저축은행의 (부산)양풍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20090304
409	해운업 구조조정 추진방향	20090305
410	Wall Street Journal(Asia版)(3.6,金, 11면)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 기고문 보도	20090306
411	금융투자업 인가의 기본방향과 운용계획	20090309
412	09.2월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적	20090309



413	서민 고통분담에 금융위 공무원 동참	20090310
414	事前 채무조정 제도(Pre-Workout) 시행	20090310
415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 이종구 상임위원 영국 및 미국 출장	20090311
416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	20090311
417	㈜아이씨엠 등 2개사 및 대주회계법인 등 2개 회계법인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	20090311
418	Fitch社の 국내은행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관련(보도참고자료)	20090313
419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	20090313
420	MMF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20090316
42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법을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90316
422	금융위원회 영국 런던 현지 금융·경제 설명회 개최 결과	20090316
42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20090317
424	2009년 1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90317
425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부산 초청 강연과 부산지역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및 금융기관 방문 실시	20090318
426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20090318
427	은행자본확충펀드 제3차 운영위원회 결과	20090320
428	금융위·금감원 비상금융통합상황실 확대·개편	20090323
429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090324
430	금융위기극복 관련 추경 편성	20090324
431	한국경제바로알리기 미국 설명회 개최 결과	20090324
432	글로벌파이낸스포럼 창립기념세미나	20090325
433	주택연금 활성화 등 추진 현황(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차관회의 통과 등)	20090326

43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및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20090326
435	건설 및 조선사 2차 신용위험평가의 영향 및 대응방안	20090327
436	“금융위기 극복 워크숍”개최	20090327
437	금융권 PF대출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및 대응방안	20090330
438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090331
439	은행 자본확충 펀드 제1차 매입 완료	20090331
440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사외이사 간담회 개최	20090401
441	에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인가	20090401
442	09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 개시	20090402
443	금융위원장, 중기 금융지원 현장점검회의 개최	20090403
444	북한 로켓발사관련 비상금융합동대책반 회의 개최	20090406
445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090407
446	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20090406
447	事前 채무조정(Pre-Workout) 시행 개시	20090408
448	「국고채 ETF」 등 신종 ETF 활성화 추진	20090408
449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90408
450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 인사이트펀드 판매중단 위기」 보도내용 관련	20090408
45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확대 추진현황	20090409
452	2009년 2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90409

453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차관회의 통과	20090409
454	정무위 업무보고	20090413
455	대한생명보험(주)의 한화투자신탁운용(주)에 대한 자회사 소유 승인	20090415
456	리먼증권 서울지점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20090415
457	금융투자업 인가	20090415
45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20090422
459	자산운용보고서 관련 제도합리화	20090421
460	위기를 기회로 활용, 세계 5대 해운강국으로 도약	20090423
461	쌍용차 및 GM대우 협력업체 2,400억원 지원 - 지자체·은행·보증기관 참여 『지역상생 보증펀드』 협약식 개최	20090423
462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 국무회의 보고	20090428
463	대부업법 시행 관련 연체이자율 기준 변경	20090429
464	기업구조조정 향후 추진계획	20090430
465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90504
466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90504
467	제2차 금융공공기관 감사협의회 개최	20090506
468	D.A.S. 법률비용보험(주)의 보험업 (본)허가	20090506
469	한국산업은행 부총재 및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임명	20090506
470	금융위 부위원장, 중기 금융지원 현장점검회의 개최	20090508
471	'09.4월 중소기업대출 및 신용보증지원 실적	20090512
472	2009년 3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90513

473	금융위원회, '금융위기 극복' 관련 포털사이트 구축·개설	20090513
474	(주)미디어코프 등 5개사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	20090513
475	유관기관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회의 개최	20090513
476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등 규정 변경예고	20090514
477	금융 공공기관장 경영계약 체결	20090514
478	부산 금융중심지지원센터 개소	20090515
479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정책 방향	20090515
480	2009년도 구조조정기금 운용계획(안) 주요내용	20090518
481	低신용자를 위한 전환대출(환승론) 확대 시행	20090518
482	장애인 및 장기기증자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금지 독려	20090520
483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조치 해지	20090520
484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 결과	20090526
485	신성장동력 녹색금융 분야 세부추진계획 발표	20090526
486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20090527
487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90527
488	2009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 선정 등	20090527
48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정책 방향(매경 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	20090529
490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금융의 과제(한국금융학회 창립 20주년 정기 학술대회 초청연설)	20090529
491	축사(자본시장연구원 주최 국제 컨퍼런스)	20090603
492	금융투자업 인가	20090603
493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090605
494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및 정부안 국회제출	20090609

495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상시평가 결과	20090611
496	'09.5월 중기지원 실적 및 향후 지원계획	20090612
497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20090608
498	2009년 4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90616
499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 등	20090617
500	(가칭)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株) 설립 인가 등	20090617
501	(주)골든브릿지의 (전남)상업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20090617
502	SH&C생명보험(주) 및 KB생명보험(주) 대주주 변경 승인	20090617
503	금융투자업 인가	20090617
50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20090617
505	신용협동조합 합병인가	20090617
506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20090618
507	한국의 금융정책(2009 중앙대일리-SERI 공동 주최 Korean Economic Forum 초청연설)	20090619
508	보험범죄 근절대책	20090619
509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 방안	20090622
510	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20090623
511	진동수 금융위원장, 금융안정화위원회(FSB) 창립총회 및 홍콩 국제비즈니스포럼 참석	20090623
512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경제(매일경제신문 주최 HongKong Business Forum 기조연설)	20090624
513	(株)씨모텍 등 2개사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	20090624
514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90624

515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20090625
516	「범금융권 고객정보보호 캠페인」 추진	20090629
517	금융위원회, 금융안정위원회(FSB) 운영위원회 진출 및 FSB 창립총회 주요 결정사항	20090629
518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20090630
519	아시아신용정보(주)에 대한 일부 업무정지(1월) 조치 및 허가취소 절차 개시	20090701
520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90701
521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20090701
522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기준 제정	20090701
523	위원장,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 강연	20090703
524	금융위원장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20090703
525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 발표	20090706
526	전통시장 소액대출 및 저소득층 소액보험 사업 전국 확대 시행	20090707
527	㈜원드스카이 등 3개사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	20090708
528	디도스 공격 관련 금융권 비상 대응체제 가동	20090709
529	CMA 시장 동향 및 감독 강화 방안	20090709
530	「펀드산업 관련 인프라」 선진화 방안	20090710
531	국제금융질서의 변화와 한국 금융의 과제	20090710
532	금융위원회 외부 금융전문인력 채용 확대	20090710
533	금융위원장, 은행장과 간담회 개최 예정(7.13일)	20090713
53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20090714

535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주요업무보고	20090715
536	2009년 5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90716
537	FX마진 거래 실태분석 및 제도개선 추진	20090716
538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20090716
539	금융투자회사 인가업무단위 추가 분·예비인가 의결	20090716
540	신용협동조합 합병인가	20090716
541	09년 상반기중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적 및 향후 계획	20090717
542	국회 예산정책처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정책 분석」 보고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의견	20090722
543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20090722
544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90722
545	舊 ㈜중부상호저축은행[㈜현대스위스상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	20090722
546	금일 국회를 통과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20090722
547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20090723
548	한국산업은행 분할 방안 확정	20090728
549	금융투자업 인가 및 국제신탁(주)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20090729
550	아시아신용정보(주)에 대한 일부 업무정지(1월) 조치	20090729
551	국제회계기준(IFRS) 기초연설문	20090729
552	기업구조조정 추진상황 및 금융회사 부실채권 정리계획	20090730
553	2단계 금융투자업 인가방향과 운용계획	20090730
554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우리나라 상호평가 보고서 출간	20090805
555	'09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20090806

556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20090811
557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확대	20090813
558	산은·기은을 중심으로 2조원의 특별 설비투자펀드 조성·운용할 계획	20090817
559	2009년 6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90817
560	금융위원회, 정부 부처 최초로 영문 블로그 개설	20090818
561	제 20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 개최	20090820
562	일본(동경) 및 중국(상해) 현지 한국자본시장 투자설명회 개최	20090824
563	서민금융 관련 반복적 민원 해소방안 추진	20090825
564	금융투자회사 인가업무단위 추가 본인가 의결	20090826
565	아시아신용정보(주)의 신용정보업 허가취소	20090826
566	금융투자업 인가	20090826
56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20090827
568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각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090828
569	「2009년도 공적자금관리백서」 발간	20090831
570	금융위원회, 외부전문가 채용 비율 10% 초과	20090831
571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및 1차회의 개최	20090831
572	금융위원장, 중소기업 금융지원 현장점검회의 개최	20090902
573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90902
574	(주)케이디세코·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	20090902
575	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	20090903
576	제44회 공인회계사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090903



577	외신기자 간담회 연설문	20090907
578	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조치	20090909
579	에르고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에 대한 보험종목 추가 영위 허가	20090909
580	금융투자업 인가	20090909
581	우리은행 및 황영기(前 우리은행장)에 대한 금융위원회 제재조치 의결 결과	20090909
582	ELS 발행 및 운영 관련 제도개선 방안	20090911
583	[보도참고]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과반수 미달인데, 안건 의결」, 매일경제 「금융위, 재적위원 과반미달서 의결」, 경향신문 「금융위, 18개 안건 대리출석 처리」 제하의 기사 관련	20090914
584	진동수 금융위원장,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	20090914
585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 (MOU) 체결	20090915
586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결과	20090916
587	서민의 자활지원을 위한 미소금융(마이크로 크레딧)사업 대폭 확대	20090917
588	자본시장연구원 국제컨퍼런스	20090923
589	금융투자업 경영 인가	20090923
590	(서울)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및 에이치에스에이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기)예한울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20090923
591	하나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 및 하나카드 신용카드업 인허가 의결	20090923
592	금융투자회사 인가업무단위 추가 예비인가 의결	20090923
593	KOSPI200선물 야간거래 개설을 위한 거래소 규정개정안 승인	20090924
594	[보도참고자료] 금융위원장 정례기자간담회	20090925

595	제3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20090925
59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090928
597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추진	20090928
598	[보도참고자료] 금융위원장 및 금융유관기관 협회장 「추석 맞이 재래시장 방문」 추석물가 동향 파악 및 애로사항 등 수렴	20090928
599	파이낸셜뉴스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 축사	20090929
600	ADB, 금융위, 재정부 공동 국제컨퍼런스 개최	20090929
601	ADB 국제컨퍼런스 기조연설문	20090930
602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20090930
603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90930
604	2009년 7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90930
605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각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20091001
606	채권 유통시장 개선 방안 마련	20091005
607	(가칭)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설립 인가	20091007
608	금융투자회사 인가업무단위 추가 본인가 의결	20091007
609	금융투자업 인가	20091007
610	‘녹색금융이 이끄는 녹색성장’ 컨퍼런스 축사	20091009
611	09년도 국정감사 관련 업무현황	20091012
61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20091014
613	㈜네오리소스 등 8개사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	20091014
614	한국,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정회원 가입	20091014

615	금융투자회사 인가업무단위 추가 본인가 의결	20091021
616	제46회 「저축의 날」 행사	20091027
617	[보도참고자료] 한국정책금융공사 및 산은금융지주사 설립	20091027
618	한국정책금융공사 창립 기념식 축하	20091028
619	유럽연합상공회의소 세미나 연설문	20091028
620	주식 불공정거래 형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91028
621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20091029
622	2009년 8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91102
623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20091105
624	「2009 KRX 상장기업 IR 엑스포」 기조연설	20091105
625	신용정보 협회 출범식 격려사	20091105
626	2009 서울국제금융 축하	20091106
627	[보도참고자료] 한국 조선산업 경기회복 선제대응에 나서	20091109
628	[보도참고자료]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해운산업 자생력 확보 계기 마련	20091109
629	승용차요율제 자동차보험 개선 추진	20091110
630	IGE·IMF 국제금융컨퍼런스	20091111
631	(주)비엔디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091111
632	자동차보험료(자차·대물) 할증기준 개선 추진	20091112
633	국회 경제정책포럼 세미나	20091116
634	Korean G20 Leadership 연설문	20091118
635	전남서부신협과 문장신협의 합병 등 인가	20091118

636	비씨카드(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	20091118
637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과 메릴린치인터내셔널은행 서울지점 간 영업양수도 등에 대한 예비인가	20091118
638	미래상호저축은행 등의 한일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20091118
639	금융투자회사 금융투자업 본·예비인가 의결	20091118
640	금융투자업 인가	20091118
641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및 감독 강화 방안	20091119
642	‘회계감사업무시 전문가 평가의견 활용’관련 회계감독 강화	20091125
643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91125
644	㈜해세나 등 6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091125
645	제7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20091125
646	2009년 9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91127
647	「제3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 개최	20091127
648	두바이월드 채무상환유예요청 관련 비상금융합동대책반 회의 개최	20091129
649	「증권시장 결제제도 선진화」 추진	20091130
650	금융투자회사 금융투자업 본·예비인가 의결	20091202
651	(가칭)한국씨티금융지주㈜ 설립 예비인가	20091202
652	[위원장] UBS Korea CEO/CFO Forum 2009	20091203
653	[위원장] AMCHAM Luncheon Speech	20091209
654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20091211
655	맥쿼리은행 서울지점 신설 인가	20091214
656	2010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20091216

657	바젤위원회, 금융규제 개편방안 초안 발표	20091217
658	2009년 10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91218
659	제8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20091218
660	한화손해보험(주) 및 제일화재해상보험(주)의 합병 인가 등	20091218
661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과 메릴린치인터내셔널은행 서울지점 간 영업양수도 등에 대한 인가 등	20091218
662	금융투자업 변경인가(본인가) 의결	20091218
663	제6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20091221
664	미소금융 설립 및 운영현황 등	20091221
665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091222
666	금융위원장 및 금융유관기관장 「연말연시 국군장병 위문」	20091223
667	주식 불공정거래 형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91223
668	(주)신명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 및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실시	20091223
669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20091223
67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차관회의 통과	20091224
671	증권유관기관 수수료체계 개편 및 수수료 인하	20091229
672	금융투자업 인가	20091229
673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20091229
674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20091229
675	금호아시아나그룹 구조조정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20091230

676	일반기업회계기준 제정	20091231
677	KIFRS하에서의 질의회신제도 시행	20091231
678	(전북)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 명령(영업정지)	20091231
679	[위원장] 2010년 금융위원회 신년사(사무식)	20100104
680	재래시장·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	20100104
681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보증제도 개선	20100104
682	은행권 사외이사 제도 개편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20100104
683	[위원장] 2010년 범금융기관 신년사	20100105
684	FSB 보상원칙 국내 이행을 위한 업권별 모범규준 마련	20100106
685	(주)스타맥스 등 6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00106
686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새단장 오픈	20100107
687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20100107
688	진동수 금융위원장,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	20100108
689	‘미소(美少)금융’신청자격을 인터넷에서 확인하세요	20100111
690	제3차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결과	20100111
691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20100112
692	금융위원장, 금융 공공기관장 회의 개최	20100112
693	외국인 금융투자자 등에 대한 출입국 편의제공 확대	20100113
694	[보도참고] 금융위원장, 7개 금융협회장 간담회 참석	20100114
695	미소금융 1개월간 설립·운영현황 등	20100118
696	[위원장]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1년 세미나 기조연설	20100118

697	[보도참고] 진동수 금융위원장 취임 1주년 성과와 과제	20100119
698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만기도래 현황 및 리스크 평가	20100120
699	2010년도 미소금융 추진계획	20100120
700	㈜트라이콤 등 2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00120
701	[위원장] 금융경영인 조찬 강연(2010년 금융정책의 과제와 방향)	20100122
702	더케이손해보험(주)에 대한 보험종목 추가 영위 허가	20100127
703	결합재무제표 기준서 제정	20100127
704	금융투자업 변경(예비)인가 의결	20100127
705	제9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20100127
706	제재내용 공개수준 확대방안	20100128
707	미소금융을 사칭하는 영업행위에 주의하세요	20100128
708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00128
709	2009년 11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100129
710	'09.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및 정리 추진 실적	20100201
711	금융위원장, 설 대비 중소기업 금융지원 현장방문	20100202
712	'위기 이후 한국 금융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미래비전' 국제 세미나	20100203
713	[보도참고] 우리나라 사모펀드 규제체계 평가와 개선방안 용역 추진	20100203
714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실시	20100203
715	여신금융회사 이자율제한 위반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	20100205
716	[보도참고] 그리스 등 남유럽 재정적자 우려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	20100207

717	제10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20100208
718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도입 관련 추진계획	20100210
719	금융위원장, 설 대비 미소금융 지원 현장점검	20100210
720	에스케이텔레콤에 대한 하나카드 대주주 승인	20100210
721	공시위반 과징금 관련 제도개선 사항(조사업무규정)	20100211
722	[보도참고] 서민금융 정책협의회 제1차 회의 개최 결과	20100217
723	제287회 국회(임사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20100218
724	[보도참고] 금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20100218
725	2009년 12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100219
726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20100224
727	미소금융 2개월간 운영현황	20100224
728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00224
729	㈜일공공일안경콘택트에 대한 조사 , 감리결과 조치	20100224
730	제11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20100224
731	부동산 PF대출 및 PF ABCP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 추진	20100302
732	케이디비칸서스밸류 PEF의 금호생명보험(주) 대주주 승인	20100303
733	한국신용정보(주)의 채권추심업·신용조사업 분할 인가	20100303
734	금융투자업 변경(예비)인가 및 합병승인 의결	20100303
735	금융투자업 인가	20100303
736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개선방안 용역 추진	20100305
737	2010년 1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100305



738	금융위 부위원장, 회계감독당국과 회계법인 조찬간담회 개최	20100311
739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의결	20100317
740	한중일 고위급 금융당국 회의 및 한중일 금융협력세미나 참석 결과	20100318
741	펀드업계 「기존 투자자 펀드 판매보수 단계별 인하」 추진	20100318
742	제12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20100319
743	제10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20100322
744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00323
745	[위원장] 금융선진화포럼 정책세미나	20100324
746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20100324
747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00324
748	(주)야호커뮤니케이션 등 2개사 및 화인경영회계법인 등 3개 회계 법인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00324
749	회계투명성제고를 위한 2010년 감리업무 운영방향	20100325
750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단기 사채법’) 제정안 차관회의 통과	20100325
751	예대율 제도 도입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20100326
752	[보도참고] 금융위원장, 금융투자업계 간담회 참석	20100326
753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리 비교공시 강화	20100330
754	2010년 2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100402
755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당정협의 개최	20100407
756	금융투자업 인가	20100407
757	금융투자회사의 외환파생상품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 업규정 개정	20100407

758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의결	20100407
759	예나래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인가	20100407
760	2010년도 금융발전심의회 출범	20100408
76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00408
762	서민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방안	20100409
763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 예고	20100412
764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00413
765	제289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20100414
766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최고이자율을 연 49%에서 연 44%로 5%p 인하	20100415
767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00416
768	美 SEC의 골드만삭스 기소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20100420
769	[보도참고] 대부업법 시행령 최고이자율 인하 적용대상 관련	20100420
770	[위원장] 2010 세계 경제·금융컨퍼런스	20100421
771	[보도참고] 보증부대출 금리부과체계 개선방안	20100421
772	금융투자업 인가 및 영업양수도 승인 의결	20100421
773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안 승인	20100421
774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의 하나로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20100421
775	현행 IFRS 외화환산회계 개선을 위한 그간의 노력 및 향후계획	20100422
776	2010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보험분과 개최	20100422
777	주택 미분양 해소와 거래 활성화로 경제회복 견인	20100423

778	제14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20100423
779	『FSB와 글로벌 금융규제개혁』 발간	20100426
780	재래시장·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대폭 인하	20100427
781	IFRS 정보이용자 조찬간담회 개최	20100427
782	행정지도 운영 투명화 방안 추진	20100428
783	[보도참고] S&P의 그리스·포르투갈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관련	20100428
784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00428
785	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20100430
786	전화금융사기 피해구제 제도개선 관계기관 T/F 구성 및 운영 계획	20100506
787	금융위 부위원장, 미소금융 현장점검 대전 등구지점 개소식 참석 및 KB 미소지점 현장점검	20100506
788	녹색금융특화 MBA 업무협약 체결	20100507
789	남유럽발 금융불안에 대응한 비상금융합동대책반회의 개최	20100507
790	2010년 3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100507
791	[보도참고]금융인 초청 오찬간담회의 금융위원장 발표자료	20100507
792	[보도참고]경제, 금융상황점검회의 결과	20100510
793	서민금융 통합서비스 개시 점검	20100510
794	금융위, 한국경제 해외설명회 개최	20100510
795	[보도참고]2010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중소서민금융분과 개최	20100512
796	2010년도 금융선진화 합동회의 제1차회의 개최	20100512
797	(가칭) 아이비케이 연금보험(주)의 보험업 예비허가	20100512

798	금융투자업 폐지 및 해산 승인 의결	20100512
799	금융투자업 인가	20100512
800	[보도참고]권혁세 부위원장, 싱가포르에서 한국금융 IR 활동 전개	20100513
801	2010년 제2차 금융발전심의회 자본시장분과 개최	20100514
802	[보도참고]제17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20100514
803	미소금융 소액대출 확대	20100517
804	제4차 「IFRS 정착 추진단」 회의 개최	20100517
805	[위원장]2010 Korean Economic Forum	20100519
806	금융위 부위원장, 미소금융 현장점검 신한미소금융재단 부산 해운대지점 개소식 참석	20100519
807	진동수 금융위원장 국제 컨퍼런스 참석 및 독일금융청과의 금융 협력/정보교환 양해각서 체결추진	20100519
808	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변경안 예고	20100520
809	'09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20100520
810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00520
811	2010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 선정 등	20100520
812	[위원장] 독일 재무부 주최 국제회의 Keynote Speech	20100521
813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이후 대내외 금융시장 점검을 위한 비상 금융합동대책반회의 개최	20100523
814	금융위 위원장, 미소금융 현장점검 기업은행(IBK) 미소금융재단 부천지점 개소식 참석	20100525
815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00526
816	(가칭)한국씨티금융지주(주) 설립 인가 등	20100526

817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00526
818	금융투자업 인가	20100526
819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및 대주주변경 등 승인 의결	20100526
820	『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지원 방안』 신용회복과 일자리 모두 찾기, ‘행복잡(Job)이’프로젝트	20100527
821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20100527
822	제18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20100528
823	향후 금융투자업 인가방향과 운용계획	20100531
824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00601
825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00603
826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20100603
827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형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00603
8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20100603
829	2010년 4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100604
830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00608
831	한국, IOSCO MMOU 정식회원으로 가입	20100609
832	국민신용정보(주)에 대한 업무 일부정지(2월) 조치	20100609
833	진동수 금융위원장, 제4차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및 미국 금융당국과의 협력강화 회의 참석	20100614
834	[보도참고]거시 건전성(MacroPrudential Measures) 제고를 위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20100614
835	제19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20100614

836	“글로벌 금융위기와 마이크로파이낸스 : 도전과 국제협력” 국제 컨퍼런스 개최	20100615
837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00616
838	진동수 금융위원장, 미국 FRB 버냉키 의장, SEC 샤프로 의장 면담 및 FRB, OCC, FDIC, OTS와 MOU 체결	20100617
839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 개시	20100618
840	제20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20100618
841	제291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20100622
842	한국 증시 MSCI 선진국 시장 편입 발표 관련	20100622
843	[보도참고]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00623
844	경북경산제일신협과 청도군신협의 합병 등 인가	20100623
845	미니금선물시장 개설을 위한 거래소 규정개정안 승인	20100623
846	금융투자업 인가조건 취소	20100623
847	금융투자업 인가 및 대주주변경 등 승인 의결	20100623
848	공인인증서 사용규제 개선을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20100623
849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안 승인	20100624
850	2010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20100624
851	『시장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금융위금감원예보 합동 워크숍 개최	20100624
852	[보도참고]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20100625
853	[보도참고]2010년도 대기업 신용위험평가의 영향 및 대응방안	20100625
854	「시장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금융위금감원예보 합동 워크숍 개최	20100625

855	저축은행 PF대출 문제에 대한 대책 및 감독강화 방안	20100625
856	「(가칭)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기본방향」 토론회 개최	20100629
857	미소희망봉사단 창단	20100629
858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의결	20100629
859	2010년 제2차 금융발전심의회 보험분과 개최	20100630
860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00630
861	[보도참고] 금융정보분석원, 룩셈부르크등 2개국 FIU와 양해각서 체결	20100630
862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00630
863	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한 「펀드 공시제도 개선」 추진	20100701
864	금융위원장, 미소금융 현장점검(전주지점 개소식) 기업, 은행계 미소재단, 다양한 미소금융 지원 시작	20100702
865	2010년 제2차 금융발전심의회 은행분과회의 개최	20100702
866	저축은행에 유동성비율 제도 도입	20100707
867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20100708
868	2010년 제3차 금융발전심의회 자본시장분과회의 개최	20100709
869	2010년 5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100709
870	[보도참고] 『시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금융위 전직원 워크숍 개최	20100709
871	‘미래와 금융: 일자리 창출 및 고령화 대책’세미나	20100714
872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00714
873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00714
874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00714

875	중소기업 및 서민 금융지원 현장 점검 실시	20100715
876	'10년 제2차 금융발전심의회 정책분과위 개최결과	20100715
877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 마련 일정	20100716
878	금융위 부위원장, 회계법인 조찬간담회 개최	20100720
879	7.26일부터 서민전용 대출상품 “햇살론”본격출시	20100720
880	은행업감독규정,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20100721
881	금융투자업 인가 의결	20100721
882	금융투자업 인가	20100721
883	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20100721
884	[금융위](주)탑라인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및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대주주 변경 승인 등	20100721
885	한도거래 대부계약에 대한 최고이자율 적용 관련	20100721
886	[금융위]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등 개정안 등	20100721
887	금융감독원 저축은행부문 인력 충원을 위한 특별예비비 사용 승인 등	20100721
888	[보도참고]상장 중소기업들에 대해 예정대로 2011년부터 IFRS를 시행	20100722
889	금융위원장 미소금융 간담회 참석	20100723
890	금융위원장, 서민전용 대출 ‘햇살론’출시 기념식 참석	20100726
891	장기 국채선물시장 활성화 방안	20100726
892	투자자 정보제공 확대를 위한 애널리스트 및 리포트 공시제도 도입 추진	20100727
893	콜시장 건전화 및 단기지표채권 육성 등을 통한 단기금융시장 개선방안 추진	20100727



894	은행부행장 조찬간담회 개최 및 은행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00728
895	[보도참고] ‘햇살론’ 취급현황	20100728
896	[보도참고] 위험회피(헷지) 회계 관련 IFRS 개정 동향 및 한국의 대응 노력	20100729
897	[보도참고] ‘햇살론’ 취급현황	20100729
898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착수	20100730
899	[보도참고] ‘햇살론’ 취급현황	20100730
900	[보도참고] 중소기업 현장애로 실태조사 결과 발표(하도급, 인력, 자금이 주요 애로요인인 것으로 조사)	20100730
901	2010년 6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100730
902	[보도참고] ‘햇살론’ 취급현황	20100802
903	금융위원장, 서민전용 대출 ‘햇살론’ 현장점검	20100803
904	[보도참고] 미소금융 관련 현황 설명자료	20100805
905	[보도참고] ‘햇살론’ 취급기관 및 지역별 취급실적	20100805
906	금융위원장, 대전지역 ‘햇살론’ 판매현장 점검	20100805
907	[보도참고] ‘저신용·고소득자의 햇살론 대출가능’ 지적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20100806
908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20100806
909	케이디비생명보험(주)에 대한 자본감소인가	20100809
910	투자일임계약(랩 어카운트)의 최근 동향 및 대응방향	20100810
911	[보도참고] ‘햇살론’ 취급현황	20100810

912	제23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20100813
913	「서민금융지원 점검단」 회의 개최	20100818
914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의결	20100818
915	웅진금융제이유한회사의 서울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20100818
916	「화재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20100818
917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중소기업단체장 조찬간담회 개최	20100819
918	미소금융중앙재단 일수업자 사라진 대전 도마큰시장에 추가 1억원 지원	20100825
919	[증선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00825
920	이란관련 피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	20100826
921	2009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	20100827
922	진동수 금융위원장, FSB 의장 및 주요 회원국과 G20 서울정상회의 금융규제개혁 분야 의견 조율 및 협의를 위해 출국	20100827
923	금융위원회 국·영문 홈페이지 웹접근성 품질마크 획득	20100827
924	8.29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20100830
925	「2010년도 공적자금관리백서」 발간	20100830
926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FATF 평가단 방한(訪韓)	20100830
927	예금자보호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00901
928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공시위반 과징금 제도 개선)	20100901

929	[금융위] 금융투자업 인가	20100901
930	[금융위] 금융투자업 인가 및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등 의결	20100901
931	[금융위] 금산법 제24조 규제 운용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의결	20100901
932	[금융위] 아이비케이연금보험(주)의 보험업 허가	20100901
933	제45회 공인회계사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100902
934	FSB 신흥국 국제컨퍼런스 연설	20100903
935	2010년 7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100903
936	[보도참고]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카드수수료를 인하 관련	20100903
937	10년 제2차 금융선진화 합동회의 개최결과	20100903

## □ 보도해명자료

번호	제 목	작성일
1	이데일리,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김종창씨 추천』	20080324
2	한국경제 『대우조선해양 매각 기대감에 5일째 상승』 (08.3.25)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20080325
3	서울경제 『기업어음 전자증권제 도입』 (08.3.26) 제하의 기사 관련	20080326
4	한국경제 「한국판 골드만 삭스 물거품 우려」 제하의 기사 관련	20080331
5	문화일보 「금융사 분담금 축소.....퇴직자 민간취업 제한은 완화」 제하의 기사 관련	20080401
6	매일경제 「저축은행에 신탁·외환 업무 허용」 제하의 기사 관련	20080407
7	“금융 공기업 기관장 일괄사표 제출” 보도 관련	20080417
8	연합뉴스 「금융기관장 이번주 회비 갈린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080422

9	중앙일보 제E1면 「공기업 매각 주간사, 국내 IB(투자은행)에 우선권」 제하 기사 관련	20080422
10	동아일보 「2012년부터 은행거래 자금 실소유자 확인」 제하 기사(08.4.25 B 2면) 관련	20080425
11	금융위원장의 산업은행 민영화관련 발언에 대한 보도해명	20080502
12	동아일보 퇴직연금 괴담 제하 기사(08.5.7 B 2면) 관련	20080507
13	아시아경제, “금융위-금감원 ‘氣 싸움’”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20080507
14	「펀드 보수·수수료 체계 합리화」 관련 보도 참고 자료	20080507
15	연합인포맥스 「전광우 금융위원장, “다음달 금리인하 얘기 있어”」 제하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20080509
16	매일경제 제a11면 「産銀지주, 3년내 우체국금융 인수 검토」 제하 기사 관련	20080513
17	매일경제 제a05면 「금융위·법무부 ‘포이즌필’ 도입 합의」 제하 기사 관련	20080516
18	서울경제 A3면 「국책은행 민영화, 한미 FTA 복병되나」 제하 기사 관련	20080519
19	이데일리 「밥그릇싸움에 산업만 엉든다」 제목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20080520
20	이데일리 「제2의 송례문 되지 않으려면」 제목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20080521
21	이데일리 「10년째 내부파벌싸움」 제목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20080521
22	국민일보, 『금융지주 자회사 고객정보 멋대로 활용』('08.5.23.)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20080523
23	파이낸셜타임즈 아시아판 「HSBC는 외환은행(KEB) 문제 해결을 주목」 제하 인터넷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20080526
24	해럴드경제, 금융‘낙하산인사’부활 파문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20080528

25	헤럴드경제 제1면 및 제6면 「우리·기업銀 2012년까지 매각」 제하 기사 등 관련	20080604
26	이데일리 「NDF 규제확대..“환율하락 심리 저지 역할”」 제하 인터넷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20080604
27	연합뉴스 「내년 6월까지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 완화」 제하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20080612
28	서울신문 「인터넷 뱅크 설립땐 실명제 폐기?」 제하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20080624
29	서울경제 「은행‘방카’판매인력 제한 없앤다」 제하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20080627
30	연합뉴스 「기업 은행소유 2011년 허용 검토」 제하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20080721
31	한국경제 제a25면 「외환銀, 산업은행 품으로?」 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	20080723
32	조선일보(08.7.24일자 a01면) 「HSBC, 외환은행 인수할 듯」 제하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20080724
33	서울경제(7.28일자 인터넷판) 「예대율 한도설정 검토」 제하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20080728
34	“기업은행 2011년 이후 민영화”, “기업은행 민영화 지연”취지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20080729
35	연합뉴스(2008.7.30, 06:01) 「건보 가입자 질병정보 유사시 민영보험과 공유 추진」	20080730
36	금융위의 건보공단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권 관련 시민단체 등의 제기사안에 대한 입장	20080730
37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도 통폐합 제하 기사 관련	20080813
38	“신·기보 1~2년 뒤 통합 추진”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20080819
39	“금융위 국제·국내 금융 기능 통합을”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20080825
40	아시아경제(08.8.26 인터넷판) “금융위, HSBC 외환銀 인수 추석前 승인 보도해명자료	20080826
41	2009.9.1(월) The Times 「South Korea heads for black September as problems pile up for the ailing won」 제하 기사	20080902

	관련	
42	연합뉴스(08.9.4 인터넷판), 문화일보(08.9.4) “금융시장 혼란속 금융위 어디있나”	20080904
43	서울경제(08.9.9 인터넷판),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방안 백지화 가능성 높아」 제하의 기사 관련 해명	20080909
44	한국경제 제 a38면 「불확실성 키우는 정부」 제하 기사 관련	20080909
45	연합뉴스 「‘펀드런’나면 한은 통한 유동성 지원 추진」 제하 기사 관련	20080916
46	KBS 「공매도 무방비」 제하 기사 관련	20080923
47	머니투데이(08.9.26 1면), 「금산분리 단번에 대폭 완화」 제하의 기사 관련	20080926
48	국제신문(08.9.29 1~3면), 「‘금융중심지’부산탈락 說」 등 제하의 기사 관련	20080929
49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한국의 은행들 과거 실수 망각」 기사에 대한 해명	20081009
50	한국경제(08.10.13 A1면), 「건설업계 자금 숨통 트인다... 정부, 만기어음 상환연장」 제하의 기사 관련	20081013
51	국내 일반은행의 예대율 현황	20081013
52	Financial Times, "Sinking feeling" 기사 (08.10.14일자) 관련	20081014
53	한국경제 A04면 등 「펀드런땐 韓銀이 유동성 지원」 제하 기사 관련	20081023
54	매일경제 A01면 등 「모든기업환손실 회계처리 안한다」 제하 기사에 대한 해명	20081027
55	이데일리(인터넷판), 「건설경기 부양에 올인... DTI·LTV 더 푼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081028
56	매일경제 A01면 「기업보유주식·채권 시가평가 유예」 제하 기사에 대한 해명	20081103
57	매일경제 제a03면 「산은 민영화 무기한 보류」 제하 기사 관련	20081104
58	경향신문 제21면 「‘뒷북대응’ 금융위」, 세계일보 제18면 「...뒷북행정 빈축」 제하 기사 관련	20081106

59	매일경제 제1면 「산은·연기금, 은행에 자본투입」 제하 기사 관련	20081113
60	동아일보 B1면 「16개 시중銀 지급보증 140억달러 신청하기로」 제하 기사 관련	20081117
61	11. 18일자 동아일보 보도에 대한 해명	20081118
62	「서울신문‘사채7조’서민빚 눈덩이」 제하 기사 관련	20081118
63	문화일보 1면 「한은, 채권시장안정펀드에 긴급자금 투입」 제하 기사 관련	20081119
64	2008. 11. 20 연합뉴스 등 「전광우 금융위원장 은행권 구조조정 시사」 제하 기사 관련	20081120
65	매일경제신문의 「PF대출 부실 굶아터지기전 저축은행 구조조정 신속히」 기사에 대한 해명	20081121
66	한겨레 제1면 「정부, 은행에 공적자금 투입 검토」 제하 기사 관련	20081126
67	매일경제 제1면(가판) 「정부, 은행부실채 산다」 제하 기사 관련	20081127
68	연합뉴스 「구조조정위 부활검토」 제하 기사 관련	20081201
69	「연합뉴스‘저축은행에 공적자금 1조원 투입’」 제하 기사 관련	20081203
70	조선일보 「대주단 가입 신청 29개사 모두 승인 추진」 제하 기사 관련 해명	20081205
71	「문화일보‘정부, 건설업 신용보증 확대 올 3000억원→ 내년 2조원’」 제하 기사 관련	20081208
72	연합뉴스 「이창용“내년 성장률 2% 밑돌수 있다”」 제하 기사 관련	20081208
73	매일경제 「통합민간구조조정기구 곧 설립」 제하 기사 관련	20081208
74	조선일보, 「은행BIS비율 12% 채워라, 정부, 미달 땀 강제 구조조정」 기사에 대한 해명	20081211
75	서울경제 「미분양 해소 대책 어떻게 나올까?」 제하 기사 관련	20081216

76	연합인포맥스 「금융위, BIS 8% 이상 은행에도 공적자금투입.. 법개정 검토」 기사 관련	20081216
77	연합뉴스 「건설·조선 구조조정시 경영진 평판 고려」 제하 기사 및 이데일리 「조선·건설사 구조조정 기준 확정」 제하 기사 관련	20081231
78	내일신문 제1면 「모든 은행에 공적자금 투입」 제하 기사 관련	20090106
79	문화일보 제14면 「기업‘자사株’담보펀드 나온다」 제하 기사 관련	20090107
80	서울경제, 「부실 저축은행 내달중 속아낸다」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109
81	이데일리, 「금감원장‘BIS10%’발언....금융위와 주도권선점용?」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112
82	이데일리 「전광우“동부·두산 등 중견그룹 모니터링”」 제하 기사 관련	20090113
83	한국경제 「금감원 건설·조선사 옥석가리기 직접 나설것」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115
84	연합뉴스 「은행들 건설·조선사 퇴출 없다」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116
85	머니투데이 「건설·조선사 구조조정 미진 때 은행문책」 및 연합뉴스 「금감원, A.B등급 부도나면 은행문책 」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119
86	매일경제 「은행 BIS비율 내달 완화한다」 가판 기사 관련	20090130
87	한국경제 「자통법에 발목잡힌 국민연금」 기사 관련	20090205
88	한국일보, 「부실장후 대기업 자구안 내라」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206
89	연합뉴스, 「정부, 구조조정 속도 낸다」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209
90	한국경제 「기업대출보증 모두 만기연장」 및 「파격적 보증으로 중소 자금난 해소...수출보험도 무제한 지원」 (09.2.12)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211
91	서울경제 「올해 만기 중기대출 2금융권도 전액 연장」 관련 보도 해명자료	20090216
92	연합뉴스 「BIS비율 8% 이상 은행도 공적자금 투입」 제하 보도 관련 해명자료	20090219



93	The Economist 「Domino theory」 (09.2.26일자)기사 관련	20090227
94	국내은행 외화차입금 현황(보도참고자료)	20090227
95	파이낸셜뉴스 「정부, 해운사 배 100척 매입」 제하 보도 관련 해명자료	20090303
96	연합뉴스 「금감원 “정상기업도 신용위험 재평가”」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309
97	이데일리 「정부, 회사채 신속인수제 부활 검토」 제하 보도 관련 해명자료	20090320
98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등 「주식 공매도 재허용 검토」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20090324
99	이데일리 「상장중소 2011년 국제회계기준 적용 연기 검토」 제하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20090326
100	서울경제, 「금융당국, “저축은행 합쳐라”」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417
101	파이낸셜뉴스, 「증권사‘허술한 입단속’어쩌나」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511
102	매일경제 「주식 공매도 곧 재개」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20090513
103	공매도 냉각기간제도 시행여부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20090524
104	한국경제 「車운행 많으면 보험료 더 낸다」 기사 관련	20090527
105	“정부 유동성공급 지속 곤란”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20090527
106	“보험사기 합동조사팀”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20090604
107	주택담보대출 LTV · DTI 규제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20090618
108	OCI(주) 조사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	20090715
109	위원장 기자간담회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20090720
110	연합뉴스 「금융당국 주택대출 확대 은행에 불이익」 제하의 기사 관련	20090811
111	머니투데이 「우리금융, 조기 민영화 금융위에 요청」 제하의 기사 관련	20090813
112	CBS 노컷뉴스 「정부, 금융공기업도 임금 5% 반납」 제하의 기사	20090903

	관련	
113	아시아투데이 「정부, 신용평가사 자회사 보유 금지 추진」 제하의 기사 관련	20090911
114	헤럴드경제 「‘미소금융’ 불참…외국계銀 해도 너무하네」 관련 보도 해명	20090925
115	동아일보 「경영권 무관한 우리금융지주 지분 23% 정부, 전량매각 미리 의결키로」 제하의 기사 관련 해명	20091005
116	10.21 연합인포맥스 「증권·자산운용사 콜시장 참여제한」, 「콜시장 제한·통안증권 국채전환 등 단기자금시장 대개편」 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	20091021
117	연합뉴스 「우리금융지분 7%, 11월내 매각」 제하의 기사 관련	20091027
118	매일경제 「은행 美국채 보유 의무화 내년 7월 시행」 제하의 기사 관련	20091109
119	동아일보의 은행장 후보, 금융당국이 사전심사 보도 관련	20091119
120	연합뉴스 “돈세탁 의심거래 무조건 신고추진”관련	20091127
121	매일경제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의무화 (금융위 금융산업 중장기 비전)”관련	20091202
122	매일경제 “부실보험 판매대리점이 배상…” (금융위 금융산업 중장기 비전)”관련	20091203
123	연합뉴스의 빅4 회계법인에 외부감사 몰아주기 보도 관련	20091203
124	헤럴드경제 “금융회장 선출에 주주대표 참여”관련	20091204
125	한국경제신문, 대우건설 産銀에 넘겨라 기사에 대한 해명	20091228
126	연합뉴스, 서울신문의 「기업인수목적회사제도 허점투성이」 기사에 대한 해명	20091228
127	매일경제 「우리금융 민영화 일정 내주 발표」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103
128	서울경제 등 「우리금융 등 은행간 M&A 빨라진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104
129	연합뉴스 「KB회장, 사외이사제 개선후 뽑아야」 제하기사 관련	20100110
130	서울경제 「새 보험료 산출방식 의무도입 "유예"」 제하 기사 관련	20100113

131	서울경제 “은행서도 ‘웹어카운트’판매한다	20100119
132	세계일보 「소자금 상환 부진 '헬세만 줄줄'」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119
133	서울경제 「2금융권 미소금융 출자'난색'」 제하기사 관련	20100120
134	서울경제 인터넷판 「예금보장제 10여년만에 대수술」 제하 기사 관련	20100126
135	한국경제 「우리금융, 합병통해 민영화한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208
136	한국경제 「우리금융 합병 쉽게'예보 MOU'준다」 등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209
137	서울경제 「예보, 금융위로부터 독립해야」 제하기사 관련	20100216
138	이데일리, 「금융당국, 증권사 신규인가 전면 재검토」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222
139	헤럴드경제 「우리지주 자사주 차입매입 허용」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223
140	연합뉴스 「금융사별 예금보호한도 차등화 검토」 제하기사 관련 보도해명	20100226
141	연합인포맥스 「금융당국, 외은지점 달러차입제한 강력규제 본격 검토」, 매경 「국민연금과 통화스왑 늘려 제2 외환보유액 확보한다」 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	20100226
142	서울경제 「금융안정을 위한 상시협의체 신설 검토」 및 「금융권 총당금체계 확 바뀐다」 제하기사 관련	20100301
143	경향신문 등의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사전 적격성 심사제도에 관한 기사 관련	20100303
144	서울경제 「저축銀도 유동성비율 100%이상 맞춰야」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305
145	한국경제 「모든 스마트폰서 인터넷뱅킹 된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307
146	연합뉴스 「저축銀 감독강화.. 자산운용 규제도 검토」 및 「대형 저축은행 매년 종합검사 받는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314
147	매일경제 「개인신용정보 종합DB 만든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328

148	연합뉴스 「저신용자 신용대출 받기 쉬워진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401
149	경향신문, 「車요일제보험 할인 준비부족에 또 연기」 보도 관련	20100401
150	헤럴드경제 「정부, 서민금융위해 저축은행에도 이익출연 강요」 및 이데일리 「금융위 서민금융TF, 개인프리워크아웃制 연장」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406
151	헤럴드경제 「미소금융 금리 두자리수로 올려 모럴해저드 막는다」 및 「모럴해저드 차단불구 지나친 고금리 도마에」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407
152	이투데이 「금융위“직접 징계의 칼을 들겠다”」 및 「금융위금감원 제재권 놓고 ‘신경전’」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408
153	연합뉴스 「서민금융사 보증부 대출금리 11%대」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411
154	뉴스핍, 「은행 사외이사제 석달만에 또 재수술」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412
155	연합뉴스 등의 지방미분양 문제 완화방안검토에 관한 기사 관련	20100414
156	헤럴드경제 「은행권 외화차입 규제검토」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419
157	이데일리 「금감원 제재권한 축소 법안 기습제출」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420
158	문화일보의 「감사의견 거절 급증…해당 상장폐지기업 감리 강화」 보도 관련	20100420
159	헤럴드경제 「보이스피싱 관련법 급조 … 피해자들 두 번 운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430
160	한국경제신문의 「세계단일 회계기준 2013년 새로 도입한다」 보도 관련	20100514
161	[보도해명]서울경제 「변호사·회계사도‘자금세탁 보고’의무화, 이르면 내년부터」 제하 기사 (10.5.17 A01면, A06면) 관련	20100517
162	동아일보 「대부업체“고객정보 못줘”… 10조원 규모 서민대출 무산 ?」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522
163	서울신문 「은행세 내년 도입 확정」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601

164	한국경제 「보험사에서 증권계좌 만들면 불법?」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608
165	헤럴드 경제 「KB·우리지주 합병돼도 독과점 문제없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616
166	이데일리 「은행세 요율, 금융 재정거래 억제수준 부과 검토」 제하의 보도 관련	20100617
167	헤럴드경제('10.6.20) 「대부업체 고객정보 공개 반대 여전」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620
168	서울경제('10.6.23) 「금융위 '금융상품 백화점' 도입재추진」 제하 기사 관련	20100622
169	연합인포맥스 「정부, 은행세 걷어 '환율안정펀드' 조성」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623
170	파이낸셜뉴스('10.6.30) 「금융위금감원 또 제재권 신경전」 제하 기사 관련	20100629
171	한국경제('10.6.30) 「금융위금감원 또 충돌조짐」 제하 기사 등 관련	20100629
172	한겨레신문 「은행세 20조원 부과 검토」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609
173	한국경제('10.7.2) 「금감원 '펀드 시세조종 조사」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702
174	헤럴드경제('10.7.9) 「보험연구원 분리 논란 심화...보개원'부글 부글」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709
175	내일신문 「금융위'행복잡이 프로젝트' 혼선」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715
176	연합인포맥스, 「DTI, 서울 60%, 인천·경기 70%로 완화 검토」 제하 기사 관련	20100719
177	연합뉴스('10.7.29) 「햇살론 연체이자율 제각각 '혼선」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20100729
178	SBS 8시 뉴스('10.7.31) 「가뭄의 단비 '햇살론'...재원마련 문제 없나?」 관련 기사에 대한 해명	20100731
179	국민일보('10.8.4) 「서민들 되레 사채시장 내몰린다」 관련 기사에 대한 설명	20100804
180	연합뉴스('10.8.8), '연소득 5천만원 넘으면 햇살론 제한검토' 제하의 기사관련 보도해명	20100808

181	이데일리('10.8.9 11:19), 「예금보험대상 변액포함...CMA·ELS 제외」 제하 기사 관련	20100809
182	헤럴드경제(10.8.10), 「금융소비자 보호업무 대폭 강화」 제하의 보도 관련	20100810
183	서울경제('10.8.11), 「입장 누그러진 금융위 ... DTI 완화 저울질」 제하 기사 관련	20100811
184	서울경제('10.8.12 가판), 「시장조성제도 부활한다」 제하 기사 관련	20100811
185	서울신문 「이럴 바엔 만들지나 말지... 허울뿐인 中企정책 2제」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818
186	동아일보 「최저 신용등급자에도 서민금융 지원」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820
187	한국경제('10.8.20 18:32 입력),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부동산 활성화案 월말께 나올 것”」 제하 기사 관련	20100820
188	이데일리('10.8.22), MBC('10.8.21), 조선일보('10.8.21) 등의 DTI 규제완화 기사·보도 관련	20100822
189	서울경제('10.8.22 17:40 입력), 「현집 사는 1주택자도 DTI 규제완화하기로, 고가주택·강남권 등 제외...부동산대책 이달내 발표」 제하 기사 등 관련	20100822
190	연합뉴스('10.8.25 15:40 입력), 「경제장관 긴급회동...DTI 부분완화 가닥」 제하 기사 관련	20100825
191	서울경제신문(8.27자 가판) 「캠코 ‘저금리로 전환대출’ 대상 늘리기로」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827
192	연합뉴스('10.8.27 16:02 입력), 「DTI 풀 때 실수요자 연소득기준도 완화 검토	20100827
193	연합뉴스('10.9.5 07:01입력) 「햇살론 조기소진 우려.. 보증재원 확충검토」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905

### 3. 금융기관별 휴면예금, 휴면보험료 현황

□ 금융기관별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출연 현황

(단위: 천원)

금융기관별	'08년	'09년	'10년	소계
은행	176,643,231	89,405,426	65,744,166	331,792,823
저축은행	1,850,738	324,681	204,401	2,379,820
생명보험	70,527,227	24,683,293	31,344,378	126,554,898
손해보험	21,391,134	9,601,887	8,735,927	39,728,948
합계	270,412,330	124,015,288	106,028,872	500,456,489

#### 4.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지원제도 현황

- 신용회복지원 실적, 소액금융지원 현황
- 상담건수, 신청건수, 대출건수, 대출금액

####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 지원실적

(단위 : 건, 억원)

	상담 및 접수		채무조정	
	상 담	접 수	건 수	금 액
'02-'03년	248,028	63,055	35,542	15,540
04년	765,756	287,352	268,451	82,457
'05년	646,448	193,698	208,231	43,313
'06년	305,037	85,826	86,890	14,216
'07년	251,948	63,706	61,597	8,495
'08년	446,573	79,144	73,264	9,087
'09년	588,335	101,714	93,402	14,702
'10년(8월말)	255,193	55,659	52,226	7,927
누 계	3,507,318	930,154	879,603	195,737

※프리워크아웃 실적 포함



## □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지원제도 실적

(‘10.8월말 기준, 단위:천명, 억원)

구 분			08.12.19~ 09.12.31	2010년 (1.1~8.31)	합 계
채 무 조 정	공사자체 (‘98.4)	인원	252	9	261
		금액	23,503	2,360	25,863
	희망모아 (‘05.5)	인원	380	17	397
		금액	32,918	2,595	35,513
	신용회복 기 금 (‘08.12.19)	인원	76	38	114
		금액	3,277	2,120	5,397
합 계		인원	708	64	772
		금액	59,698	7,075	66,773

## ※ 신용회복기금 채무조정 상담 및 신청 실적

(단위 :명)

구 분	2009년 말까지			2010년(1.1~8.31)		
	상 담	신 청	완 료	상 담	신 청	완 료
채무조정	348,077	93,505	76,040	137,569	45,722	38,102

## □ 소액금융지원 현황

(‘10.8월말 기준, 단위:명, 억원)

기관	종류	상담건수	대출건수	대출금액
신용회복 위원회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시설 개선자금, 운영자금, 고금리차환금	53,503	29,722	902
한국자산 관리공사	한마음소액대출, 기금소액대출(‘10.6)	33,053	8,736	217
계		86,556	38,458	1,119

## 5. 금융위가 파악하고 있는 사채업의 실태와 사채시장의 규모

- ☐ 사채업의 실태조사에 대한 별도 자료는 없습니다.
- ☐ '08.4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실시한 '사금융 실태조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 사금융 실태조사 결과

### < 목 차 >

I. 조사개요 .....	1
II.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결과 .....	2
1. 전체 사금융 시장 규모 .....	2
2. 사금융 이용자의 연체 및 제도권 대출 이용 현황 ...	3
3. 사금융 시장의 특성 .....	4
4. 사금융 이용자의 특성 .....	5
III. 정책 시사점 .....	8

## I. 조사 개요

### 1. 목 적

- 금융소외자의 사금융 이용 현황 및 상환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사금융 실태조사를 실시
  - 사금융시장에서의 공급자(등록 대부업체)와 수요자(대부 이용자) 측면에서 각각 조사
  - ➡ 지원 가능한 대상의 범위, 지원한도 등을 정하고, 지원 대상자 수, 필요 예산 등을 산정하기 위함

### 2. 경 과

#### ① 등록 대부업자 실태조사 ('08.4월 : 1개월)

- 전체 등록업자 대상 : 전국 약 18,000개 등록 대부업자를 서면으로 조사
  - \* 자료분석이 가능한 7,058개 대부업체의 자료를 기초로 분석
- 일부 현장조사 : 247개\* 등록 대부업자를 방문하여 업무 담당자 및 임원 면접
  - \* 대형업체 67개, 중소법인 80개, 개인업체 100개

#### ② 사금융 이용자 실태조사 ('08.4월 : 1개월)

- 전국민 조사 : 1만명 전화조사 (한국갤럽, 미디어리서치)
- 사금융 이용자 조사 :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3,0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
- 기존 데이터 활용 : 한신평정, 한신평 CB에 등록된 약 3,500만명의 대출정보 분석

## II.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결과

### 1. 전체 사금융 시장 규모

① (사금융 이용자) 전국민(20세이상 3,500만명)의 5.4%인 189만명이 현재 사금융을 이용

- 이중 49.9%는 등록 대부업체, 17.6%는 무등록 대부업체, 32.4%는 지인으로부터 차입

\* 사금융 이용자중 128만명이 대부업체(등록+무등록)를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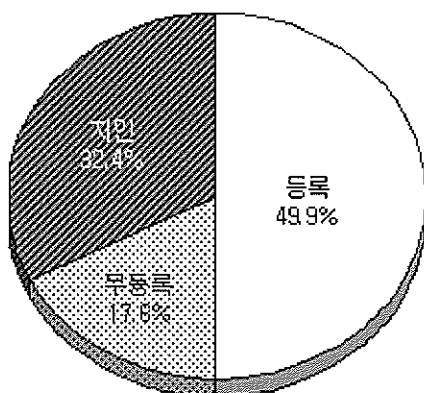
② (사금융 시장규모) 약 16.5조원(189만명×873만원\*)으로 추정

\* 1인당 평균 사금융 이용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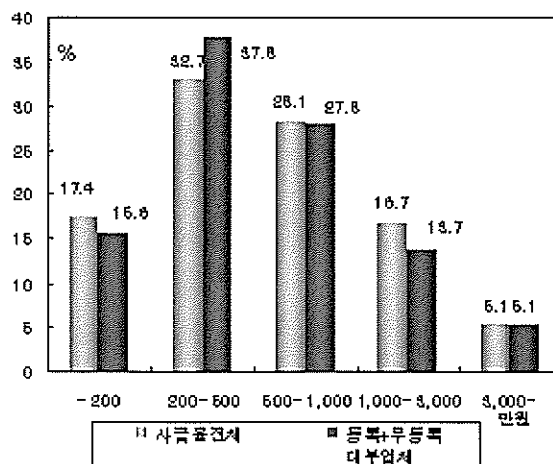
- 이중 지인을 통한 차입을 제외한 등록 및 무등록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규모는 총 10.0조원 (127.6만명×783.4만원\*)

\* 등록 및 무등록 대부업체 이용자의 평균 사금융 이용액

<사금융 이용 형태>



<사금융 대출 금액>



## 2. 사금융 이용자의 연체 및 제도권 대출 이용 현황

### ① (사금융 연체) 사금융 대출자중 연체자의 비율은 약 26.4%

\* CB사에 등록된 대부업체 이용자의 연체율(23%)와 무등록 대부업체 연체율(대부업체 연체율의 1.55배=36%)의 평균

- 연체된 사금융 채무중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가 46.5%로 다수이나, 1년 이상 연체된 채무도 29.4%에 달함

### ② (제도권 대출 이용) 사금융 이용자중 57.4%가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

- 사금융 이용자의 평균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규모는 3천만원

\*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중 신용대출 이용자의 비율은 6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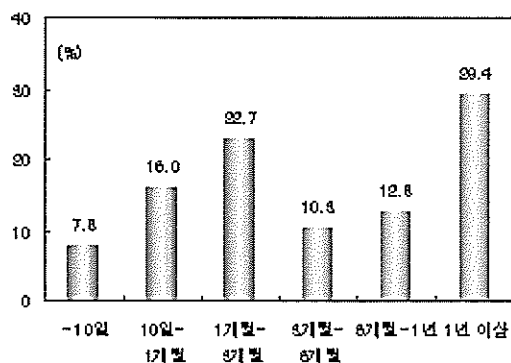
(신용대출의 경우 1천만원 이하 대출자가 53.0%, 3천만원 이하가 84.7%, 5천만원 이하는 91.7%로 평균신용대출 금액은 1,900만원)

-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자중 13.7%가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을 연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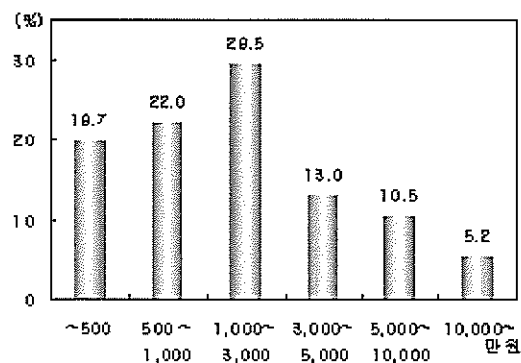
\* 전체 국민의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 연체율(3개월 이상 연체)은 5.2%

- 이중 3개월 이하 연체자는 32.2%이고, 3개월~1년 연체는 29.2%, 1년이상 연체는 37.2%

<사금융 연체일수>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규모>



### 3. 사금융 시장의 특성

#### ① (이자율) 사금융 대출의 이자율 평균은 연 72.2%

○ 연 30% 이하 대출이 17.8%, 연 30~49%가 33.9%, 연 49%이상 대출이 48.1%

\* 등록 대부업체 이자율 평균이 연 68%인 반면, 무등록 대부업체는 이보다 높은 연 78%

\*\* 대부업법상 이자한도 : 49% ('07.10.4일부터 시행)

\*\*\* 사금융 이자율이 법상 이자율보다 크게 높은 것은 사금융 이용자들이 법 개정후 이자가 낮아진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용자는 자신이 부담하는 금리를 높게 인식하기 때문(등록 대부업체 조사결과 신용대출 금리는 약 37~44%로 조사됨)

#### ② (이용업체수) 사금융 이용자는 평균적으로 2곳에서 사금융을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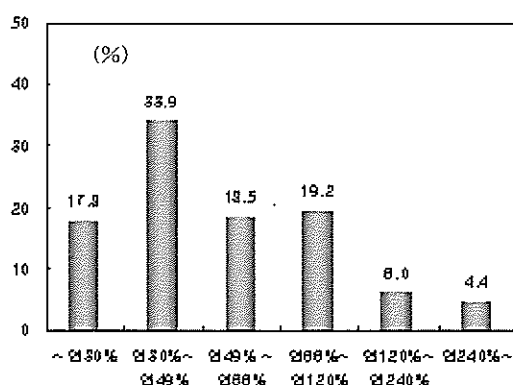
\* 이용업체수 : 1군데(48.5%), 2군데(19.4%), 3군데(17.2%), 4군데(6.6%), 5군데 이상(5.1%)

#### ③ (대출형태) 사금융 시장의 76.0%는 개인 신용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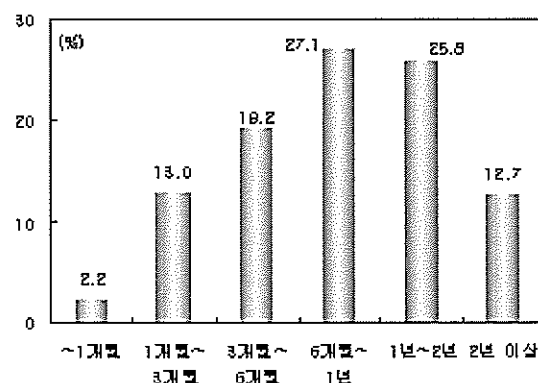
\* 개인 담보대출은 15.4%, 타인신용보증 대출은 8.6%

#### ④ (상환기간) 일반적인 사금융 상환기간은 3개월~1년(46.3%)이지만, 12.7%는 상환기간이 2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함

<사금융 연 이자율>



<사금융 평균 상환기간>





## 4. 사금융 이용자의 특성

① (사금융 이용계기) 주로 가계 생활자금(47.4%)이나 사업(39.6%)을 위해 사금융을 이용

- 가계생활자금 용도로는 생활비 비중이 46.0%로 가장 높고, 교육비(24.5%), 병원비(14.9%) 순임

② (상환의지) 대다수 사금융 이용자들은 상환의지가 비교적 높고, 상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스스로 긍정적으로 평가

- 자력(73.6%) 또는 주변사람들의 도움(10.4%)으로 상환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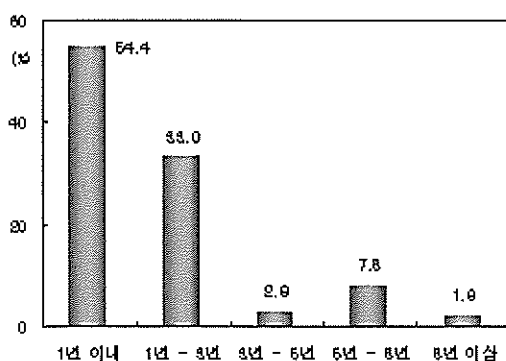
\* 기타답변 :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음(6.2%), 추가대출로 상환(3.2%), 새로운 신용회복 대책 기다림(3.2%), 개인회생이나 파산 활용(1.8%), 현행 신용회복 기구 이용(1.5%)

- 사금융 연체자의 경우에는 36.5%만이 상환할 수 있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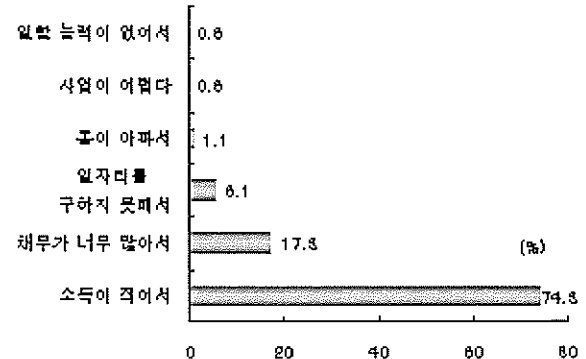
- 이들중 1년 이내에 상환 할 수 있다고 한 이용자는 54.4%

- 상환할 수 없는 이유로는 대체로 소득은 있지만 소득규모가 작거나 소득대비 채무가 많기 때문으로 나타남

<사금융 연체 대출금 상환시기>



<연체 대출금 미상환 이유>



③ (상환능력) 사금융 연체자의 경우 대출상환 가능금액은 월평균 5만원, 정상상환자는 약 62만원

\* 연체자 가구 월평균 가구소득은 166만원, 정상 상환자 월평균 가구 소득은 223만원, 월평균 생활비는 161만원

○ 연간 가구소득 대비 총채무액(제도권+등록+무등록)은 100% 미만인 69.8%이고, 100~120%가 5.2%, 120% 이상이 25%

- 사금융 이용자중 6.3%는 무직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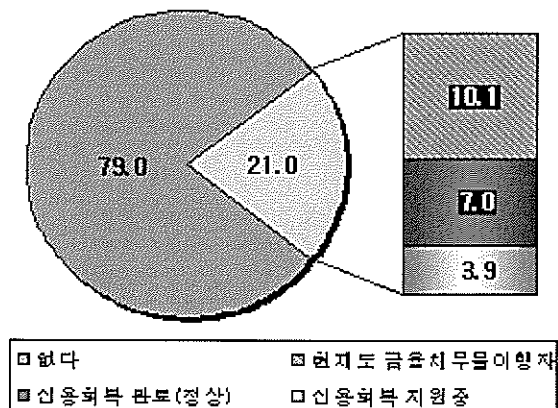
○ 현재, 개인의 월평균 부채 상환액은 73만원으로 나타남

④ (금융채무불이행자) 사금융 이용자중 21%는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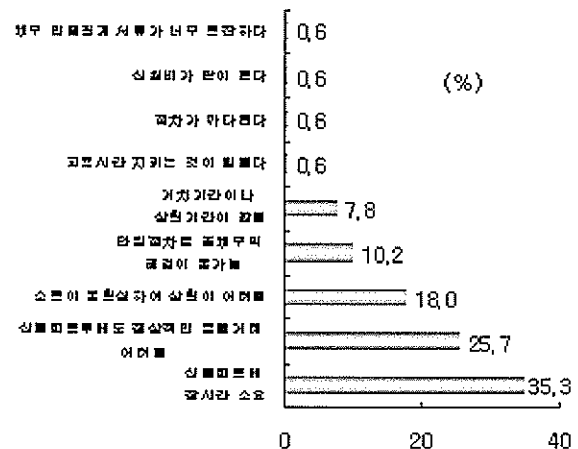
○ 이중 현재도 금융채무불이행인 경우는 48.3%, 신용회복 지원 중은 18.4%, 신용회복을 완료하고 정상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는 33.1%로 나타남

○ 신용회복 지원제도 이용과 관련한 불편 사항으로 '신용회복에 장시간 소요'(35.3%), '신용회복 이후에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움(25.7%)' 등을 지적

<금융채무불이행자 현황>



<신용회복 지원제도 불편사항>



⑤ (기초수급자) 제도권 금융기관 또는 사금융을 통한 대출이 있는 자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1.5%인 27만명

\*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06년 현재 약 153만명으로 전국민의 3.2% 이지만 소득이 낮아 대출이 어려워 대출자중 비중이 낮음

○ 제도권 금융기관 및 사금융 대출을 연체중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10.3만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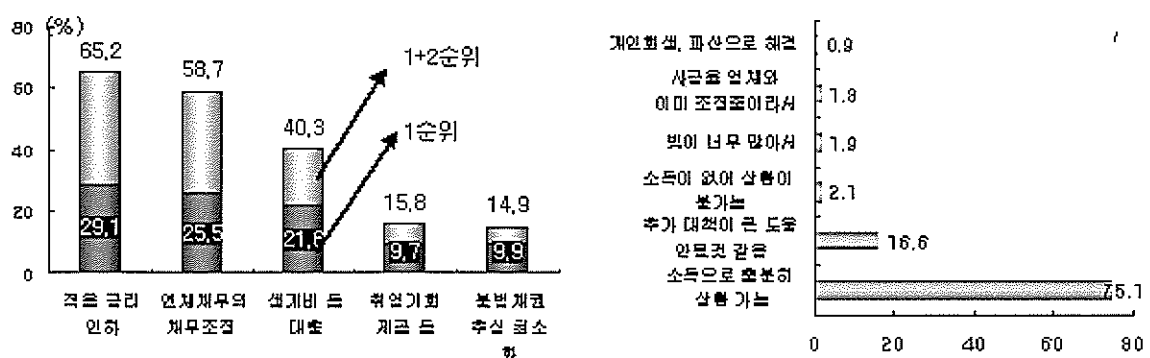
- 제도권 금융기관 및 사금융 대출 연체자(286만명)의 약 3.6%, 대출중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약 38%

⑥ (정부대책) 정부의 추가적인 신용회복 대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61.6%)이 많은 반면, 추가대책 참여 의향은 다소 낮음 (46.2%)

○ 사금융 이용자들이 희망하는 추가 신용회복 대책은 '적용금리 인하', '연체채무의 채무조정(장기분할 상환)', '생계비 대출' 순으로 나타남

○ 추가 신용회복 대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본인의 소득으로 충분히 상환 가능'하기 때문이 대부분 (75.1%)

<희망하는 추가 신용회복 대책> <신용회복 추가대책 비참여 이유>



○ 또한, 정부 자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23.5%가 참여의향을 밝힌 가운데, 창업관련 지원을 주로 희망

\*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 37.3%,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금 대출 32.6%, 중소기업 취업지원 13.3%, 직업훈련 11.9%, 공공근로 4.7%

### Ⅲ. 정책 시사점

#### ① 금융소외자 지원 대상수 추정

전 국 민 4,700 만명	대출 있음 (1,774 만명)	제도권 대출만 있음 (1,646만명)	대부업체 대출 있음(128만명)	
			제도권 대출 있음 (71만명)	제도권 대출 없음 (57만명)
		정상상환 (1,339만명)	정상상환 (49만명)	정상상환 (42만명)
		금융채 무불이행 (240만명)	금융채 무불이행 (20만명) -돌다연체(17만명) -제도권만 연체(3만명)	대부업체 대출 연체 (15만명)
		신용회복중 (67만명)	대부업체 대출만 연체 (2만명)	
	대출없음 (2,926만명)			

➡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및 재정투입 여부  
및 방식 등은 6월중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

## ② 대부업체의 정책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 채무재조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청 대상자의 모든 제도권·사금융 채권을 일괄하여 조정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① 대부업협회와 공동으로 채권매각 등 대부업체가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 노력
  - ② 대부업체로부터 일괄하여 채권을 매입함과 동시에 채무조정 대상자의 다른 사금융 채권도 조정할 수 있도록 개별 매입을 추진하며
  - ③ 불법대부업체의 참여등을 위해 신복위, 대부업 협회 등 민간기구의 채무조정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③ 매입대상 연체채권의 범위

-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 3개월 이상 연체인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로서 금융활동이 제한되므로
  - 금융채무불이행자를 채무조정 대상으로 고려
- (대부업체 대출) 대부업체 연체채권(3개월 이상 연체)중에서 사실상 채권가격이 충분히 낮게 형성되고, 대부업체들도 매각의사를 밝히고 있는 6개월 이상 연체 채권이 정책대상이 될 가능성이 큼
  - \* 대부업체의 경우 6개월 이하의 연체채권은 추심을 통해 어느정도 상환받을 수 있어 매각의사가 없음

#### ④ 사금융 이용자의 상환의지 및 상환능력

- 실태조사 결과 대체로 사금융 이용자들은 상환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
  - 다만, 사금융 연체자의 경우 소득에 비해 채무규모가 커 채무 상황이 어렵다는 답변이 다수
- ➡ 연체 채무자에 대해서는 소득규모에 맞는 상황이 가능하도록 채무를 재조정하여 채무 상환 가능성을 높일 필요

#### ⑤ 사금융 이용자들의 정책 희망사항

- 사금융 이용자들은 적용금리 인하 방안을 가장 선호
  - 현재 사금융시장에서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대출을 제도권 금융기관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조치가 필요
- 또한, 지원제도 시행시 혜택의 폭을 넓히고, 이용을 편리하게 하며,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

#### ⑥ 채무외의 근로 및 창업지원 병행

- 현재 사금융 이용자중 실직자의 비율은 약 6.3%로 실질적인 자활지원과 도덕적 해이 최소화를 위해서는 이들의 상환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지원이 병행될 필요
  - 사금융 이용자들은 자활 지원과 관련하여 근로보다는 창업 지원을 희망
  - 지원제도 참가자중 희망자에 대해서는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창업교육을 완수하고 의지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창업자금을 지원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6. 미소금융 설명자료와 현재 진행상황, 그리고 향후 운영계획

### □ 미소금융 설명자료

- 미소금융사업은 금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소외계층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업전반을 총칭
  - (미소금융지점을 통한 대출) 제도권 금융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Microcredit)
  - (복지사업자 지원을 통한 대출)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복지사업자에게 사업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복지사업자는 수혜자에게 저리로 대출

### □ 미소금융 진행상황

○ 미소금융사업 대출 현황은 7,138명, 426.8억원

- 미소금융지점 : 2,918명, 254.8억원
- 복지사업자 지원 : 4,220명, 172 억원\*

\* '10.1.1~8.31 기준이며, '08·09년도 대출지원 25,919명, 681억원 별도

○ 미소금융지점은 총 68개 지점 설립

- 기업 미소금융재단(6개 기업) : 30개
- 은행 미소금융재단(5개 은행) : 19개
- 미소금융 지역지점재단 : 19개

## □ 향후 운영계획

### ○ 대출업무 제도개선

- 수요자의 Need를 파악하여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 창업자금 지원시기, 창업시 자기자금 비율, 창업 컨설팅, 생활밀착형 업체 발굴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 변경

### ○ 공공기관 내 미소금융 상담창구 마련

- 기초자치단체 민원실 등에 미소금융 상담창구를 마련하여 현지 상담 등 접근성 강화
- 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1인 상담소 및 출장소를 마련하여 접근성 강화·소액대출을 활성화

### ○ 기업·은행 재단의 독자상품 확대

- 새로운 지원 대상의 발굴 및 지원 방법 다양화를 통해 특화된 대출 상품을 적극 개발
- 기업·은행 재단의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 특화 상품을 개발 상품의 다양성을 유도

### ○ 지역지점 대출재원 및 운영재원 차등지급

- 미소금융 상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지점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대출재원 및 운영재원의 차등 지원
- 기 지원된 지원금의 운영 실태 점검(연체율, 자원봉사자 이직율, 회계관리)을 통해 차등 지원 방안 검토 및 시행



## 7. 햇살론에 대한 설명자료와 현재 진행상황, 향후 운영계획

### □ 햇살론 사업현황

- (목적)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저신용·저소득 서민계층의 금융이용기회 확대 및 고금리 부담완화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 지원
  - (대출규모) 금년 7월말부터 향후 5년간 약 10조원 목표
  - (대출대상)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이거나, “신용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근로자, 농림어업인 등
  - (대출금리) 금리상한이내\*에서 서민금융회사 자율결정
- \* ‘10. 9. 기준 상호금융회사 10.54% / 저축은행 13.28%
- (자금용도) 긴급생계자금(최고 1천만원), 사업운영자금(최고 2천만원), 창업자금(최고 5천만원)

※ 붙임 : 햇살론 운영방안

## □ 현재 진행상황

- 7. 26. 출시 이후 9. 15까지 총 89,890명에게 약 8,160억원 대출

## □ 향후 운영계획

- 햇살론 지원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대출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
  - 업권별 자율적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운영함으로써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운영을 강화하고 부실화를 예방
  - 저신용·고소득자 대출제한, 자영업자 업력에 따른 대출한도 조정, 대환대출서비스 도입 등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신속하게 개선

---

서민전용 대출상품

# **‘햇살론’ 운영방안**

---

2010. 7. 20

금 융 위 원 회	중 소 기 업 청
농 협 중 앙 회	수 협 중 앙 회
신 협 중 앙 회	산 림 조 합 중 앙 회
새 마을 금 고 연 합 회	저 축 은 행 중 앙 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목 차



I. 추진배경 .....	1
II. 보증대출 대상 .....	2
1. 기본요건 .....	2
2. 보증제한 .....	4
III. 대출 운용방안 .....	5
1. 보증비율 .....	5
2. 대출금리 .....	5
3. 자금용도별 운영방안 .....	7
IV. 보증재원 조성 .....	9
V. 출연재원 관리 및 보증지원 체계 .....	11
VI. 보증부 서민대출 활성화 조치 .....	12
VII. 기대효과 .....	13
VIII. 향후 계획 .....	15

-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의 자금 수요는 늘어났으나, 서민금융회사\*는 유가증권투자, 부동산 개발 대출에 치중한 결과 서민대출이 감소

\* 농·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 서민들의 사금융 및 대부업 의존도가 높아져 대부업 시장이 급성장하고 결과적으로 서민계층의 금리부담도 동반 증가

\* 특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시중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경우 서민가계의 이자부담도 늘어날 전망

-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 4월 정부는 비상경제대책 회의(4.1), 당정협의(4.7)를 거쳐 「서민금융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보증부 서민대출('햇살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

- '햇살론' 활성화시 서민금융이 확대되어 서민의 금융애로 해소 기대

- 그 동안 서민금융회사가 서민의 낮은 신용도와 취약한 담보력 때문에 서민대출을 꺼려 왔으나 보증공급으로 이를 보완하여 서민대출에 주력할 수 있는 여건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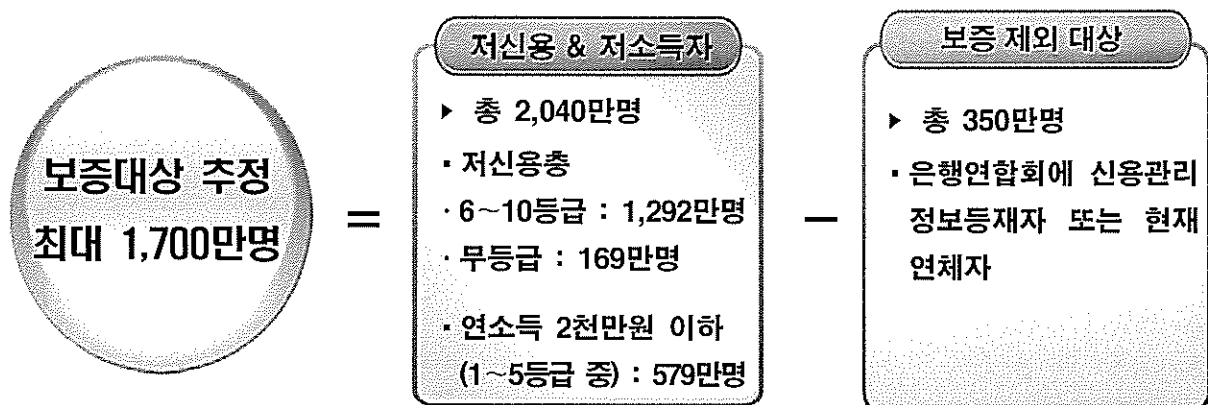
- 서민입장에서는 사금융·제도권 금융회사 보다 금리와 이용도 면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 받을 수 있어 금융 소외 현상 완화

## 1. 기본요건

- 신용6~10등급(무등급 포함) 또는 저소득층인 자영업자  
(법인기업 제외) · 농림어업인 및 근로자(일용 · 임시직 포함)
- 무등록 · 무점포 자영업자는 상인회장 · 인근 고정사업주의  
사업영위확인서를 받아 제출시 사업자로 인정
- \* 농림어업인은 농지원부, 영농 · 영어확인서 등을 통해 종사여부 확인
- 일용직 · 임시직, 근로소득 미신고자는 고용주의 근로(고용)  
확인서, 급여통장 원본 제출시 근로자로 인정

## &lt;보증대상자 例示&gt;

- (자영업자) 행상 · 노점상(무등록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문판매원 · 우유배달원 · 보험설계사 · 학원강사 등
- (농림어업인) 농 · 수협, 산림조합 조합원, 농림어업인 후계자
- (근로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인 정규직, 일용직, 임시직, 파트  
타임직 (근로소득 미신고자도 가능)



\* '10.4 신용평가사 고객(3,950만명) 기준으로 추정 (참고1 보증가능자 추정)

<보증대출 가능자>

신용등급 ↑ 1등급 6등급 10등급 무등급	저소득	보증대출 가능	보증대출 불가능
	2천만원	보증대출 가능	보증대출 가능
	연소득수준 → 고소득		

□ 신용등급 요건

- 대출신청일 현재 3개 신용정보회사\*에서 평가한 개인 신용이 6~10등급(1,292만명)인 사람(소득규모와 상관없이 인정)
  - \*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 서민금융회사가 이용가능한 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 중 고객에게 유리한 등급을 적용
- 신용 무등급자(169만명)도 금융소외자이므로 대출대상에 포함

□ 저소득 요건

- 기초생활 수급자(약158만명) · 차상위 계층(약116만) 및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사람(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인정)
  - 연소득 2천만원으로 기준설정시 총 887만명 중 신용등급이 1~5등급으로 우량한 579만명 추가
  - \*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누적분포 약23%(신용평가사, 참고2)
- 소득기준은 대출 신청자 개인별로 인정
  - 가구당 소득 적용시 가구원 전체 소득을 증명 ·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대출실행이 제약될 소지

- \* 유사사례
  - (희망홀씨 대출) 개인별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복지부, 저소득층 운영자금 용자) 가구당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재산 1억원 이하
- 보유재산 기준은 확인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미적용

## 2. 보증제한

-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218만명)및 공공정보\*\*(189만명)가 등재된 자

\* 연체(3개월 이상 등) · 부도 · 대위변제, 금융질서문란정보

\*\* 조세 · 과태료 · 고용보험료 등 체납, 신용회복지원 정보(회생 · 파산 · 면책)

- ☐ 취급일 현재, 지역신보(중앙회 포함) · 신보 · 기보의 보증 사고 또는 대위변제와 관련이 있는 자

- ☐ 취급일 현재, 신보 · 기보 보증잔액이 있는 자 또는 지역 신보(중앙회 포함) 보증잔액이 보증부 서민대출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자

- ☐ 대출 신청일 현재 연체중인 자(63.7만명)

- ☐ 보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사업소득세를 납부 하는 인적용역제공자 중 유흥접객원 및 댄서, 다단계 판매원

\* 유흥업소 · 무도장, 사치향락업종 등(참고 3)

- ☐ 빈번한 연체경력\*이 있는 근로자

\*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 대출금을 보유한 사실이 있거나,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자

➡ 상품출시 후 6개월~1년 동안 운영경과를 보고 필요시 보증대출 대상 조정



## 1. 보증비율 : 85%

○ 서민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여신심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분보증으로 운영

- 중소기업 보증비율 정상화조치('10.7이후)\* 및 보증기관의 평균 보증비율\*\* 수준을 고려 85% 적용

\* (지역신보) : 일반보증 비율 95 → 85%

(신·기보) : 최고 90 → 85% (신규보증 '10.1월부터 최고 85%)

\*\* (농 신 보) 농·어업인 85%(법인 80%) / (신·기보) 약88%('09년 평균)

## 2. 대출금리

### ① 금리 결정방식

○ 「금리상한」 내에서 서민금융회사가 금리를 자율결정

○ 이용자 선택에 따라 3, 6, 12개월 단위로 조정되는 변동금리 방식(조달원가 + 스프레드)

- (조달원가) 대출 또는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1년 만기 정기예금 신규 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

- (Spread) 대손비용 + 판매관리비 + 마진

\*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스프레드 상한으로 적극적 취급유인 부여

## ② 권역별 취급금리 상한

- (상호금융) 조달원가 + 6.38%(스프레드 상한) ➡ 약 11%  
(저축은행) 조달원가 + 8.99%(스프레드 상한) ➡ 약 13%
- 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상호금융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저축은행의 영업행태, 비용구조 차이를 감안하여 취급금리 상한을 결정
- 금년 7월 기준 취급금리상한은 상호금융업권 약 10.6%, 저축은행은 약 13.1% 수준
  - \* 이용자는 보증잔액에 대해 연 1%의 보증수수료를 부담하므로, 보증 비율 85%를 고려시 대출잔액에 대해 연0.85%의 추가적 부담 존재
  - \*\* 조달금리('10.5월 1년 만기 정기예금) : 상호금융 4.27%, 저축은행 4.15%
-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의 신용대출을 이용하던 서민들이 '햇살론'을 받게 될 경우,
  - 금리수준이 30~40%대에서 10%대로 낮아져 서민의 이자부담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기대됨

※ 신용대출 금리비교('10.7현재)

은행 (희망홀씨)	저축은행 (6~10등급)	대부업 ('09.12월)	보증부 서민대출	
			상호 금융	저축 은행
13.4%(평균) * 7~19%	32.56	41.2%	10.6% (상한)	13.1% (상한)

- 또한 상호금융업권의 신용대출을 이용하던 서민들이 '햇살론'을 이용할 경우 금리는 10~15%(6~10등급)에서 약 10% 수준으로 소폭 떨어지나,
  - 기존에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일부 경우 연대보증을 세워야했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 기대

### 3. 자금용도별 운영방안

#### ① 사업 운영자금

- (대출대상) 영업 중인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 \* 최소 경력요건 배제
- (대출한도) 최고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등급, 사업자 등록 유무, 점포보유(임차포함) 여부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등하여 신용도에 비해 과도한 대출을 방지

\* 지역신보 평균보증액 : ('07) 23백만원 → ('08) 20백만원 → ('09) 17백만원

※ 사업운영자금 대출한도

신용등급	유등록 사업자	무등록 사업자	
		점포보유(임차포함)	점포 미보유(노점 등)
6등급	2,0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7등급	1,700만원	1,200만원	800만원
8등급	1,400만원	900만원	600만원
9등급이하	1,100만원	700만원	400만원

\* 신용 5등급 이상 저소득 사업자는 대상유형별 최고금액 지원

-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1년거치 4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
- (보증수수료) 연 1%(창업·생계자금도 동일 수수료 적용)

\* (지역신보) 일반보증 평균보증료 1.35%, 금융소외자영업자 특례보증 1.0%, 저신용 근로자 생계 보증 0.5%

(신·기보) '09년 1.2%, '10년 평균 보증료 목표수준 1.3%

#### ② 창업자금

- 대출대상
  - 정부, 공공기관의 창업교육을 이수한 창업자

-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가 사업자 등록 후 점포를 구비하는 경우(사업경력이 존재하므로 창업교육 이수조건 미적용)

## ○ 대출 요건

### i) 창업교육 이수 : 12시간(장애인 사업자 10시간) 이상 이수

- (교육기관 例示) : 소상공인진흥원 '성공창업패키지' 교육과정(7,000명), 창업진흥원 '기술창업학교'(1,200명), 소상공인지원센터(22,000명)·근로복지공단(100명) 창업교육 등
- 현재 창업교육 이수자는 매년 3만명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 향후 관계부처 및 서민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창업교육 인정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

### ii) 창업요건

- 사업장 확보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후 개업한지 1년 이내이어야 함(단,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는 개업한지 3개월 이내)

## ○ 대출한도

- 사업장 마련을 위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하고,
- 필요한 경우 5천만원에서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한도 내에서 운영자금까지 지원하여 창업을 지원
- \*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時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취득하여 도덕적 해이 방지

## ○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1년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

### ③ 생계자금

- (대출대상)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일용직, 임시직 포함)와 영업중인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농림어업인에게 자금을 지원
- (대출한도) 최고 1천만원\*으로 한도 내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한도 차등화

\* 당초 계획(4.7발표)은 5백만원이었으나 지원 금액 확대

신용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이하
대출금액	1천만원	8백만원	6백만원	4백만원

\* 신용5등급 이상 저소득자는 신용6등급의 대출한도 적용

- (상환방법) 3년 또는 5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IV 보증자원 조성

### 1. 서민금융회사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에 따라 모든 서민금융회사(단위조합, 금고, 저축은행)가 업권 중앙회를 거쳐 매월 출연

- 6년간\* 목표 출연금을 출연하도록 하되,

\* 당초 계획은 5년이었으나 대출 초기에는 많은 보증재원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6년간 출연으로 변경하여 서민금융회사 출연부담을 완화

- 사정변동(예 : 대출금 증가추이 감소 등)에 대비하여 출연기간은 10년 이내로 정하고(지역신보법 시행령),
- 목표 출연금이 모두 출연되면 중기청장이 업권별로 각 중앙회에 출연 종료일을 통보(종료 3월 전까지)

## □ 서민금융회사 총 출연금 1조원

- 상호금융 : 매년 약 1,333억원 (6년간 총 8,000억원)
- 저축은행 : 매년 약 333억원 (6년간 총 2,000억원)
- 출연요율은 출연기준 대출금의 일정비율로 출연율 설정

\*\* 업권별 연간 출연금 및 출연율

구분	계	소계	상 호 금 융					저축 은행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금고	
총 목표출연액 (억원)	10,000	8,000	3,859	334	83	1,362	2,362	2,000
연간 출연액 (억원)	1,666	1,333	643	56	14	227	394	333
출연요율 (천분비)	0.45	0.51	0.37	0.54	0.77	0.71	0.82	0.40

## 2. 정부재정 : '11년 예산부터 매년 2천억씩 반영

- (재원출연기간) '11.1~'15.12. 5년간 1조원 납부
  - 서민금융회사는 '10.9~'16.8까지 6년간 1조원을 납부하여 출연금 부담원칙(1:1) 유지

'11.1	정부재정 출연금 납부 (총 1조원)	'15.12
'10.9	서민금융회사 출연금 납부 (총 1조원)	'16.8

- (중앙정부) 매년 1,200억원을 출연(전액 복권기금으로 충당)
- (지 자 체) 매년 800억원을 출연
  - 자치단체별 출연금 분담기준은 관계부처,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보증대출 규모,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계획

## 1. 출연자원 관리

-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각 권역별 출연금액에 비례하여 보증한도를 업권별로 구분운영
  - 업권별 출연금과 정부 출연금을 합산한 금액의 5배 보증대출을 보장
- 대출개시 1년 후 운영성과를 평가(금융위·중기청)하여 업권간 경쟁유도를 위해 필요시 상호금융회사와 협의하여 보증한도 통합운영 검토

## 2. 보증지원 체계

- 보증심사
  - (비사업자) 서류심사로 적격판단이 가능하므로 서민금융회사가 직접 보증심사
  - (사업자) 지역신보가 보증심사하되,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사업영위 사실 확인 등 일부업무를 서민금융회사에 위탁

대출대상	보증주체	보증심사
근로자 등 비사업자	○ 신용보증 재단 중앙회	○ 서민금융회사 직접심사 (중앙회가 보증을 위탁)
자영업자	○ 지역신보	○ 지역신보 (서민금융회사는 보증상담, 서류 접수 및 사업 영위사실 확인 등의 업무 수행)

### ○ 전자보증시스템

- 온라인을 통한 정보조회, 전자문서에 의한 보증서 발급 등 추진
- \* 서민대출 보증상품은 소액이면서 발급건수가 많아 실시간 전자 보증서 발급처리가 필수적
- '09년 보증서 발급건수 : 지역재단 66만건, 신보 21만건, 기보 4.6만건

## VI 보증부 서민대출 활성화를 위한 조치

### 1. 통합 브랜드 사용 및 공동 마케팅

- 업권 공통의 통합 브랜드 '햇살론' 사용으로 상품 인지도 제고하고, 공동 홍보기금을 조성하여 대출상품 홍보추진

### 2. 경영실태 평가기준에 반영

- '경영관리 적정성' 평가에 보증재원 출연, 서민대출 취급 등 사회공헌활동의 활발한 이행 정도를 '기타 경영 실태 평가'시 중요 평가지표로 평가

\* (예시) 사회공헌 전략의 수립 및 저신용자 금융이용기회 확대를 위한 보증재원의 출연, 서민대출의 취급 등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 3. 판매실적 우수 금융회사 포상

- 매년 부처별 포상수여시 서민금융회사 보증부 서민대출 판매 실적을 반영

\* 매년 서민금융회사 감독부처 포상수여 현황(약 150개)

- (행안부) 금고 약90개, (농림부·산림청) 농·수협·산림조합 약 40개, (금융위) 신탁 10개

- 대통령·총리 포상 및 주무부처 장관포상 추진



① (금융이용자 측면) 서민층의 금융이용 기회가 확대되고  
고금리 부담의 완화가 기대됨

- 1인당 평균 1천만원 대출을 가정하면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 대출시 약 100만명의 서민에게 대출 가능

\* (가정) '09년 지역신보의 1인당 평균 보증금액 17백만원이므로  
저신용자 대출임을 고려하여 1인당 1천만원 대출을 가정

- 저축은행,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이용자가 '햇살론'으로  
전환할 경우 금리부담이 30~40%대에서 10%대로 낮아져  
총 6조원 가량의 금리부담 경감가능

\* (가정) 대부업 평균 대출금리 41.2%('09.12),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6~10등급) 32.6%('10.4)의 단순 평균치 37%와 '10.7월 기준  
'햇살론'의 1년 거치 4년분할상환의 가중평균 대출금리 12%와의  
차이를 감안( $37\% - 12\% = 25\%$ )

- 특히, 상호금융권의 경우 일정규모(예: 신탁 1천만원 등)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 일부 경우는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나 '햇살론'은 이러한 부담이 없어 이용도를 제고

- ② (금융회사 측면) 농협, 신한, 금고 등 상호금융회사가  
비과세 예금 한도확대\*로 얻는 혜택의 일부를 보증재원  
으로 출연하여,

○ 비과세 예금을 서민대출로 연계할 수 있는 틀을 마련

\* '09년 2천만원→3천만원, 비과세 예금 ('08) 81조원 → ('09)115조원 (+34조원)

○ 서민대출 보다 부동산 PF대출과 유가증권 투자를 늘려  
왔던 서민금융회사가 서민금융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회복  
하는데 기여

- ③ (금융 정책측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출시  
했던 전액보증 상품을 부분보증 상품으로 전환한 결과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한편,

\*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09.1~'10.7 약 1.58조원)은 '햇살론'  
출시와 동시에 종료될 예정

○ 전액보증시 보다 동일한 보증재원으로 더 많은 서민에게  
자금공급 가능

○ 또한 서민금융회사에게 적정마진을 보장하여 취급  
유인을 부여함으로써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고, 결과적  
으로 은행이용이 어려운 계층의 금융소외 완화 기대

- 농협, 신한,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수협은 7.26(월)부터, 산림조합은 8.16(월)부터 보증대출 취급 개시
- 운영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 대출상품 판매 경과를 보아 보증대상, 대출한도 등 상품 운영방안에 대한 조정도 검토할 계획

# 참고 1

## 보증부 서민대출 보증가능자 추정

KCB 신용 등급	총 고객 현황		대출제한 대상		최종 대출가능자		
	총고객수	전체 구성비	고객수	등급별 비율	고객수	등급별 구성비	전체 구성비
1	2,980,269	7.5%	23	0.0%	263,624	8.8%	1.6%
2	4,810,314	12.2%	1,026	0.0%	493,374	10.3%	2.9%
3	3,639,853	9.2%	3,274	0.1%	472,221	13.0%	2.8%
4	4,328,467	11.0%	5,861	0.1%	779,239	18.0%	4.6%
5	9,107,664	23.1%	11,438	0.1%	3,754,684	41.2%	22.2%
6	4,539,446	11.5%	47,136	1.0%	4,492,310	99.0%	26.6%
7	4,752,986	12.0%	1,367,638	28.8%	3,385,348	71.2%	20.0%
8	2,268,334	5.7%	1,122,099	49.5%	1,146,235	50.5%	6.8%
9	957,230	2.4%	576,110	60.2%	381,120	39.8%	2.3%
10	398,278	1.0%	352,472	88.5%	45,806	11.5%	0.3%
6~10 소계	12,916,274	32.6%	3,465,455	26.8%	9,450,819	73.2%	55.9%
무등급	1,693,749	4.3%	15,681	0.9%	1,678,068	99.1%	9.9%
총계	39,476,590	100.0%	3,502,758	8.9%	16,892,029	42.8%	100.0%

※ 자료 : 신용평가사(10.4월 현재), 등급별 인원 및 대출제한 대상

\* 무등급 : 미성년자, 금융거래 6개월미만, 금융질서문란등제자 등 신용등급산출에서 제외된 사람

\*\* 대출제한 대상 :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회생/파산/면책, 현재연체고객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 참고 2

## 신용등급별 소득분포

(단위 : 만명, %)

소득구간	신용 1~10등급		신용 1~5등급		신용 6~10등급	
	누적인원	누적비율	누적인원	누적비율	누적인원	누적비율
2천만원이하	886.7	23.4%	578.5	23.2%	308.2	23.8%
21백만원이하	1,093.3	28.9%	706.7	28.4%	386.7	29.9%
22백만원이하	1,330.4	35.2%	851.5	34.2%	478.9	37.1%
23백만원이하	1,626.2	43.0%	1,031.7	41.5%	594.5	46.0%
24백만원이하	1,871.0	49.5%	1,181.8	47.5%	689.2	53.3%
3천만원이하	2,939.7	77.7%	1,875.1	75.3%	1,064.6	82.4%
5천만원이하	3,657.9	96.7%	2,390.6	96.1%	1,267.3	98.1%
총계	3,781.1	100.0%	2,488.9	100.0%	1,292.3	100.0%

\* 신용평가사 자료('10.4월 차주수 기준), 여신 심사시 제출한 등록소득을 우선시 하되 정보 부재시에는 신용평가사의 소득추정모형을 이용

### 참고 3

### 지역신보 보증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보증제한 업종
561 중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다음 각1호의 경우는 제외 가. 기관구내식당에 대한 여신 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관 광특구 소재 식당업에 대한 여신 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좋은식단”실 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개선 시설자금 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여신
5621	주점업. 단, 생계형 기타주점업(소상공인) 제외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자문 및 동일장 소에서 6개월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개업(6822) 영위 소상공인은 제외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9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 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 참고 4

## 보증 업무절차 흐름도

업무구분	업무처리 내용	담당기관
보증상담 신청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용보증 대상여부 및 보증금액 상담</li> <li>보증신청자 신용보증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 인)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 사본 등</li> <li>(사업자) 사업자등록증(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장임차계약서,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li> </ul> </li> </ul>	서민금융사
보증심사 대출	<div>개 인 (비사업자)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전통보된 보증심사 제규정에 따라 보증심사 후 대출실행</li> <li>* 부정대출예방시스템에서 사전 조회</li> </ul>	서민금융사 (위탁보증)
	<div>등록·무등록 사업자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실사를 통한 사업영위사실 확인</li> <li>접수서류 지역신보에 송부</li> <li>* 지역신보 전자보증서를 받고 대출</li> </ul>	서민금융사 (위탁업무수행)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증심사</li> <li>전자보증서 서민금융사에 송부</li> </ul>	지역신보
신용보증 사고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용보증 사고발생 통지</li> <li>재산조사 및 발견재산 채권보전조치 실시</li> </ul>	서민금융사
보증채무 이행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신보(중앙회) 보증채무이행 청구</li> </ul>	서민금융사
보증채무 이행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증 및 여신취급의 적정성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용보증 제규정 및 약관 준수, 면책기준 저촉 여부 등</li> </ul> </li> <li>신용보증 사고관리 적정성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채권신고,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 누락 여부</li> </ul> </li> </ul>	지역신보 (중앙회)
대위변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민금융사 보증대출 채권 대위변제</li> </ul>	지역신보 (중앙회)
구상채권 관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상채권에 대한 최소한의 회수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정보 활용을 통한 추가 재산조사 및 법적조치</li> <li>구상금청구소 제기 및 채권보전조치 물건 강제집행</li> <li>신용정보의 관리(신용불량거래처 등록 및 해제 등)</li> </ul> </li> <li>구상실익 없는 채권에 대한 상각 실시</li> </ul>	지역신보 (중앙회)

## 8. 금융위에서 파악하고 있는 금융소외자(제1금융 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들의 숫자)

### □ CB사별 신용등급별 분포현황 ('10.6말 기준)

(단위 : 만명, %)

등급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1등급	304	8.0	353	9.60	301	7.8
2등급	514	13.4	643	17.48	482	12.6
3등급	442	11.5	681	18.51	367	9.6
4등급	523	13.6	336	9.12	464	12.1
5등급	1,106	28.8	318	8.63	1,039	27.1
6등급	192	5.0	633	17.21	388	10.1
7등급	359	9.4	219	5.96	449	11.7
8등급	227	5.9	85	2.32	226	5.9
9등급	102	2.7	124	3.36	84	2.2
10등급	64	1.7	287	7.80	35	0.9
합 계	3,836	100	3,680	100.0	3,835	100.0



## 9. 금융위원장실 직원들 수와 직급, 그리고 금융 위원장 활동비와 관련한 예산

### ☐ 금융위원장 월정직책급,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구분	2008.3월 ~	2009	2010.6월말 기준
월정 직책급	매월 225만원	매월 225만원	매월 225만원
업무추진비	월 평균 1,079만원	월 평균 986만원	월 평균 941만원

### ☐ 위원장실 직원현황

4급 1명, 5급 2명, 기능직 2명

## 10. 우리나라 금융공기업 사장들의 연봉과 성과급 (최근 3년간)

### ☐ 한국주택금융공사

(단위 : 백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연봉	325	247	239
성과급	23	85	77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기준

\* 연봉에는 성과급 포함

### ☐ 예금보험공사

(단위 : 백만원)

연도	'08년	'09년	'10년
연봉	278	161	161*
성과급	14	19	83

\* '10년도 집행예정액

### ☐ 한국자산관리공사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기본연봉	285	161	161
경영평가성과급	7	19	129
계	292	180	290

□ 한국거래소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기본연봉	372	298	161
성과급	419	345	-
계	791	643	161

※ 2009년 공공기관 지정 후 신규 임명된 현 이사장의 경우 정부지침에 따라 연봉 책정

□ 한국예탁결제원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기본연봉	161	161	161
성과급	48	43	97
계	210	205	258

\* 연봉은 연간 기본급 반영 ('08. 6월 이후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보수 체계 개편으로 기본급과 성과급만 지급)

\* '10년은 만근 기준 작성

□ 금융공공기관 별 CEO 연봉 및 성과급

(단위 : 백만원)

금융공공기관	2008		2009		2010 <sup>주1)</sup>	
	연봉	성과급	연봉	성과급	연봉	성과급
정책금융공사 <sup>주2)</sup>	-	-	161	-	161	-
산은금융지주 <sup>주3)</sup>	-	-	161	-	161	-
산업은행	424	262	462	301	161	-
중소기업은행	572	242	484	323	161	-
신용보증기금	457	149	246	79	161	-
기술신용보증기금	456	150	264	96	161	-
기은캐피탈	285	95	172	25	152	-
IBK신용정보	174	43	175	70	105	-
IBK시스템	194	63	189	64	105	-
한국기업데이터	348	181	279	181	290	-

\* 연봉은 기본급, 수당, 상여금 및 성과급을 포함한 합계기준, 성과급은 경영평가 성과급 및 기타 성과상여금 (알리오 공시 기준)

\*\* 주1) 2010년 연봉은 연간 지급 예상금액, 성과급은 경영평가 이후 지급예정

주2) 정책금융공사 및 산은금융지주 : 2010년 연봉은 연간 지급 예상되는 금액을 명시하였으나 실제로는 '09년은 설립('09.10.28)이후 2개월분만 지급되었음

## 11. 우리나라 금융공기업 신입사원(대졸초임) 연봉 (최근 3년간)

### ☐ 한국주택금융공사

(단위 : 백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연봉	39	38	28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기준

### ☐ 예금보험공사

(단위 : 백만원)

연도	'08년	'09년	'10년
연봉	37	32	31*

\* '10년도 집행 추정액

### ☐ 한국자산관리공사

(단위 : 백만원)

2008년	2009년	2010년
35	27	27

주) 연도별 신입사원 평균연봉은 채용실적이 없거나 연말에 채용됨에 따라 보수 테이블로 환산한 연간 금액임

□ 한국거래소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기본급	21.7	16	16
제수당	16.7	13.2	13.2
경영평가성과급	-	-	-
기타성과상여금	-	-	-
계	38.4	29.2	29.2

※ 2009년 이후 입사한 신입사원의 경우 정부지침에 따라 연봉 삭감

□ 한국예탁결제원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신입사원	37.7	37.7	28.8

\* '09년 신입직원의 경우 대졸초임 삭감('09. 6월)이전 입사(입사일 : '09. 2월)

\* '10년은 만근기준 작성

□ 금융공공기관 별 신입사원 연봉

(단위 : 백만원)

금융공공기관	2008	2009	2010
정책금융공사*	-	29	32
산은금융지주	09.10.28일 설립, 경력직 채용으로 해당사항 없음		
산업은행	36	36	30
중소기업은행	37	39	28
신용보증기금	35	28	27
기술신용보증기금	35	27	27
기은캐피탈	30	27	26
IBK신용정보	24	19	19
IBK시스템	25	25	24
한국기업데이터	33	25	25

\* 기본급, 수당 및 상여금 포함 (알리오기준)

\*\* 정책금융공사는 '10.7월 최초로 신입사원을 채용하였으며, 1년간 수령 가능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 12. 최근 3년간 금융위에서 연구 의뢰한 연구용역들의 목록과 예산

### □ 2008년도 이후 현재까지 외부용역 리스트

(단위 : 백만원)

연도	연구용역명	의뢰기관	용역비	용역 의뢰 사유	비 고
08년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한국금융 연구원	30	여신전문금융회사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개선사항과 관련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규정에 대한 검토 및 연구	
08년	외환시장 발전방향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19	외환시장 발전과정 및 현황, 외환시장 한계와 발전방안에 대한 시사점 도출	
08년	미국 FinCEN의 자금세탁 방지제도 운영실태 연구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40	미국 자금세탁방지법제인 은행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기구인 FINCEN이 접수하는 금융거래 정보의 범위 및 개별 법집행 기관의 자료접근 방식에 따른 장단점 분석 및 우리나라의 법적, 제도적 토양과의 정합성 연구	
08년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한국금융 연구원	30	○파생거래로 인한 리스크 발생 및 전이과정 분석 ○국내현황 및 해외현황 비교 분석 ○시스템리스크 통제 및 감독 체계 방안 마련	
08년	FTA, DDA 등 금융서비스 분야 국제협상 법률적 검토 연구용역	법무법인(유) 태평양	40	FTA, DDA 협상 추진과 관련하여,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의 전문가적 관점에서 우리측 협정문과 양허안 작성시 법률적 자문 및 검토사안에 관한 연구	



연도	연구용역명	의뢰기관	용역비	용역 의뢰 사유	비 고
08년	단기금융시장 제도 개편에 따른 시장영향 분석	한국금융연구원	20	단기금융시장 제도개편에 앞서 시장영향 등을 종합 분석	
08년	서브프라임사태이후 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개선 연구용역	(사)국제금융센터	46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조기경보모형의 개선 추진 및 파생상품 관련 감독방향 마련	
08년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수준 제고를 위한 감독검사 효율화 방안	언스트앤영 어드바이저리(주)	37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자금세탁방지업무 감독검사업무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08년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2	기성장형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자본시장 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신시장 개설방안 검토	
08년	홈페이지 개편	(주)사이버이메지네이션	30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개정 정부지침 반영	
08년	비명시적규제 개혁 외부평가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5	금융규제개혁심사단에서 개혁 대상 비명시적 규제를 선정하고, 이렇게 선정된 비명시적규제에 대해 외부평가를 실시	
08년	금융중심지 선정에 관한 금융전문가 의견 조사	한국개발연구원	19	○금융중심지 추진의 필요성, 성공의 조건 등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하여 학계인사, 금융기관 종사자, 외국 금융인 등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	
09년	금융상품판매업법 제정을 위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	30	○금융상품 판매채널의 혁신 및 제조와 판매의 분리 ○제판분리 대상 상품과 판매 채널의 유형 ○국내 금융상품 판매 관련 법규의 문제점 ○금융상품판매업의 정의 ○기능별 규제 ○독립판매회사 지정 여부	

연도	연구용역명	의뢰기관	용역비	용역 의뢰 사유	비 고
09년	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방안	한국금융연구원	45	FATF 상호평가에서 지적받은 권고사항별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제기준에 적합한 이행방안을 연구/도출하고 이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	
09년	국내 자본시장-외환시장 연계성 증가의 파급효과 분석	자본시장연구원	21	국내 자본시장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연계성을 분석	
09년	금융위기 이후(Post-Crisis) 대비 금융감독체제의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역별 감독과 기능별 감독의 조화</li> <li>- 통합감독기구 출범 이후 10여년의 평가</li> <li>-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바람직한 감독체제의 모색</li> <li>- 통합감독기구 내에서 권역별 및 기능별 감독의 조화 방안</li> </ul>	
09년	수도권 광역금융벨트 조성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 여의도 지역과 인근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수도권 광역 금융벨트 조성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연구</li> </ul>	
09년	위탁보증 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보증제도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운영방안 제시</li> <li>- 국내 위탁보증제도의 현황 및 평가</li> <li>- 주요국의 위탁보증제도</li> <li>- 위탁보증제도 개선방안</li> </ul>	
09년	자본시장 등 금융부문별 노동력 특성 분석 및 수급 전망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금융산업의 부문별 현황 파악</li> <li>- 금융시장의 노동력 구성 파악</li> <li>-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의 필요성 제기</li> <li>○ 발전 방향 및 인력 수급 전망</li> <li>- 금융시장의 인력 활용에 대한 평가</li> <li>- 금융 선진화에 요구되는 인력의 수급 전망</li> </ul>	
09년	금융위기의 원인분석 및 시사점분석	한국금융연구원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 및 진행 경과</li> <li>○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li> <li>○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li> <li>○ 향후 금융안정을 위한 국제적 논의 동향</li> </ul>	

연도	연구용역명	의뢰기관	용역비	용역 의뢰 사유	비 고
09년	금융투자산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대한 연구	자본시장 연구원	32	○국내 금융투자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금융투자산업의 본질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대형화 전문화의 필요성 제시 및 해외사례분석 ○금융투자산업의 선진화 방안	
09년	테러자금조달 방지 체제의 선진화·국제화 방안 연구	아주대 산학협력단	35	테러자금 조달행위의 범죄화 및 테러자금의 동결에 대한 현행법의 태도 및 개선방안	
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국내 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 연구원	30	국내은행의 안정적인성장 및 신뢰성제고방안연구 및 은행 산업 구조변화, 경영지표 개선 방안 연구	
09년	주요국에서의 금융변혁기에 대응한 금융정책사례 연구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40	○주요국의 금융변혁기 사례 ○향후 예상되는 외부충격 등 금융변혁 ○시나리오별 금융당국의 contingency plan 수립 방향	
09년	예금수취 비은행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 연구원	2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감독 방식 등 금융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정책방안 연구	
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 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	20	경쟁의 글로벌화, 보험시장의 포화, 인구 고령화 및 산업 구조의 선진국형 전환 등 보험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한 보험산업의 신성장 전략 및 발전방안을 모색	
09년	금융정보생산의 시스템 리스크 완화방안 연구	한국금융학회	20	신용등급 등 금융정보의 경기 순응성을 분석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당국의 과제를 모색	
09년	마이크로크레디트의 현황 및 정책과제	한국채권 연구원	23	미소금융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대출금 회수, 자활 컨설팅 및 사후관리방법에 대한 연구	
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 연구원	20	○자본시장을 둘러싼 금융환경 변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의 비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과제	
10년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도입 방안	서울대 산학협력단	30	G20에서 CCP 등 장외파생 상품 인프라를 2012년까지 도입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관련 인프라 도입방안 연구	진행중

연도	연구용역명	의뢰기관	용역비	용역 의뢰 사유	비 고
10년	지역금융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개발 연구원	30	지역 금융활성화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 및 서민에 대한 금융 회사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	진행중
10년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자본시장 활용방안	자본시장 연구원	30	○노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을 위한 외국 사례 검토, 가능한 방안 제시(퇴직연금, 각종 펀드 등) ○저출산 대비 자본시장 활용 을 위한 외국 사례 및 재정 지원, 세제 혜택 등 검토	진행중
10년	우리나라 비금융전문직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이행방안	한국금융 연구원	30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 중개인 등 비금융 전문직의 자금세탁 방지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진행중
10년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연구	한국개발 연구원	46	○금융소비자보호의 개념과 논의동향 점검 ○금융소비자 보호의 국내현황 과 주요 이슈 ○해외의 금융소비자 보호 체제: 사례와 시사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진행 중
10년	국내외 조기경보 활동 동향 점검 및 금융시장 조기 경보모형 개선	한국금융 연구원	20	최근의 해외사례 및 연구동향을 토대로 조기경보모형을 개선 하여 금융시장 리스크 점검 및 대응체계 개선을 추진	진행중
10년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 연구원	40	저축은행, 신탁 등 서민금융 회사들의 서민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개발 등 제도 개편방안 및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방안 연구	진행중
10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방안 검토	법무법인 윌촌	30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방안 ○주요 선진국의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운영사례 연구 ○과징금제도 도입시 부과대상,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검토	진행중
10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 연구	한국금융 연구원	30	○각 개별금융업법에 산재되어 있는 지배구조를 통일적으로 정비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에서 지배구조를 강화 하고 있어 글로벌 동향에 맞도록 지배구조를 개선	진행중

연도	연구용역명	의뢰기관	용역비	용역 의뢰 사유	비 고
10년	금융전문인력 현황조사 및 수급전망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50	○금융인력 현황조사 ○금융인력 수급전망(10대직무)	진행중
10년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검토	한국금융 연구원	30	○금융감독체계 개편, 체계적인 부실금융회사 정리시스템 구축, 금융회사 규제강화 등 금융규제개혁법 부문별 내용 및 시사점 도출	진행중

### 13. 금융위원회 직원수 및 연봉 현황

□ 직원수 및 연봉현황(파견, 휴직 등을 제외한 현원 기준)

구분	2008말	2009말	2010현재
정무직	2명	2명	2명
고공단	9명	11명	11명
3급	4명	5명	4명
4급	15명	15명	16명
4.5급	19명	17명	19명
5급	92명	95명	101명
6급~7급	43명	48명	49명
8급~9급	2명	5명	4명
기록연구사	1명	1명	1명
기능	16명	14명	14명
특정직(경찰)	7명	7명	7명
합계	210명	220명	228명

※ 연봉은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에 의거 개인별 근무년수 및 전년도 성과 등에 따라 차등 책정

## 14. 금융공기업들의 최근 3년간 직원 숫자 및 연봉현황

### A. 한국주택금융공사

(명, 백만원)

구 분		이사 대우	1급	2급	3급	4급	5급 별정직	계약직	합계
2008	인원*	2	13	35	79	123	164	105	521
	총연봉**	146	132	110	97	75	48	30	-
2009	인원*	1	12	34	74	115	147	80	463
	총연봉**	129	115	113	97	79	52	26	-
2010 (예상)	인원*	-	13	32	71	110	154	61	441
	총연봉**	-	114	101	92	74	49	19	-

\* 월평균 급여지급 인원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기준 적용

## B. 예금보험공사

(‘10.8월말 현재,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인원	평균연봉	인원	평균연봉	인원	평균연봉*
사장	1	292	1	176	1	108
부사장	1	221	1	180	1	80
감사	1	213	1	137	1	87
이사	4	188	4	113	4	67
임원합계·평균	7	212	7	135	7	77
1급	19	117	18	112	18	75
2급	29	105	30	100	35	67
3급	64	97	68	95	75	59
4급	139	78	148	77	155	48
5급	118	55	115	54	91	33
사무·서무	28	45	27	46	27	31
일반직합계·평균	397	76	406	75	401	48
전문직	11	87	12	88	15	57
특정직	172	57	148	56	146	36
사무서무	4	36	4	40	3	29
별정직합계·평균	187	59	164	57	164	39
직원합계·평균	591	70	577	71	572	45

\* 2010년 연봉의 경우 8월까지 수령한 연봉 기준



### C. 한국자산관리공사

(단위 : 명, 백만원)

연 도		1급	2급	3급	4급	5급	계
2008년	인원	20	44	105	271	519	959
	연봉	107	95	77	62	44	57
2009년	인원	14	45	112	266	544	981
	연봉	106	94	78	62	45	57
2010.8월	인원	22	47	126	292	534	1,021
	연봉	70	59	49	42	29	38

※ 직원숫자는 연(월)말 인원 기준

## D. 한국거래소

### ○ 최근 3년간 정규직 직원수 및 연봉현황

(단위 : 명/백만원)

연도	직원수	연봉현황
2008	693	102.97
2009	698	106.07
2010.6월	716	49.42

\* 알리오 공시 기준

### ○ 최근 3년간 비정규직 직원수 및 연봉현황

(단위 : 명/백만원)

연도	직원수	연봉현황
2008	49	19.19
2009	41	23.44
2010.6월	50	12.85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채용된 인원

## E. 한국예탁결제원

### ○ 최근 3년간 정규직 직원수 및 연봉현황

(단위 : 명/백만원)

연도	직원수	연봉현황
2008	430	91.57
2009	437	93.11
2010.6월	426	45.13

\* 알리오 공시 기준

### ○ 최근 3년간 비정규직 직원수 및 연봉현황

(단위 : 명/백만원)

연도	직원수	연봉현황
2008	49	58.76
2009	41	63.04
2010.6월	50	25.45

\* 일반 별정직원 및 전문 별정직원